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3
<http://sri.kostat.go.kr>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3 2023

<http://sri.kostat.go.kr>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발간에 부치며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현황과 변화를 데이터에 근거해서 보여주는 종합사회보고서인 『한국의 사회동향 2023』을 16번째로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훈련, 노동,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 주관적 웰빙의 1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핵심이 되는 주요 동향과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의 모습과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소득과 자산, 주거실태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등 지역간 분포를 전반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비혼 동거 가족, 디지털 리터러시, 기후변화, 산업재해, 고령자 안전사고와 돌봄,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 등 영역별로 최근 이슈가 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신뢰할만한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우리 사회가 각 영역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주요 정책 입안자에게 우리 사회 현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나침반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동향을 각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지식과 통찰력을 집대성하여 이야기 방식(storytelling)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데이터와 통계 저변에 담겨있는 사회 변화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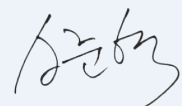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통계개발원과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긴밀한 협력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연구의 책임을 맡아주신 김석호 교수님과 12개 영역 30편의 원고를 집필해 주신 25명의 집필진, 그리고 통계자료 검토와 편집을 통해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보고서로 제작해 주신 편집위원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한국의 사회동향』을 가까이 두고 읽을 독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12월

통계개발원장

송 준 혁



머 리 말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2008년 한국인의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을 표방하며 『한국의 사회동향』을 작성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그간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사회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길잡이로, 연구자들에게는 사회 각 영역에서 출현하는 현상을 포착할 수 있는 통찰의 보고로, 학생들에게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이해를 돕는 학습 자료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또한 『한국의 사회동향』은 시계열적 및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의 변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되돌아볼 수 있게 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사회동향』은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정부 발간 보고서 중 하나가 되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통계개발원은 이제 열여섯 번째 『한국의 사회동향』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항상 그래 왔지만, 이번 보고서 발간이 더욱 조심스러운 이유는 2023년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와 책임 집필자가 몇몇 영역에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직전 연구책임자인 이재열 교수, 인구의 김두섭 교수, 건강의 조병희 교수, 교육·훈련의 김경근 교수는 『한국의 사회동향』 발간 초기부터 줄곧 이 보고서를 틀을 잡고 내용의 질과 깊이를 다지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해 주셨던 분들이다. 이 글을 빌어 『한국의 사회동향』의 전통을 만들어 주신 네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새롭게 중책을 맡게 된 연구책임자와 영역 책임 집필자들은 선임자들이 치열하게 만든 전통을 따르면서 그간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발전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의 구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 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훈련, 노동,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 주관적 웰빙 등의 순서로 총 12개의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영역별 주요 동향과 주제는 아래와 같다.

인구 영역

- 주요 동향: 인구성장과 구조, 초저출산, 기대수명과 조사망률, 국내·국제 인구이동
- 주제 논문: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특징'

가구·가족 영역

- 주요 동향: 가족 형성, 가족구조, 가족관계 및 돌봄, 가치관
- 주제 논문: '비혼 동거 가족의 특성',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특성'

건강 영역

- 주요 동향: 건강상태, 건강행태, 기후변화 환경요인, 보건의료체계
- 주제 논문: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 '한국의 자살 추이와 대응'

교육·훈련 영역

- 주요 동향: 교육·훈련의 투입-과정-산출
- 주제 논문: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

노동 영역

- 주요 동향: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변화, 고용률, 실업률, 노동시간, 임금, 노동조합의 조직률
- 주제 논문: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 추세와 세대별 노조 인식',
'지난 20년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 및 구조'

소득·소비·자산 영역

- 주요 동향: 가구소득, 가구자산, 가구 소비지출
- 주제 논문: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소득불균등도와 소득이동성의 변화추이'

여가 영역

- 주요 동향: 여가활동, 미디어 이용의 여가,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여가만족
- 주제 논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가활동 비교', '팬데믹이 가져온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의 변화'

주거 영역

- 주요 동향: 주택보급, 주택구입과 주거비 부담, 주거복지와 주거의 질, 주거와 통근 통학
- 주제 논문: '청년의 주거실태와 특징: 청년 가구의 유형별,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생활환경 영역

- 주요 동향: 대기환경과 기후, 물환경, 폐기물, 환경소음, 환경 관리와 만족도
- 주제 논문: '기후변화와 재해취약성'

범죄·안전 영역

- 주요 동향: 범죄, 인적 사고 및 재난, 안전에 대한 인식
- 주제 논문: '고령자 안전사고 추이와 실태', '학교폭력 실태 및 추이 분석'

사회통합 영역

- 주요 동향: 민주주의 인식, 정치참여와 효능감, 기관 신뢰
- 주제 논문: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

주관적 웰빙 영역

- 주요 동향: 주관적 웰빙 수준의 변화와 국제비교, 웰빙과 주관적 가치
- 주제 논문: '코로나19와 주관적 웰빙 : 삶의 만족, 정서 경험,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의 변화'

연구진이 영역별로 주제를 개발하고 통계를 선정하면서 염두에 둔 핵심 주제어는 ‘지역’과 ‘청년’이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200여 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 영역에서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사회의 변화 양상은 무엇인가?” “한국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어떠한가?”,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한국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적합한 주제는 무엇인지 의견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2022년까지 지속된 코로나19가 한국사회에 남긴 상흔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최종 통계 선정과 주제 논문 선정 과정에서 녹아 있다. 그 결과 인구, 가구·가족, 건강,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등의 영역에서 지역과 청년의 삶과 관련된 현상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과 청년에 초점을 둔 한국 사회 트렌드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과 출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며, 이에 대한 청년의 부정적 인식도 심화하고 있다. 총인구는 2020년 5,183만 명 정점을 찍은 후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2022년에 0.78명까지 떨어졌다. 청년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도 뚜렷해,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실제 혼인 건수도 2000년에 약 33만 건에서 2022년 약 19만 건으로 감소했다. 이 현상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경제적 여건, 양성 평등 수준, 보육 서비스나 육아 휴직 이용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가족 해체 경향도 지속된다. 이 경향은 가족 결속의 약화, 만혼 확대, 1인 가구의 증가 등을 통해 확인된다. 평균 초혼 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 증가가 수도권에서 두드러진다. 수도권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가혹하며, 이들은 낮은 주거의 질과 긴 통근 및 통학 시간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삶의 질 격차가 건강과 여가 영역에서 확인하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의 불균형 상태가 드러났다. 비수도권의 전체 환자 수와 입원 환자 수가 많으나 고난이도 입원 환자를 다룰 수 있는 의료 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비수도권의 병원 수와 병상수가 수도권보다 많지만, 의사 수와 간호사 수는 적다. 문화와 여가 향유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그 차이는 현저하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통계 숫자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의 추세를 포착하고, 표와 그래프로 일목요연하게 변화를 드러내며, 보통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서술형으로 풀어낸 보고서이다. 이는 평소 자료를 다루면서 경험적 분석을 해온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분석과 집필을 담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집필 계획단계와 초고 단계에서 두 차례 워크숍을 거쳤는데, 초청받은 논평자들이 매우

유익한 토론을 해 주었고, 집필자들은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완해 주었다. 번거로운 과정과 까다로운 주문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수용하여 훌륭한 원고를 만들어 주신 집필진에게 감사드린다.

이 보고서를 펴내는 과정에서 영역별로 주요 동향 논문을 집필하고 주제 논문을 검토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면, 한국개발연구원 최슬기 교수(인구 영역 담당), 동아대 송유진 교수(가구·가족 영역 담당), 서울대 오주환 교수(건강 영역 담당), 차의과학대 송수연 교수(교육·훈련 영역 담당), 서울대 권현지 교수(노동 영역 담당), 서강대 박정수 교수(소득·소비·자산 영역 담당), 서울시립대 서우석 교수(여가 영역 담당), 광운대 고진수 교수(주거 영역 담당), 한국환경연구원 김종호 선임연구위원(생활환경 영역 담당),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은영 선임연구위원(범죄·안전 영역 담당), 서강대 하상웅 교수(사회통합 영역 담당) 그리고 연세대 한준 교수(주관적 웰빙 영역 담당)이다. 이 외에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주제 논문의 집필을 맡아 주었다. 신윤정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석 교수(서울시립대), 김여진 교수(강원대), 박수경 센터장(건강보험연구원), 이유리 교수(명지전문대), 노일경 연구위원(한국방송통신대), 이상직 부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유경원 교수(상명대), 성명재 교수(홍익대), 윤소영 선임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강정은 교수(부산대), 신태섭 교수(이화여대), 정지범 교수(울산과학기술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올해 이 보고서의 편집은 한림대 김미영 교수, 통계개발원의 심수진 사무관과 이해선 주무관,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박현주 책임연구원, 이상운 실장이 하였고, 통계 검증 및 원고 교정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정우연, 조하영 연구보조원이 하였으며,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하현주 객원연구원은 연구간사로서 전반적인 진행을 꼼꼼히 챙겨주었다. 집필과 편집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보고서의 개발 연구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형일 통계청장과 송준혁 통계개발원장,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그리고 물심양면의 후원을 아끼지 않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의 권숙인 학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연구책임자 **김 석 호**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일러두기

1. 본 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해당 집필진의 견해이며, 통계청 혹은 통계개발원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2. 이 보고서는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입니다.
3.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목 차

I	인구 Population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24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특징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6
II	가구·가족 Household & Family	
	가구·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송유진 동아대학교	46
	비혼 동거 가족의 특성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58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특성 김여진 강원대학교	67
III	건강 Health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오주환 서울대학교	80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 박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92
	한국의 자살 추이와 대응 이유리 명지전문대학	103
IV	교육·훈련 Education & Training	
	교육·훈련 영역의 주요 동향 송수연 치의학대학교	114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 노일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30
V	노동 Labor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144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 추세와 세대별 노조인식 권현지 서울대학교	160
	지난 20년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 및 구조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172
VI	소득·소비·자산 Income, Consumption & Wealth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서강대학교	186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유경원 상명대학교	199
	소득불균등도와 소득이동성의 변화추이 성명재 홍익대학교	210



VII 여가 Leisure

-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224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가활동 비교 서우석 | 서울시립대학교 234
- 팬데믹이 가져온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의 변화 윤소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44

VIII 주거 Housing

- 주거 영역의 주요 동향 고진수 | 광운대학교 254
- 청년의 주거실태와 특징: 청년가구의 유형별,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고진수 | 광운대학교 267

IX 생활환경 Living Environment

- 생활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 한국환경연구원 280
- 기후변화와 재해취약성 강정은 | 부산대학교 291

X 범죄·안전 Crime & Safety

- 범죄·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00
- 고령자 안전사고 추이와 실태 정지범 | 울산과학기술원 311
- 학교폭력 실태 및 추이 분석 신태섭 | 이화여자대학교 319

XI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

-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하상응 | 서강대학교 326
-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 하상응 | 서강대학교 338

XII 주관적 웰빙 Subjective Well-being

- 주관적 웰빙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 연세대학교 350
- 코로나19와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 정서 경험,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의 변화 한 준 | 연세대학교 362

부록 용어해설

379

표 목차

표 I-1	총인구의 변화, 1980-2022	25
표 I-2	연령대별 인구구성 주요 지표, 2017-2022	26
표 I-3	지역별 인구구성 주요 지표, 2017-2022	27
표 I-4	모의 평균 출산연령, 2015-2022	29
표 I-5	출산 순위별 출생아수, 2015-2022	29
표 I-6	지역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2022	30
표 I-7	지역별 사망자수 및 조사망률, 2022	32
표 II-1	혼인과 이혼 관련 추이, 2000-2022	47
표 II-2	혼인연차별 자녀없는 초혼부부 구성비, 2015, 2021	48
표 II-3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와 세대구성, 2000-2050	49
표 II-4	지역별 평균 가구원수, 2010-2050	50
표 II-5	지역별 1인가구 및 고령자가구 구성비, 2020-2050	50
표 II-6	부모-자녀 경제적 교환관계, 2020	52
표 II-7	혼인부부와 동거커플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020	62
표 II-8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돌봄 필요 정도, 2020	69
표 II-9	연령 및 교육수준별 돌봄 필요 정도, 2020	70
표 II-10	가구구성별 돌봄 필요 정도, 2020	70
표 II-11	배우자로부터 받는 도움, 2020	73
표 II-12	동거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 2020	74
표 II-13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 2020	74
표 II-14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웃/지인, 2020	75
표 II-15	종교 활동 참여 정도, 2020	76
표 II-16	사회단체 참여율, 2020	76
표 III-1	코로나19 감염 후유증 경험자 (19세 이상) 특성, 2022	83
표 III-2	온열질환자 수, 추정 사망자 수, 폭염일수, 2011-2023	87
표 III-3	의료기관 유형별 기관 수, 2011-2020	93
표 III-4	의료기관 유형별 병상수, 2011-2020	94
표 III-5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주요 진료과목별 의원 수, 2011-2020	95
표 III-6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의료기관 유형별 의사 수, 2011-2020	96
표 III-7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의료기관 유형별 간호사 수, 2011-2020	98
표 III-8	성인 남녀의 자살 관련 행동별 경험률, 2021	106
표 III-9	자해·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건수와 진료결과, 2022	108
표 IV-1	성인의 문해능력 수준, 2020	126
표 IV-2	연령별 인터넷 이용목적, 2022	135



표 V-1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 2019.8~2023.8	152
표 V-2	유연근무 활용의 변화, 2017~2023	155
표 V-3	연령 및 근속기간별 사고사망재해자 분포, 2020	179
표 V-4	산업 및 사업체규모별 사고사망재해자 분포, 2021	182
표 V-5	중대재해사건 수사 현황, 2022	183
표 VI-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2016~2021	188
표 VI-2	가구의 소득계층 이동성, 2019~2021	189
표 VI-3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원천, 2016, 2021	191
표 VI-4	가구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중 비소비지출, 2016, 2021	197
표 VI-5	소득이동성: 소득분위 이동표, 2007~2008, 2020~2021	216
표 VI-6	소득이동성: 동일 분위 잔류가구 비율, 2007~2021	217
표 VII-1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상위 10개), 2020~2022	225
표 VII-2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여가활동, 2009, 2019, 2021	235
표 VII-3	연령별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여가활동, 2021	235
표 VII-4	권역 및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률, 2009, 2019, 2021	237
표 VII-5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60대 이상 관람률, 2009, 2019, 2021	237
표 VII-6	권역 및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 횟수, 2009, 2019, 2021	237
표 VII-7	연령별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문화예술 관람 횟수, 2009, 2019, 2021	238
표 VII-8	문화예술 관람자의 평균 관람 횟수, 2009, 2019, 2021	238
표 VII-9	문화예술 관람자의 연령별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평균 관람 횟수, 2009, 2019, 2021	238
표 VII-10	권역별 영화 점유율과 인구 구성, 2022	239
표 VII-11	권역별 공연 횟수 및 티켓판매 건수 점유율, 2022	239
표 VII-12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생활권 내 여가시설 접근성, 2021	240
표 VII-13	권역 및 연령별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2009, 2019, 2021	241
표 VII-14	권역별 여가시간 및 여가 희망시간, 2022	242
표 VII-15	권역별 여가시간 충분도 및 자유도, 2022	243
표 VII-16	권역별 여가비용과 희망 여가비용, 2022	243
표 VII-17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여가만족도, 2009, 2019, 2021	243
표 VII-18	이용하는 여가공간 및 희망하는 여가공간, 2019~2022	248
표 VII-19	산림휴양·복지활동이 삶에 미치는 영향, 2022	249
표 VII-20	“홈트레이닝” 관련 분기별 키워드 변화, 2020.1~2021.1	250
표 VIII-1	전국 주택보급률, 2010~2021	255
표 VIII-2	노후주택 규모 및 비율, 2010~2022	256
표 VIII-3	권역별 다주택자 비율, 2012~2021	257

표 VIII-4	권역별 외지인 소유주택 비율, 2016-2021	257
표 VIII-5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2006-2021	260
표 VIII-6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2010-2021	260
표 VIII-7	기초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수급권자 수, 2016-2022	261
표 VIII-8	주택연금 보증공급액 추이, 2010-2022	262
표 VIII-9	주택보유의식, 2010-2021	263
표 VIII-10	주택 만족도, 2012-2021	264
표 VIII-11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2016-2021	264
표 VIII-12	평균 통근 및 통학 시간, 2000-2020	265
표 VIII-13	대중교통 만족도, 2012-2022	266
표 VIII-14	연령별 소득, 자산, 부채, 순자산, 2021	268
표 VIII-15	연령별 1인가구, 무주택가구 비율, 2021	268
표 VIII-16	가구 유형별 자가점유율, 전용면적 등, 2021	269
표 IX-1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나쁨/매우나쁨 일수, 2015-2021	281
표 IX-2	시설별 먹는물 수질 기준 초과율, 1995-2021	284
표 IX-3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2015-2021	285
표 IX-4	생활계폐기물 주요 품목별 발생량 및 재활용률, 2011-2021	286
표 IX-5	환경분쟁 원인별 분쟁조정 건수, 2000-2021	286
표 IX-6	환경보호지출, 2004-2020	288
표 IX-7	환경오염시설 단속 및 위반 현황, 2010-2021	288
표 IX-8	전반적인 환경상태 만족도, 2018-2022	289
표 IX-9	배출 시나리오별 1850-1900년 대비 평균 지구 표면온도	292
표 IX-10	시도별 자연재난 피해액	295
표 X-1	주요 강력범죄별 발생 건수, 2012-2021	303
표 X-2	아동·청소년 폭력피해, 2012-2021	304
표 X-3	경찰관 및 소방관 수, 2007-2022	309
표 X-4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10-2022	309
표 X-5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 장소별 접수 현황, 2019-2022	315
표 X-6	고령자 낙상사고 품목별 접수 현황, 2019-2022	315
표 X-7	피해 유형별 응답 수, 2013-2022	321
표 X-8	가해 유형별 응답 수, 2013-2022	323



그림 목차

그림 I-1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70-2022	28
그림 I-2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 2011, 2021	29
그림 I-3	OECD 주요 회원국의 성별 기대수명, 2021	31
그림 I-4	성별 기대수명, 1970-2021	31
그림 I-5	사망자수와 조사망률, 1970-2022	32
그림 I-6	월별 사망자수, 2018-2022	32
그림 I-7	총이동자수 및 이동률, 1970-2022	33
그림 I-8	권역간 순이동, 2022	34
그림 I-9	내국인 입·출국, 2000-2022	34
그림 I-10	외국인 입·출국, 2000-2022	35
그림 I-11	성별 20, 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 2008-2022	37
그림 I-12	연령별 결혼에 대한 태도, 2022	38
그림 I-13	성·연령별 결혼에 대한 태도, 2022	38
그림 I-14	지역·성별 20, 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2022	39
그림 I-15	연령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2022	39
그림 I-16	성별 30, 40대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2022	40
그림 I-17	지역·성별 30, 40대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2022	40
그림 I-18	30-34세 기혼 여성의 이상 자녀수, 출산자녀수, 기대 자녀수, 1974-2021	41
그림 I-19	성별 20-40대의 이상 자녀수, 2021	42
그림 I-20	지역·성별 20, 30대 청년들의 이상 자녀수, 2021	42
그림 I-21	성·연령별 이상 자녀수 분포, 2021	42
그림 I-22	지역·성별 20, 30대 청년들이 1명을 이상 자녀수로 생각하는 비중, 2021	43
그림 I-23	지역·성별 20, 30대 청년들이 3명 이상을 이상 자녀수로 생각하는 비중, 2021	43
그림 I-24	연령별 출산 결정 시 고려사항, 2021	44
그림 II-1	지역별 조혼인율, 2022	47
그림 II-2	혼인지속기간별 이혼구성비, 2000-2022	48
그림 II-3	배우자 관계 만족도, 2010, 2020	51
그림 II-4	부모-성인자녀 관계 만족도, 2010, 2020	52
그림 II-5	미취학 영유아 자녀 돌봄, 2020	53
그림 II-6	가족의 다양한 정의에 대한 동의 정도, 2020	54
그림 II-7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2010, 2020	55
그림 II-8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2010, 2020	55
그림 II-9	연령별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2020	56
그림 II-10	독신에 대한 태도, 2015, 2020	59
그림 II-11	동거에 대한 태도, 2015, 2020	60
그림 II-12	무자녀에 대한 태도, 2015, 2020	60

그림 II-13	비혼자녀에 대한 태도, 2015, 2020	61
그림 II-14	동거커플의 동거 이유, 2020	63
그림 II-15	동거 때문에 느끼는 불편, 2020	63
그림 II-16	혼인부부와 동거커플의 배우자 관계, 2020	64
그림 II-17	혼인부부와 동거커플의 가사수행 방식, 2020	64
그림 II-18	혼인부부와 동거커플의 경제적 차원의 결정, 2020	65
그림 II-19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추세, 2008-2020	68
그림 II-20	돌봄 필요 정도별 건강상태, 2020	69
그림 II-21	경제활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2020	71
그림 II-22	생활비 지출 부담 주체, 2020	72
그림 II-23	거주지의 편리함 정도, 2020	72
그림 II-24	가구 구성 및 도움 필요 정도별 비동거 자녀 왕래 빈도, 2020	75
그림 II-25	집중돌봄필요 노인의 장기요양보험등급 미신청 이유, 2020	77
그림 III-1	기대수명 추이와 국제비교, 1970-2021	81
그림 III-2	회피가능 사망률 추이와 국제비교, 2000-2020	82
그림 III-3	OECD 국가의 주관적 건강인식, 2010, 2022	82
그림 III-4	성별 흡연율, 2007-2021	84
그림 III-5	OECD 국가의 흡연율, 2021	84
그림 III-6	시도별 흡연율,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및 금연시도율, 2022	84
그림 III-7	성별 월간음주율, 2007-2021	85
그림 III-8	시도별 음주율, 2022	85
그림 III-9	성별 비만율, 2007-2021	86
그림 III-10	성별 걷기실천율, 2007-2021	86
그림 III-11	시도별 건강생활실천율, 2022	87
그림 III-12	여름철 일평균 최고기온과 온열질환자 수 간 관계, 2022	88
그림 III-13	OECD 국가의 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2010, 2022	88
그림 III-14	OECD 국가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률, 2020	89
그림 III-15	OECD 국가의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 2021	89
그림 III-16	OECD 국가의 입원환자 평균 입원일수, 2021	89
그림 III-17	OECD 국가의 MRI 촬영검사 횟수, 2015, 2021	90
그림 III-18	OECD 국가의 CT 촬영검사 횟수, 2015, 2021	90
그림 III-19	50-69세 여성 유방암 검진율, 2010-2021	91
그림 III-20	지역별 인구 100만 명당 의료기관 수, 2011-2020	93
그림 III-21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의료기관 유형별 인구 1,000명당 병상수, 2011-2020	94
그림 III-22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주요 진료과목별 인구 100만 명당 의원 수, 2011-2020	96
그림 III-23	시도 및 의료기관 유형별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2020	97
그림 III-24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기관당 의사 수, 2011-2020	97
그림 III-25	시도 및 의료기관 유형별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 수, 2020	98
그림 III-26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기관당 간호사 수, 2011-2020	99



그림 III-27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인구 100명당 입원환자 실인원 수 및 인구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 수, 2011-2020	99
그림 III-28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질환별 인구 10만 명당 예방가능 입원환자 수, 2011, 2020	100
그림 III-29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입원환자 중 전문질환군 환자 비율, 2011-2020	100
그림 III-30	시도별 입원환자 자체충족률, 2011, 2020	101
그림 III-31	성별 자살률, 1983-2022	104
그림 III-32	연령별 자살률, 1983-2022	104
그림 III-33	시도별 연령표준화 자살률, 1998, 2022	105
그림 III-34	월별 자살자 수, 2019-2022	105
그림 III-35	성별 자살 관련 행동 대상자의 정신장애 경험 비율(평생), 2021	107
그림 III-36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자살률, 2000-2019	109
그림 III-37	청소년의 성별 자살률, 2017-2022	109
그림 III-38	청소년의 학교급별 자살시도율, 2005-2022	110
그림 III-39	청소년의 학년 및 성별 자살시도율, 2022	110
그림 III-40	지역단위 자살예방 조직 현황, 2021	110
그림 IV-1	교육단계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2-2022	115
그림 IV-2	교육단계별 학급당 학생 수, 2012-2022	116
그림 IV-3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2022	116
그림 IV-4	초·중·고 학교 디지털 기기 보유 대수, 2018-2022	117
그림 IV-5	한국과 OECD의 학교에서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2018	117
그림 IV-6	지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2022	118
그림 IV-7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자 수, 2013-2022	118
그림 IV-8	교육단계별 석사 학력 이상 교원 비율, 2005-2022	119
그림 IV-9	고등교육기관별 전임교원 확보율, 2012-2022	119
그림 IV-10	한국과 OECD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014-2020	120
그림 IV-11	정부 및 민간 부문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2010-2020	120
그림 IV-12	한국과 OECD의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대학 연구개발비 비율, 2010-2021	120
그림 IV-13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 대한 만족도, 2021-2022	122
그림 IV-14	고등교육기관 융합학과 개설 및 폐지 학과 수, 2019-2022	122
그림 IV-15	고등교육기관 개설 융합학과의 계열별 구성 비율, 2019-2022	123
그림 IV-16	케이무크(K-MOOC) 회원가입자 및 수강신청자 수, 2015-2022	123
그림 IV-17	교육단계별 취학률, 2011-2023	124
그림 IV-18	고등교육 이수율, 2010-2022	124
그림 IV-19	교육단계별 학업중단율, 2010-2022	124
그림 IV-20	중·고등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도, 2018-2022	125
그림 IV-21	지역별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 2022	125
그림 IV-22	한국과 OECD 학생의 교과별 국제학업성취도(PISA), 2015, 2018	126
그림 IV-23	지역별 문해능력 수준, 2020	126
그림 IV-2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2012-2021	127
그림 IV-25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2020, 2021	127

그림 IV-26	한국과 OECD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2020, 2021	128
그림 IV-27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2018-2022	131
그림 IV-28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 2018, 2022	132
그림 IV-29	서울시민의 연령별 키오스크 이용률, 2021	132
그림 IV-30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2022	133
그림 IV-31	지역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2022	134
그림 IV-32	정보취약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2018-2022	134
그림 IV-33	인터넷 이용목적, 2022	135
그림 IV-34	디지털 정보 활용 하위영역별 이용률, 2022	136
그림 IV-35	서울시민의 디지털 역량 수준, 2021	137
그림 IV-36	서울시민의 연령별 디지털 역량 수준, 2021	138
그림 IV-37	서울시민의 디지털 정보기술 교육 경험, 2021	139
그림 IV-38	서울시민의 연령별 향후 디지털 정보기술 교육 미참여 의향, 2021	139
그림 IV-39	OECD 국가 성인의 문해력, 수리력 및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능력 평가 결과(PIACC 조사결과), 2018	140
그림 IV-40	OECD 국가 성인의 연령별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능력 수준, 2018	141
그림 V-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2021.1-2023.10	145
그림 V-2	성 및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021.1-2023.10	146
그림 V-3	연령 및 혼인상태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2023	146
그림 V-4	성별 취업자 수 변화, 2021.1-2023.10	147
그림 V-5	성별 고용률 변화, 2021.1-2023.10	147
그림 V-6	성 및 연령별 고용률 변화, 2021.1-2023.10	148
그림 V-7	성 및 연령별 실업률, 2019.1-2023.10	149
그림 V-8	고용보조지표(체감 실업률), 2018.1-2023.10	150
그림 V-9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2019.1-2023.10	151
그림 V-10	종사상 지위별 비임금근로자 수, 2021.1-2023.10	151
그림 V-11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2021.1-2023.10	153
그림 V-12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 2018.1-2023.10	153
그림 V-13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2020-2022	154
그림 V-14	근로시간별 취업자 수 변화, 2019.3/4-2023.3/4	155
그림 V-15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2018-2022	157
그림 V-16	직종별 월임금총액, 2019-2022	157
그림 V-17	육아휴직자 및 기업체 규모별 분포, 2015-2021	158
그림 V-18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가입률, 2019-2022	158
그림 V-19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2018-2022	159
그림 V-20	OECD 주요 국가의 노조 조직률, 2000-2019	161
그림 V-21	노조 조직률 및 조합원 수, 2013-2021	161
그림 V-22	노조 총연맹별 조합원 수, 2013-2021	162
그림 V-23	부문별 노조 조직률, 2014-2021	163
그림 V-24	근로형태별 노조 가입률, 2013-2022	164



그림 V-25	사업체 규모별 노조 가입인원 및 가입률, 2013-2022	165
그림 V-26	주요 산업별 노조 가입률, 2013-2022	165
그림 V-27	연령집단 및 세대별 노조 가입률, 2013-2022	166
그림 V-28	주요 국가의 노조 신뢰도 변화, 2010-2019	167
그림 V-29	연령별 노조 신뢰도, 2013-2022	168
그림 V-30	종사상 지위별 노조 도구성 평가, 2012-2021	168
그림 V-31	세대별 노조 도구성 평가, 2012-2021	169
그림 V-32	MZ세대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노조 도구성 평가, 2018-2021	169
그림 V-33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근로자-고용주 간 갈등 정도 인식과 노조 참여율, 2022	170
그림 V-34	산업재해 발생률, 2001-2022	174
그림 V-35	OECD 주요 국가의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 2001-2022	175
그림 V-36	질병별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 및 승인율, 2006-2022	176
그림 V-37	질병별 사망재해자 수, 2001-2021	176
그림 V-38	성별 산업재해자 수, 2001-2021	177
그림 V-39	산업재해 사망자의 연령구성, 2001-2022	177
그림 V-40	연령대별 질병사망 및 사고사망 재해자 수, 2001-2022	177
그림 V-41	연령별 사망만인율(취업자 대비), 2001-2022	178
그림 V-42	주요 산업별 요양재해자 수, 2001-2022	179
그림 V-43	주요 산업별 산업재해율, 2001-2022	180
그림 V-44	산업별 사망재해자 수, 2001-2022	180
그림 V-45	사업체규모별 요양재해율, 2001-2021	181
그림 V-46	산업 및 사업체규모별 요양재해자 수, 2021	181
그림 VI-1	가구 소득분위별 실질 시장소득 증감률, 2012-2021	187
그림 VI-2	권역별 소득 5분위 배율, 2011-2021	189
그림 VI-3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 2021	190
그림 VI-4	가구주 연령별 소득비, 2011-2021	192
그림 VI-5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비, 2011-2021	192
그림 VI-6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11-2021	193
그림 VI-7	가구주 연령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2017-2022	194
그림 VI-8	순자산 5분위 배율, 2012-2022	195
그림 VI-9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2020.1/4-2023.1/4	196
그림 VI-10	소비지출 항목별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2020.1/4-2023.1/4	196
그림 VI-11	가구의 소비지출, 2019-2022	197
그림 VI-12	소득 및 순자산 지니계수, 2018-2022	200
그림 VI-13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 2018-2021	201
그림 VI-14	가구주 연령집단 및 소득원천별 소득 증감률, 2018-2021	201
그림 VI-15	가구주 연령집단 간 소득 격차, 2018-2021	202
그림 VI-16	가구주 연령집단별 부채 보유 가구 비율 및 부채 보유액, 2018-2022	203
그림 VI-17	가구주 연령집단 간 부채 격차, 2018-2022	204

그림 VI-18	가구주 연령집단별 자산, 2018-2022	205
그림 VI-19	가구주 연령집단 간 자산 격차, 2018-2022	205
그림 VI-20	가구주 연령집단별 자산구성의 변화, 2018-2022	206
그림 VI-21	가구주 연령집단별 금융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 비중, 2018-2022	207
그림 VI-22	가구주 연령집단별 순자산, 2018-2022	207
그림 VI-23	가구주 연령집단 간 순자산 격차, 2018-2022	208
그림 VI-24	가구 소득 지니계수의 변화, 2007-2021	212
그림 VI-25	연령별 가구소득 분포, 2021	213
그림 VI-26	연령별 총소득 지니계수, 2007-2021	214
그림 VI-27	분산으로 측정된 소득이동성, 2007-2021	218
그림 VI-28	연령별 소득이동성(분산) 분포, 2007-2021	219
그림 VI-29	빈곤율, 2007-2021	221
그림 VII-1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03-2022	225
그림 VII-2	연령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19-2022	226
그림 VII-3	연도별 영화 관객 수, 2004-2022	226
그림 VII-4	문화예술행사, 문화자원봉사, 문화동호회,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2016-2022	226
그림 VII-5	생활체육 참여율, 1989-2022	227
그림 VII-6	국내여행 경험률, 2018-2022	227
그림 VII-7	국내여행 일수, 2018-2022	228
그림 VII-8	해외여행객 수, 2020.1-2023.5	228
그림 VII-9	연령별 웹툰 이용률, 2022	229
그림 VII-10	연령별 OTT 이용률, 2020-2022	230
그림 VII-11	여가활동 동반자, 2019-2022	230
그림 VII-12	여가 관련 동호회 참여율, 2019-2022	231
그림 VII-13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 2016-2022	231
그림 VII-14	문화여가 지출률, 2016-2022	232
그림 VII-15	성 및 연령별 여가생활 만족도, 2019-2022	233
그림 VII-16	권역별 문화예술 관람률, 2009, 2019, 2021	236
그림 VII-17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2009-2021	240
그림 VII-18	권역별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서 문화여가시설, 2009, 2019, 2021	241
그림 VII-19	권역 및 연령별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서 문화여가시설, 2009, 2019, 2021	242
그림 VII-20	권역별 여가만족도, 2009, 2019, 2021	243
그림 VII-21	지난 6개월 동안 외로움의 정도: 국제 비교, 2020.11-2021.1	245
그림 VII-22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 정도, 2020.3-2022.12	245
그림 VII-23	코로나19가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2021, 2022	246
그림 VII-24	여가활동 동반자(1순위 활동 기준), 2019-2022	247
그림 VII-25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의 비중 변화, 2019-2022	247
그림 VII-26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19-2022	247
그림 VII-27	코로나19 전후 여가활동 참여율 변화, 2019, 2022	248



그림 VII-28	산림휴양·복지활동의 이동시간 및 횟수, 2019-2021	249
그림 VII-29	산림여가활동과 삶의 질, 2021	249
그림 VII-30	반려동물 양육 여부, 2019-2022	250
그림 VIII-1	권역별 주택보급률, 2010-2021	255
그림 VIII-2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비율, 2010-2022	255
그림 VIII-3	총 주택 대비 빈집 비율, 2010-2022	256
그림 VIII-4	연령별 무주택가구 비율, 2015-2021	257
그림 VIII-5	주택종합지수 및 매매대비 전세가 비율, 2010.1-2023.9	258
그림 VIII-6	주택담보대출 총액 및 가계신용 대비 비율, 2007.4/4-2023.2/4	259
그림 VIII-7	담보대출의 용도별 비율, 2012-2022	259
그림 VIII-8	주택구입물량지수, 2012-2022	259
그림 VIII-9	공공 및 민간 부문 임대주택 재고, 2010-2021	261
그림 VIII-10	OECD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준	261
그림 VIII-11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 분포, 2006-2021	262
그림 VIII-12	1인당 평균 주거면적, 2006-2021	263
그림 VIII-13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 2010, 2015, 2020	265
그림 VIII-14	시도별 타지역 통근·통학 비율, 2020	266
그림 VIII-15	청년(40세 미만) 1인가구, 무주택가구 비율, 2015-2021	268
그림 VIII-16	가구 유형별 비율, 2022	269
그림 VIII-17	연 소득 및 소득 분포, 2022	270
그림 VIII-18	주택 유형 비율, 2022	270
그림 VIII-19	점유형태 비율, 2022	271
그림 VIII-20	주거자금 부담자 비율, 2022	271
그림 VIII-21	평균 전용면적, 2022	271
그림 VIII-22	주택가격 및 PIR, 2022	272
그림 VIII-23	환산 연 임대료 및 RIR, 2022	272
그림 VIII-24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 평가 차이, 2022	273
그림 VIII-25	주택 위치별 비율, 2022	273
그림 VIII-26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2022	274
그림 VIII-27	주거환경 만족도 차이, 2022	274
그림 VIII-28	주거불안 경험, 2022	274
그림 VIII-29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2022	275
그림 VIII-30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2022	275
그림 VIII-31	부모동거가구(미혼)의 독립계획 이유, 2022	275
그림 VIII-32	자가주택 필요 이유, 2022	276
그림 VIII-33	현재 거주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 2022	276
그림 VIII-34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이유, 2022	276
그림 VIII-35	학업 또는 일자리에 따른 현재 주거 지역으로의 이사 여부, 2022	277

그림 Ⅱ-1	주요 도시 미세먼지(PM ₁₀) 연평균 농도, 1995-2021	280
그림 Ⅱ-2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PM _{2.5}) 연평균 농도, 2015-2021	281
그림 Ⅱ-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20	282
그림 Ⅱ-4	폭염 일수, 1980-2022	283
그림 Ⅱ-5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오염도, 1995-2021	283
그림 Ⅱ-6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2021	284
그림 Ⅱ-7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구성 비율, 2021	285
그림 Ⅱ-8	주요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밤 소음도, 2000-2021	286
그림 Ⅱ-9	환경분야 예산, 1995-2021	287
그림 Ⅱ-10	영역별 환경상태 만족도, 2010-2022	289
그림 Ⅱ-11	지구표면온도 변화 관측치, 1850-2020	292
그림 Ⅱ-12	미래 기간별 한반도 온난일 전망	293
그림 Ⅱ-13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난 발생횟수, 1985-2021	293
그림 Ⅱ-14	폭염일수, 1973-2023	294
그림 Ⅱ-15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1995-2021	294
그림 Ⅱ-16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1958-2021	295
그림 Ⅱ-17	호우 재해취약성, 2021	297
그림 Ⅱ-18	폭염 재해취약성, 2021	297
그림 X-1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12-2021	301
그림 X-2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 건수, 2012-2021	302
그림 X-3	범죄피해 경험률, 2012-2020	303
그림 X-4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률, 2008-2020	304
그림 X-5	성별 외인 사망률, 2003-2022	305
그림 X-6	연령별 외인 사망률, 2003-2022	305
그림 X-7	주요 외인별 사망률, 2003-2022	306
그림 X-8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2001-2021	306
그림 X-9	화재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2003-2022	307
그림 X-10	화재 발생 건수와 재산 피해액, 2003-2022	307
그림 X-11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2012-2022	308
그림 X-12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1997-2021	310
그림 X-13	OECD 국가의 야간보행 안전도, 2018	310
그림 X-14	주요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 1984-2022	312
그림 X-15	고령자 연령별 주요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 2000-2022	312
그림 X-16	주요 국가의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 2000-2020	313
그림 X-17	연령별 교통사고 사상자 구성비, 2022	314
그림 X-18	승차차종별 고령자 교통사고 사상자 구성비, 2022	314
그림 X-19	OECD 주요국가의 교통사고 사망률, 2021	314
그림 X-20	자살 사망률, 1983-2022	316
그림 X-21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08-2022	316



그림 X-22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에 대한 인식, 2018-2022	317
그림 X-23	피해율, 2013-2022	320
그림 X-24	학교급별 피해율, 2013-2022	320
그림 X-25	초등학교 학년별 피해율, 2013-2022	321
그림 X-26	피해 유형별 응답률, 2013-2022	322
그림 X-27	가해율, 2013-2022	322
그림 X-28	학교급별 가해율, 2013-2022	323
그림 X-29	초등학교 학년별 가해율, 2013-2019	323
그림 X-30	가해 유형별 응답률, 2013-2022	324
그림 XI-1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13-2022	327
그림 XI-2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 경험, 2011-2021	328
그림 XI-3	민주주의 만족도, 2018-2022	329
그림 XI-4	민주주의 전망, 2018-2022	329
그림 XI-5	OECD 주요국가의 민주주의 평가, 2017-2022	330
그림 XI-6	정치효능감, 2013-2022	331
그림 XI-7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2013-2022	333
그림 XI-8	국회에 대한 신뢰도, 2013-2022	333
그림 XI-9	법원에 대한 신뢰도, 2013-2022	334
그림 XI-10	TV 방송사에 대한 신뢰도, 2013-2022	334
그림 XI-11	신문사에 대한 신뢰도, 2013-2022	335
그림 XI-12	부패인식, 2012-2022	335
그림 XI-13	지니계수, 2013-2021	339
그림 XI-14	빈부격차를 대표적인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비율, 2013-2022	340
그림 XI-15	이념 성향별 추가납세 의향, 2013-2022	340
그림 XI-16	세대별 추가납세 의향, 2013-2022	341
그림 XI-17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수용 인식, 2013-2022	342
그림 XI-18	북한이탈주민 수용 인식, 2013-2022	342
그림 XI-19	성적 소수자 수용 인식, 2013-2022	343
그림 XI-20	장애인 수용 인식, 2013-2022	344
그림 XI-21	한부모가정 자녀 수용 인식, 2013-2022	344
그림 XI-22	전과자 수용 인식, 2013-2022	345
그림 XI-23	각 집단에 대한 감정 거리, 2021, 2022	345
그림 XI-24	각 집단에 대한 이념 성향별 감정 거리, 2021, 2022	346
그림 XI-25	각 집단에 대한 세대별 감정 거리, 2021, 2022	346
그림 XII-1	삶의 만족도 비율, 2013-2022	351
그림 XII-2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13-2022	351
그림 XII-3	연령별 삶의 만족도 비율 및 평균 점수, 2013-2022	352
그림 XII-4	긍정 및 부정 정서 경험 비율, 2013-2022	353

그림 XII-5	연령별 긍정 및 부정 정서 경험 비율, 2013, 2018, 2022	354
그림 XII-6	유데모니아 긍정 응답 비율, 2013-2022	355
그림 XII-7	OECD 주요 국가들의 삶의 만족도 비교, 2022	356
그림 XII-8	아시아 국가들의 삶의 만족도 비교, 2006-2022	356
그림 XII-9	가족관계 만족도, 2010-2022	357
그림 XII-10	근로여건 및 여가활용 만족도, 2009-2021	357
그림 XII-11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 2009-2021	358
그림 XII-12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에 대한 인식, 2013-2022	359
그림 XII-13	연령별 개인의 이익에 대한 인식, 2013, 2018, 2022	359
그림 XII-14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고 인식하는 비율, 2015-2022	360
그림 XII-15	연령별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고 인식하는 비율, 2015, 2018, 2022	360
그림 XII-16	코로나19 발생 전·후 주관적 웰빙, 2019-2022	364
그림 XII-17	성별 코로나19 발생 전·후 주관적 웰빙, 2019-2022	364
그림 XII-18	연령별 코로나19 발생 전·후 주관적 웰빙, 2019-2022	365
그림 XII-19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정서(분노, 걱정, 슬픔) 경험, 2020-2022	367
그림 XII-20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정서(그리움, 외로움, 고립감) 경험, 2020-2022	368
그림 XII-21	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정서 경험, 2020-2022	368
그림 XII-22	연령별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정서 경험, 2020-2022	370
그림 XII-23	코로나19 이후 자녀 양육 관련 가족생활, 2020-2022	371
그림 XII-24	자녀 돌봄 애로와 주관적 웰빙, 2020-2022	372
그림 XII-25	자녀와의 시간과 주관적 웰빙, 2020-2022	372
그림 XII-26	자녀의 학업과 주관적 웰빙, 2020-2022	373
그림 XII-27	취업상태별 코로나19 전·후 주관적 웰빙, 2019-2022	374
그림 XII-28	코로나19 이후 일의 변화, 2020-2022	374
그림 XII-29	코로나19 이후 임금 감소 경험과 주관적 웰빙, 2020-2022	375
그림 XII-30	코로나19 이후 영업시간 감소 경험과 주관적 웰빙, 2020-2022	375

2023 Population

Korean Social Trends 2023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 인구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최슬기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24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특징 신윤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6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을 정점으로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총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3.4%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소년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양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출생아수는 1970년대 초 한 해 1백만 명에 달했으나 2022년에는 24만 9천 명으로까지 줄어들었다. 2022년도에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였고, 이는 세계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21년 남자 80.6년, 여자 86.6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대수명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높은 고령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조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2022년 국내 인구가동자 수는 총 615만여 명으로 그중에서 시도 내 이동은 2/3에 달했고, 시도 간 이동이 1/3을 차지했다. 경기, 인천, 충남순으로 순유입이 많은 반면 서울, 경남, 부산순으로 순유출이 많았다.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내국인의 순유입, 외국인의 순유출이 크게 발생하였다. 하지만 2022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반전되어 내국인은 순유출, 외국인은 순유입되었다.

인구는 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 수를 의미한다. 인구는 그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인구는 해당 사회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여러 요소에 의해 변화하며, 인구변화는 다시 여러 요소에 영향을 준다.

우리 사회의 인구변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되고, 2022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인구 현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구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인구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출생, 사망, 이동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자료로는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향조사」, 「생명표」, 「국제인구가동통계」를 활용한다.

총인구와 인구구조의 변화

한국사회가 빠르게 발전해 온 것처럼 인구도 빠르게 변화해 왔다. 제1차 인구변천 이전의 특징인 높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은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함께 빠르게 하락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합계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



지면서 인구변천도 완료한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출산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인구 변천기에 발생한 거대 인구집단이 나이가 들면서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표 I-1〉은 198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총인구 변화를 보여준다. 1980년에 3,744만 명이던 인구가 해마다 증가해 오다가 2020년 약 5,183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2021년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2년 11월 인구주택총조사 시기에 우리나라 인구는 5,169만 2천 명이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1%가 넘는 총인구 증가율이 2015년까지는 연 0.5%로 줄어들었고, 2019년까지는 연 0.3~0.4%로 더욱 떨어졌다. 그러다가 2021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아직은 연평균 감소율이 크지 않지만 향후 감소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전까지는 0.3% 이하로 매우 미미하였다. 하지만 2000년에 15만 명에 불과하던 외국인이 2019년에는 178만 명으로 총인구의 3.4%를 차지할 만큼 증가하였다. 외국인 인구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70만 명과 165만 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175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3.4%를 다시 기록하였다. 앞으로도 외국인 인구는 점점 더 증가하여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표 I-1〉 총인구의 변화, 1980-2022

연도	총인구 (1,000명)	전년 대비 증감 (1,000명)	연평균 증감률 (%)	외국인 인구 (1,000명)	외국인 비중 (%)
1980	37,436	-	1.5	30	0.1
1985	40,448	-	1.6	29	0.1
1990	43,411	-	1.4	21	0.0
1995	44,609	-	0.5	55	0.1
2000	46,136	-	0.7	151	0.3
2005	47,279	-	0.5	238	0.5
2010	48,580	-	0.5	590	1.2
2015	51,069	-	0.5	1,364	2.7
2016	51,270	200	0.4	1,414	2.8
2017	51,423	153	0.3	1,479	2.9
2018	51,630	207	0.4	1,652	3.2
2019	51,779	150	0.3	1,779	3.4
2020	51,829	50	0.1	1,696	3.3
2021	51,738	-91	-0.2	1,650	3.2
2022	51,692	-46	-0.1	1,752	3.4

주: 1) 인구주택총조사는 1980-2010년까지는 5년 단위로 현장조사 방식, 2015년부터는 매해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되었음.

2) 외국인은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표 I-2〉는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여준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0~14세 유소년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7년 668만 명에서 2022년 586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시기 13%에서 11.3%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대수명의 연장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2017년

717만 명에서 2022년에는 915만 명으로 늘어났다.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17년에 13.9%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17.7%가 되었다. 대략 매해 1%p씩 고령인구 비중이 늘어난 셈이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인구 증가속도는 앞으로도 한 동안 유지되어,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에 3,763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가 2019년부터 감소가 시작되었다. 총인구가 2020년에 정점을 기록하였으나, 생산연령인구 정점과 하락세가 2년 먼저 발생한 셈이다.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로 추정되는 유소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세보다 더 빠른 유소년인구 감소세 탓으로 2017년 17.8에서 2022년 16.0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노년부양비는 2017년 19.1에서 2022년 24.9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합한 총부양비는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6.9에서 2022년에는 40.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유소년인구 1백 명당 고령인구로 추정되는 노령화지수도 2017년 107.3에서 2022년 156.1로 높아졌다. 이는 유소년 인구는 빠르게 줄어든 반면, 고령인구는 늘어난 결과이다.

〈표 I-3〉은 총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여준다. 서울특별시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 1992년 1,0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016년 처음으로 1천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942만 명으로 총인구의 18.2%를 차지했다. 그렇지만 경기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수도권 인구는 여전히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2017년 2,552만 명이었던 수도권 인구는 2022년에는 2,612만 명에 달했다. 2019년부터는 총인구의 절반을 넘어서서, 2022년에는 50.5%

〈표 I-2〉 연령대별 인구구성 주요 지표, 2017~2022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구 (1,000명)	합계	51,423	51,630	51,779	51,829	51,738	51,692
	유소년 인구	6,683	6,543	6,392	6,254	6,087	5,860
	생산연령 인구	37,569	37,632	37,570	37,288	36,944	36,686
	고령인구	7,171	7,455	7,817	8,287	8,707	9,146
구성비 (%)	유소년 인구	13.0	12.7	12.3	12.1	11.8	11.3
	생산연령 인구	73.1	72.9	72.6	71.9	71.4	71.0
	고령인구	13.9	14.4	15.1	16.0	16.8	17.7
유소년부양비		17.8	17.4	17.0	16.8	16.5	16.0
노년부양비		19.1	19.8	20.8	22.2	23.6	24.9
총부양비		36.9	37.2	37.8	39.0	40.0	40.9
노령화지수		107.3	113.9	122.3	132.5	143.0	156.1

주: 1) 유소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인구(14세 이하).

2)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65세 이상).

3)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유소년 인구(14세 이하)와 고령인구(65세 이상).

4)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14세 이하)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에 달했다.

호남권과 영남권은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중부권은 2017년 710만 명에서 2022년 720만 명으로 소폭이지만 증가하였다.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가 전년 대비 8만 명 가까이 감소한 반면 도지역 인구는 3만 명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이를 도시지역 대비 농촌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동부지역의 인구는 2022년에 4,209만 명으로 총인구의 81.4%를 차지하며,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읍부와 면부는 2022년에 전년 대비 각각 8만 명과 3만 명이 감소하였다. 도지역의 인구 증가는 경기도 화성시와 평택시의 예처럼 도지역 안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인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I-3〉 지역별 인구구성 주요 지표, 2017-2022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구 (1,000명)	전국		51,423	51,630	51,779	51,829	51,738	51,692
	서울		9,742	9,674	9,640	9,586	9,472	9,417
	권역	수도권	25,519	25,713	25,893	26,043	26,082	26,124
		중부권	7,097	7,146	7,175	7,173	7,169	7,202
		호남권	5,756	5,757	5,750	5,740	5,714	5,691
		영남권	13,049	13,013	12,962	12,873	12,774	12,674
	시·도	특·광역시	22,993	22,914	22,865	22,747	22,583	22,505
		도	28,429	28,716	28,914	29,082	29,155	29,187
	읍·면	동부	41,793	41,915	42,023	42,065	42,020	42,087
		읍부	4,794	4,984	5,058	5,113	5,184	5,099
		면부	4,835	4,730	4,699	4,651	4,534	4,506
구성비 (%)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서울		18.9	18.7	18.6	18.5	18.3	18.2
	권역	수도권	49.6	49.8	50.0	50.2	50.4	50.5
		중부권	13.8	13.8	13.9	13.8	13.9	13.9
		호남권	11.2	11.2	11.1	11.1	11.0	11.0
		영남권	25.4	25.2	25.0	24.8	24.7	24.5
	시·도	특·광역시	44.7	44.4	44.2	43.9	43.6	43.5
		도	55.3	55.6	55.8	56.1	56.4	56.5
	읍·면	동부	81.3	81.2	81.2	81.2	81.2	81.4
		읍부	9.3	9.7	9.8	9.9	10.0	9.9
		면부	9.4	9.2	9.1	9.0	8.8	8.7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중부권은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을, 호남권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를, 영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초저출산의 심화

우리나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구변화를 가져온 가장 주요한 요인은 출산율의 하락이다. [그림 I-1]은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1970년 한해 101만 명이었던 출생아수가 1983년에는 70만 명대로 줄어들었고 이듬해인 1984년부터는 60만 명대인 67만여 명을 기록했다. 1990년대 초반에 잠시 70만 명대 초반을 유지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다시 60만 명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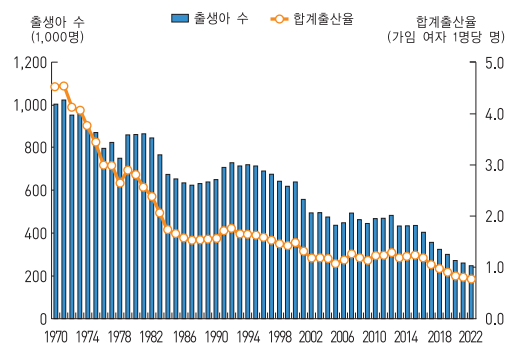
2000년 64만 명이었던 출생아수는 2001년에는 56만 명을, 2002년에는 다시 49만 7천 명으로 줄어들어 40만 명대 출생아수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 2000년 64만 명과 2005년 44만 명을 비교하면 5년 사이에 한 해 출생아수가 20만 명이 차이 나는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난 것이다. 2021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미달사태가 나타난 것은 이때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연령대가 되면서 대학교 입시 정원보다 지원할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 해 출생아수 40만 명대는 2017년 출생아수가 35만 8천 명을 기록하면서 다시 무너진다. 출생아수는 이후에도 빠르게 감소하여 2020년에는 27만 2천 명으로 30만 명대가 붕괴하였고, 2022년에는 24만 9천 명을 기록하였다.

출생아수 감소는 이들의 부모세대인 청년세대의 인구감소와 출산율 하락의 영향이 조합된 결

과이다. 출생아수가 80만 명대에서 60만 명대로, 그리고 다시 40만 명대로 바뀌는 시점이 각각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수준 이하로 하락한 1983년과 초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이라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림 I-1]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70~2022



주: 1) 합계출산율은 그 해의 연령별 출산율에 따라 일생 동안 아이를 낳는다면 갖게 될 평균 출생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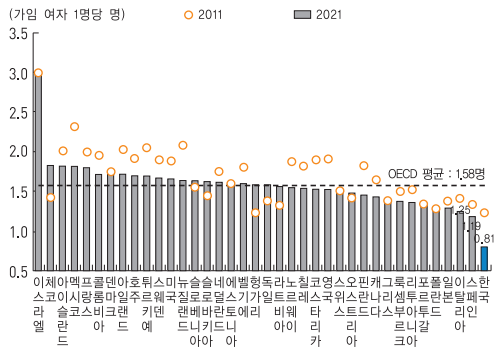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시작된 초저출산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2018년에는 1.0명보다 낮은 0.98명을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0.78명까지 낮아졌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합계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고, 경우에 따라 때로는 초저출산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만큼 낮은 수치를 보이는 국가는 없다. [그림 I-2]에서 보듯이 2021년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8명이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가장 낮은 국가는 스페인으로 1.19명이며, 그다음인 이탈리아도 1.25명이었다.



[그림 I-2]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 2011, 2021



출산율을 모의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최근 출산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보통 가장 출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연령대는 30~34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구간이 25~29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25~29세의 출산율이 35~39세의 출산율보다도 낮다. 연령대별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과정에서 20대 출산율이 크게 하락하고, 30대 후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함으로 주출산 연령대가 변화하고, 전체 출산시기가 늦춰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표 I-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2022년에 33.5세로 2015년에 비해 1.3년이 늦춰졌다. 이를 출산 순위별로 나눠보면 2022년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평균 32.8세로 2015년 대비 1.6년이 늦춰졌다. 둘째아와 셋째아는 2022년도 평균 출산연령이 각각 34.2세와 35.5세로 2015년 대비 각각 1.2년, 0.9년 늦춰졌다.

<표 I-4> 모의 평균 출산연령, 2015~202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 체	32.2	32.4	32.6	32.8	33.0	33.1	33.4	33.5
첫째아	31.2	31.4	31.6	31.9	32.1	32.2	32.6	32.8
둘째아	33.0	33.2	33.4	33.5	33.7	33.9	34.1	34.2
셋째아	34.6	34.7	34.8	35.0	35.2	35.2	35.4	35.5
넷째아 이상	35.9	36.1	36.1	36.2	36.2	36.3	36.3	36.3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표 I-5>는 출산 순위별 출생아수를 보여준다. 2022년 첫째아는 14만 5천 명으로 전체 출생아수 24만 9천 명의 58.2%에 달했다. 둘째아 8만 3천여 명과 셋째아 이상은 더욱 드물어 2만여 명에 불과 했다. 2015년만 해도 첫째아는 22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2.3%였다. 낳더라도 아이를 하나만 낳는 경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표 I-5> 출산 순위별 출생아수, 2015~202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 체	438.4	406.2	357.8	326.8	302.7	272.3	260.6	249.2
첫째아	228.6	212.9	187.9	172.8	162.4	149.2	145.0	145.0
둘째아	166.1	152.7	133.9	122.9	111.6	97.8	92.5	83.9
셋째아 이상	42.4	39.6	35.0	30.8	28.6	25.2	22.9	20.2

주: 1) 전체 출생아수에는 출산 순위 미상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표 I-6>은 시도별로 출산력을 비교한 것이다. 2022년도에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

종시로 1.12명을 기록하였다. 반면에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도지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0.86명인 반면에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평균은 0.69명으로 도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더 높았다.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대도시 지역의 특성과,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미혼 여성이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표 I-6〉 지역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2022

	출생아수 (1,000명)	합계출산율 (가임 여자 1명당 명)	조출생률 (인구 1천 명당 명)
전국	249.2	0.78	4.9
특·광역시	105.1	0.69	4.7
서울	42.6	0.59	4.5
부산	14.1	0.72	4.3
대구	10.1	0.76	4.3
인천	14.5	0.75	4.9
광주	7.4	0.84	5.2
대전	7.7	0.84	5.3
울산	5.4	0.85	4.9
세종	3.2	1.12	8.5
도지역	144.1	0.86	5.0
경기	75.3	0.84	5.6
강원	7.3	0.97	4.8
충북	7.5	0.87	4.7
충남	10.2	0.91	4.8
전북	7.0	0.82	4.0
전남	7.9	0.97	4.3
경북	11.3	0.93	4.3
경남	14.0	0.84	4.3
제주	3.6	0.92	5.3

주: 1) 합계출산율은 15~49세의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측정됨.

2) 조출생률은 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2.

인구 1천 명당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인구 1천 명당 8.5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인 경기도는 조출생률이 5.6명이었다. 세종시의 높은 조출생률은 젊은 청년세대 인구가 많고 이들의 출산성향도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전북은 조출생률이 4.0명으로 나타나 17개 시도별 조출생률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 뒤를 부산(4.3명), 대구(4.3명), 전남(4.3명), 경북(4.3명), 경남(4.3명)이 따르고 있다. 대체로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서 조출생률이 낮게 나타났다.

기대수명의 개선과 사망자수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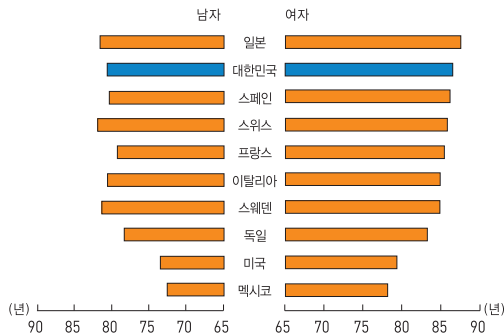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50년대 최빈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부유한 나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그림 I-3). 2021년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수명은 86.6년으로 일본의 87.6년보다는 짧지만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보다도 길다. 우리나라 남자는 80.6년으로 일본, 스위스, 스웨덴보다 짧지만 역시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림 I-4]는 성별 기대수명 및 남녀 간 격차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70년 남자 58.7년, 여자 65.8년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남자 80.6년, 여자 86.6년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기대수명은 2010년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0.5년가량 길어져왔고, 2010년대에도 약 0.3년 여씩 길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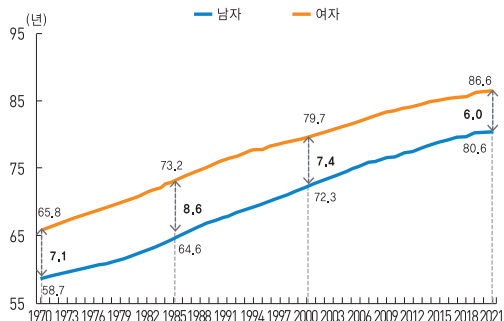
[그림 I-3] OECD 주요 회원국의 성별 기대수명, 2021



주: 1)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의 출생아(연령 0세의 사람)가 그 해의 연령별 생존확률로 일생을 살아간다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명년수를 의미함.

출처: OECD, Life expectancy at birth(indicator), 2023.

[그림 I-4] 성별 기대수명, 1970~2021



주: 1)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의 출생아(연령 0세의 사람)가 그 해의 연령별 생존확률로 일생을 살아간다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명년수를 의미함.

출처: 통계청, 「생명표」, 2022.

기대수명은 언제까지 이렇게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까? 인간수명의 한계가 있고 그 한계에 가깝게 다가설수록 발전 속도는 늦춰질 것이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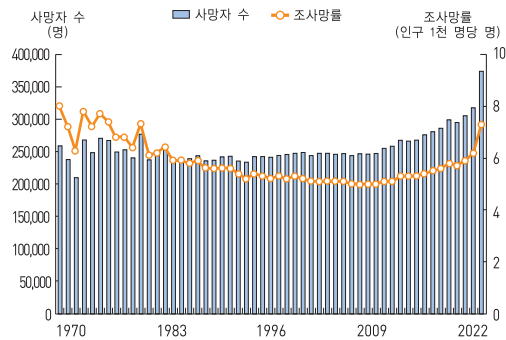
만 그 한계를 미뤄 짐작하기는 어렵다. 2018년부터는 기대수명의 발전속도가 한 해 0.2년 내외로 줄어들었다. 이제는 발전속도가 늦춰질 시기가 온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정체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대수명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남녀 간 차이이다. 많은 나라에서 여자의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길게 관찰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자의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6년이 더 길다. 1985년에는 그 차이가 8.6년까지 벌어졌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남자와 여자 간의 사회 문화적 행태 차이가 줄어들면서 기대수명의 간극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50대 이전에 사망할 확률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동시에 사망확률은 초고령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고령층 인구비중이 커짐에 따라 사망확률 개선과 사망자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림 I-5]에서 보듯이 인구 1천 명당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조사망률은 2009년도에 5.0명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았다. 이후에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7.3명을 기록하였다. 단순 비교하자면 1980년도의 조사망률이 다시 나타난 셈인데, 이는 기대수명의 개선 속에서도 고령층 인구 비중이 커짐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사망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2년 조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의 영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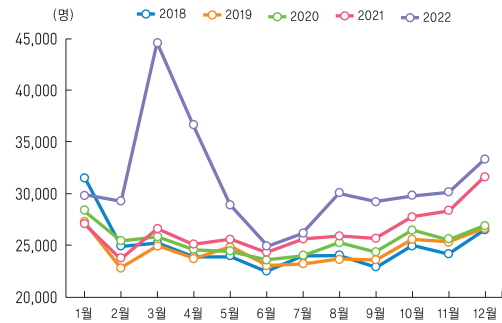
[그림 I-5] 사망자수와 조사망률, 1970-2022



주: 1) 조사망률은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위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I-6] 월별 사망자수, 2018-2022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I-6]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월별 사망자수 추이를 보여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월별 동향에 큰 차이가 없다. 한겨울인 12월과 1월의 사망자수가 여느 달보다 많은 편이다. 그런데 2022년에는 3월과 4월에 사망자가 급증하였다. 2019년의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79%와 54%가 증가하였다. 이 시기는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던 동시에 방역기준도 완화된 때이다.

〈표 I-7〉을 보면, 조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그 뒤를 경북이 따르고 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 울산, 경기, 서울순이다. 하지만 시도별 사망률 수준을 비교하려면 먼저 연령구조를 동일하게 표준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령별로 사망확률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두 지역 간 조사망률 차이에는 사망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연령구조가 주는 영향력도 존재되어 있다.

〈표 I-7〉 지역별 사망자수 및 조사망률, 2022

	사망자수 (1,000 명)	조사망률 (인구 1천 명당 명)	연령표준화 사망률 (인구 1천 명당 명)
전국	372.8	7.3	3.3
특·광역시	146.4	6.5	3.2
서울	55.3	5.9	2.9
부산	27.7	8.4	3.6
대구	17.6	7.4	3.4
인천	19.0	6.5	3.4
광주	9.4	6.5	3.3
대전	9.3	6.4	3.3
울산	6.4	5.7	3.4
세종	1.7	4.4	3.1
도 지역	226.7	7.8	3.3
경기	79.0	5.8	3.1
강원	15.1	9.8	3.6
충북	14.1	8.9	3.6
충남	19.7	9.3	3.5
전북	17.9	10.1	3.4
전남	20.9	11.5	3.5
경북	27.8	10.7	3.6
경남	27.4	8.3	3.5
제주	4.8	7.1	3.3

주: 1) 연령표준화 사망률=Σ(연령별 사망률×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표준인구.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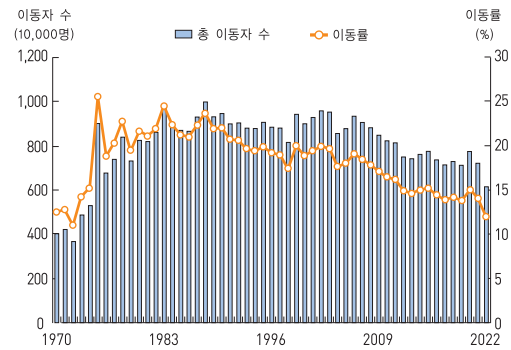
연령표준화 사망률로 보면 그 순위가 조사망률의 순위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충북, 강원, 부산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세종, 경기순이다. 즉 세종시의 조사망률이 타지역보다 낮은 이유에는 세종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일 수 있다. 서울은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2.9명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서울 지역이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가 타 지역 대비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내 인구이동의 양상

인구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인구이동이다. 앞서 언급한 출생, 사망과 달리 이동은 먼저 사회적으로 그 의미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행정 읍면동 경계를 넘어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를 국내 인구이동이라고 정의한다. 인구이동은 한 사람에게서도 수차례 발생 가능하다.

2022년 국내인구 이동자수는 총 615만여 명으로 그중에서 시도 내 이동은 2/3에 달했고, 시도 간 이동이 1/3을 차지했다. 이동률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1990년대까지 20%를 넘던 이동률이 2010년대에는 15% 내외로 줄어들었고, 2022년은 12%로 전년 대비 2.1%p 더 낮아졌다. 연령별 이동률은 20대와 30대에서 높고, 60대 이상에서는 낮은 편이다. 진학과 취업의 과정에서 이동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I-7] 총이동자수 및 이동률, 197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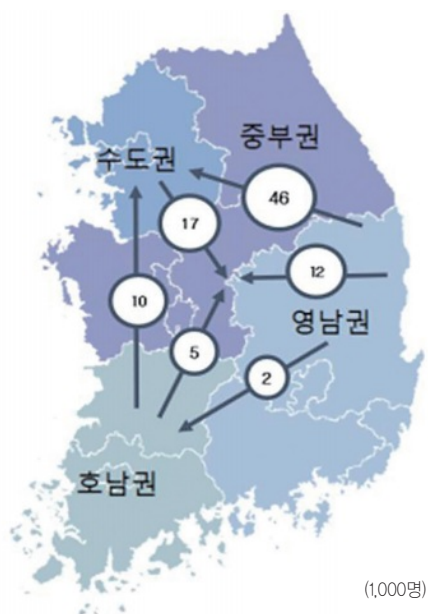
주: 1) 총이동=전입+전출
2) 이동은 주민등록인구(거주자) 100명당 이동자수임.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시도별로 전입률을 보면 세종, 대전, 인천 순으로 높고 전출률은 세종, 대전, 광주 순으로 높다. 세종과 대전은 전입과 전출 모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 셈이다.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 순유입이 발생하는데, 순유입이 많은 지역은 경기(4만 4천 명), 인천(2만 8천 명), 충남(1만 4천 명)순이다. 반대로 순유출은 서울(3만 5천 명), 경남(1만 9천 명), 부산(1만 4천 명)순이다.

국내이동은 제주를 제외하고,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과 영남권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살펴보면 [그림 I-8]과 같다. 수도권은 중부권으로 1만 7천 명이 순유출된 반면, 호남권에서 1만 명, 영남권에서 4만 6천 명이 순유입되어 총 3만 9천 명 인구가 증가하였다. 중부권은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모두로부터 인구가 순유입되어 총 3만 4천 명이 증가하였다. 호남권은 수도권으로 1만 명, 중부권으로 5천 명이 순유출되었고 대신

에 영남권으로부터는 2천 명이 순유입되었다. 반면에 영남권은 모든 지역으로부터 순유출이 발생하여 총 6만 명이 감소하였다.

[그림 I-8] 권역간 순이동, 2022



주: 1) 권역별 이동은 권역(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을 달리하는 이동을 의미함.

2) 권역의 경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은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세종, 호남권은 광주, 전북, 전남, 영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으로 구분함.

3) 제주는 권역에서 제외함.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2.

국제 인구이동의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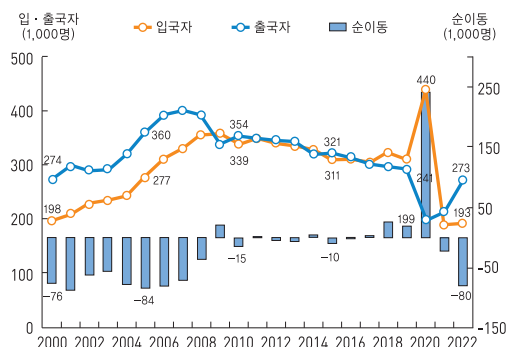
국제 인구이동은 국경을 넘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로 정의한다. 밀입국은 포함되지 않으나, 90일 이하의 단기비자로 입국한 후 90일

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림 I-9]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내국인의 입출국 순이동 추이를 보여준다. 2010년 이전까지는 입국자보다 출국자가 더 많아 순이동이 음의 값을 가졌다. 2010년 이후에는 입국과 출국의 규모가 비슷해지면서 순유출이 거의 사라졌다.

상황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급변했다. 2020년에는 44만여 명이 입국한 반면 20만 명만이 출국해서 순유입이 24만 명에 달했다. 2022년에는 상황이 반전되어 19만 3천 명이 입국하고, 27만 3천 명이 출국하여 순유출이 8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최근 3년간의 추세변화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외국에 체류 중이던 내국인의 상당수가 국내로 되돌아왔고, 2022년에는 그동안 미루어왔던 출국이 발생하면서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순유출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였는데, 특히 20대에서 순유출 규모가 가장 컸다.

[그림 I-9] 내국인 입·출국, 200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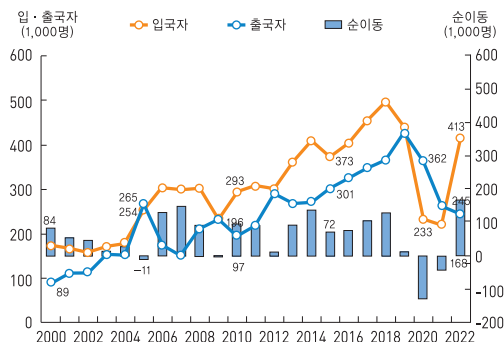
주: 1) 순이동=입국자-출국자

출처: 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그림 I-10]은 외국인 입출국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인 입출국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또한 출국자보다는 입국자가 더 많아 순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외국인의 경우도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급변이 있었다. 2019년 43만 8천 명이었던 입국자수가 2020년에는 23만 3천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반하여 출국자수는 2019년 42만 6천 명에서 2020년 36만 2천 명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줄어들게 됨으로써 순유출이 12만 8천 명 발생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떠나는 외국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들어오는 외국인이 급감함에 따라 큰 폭으로 순유출이 발생한 것이다.

[그림 I-10] 외국인 입·출국, 2000-2022



주: 순이동=입국자-출국자

출처: 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2021년에는 입국자가 22만 1천 명, 출국자가 26만 3천 명으로 순유출이 4만 3천 명 발생했다.

입국자는 줄어든 규모가 유지된 반면, 출국자가 전년 대비 10만 명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입국자보다 규모가 커서 순유출이 발생한 것이다.

2022년에는 다시 상황이 반전되어 입국자가 41만 3천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출국자는 24만 5천 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1만 8천 명 줄어들면서 16만 8천 명이나 순유입이 발생하였다.

맺음말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느린 인구변화에 안주해 왔다. 또한 저출산으로 줄어든 유소년 부양비와 아직은 크지 않았던 노년부양비를 즐겼는지 모른다.

이제 우리나라 인구는 빠른 변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2000년대에 시작된 초저출산, 그리고 2015년도부터 차원이 다르게 심화된 저출산의 영향력이 사회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 인구감소의 초기에 예상치 못했던 사망률 급증과, 급격한 국제인구이동 순유입과 순유출이 번갈아 발생했다.

인구는 더 이상 상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인구의 현황과 추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여기에 있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특징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혼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의 비중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더 낮고 연도별 하락 폭도 더 크다.
-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중장년층보다 결혼 자금 등 경제적인 이유를 지적하는 비중이 높았다.
-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2명을 이상적인 자녀로 생각하고 있지만, 20대와 30대 청년들은 1명을 이상적인 자녀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가임기 30~34세 기혼 여성들의 이상 자녀수는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도 조사에서 2명 아래로 떨어졌다.
- 가임기 30~34세 기혼 여성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 그리고 기대 자녀수보다 더 적은 수의 자녀를 낳고 있다.
- 출산을 결정할 때 중요한 사항으로 청년들은 경제적인 이유, 가정 내 양성 평등, 보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주로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매해 최저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율 제고

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강구해 오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출산율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출산이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혼인에 대한 태도는 출산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 글은 청년들의 혼인에 대한 태도의 연도별 변화와 최근 현황을 살펴보고, 연령별·성별·지역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비교 분석한다.

현대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세워진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따라서 출산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한 국가의 출산 수준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상 자녀수는 출산에 대한 태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 지표이다. 이상 자녀수와 실제 출산 자녀수의 차이를 통해 출산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알 수 있다. 저출산 대응 정책은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주요 가임기 연령대인 30~34세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상 자녀수와 기대 자녀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고, 실제 출산 자녀수와 이상 자녀수 및 기대 자녀수의 차이를 분석



한다. 또한 이상 자녀수를 연령별·성별·지역별로 분석하고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출산 결정 시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도 알아본다.

이 글의 분석을 위해서 통계청 2008~2022년 「사회조사」 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74~2009년 「출산력 부인 통합화일」, 2012, 2015,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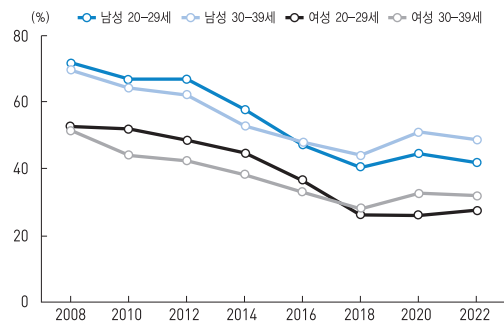
청년의 연령은 「청년 기본법」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청년의 연령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한국에서 평균 초혼 연령이 30세 초반이며 자녀 출산이 40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고에서는 분석 대상을 법적인 청년 연령 19~34세로 한정하지 않고, 혼인과 출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연령대인 20대, 30대, 40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우리나라 20대와 30대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림 I-11]을 보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20~30대 남성의 비중은 2008년 대략 70%대 수준으로 높았지만 점차 하락하여 2022년 현재 30대 남성 48.7%, 20대 남성 41.9%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20~30대 여성 중에서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감소하였다. 2008년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20~30대 여성의 비중은 약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22년 현재 30대 여성의 31.8%, 그리고 20대 여성의 27.5%만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락 폭은 20대 남성과 여성이 약 40%가 넘고 30대 남성과 여성은 약 30%가 넘어서 20대의 하락 폭이 더 컸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낮고 하락의 폭도 더 컸다.

[그림 I-11] 성별 20, 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 2008~2022



주: 1) 20~30대를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1=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2=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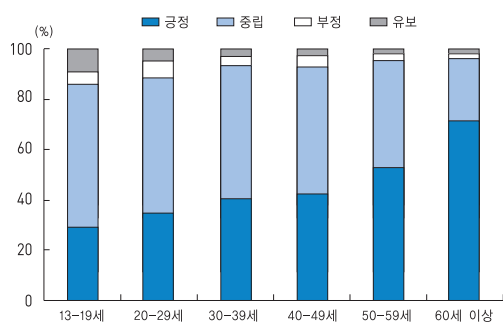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결혼에 대한 태도의 세대 간 차이

모든 연령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하는 것이 좋

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20대와 30대 청년들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비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낮고,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청년 세대를 포함하여 모든 연령 집단에서 7% 이하로 낮다. 한편,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보인 비중은 아직 결혼 적령기에 도달하지 않은 10대와 20대 청년들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그림 I-12).

[그림 I-12] 연령별 결혼에 대한 태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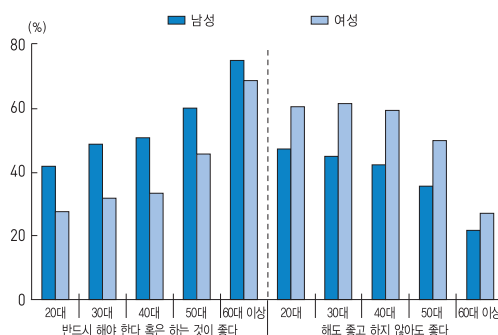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2=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를 긍정, ‘3=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를 중립, ‘4=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혹은 ‘5=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부정, ‘5= 잘 모르겠다’를 유보적인 의견으로 구분하여 해당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22.

[그림 I-13]은 성·연령별 결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성별로 볼 때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사람들의 비중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남성이 여성

보다 더 높았다. 하지만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응답 비중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결혼에 대한 태도의 성별 격차는 30대와 40대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보다 컸다.

[그림 I-13] 성·연령별 결혼에 대한 태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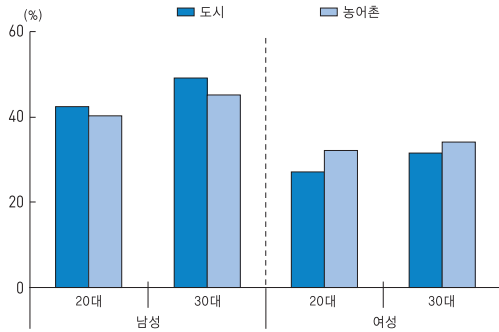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2=하는 것이 좋다’, ‘3=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22.

[그림 I-14]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20~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20대와 30대 농어촌 남성들은 같은 연령대 도시 남성들보다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낮았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도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농어촌 지역 20대와 30대 여성의 경우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도시보다 높았다. 결혼 의향의 성별 격차가 도시와 농어촌 지역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I-14] 지역·성별 20, 3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2022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1=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2=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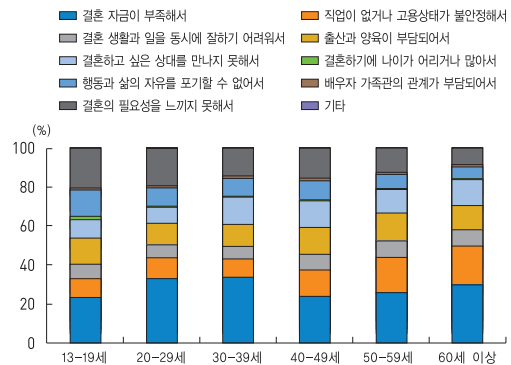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22.

결혼하지 않는 이유

[그림 I-15]는 연령별로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았다. 이러한 경향은 20대와 30대가 중장년층보다 강했다. 그다음으로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50대와 60대는 ‘직업이 없거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라고 응답한 반면, 20대, 30대, 40대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였다.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는 20대, 30대, 40대에서 약 10%를 차지한 반면, 50대와 60대에서는 이보다 낮게 나타났다.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혹은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와 같은 일·

가정 양립과 자녀 부담을 지적한 비중은 모든 연령 집단에서 약 20% 내외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중도 30대 이상 연령 집단에서 약 12~14% 수준으로 비슷했다.

[그림 I-15] 연령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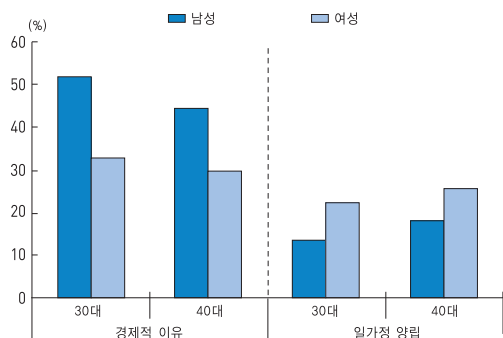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1=결혼자금(혼수비용, 주거마련 등)이 부족해서’, ‘2=직업이 없거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3=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4=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5=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6=결혼하기에 나이가 어리거나 많아서’, ‘7=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8=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되어서’, ‘9=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0=기타’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22.

[그림 I-16]은 성별에 따른 30대와 40대가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혹은 ‘직업이 없거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라고 경제적인 이유를 응답한 비중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경제적인 이유 비중의 성별 격차는 결혼 적령기인 3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켰다.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
서’ 혹은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와 같이 일·
가정 양립과 자녀 부담을 지적한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그림 I-16] 성별 30, 40대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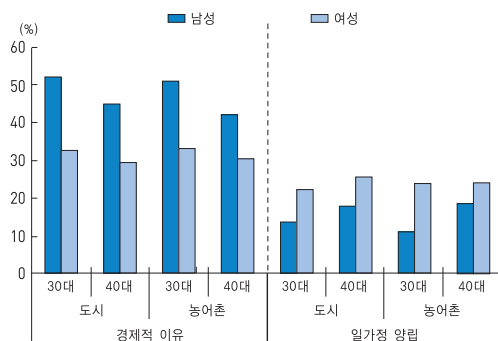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2) 경제적인 이유는 ‘1=결혼 자금(혼수비용, 주거마련 등)이 부족해서’
혹은 ‘2=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라고 응답한 경우,
일가정 양립은 ‘3=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 혹은
‘4=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라고 응답한 경우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22.

[그림 I-17]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 30~40대
청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
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이다. ‘결혼 자금이 부족해
서’ 혹은 ‘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를 응답한 30대와 40대의
비중은 도시와 농어촌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높
았다.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결혼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
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대와 40대 여
성들 중에서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

려워서’ 혹은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라고 지
적한 비중도 도시와 농어촌에서 유사하게 나타
나, 일·가정 양립과 자녀 양육 부담 역시 도시와
농어촌 거주 여성이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17] 지역·성별 30, 40대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2022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2) 경제적인 이유는 ‘1=결혼 자금(혼수비용, 주거마련 등)이 부족해서’
혹은 ‘2=직업이 없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라고 응답한 경우,
일가정 양립은 ‘3=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 혹은
‘4=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라고 응답한 경우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22.

이상 자녀수의 연도별 변화

[그림 I-18]은 기혼 여성의 이상 자녀수, 출산
자녀수, 기대 자녀수의 연도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임기에 해당하는 30~34세 여성의 이
상 자녀수는 1970년대에 약 3명에 가까운 수준
을 보였다. 이상 자녀수는 점차 하락하여 1980년
대 중반 이후부터 인구대체수준인 약 2명을 웃
도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 이상 자녀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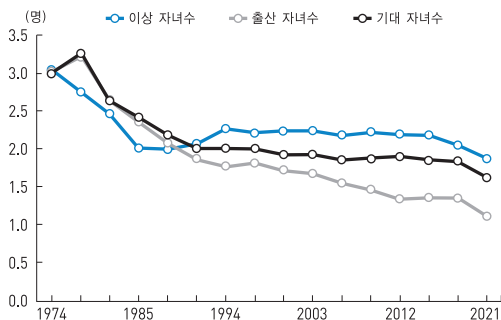


2명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에 와서 2명 이하로 하락하였다.

가임기 30~34세 기혼 여성들이 낳는 출산 자녀수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약 3명에 가까운 출산 자녀수를 보였지만, 점차 하락하여 1990년 이후 2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2009년 이후부터는 1.5명 이하가 되었다. 2021년 현재 30~34세 여성의 평균적인 출산 자녀수는 1.12명이다. 전반적으로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30~34세 여성의 평균 자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대 자녀수는 여성들의 출산 자녀수에 추가적으로 더 낳기를 희망하는 자녀수를 합한 수치다. 기대 자녀수는 1970년대 약 3명 수준을 보였으나 1980년대 이후 약 2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2015년 1.86명, 2018년 1.84명 그리고 2021년 1.63명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그림 I-18] 30~34세 기혼 여성의 이상 자녀수, 출산 자녀수, 기대 자녀수, 1974~2021



주: 1) 30~34세 기혼 여성들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기대 자녀수 = 출산 자녀수 + 추가 출산 희망 자녀수.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조사」, 1974~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기혼여성」, 2015, 2018; 「전국 출산력 조사」; 「가족과 출산조사」,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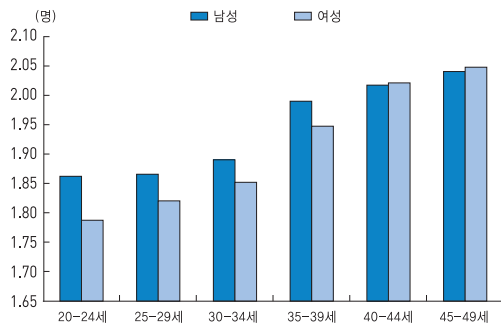
1970~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30~34세 여성들의 이상 자녀수는 출산 자녀수 혹은 기대 자녀수보다 적었다. 가족계획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던 시절에는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녀수보다 실제로 더 많이 낳았거나, 혹은 더 많이 낳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이후부터 변화되어 이상 자녀수는 출산 자녀수 혹은 기대 자녀수보다 많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 30~34세 기혼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보다 실제로 더 적게 낳거나, 혹은 더 적게 낳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상 자녀수와 출산 자녀수 간의 격차는 2012년에 0.85명으로 가장 컸으며 이후부터 점차 좁혀지고 있다. 출산에 대한 이상과 현실 간의 간극이 좁혀지는 이유는 출산 자녀수가 이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어서가 아니라 출산 자녀수 감소와 더불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 역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 자녀수의 집단별 차이

[그림 I-19]는 성별에 따른 20~40대의 평균 이상 자녀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이상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0대 이상은 이상적인 자녀수를 2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20대와 30대의 이상 자녀수는 2명보다 적다. 또한 40대에서는 성별 차이가

[그림 I-19] 성별 20~40대의 이상 자녀수, 2021



주: 1) 통계치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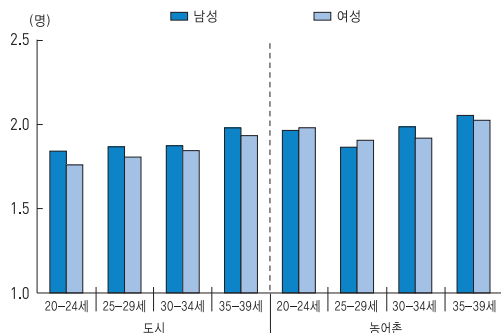
2)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2021.

거의 없지만, 30대 이하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이상 자녀수가 더 적은 편이다.

[그림 I-20]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 20, 30대 청년들의 평균 이상 자녀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 결과 농어촌지역 청년들의 이상 자녀수는

[그림 I-20] 지역·성별 20, 30대 청년들의 이상 자녀수, 2021



주: 1) 통계치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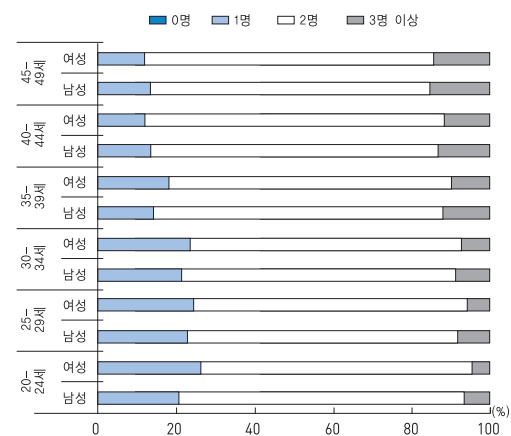
2)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2021.

도시지역 청년들과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해 볼 때 농어촌 지역 20, 30대 여성의 이상 자녀수는 남성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반면, 도시지역 20, 30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이상 자녀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청년들의 자녀 선호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21]은 성·연령별 이상 자녀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 결과 모든 연령 집단에서 약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2명을 이상적인 자녀수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2명의 자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4세에서는 다른 연령집

[그림 I-21] 성·연령별 이상 자녀수 분포, 2021



주: 1) 통계치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2)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3) '0명'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0.0~0.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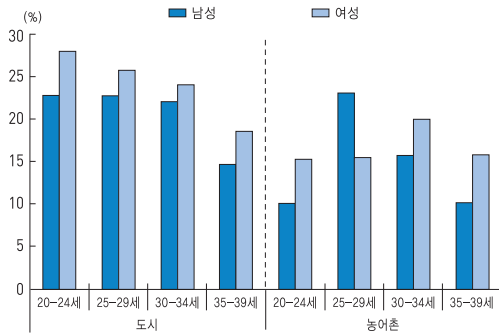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2021.



단 대비 1명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1명을 선호하는 비중은 20대와 30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3명을 선호하는 비중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그림 I-22]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20, 30대 청년들이 1명을 이상적인 자녀수라고 응답한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 결과 도시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반면에 농어촌에서는 20대 후반에서 1명을 선호하는 비중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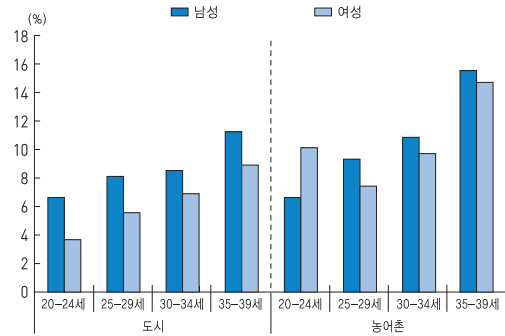
[그림 I-22] 지역·성별 20, 30대 청년들이 1명을 이상 자녀수로 생각하는 비중, 2021



주: 1) 통계치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임.
2)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2021.

3명 이상을 이상 자녀수로 응답한 20, 30대 청년의 비중은 도시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지만, 농어촌은 20대 초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I-23).

[그림 I-23] 지역·성별 20, 30대 청년들이 3명 이상 자녀수로 생각하는 비중,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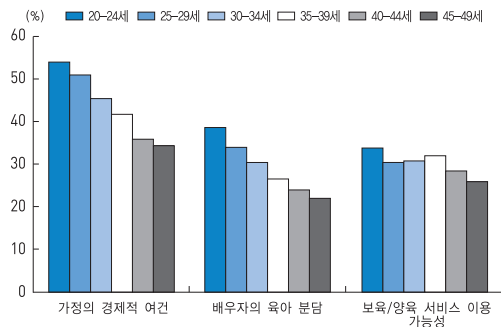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명 이상이라고 응답 비율임.
2)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원자료, 2021.

출산 결정 시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그림 I-24]는 20~40대 청년들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 결과 젊은 연령층일수록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같이 경제적인 이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 '배우자의 육아 부담'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도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출산을 하는데 가정 내에서 양성 평등에 대한 요구가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 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양육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도 젊은 연령층에서 높지만, 경제적 여건이나 육아분담에 비해서는 연령별 차이가 작은 편이다.

[그림 I-24] 연령별 출산 결정 시 고려사항, 2021



주: 1) 통계치는 "사람들이 출산을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 조사」, 2021.

맺음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다수가 결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2명을 이상적인 자녀수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은 중장년층과 비교하여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낮고, 1명을 이상적인 자녀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는 성별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농어촌 남성 청년들은 도시 남성 청년보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낮았다.

가임기 기혼 여성들의 이상 자녀수는 인구대체 수준인 2명 정도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2021년에 와서 2명 이하로 하락하였다. 출산 자녀수와 이상 자녀수 간의 간극도 지속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농어촌의 이상 자녀수가 도시의 이상 자녀수보다 높지만, 20~30대 농어촌 청년들의 이상 자녀수는 도시 청년들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출산 결정 시 주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으로 경제적인 여건, 가정 내 양성 평등 수준, 보육 서비스나 육아 휴직 이용 가능성 등 정책적인 환경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글의 분석 결과는 청년들이 혼인과 출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욕구가 중장년 세대와 비교하여 다르다는 사실을 말한다.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도시 거주 청년과 농어촌 거주 청년들 사이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이 혼인과 출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지적한 경제적인 여건, 양성 평등, 정책적인 여건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Household & Family

Korean Social Trends 2023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Ⅱ

가구·가족

가구·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송유진 동아대학교	46
비혼 동거 가족의 특성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58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특성	김여진 강원대학교	67

가구·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송유진 (동아대학교)

- 혼인과 관련한 많은 변화가 관찰된다. 혼인건수는 지난 2000년 33만 건 정도에서 2022년 19만 건 정도로 감소하였다. 평균 초혼연령은 2000년에 남자 29.3세, 여자 26.5세에서 2022년에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상승하였다. 조혼인율은 세종시가 가장 높고 전북이 가장 낮다.
- 혼인 5년차 초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비율은 2015년 12.9%에서 2021년 22.5%로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두드러진다.
- 평균 가구원수와 2세대 가구 및 3세대 이상 가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1인가구와 1세대 가구는 꾸준히 늘어나서 2050년에는 각각 39.6%, 25.0%로 전망된다.
- 전국 평균 가구원수와 비교했을 때, 인천, 세종, 경기, 제주는 평균 가구원수가 많다. 반면, 1인가구와 65세 이상 고령자가구 구성비는 광역도에서 높게 나타난다.
- 미취학 아동은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어머니가 주 돌봄자이다.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 외에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등 가족들이 주로 돌본다.
- 가족에 대한 정의 중 ‘혈연관계’와 ‘법적 연결 관계’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정의가 보편적인 사회규범으로 여겨짐을 보여준다.
- 노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양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약해졌지만, 경제적 부양에 대한 가치관은 남아있다.
-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과 자녀를 키우는 것의 경제적 부담과 힘들음 동시에 인식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가구와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는 영역 중 하나이며, 관련된 변화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가족 형성, 가족구조, 가족관계 및 돌봄, 가족 가치관으로 나누어서 가족 및 가구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족 형성과 가족구조에서는 지역 간 차이에 주목하기 위하여 전국 자료와 더불어 특·광역시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족 형성에서는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를 활용하여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신혼부부통계」에 근거하여 혼인 5년차에도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구조에서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를 활용하여 시도별로 2020년부터 2050년까지 평균 가구원수, 1인가구와 고령자가구 구성비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전망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가족관계 및 돌봄에서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가족관계 만족도와 성인 자녀-부모의 지원교환관계 및 미취학아동 양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족 가치관에서도 「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을 다양하게 정의하는 진술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더불어 2010년과 2020년



자료를 사용하여 자녀 및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을 비교하고자 한다.

가족 형성

가족 형성의 변화는 가족 및 가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혼인건수 감소, 평균 초혼연령 증가, 결혼과 첫 자녀출산까지의 기간 지연 등이 지속되면 가족규모의 축소와 다양한 가족구조 등장과 같은 변화로 이어진다.

〈표 II-1〉 혼인과 이혼 관련 추이, 2000-2022

연도	혼인		평균 초혼연령		이혼	
	혼인 건수	조 혼인율	남자	여자	이혼 건수	조 이혼율
2000	332,090	7.0	29.3	26.5	119,455	2.5
2005	314,304	6.5	30.9	27.7	128,035	2.6
2010	326,104	6.5	31.8	28.9	116,858	2.3
2015	302,828	5.9	32.6	30.0	109,153	2.1
2020	213,502	4.2	33.2	30.8	106,500	2.1
2022	191,690	3.7	33.7	31.3	93,232	1.8

주: 1)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은 인구 1천 명당 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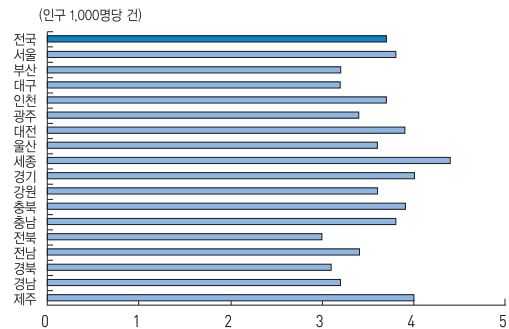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각 연도.

〈표 II-1〉은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기본적인 현황을 제시하였다. 지난 2000년 이후 혼인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 역시 감소하였다. 평균 초혼연령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 남성 29.3세,

여성 26.5세에서 2022년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증가하였다. 이혼건수는 지난 2005년 이후 줄어드는 경향이지만 이는 혼인건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 조혼인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제주가 전국 조혼인율보다 높다. 특히 세종시의 조혼인율이 가장 높고, 전북의 조혼인율이 가장 낮다. 광역시에서는 부산과 대구의 조혼인율이 낮다(그림 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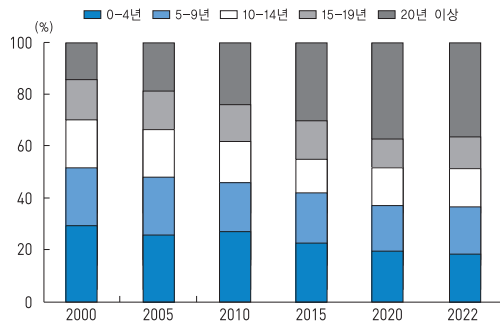
〔그림 II-1〕 지역별 조혼인율, 2022



출처: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2022.

〔그림 II-2〕는 혼인지속기간별로 이혼구성비를 제시하였다.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5년 미만 부부들의 이혼 비율이 높았다면, 2015년부터는 혼인생활 2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 비율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가령 2015년에는 혼인생활 2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 비율이 29.9%를 차지하고, 이후 2020년과 2022년에는 각각 37.2%, 36.7%를 차지한다.

[그림 II-2] 혼인지속기간별 이혼구성비, 2000-2022



출처: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각 연도.

[그림 II-2]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집단을 다시 혼인생활 20~24년, 25~29년, 30년 이상으로 구분하면,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이혼한 부부의 비율이 2015년 9.6%에서 2022년에는 16.8%까지 증가하여, 황혼이혼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재혼이나 출산 가능성, 혹은 가구구성의 다양화와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혼인생활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혹은 황혼이혼의 비율이 높아지면 1인가구로 독립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

혼인건수 감소 및 평균 초혼연령 상승과 더불어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거나 늦게 낳는 경우가 많아지면 가족구성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표 II-2>를 보면, 혼인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율이 2015년 35.5%에서 2021년 45.8%로 늘어났다. 물론 혼인 1년차에서 5년차로 진행될수록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율은 줄어들지만, 평균적으로 살펴본

무자녀 부부의 비율이 2021년에 46% 정도인 점은 눈에 띈다.

혼인 5년차 부부 중에서 자녀가 없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12.9%에서 2021년 22.5%로 증가하였다. 이는 혼인 5년차 부부 중 다섯 쌍 중 한 쌍 정도는 여전히 자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인한 지 5년이 지난 후에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평균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혼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 확률적으로 무자녀 부부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또한 1세대 가구 비율의 증가와 연결될 수 있다.

〈표 II-2〉 혼인연차별 자녀없는 초혼부부 구성비, 2015, 2021

지역	혼인1년차-혼인5년차 부부 중 자녀없는 구성비		혼인5년차 부부 중 자녀없는 구성비	
	2015	2021	2015	2021
전국	35.5	45.8	12.9	22.5
서울	42.7	53.5	16.9	28.0
부산	34.5	44.6	12.0	22.0
대구	32.3	41.5	10.3	19.3
인천	36.0	45.9	14.0	23.4
광주	30.8	38.5	9.3	17.1
대전	34.6	45.2	11.3	20.9
울산	31.8	40.4	9.1	16.5
세종	34.2	39.9	10.4	17.8
경기	36.0	47.2	13.6	24.0
강원	34.4	44.3	12.6	21.1
충북	32.8	42.6	11.7	19.4
충남	32.4	41.6	11.0	20.5
전북	29.9	40.1	10.1	17.9
전남	27.8	36.7	9.3	16.6
경북	30.4	39.7	10.2	18.3
경남	31.3	40.1	10.2	18.1
제주	31.7	41.7	12.7	22.1

주: 1)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출처: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각 연도.



가족구조

가족규모의 축소 및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주지의 사실이다. 〈표 II-3〉에서 살펴보듯이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꾸준히 감소하였다. 지난 2000년에는 3.1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2.7명, 2020년에는 2.3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50년에는 1.9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기본가구 단위를 4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II-3〉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와 세대구성, 2000~2050
(명, %)

연도	평균 가구원수	세대별 구성 비율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비친족 가구
2000	3.1	15.5	14.2	60.8	8.4	1.1
2005	2.9	20.0	16.2	55.4	7.0	1.4
2010	2.7	23.9	17.5	51.3	6.2	1.2
2015	2.5	27.2	17.4	48.8	5.4	1.1
2020	2.3	31.7	18.6	44.0	3.7	2.0
2030	2.1	35.6	21.7	37.6	2.4	2.6
2040	2.0	37.9	23.9	33.5	1.8	2.9
2050	1.9	39.6	25.0	30.9	1.4	3.1

주: 1) 1세대 가구는 부부, 부부+기타 친인척 등 동일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2) 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 등 2개의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3) 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미혼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4) 2020년까지는 집계 자료이며, 이후 2050년까지는 추계치임.

5) 「인구주택총조사」의 199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이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2020; 「장래가구추계: 2020~2050」, 2022.

세대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1인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2세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2세대 가구의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여 대표적이었으나, 2015년부터 그 비율이 절반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1인가구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2040년부터는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50년에는 1인가구의 비율이 40%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세대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비친족가구의 비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시도별로 평균 가구원수가 어떻게 변할지 살펴본 결과는 〈표 II-4〉와 같다. 평균 가구원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인천, 경기, 제주는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전국 평균보다 꾸준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곳인데 이러한 경향 때문에 2030년과 2050년에도 전국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광주, 대구, 세종도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다.

1인가구 구성비는 전국적으로 2020년 31.2%에서 2050년 39.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II-5).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 광주, 대전을 비롯하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다. 광역도 지역에 1인가구가 집중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서울 및 광

〈표 II-4〉 지역별 평균 가구원수, 2010-2050

(명)

지역	평균 가구원수			
	2010	2020	2030	2050
전국	2.71	2.37	2.09	1.91
서울	2.74	2.31	2.05	1.93
부산	2.68	2.30	2.03	1.85
대구	2.76	2.37	2.08	1.90
인천	2.84	2.46	2.16	1.94
광주	2.78	2.37	2.05	1.87
대전	2.71	2.29	2.00	1.88
울산	2.79	2.46	2.14	1.91
세종	-	2.45	2.22	2.05
경기	2.87	2.51	2.21	2.02
강원	2.50	2.22	1.96	1.77
충북	2.58	2.27	2.00	1.82
충남	2.55	2.28	2.01	1.83
전북	2.58	2.27	1.99	1.84
전남	2.46	2.23	1.97	1.78
경북	2.45	2.21	1.96	1.77
경남	2.64	2.35	2.05	1.83
제주	2.81	2.42	2.14	1.98

주: 1)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2) 2020년까지는 집계 자료이며, 이후 2050년까지는 추계치임.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 2022.

〈표 II-5〉 지역별 1인가구 및 고령자가구 구성비, 2020-2050

(%)

지역	1인가구 구성비			고령자가구 구성비		
	2020	2030	2050	2020	2030	2050
전국	31.2	35.6	39.6	22.4	33.0	49.8
서울	34.4	39.0	40.8	20.9	30.2	45.3
부산	31.8	36.4	39.9	26.6	38.8	53.3
대구	30.4	35.3	39.9	23.2	35.8	51.9
인천	27.7	32.7	38.3	19.2	31.5	48.9
광주	31.9	36.9	40.3	19.5	28.9	45.5
대전	35.4	40.1	43.5	18.6	29.0	44.4
울산	27.3	31.4	37.1	18.2	33.2	52.3
세종	30.9	33.6	36.2	12.4	18.6	35.1
경기	27.2	31.6	36.6	18.0	28.4	45.9
강원	34.3	38.9	44.1	27.7	40.3	58.0
충북	34.2	38.5	43.5	24.0	35.2	52.8
충남	33.6	38.1	42.0	25.7	35.4	53.8
전북	33.3	38.0	42.3	29.4	39.5	56.3
전남	33.2	37.4	42.0	33.3	42.7	60.3
경북	33.8	37.9	41.9	29.6	41.7	59.8
경남	30.5	34.9	39.6	24.8	37.6	56.9
제주	30.7	35.0	39.3	21.3	30.1	47.4

주: 1) 고령자가구는 65세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구임.

2)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 2022.

역시의 1인가구와 광역도의 1인가구는 연령별 구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역별 정책적 수요도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65세 이상으로 이루어진 고령자가구 구성비는 전국적으로 2020년 22.4%에서 2050년 49.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50년에는 전국을 기준으로 가구의 절반이 고령자가구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모두 전국 평균보다 고령자가구 구성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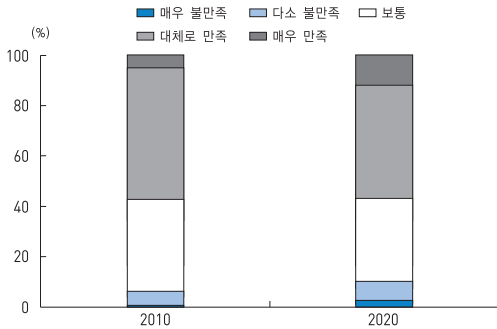
특히 전남과 경북지역은 2050년에 가구의 60%가 고령자가구로 예상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반적인 흐름은 동일하지만 지역 간의 차이가 관찰된다.

가족관계 및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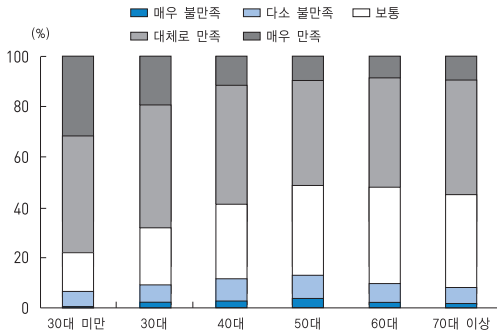
가족관계는 크게 부부관계와 부모-자녀의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II-3] 배우자 관계 만족도, 2010, 2020

1) 전체 (2010, 2020)



2) 연령별 (2020)



주: 1) 만족도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응답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II-3]은 기혼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살펴본 「가족실태조사」 결과이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불만족’하는 비율과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늘어났지만 전반적인 만족도 정도는 비슷하다. 응답자의 57%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체로’ 혹은 ‘매우’ 만족하며, ‘보통’이라는 응답도 3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만족도는 괜찮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만족’ 혹은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간 늘어나고 ‘만족’이라는 응답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단순한 기술통계이기 때문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았지만, 연령에 따라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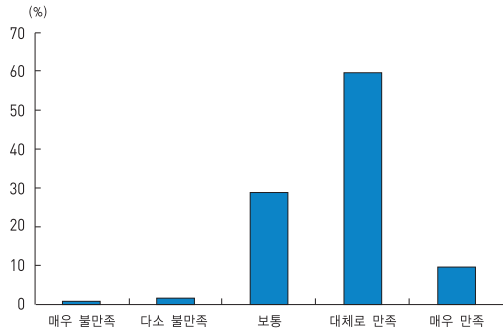
[그림 II-4]는 「가족실태조사」를 통하여 성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2010년 조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를 조사하였지만 2020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관계 만족도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2010년에는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69.2%로 높은 편이다. 2020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 대하여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약간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58.1%이고 어머니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70.2%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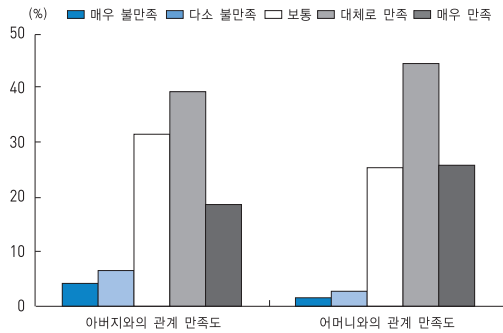
성인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소 불만족’과 ‘보통’이라는 응답은 줄고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이 늘어나서 2020년에는 만족하는 비율이 63.2%를 차지한다. 성인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불만족’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지 않아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4] 부모-성인자녀 관계 만족도, 2010,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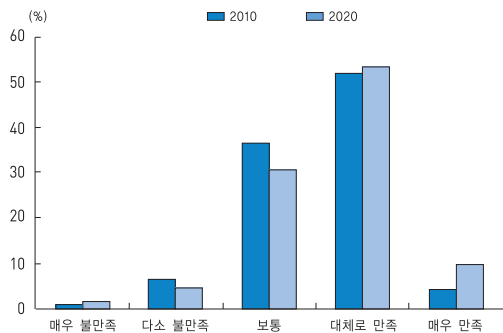
1)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2010)



2)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 (2020)



3) 성인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2010, 2020)



주: 1)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임.

2) 2020년 조사는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를,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와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로 나누어 실시함.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각 연도.

다음으로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경제적 교환관계를 살펴보았다(표 II-6).

〈표 II-6〉 부모-자녀 경제적 교환관계, 2020

	부모-자녀 경제적 교환관계 (%)					
	노부모 수혜			노부모 제공		
	정기 현금	비정기 현금	현물 지원	정기 현금	비정기 현금	현물 지원
동거자녀	56.2	79.8	80.0	19.5	33.4	41.8
비동거자녀	46.0	85.6	77.9	12.5	29.1	42.4

주: 1) 통계치는 지난 1년간 정기 현금, 비정기 현금, 현물 지원 등 각각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동거자녀, 비동거자녀와 도움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20.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자녀로부터 받는 것이 더 많다. 가령 부모의 80.0% 정도가 동거자녀로부터 현물지원과 비정기 현금 지원을 받고 56.2%가 정기적 현금 지원을 받는다. 반면 부모는 동거자녀에게 현물지원, 비정기 현금 지원, 정기 현금 지원 순으로 제공하는데, 그 비율은 각각 41.8%, 33.4%, 19.5%이다.

비동거자녀와의 교환관계도 높은 편으로 부모가 비동거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 중 비정기 현금 지원이 85.6%로 가장 높다. 현물지원도 77.9%, 정기 현금 지원도 46.0%로 동거자녀에 비해서는 약간 낮지만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다. 반면 부모가 비동거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현물지원 42.4%, 비정기 현금 29.1%, 정기 현금 12.5%로 나타난다. 부모나 성인자녀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정 정도의 쌍방향적 지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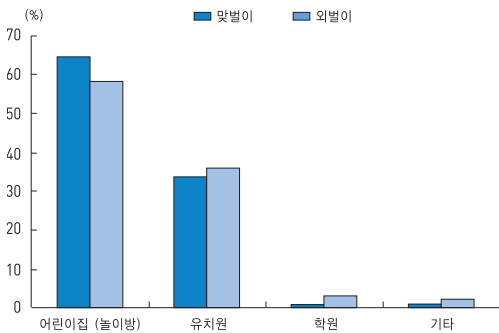
미취학 영유아 자녀 돌봄은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그림 II-5).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 중에는 어린이집(놀이방 포함) 이용이 가장 높다. 기관 이용 시간 외에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을 살펴보면,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이 높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머니가 돌보고 외조부모, 친조부모, 기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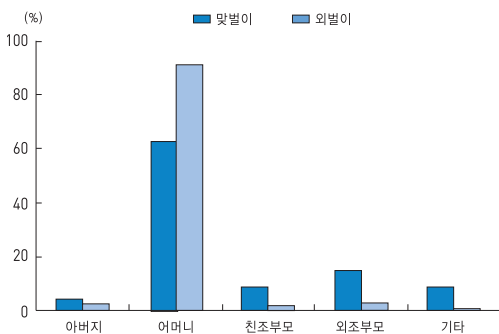
받으며 아버지는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외벌이보다는 자녀 돌봄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벌이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이 높다. 전반적으로 기관 이용시간 외에는 가족들의 협력으로 영유아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어머니의 돌봄 책임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5] 미취학 영유아 자녀 돌봄, 2020

1) 이용기관



2) 기관 이용시간 외 돌보는 사람



주: 1) 이용기관은 낮시간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기관을 말하며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다니고 있는 기관 한 곳이 어디인지를 응답한 비율임.

2) 기관 이용시간 외 돌보는 사람은 기관에 다니는 시간을 제외하고 아이를 가장 많이 돌보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응답한 비율임.

3) 유치원은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 입소 가능함.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20.

가족 가치관

최근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삶의 형태가 늘어나면서 가족의 정의를 유연화하자는 논의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개인의 판단과 가치관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수렴하고 합의하는 과정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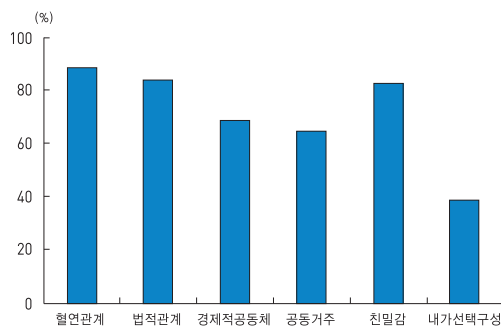
지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는 가족의 정의에 대한 6가지 진술을 제시하고 동의 정도를 살펴본 바 있다.

[그림 II-6]은 가족의 정의에 대해 1)혈연관계, 2)법적으로 연결된 관계, 3)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 4)함께 거주하고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 5)함께 살지 않아도 심리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 6)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로 진술하고 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라는 항목을 제외한 5개의 진술은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에 포함된다. 그 중 ‘혈연관계’와 ‘법적 연결관계’라는 정의는 전통적인 객관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 그래서인지 가족을 ‘혈연관계’와 ‘법적 연결관계’라고 진술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동의 정도가 각각 89.0%, 83.7%로 가장 높다.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가족을 정의하는 데에는 ‘혈연관계’와 ‘법적 연결관계’의 규범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6] 가족의 다양한 정의에 대한 동의 정도, 2020



주: 1) 2020년에 처음으로 조사된 항목임.

2) 동의정도를 측정하는 5점 척도 항목 중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20.

다음으로 긍정적인 동의 정도가 높은 항목은 주관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가족은 함께 살지 않아도 심리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라는 진술이다. 이에 대한 동의 정도는 82.8%이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부정적인 사건들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여전히 가족이 심리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을 ‘경제적 생계 공동체’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로 정의하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는 각각 68.9%, 64.8%로 상대적으로 낮다. 다양해진 거주형태와 맞벌이 부부를 비롯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인 독립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동의 정도가 38.7%로 가장 낮다. 부정적인 동의 정도 역시 40.0%로 높아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진술은 가족의 전통적인 정의를 벗어나는 새로운 정의를 함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는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부모 부양과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는 동의 정도는 2010년과 2020년 각각 5.8%, 4.9%로 높지 않다. 반면, ‘대체로 그렇다’라는 긍정 정도는 2010년에 42.8%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2020년에는 20.9%로 줄어들었다. 더불어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와 같은 부정적인 응답은 2010년 16.7%에서 2020년 42.1%로 늘었다.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생각은 더 이상 보편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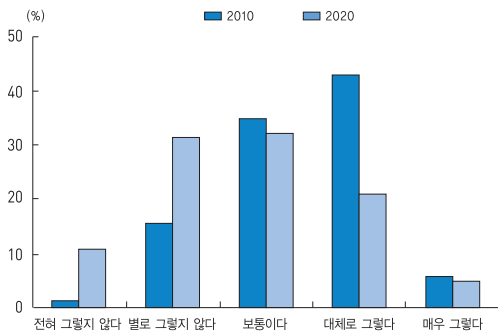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 2010년 53.9%에서 2020년 39.4%로 줄어들긴 했지만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진술에 비해서는 동의 정도가 높다.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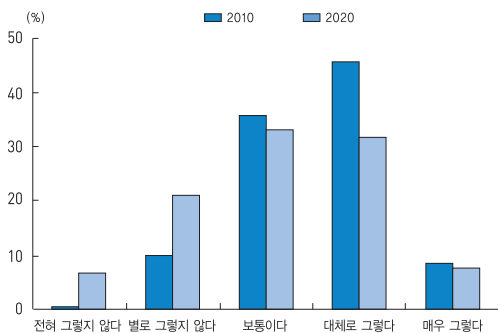
고 사는 것에 대한 규범성은 약해졌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 부양을 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7]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2010, 2020

1)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2)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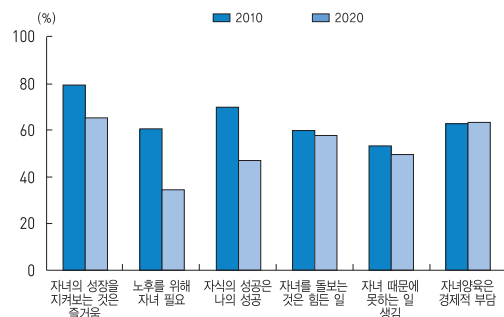
[그림 II-8]은 「가족실태조사」에서 2010년과 2020년에 자녀와 관련한 다양한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1)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2)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3)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4)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5)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6)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6개의 진술이다.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긍정적인 동의 정도가 약간 줄어든긴 했지만,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각각 79.0%와 65.2%로 다른 진술에 비하여 가장 높다.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라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 2010년 60.5%에서 2020년 34.6% 정도로 줄었다. 이 진술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도 2010년 9.3%에서 2020년 32.7%로 늘었다. 자녀를 노후에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가치관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라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 2010년 69.8%에서 2020년

[그림 II-8]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2010, 2020



주: 1) 동의정도를 측정하는 5점 척도 항목 중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46.9%로 줄었다. 과거에 비해 자녀와 자신의 성공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3가지 진술들은 모두 자녀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다.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정도가 2010년 59.8%, 2020년 57.6%로 비슷하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도 2010년과 2020년 각각 62.7%, 63.1%로 비슷하다.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기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높지만, 자녀를 돌보는 일의 힘들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느끼는 현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는 2010년 53.3%에서 2020년 49.4%로 약간 줄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비율을 합하면 2010년 13.0%에서 2020년 18.9%로 늘었다. 자녀 때문에 희생을 한다는 생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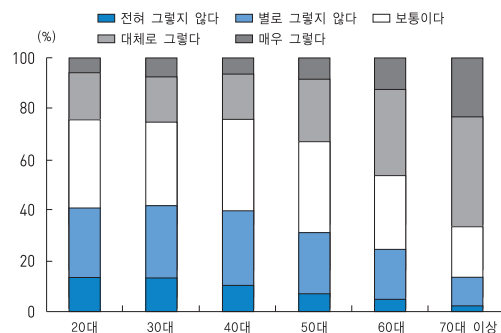
지난 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집단에 따라 자녀와 관련된 진술에 대한 응답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연령에 따라 차이가 관찰되었다. 그중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와 ‘자녀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다’라는 진술에서 연령별 차이가 두드러져서 [그림 II-9]에 제시하였다.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20대부터 50대까지 ‘보통’이라는 중립적인 응답이 가장 높았다면, 60대 이상은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70대 이상은 긍정적인

응답이 60% 이상으로 나타나서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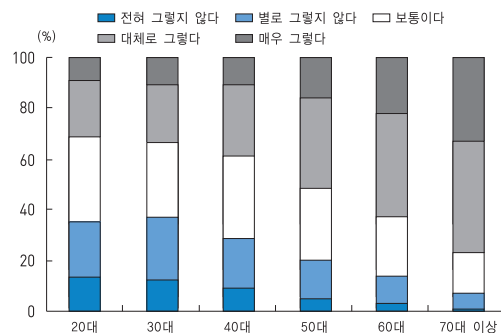
‘자녀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라는 진술에 대한 응답도 연령에 따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30대 이하의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다면, 40대부터는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높아진다. 연령에 따라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9] 연령별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2020

1)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2) 자녀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20.



맺음말

최근에 가족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혼인과 출산 감소 및 지연, 비혼출산과 동거 증가, 1인가구 증가, 가족 관련 가치관 변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글에서도 가구규모의 축소와 가구구조의 다양화, 1인가구와 1세대 가구 증가, 혼인과 출산의 지연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1인가구와 고령자가구 구성비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포착되었다. 지역별 현상의 차이는 지역의 정책적 수요 및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만 미취학

아동 돌봄은 어머니의 경제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거나 가족들의 지원에 의존적이다.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이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가족이 노인 돌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정의와 부모 부양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은 변화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가치관도 혼재한다. 이런 과도기적인 특성을 지닌 시기에는 가치관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의견도 포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혼 동거 가족의 특성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 5년 사이 동거와 무자녀 결혼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며, 특히 2020년에는 20대와 30대 청년 중에서 동거와 무자녀에 동의하는 경우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
- 혼인신고를 한 혼인부부에 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동거커플에서 20~30대 청년층 비율이 매우 높다. 동거커플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도나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상대를 확인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 동거커플은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주거 지원 제도 이용 제한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3명 중 2명은 결국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 있다.
- 가사노동 분배와 생활의 계획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책임을 진다는 응답은 혼인부부보다 동거커플에서 훨씬 많았다.
- 경제적 차원의 결정은 혼인부부와 동거커플 모두 생활비 지출에서는 아내가, 취업 및 직장이동에서는 남편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았으나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하는 비율은 동거커플에서 더 높다.

결혼이나 출산 가족형성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가능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는 남녀가 같이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이 살 수도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자녀를 가질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 글에서는 2015년과 2020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독신, 동거, 무자녀, 비혼자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커플과 혼인신고를 한 혼인부부들의 동거생활과 혼인생활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가족형성에 대한 태도

독신에 대한 태도

[그림 II-10]은 2015년과 2020년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된다는 진술의 동의 정도 분포와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두 번의 조사에서 독신에 대한 태도는 평균값이 2.8~2.9점으로 중간값인 3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독신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을 보여준다. 조사가 이루어진 5년 사이 독신에 대한 태도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20~30대 청년층의 독신에 대한 태도는 2015년 3.1점에서 2020년 3.3점으로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독신에 대해 더욱 우호적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조사에서 청년층 중 18.0%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청년층이 독신을 의미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5년 사이 달라진 의견의 분포를 보자. 독신으

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리고 '대체로 그렇다'라는 의견은 2015년 조사 결과가 2020년에 비해 더 높다. 반면 극단의 '전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대비 2020년 각각 2.1%p와 3.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같은 시기 8.8%p 증가하였다.

동거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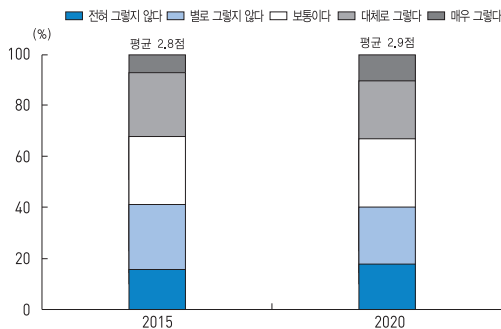
[그림 II-11]은 「가족실태조사」에서 성인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진술을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이다.

동거에 대한 태도를 보면 평균값이 2015년 2.5점, 2020년 2.6점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조사기간 동안 동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은 5.8%p 줄어든 반면 긍정적 인식('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은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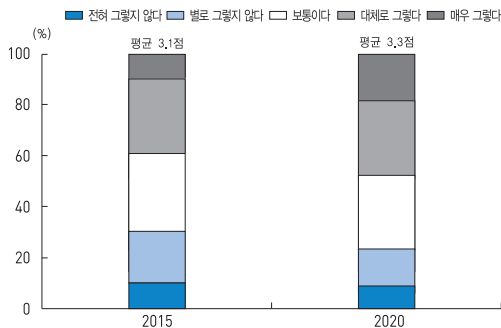
20~30대 청년층의 동거에 대한 태도는 2015년 2.8점에서 2020년 3.2점으로 평균값이 상승하였다. 이는 중립적 의견이라 할 수 있는 3점을 넘어선 수치다. 특히 2020년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은 청년층 중 40.6%에 이른다.

[그림 II-10] 독신에 대한 태도, 2015, 2020

1) 전체 성인



2) 20~30대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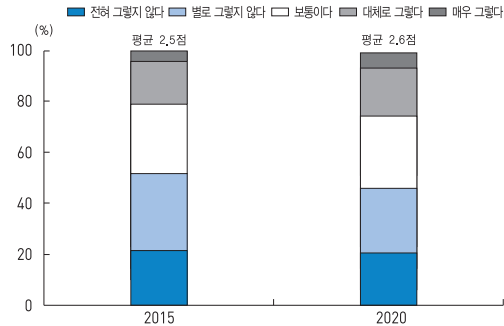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2015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2020년)라는 진술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과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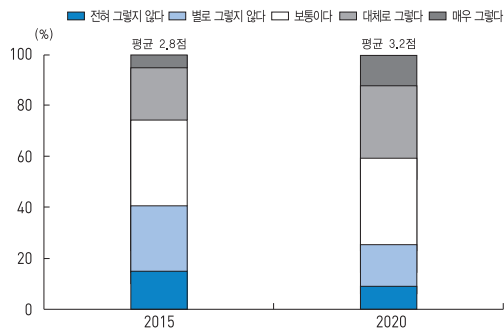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II-11] 동거에 대한 태도, 2015, 2020

1) 전체 성인



2) 20~30대 청년



주: 1) 통계치는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2015년),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2020년)라는 진술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과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무자녀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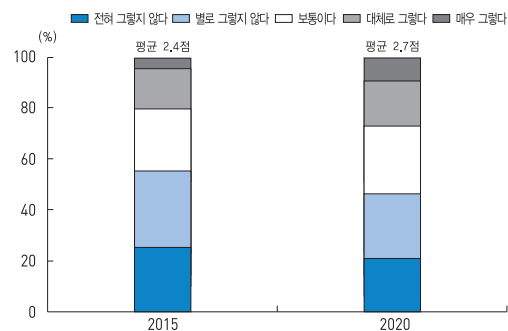
[그림 II-12]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진술의 동의 정도 분포와 평균값을 비교한 것이다.

무자녀에 대한 태도 역시 동거에 대한 태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평균값은 2015년 2.4점, 2020년 2.7점으로 5년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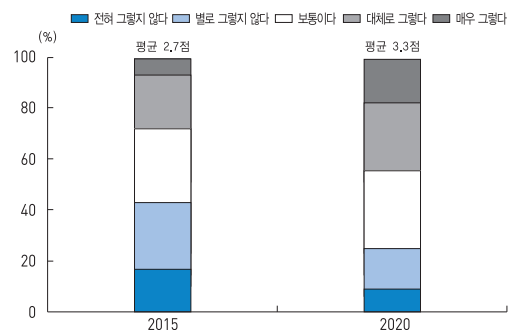
0.3점이 상승하였지만 성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자녀가 없는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질문에 부정적 인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은 9.0%p 줄어든 반면 긍정적 인식(‘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은 6.5%p 증가한 것

[그림 II-12] 무자녀에 대한 태도, 2015, 2020

1) 전체 성인



2) 20~30대 청년



주: 1) 통계치는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2015년),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2020년)라는 진술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과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으로 나타났다. 5년이 지나는 사이 무자녀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누그러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결혼생활에 대해 2015년 2.7점, 2020년 3.3점으로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의 경우 동거에 대한 태도와 유사하게 중립적 의견이라 할 수 있는 평균값 3점을 넘어섬은 물론 무자녀 결혼생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2020년 44.1%로 2015년(27.7%)에 비해 16.4%p 증가하였다.

비혼자녀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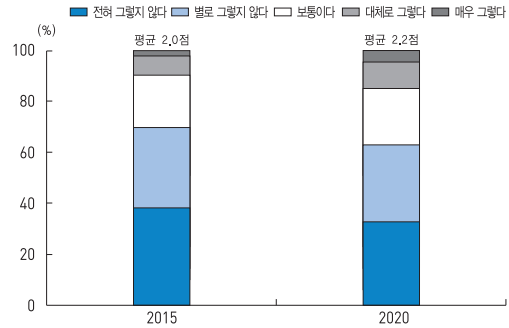
[그림 II-13]은 2015년과 2020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이다.

평균값은 2015년 2.0점, 2020년 2.2점으로 성인들은 앞서 살펴본 독신, 동거, 무자녀보다 비혼자녀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조사에서 성인의 3분의 2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거, 무자녀와 마찬가지로 5년 사이 긍정적 인식('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은 5.3%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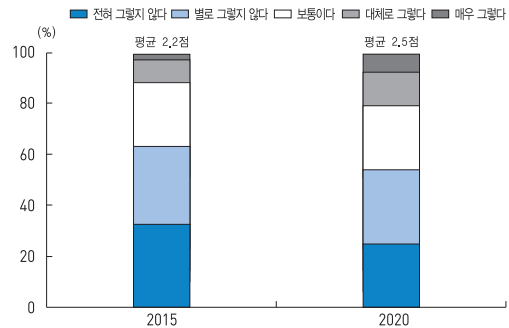
한편 2020년 조사에서 20~30대 청년 5명 중 1명은 결혼하지 않은 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지난 5년 사이 비혼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9.5%p나 증가하였다.

[그림 II-13] 비혼자녀에 대한 태도, 2015, 2020

1) 전체 성인



2) 20~30대 청년



주: 1) 통계치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2015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2020년)라는 진술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과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동거 생활과 계획

동거커플과 혼인부부의 인적 특성

최근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의 형식 중 동거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미혼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혼인연령도 증가하면서 많은 미혼 성인들이 주거의 독립을 이뤄냈다. 이에 따라 동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커플 322명, 혼인신고를 한 혼인부부 1만 2,656명을 통해 동거생활과 혼인생활을 비교하고자 한다.¹⁾

다만, 분석 대상인 동거커플이 전체 동거커플을 대표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보고서의 동거커플은 먼저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중 혼인신고 여부를 통해 선택되었다. 그러므로 동거를 하고 있지만 상대를 아직 배우자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분석 대상에서 누락된다. 그리고 동거 관계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아예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 동거커플은 상대적으로 현재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나 결혼 가능성이 큰 사람들일 수 있다. 때문에 보고된 결과는 동거커플에 대한 참고사항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표 II-7〉은 혼인신고를 한 혼인부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커플들을 비교한 것이다.

성별 분포를 보면 혼인부부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4%와 49.6%이며, 동거커플은 50.1%와 49.9%이다. 연령분포를 보면 동거커플이 20대, 30대, 40대에서 그리고 혼인부부는 5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더 많았다.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혼인부부가 각각 1.7%와 16.3%인데 비해

동거커플은 각각 17.4%와 28.6%나 된다. 동거는 혼인에 비해 나이가 훨씬 어린 성인들의 선택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교육수준을 보면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에서 동거커플이 혼인부부보다 더 많다. 취업 현황을 보면 혼인부부는 31.1%가 무직인데 비해 동거커플은 19.7%가 직장을

〈표 II-7〉 혼인부부와 동거커플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020

		(%)	
		혼인부부	동거커플
성별	남성	50.4	50.1
	여성	49.6	49.9
연령	20대	1.7	17.4
	30대	16.3	28.6
	40대	24.3	27.6
	50대	26.0	13.6
	60대	19.2	9.5
	70대 이상	12.4	3.3
	평균 연령(세)	53.1	42.5
교육	초등학교	8.7	2.1
	중학교	9.2	6.3
	고등학교	33.5	40.3
	대학교(4년제 미만)	16.4	19.6
	대학교(4년제 이상)	26.0	25.4
	대학원	6.3	6.3
고용형태 (중사상 지위)	무직	31.1	19.7
	정규직	37.9	45.9
	임시직	10.6	15.2
	자영업	17.4	15.9
	무급가족종사자	3.0	3.2
가구소득(점)		5.5	5.0
합계		100.0	100.0

주: 1)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혼인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동거커플'로 분류함.

2) 가구소득의 응답범주는 '1=50만원 미만', '2=50-100만원', '3=100-200만원 미만', '4=200-300만원 미만', '5=300-400만원 미만', '6=400-500만원 미만', '7=500-600만원 미만', '8=600-700만원 미만', '9=700만원 이상'까지 9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20.

1) 이 조사는 사실혼, 비혼 동거 등을 포함해서 배우자가 있는지 물어본 후 혼인신고 여부에 대한 추가 질문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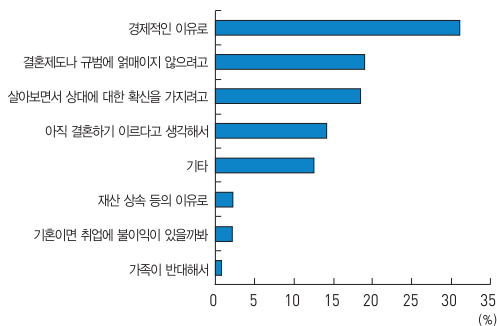


다니지 않고 있다.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는 혼인부와 동거커플의 비율이 비슷한 데 비해 정규직과 임시직은 동거커플이 약 12.6%p 정도 더 많다. 가구소득(9점 척도 평균값)은 동거커플이 5.0점인데 비해 혼인부부는 5.5점으로 혼인부부가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편이다.

동거하는 이유

[그림 II-14]는 동거커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그림 II-14] 동거커플의 동거 이유, 2020



주: 1)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현재 동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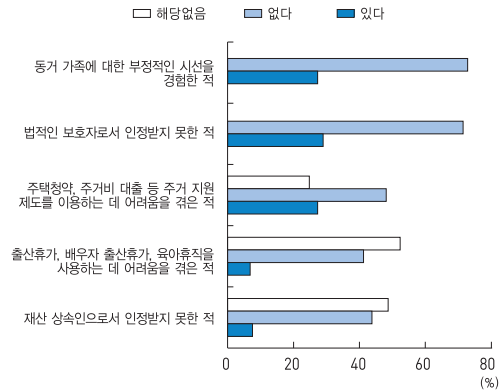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20.

전체 중 가장 많은 31.1%가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다. 다음으로 19.0%가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를, 그리고 18.4%가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를 선택했다. 14.1%는 ‘아직 결혼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동거 때문에 겪는 불편

동거를 하면서 겪게 되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그림 II-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15] 동거 때문에 느끼는 불편, 2020



주: 1)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동거하면서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20.

동거커플 28.7%가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27.3%가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27.1%가 주택 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 지원 제도에 이용에 제약을 느껴서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그 밖에 7.6%가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리고 6.8%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혜택을 받지 못해서 어려웠다고 말했다. 주거지원제도, 휴가 제도, 상속 자격에 대해서는 각각 24.7%, 52.2%, 48.5%가 ‘해당없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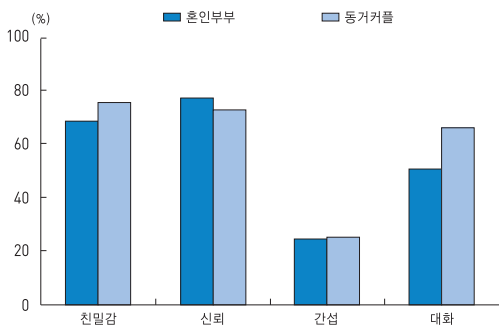
동거를 하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인 부부가 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동거를 하고 있는 응답자 중 70.5%는 혼인

신고를 할 계획이 있으나 나머지 29.5%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동거커플과 혼인부부 비교

[그림 II-16]은 동거커플과 혼인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친밀감, 신뢰, 간섭, 충분한 대화 정도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II-16] 혼인부부와 동거커플의 배우자 관계, 2020



주: 1)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혼인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동거커플'로 분류함.
 2) 친밀감은 "배우자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신뢰는 "배우자를 믿는다", 간섭은 "배우자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 대화는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한다"라는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줌.
 3) 통계치는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 중 '4=대체로 그렇다'와 '5=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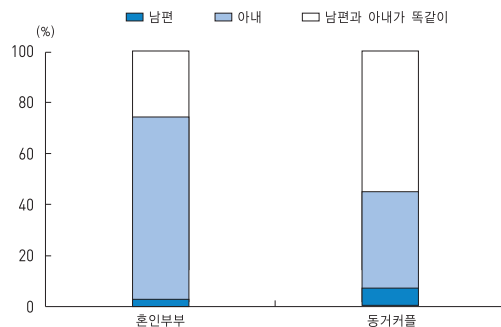
분석결과, 동거커플은 혼인부부에 비해 배우자에 대한 친밀감(7.1%p)과 충분한 대화(15.5%p)가 높은 데 반해 혼인부부는 동거커플에 비해 배우자에 대한 신뢰(4.5%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에 대한 간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사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혼인부부와 동거커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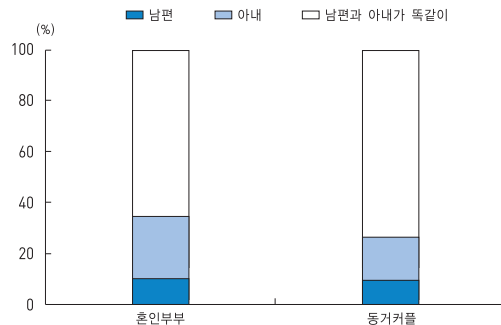
은 차이가 있다. [그림 II-17]에 따르면 성별 가사노동 분배에 있어 동거커플은 남녀평등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혼인부부는 아내가 주로 가사노동을 한다는 응답이 7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7] 혼인부부와 동거커플의 가사수행 방식, 2020

1)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



2)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계획과 준비



주: 1)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혼인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동거커플'로 분류함.
 2) 통계치는 "귀댁의 가사 수행을 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남편', '2=아내', '3=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20.

가족생활과 유지를 위한 계획과 준비는 혼인부부와 동거커플 모두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수행한



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비율은 혼인부부가 65.5%인데 반해 동거커플은 73.7%로 8.2%p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8]은 혼인부부와 동거커플의 투자와 자산관리, 생활비 지출, 취업이나 직장 이동 등과 같은 삶의 결정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지 물어본 결과이다.

분석결과, 동거커플은 투자와 자산관리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한다는 의견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혼인부부도 동거커플과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36.3%)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남편이 결정한다는 의견 32.2%, 아내가 결정한다는 의견도 31.6%로 나타나 동거커플과는 투자와 자산관리에 있어 다른 양상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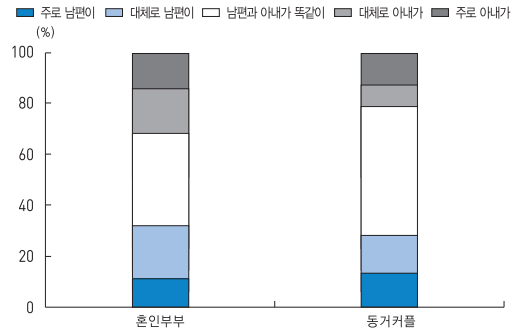
생활비 지출에 대한 결정은 혼인부부가 동거커플에 비해 아내가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54.8%)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거커플은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한다는 의견이 50.4%로 나타나 이 역시 남녀평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취업 또는 직장이동에 대한 결정은 혼인부부가 '주로 남편'과 '대체로 남편'이 9.4%p 더 많은데 비해 동거커플은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가 18.5%p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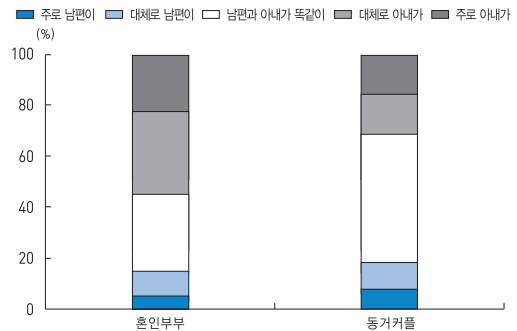
취업 또는 직장이동과 관련한 결정은 혼인부부와 동거커플 모두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결정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그 응답비율

[그림 II-18] 혼인부부와 동거커플의 경제적 차원의 결정,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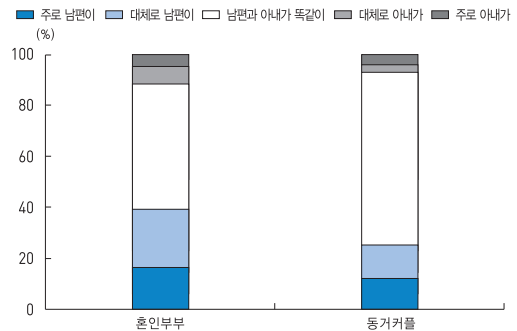
1) 투자와 자산 관리(금융, 부동산 등)



2) 생활비 지출



3) 취업, 직장 이동



주: 1)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혼인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동거커플'로 분류함.

2) 통계지는 "귀댁에서는 다음의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주로 남편이', '2=대체로 남편이', '3=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4=대체로 아내가', '5=주로 아내가'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20.

은 차이가 있다. 혼인부부는 부부가 같이 결정한다는 의견이 49.1%, 남편이 결정한다는 의견이 39.1%인데 반해 동거커플은 부부가 같이 결정한다는 의견이 67.6%, 남편이 결정한다는 의견이 25.1%이다. 동거커플의 경우 경제적 차원에 대한 결정 역시 앞선 가사수행 방식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맺음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은 독신이나 동거 등 비혼 방식의 삶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물론 다양한 비혼방식에 대한 동의 정도에도 차이는 있다. 독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지만 비혼자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청년들은 독신, 동거, 무자녀, 비혼자녀에 대해 가능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이들은 결혼이나 출산 등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청년들은 부모들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이미 몇 가지 새로운 방식은 분명하게 관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애미혼을

은 높아지고 무자녀 가족은 많아지고 있다. 젊은 세대의 개인적 선택은 한국 사회 미래에 큰 함의를 갖게 될 것이다.

비혼방식 중 하나인 동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결혼 전 확신을 얻기 위해 선택된다. 혼인 부부에 비해 동거커플은 배우자와 대화도 더 많이 하고 더 친밀하다. 또 혼인부부보다 동거커플이 가사노동과 일상생활에서 남녀가 평등한 방식에 더 가깝다.

삶의 과정으로서 동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결혼 이전 단계(precursor to marriage)로 동거는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잠시 늦추고 있는 준비 단계 또는 결혼해도 좋을지 확인하는 테스트 과정이 된다. 두 번째, 결혼의 대안(alternative to marriage)으로 동거는 결혼 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개인들이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로 기능하기도 한다. 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동거는 결혼의 이전 단계 역할을 주로 하는 것 같다. 다만 본 연구에서 분석한 322명이 동거 중인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동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또는 곧 결혼으로 이전할 사람들로 편향(biased)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특성

김여진 (강원대학교)

- 65세 이상 노인의 17% 정도는 돌봄이 필요하며, 고령자일수록 돌봄 필요 정도가 높아지지만, 같은 연령대 내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돌봄 필요 정도가 낮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집중 돌봄 필요 노인 10명 중 3명은 노인 독신가구를 이루고 있고, 의사가 진단한 만성질환 수가 '3개 이상'인 비율도 54.9% 정도이다.
- 돌봄 필요 노인의 경제 상태는 열악한 편이며 생활비 지불 담당 주체는 본인 또는 배우자 이외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도 높다. 주거 환경 또한 노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배우자로부터 정신적·수단적 도움을 더 많이 받지만, 배우자의 건강 및 관계 만족도는 더 낮은 편이다.
- 집중 돌봄 필요 노인 10명 중 3명은 자녀와 동거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자녀로부터 돌봄을 제공받기 위해서이다. 자녀 동거 가구의 비동거 자녀는 부모와의 왕래가 적어, 동거 자녀에게 노인 돌봄 책임이 가중되는 편이다.
-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63.5%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신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한 때문이다.

고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는 노인 인구의 삶의 질 즉 '인간다운 노후 생활 영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건강하게 가족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노인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인지적 노화 과정에서 겪는 삶의 질 저하는 가족 및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적·공적 돌봄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사적·공적 돌봄 제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어느 정도이며, 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어떠한지,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에서는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08~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노인실태조사」는 인구센서스 조사구 중 기숙사, 특수시설조사구, 섬 지역 조사구 외에 일반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의 생활 및 특성 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특성, 경제 상태와 주거 환경, 가족 지지, 사회관계 및 참여, 그리고 요양 보호 이용 실태를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증가와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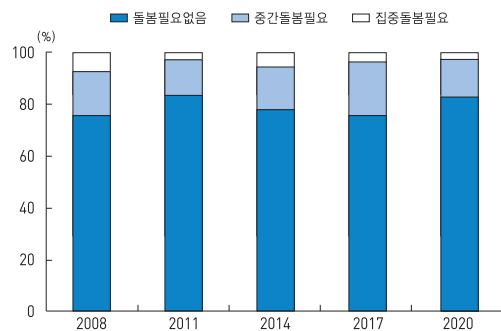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노인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연령, 소득, 그리고 가구 구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돌봄 필요 노인을 연령, 소득, 가구 구성과 관계없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정의하는 활동 제약¹⁾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인구로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활동 제약 정도에 따라 돌봄 필요 단계를 세분화하여 ‘돌봄필요없음’, ‘중간돌봄필요’, ‘집중돌봄필요’로 나누고자 한다. 활동 제약은 신체적²⁾·정신적³⁾ 활동 제약을 모두를 고려하며 신체적·정신적 활동 제한이 모두 없는 경우는 ‘돌봄필요없음’, 신체적·정신적 활동 제한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중간돌봄필요’,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활동 제한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집중돌봄필요’로 구분하였다.

[그림 II-19]는 2008~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추정한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 연도별로 변동은 있지만 약 75~80%의 노인이 ‘돌봄필요없음’에, 15~20%는 ‘중간돌봄필요’에, 그리고 3~7%는 ‘집중돌봄필요’에 해당된다.

2011년 이후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다가 2020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슷한 기간 동안 기대수명 대비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건강수명)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다가 최근에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2012년: 81.2%, 2014년: 79.7%, 2018년: 77.9%, 2020년 79.4%).

[그림 II-19] 돌봄 필요 노인의 현황 및 추세, 2008~2020



주: 1) 신체적·정신적 활동 제한 문항에 무응답이 없고,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II-20]을 통해 돌봄 필요 노인의 건강 상태를 주관적 건강과 만성질환 수를 통해 살펴보면, 돌봄 필요 정도가 높을수록 평소 건강 상태를 나쁘게 평가하였으며, 의사가 진단한 만성질환도 증가하였다.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해 ‘건강한 편이다’ 또는 ‘매우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은 54.7%,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은 26.4%,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8.8% 정도였다. 의사가 진단한 만성질환 수가

1) 활동 제약이란 장애 정도(중증, 경증) 및 확정 질환과는 별개로,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의 기본 활동을 수행하는 데 겪는 육체적·정신적 제약을 의미한다.

2) 노인실태조사보고서에서 신체적 기능 저하자란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IADL) 항목 중 1개 이상 제한을 갖는 노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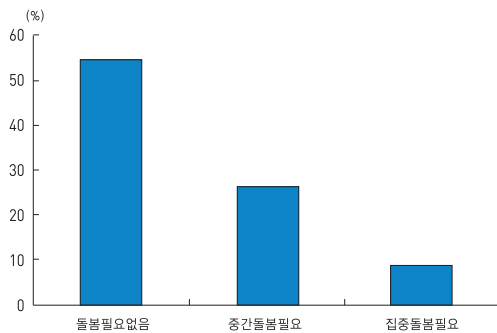
3) 정신적 활동 제약은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 정신 상태 검사(MMSE-DS)의 인지 지능 점수가 17점 이하인 ‘분명한 인지기능 장애(severe cognitive impairment)’로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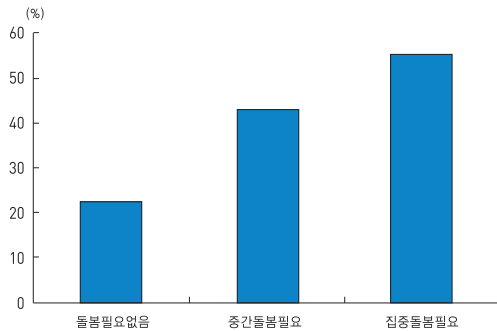
‘3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은 22.5%,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은 43.1%,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54.9% 정도에 달했다.

[그림 II-20] 돌봄 필요 정도별 건강상태, 2020

1) 평소 건강상태



2) 만성질환



주: 1)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평소 건강상태는 “귀하께서는 자신의 평소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매우 건강하다’ 혹은 ‘2=건강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만성질환은 의사가 진단한 만성질환 수가 ‘3개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 낮을수록, 현재 배우자가 없는 노인일수록 돌봄 필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2020년 도에는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56.0%,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60.8%,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67.4%가 여성이었으며, 현재 배우자가 없는 비율도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57.5%,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은 44.2%,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은 29.7%였다. 연령 분포를 보면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65.6%,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37.2%,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15.9%가 80세 이상으로 나타나 나이 들어감에 따른 활동 제한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8〉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돌봄 필요 정도, 2020

	돌봄 필요 없음	중간돌봄 필요	집중돌봄 필요	전체 (%)
성별				
남성	44.0	39.2	32.6	43.0
여성	56.0	60.8	67.4	57.0
연령				
65-69세	37.3	17.8	3.9	33.7
70-74세	24.7	18.7	9.2	23.4
75-79세	22.2	26.4	21.3	22.7
80세 이상	15.9	37.2	65.6	20.2
교육수준				
0-3년	7.8	20.8	43.7	10.6
4-6년	29.8	35.9	34.4	30.8
7-12년	55.8	38.5	18.6	52.3
13년 이상	6.7	4.8	3.3	6.3
배우자 유무				
있음	70.3	55.8	42.5	67.5
없음	29.7	44.2	57.5	32.5

주: 1)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현재 ‘배우자 없음’은 ‘미혼’, ‘사별’, ‘이혼’, ‘별거’인 경우를 의미함.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표 II-8〉은 돌봄 필요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를 살펴보면, 모든 조사 연도에서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

활동 제한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에 연령을 65~74세, 75~84세, 그리고 85세 이상으로 나누고 각 연령대 내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 필요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 II-9>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낮아지지만, 각 연령대 내에서 돌봄 필요 정도에 따른 교육수준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65~74세 노인에게서는 돌봄 필요 없는 집단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간 돌봄 필요, 마지막으로 집중 돌봄 필요 집단이었다. 이러한 교육수준에 따른 돌봄 필요 정도의 차이는 75~84세, 그리고 85세 이상 노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 불평등 현상이 돌봄 필요 정도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표 II-9> 연령 및 교육수준별 돌봄 필요 정도, 2020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돌봄 필요 없음	중간 돌봄 필요	집중 돌봄 필요	돌봄 필요 없음	중간 돌봄 필요	집중 돌봄 필요	돌봄 필요 없음	중간 돌봄 필요	집중 돌봄 필요
03 년	2.5	5.6	6.6	14.6	26.1	40.7	32.6	41.7	63.3
4-6 년	20.7	23.8	37.4	44.2	43.7	35.5	46.8	40.1	31.4
7-12 년	68.7	63.9	47.0	36.9	26.2	20.5	14.4	15.7	4.4
13년 이상	8.1	6.7	9.0	4.2	3.9	3.3	6.2	2.6	0.9

주: 1)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표 II-10>을 통해 돌봄 필요 정도에 따른 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돌봄 필요 정도가 적을수록 노인부부가구를 이루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여, 돌봄 필요 없는 노인 10명 중 6명,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10명 중 3.6명 정도가 노인부부가구를 이루고 있다. 또한 돌봄 필요 정도가 커질수록 자녀와 동거하거나 노인 독신으로 거주하는 비율도 높아져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10명 중 3.5명은 동거 자녀에게서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지만, 나머지 3명 정도는 동거 자녀나 배우자로부터 필요한 돌봄을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II-10> 가구구성별 돌봄 필요 정도, 2020

	돌봄필요 없음	중간돌봄 필요	집중돌봄 필요	전체
노인독신가구	18.7	26.0	29.2	20.1
노인부부가구	61.2	49.9	36.1	58.9
자녀동거가구	18.5	21.7	34.7	19.4
기타노인가구	1.6	2.4	0.0	1.7

주: 1)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노인 단독(독신/부부)가구를 형성한 이유에서도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은 ‘자녀가 결혼해서(25.5%)’, ‘개인 생활 또는 부부생활을 누리고 싶어서(21.1%)’ 순으로 많았지만,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자녀가 결혼해서(43.1%)’, ‘살고 있는 곳을 떠나기 싫어서(28.8%)’ 순으로, 본인의 적극적인 선택으로 인해 노인 단독가구를 구성했다



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노인 단독 가구 생활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중간 또는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다(31.7%, 38.2%)’는 점을 가장 빈번하게 언급했지만, 돌봄이 필요 없는 노인의 44.6%는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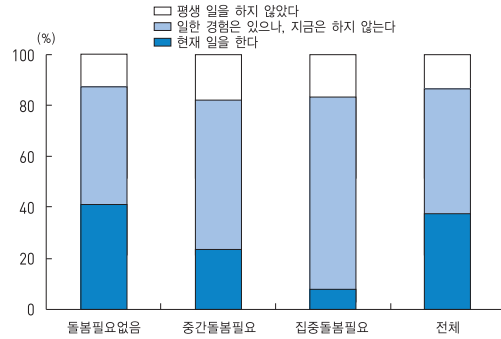
돌봄 필요 노인의 경제 상태와 주거 환경

[그림 II-21]을 살펴보면, 돌봄 필요 정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편이다. 돌봄 필요 노인의 경제활동 여부의 경우, 도움 필요 없는 노인 10명 중 4명, 중간 돌봄 필요 노인 10명 중 2명, 집중 돌봄 필요 노인 10명 중 1명 정도가 현재 일을 하고 있었다. 또한 중간 또는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10% 정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거주 형태도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81.0%,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76.5%,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61.3%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상으로 거주하는 비율도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11.0%,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은 2.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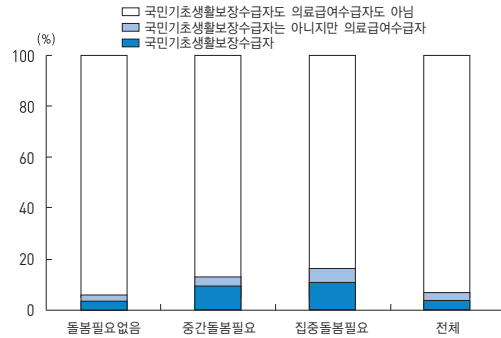
생활비를 부담하는 주체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하지만, 중간 또는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69.3% 정도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였지만,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그림 II-21] 경제활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2020

1) 경제활동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주: 1)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경제활동 여부는 “귀하께서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현재 일을 한다’, ‘2=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3=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는 “귀하께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수급자’, ‘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의료급여수급자도 아님’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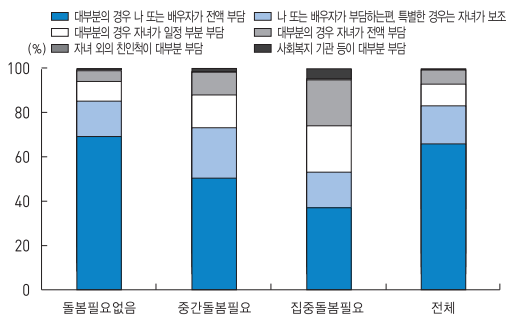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약 37.1%만이 스스로 생활비를 부담하였으며, 자녀에게 전액 또는 일정 부분 의존하는 비율도 41.9%에 달했다(그림 II-22).

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간병비 지출 부담

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돌봄 필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활동 제한으로 인해 생활 및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스스로 충당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도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39.7%는 ‘만족함’ 또는 ‘매우 만족함’ 이라고 응답했지만,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은 28.7%, 그리고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12.7% 정도만 만족하는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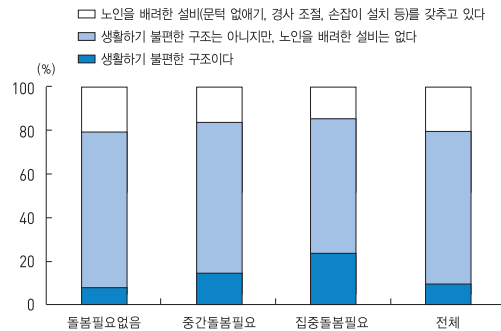
[그림 II-22] 생활비 지출 부담 주제, 2020



주: 1)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지난 1년간 귀하는 생활비 항목에 대하여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지출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지출 상황 없음’, ‘1=대부분의 경우 나 또는 배우자가 전액 부담’, ‘2=나 또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편이지만 특별한 경우는 자녀가 보조’, ‘3=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일정 부분 부담’, ‘4=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전액 부담’, ‘5=자녀 외의 친인척이 대부분 부담’, ‘6=사회복지기관 등이 대부분 부담’, ‘7=기타’ 중 한 범주에 대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0=지출 상황 없음’, ‘7=기타’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음.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그림 II-23]은 노인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하는데 편리한 정도를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돌봄 필요 노인이 돌봄이 필요 없는 노인에 비해

[그림 II-23] 거주지의 편리함 정도, 2020



주: 1)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노인의 주택이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원이 ‘1=생활하기 편리한 구조이다’, ‘2=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는 없다’, ‘3=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4=기타’ 중 한 범주에 응답한 비율임.
 3) 설비는 ‘문턱 없애기’, ‘경사 조절’, ‘손잡이 설치’ 등을 의미함.
 4) ‘4=기타’라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음.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20.8% 정도는 노인 편리 시설(문턱 없애기, 경사 조절, 손잡이 설치 등)을 갖춘 곳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돌봄 필요 노인의 경우 14~16% 정도만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약 24.1%는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를 갖춘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은 그 비율이 7.4% 이다.

이러한 거주지의 편리함 정도는 거주지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어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돌봄 필요 노인에 비해 더 높은 편이다.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77.9%는 현재 거주지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다’ 또는 ‘매우 만족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했지만, 중



간 돌봄 필요 노인은 65.7%,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57.4% 정도가 만족하는 편(‘매우 만족하는 편이다’+‘만족하는 편이다’)이라고 응답하였다.

돌봄 필요 노인의 가족 지지

〈표 II-11〉은 배우자로부터 받는 도움의 종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시된 수치는 각 도움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다. 분석 결과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그리고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수단적 도움까지 다른 노인 집단에 비해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필요 없는 노인과 중간 돌봄 필요 노인 간 도움 정도 차이는 미비하다.

〈표 II-11〉 배우자로부터 받는 도움, 2020

	돌봄필요 없음	중간돌봄 필요	집중돌봄 필요	전체 (%)
고민상담	31.7	24.8	37.6	31.0
청소/식사준비/세탁	40.1	34.8	55.5	39.8
간병·수발·병원동행	24.5	24.1	41.0	24.7

주: 1) 현재 배우자가 있고,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지난 1년간 귀하께서 자녀, 부모, 배우자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배우자로부터 받는 도움의 정도를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배우자는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들의 건강 상태와 관계

만족도는 다른 집단의 배우자에 비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에 ‘건강한 편이다’ 또는 ‘매우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배우자는 59.7%,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배우자는 44.5%,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배우자는 26.3%였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또한 도움 필요 정도가 커질수록 ‘매우 만족함’ 또는 ‘만족함’에 응답한 비율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돌봄 필요 없는 노인: 72.7%, 중간 돌봄 필요 노인: 60.5%, 집중 돌봄 필요 노인: 56.3%).

한편 앞에서 언급했듯이 돌봄 필요 노인은 돌봄이 필요 없는 노인에 비해 자녀와 동거를 더 많이 하고 있다(표 II-10). 동거 이유는 주로 부모가 자녀로부터 돌봄을 제공받기 위함이다.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기혼자녀 동거 이유는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이 당연해서(26.1%)’, ‘자녀에게 가사, 육아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22.4%)’ 순이었지만, 돌봄 필요 노인은 ‘나 또는 배우자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중간 돌봄 필요: 32.8%, 집중 돌봄 필요: 39.2%)’가 가장 높았다.

〈표 II-12〉는 동거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 정도 및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다.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돌봄 필요 정도가 큰 노인일수록 동거 자녀로부터 정서적·수단적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다. 다만 경제적 도움(정기적 현금/비정기적 현금/현물)은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동거 자녀의 경우에는 도움을 주는 정도가 동거 자녀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집중 돌봄 필요

〈표 II-12〉 동거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 2020

	(%)			
	돌봄필요 없음	중간돌봄 필요	집중돌봄 필요	전체
고민상담	25.0	21.9	37.4	25.1
청소/식사준비/세탁	26.1	33.0	57.9	28.7
간병/수발/병원동행	10.4	16.2	39.3	12.7
정기적 현금 지원	55.7	58.0	55.8	56.1
비정기적 현금 지원	78.8	84.5	85.7	80.0
현물 지원	79.7	80.8	86.1	80.2

주: 1) 동거 자녀가 있고,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고민상담, 청소/식사준비/세탁, 간병/수발/병원동행 도움 정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3) 정기적 현금 지원/비정기적 현금 지원/현물 지원에 대해서 도움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노인에게 수단적 도움(청소·식사·간병 등)을 더 제공하는 편이다. 다만 수단적 도움에서 돌봄 필요 없는 노인과 중간 돌봄 필요 노인 간 차이는 미비했다. 비동거 자녀의 경제적 도움(정기적 현금, 비정기적 현금, 현물)은 동거 자녀와 달리 돌봄 필요 노인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표 II-13).

비동거 자녀와 연락 및 왕래 빈도를 분석해 보면, 연락 빈도는 돌봄 필요 정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왕래 빈도는 집중 돌봄 노인에게서 가장 높았다. [그림 II-24]는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 빈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동거 자녀의 왕래 빈도를 노인가구 구성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먼저 노인 독신가구의 경우 비동거 자녀가

〈표 II-13〉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 2020

	(%)			
	돌봄필요 없음	중간돌봄 필요	집중돌봄 필요	전체
고민상담	18.6	19.5	22.8	18.8
청소/식사준비/세탁	7.5	8.1	13.6	7.7
간병/수발/병원동행	7.5	9.8	15.2	8.1
정기적 현금 지원	43.5	57.3	54.2	45.8
비정기적 현금 지원	85.0	87.7	91.0	85.6
현물 지원	77.5	78.5	82.2	77.8

주: 1) 비동거 자녀가 있고,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고민상담, 청소/식사준비/세탁, 간병/수발/병원동행 도움 정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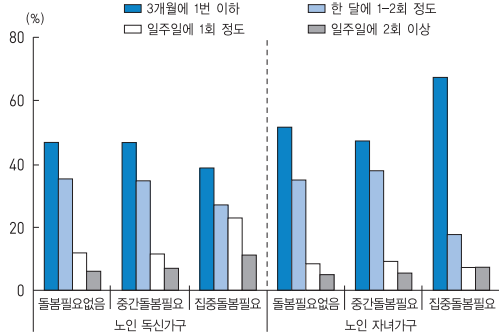
3) 정기적 현금 지원/비정기적 현금 지원/현물 지원에 대해서 도움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일주일에 1회 이상’ 방문하는 비율이 집중 돌봄 필요 노인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혼자 거주할 경우, 비동거 자녀가 왕래를 더 빈번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이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비동거 자녀의 왕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필요 없는 노인과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경우 노인 독신 가구일 경우나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비동거 자녀의 왕래 빈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상황에서는 같이 거주하는 자녀에게 돌봄에 대한 책임이 더 가중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림 II-24] 가구 구성 및 도움 필요 정도별 비동거 자녀 왕래 빈도, 2020



주: 1) 비동거 자녀가 있고,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전체(자녀의 배우자 포함)와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돌봄 필요 노인의 사회관계 및 참여

〈표 II-14〉는 사회관계에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웃/지인에 대해 보여주는 것이다. 분석결과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54.0%,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37.5%,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28.5%는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웃/지인이 '3명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0명'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은 5.0%이지만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20.2%여서 돌봄 필요 노인이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활동 제한으로 인해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 빈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년간 친구/이웃/

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 빈도를 살펴보면 돌봄 필요 정도가 높아질수록 왕래 및 연락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3개월에 1번 이하' 연락 또는 왕래하는 비율도 돌봄 필요 없는 노인에 비해 돌봄 필요 노인이 2~3배 정도 높았다.

〈표 II-14〉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웃/지인, 2020

	돌봄 필요 없음	중간돌봄 필요	집중돌봄 필요	전체
0명	5.0	12.0	20.2	6.4
1명	11.3	17.9	20.3	12.5
2명	29.6	32.6	31.0	30.1
3명 이상	54.0	37.5	28.5	51.0

주: 1)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께서 가깝게 지내는(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형제 자매를 포함한 친구·이웃·지인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사회관계 형성의 다른 측면인 종교 활동에서는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았다.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59.3%,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61.9%, 그리고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64.3%가 믿는 종교가 있다고 했으며, 주된 종교는 불교 및 개신교(기독교)였다. 다만 〈표 II-15〉의 종교 활동 참여 빈도에 있어서는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더 높았으며, 돌봄 필요 노인은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약 16%정도 차지하였다.

〈표 II-15〉 종교 활동 참여 정도, 2020

(%)

	돌봄필요 없음	중간돌봄 필요	집중돌봄 필요	전체
없음	9.5	16.2	16.1	10.6
2주 1회 이하	36.1	37.3	37.1	36.3
주 1회	42.5	35.0	38.3	41.3
주 2회 이상	11.9	11.5	8.5	11.8

주: 1) 믿는 종교가 있고,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종교와 관련된 활동(예배/예불, 종교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친교활동 포함)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동호회/친목단체/정치사회단체/자원봉사 등 사회단체에 지난 1년간 참여한 경험에서도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50.4%는 한 개 이상 활동에 참여했으나,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은 26.0%,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은 5.4%만 한 개 이상 사회단체에 참여하였다(표 II-16).

사회단체 참여와 달리 돌봄 필요 노인은 오히려 경로당을 더 빈번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26.1%,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39.5%,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35.9%가 경로당을 이용하였다. 경로당 이용의 주된 이유로 돌봄 필요 정도와 관계없이 '친목 모임'을 가장 많이 언급했지만, 중간 돌봄 필요 노인(43.1%)과 집중 돌봄 필요 노인(39.1%) 모두 '식사 서비스 이용'을 주된 이유로 꼽아 친목 모임과 더불어 실질적인 도움을 경로당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표 II-16〉 사회단체 참여율, 2020

(%)

	돌봄필요 없음	중간돌봄 필요	집중돌봄 필요	전체
0개	49.6	74.0	94.6	54.3
1개	43.7	20.3	5.4	39.4
2개	5.3	3.9	0.0	4.9
3개	1.0	1.7	0.0	1.1
4개	0.4	0.1	0.0	0.3

주: 1) 조사 시 본인이 응답한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동호회(클럽활동), 친목단체(동창회, 계모임 등), 정치사회 단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각각의 사회단체에 '참여함'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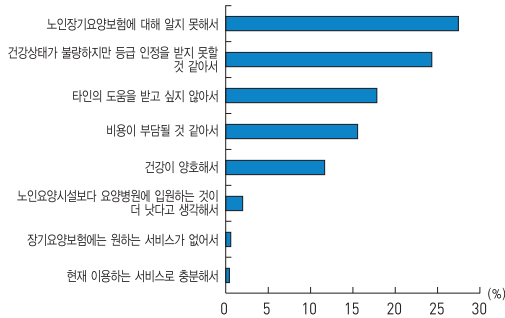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돌봄 필요 노인의 요양 보호 이용 실태

돌봄 필요 정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경험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36.5%,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10.6%, 돌봄 필요 없는 노인의 1.5%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63.5%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림 II-25]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미신청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된 미신청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서(27.5%)', '건강 상태가 불량하지만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할 거 같아서(24.3%)'를 언급해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제도



[그림 II-25] 집중돌봄필요 노인의 장기요양보험등급 미신청 이유, 2020



주: 1) 조사 시 본인이 응답했으며 집중 돌봄 필요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등급을 신청하지 않은 65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2020.

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노인들의 대부분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등급을 인정받은 중간 돌봄 필요 노인의 83.6%,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의 95.7%가 현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중 1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 중에는 ‘방문요양’을 가장 빈

번하게 이용하고, 다음으로 ‘방문목욕’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맺음말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 돌봄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돌봄 필요 노인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경제 상태 및 주거 환경이 열악하며, 사회관계에서도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자녀와 동거할 경우에는 자녀로부터 필요한 정서적·수단적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독신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사적 도움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상당수의 집중 돌봄 필요 노인이 필요한 공적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주로 노인돌봄서비스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장하는 사회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orean Social Trends 2023

한국의 사회동향 2023



2023 Health

Korean Social Trends 2023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Ⅲ 건강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오주환 서울대학교	80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 박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92
한국의 자살 추이와 대응 이유리 명지전문대학	103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오주환 (서울대학교)

-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1년 83.6년으로 일본(84.5년)과 스위스(83.9년)에 이어 OECD 국가 상위 3위 수준이다.
- 한국의 회피가능 사망률은 빠르게 개선되어 2020년 기준 OECD 국가 상위 5위 수준이다. 그러나 치료가능 사망과 예방가능 사망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 성인 코로나19 확진자 중 29.6%가 코로나19 후유증을 경험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후유증 경험률이 높았다. 65세 이상 후유증 경험자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후유증을 더 심하게 경험했다.
- 코로나19 기간에 흡연율, 음주율, 신체활동률이 감소했으며, 비만율이 상승했다.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일수가 증가하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 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해 2030년경 보건의료비 지출 초상위권 국가로 진입이 예상된다. 의료비 지출 대비 건강향상 정도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건강 영역의 주요 변화를 건강결과(상태) 지표와 건강결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인 건강행태 요인, 사회·환경 요인, 보건의료서비스 요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건강상태 영역에서는 기대여명(출생시점, 65세 시점)과 회피가능한 사망(치료가능사망과 예방가능사망) 그리고 주관적 건강인식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건강행태 영역에서는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운동실천율 등을 살펴볼 것이다. 사회·환경 요인에선 기후변화로 나타난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들 중 고온, 홍수, 산불, 오존 등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서는 의료이용도와 함께 의료서비스의 거시적 효율성과 질 그리고 환자경험 등 의료시스템의 여러 요소들을 살펴볼 것이다.

건강상태

여러 연령층마다 남은 수명을 의미하는 기대여명을 구해 볼 수 있는데, 이 값은 하나의 숫자로 남은 수명을 표현함으로써 건강수준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숫자는 현재 시점에서 각 연령별 사망확률들의 종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미래의 각 연령별 사망확률이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의 개선으로 나아질 경우, 현재의 기대여명은 미래의 실제 수명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수명을 낙관적으로 예측하지는 않는 보수적인 지표로서 역할을 한다. 각 연령에서 측정가능한 기대여명 중에서도 특히 출생시점(0세)에서 기대되는 남은 수명을 통상 ‘기대수명’이라고 간단히 불러 사용하고 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년에서 지속 상승하여 2003년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였고, 2010년 80년을 넘어 2021년 현재 83.6년이 되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80.3년)보다 3.3년이 더 긴 것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일본(84.5년), 스위스(83.9년)에 이어 상위 3위에 해당한다(그림 Ⅲ-1).

2021년 기준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86.6년으로 OECD 국가 중 일본(87.6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한국 남성은 80.6년으로 아이슬란드와 스위스(81.8년), 노르웨이(81.7년), 일본(81.5년), 스웨덴과 호주(81.3년)에 이어 일곱 번째로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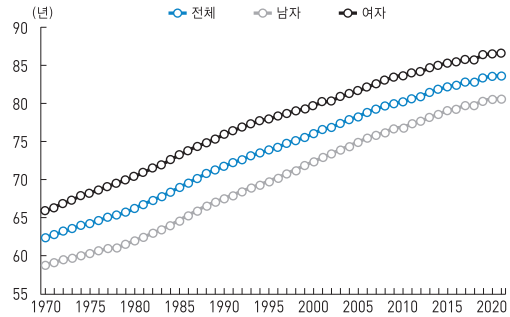
한국의 남녀 간 기대수명의 차이는 6.0년으로 OECD 국가 평균 5.4년보다 컸으며 일본(6.1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남녀 간 기대수명의 차이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65세에 이르렀을 때의 기대여명은 여성의 경우 일본(24.7년) 다음으로 긴 23.7년이었고, 남성은 19.3년으로 OECD 국가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9위 수준에 놓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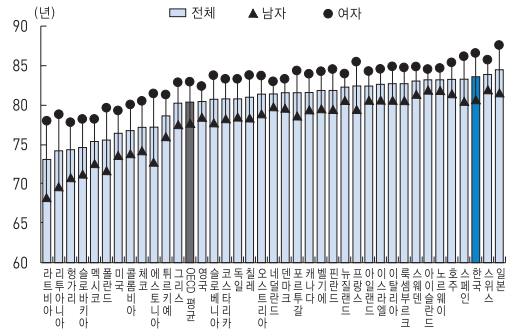
회피가능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효과적인 보건정책 및 의료서비스를 통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이 지표는 보건정책과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에 대한

[그림 Ⅲ-1] 기대수명 추이와 국제비교, 1970-2021

1) 한국 추이, 1970-2021



2) OECD 국가 비교, 2021



주: 1) 튀르키예는 2019년 자료이고, 영국은 2020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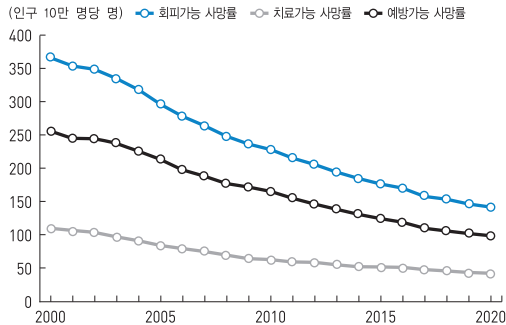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3,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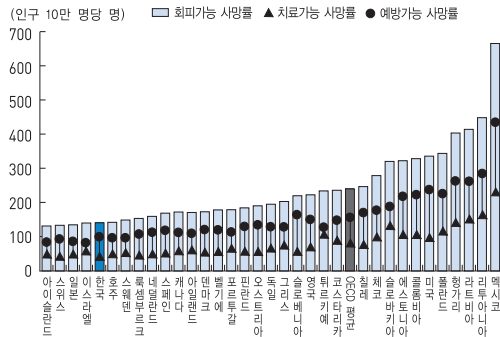
지표로서 한 사회의 의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그림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회피가능 사망률은 2000년 인구 10만 명당 367명에서 2020년 142명으로 빠르게 낮아졌다.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아이슬란드(131명), 스위스(133명), 일본(134명), 이스라엘(141명)에 이어 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9년 인구 10만 명당 147명에서 5명이 감소해 더욱 개선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Ⅲ-2] 회피가능 사망률 추이와 국제비교, 2000-2020

1) 한국 추이, 2000-2020



2) OECD 국가 비교, 2020



주: 1) 회피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회피가능 질환(치료가능 질환+예방가능 질환)의 사망자 수임.

2) 스웨덴, 아일랜드, 벨기에, 튀르키예는 2018년 자료이고, 캐나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2019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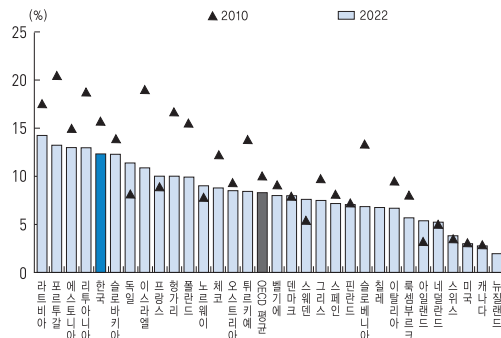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3, 2023.

회피가능 사망률은 치료가능 사망과 예방가능 사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치료가능 사망률은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43명으로 스위스 39명에 이어 2위다. 예방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9명으로 아이슬란드와 이스라엘(83명), 일본(85명), 스위스(94명), 호주(96명), 스웨덴(97명)에 이어 7위였다. 2019년 인구 10만 명당 103명에서 4명이 더 감소하였다.

한국의 예방가능 사망률과 치료가능 사망률의 차이는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56명으로 회피 가능 사망률 수준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차이가 컸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다른 객관적 건강지표와는 달리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하위권에 속하나,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자신의 건강을 나쁘거나 매우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10년 15.7%였으나 2022년에는 12.3%로 개선되었다(그림 Ⅲ-3).

[그림 Ⅲ-3] OECD 국가의 주관적 건강인식, 2010, 2022



주: 1) 주관적 건강인식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매우 나쁨' 또는 '나쁨'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22년 자료 중 뉴질랜드는 2020년 자료이고, 이스라엘, 스위스, 칠레, 스웨덴, 캐나다는 2021년 자료임.

3) 2010년 자료 중 뉴질랜드, 칠레는 없음.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3, 2023.

〈표 Ⅲ-1〉은 질병관리청이 2022년 6월에서 12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29.6%가 코로나19 확진 후 4주 이상 지속되는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후유증 경험률이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후유증 경험률이 높았다. 그러나 65세 이상 연령에서는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다른 연령보다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

았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의료기관 외래치료를 받았다는 응답도 더 높았다.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았다는 응답은 백신을 접종한 확진자(12.5%)가 비접종 확진자(37.7%)보다 덜 했다. 만성질환 여부에 따른 후유증 경험은 남성에게서만 유의미했는데, 만성질환이 있는 남성의 경우 후유증 경험률은 24.8%로 만성질환 없는 남성의 후유증 경험률(16.9%)보다 높았다. 흡연, 음주, 걷기실천 등의 건강행동 습관에 따른 후유증 경험은 남녀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 코로나19 감염 후유증 경험자(19세 이상) 특성, 2022 (%)

	남자			여자		
	19세 이상	19-64세	65세 이상	19세 이상	19-64세	65세 이상
후유증 경험률	21.8	22.6	17.2	36.3	37.7	29.4
4주 지속 증상 종류 (중복응답)						
기침, 가래	54.8	55.9	46.2	53.1	52.8	55.1
피로감	19.3	18.8	23.2	23.8	25.3	14.8
인후통	11.0	12.5	0.0	10.3	8.1	24.0
후각상실	10.4	10.1	12.8	9.9	10.0	9.1
미각상실	7.1	8.0	0.0	11.2	11.6	8.4
두통	6.5	6.5	6.5	5.3	4.9	7.8
호흡곤란	4.4	4.6	3.1	5.8	5.1	10.6
근육통	5.6	5.7	5.3	4.8	3.8	11.0
증상치료기관						
입원치료	0.4	0.0	3.1	0.2	0.0	1.4
외래치료	23.3	20.0	47.3	36.1	34.2	47.7
약국 이용	12.2	13.6	2.1	5.5	4.8	10.2
치료받은 적 없음	63.7	65.8	47.5	58.2	61.0	40.8
일상생활 지장						
많이 받음	8.2	8.1	8.7	17.6	16.1	26.8
조금 받음	59.5	61.5	44.3	50.0	52.0	37.4
전혀 받지 않음	32.3	30.3	47.0	32.4	31.9	35.8

주: 1)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년도(2022)」에서 2022년 6월부터 12월 까지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3,352명 중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고 응답한 1,439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후유증 경험률은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코로나19 후유증이 4주 이상 지속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후유증을 겪고 4주가 지나지 않은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
 3) 그 외 통계치는 후유증 경험자들의 응답률임.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플러스」, 20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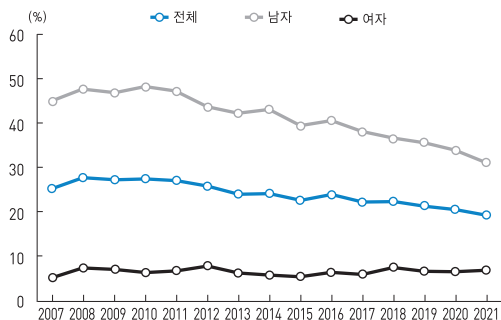
건강행태

[그림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성인의 흡연율은 2007년 25.3%에서 2021년 19.3%로 감소 추세에 있다. 남성 흡연율의 경우 2007년 45.1%에서 2021년 31.3%로 13.8%p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여성 흡연율은 5.3%에서 6.9%로 1.6%p 증가했다.

한국의 흡연 수준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흡연율(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흡연자)은 평균 15.9%인데,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한국의 흡연율은 15.4%로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 남녀 간 흡연율 차이가 21.8%p로 OECD 국가들 평균인 7.6%p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Ⅲ-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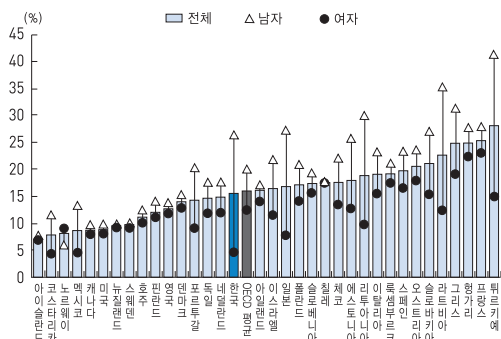
[그림 Ⅲ-4] 성별 흡연율, 2007-2021



주: 1) 흡연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그림 Ⅲ-5] OECD 국가의 흡연율, 2021



주: 1) 흡연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흡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호주, 포르투갈, 이스라엘, 일본, 폴란드,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그리스, 헝가리, 튀르키예는 2019년 자료이고, 핀란드, 칠레, 에스토니아, 스페인은 2020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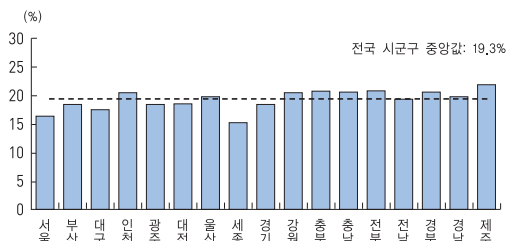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3*, 2023.

한편, 성인 흡연율의 시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세종시가 15.1%로 가장 낮고, 제주가 21.9%로 가장 높다. 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강원도가 5.1%로 가장 낮고, 대전이 17.7%로 가장 높다. 현재 흡연자의 금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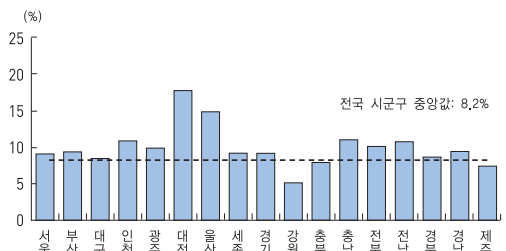
도울의 경우 울산이 52.3%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37.2%로 가장 낮다(그림 Ⅲ-6).

[그림 Ⅲ-6] 시도별 흡연율,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및 금연시도율,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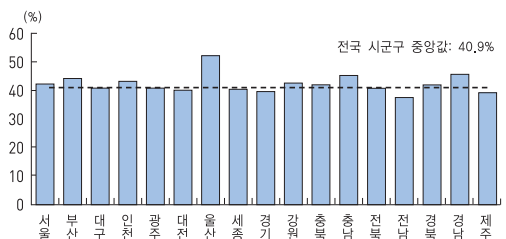
1) 흡연율



2)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3) 금연시도율



주: 1) 흡연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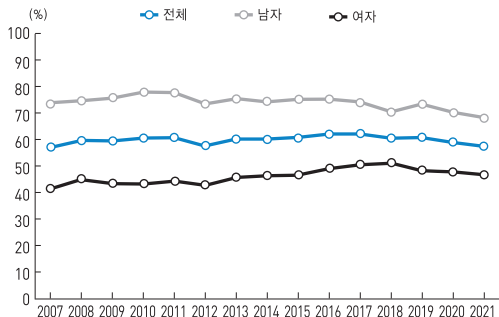
2)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만 19세 이상 현재 비흡연자 중 담배 종류와 상관없이 최근 1주일 동안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3) 금연시도율은 만 19세 이상 현재 흡연자 중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24시간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인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23.

[그림 Ⅲ-7]에 제시된 성인의 (월간)음주율을 보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큰 변화 없이 60%대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58.9%, 2021년 57.4%로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녀 간 음주율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고위험 음주율(1회 음주량이 소주 1병 분량에 해당하는 7잔(여성은 5잔)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은 2021년 기준 남성 19.7%, 여성 6.9%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음주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Ⅲ-7] 성별 월간음주율, 2007-2021



주: 1) 음주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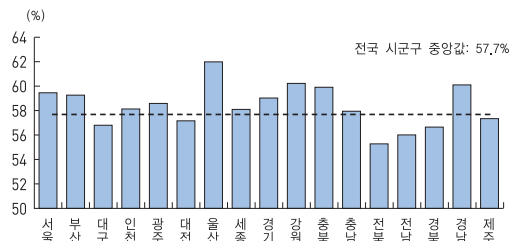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시도별 성인 음주율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월간음주율(최근 한 달 동안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국 시군구 중앙값이 57.7%이며, 전북이 55.3%로 가장 낮고, 울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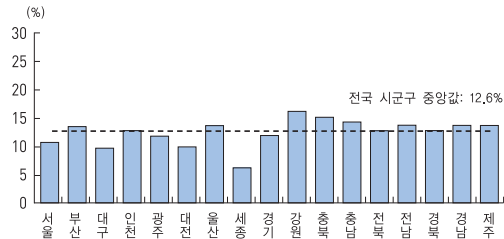
62.0%로 가장 높다. 고위험음주율의 경우 2022년 전국 시군구 중앙값이 12.6%이며, 세종이 6.1%로 가장 낮고, 강원이 16.1%로 가장 높았다(그림 Ⅲ-8).

[그림 Ⅲ-8] 시도별 음주율, 2022

1) 월간음주율



2) 고위험음주율



주: 1) 월간음주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2) 고위험음주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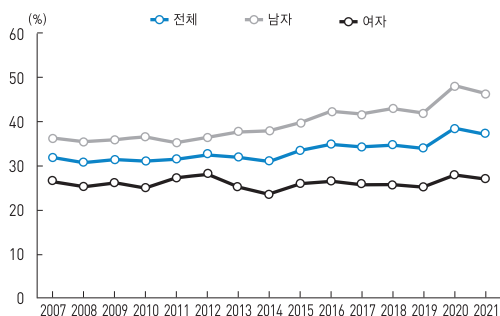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23.

한편, 국제적으로는 한 국가의 음주 수준을 알코올 소비량으로 측정한다.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7.7ℓ로 OECD 국가 평균인 8.6ℓ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비만은 심장 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은 보통 키와 몸무게의 비인 체질량지수(BMI)로 측정하는데, 한국에서는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한다. 한국인의 비만율은 2007년 31.7%에서 계속 상승하여 2016년 34.8%를 기점으로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해 2020년 38.3%로 최고치를 보였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현재 비만율은 37.1%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46.3%, 여성 26.9%로 남성이 월등하게 높다. 남성 비만율은 2020년 전까지 42%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2020년 48.0%로 크게 높아졌다. 여성 비만율은 같은 기간 25% 내외를 유지해오다가 2020년에 27.7%로 높아졌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비만을 BMI 30 이상으로 규정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비만율은

[그림 Ⅲ-9] 성별 비만율, 200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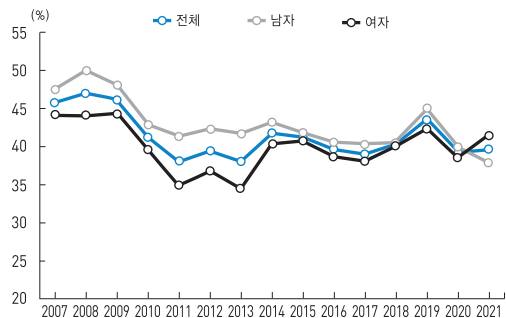


주: 1) 비만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 25kg/m²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2021년 7.0%로 OECD 평균 23.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걷기실천율은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림 Ⅲ-10]에서 걷기실천율은 2007년 45.7%에서 2021년 39.6%로 낮아졌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07년 47.5%에서 2021년 37.9%로 낮아졌고, 여성은 같은 기간 44.1%에서 41.4%로 낮아져서 남성의 하락폭이 여성보다 컸다. 또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는 남녀 모두 전년 대비 걷기실천율이 크게 낮아졌는데, 2021년에는 남성은 더 낮아진 반면, 여성은 크게 상승해 남성보다 높아졌다.

[그림 Ⅲ-10] 성별 걷기실천율, 200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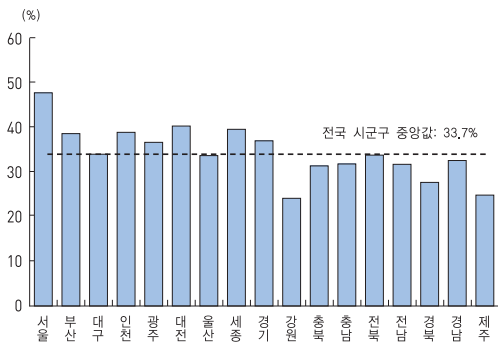
주: 1) 걷기실천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23.

건강생활실천율은 금연(현재 흡연자가 아닌 상태), 절주(현재 고위험 음주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 걷기(1일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걷는 경우) 세 가지 실천을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시도별 건강생활실천율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전국 시·군·구 실천율의 중앙값은 33.7%이었으며, 서울이 47.7%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24.0%로 가장 낮았다(그림 Ⅲ-11).

[그림 Ⅲ-11] 시도별 건강생활실천율, 2022



주: 1) 건강생활실천율은 만 19세 이상 인구 중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들의 비율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23.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활동이 둔화되었던 시기 흡연과 음주 역시 줄어들었으나, 동시에 신체활동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를 벗어나 사회활동이 회복되면서, 성인의 신체활동률도 증가하고 있고, 흡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어 바람직하나, 월간음주율이나 고위험음주율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음주로 인한 건강위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 필요로 한다.

기후변화 환경요인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일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전반적으로 온열질환자 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 수 추정치도 늘고 있다. 2018년이 31일로 가장 많은 폭염일수를 기록하였고, 4,52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여 이 중 48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되었다(표 Ⅲ-2). 2023년은 2,81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32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3년은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시작 이후 가장 많은 발생이 있었던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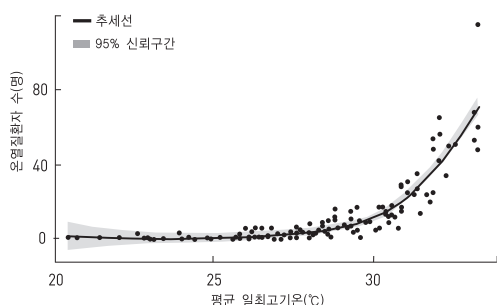
〈표 Ⅲ-2〉 온열질환자 수, 추정 사망자 수, 폭염일수, 2011-2023

연도	온열질환자 수 (명)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수 (명)	폭염일수 (일)
2011	443	6	6.5
2012	984	15	14
2013	1,189	14	16.6
2014	556	1	6.6
2015	1,056	11	9.6
2016	2,125	17	22
2017	1,574	11	13.5
2018	4,526	48	31
2019	1,841	11	12.9
2020	1,078	9	7.7
2021	1,376	20	11.8
2022	1,564	9	10.6
2023	2,818	32	14.2

출처: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2023.

[그림 Ⅲ-12]를 보면, 일평균 최고온도가 높은 날일수록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중 가장 많은 온열환자가 신고된 날은 7월 2일로서, 하루 115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되었다. 이날은 전국 평균 최고기온이 33.3°C였고, 경북 의성지역은 37.2°C로 관측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은 발생률을 보여,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인 연령집단은 80세 이상으로 인구 10만 명당 6.2명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Ⅲ-12] 여름철 일평균 최고기온과 온열질환자 수 간 관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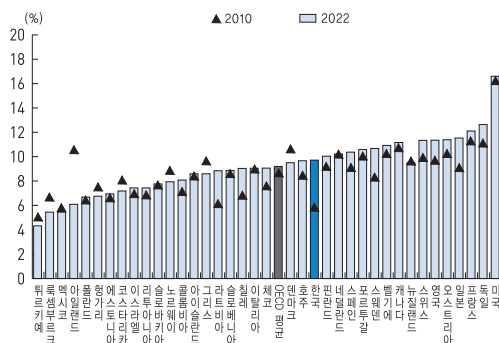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2023.

보건의료체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에 큰 변화가 없는데 반해, 한국은 2010년 GDP 대비 5.8%에서 2022년 9.7%를 지출함으로써 라트비아와 함께 가파른 속도로

보건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현재 한국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국가는 15개국, 한국보다 더 적은 지출을 하고 있는 국가는 22개국으로 OECD 내 보건의료비 지출 순위 상위권으로 진입하였다(그림 Ⅲ-13). 이 속도로 증가할 경우, 2030년경에는 보건의료비 지출이 초상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지출의 대부분은 공유자원인 건강보험료 증가가 가입자의 소득 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 혹은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로의 개혁 둘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질 향상이 보장되는 지출의 증가가 아닌 한, 이러한 속도의 증가에 대해 의료비 지출 대비 건강향상 정도를 사회적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야 미래에 다가올 질문에 정책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Ⅲ-13] OECD 국가의 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2010,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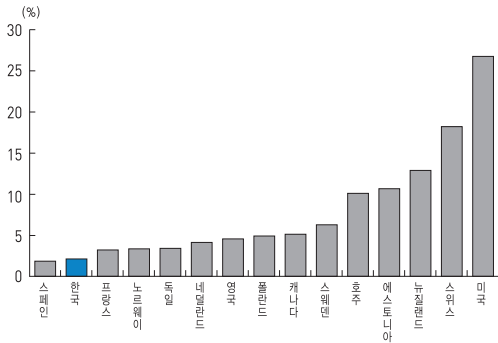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3, 2023.



[그림 Ⅲ-14]에 제시된 의료비가 비싸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한 경험률(16세 이상)을 보면, OECD 국가들 중 한국의 위치는 매우 우수하여,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2.2%로 스페인(1.9%) 다음으로 낮다.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16세 이상 인구 중 26.8%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스위스(18.3%)가 다음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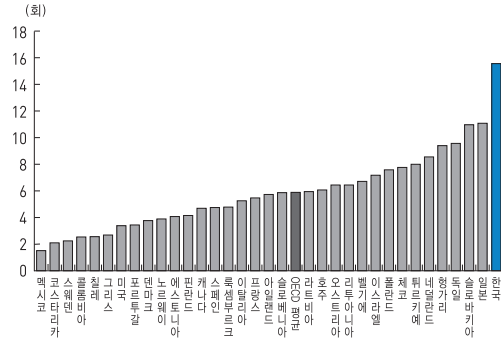
[그림 Ⅲ-14] OECD 국가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률, 2020



주: 1) 의료서비스 이용 포기 경험률은 16세 이상 인구 중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상담을 생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3*, 2023.

1년 동안 의사를 외래진료로 만나는 국민 1인당 평균 횟수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아서 2021년 기준으로 15.7회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Ⅲ-15). 적은 방문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스웨덴(2.3회)에 비하면 약 7배 이상 많은 횟수를 보일 뿐 아니라, 2위인 일본(11.1회)에 비해서도 약 1.4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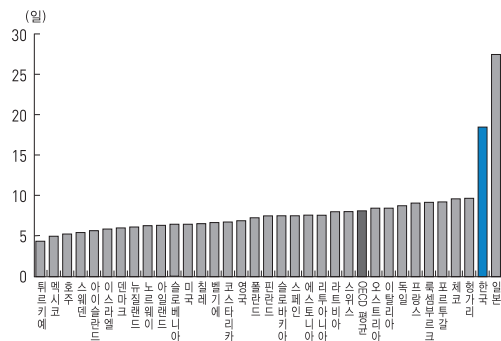
[그림 Ⅲ-15] OECD 국가의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 2021



주: 1) 콜롬비아, 아일랜드 등은 2019년 자료이고, 미국, 캐나다, 일본은 2020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3*, 2023.

한국의 평균 입원일수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일본(27.5일) 다음으로 많은 상태이며 이러한 경향은 2010년 이래로 지속되고 있다. 2021년 현재 한국의 평균 입원일수는 18.5일이 다(그림 Ⅲ-16).

[그림 Ⅲ-16] OECD 국가의 입원환자 평균 입원일수,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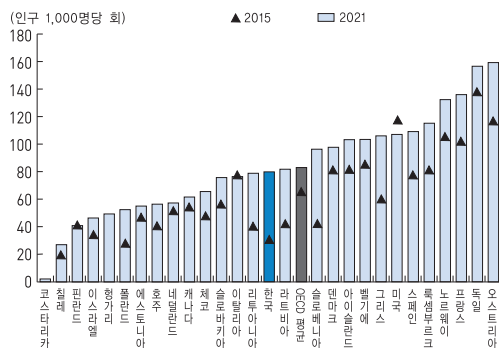


주: 1) 호주, 뉴질랜드는 2020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3*, 2023.

인구 1,000명당 MRI 촬영검사 횟수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MRI의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되기 전인 2015년 한국의 촬영 횟수는 인구 1,000명당 31.2회로 당시 보고한 26개국 중 칠레(20.1회)와 폴란드(27.8회)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적은 국가였고, 한국보다 더 많은 촬영을 하는 국가는 23개국이었다. 이 중 촬영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독일(138.6회), 그 다음은 미국(117.9회)이었다. 그러나 2018년 MRI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정책을 실행한 이후 촬영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인구 1,000명당 80.1회로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진입하였다. 한국보다 많은 촬영을 하고 있는 국가는 13개국, 더 적은 횟수의 촬영을 하고 있는 국가는 14개국이다(그림 Ⅲ-17).

MRI와는 달리 이전부터 건강보험적용을 받고 있었던 CT 촬영의 경우,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그림 Ⅲ-17] OECD 국가의 MRI 촬영검사 횟수, 2015,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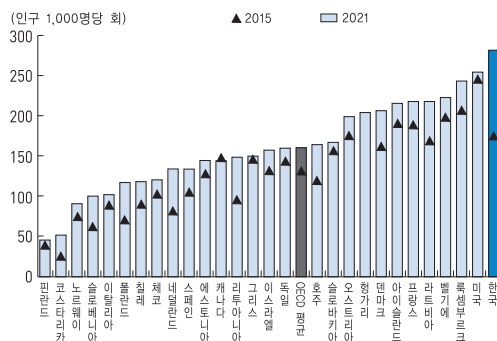
주: 1) 2021년 자료 중 캐나다는 2019년 자료이고,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2020년 자료임.

2) 2015년 자료 중 코스타리카, 멕시코는 없음.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3, 2023.

CT 촬영 횟수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Ⅲ-18). MRI 촬영 횟수와 비교를 위해 동일한 기간으로 비교해 보면, 2015년 한국보다 더 적은 CT 촬영 횟수를 보고한 국가는 20개국, 더 많은 촬영 횟수를 보인 국가는 6개국으로, MRI 촬영이 건강보험 적용 이후 미충족 의료를 보충한 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CT 촬영 횟수 증가 양상처럼 향후 MRI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면, 앞으로도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의 촬영 횟수로 변해갈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림 Ⅲ-18] OECD 국가의 CT 촬영검사 횟수, 2015, 2021



주: 1) 2021년 자료 중 캐나다는 2019년 자료이고,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2020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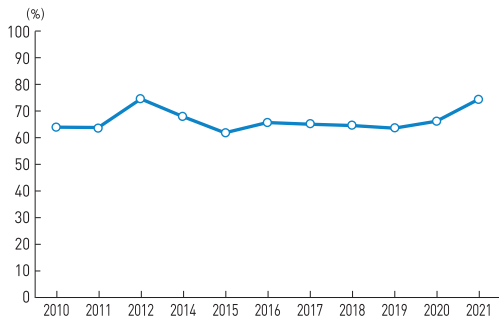
2) 2015년 자료 중 헝가리는 없음.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3, 2023.

유방암 검진율은 2010년 이래로 65% 내외에서 머무는 수준이었고, 2012년(74.1%)과 2021년(74.2%)에만 잠시 높은 검진율을 보였다(그림 Ⅲ-19). 가장 많은 국가에서 보고가 이루어진 2019년을 보면, 보고한 21개국 중 한국의 유방암

검진율은 14번째 국가로 7개 국가만이 한국보다 낮은 검진율을 보여, OECD 국가 평균 이하의 검진율 수준을 보였다.

[그림 Ⅲ-19] 50-69세 여성 유방암 검진율, 2010-2021



주: 1) 2013년 자료 없음.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3*, 2023.

한국은 의사 방문 수, 입원일수, CT 및 MRI 검사 횟수 등 치료서비스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가 미충족 의

료의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비가 비싸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한 경험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서, 한국인들은 필요시 치료서비스 이용에 재정적 장애 없이 충분하게 필요한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유방암 검사 등 예방적 의료서비스는 OECD 중간 이하 수준의 이용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은 치료가능한 사망을 감소시키는 데는 유용하나, 예방가능한 사망을 감소시키는 데는 미흡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비 지출의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예외적인 국가라는 점은 거시적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서비스의 양이 과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장성을 얻고 있는 만큼, 이젠 질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건의료체계를 집중 검토하는 것이 시스템 지속성을 위해 요구된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

박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은 지역 간, 의료기관 유형 간 불균형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 비수도권은 병원 수와 병상수가 수도권에 비해 많았지만, 의사 수와 간호사 수는 적었다. 또한 비수도권은 전체 환자 수와 예방가능 입원환자 수가 수도권에 비해 많았으나, 고난이도 입원환자 수가 많은 것은 아니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소는 의료시설의 공급량보다는 공급구조일 개연성이 높다.

의료자원은 의료체계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며, 의료서비스는 의료자원을 통해 제공된다. 의료자원 중에서도 의료시설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의료인력과 의료장비 등 다른 의료자원의 공급을 동반함에 따라 의료자원 전반의 배치와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대표적인 노동집약 분야로써, 의료인력의 양적, 질적 수준과 분포가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민간 주도로 의료체계가 구성됨에 따라 의료자원의 불균형 분포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 글은 최근 10년간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현황과 추세를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와 「건강보험통계」 등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대상 시기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다.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을 포함하는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의료시설은 일반병·의원, 즉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기관 수와 병상수, 의료인력은 의사와 간호사 수로 다룬다. 의료기관 유형은 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하 ‘3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병원(이하 ‘300병상 미만’), 그리고 의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나눈다. 또한 병원은 병상규모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 인력 기준을 달리하는데,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은 진료과목이 9개 이상으로 그 이하와 다르며,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규모에 따른 기능 차이를 규정하고 있다.

지역 간 의료시설 불균형

의료기관 수

의료기관 수는 2020년 기준 300병상 이상 169개, 300병상 미만 1,707개, 의원 33,115개로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추세이다. 의료기관 수를 인구 10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2020년 기준 300병상 이상 3.3개, 300병상 미만 32.9개, 의원 638.9개소로 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0.4%, 0.9%, 1.7%이었으며, 300병상 이상보다 300병상 미만이, 병원보다 의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큰 편이었다(표 Ⅲ-3). 병원의 건립은 대부분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중소규모 병·의원은 설립이 용이한 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규제가 없어 설립이 용이한 중소규모 병·의원을 위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인구 100만 명당 의료기관 수는 2020년 기준 300병상 이상의 경우 수도권 3.0개, 비수도

〈표 Ⅲ-3〉 의료기관 유형별 기관 수, 2011~2020

구분	기관 수			인구 100만 명당 기관 수		
	2011 (개)	2020 (개)	연평균 증감률 (%)	2011 (개)	2020 (개)	연평균 증감률 (%)
300병상 이상	159	169	0.7	3.1	3.3	0.4
300병상 미만	1,535	1,707	1.2	30.3	32.9	0.9
의원	27,837	33,115	1.9	548.7	638.9	1.7

주: 1) 의료기관은 일반병·의원을 대상으로 함. '300병상 이상'은 상급 및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며, '300병상 미만'은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및 병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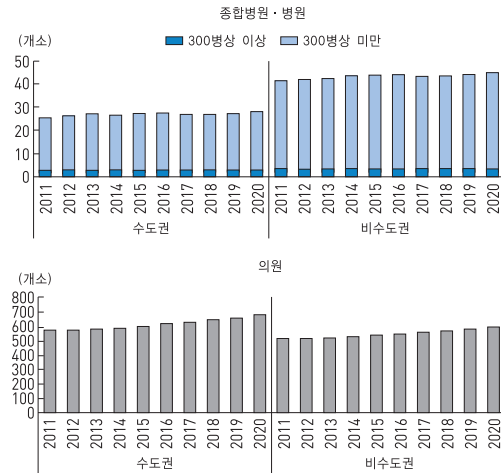
2) 인구는 각 연도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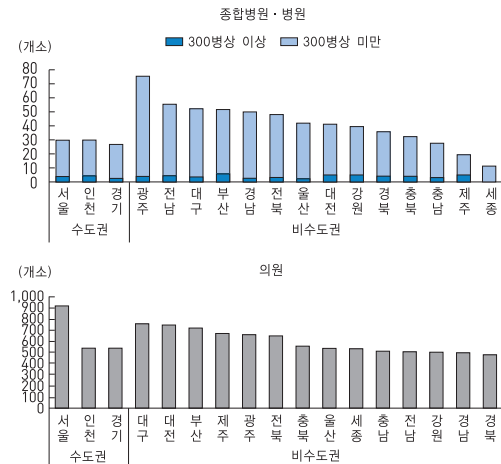
권 3.6개, 300병상 미만의 경우 수도권 25.0개, 비수도권 40.9개, 의원의 경우 수도권 681.0개,

[그림 Ⅲ-20] 지역별 인구 100만 명당 의료기관 수, 2011~2020

1) 수도권 및 비수도권



2) 시도별(2020)



주: 1) 의료기관은 일반병·의원을 대상으로 함. '300병상 이상'은 상급 및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며, '300병상 미만'은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및 병원임.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등이며, '비수도권'은 그 외 시도임.

3) 인구는 각 연도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비수도권 596.5개로 병원은 비수도권이 많았지만, 의원은 수도권이 많았고 의원의 경우 지역별 격차가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그림 Ⅲ-20-1).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안에서도 시도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2020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병원 수는 수도권의 경우 26.4~29.6개, 비수도권의 경우 11.2~75.2개, 의원 수는 수도권의 경우 540.5~918.9개, 비수도권의 경우 488.0~758.4개로 차이를 나타내었다(그림 Ⅲ-20-2). 우리나라는 민간 의료기관 비율이 99.2%이며, 의료시설의 공급과 배치에 관한 관리 정책이나 계획이 없다. 사실상 의료기관의 지리적 배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의료시설의 불균형 분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넘어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불균형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형태이다.

병상수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2020년 기준 300병상 이상 11만 632개, 300병상 미만 21만 35개, 의원 5만 6,745개로 2011년 대비 300병상 이상은 증가, 300병상 미만과 의원은 감소하였다. 의료기관 수 증감 추세와 비교하였을 때 300병상 이상은 기관당 병상 규모가 대형화된 반면, 300병상 미만은 더욱 소형화되었다. 또한 의원은 병상을 보유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4).

병상수를 인구 1,000명당으로 환산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면 2020년 기준 수도권

은 5.8개, 비수도권은 8.8개로 의료기관 수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의 병상수가 더 많았다(그림 Ⅲ-21). 의료기관 수의 불균형이 병상수의 불균형과 연계되고 있다.

〈표 Ⅲ-4〉 의료기관 유형별 병상수, 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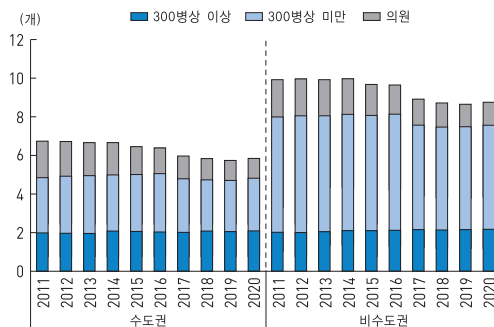
구분	병상수			인구 1,000명당 병상수		
	2011 (개)	2020 (개)	연평균 증감률 (%)	2011 (개)	2020 (개)	연평균 증감률 (%)
300병상 이상	101,932	110,632	0.9	2.0	2.1	0.7
300병상 미만	225,083	210,035	-0.8	4.4	4.1	-1.0
의원	96,789	56,745	-5.8	1.9	1.1	-6.0

주: 1) 의료기관은 일반병·의원을 대상으로 함. '300병상 이상'은 상급 및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며, '300병상 미만'은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및 병원임.

2) 인구는 각 연도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그림 Ⅲ-21〕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의료기관 유형별 인구 1,000명당 병상수, 2011~2020



주: 1) 의료기관은 일반병·의원을 대상으로 함. '300병상 이상'은 상급 및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며, '300병상 미만'은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및 병원임.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등이며, '비수도권'은 그 외 시도임.

3) 인구는 각 연도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참고로 2020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인구 1,000명당 일반병상(curative care beds) 병상



수는 3.5개로 우리나라 7.2개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OECD, 2023). 우리나라는 병상의 불균형 문제뿐 아니라, 과잉공급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2026년경에는 과잉공급의 규모가 5만 병상 이상으로 추계된 바 있다(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주요 진료과목별 의원 수

진료과목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해당하는 의원의 지역별 기관 수 추이를 살펴보면, <표 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 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는 증가하였고, 산부인과는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내과는 증가하였고,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수 자체의 증감률을 비교하면 가장 증가율이 큰 진료과목은 수도권 내과, 가장 감소율이 큰 진료과목은 비수도권 산부인과였다. 2011년과 2020년 사이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인구의 증가 폭이 작았으며, 여성 15~49세 여성 수와 0~19세 소아청소년 수는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의원의 경우 지역사회와 밀접하며, 대부분 개설자가 의사 개인으로 병원에 비해 시설, 인력이 간소하여 개업과 폐업, 기능 전환이 용이한 편이다. 또한 의사의 전문과목과 의원의 진료과목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체감도와 그에 대한 대처가 비교적 빨리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그림 Ⅲ-22]의 진료과목별로 인구 100만 명

<표 Ⅲ-5>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주요 진료과목별 의원 수, 2011~2020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2011 (개)	2020 (개)	연평균 증감률 (%)	2011 (개)	2020 (개)	연평균 증감률 (%)
내과	1,897	2,476	3.0	1,998	2,489	2.5
외과	428	458	0.8	606	534	-1.4
산부인과	812	709	-1.5	696	591	-1.8
소아청소년과	1,258	1,288	0.3	931	870	-0.8

주: 1) 진료과목은 의원의 표시과목으로 의사의 전문과목과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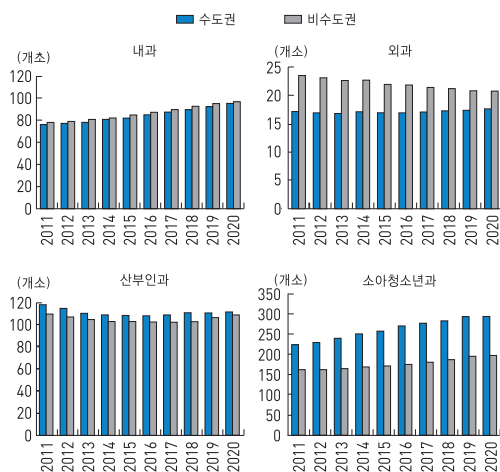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이며, '비수도권'은 그 외 시도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당 의원 수 추이를 살펴보면, 내과의 경우 2020년 기준 수도권은 95개소, 비수도권은 97개소로 비수도권이 더 많았으며, 그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외과의 경우 2020년 기준 수도권 18개소, 비수도권 21개소로 비수도권이 더 많지만, 2011년 수도권 17개소, 비수도권 24개소와 비교하여 수도권은 증가, 비수도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 경우 15~49세 여성 인구 100만 명당 기관 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2011년에서 2016년까지 감소 추세이다가 2017년 전후로 다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2020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원 수가 각각 111개소, 109개소로 이전에 비해 그 격차는 다소 완화되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20년 기준 0~19세 인구 100만 명당 수도권 294개소, 비수도권 199개소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이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더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렇듯 진료과목별로 지역별 불균형의 추세와 양상이 서로 달랐는데, 수

도권과 비수도권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진료 과목은 소아청소년과였고, 다른 진료과목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격차가 다소 완만해진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그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저출산의 영향에 더불어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은 점이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그림 Ⅲ-22]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주요 진료과목별 인구 100만 명당 의원 수, 2011-2020



주: 1) 진료과목은 의원의 표시과목으로 의사의 전문과목과 다름.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이며, '비수도권'은 그 외 시도임.
3) 인구는 각 연도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인구당 의원 수 산출 시 내과 및 외과는 전체 인구, 산부인과는 15-49세 여성 인구, 소아청소년과는 0-19세 인구를 적용함.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의사 수

〈표 Ⅲ-6〉의 일반병·의원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수도권 5만 5,065명,

비수도권 4만 3,618명으로 수도권 비율이 55.8%였다. 참고로 1983년 언론기사에 따르면, 의사의 44.2%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경향신문, 1983.11.22.),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300병상 미만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의사 수를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수도권의 경우 2011년 170.8명에서 2020년 211.5명으로 연평균 2.4%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2011년 142.7명에서 2020년

〈표 Ⅲ-6〉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의료기관 유형별 의사 수, 2011-2020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2011 (명)	2020 (명)	연평균 증감률 (%)	2011 (명)	2020 (명)	연평균 증감률 (%)
의사 수						
전체	42,692	55,065	2.9	36,740	43,618	1.9
300병상 이상	19,311	23,208	2.1	12,862	14,617	1.4
300병상 미만	5,236	7,186	3.6	7,638	9,543	2.5
의원	18,145	24,671	3.5	16,240	19,458	2.0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전체	170.8	211.5	2.4	142.7	169.1	1.9
300병상 이상	77.3	89.1	1.6	50.0	56.7	1.4
300병상 미만	21.0	27.6	3.1	29.7	37.0	2.5
의원	72.6	94.7	3.0	63.1	75.4	2.0

주: 1) 일반병·의원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 기준임.

2) 의료기관은 일반병·의원을 대상으로 함. '300병상 이상'은 상급 및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며, '300병상 미만'은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및 병원임.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이며, '비수도권'은 그 외 시도임.

4) 인구는 각 연도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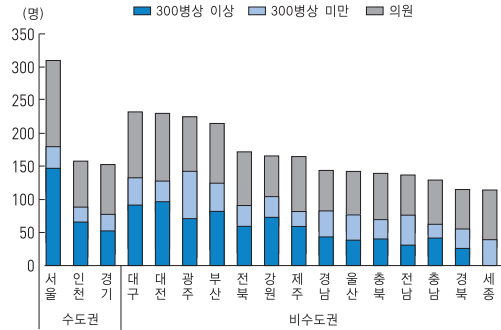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169.1명으로 연평균 1.9% 증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점차 커지는 추세다. 또한 의료기관 유형별로도 차이를 나타내는데,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수도권은 300명 이상 89.1명, 300명 미만 27.6명, 의원 94.7명, 비수도권은 300명 이상 56.7명, 300명 미만 37.0명, 의원 75.4명으로 수도권이 300명 이상은 1.6배, 의원은 1.3배 많았고 비수도권은 300명 미만은 1.3배 많았다.

[그림 Ⅲ-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안에서도 시도별로 그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수도권의 경우 152.1~310.3명, 비수도권의 경우 113.8~232.3명으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지역별 인구당 의료기관 수, 병상수의 경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많았던 것에 비해 의사 수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의 기관 수 또는 병상수가 많다고 반드시 병·의원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가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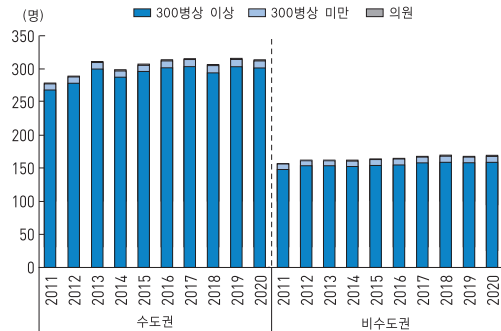
인구당 의료기관 수와 병상수, 의사 수의 분포 양상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의료기관 유형은 300명 이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의료기관당 의사 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의료기관당 의사 수 차이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300명 이상에서 수도권은 301.4명, 비수도권은 158.9명으로 수도권이 1.9배 더 많으며,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그러한 경향성이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Ⅲ-24).

[그림 Ⅲ-23] 시도 및 의료기관 유형별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2020



주: 1) 일반병·의원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 기준임.
 2) 의료기관은 일반병·의원을 대상으로 함. '300명 이상'은 상급 및 300명 이상의 종합병원이며, '300명 미만'은 300명 미만의 종합병원 및 병원임.
 3) 인구는 각 연도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22.

[그림 Ⅲ-24]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기관당 의사 수, 2011~2020



주: 1) 일반병·의원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 기준임.
 2) 의료기관은 일반병·의원을 대상으로 함. '300명 이상'은 상급 및 300명 이상의 종합병원이며, '300명 미만'은 300명 미만의 종합병원 및 병원임.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이며, '비수도권'은 그 외 시도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간호사 수

일반병·의원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2020년 기준 수도권 9만 6,069명, 비수도권 9만

665명으로 2011년 이후 수도권은 연평균 8.0%, 비수도권은 연평균 6.2% 증가하였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300병상 이상에서 간호사 수 증가율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가장 큰 편이었다. 동기간 의료기관 유형별 병상수의 증가가, 300병상 이상에서 가장 큼에 따라 간호사 수도 병상수의 증가와 비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간호사 수를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수도권의 경우 2011년 192.8명에서 2020년 369.0명으로 연평균 7.5%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2011년 204.3명에서 2020년 351.5명으로 연평균 6.2% 증가하여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많아졌으며, 2020년 그 격차가 17.5명으로 2011년보다 커진 상황이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2020년 기준 수도권은 300병상 이상 241.5명, 300병상 미만 91.2명, 의원 36.3명이었고, 비수도권은 300병상 이상 182.9명, 300병상 미만 139.7명, 의원 29.0명으로 나타나, 300병상 미만은 비수도권이 인구당 간호사 수가 많았으나, 300병상 이상은 수도권이 더 많았다(표 Ⅲ-7).

수도권과 비수도권 안에서도 시도별로 그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 수는 수도권의 경우 267.9~514.5명, 비수도권의 경우 174.0~508.7명으로 차이를 나타내었다(그림 Ⅲ-25).

기관 수와 병상수는 비수도권이 많았던 것에 비해 간호사 수는 수도권이 더 많아 의사 수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기관 수 또는 병상수가 많은 것이 반드시 병·의원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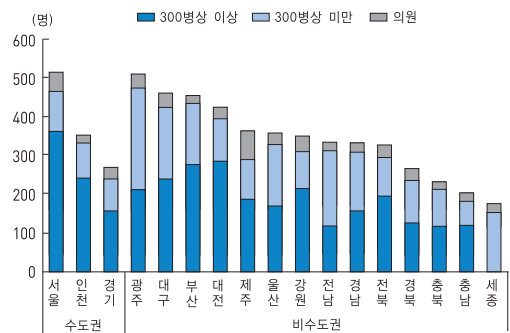
〈표 Ⅲ-7〉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의료기관 유형별 간호사 수, 2011~2020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2011 (명)	2020 (명)	연평균 증감률 (%)	2011 (명)	2020 (명)	연평균 증감률 (%)
간호사 수						
전체	48,187	96,069	8.0	52,601	90,665	6.2
300병상 이상	27,373	62,870	9.7	23,584	47,170	8.0
300병상 미만	13,496	23,738	6.5	22,486	36,022	5.4
의원	7,318	9,461	2.9	6,531	7,473	1.5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 수						
전체	192.8	369.0	7.5	204.3	351.5	6.2
300병상 이상	109.5	241.5	9.2	91.6	182.9	8.0
300병상 미만	54.0	91.2	6.0	87.3	139.7	5.4
의원	29.3	36.3	2.4	25.4	29.0	1.5

- 주: 1) 간호사 수는 일반병·의원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 기준임.
 2) 의료기관은 일반병·의원을 대상으로 함. '300병상 이상'은 상급 및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며, '300병상 미만'은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및 병원임.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이며, '비수도권'은 그 외 시도임.
 4) 인구는 각 연도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그림 Ⅲ-25] 시도 및 의료기관 유형별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 수,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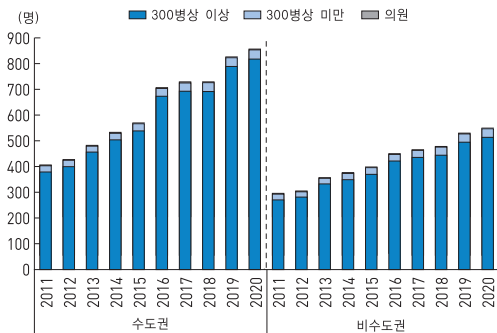
- 주: 1) 일반병·의원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 기준임.
 2) 의료기관은 일반병·의원을 대상으로 함. '300병상 이상'은 상급 및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며, '300병상 미만'은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및 병원임.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이며, '비수도권'은 그 외 시도임.
 4) 인구는 각 연도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22.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역시 300병상 이상의 기관당 간호사 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300병상 이상의 기관당 간호사 수는 2020년 기준 수도권 816.5명, 비수도권 512.7명으로 수도권이 1.6배 더 많다(그림 Ⅲ-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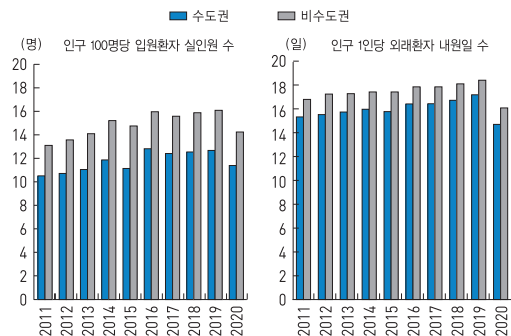
[그림 Ⅲ-26]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기관당 간호사 수, 2011-2020



주: 1) 일반병·의원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 기준임.
 2) 의료기관은 일반병·의원을 대상으로 함. '300병상 이상'은 상급 및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며, '300병상 미만'은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및 병원임.
 3)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이며, '비수도권'은 그 외 시도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많았다. 외래환자 내원일 수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 인구 1인당 15.4일이었으며, 수도권 14.7일, 비수도권 16.1일로 비수도권의 외래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27).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입원과 외래 모두 지속적인 증가추세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이용량의 차이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Ⅲ-27]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인구 100명당 입원 환자 실인원 수 및 인구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 수, 2011-2020



주: 1) 지역은 환자의 거주지 기준임.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이며, '비수도권'은 그 외 시도임.
 2) 인구는 각 연도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출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각 연도

지역 간 의료이용 불균형

의료이용량

지역별 의료이용량을 건강보험 급여실적을 통해 살펴보면, 입원환자 실인원 수는 2020년 기준 인구 100명당 12.8명이었으며, 수도권 11.4명, 비수도권 14.2명으로 비수도권의 입원환자가 더

입원 횟수는 대표적인 공급민감 서비스로 분류되며, 의학적 근거나 임상적 이론과 무관하게 자원공급량에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병상공급이 많으면 입원이용이 많다는 것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입원 병상수와 입원환자 실인원 수의 경향을 살펴보면 유사성이 관찰된다.

예방가능 입원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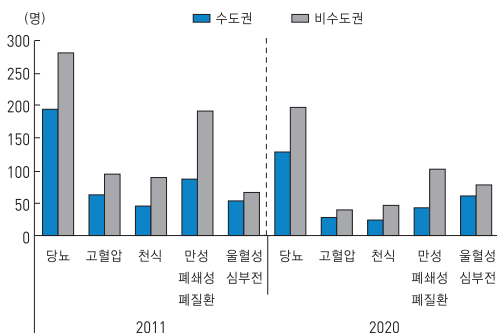
예방가능 입원환자 수는 양질의 외래 의료를 통해 입원의 위험이 감소되는 질환인 당뇨, 고혈압,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울혈성 심부전(CHF; Congestive Heart Failure) 등으로 인한 입원환자 수를 성 및 연령 보정을 통해 산출하는 대표적인 의료 질 평가지표이다. [그림 Ⅲ-28]의 질환별 인구 10만 명당 예방가능 입원환자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수도권은 당뇨 128.7명, 고혈압 28.6명, 천식 24.5명, 만성폐쇄성폐질환 44.6명, 울혈성 심부전 62.1명이었으며, 비수도권은 당뇨 197.7명, 고혈압 41.3명, 천식 47.6명, 만성폐쇄성폐질환 102.9명, 울혈성 심부전 79.2명으로 나타나 질환에 무관하게 비수도권이 예방가능 입원환자 수

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의원 수는 적고 병상 공급은 많았는데, 일차의료 분야에서의 불충분한 외래서비스와 병상 과잉공급이 비수도권에서 예방가능 입원환자 수가 많은 것과 연계될 수 있다. 다만, 연도별로는 전반적으로 예방가능 입원환자 수가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고난이도 입원환자 수

입원환자 중 질병의 난이도가 높은 환자 비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환자 구성비를 살펴보았다. [그림 Ⅲ-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기준

[그림 Ⅲ-28]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질환별 인구 10만 명당 예방가능 입원환자 수, 2011,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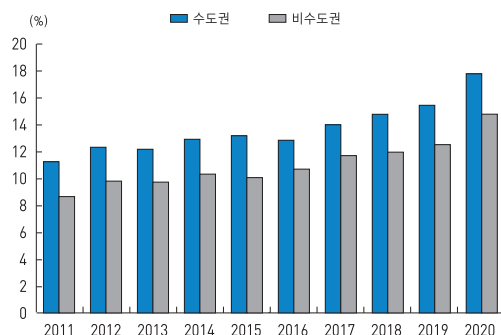
주: 1) 예방가능 입원환자 수는 양질의 외래 의료를 통해 입원의 위험이 감소되는 질환(당뇨, 고혈압,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울혈성 심부전 등)으로 입원한 환자 수를 성 및 연령 보정한 값임.

2) 지역은 환자 거주지 기준임.

3) 인구는 각 연도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그림 Ⅲ-29]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입원환자 중 전문질병군 환자 비율, 2011-2020



주: 1) 전문질병군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의 진단을 받은 환자임.

2) 지역은 환자 거주지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수도권 거주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질병군 환자의 비율은 17.7%, 비수도권은 14.8%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11년 이후 전문질병군 환자 구성비가 증가 추세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율의 격차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입원환자 수는 많지만, 난이도가 높은 환자의 비율은 높지 않은 데, 비수도권에 입원환자 수가 많은 것은 난이도가 높은 환자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입원환자 자체충족률

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은 지역 주민 전체 입원 환자 수 중에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입원환자 수의 비율이다. 자체충족률이 높으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환자가 적은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자체충족률이 낮으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환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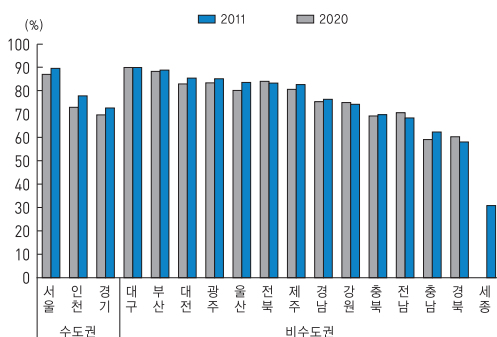
과 2020년 사이 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의 연도별 변화는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편차가 존재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72.8~89.6%, 비수도권의 경우 30.9~89.8%로 차이를 나타내었다(그림 Ⅲ-30). 다만 시도별 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을 시도별 의료기관 수와 비교하면 반드시 의료기관 수가 많은 시도가 자체충족률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맺음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은 지역 간, 의료기관 유형 간 불균형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가 존재하였고 지난 10년간 그 차이가 유지되는 경향이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시도별로도 존재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부족한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반진료를 민간에 일임하는 의료체제를 받아들였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이후 의료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민간의 시설 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에 반해 의료기관의 불균형 분포를 막기 위한 ‘지역별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에 대한 규칙’,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 승인제’ 등과 같은 규제는 모두 해제하였다. 또한 외국의 경우 의료시설에 대한 공공계획에 따라 병원의 설립이 결정되는 반면, 우리나라

[그림 Ⅲ-30] 시도별 입원환자 자체충족률, 2011, 2020



주: 1) 입원환자 자체충족률 = (해당 시도 이용 입원환자 수 ÷ 해당 시도 주민 전체 입원환자 수) × 100.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2017, 2022.

라는 의료자원의 공급과 분포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계획이 없었다. 즉, 현재 의료시설의 공급과 분포는 사실상 민간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의료인력의 분포도 의료시설의 분포에 따라 결정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 수는 전반적인 증가 경향을 나타내는 가운데, 비교적 신규 설립이 용이한 중소형 병원과 의원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소형 병원은 규모의 경제를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을 감축하거나,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고, 필수 진료 과목을 갖추기 어려워 지역주민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에서도 확인되는데, 주로 중소형 병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수도권이 기관 수와 병상수는 더 많았지만 의사 수와 간호사 수가 적었다. 또한 예방가능 입원환자 수를 비롯한 질병의 난이도가 낮은 환자 수가 더 많았지만 지역의 자체충족률이 나아졌는지는 불확실하였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접근성은 지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최상의 건강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

적, 조직적, 사회적 측면 등 복합적인 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가령 지리적 접근성만을 고려하여 병원이 건립되어야 한다면, 병원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병원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야 하며, 이때 각 병원은 필수요료를 포함한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병원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를 갖추어야 하는데, 시설만 아니라 인력, 장비가 분산되는 것보다는 집중되는 것이 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는 선택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고, 기관 수와 병상수가 비수도권에서 더 많다. 그럼에도 비수도권의 의료접근성이 으레 더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공급구조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의 불균형은 세분화된 분야별로 그 양상과 추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서비스 유형별로 그 특성과 다루어야 할 지역의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분야별 불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복지70년사편찬위원회. 2015. 「보건복지 70년사」. 보건복지부.
 경향신문. 1983.11.22. “균형된 지역개발계획”. 「경향신문」, 2면.
 신영수 외. 2013. 「의료관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OECD. 2023. *OECD Health Statistics 2023*. <https://www.oecd.org/health/health-data.htm>

한국의 자살 추이와 대응

이유리 (명지전문대학)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4년간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며, 성, 연령,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다.
-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등 자살 관련 행동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으며, 자살 관련 행동과 정신장애 사이에도 큰 연관성이 있지만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낮다.
-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적 감소 추세와 달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5~19세가 눈에 띄게 상승하였으며, 자살시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여 2027년까지 자살률 30% 감소를 목표로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자살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자살 현황과 주요 변화를 자살률, 자살행동, 청소년 자살, 자살예방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난 수년 동안 한국의 자살 추세를 통해 자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자살 관련 행동 패턴, 자살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들을 검토한다. 셋째,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자살률 및 자살시도율의 변화 추세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자살예방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망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살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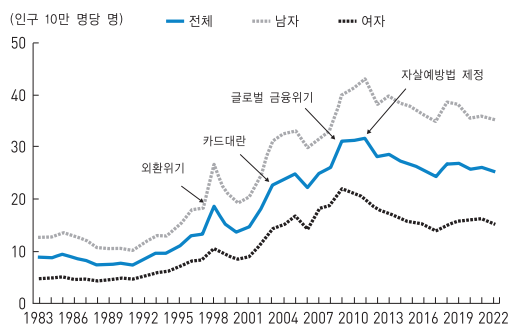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자살은 10대부터 30대 연령층의 주요 사망원인이다.

2022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2,906명으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이다. [그림 Ⅲ-31]의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1983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사회적 이슈와 경제 위기에 따라 변동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2003년 카드대란 사태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더욱 증가하여 2011년 31.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약칭: 자살예방법)이 제정되고 국가적인 자살예방정책이 강화되면서 자살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다 2020년부터는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른 자살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1997년까지는 성별에 따른 자살률 차이가 인구

10만 명당 5.6~9.9명으로 비교적 낮았는데, 1998년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보다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상 더 높아졌으며 2022년에는 20.2명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Ⅲ-31).

[그림 Ⅲ-31] 성별 자살률, 198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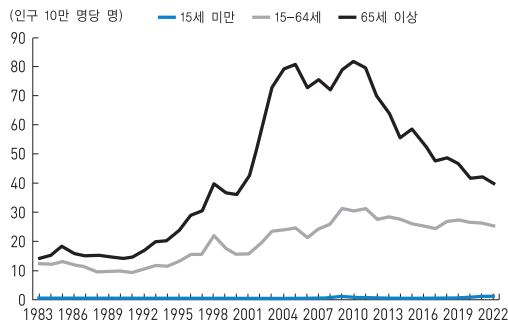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그림 Ⅲ-32]의 연령집단별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1983년부터 2022년까지 15세 미만의 자살률은 큰 변화가 없고 15~64세의 자살률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편이다. 연령을 10세 간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2년 기준 80대 이상의 자살률은 60.6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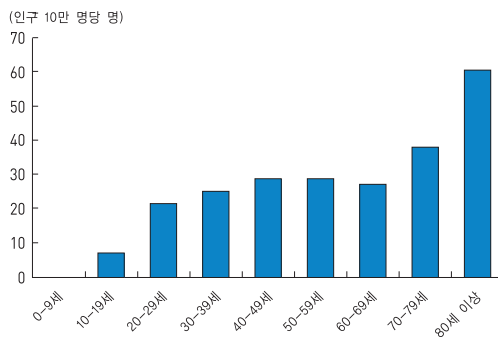
참고로 연령대별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대 42.3%, 20대 50.6%, 30대 37.9%로 이들 연령대에서 자살이 사망원인 순위 1위를 차지하였다. 40대와 50대에서도 자살의

[그림 Ⅲ-32] 연령별 자살률, 1983-2022

1) 자살률 추이, 1983-2022



2) 연령대별 자살률,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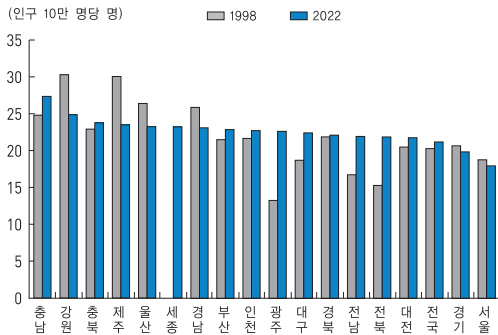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비율이 높은 편으로 40대는 20.2%, 50대는 9.4%이다. [그림 Ⅲ-33]의 지역별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충남이 27.4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과 경기도 각각 17.9명과 19.8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자살률을 보였다. 1998~2022년 기간에 시도별 자살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광주가 1998년 대비 69.9% 증가해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반면 제주는 1998년 대비 21.9%로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이는 시간에 따라 지역별로 자살률 변동이 있음을 보여준다.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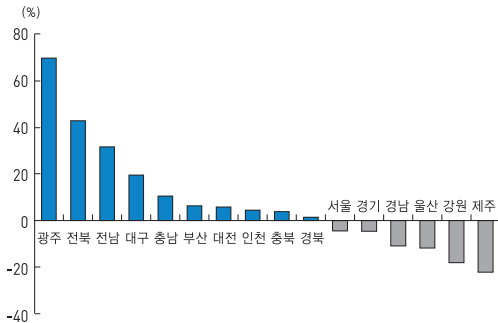
역별 자살률의 차이나 변화량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중요한 원인이다.

[그림 Ⅲ-33] 시도별 연령표준화 자살률, 1998, 2022

1) 자살률



2) 1998년 대비 2022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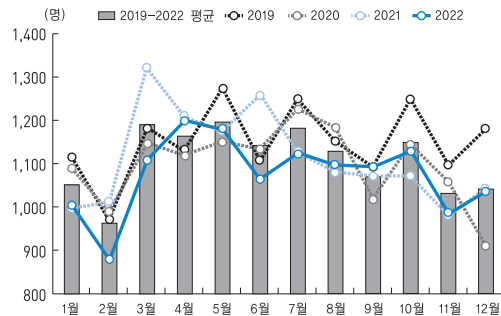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99, 2023.

한편, 2022년 월별 자살자 수를 보면, 4월(1,198명, 9.3%)과 5월(1,181명, 9.2%)순으로 많았으며, 2월(879명, 6.8%)에 가장 적었다. 최근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별 평균 자살자 수를 보면 5월, 3월, 7월, 4월 순으로 많고, 2월, 11월, 12월, 1월은 적었다. 상대적으로 봄과 여름

의 자살자 수가 많고 겨울의 자살자 수가 적은 양상을 보인다(그림 Ⅲ-34). 2019년의 경우 10~12월 자살자 수가 급증했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였다. 2019년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에서도 20대 여성이 1~9월 평균 25명에서 10~12월 평균 43.7명으로 10~12월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유명인을 모방한 자살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일별 자살 사망 빈도는 월요일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요일 자살 확률은 감소하고 10~20대 젊은 층에선 자살에 대한 요일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Kim, E. et al., 2019).

[그림 Ⅲ-34] 월별 자살자 수, 2019-2022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2021년을 기준으로 직업별 자살자 수는 학생과 가사, 무직이 6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봐도 모든 연령대에서 학생과 가사, 무직의 자살 비율이 높았다. 자살 수단은 목매기가 49.3%로 가장 높았

고, 자살 사망장소는 주택이 41.7%로 가장 많다(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2021년 경찰청 변사자통계의 동기별 자살 현황을 살펴보면,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39.8%로 가장 많았고, 경제생활 문제가 24.2%, 육체적 질병 문제가 17.7%, 가정 문제가 6.7%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가 3.8%, 남녀 문제가 2.1%, 사별 문제가 0.9%로 자살 동기 분포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동기별 자살 비율을 보면 남녀 모두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경제생활 문제,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이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자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남녀 문제로 인한 자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10~20대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30~50대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와 경제생활 문제가 각각 30% 이상으로 많았으며, 50대의 경우 육체적 질병 문제도 40대 이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60대 이상은 육체적 질병 문제,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자살 관련 행동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중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한 사람의 비율은 10.7%로, 남자는 9.4%, 여자는 12.0%였다. 자살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자살계획)을 세운 사람의 비율은 2.5%로, 남자 2.1%, 여자 2.8%였다. 실제로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의 비율은 1.7%로, 남녀 각각 1.6%, 1.9%였다. 이 결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자살 관련 생각이나 계획을 가질 비율이 높음을 보여준다(표 Ⅲ-8).

〈표 Ⅲ-8〉 성인 남녀의 자살 관련 행동별 경험률, 2021

	전체	남자	여자
평생 경험률			
자살생각	10.7	9.4	12.0
자살계획	2.5	2.1	2.8
자살시도	1.7	1.6	1.9
1년 경험률			
자살생각	1.3	1.0	1.7
자살계획	0.5	0.3	0.7
자살시도	0.1	0.1	0.1
1개월 경험률			
자살생각	0.5	0.2	0.9
자살계획	0.3	0.1	0.5
자살시도	0.0	0.0	-

주: 1) 전국 만 18~7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경험률은 해당 기간(평생, 1년, 1개월)에 해당 자살 관련 행동을 한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3) 자살생각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임.

4) 자살계획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넘어서 자살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임.

5) 자살시도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시도를 했던 경우임.

출처: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보고서」, 2021.

1년 동안 자살생각을 한 사람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결혼상태별로는 남자의 경우 이혼·별거·사별일 때 자살생각 비율이 높았고, 여자는 기혼·사실혼·동거일 때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1.9%, 대졸 1.0%, 중졸 이하 0.6% 순이었고, 취업상태별로는 무직·학생·주부의 경우 2.4%, 비정규직 1.4%, 정규직 0.7%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살생각과 자살계획 비율이 높아지고, 무직·학생·주부인 경우 높은 자살생각과 자살계획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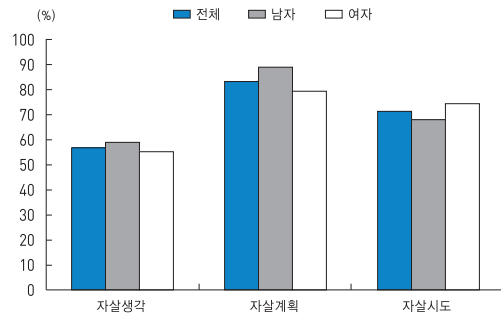
자살 관련 행동 대상자(평생 동안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를 한 사람) 중에서 불안장애, 우울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정신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자살생각이 56.8%, 자살계획이 83.3%, 자살시도가 71.3%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정신장애를 경험한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자살시도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정신장애를 경험한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정신장애 유형을 보면, 모든 자살 관련 행동 대상자에서 우울장애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그림 Ⅲ-35).

자살을 시도한 경우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자살 시도의 직접적인 동기는 스트레스(70.4%)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정신장애(우울장애)가 25.5%, 급격한 정서적 흥분이 4.1% 순이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은 가족·친구·이성·직장 등 대인관계의 스트레스와 갈등이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문제나 학교와 직장 관련 요인인 성적·입시·취업·승진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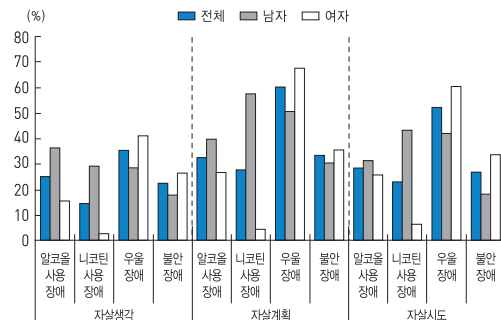
평생 동안 정신장애를 진단받은 사람들 중에

[그림 Ⅲ-35] 성별 자살 관련 행동 대상자의 정신장애 경험 비율(평생), 2021

1) 정신장애 전체



2) 정신장애 유형별



주: 1) 전국 만 18~7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정신장애 전체 통계치는 평생 동안 자살 관련 행동(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을 한 사람 중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정신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고, 유형별 통계치는 해당 정신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3) 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장애로,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특정 공포증, 분리불안 장애 등의 진단이 포함됨.

4) 우울장애는 주요우울장애와 기분부전장애를 합친 진단군임.

5) 니코틴 사용장애는 니코틴금단과 니코틴의존을 포함하는 장애임.

6) 알코올 사용장애는 알코올남용과 알코올의존을 포함하는 장애임.

출처: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보고서」, 2021.

서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4.4%이며, 지난 1년 동안 정신장애로 진단

받은 사람들 중 7.2%만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자살시도자 중 정신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이 많은 반면 실제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적다.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 처음 전문가에게 상담한 문제 중 가장 많은 비율은 우울증(10.2%)으로 나타났다으며, 자살과 관련된 문제로 처음 상담한 비율은 1.3%이다. 자살시도자 중에서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 많음에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서비스 접근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접수한 환자들의 진료 정보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자료 분석 결과, 응급실로 내원한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총 3만 6,754건으로 남자 1만 3,620건(37.1%)과 여자 2만 3,134건(62.9%)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 1.7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자해·자살 시도가 1만 487건(28.5%)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10대 5,879건(16.0%), 30대 5,266건(14.3%), 40대 5,107건(13.9%) 순으로 자해·자살 시도가 발생하였다(표 Ⅲ-9). 시도별 자해·자살 시도 비율은 경기 26.0%, 서울 19.3% 순으로 높았으며, 그 외의 지역은 모두 10% 미만의 비율을 차지했다. 수도권에 인구가 많고 응급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수도권의 자해·자살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Ⅲ-9〉의 응급진료결과를 살펴보면, 귀가 전체의 65.1%로 가장 많고, 입원은 26.6%, 전원은 3.3%, 사망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최종 진료결과는 퇴원이 전체의 87.5%로 가장 많았고, 전원은 5.8%, 사망은 5.4%이다.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들 중 대다수가 귀가나 퇴원하여 일상 생활로 돌아간다. 그러나 자살시도자의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와 조기 퇴원으로 환자의 회복을 도모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Ⅲ-9〉 자해·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건수와 진료결과, 2022

	구분	건수(건)	비율(%)
자해·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건수	10대 미만	15	0.0
	10대	5,879	16.0
	20대	10,487	28.5
	30대	5,266	14.3
	40대	5,107	13.9
	50대	4,156	11.3
	60대	2,567	7.0
	70대	1,708	4.6
	80대 이상	1,569	4.3
응급 진료 결과	귀가	23,916	65.1
	입원	9,788	26.6
	전원	1,198	3.3
	사망	1,486	4.0
	기타	366	1.0
최종 진료 결과	퇴원	32,170	87.5
	전원	2,131	5.8
	사망	1,984	5.4
	기타	469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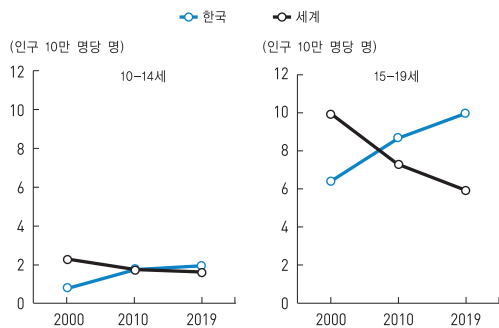
주: 1) 응급 및 최종 진료결과의 기타에는 기타, 가망 없는 퇴실, 미상/미입력 등을 포함하였음.

출처: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2022 응급의료 통계연보」, 2023.

청소년 자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적으로 10~14세 및 15~19세 청소년 자살률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0년에는 10~14세에서 인구 10만 명당 2.3명, 15~19세에서 9.9명으로 기록되었으나, 2019년에는 각각 1.6명과 5.9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0년 10~14세 0.8명, 15~19세 6.4명으로 시작하여 2019년 각각 1.9명과 9.9명으로 상승하였다(그림 Ⅲ-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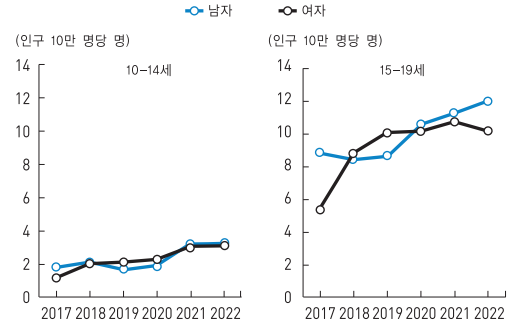
[그림 Ⅲ-36] 한국과 세계 청소년의 자살률, 2000-2019



출처: UNICEF, "Suicide mortality rates", UNICEF Data (<https://data.unicef.org>), 2023. 8.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남자와 여자 청소년의 자살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0~14세 여자 청소년의 자살률은 2017년의 1.2명에서 2022년에는 3.2명으로 거의 세 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 15~19세 여자 청소년 자살률도 2017년의 5.4명에서 2022년에

[그림 Ⅲ-37] 청소년의 성별 자살률, 2017-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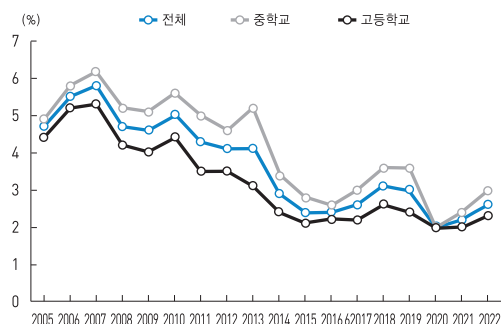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는 10.2명으로 두 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그림 Ⅲ-37).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중학생들의 자살시도율이 고등학생들보다 높았으며, 두 학교급 모두 2007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4년부터 청소년 자살시도율이 크게 감소하여 2020년에는 모든 학교급에서 2.0명으로 동일하게 낮아졌으나, 2022년에 다시 약간 상승하여 중학교에서 3.0명, 고등학교에서 2.3명을 기록했다(그림 Ⅲ-38).

2022년 청소년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자살 시도율에는 차이가 있었다. 중학교 1~3학년에서는 여학생들의 자살시도율이 3.9%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남학생들은 2.0%에서 2.3% 범위에서 조금씩 변동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학년별로 여학생들의 자살시도율이 2.6%에서 3.0% 사이로 변동하였으며, 남학생들은 1.4%에서 2.0% 사이에서 변화하였다(그림 Ⅲ-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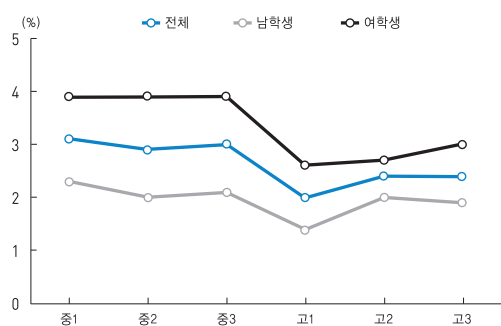
[그림 Ⅲ-38] 청소년의 학교급별 자살시도율, 2005-2022



주: 1) 자살시도율은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임.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각 연도.

[그림 Ⅲ-39] 청소년의 학년 및 성별 자살시도율, 2022



주: 1) 자살시도율은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임.

출처: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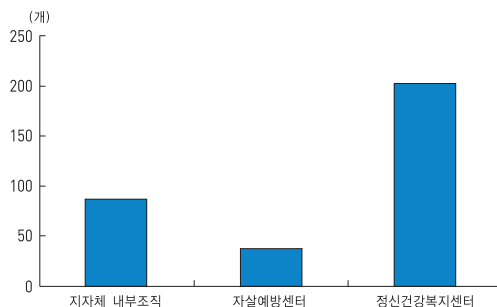
자살예방 활동

2004년 이후 한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자살예방 대책을 강화하였으며, 2011년에 자살예방법을 제정하여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한국생명존중희망

재단은 자살예방정책, 자료 개발, 자살자 및 유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에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교육 및 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229개 지자체 중 88.2%는 외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38.0%는 지자체 내부에서, 그리고 16.6%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 강화가 자살예방에 중요하며, 일부 지자체는 비용 보조를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도 한다(그림 Ⅲ-40).

[그림 Ⅲ-40] 지역단위 자살예방 조직 현황, 2021



출처: 국회자살예방포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202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활동 실태조사: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2022.

2023년 보건복지부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감소시키는 목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2027년까지 17개 시·도에 조성할 계획이며, 자살시도자 및 유족의 개입률도 2021년 6%에서 2027년에는 40%로 늘릴



방침이다. 주요 전략으로는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 및 자살예방의 효율적 추진기반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고위험군의 집중관리와 지역별 맞춤형 자살예방정책을 통해 사후 대응체계와 인프라를 구축·강화하고자 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2013년부터 전국민 대상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법을 기반으로 ‘보고 듣고 말하기 2.0’과 같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지속적인 자살률 상승과 청소년의 높

은 자살행동 비율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지난 수년간 구축된 자살 예방정책과 그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은 사회 전체의 관심과 투자가 더욱 필요함을 의미한다.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자살예방은 단순한 정책적 접근을 넘어 다양한 분야와 계층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자살예방 중재 전략의 효과성을 철저히 평가하고, 그 근거에 기반을 두어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살예방대책을 세우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2023년 자살예방백서」.

Kim, E., Cho, S. E., Na, K. S., Jung, H. Y., Lee, K. J., Cho, S. J., & Han, D. G. (2019). Blue Monday is real for suicide: a case-control study of 188,601 suicide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9(2), 393-400.



Korean Social Trends 2023

한국의 사회동향 2023





Education & Training

Korean Social Trends 2023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V 교육 · 훈련

교육 · 훈련 영역의 주요 동향 송수연 차의과학대학교	114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 노일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30

교육·훈련 영역의 주요 동향

송수연 (차의과학대학교)

-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대학 연구개발비 비율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만족도 조사결과 전년 대비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등교육기관의 계열별 융합학과 개설 관련하여 그동안 공학계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로 융합학과가 개설되었던 반면, 이러한 경향은 차츰 인문·사회계열이나 예체능계열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우리나라의 교육단계별 임금 격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이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었다.

교육·훈련 분야는 한 사회의 지속적인 사회발전 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한 개인으로서의 성장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영역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은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루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교육열은 한국사회에서 교육의 역할이 얼마나 막대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오늘

날 한국의 교육문제는 고질적인 늪에 빠져 교육 영역을 넘어 정치, 사회, 경제 등 사회 전반과 관련되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고,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지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교육·훈련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막중한 임무와 과제를 안고 있다. 학령기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들 모두가 미래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미래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2023년 한국의 교육·훈련 영역의 주요 동향을 교육의 투입(input)-과정(process)-산출(output) 모델을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교육기본통계」, 「성인문해 능력조사」, 「교육기관 졸업자취업통계」 등의 국가승인통계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승인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내용상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통계 자료의 경우 교육부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각종 보고서 및 연구자료를 활용하였다.

교육·훈련의 투입은 교육 여건 및 환경, 인적 자원, 교육재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우선 교육 여건 및 환경에서는 교원 1인당 학



생 수, 학교에서의 디지털기기 접근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 수 등의 추이를 분석하고, 인적자원 관련하여 교육단계별 석사 이상 교원의 비율과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알아본다. 교육재정 측면으로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의 추이를 다룬다. 다음으로 교육·훈련의 과정에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관련하여 중등교육에서의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시행 및 고등교육기관의 융합학과 개설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원격교육과 관련하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케이무크(K-MOOC)’의 학습자 이용 건수 추이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의 산출은 교육이수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교육단계별 취학률, 고등교육단계별 이수율, 교육단계별 학업중단율을 알아보며, 교육성과로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2018의 국제비교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사회적 성과로 「성인문해 능력조사」 결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의 국제비교 분석 결과를 살펴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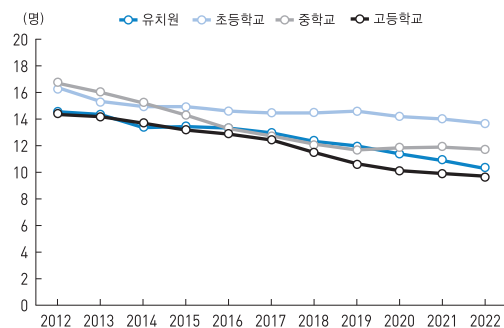
교육·훈련의 투입

교육 여건 및 환경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육의 여건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일반적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교육여건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1990년대 이후 유·초·중등교육 단계에서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학령인구의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 등이 맞물려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V-1]은 지난 10여 년간 교육단계별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4.5명에서 10.3명, 초등학교 16.3에서 13.7명, 중학교 16.7명에서 11.7명, 고등학교 14.4명에서 9.6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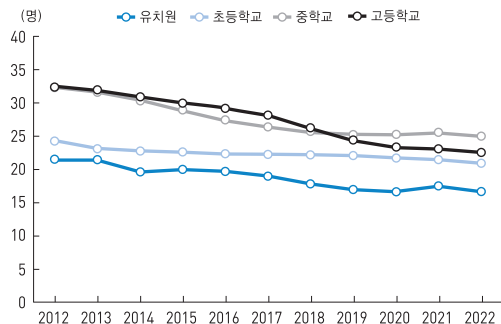
[그림 IV-1] 교육단계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2-2022



주: 1) 교원 1인당 학생 수=재적학생 수÷교원 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학급당 학생 수 또한 교육여건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쓰이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2010년 이후의 교육단계별 학급당 학생 수는 유·초·중등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2년 기준 유치원 16.7명,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5.0명, 고등학교 2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2).

[그림 IV-2] 교육단계별 학급당 학생 수, 2012~2022



주: 1) 학급당 학생 수 = 학생 수 ÷ 편성학급 수. 단, 2020년 이전 자료는 인가학급 수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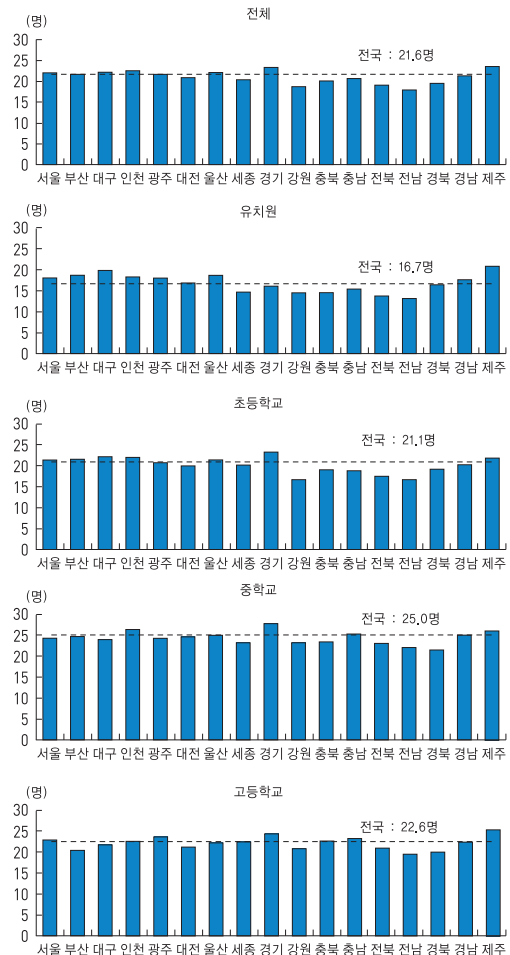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그림 IV-3]은 2022년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를 나타낸다. 학급당 학생 수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남이 17.9명으로 가장 낮았고, 경기와 제주가 23.4명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유·초등교육과 고등학교에서는 모두 전남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과정 속에서 교육기관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학교의 디지털기기 총 대수는 2018년 177만 8,014대에서 2022년 295만 4,631대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학생 1인당 디지털 기기 보유 대수는 2018년 0.16대에서 2019년 0.13대로 약간 감소하다가 2022년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그림 IV-4).

디지털 기기 접근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은 OECD 평균과 비교하여 데스크톱 컴퓨터(63.2%), 인터넷

[그림 IV-3]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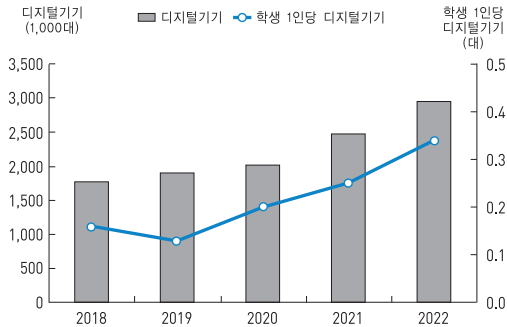
주: 1) 학급당 학생 수 = 학생 수 ÷ 편성학급 수.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2022.

연결된 컴퓨터(73.4%), USB(38.8%), 전자책 리더기(11.8%)의 접근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노트북(31.5%), 태블릿 PC(22.0%), 무선인터넷(44.7%), 학교자료 저장공간(49.0%), 발표를 위한 프로젝터(54.0%), 전자칠판(22.4%)의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가장 차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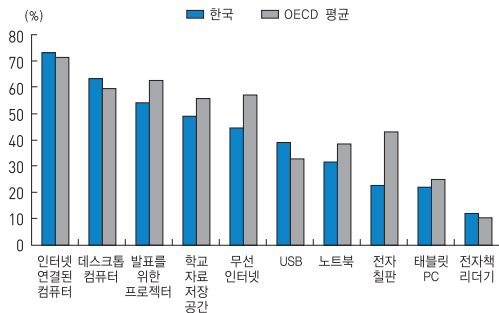


[그림 IV-4] 초·중·고 학교 디지털 기기 보유 대수, 2018-2022



주: 1) 디지털 기기에는 데스크톱 PC,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포함.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년 초·중·고등학교 교육정보화 실태 조사 분석」, 20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 교육 인프라 및 학생 디지털 역량 현황」, 2022, 2023.

[그림 IV-5] 한국과 OECD의 학교에서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2018



주: 1) 디지털 기기 접근성은 각 항목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OECD PISA 2018을 통해 본 한국의 교육 정보화 수준과 시사점」, 2020.

많이 나는 기기는 전자칠판으로 OECD 평균보다 20.7%p 낮았다(그림 IV-5).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학벌주의와 얽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교육부·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으로 전년도(약 23조 4천억 원)와 비교하여 약 2조 5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 참여학생 기준으로는 52만 4천 원으로 2021년 대비 각각 11.8%, 7.9% 증가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 중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전체 학생 기준 49만 1천 원, 참여학생 기준 70만 6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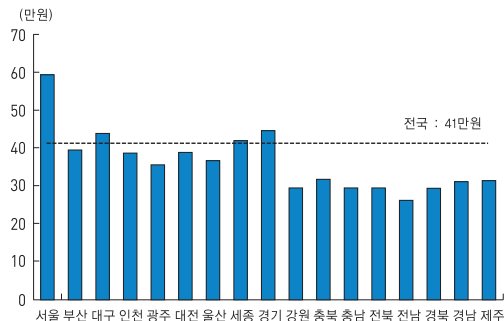
[그림 IV-6]은 2022년 지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이다. 전체 학생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59만 6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와 대구가 뒤를 이었다.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84.3%), 경기(82.1%), 세종(8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생교육은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25년 한국의 2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평생교육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우리나라 성인(만 25~79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8.5%로 2021년 30.7% 대비 2.2%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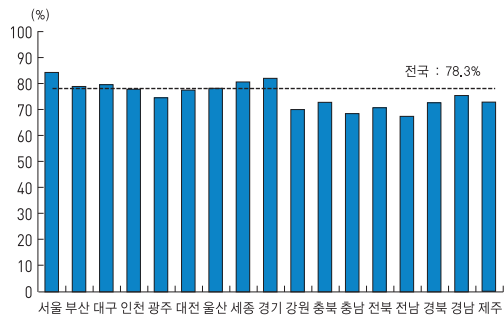
[그림 IV-7]은 지난 10년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와 학습자 수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코로나19 발생과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IV-6] 지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2022

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 사교육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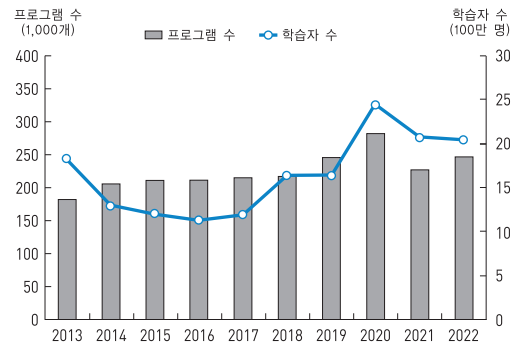


주: 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사교육을 받지 않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균금액임.

2)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학생 중 사교육비를 지출한 참여학생의 비율임.
출처: 교육부·통계청,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2022.

가 2021년 감소세를 보인 후 2022년에 소폭 증가하였다. 평생교육에 참여한 학습자 수는 지난 10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코로나19의 대유행과 함께 2020년 대폭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2022년 평생교육에 참여한 학습자 수는 2,043만 8,197명으로 2021년 2,067만 7,768명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IV-7]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자 수, 2013-2022



주: 1)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현황임.

2) 학습자수는 프로그램별 중복 학습자를 각각 학습자로 간주하여 합산한 것임(정확한 의미에서는 프로그램 등록건수임).

3) 프로그램수는 조사기준일 사이에 운영된 집계치임(1년 미만 프로그램도 포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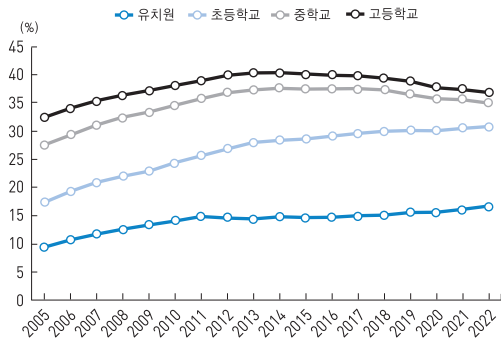
인적자원

교사의 전문성은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다. 교사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표로서 교사의 학력 수준은 교육과정의 이해와 교육 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V-8]은 2005년 이후 교육단계별 석사 학력 이상 교원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석사 학력 이상을 소지한 교원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초등학교는 다른 교육단계와 비교하였을 때 석사 학력 이상 교원의 비율이 2005년 17.4%에서 2022년 30.8%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는 2005년 27.5%에서 2022년 35.0%로



7.5%p 높아졌으며, 고등학교는 2005년 32.3% 대비 2022년 36.9%로 4.6%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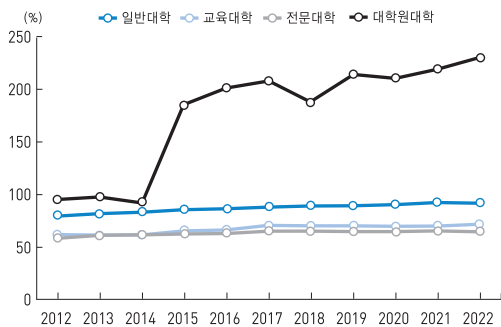
[그림 IV-8] 교육단계별 석사학력 이상 교원 비율, 2005-2022



주: 1) 교원 수에는 정규 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과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며, 강사 및 퇴직 교원은 제외됨(단, 휴직 교원은 포함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치·초·중등 교육통계편」, 2022.

[그림 IV-9] 고등교육기관별 전임교원 확보율, 2012-2022



주: 1)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수 ÷ 교원법정정원) × 100. 교원법정정원은 편제 기준임.

2) 전임교원 수에는 총(학)장과 소속학과가 없는 전임교원이 제외됨.

3) 대학부설 대학원의 전임교원 및 재학생 수는 학부에 포함됨.

4) 폐교의 현황은 제외됨.

5) 2013년 이전의 교육대학 교원법정정원은 변경된 기준(2013년)을 적용하여 산출함.

6) 2022년 전임교원 확보율 산출 시 결손인원 및 편입학여석 활용으로 인한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 증가분 제외.

출처: 교육부,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 8.

[그림 IV-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012년 이후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 확보율도 지난 10여 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교육 대학, 대학원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71.5%와 229.9%로 전년 대비 각각 1.8%p, 11.0%p 상승하였으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 2022년 기준 91.1%, 64.5%로 전년 대비 각각 0.7%p와 0.4%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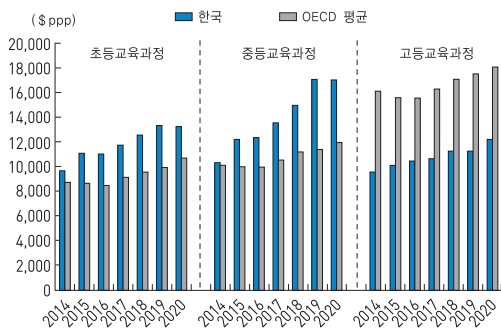
교육재정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반영함과 동시에 교육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교육 서비스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음에서는 OECD 통계를 통해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대학 연구개발비 비율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교육 분야 예산 규모 및 운용 여건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그림 IV-10]에 제시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국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경상비(인건비, 물건비)와 자본비로 산출되며 교육에 투자된 재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공교육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교육 과정 1만 3,278달러, 중등교육과정 1만 7,038달러로 각각 OECD 평균 1만 658달

리, 1만 1,942달러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2020년 기준 1만 2,225달러로 OECD 평균 1만 8,105달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0] 한국과 OECD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014-2020



주: 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교육기관 직접 지출 ÷ 학생 수) ÷ 구매력 평가지수(P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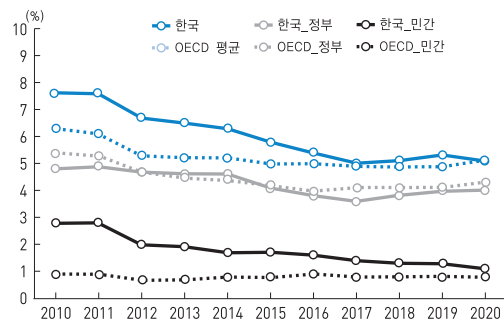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7-2023.

[그림 IV-11]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이는 한 해 동안 지출한 공교육비를 당해 연도 GDP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지표로 정부부담 공교육비와 민간부담 공교육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공교육비의 GDP 대비 비율은 2010년에서 2017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이후 다소 증가하여 2020년에는 5.1%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OECD 평균(5.1%)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자원 부담 주체별로 살펴보면, 정부재원인 경우 GDP 대비 4.0%로 OECD 평균인 4.3% 비해 낮은 반면, 민간재원은 OECD 평균에 비해 0.3%p 높은 1.1%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재원에 대한 공교육 의존도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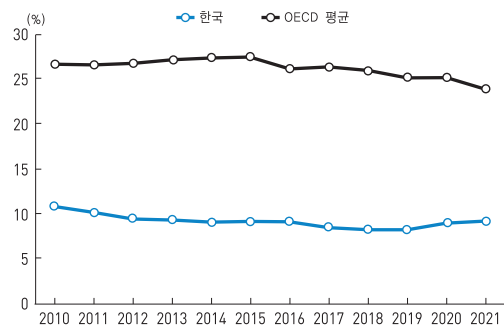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대학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IV-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010~2021년 기간에 OECD 평균은

[그림 IV-11] 정부 및 민간 부문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2010-2020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3-2023.

[그림 IV-12] 한국과 OECD의 국가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대학 연구개발비 비율, 2010-2021



주: 1) OECD의 MSTI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국내총연구개발비 (GERD) 및 고등교육연구개발비(HERD)를 활용하여 산출함 (2023년 9월 기준).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OECD.Stat, 2023.9.



2010년 26.7%에서 2021년 23.9%로 다소 낮아진 했으나 2020년 이전까지는 25% 이상을 차지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10.8%에서 차츰 감소하여 2021년 9.1%로 2021년 기준 OECD 평균에 비해 14.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 훈련의 과정

역량기반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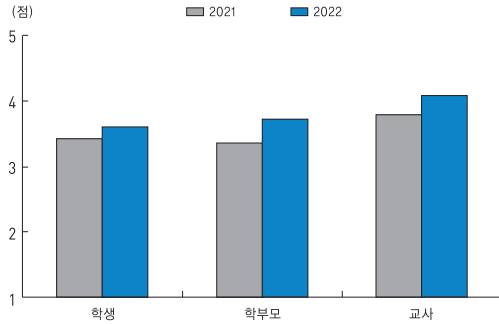
정보화 사회와 빠른 사회변화에 대비하여 역량 함양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01년 OECD가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 함양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이래, 역량은 학교 교육 개선과 관련되어 세계적으로 큰 교육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이주연 외, 2017). 우리나라에서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가 되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주도성, 창의력 등 역량을 체계화하고, 지역·학교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디지털·인공지능 기반의 교실 수업 개선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 2022).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가 부활한 것으로 기존의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와 진로연계학기의 연계로 운영된다는 것과 고교학점제가 교육과정에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는 2013년 42개교의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2016년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었으며, 자유학기제가 확대·발전된 자유학년제는 201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후 2018년 희망학교 중심으로 도입되어 2018년 전체 중학교의 46.8%인 1,503개교에서 실시하였다. 이후 점차 확대 운영되어 2021년 기준 시도를 제외한 전체 중학교의 91.1%인 2,968개교에서 시행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2022년 총 1,437개교(연구 86개교, 선도 1,351개교)에서 연구·선도학교가 운영되었다. 2023년에는 일반계고에 단계적으로 적용된 이후 2025년까지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 [그림 IV-13]은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8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학생의 만족도는 3.62점, 학부모는 3.74점, 교사는 4.10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20점, 0.38점, 0.30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V-13]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 대한 만족도, 2021-2022



주: 1)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88개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함.

2) 만족도는 5점 척도(1~5점)로 측정한 평균값임.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성과 발표회 자료집」,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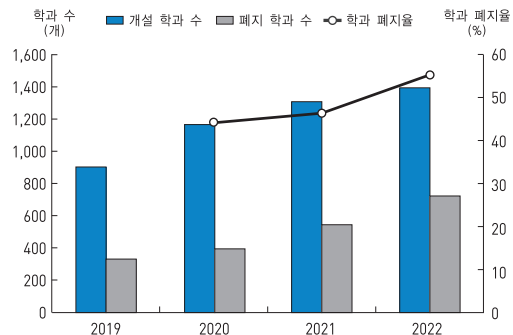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수요가 반영된 교과 개설이 확대되고 진로·학습 지도가 강화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대학에서의 융합교육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취지 아래 대학에서는 융합전공, 연계전공, 융·복합전공, 연합전공, 자기설계전공 등이 도입되면서 융합교육이 본격화되었다. 201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대학이 보다 쉽게 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융합 관련 전공 및 학과의 개설이 급증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 [그림 IV-14]는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연

도별 융합학과 개설과 폐지 현황을 보여준다. 융합학과 개설 수는 2019년 903개에서 2020년 1,170개, 2021년 1,309개, 2022년 1,392개로 꾸준히 늘어났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 29.6%, 2021년 11.9%, 2022년 6.3%로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융합학과 폐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서 2022년도로 갈수록 증가하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 18.1%, 2021년 36.2%, 2022년 33.2%로 증가세였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융합학과의 개설이 증가한 만큼 폐지율도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림 IV-14] 고등교육기관 융합학과 개설 및 폐지 학과 수, 2019-2022



주: 1) 학과 폐지율 = (해당연도 폐지 학과 수 ÷ 전년도 개설 학과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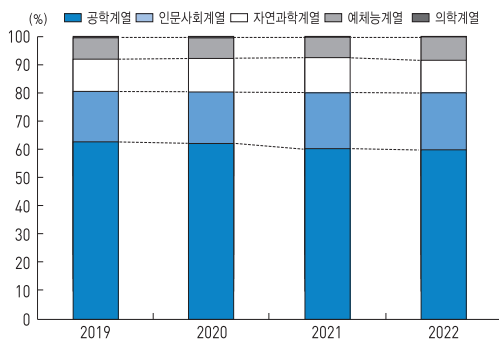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2022.

개설 융합학과의 계열별 구성을 살펴보면(그림 IV-15), 2019년에서 2022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공학계열의 경우 2019년 62.7%에서 2022년 59.9%로 조금씩 감소한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2019년 17.7%에서 2022년 20.2%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체능계열도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소폭 상승하였다. 자연과학계열이나 의학계열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기존에는 공학계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융합학과가 개설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러한 경향이 차츰 인문·사회계열이나 예체능계열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

[그림 IV-15] 고등교육기관 개설 융합학과의 계열별 구성 비율, 2019-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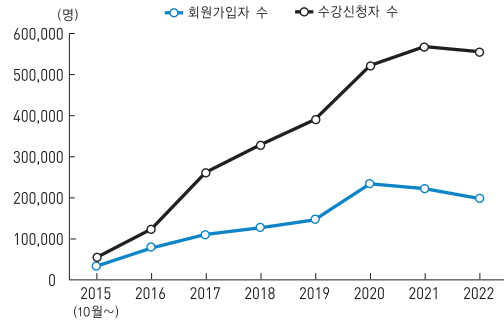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2022.

원격교육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케이무크(K-MOOC: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대학 수준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여 국민의 지식 공유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5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그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2022년 12월 기준 누적 회원 가입자 수는 116만 명, 수강 신청자 수는 281만 명을 돌파하여 학습자들의 관심

과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IV-16).

[그림 IV-16] 케이무크(K-MOOC) 회원가입자 및 수강 신청자 수, 2015-2022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2 평생교육백서」,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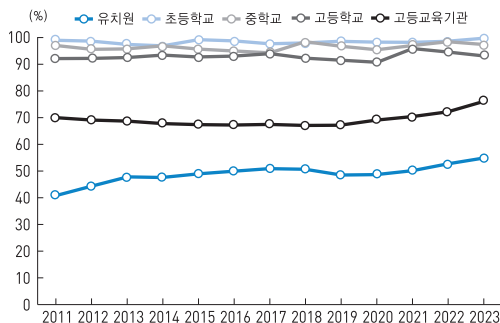
교육 · 훈련의 산출

교육이수

교육·훈련 분야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서 교육이수와 관련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겠다. 취학률은 교육기회의 충족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우리나라의 취학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상위에 속한다. [그림 IV-17]은 2011년 이후 교육단계별 취학률을 보여준다. 유치원 취학률은 2011년 41.1%에서 2023년 54.8%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2023년 현재 99.8%, 중학교 취학률을 96.9%로 완전취학 상태에 근접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3년 93.3%로 전년 대비 1.2%p 하락하였으나,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증가하였

음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2011년에서 2020년까지 60% 후반대를 기록하다가 2021년 70.2%, 2022년 71.9%, 2023년 76.2%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V-17] 교육단계별 취학률, 2011-2023



주: 1) 취학률 = (재적학생 수 ÷ 취학적령인구) × 100.

2) 교육단계별 취학적령은 유치원 만 3~5세,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 만 18~21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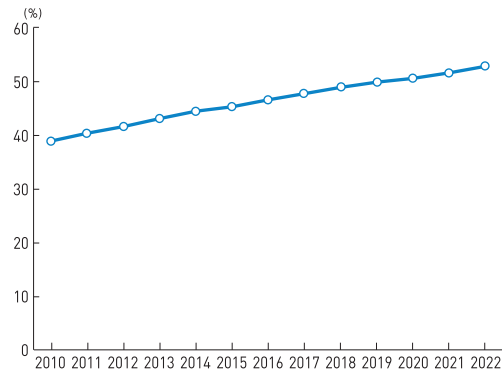
3)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각종 대학 과정 등을 포함하여 집계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

고등교육 이수율은 25~64세 인구 중 대학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2010년 이후 고등교육 이수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39.0%에서 매해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기준 52.8%를 기록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받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2022년 기준 국민의 두 명 중 한 명은 고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IV-18).

학업중단율은 전체 학생 중에서 여러 사유로 인해 제적, 중퇴, 휴학한 학생의 비율을 나타낸다. 학업중단율은 교육이수를 간접적으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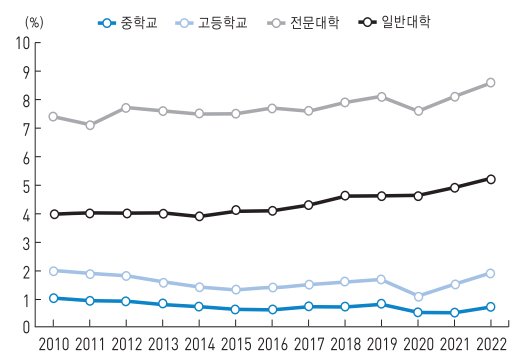
[그림 IV-18] 고등교육 이수율, 2010-2022



주: 1) 고등교육 이수율은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이수자의 비율임.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1-2023.

하는 지표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 상황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IV-1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업중단율은 전문대학, 일반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그림 IV-19] 교육단계별 학업중단율, 2010-2022



주: 1) 학업중단율은 해당 학교급별 전체 학생 중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제적, 중퇴 및 휴학한 학생의 비율임.

2) 고등교육기관의 제적학생은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등 기타 사유에 의해 학적에서 제외된 학생임.

3) 2011년부터 해외출국자(유학, 이민 등)가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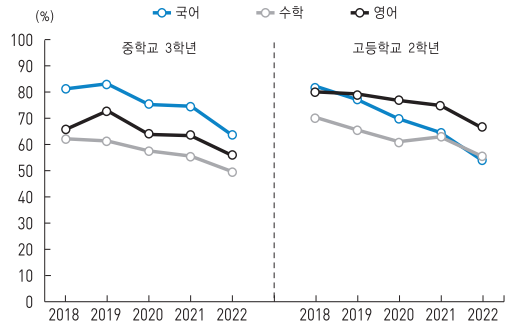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2010년과 2022년 사이 중학교의 학업중단율은 1.0%에서 0.7%로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역시 2.0%에서 1.9%로 낮아졌으나,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일반대학의 경우 10년간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5.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대학의 학업중단율은 모든 교육단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8.6%로 전년 대비 0.5%p 높아졌다.

교육성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현황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학생의 약 3%를 군집표집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

[그림 IV-20]에 제시된 교과별 성취 수준 중 '보통학력(3수준)' 이상을 성취한 학생 비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국어 63.4%, 수학 49.7%, 영어 55.9%로 2018년 시행된 평가와 비교하여 각각 17.9%p, 12.6%p, 9.9%p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의 학력 수준도 2022년과 2018년을 비교하였을 때 국어, 수학, 영어 모두 각각 27.6%p, 15.2%p, 14.1%p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20] 중·고등학생의 교과별 학업성취도, 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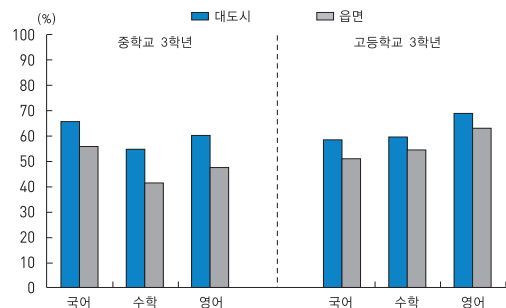


주: 1) 학업성취도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보통학력(3수준)' 이상 학생의 비율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각 연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지역 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22년 지역규모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보통학력(3수준)' 이상의 학생 비율이 읍면보다는 대도시에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V-21] 지역별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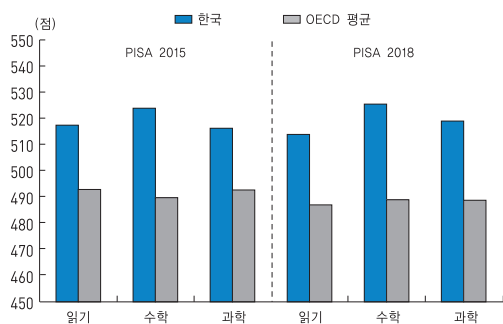


주: 1) 학업성취도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보통학력(3수준)' 이상 학생의 비율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3

반면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OECD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상위 수준의 성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2]에서 제시하고 있는 PISA 2018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기, 수학, 과학의 전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PISA 2015와 비교하여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전 영역에서 하락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학과 과학의 평균 점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2] 한국과 OECD 학생의 교과별 국제학업성취도 (PISA), 2015, 2018



주: 1) 만 15세 학생을 평가대상으로 함.

출처: OECD, PISA 2018 Results (Volume I):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2019.

2020년 실시된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문해율은 79.8%로 2017년 조사 대비 2.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1). 문해능력 '수준 1'에 해당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어려운 비문해 성인은 전체 성인의 4.5%로 약 20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표 IV-1).

〈표 IV-1〉 성인의 문해능력 수준,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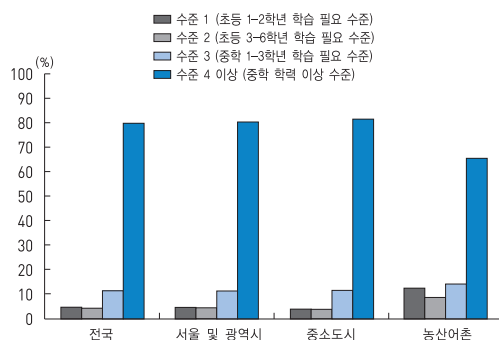
구분	수준 정의	비율 (%)	추정인구 (1,000명)
수준 1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초등 1~2학년 학습 필요 수준)	4.5	2,001
수준 2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초등 3~6학년 학습 필요 수준)	4.2	1,856
수준 3	가정 및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가능하지만, 공공 및 경제생활 등 복잡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중학 1~3학년 학습 필요 수준)	11.4	5,039
수준 4 이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중학 학력 이상 수준)	79.8	35,185
전체		100.0	44,081

주: 1)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년 성인문해능력조사」, 2021.

문해능력의 지역별 분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중학학력 이상 수준인 '수준 4'의 비율은 중소도시(81.3%), 서울 및 광역시(80.3%), 농산어촌(65.5%) 순이었으며, '수준 1'에 해당하는 비문해 비

[그림 IV-23] 지역별 문해능력 수준, 2020



주: 1)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년 성인문해능력조사」,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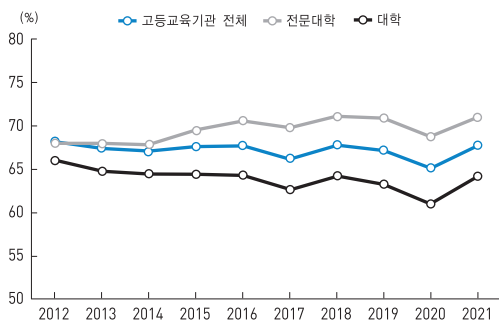


울은 서울 및 광역시나 중소도시보다 농산어촌에
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IV-23).

사회적 성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3년 만에 코
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V-24]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고등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추이를 나타낸다. 2012년
전체 취업률은 68.1%로 2014년까지 다소 감소하
다가 2016년 67.7%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후 증
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대유
행 상황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2021년 반등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체 취업률은
67.7%로 취업대상자 47만 3,342명 중 32만
685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65.1% 대비 2.6%p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IV-2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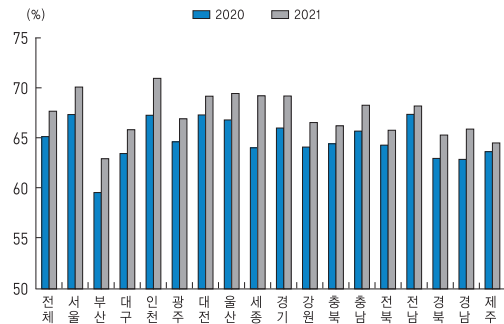
주: 1) 고등교육기관 전체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
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을 포함.

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 $\frac{((\text{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text{해외취업자} + \text{농림어업종사자} + \text{개인창업활동종사자} + \text{1인창(사)업자} + \text{프리랜서}) \div (\text{졸업자} - \text{진학자} - \text{입대자} - \text{취업불가능자} - \text{외국인유학생} - \text{제외 인정자})) \times 100}$.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각 연도.

시도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을 살펴보
면, 2021년 기준 인천이 70.9%로 가장 높은 취업
률을 보였고, 서울 70.1%, 울산 69.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취업률이 가장 큰 폭
으로 증가한 시도는 세종으로 69.2%의 취업률
을 보였으며, 2020년 64.0%보다 5.2%p 증가하
였다(그림 IV-25).

[그림 IV-25]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2020, 2021



주: 1) 시도는 고등교육기관 소재지 기준임.

2) 고등교육기관 전체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
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을 포함.

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 $\frac{((\text{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text{해외취업자} + \text{농림어업종사자} + \text{개인창업활동종사자} + \text{1인창(사)업자} + \text{프리랜서}) \div (\text{졸업자} - \text{진학자} - \text{입대자} - \text{취업불가능자} - \text{외국인유학생} - \text{제외 인정자}))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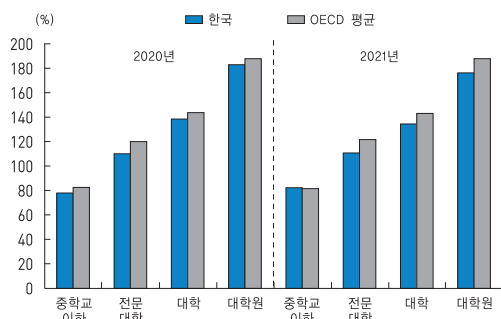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각 연도.

마지막으로, 교육단계별 임금 수준에 대한 국
제비교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은 일반적
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림 IV-26]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한
국과 OECD 평균 모두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상대적 임금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단계

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111.2%, 대학 졸업자 134.9%, 대학원 졸업자 176.6%로 전문대학 졸업자는 2020년 보다 상대적 임금의 격차가 소폭 증가한 반면,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에는 상대적 임금 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성인의 상대적 임금은 전반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21년 우리나라 성인의 중학교 이하와 대학원 졸업자 간 임금격차는 94.5%p였는데, 이는 OECD 평균의 임금격차 105.8%p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2020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103.9%p, OECD 평균은 104.6%p로 2020년과 2021년 우리나라의 교육단계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26] 한국과 OECD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2020, 2021



주: 1)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100) 대비 해당 교육단계 졸업자 임금의 비율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3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3. 9.12.

맺음말

이 글에서는 교육·훈련 영역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자 교육의 투입-과정-산출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 지표들의 변화 추이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높은 취학률, 고등교육 이수율, 학업성취에 대비하여 디지털기기 접근성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 대학 연구개발비 비율 등은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훈련 영역은 양적으로는 큰 발전을 이뤘으나, 질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훈련 분야의 현안과 성과를 점검하는 작업은 향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의 감소, 초고령사회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통해 학습 경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이 필요한 분야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새로운 환경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교육 및 훈련 분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1.9.6. 「제3차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 발표 및 문해의 달 선포식 개최」. 보도자료.
_____. 2022.12.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발표」.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정책자료,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339>
_____. 2021. “고교학점제”. 정책자료,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6513#L6>
이주연, 이근호, 이병천, 가은아. 2017. “역량기반 학교 교육과정의 실천 사례 특징 분석: 교육과정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0(1), 1-3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성과 발표회 자료집」. ORM 202307.
_____. 2023.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포털.” <https://inaea.kice.re.kr/siteMain/index.do>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 「2022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RM 2023-1-1054.

디지털 전환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

노일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우리나라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연령집단 간 격차가 큰 편이다. 특히 중·고령층의 수준이 매우 낮았다. 정보취약계층 중에서도 고령층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 디지털 정보의 이용 및 활용 수준에서 지역 간 격차도 나타났는데,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이,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수준이 낮았다. 지역 간 격차 역시 중·고령층의 효과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 연령집단 간의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는 주로 디지털 기기 및 기술 이용의 능력 차이로 인해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이해력 및 윤리적 태도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격차를 보였다.
- 개인 및 사회생활의 기본적 참여를 위해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반면, 경제, 직업, 사회생활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다.
-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터러시 연령집단 간 격차는 OECD 국가 평균보다도 큰 편이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 체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및 정보 기술은 개인, 조직,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의 활동 및 참여 양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세상을 읽고, 경험하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해당 능력의 적용 범위와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 평가하며, 소통하고, 생성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인지적, 윤리적 능력의 총합으로, 일상생활과 사회 및 직업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핵심역량으로 이해된다(UNESCO, 2018).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의 조작 및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사회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이의 변화와 해결을 추구하는 반성적이고 창조적인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길혜지·노일경, 2019; Ferrari, 2014).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의미에 기반하여 디지털 정보에의 접근, 디지털 기기 이용 및 정보 활용 능력, 디지털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력 및 윤리적 태도 등에 관련된 가용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 등이다.

디지털 정보 접근 수준

인터넷은 현재 디지털 정보를 접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매체이며 이 점에서 인터넷 이용률은 디지털 정보의 접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이다.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는 전체 국민의 93%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데 2017년 90%를 상회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모바일기기 기반의 인터넷 이용률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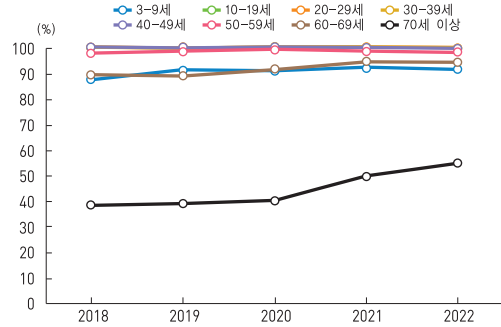
연령집단별로는 2022년 기준 대다수 연령층에서 99%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는 가운데, 60~69세는 94.0%(모바일 92.9%), 그리고 70세 이상은 54.7%(모바일 57.9%)의 이용률을 보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이 현저히 낮은 인터넷 정보 접근의 수준을 보였다(그림 IV-27).

다만, 2022년 7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8년 38.6%에서 16.1%p, 모바일로는 35.4%에서 22.5%p 상승한 수치로, 해당 연령층의 인터넷 정보 접근 정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0년 이후에 높아지는 기울기가 커진 것으로 보아 코로나19 상황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 정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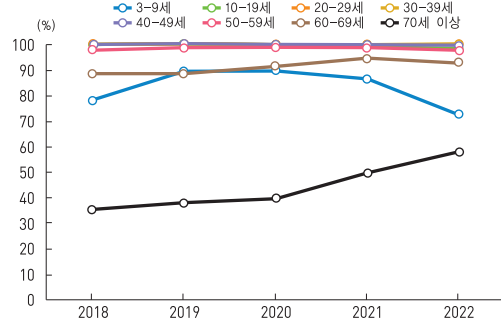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2022년 기준 광주, 울산, 제주, 대구, 부산에서 95.0% 이상의 높은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는 가운데, 세종, 전남, 강원을 제외한 모

[그림 IV-27]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2018-2022

1) 인터넷 이용률



2)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주: 1) 인터넷 이용률은 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한 자의 비율임.

2)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내 모바일 인터넷(이동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자의 비율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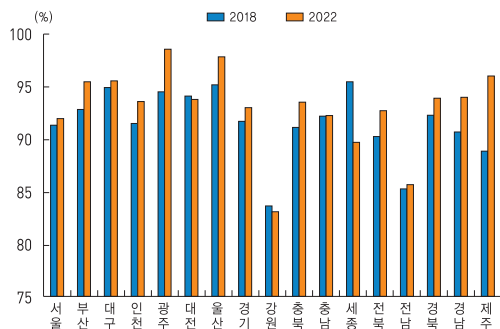
든 지역에서 90.0%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을 나타냈다. 반면, 강원과 전남은 5년 전 수치와 비교해 볼 때도 일관적으로 90% 이하의 이용률을 보여, 다른 지역과의 비교적 큰 격차를 보여준다(그림 IV-28-1).

그러나 모바일기기 기반의 인터넷 이용률은 2022년에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앞서 낮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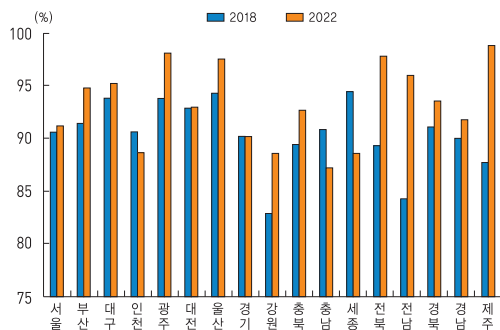
인터넷 이용률 수치를 보인 강원과 전남도 88.6%와 96.0%로 매우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그림 IV-28-2). 앞서도 언급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의 모바일기기 중심으로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이 커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IV-28]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 2018, 2022

1) 인터넷 이용률



2)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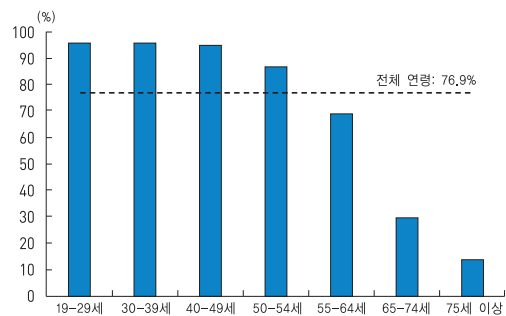
주: 1) 인터넷 이용률은 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한 자의 비율임.

2)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내 모바일 인터넷(이동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자의 비율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 연도.

다음으로는 또 다른 디지털 정보 접근 매체로서 최근 들어 외식과 유통 점포, 교통과 문화시설 이용, 관공서와 병원 서비스 이용 등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키오스크의 이용률을 서울시민의 사례로 살펴보았다. 2021년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키오스크 이용률은 76.9%이며, 55세 이상은 평균 이하의 이용률을 나타냈다. 특히, 65~74세와 75세 이상은 각각 29.4%, 13.8%로 나타나, 키오스크가 타 기기에 비해서도 고령층의 접근 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디지털 기기임을 드러냈다(그림 IV-29).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디지털 매체 및 기기가 더 빠르고 더 자주 등장할수록 디지털정보 관련 역량의 격차도 급격히 커질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영향은 중·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IV-29] 서울시민의 연령별 키오스크 이용률, 2021



주: 1) 키오스크 이용률은 현재 서울 거주 가구 만 19세 이상 가구원 중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서울디지털재단, 「2021년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 2022.



디지털 정보화 수준 및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

우리나라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현황은 대표적으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디지털 정보의 접근, 이용, 활용의 수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보유 여부, 인터넷 상시 접속 여부 등 인프라 및 기기 보유 여부를 '접근'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의 이용 능력을 '역량'으로,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등의 양적, 질적 활용 정도를 '활용'으로 정의하여 자기 보고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역량, 활용의 종합을 '디지털 정보화'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각각의 하위집단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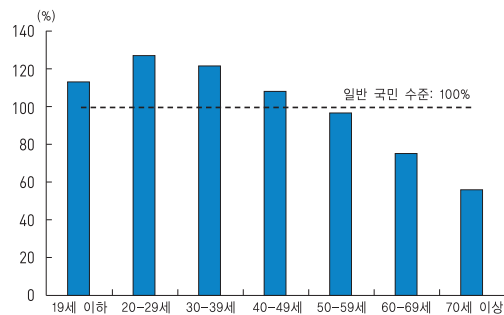
우선 연령집단별 디지털 정보화 현황을 보면, 40대 이하가 일반 국민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50대 이상은 반대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60대가 75.6%, 70대 이상이 55.6% 수준으로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그림 IV-30-1).

특히 [그림 IV-30-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격차는 '소프트웨어 설치·삭제', '인터넷 연결 및 파일 전송', '문서 및 자료 작성' 등의 컴퓨터 이용 능력과 '무선 네트워크 설정', '앱 설치·이용' 등의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 등을 포함하는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의 이용 능력인 '역량'의 수준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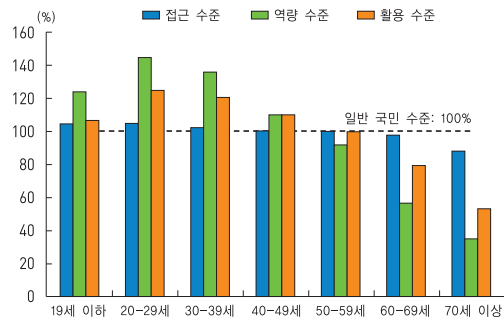
60~69세는 56.7%, 70대 이상은 34.6% 수준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의 이용 능력이 현저하게 낮았지만, 20~29세는 144.7%, 30~39세는 135.9%로 일반 국민 수준을 훨씬 상회하여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림 IV-30]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2022

1) 종합



2) 영역별



주: 1) 전국 만 7세 이상 가구원(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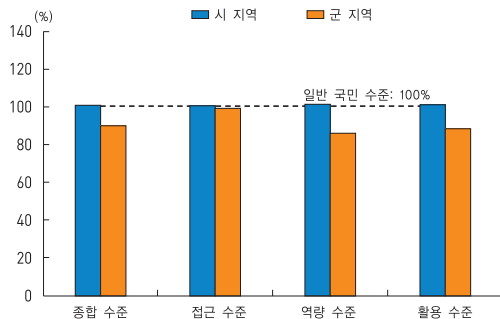
2) 디지털 정보화 종합 수준 및 각 하위 영역별 수준은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령집단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2.

지역별로는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의 정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인 '역량'과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 단위별 거주 연령층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연령 차이의 효과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31] 지역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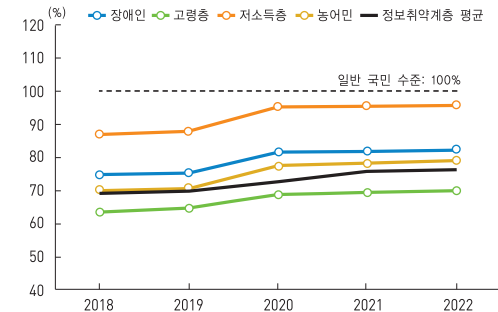


주: 1) 전국 만 7세 이상 가구원(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함.
2) 디지털 정보화 종합 수준 및 각 하위 영역별 수준은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지역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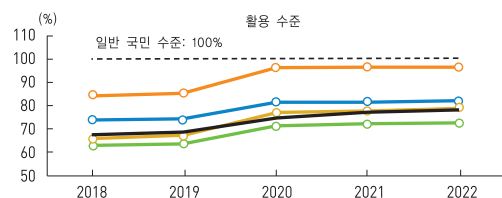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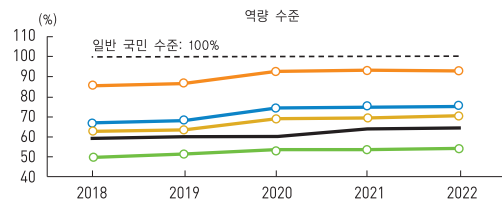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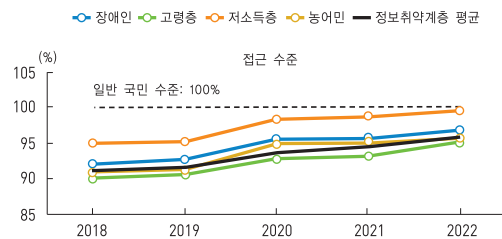
중·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저하에 대한 경향은 [그림 IV-32]에 제시된 정보취약계층 간의 비교를 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2022년 기준 일반 국민 평균 대비 정보취약계층, 즉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화 종합 수준은 76.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8%p, 2018년 기준으로는 7.3%p 상승한 수치이다. 계층별로는 고령층이 69.9%로 가장 낮으며, 농어민 78.9%, 장애인 82.2%, 저소득층 95.6%순으로 나타났다. 계층별 전년 대비 상승 폭은 고령층과 농어민이 각각 0.8%p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IV-32] 정보취약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2018-2022

1) 종합



2) 영역별



주: 1) '장애인'은 전국 만 7~69세 등록장애인, '고령층'은 전국 가구의 만 55세 이상 가구원, '저소득층'은 전국 만 7~7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어민'은 전국 농어가의 만 15세 이상 농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2) 디지털 정보화 종합 수준 및 각 하위 영역별 수준은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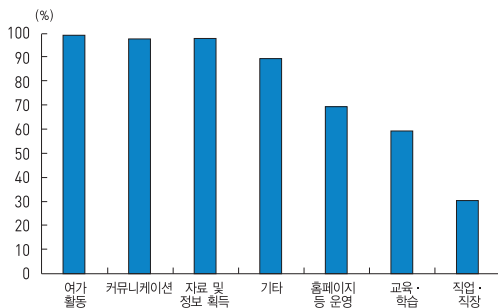


영역별 차이의 경향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2022년 기준 ‘역량’(64.5%)과 ‘활용’(78.0%)의 수준이 ‘접근’(96%)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량’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가르는 주요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디지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을까? [그림 IV-33]의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주된 이용 목적을 살펴보면, 여가활동을, 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정보획득 등은 98% 이상의 비율을 보인 반면, 인

[그림 IV-33] 인터넷 이용목적, 2022



- 주 1) 통계치는 전국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내 1회 이상 이용) 중 해당 활동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여가’에는 TV, 라디오 시청, 음악 듣기, 동영상, 영화 보기, 게임 등의 활동이 포함됨.
 3) ‘기타’에는 인터넷뱅킹,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여행 등 서비스 예약 및 이용 등의 활동이 포함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23.

터넷뱅킹,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여행 등 서비스 예약 및 이용 등은 89.1%, 그리고 교육과 학습, 직업 및 직장에서의 활용을 위해서는 각각 58.8%, 30.0%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정보 탐색, 그리고 소통과 여가 등 개인 일상생활 및 기본 사회생활 참여를 위해 디지털 정보를 주되게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학업, 경제, 직업 생활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IV-2〉 연령별 인터넷 이용목적, 2022

	여가 활동	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정보 획득	홈페이지 등 운영	교육·학습	직업·직장	기타
3-9세	99.1	66.8	58.5	87.6	63.9	2.6	2.1
10-19세	100.0	100.0	100.0	48.9	100.0	11.3	88.2
20-29세	100.0	100.0	100.0	100.0	90.7	59.0	100.0
30-39세	100.0	100.0	100.0	100.0	83.1	56.8	100.0
40-49세	99.9	100.0	100.0	86.9	73.8	39.9	100.0
50-59세	99.8	99.9	100.0	53.2	28.7	22.9	97.5
60-69세	98.6	99.5	100.0	44.5	17.1	7.6	87.0
70세 이상	91.0	97.1	99.7	10.0	7.4	2.2	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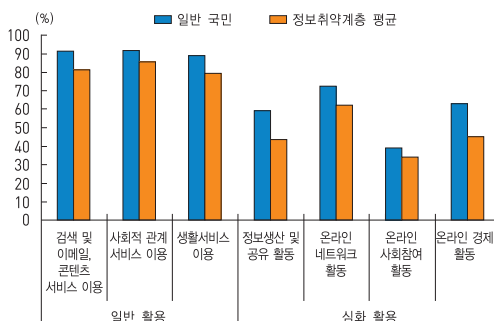
- 주 1) 통계치는 전국 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내 1회 이상 이용) 중 해당 활동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여가’에는 TV, 라디오 시청, 음악 듣기, 동영상, 영화 보기, 게임 등의 활동이 포함됨.
 3) ‘기타’에는 인터넷뱅킹,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여행 등 서비스 예약 및 이용 등의 활동이 포함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23.

이러한 경향은 연령집단별로 볼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교육 및 학습, 직업 및 직장, 홈페이지 운영 등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50% 이하로 나타나 인터넷 이용의 대부분이 여가, 소통, 정보획득 등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2).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해석할 때, 디지털 정보 활용의 목적과 범위가 디지털 정보를 다루는 활용 능력의 수준과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도 디지털 활용의 하위 영역 가운데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사회적 관계 서비스, 생활 서비스 등은 디지털 정보의 일반 활용의 영역으로 정의한 반면, 정보 생산 및 공유 활동,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 온라인 사회 참여 활동, 온라인 경제 활동 등은 디지털 정보 활용의 심화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IV-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 정보의 일반 활용에서는 90% 수준의 이용률을 보였지만, 심화 활용 영역에서는 38.9~72.4%의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정보취약계층의 경우에 더 심화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정보 탐색, 사회적 관계 맺음, 여가 및 기본 생활 서비스 이용 등 개인 생활 및 사회의 기본 생활 영위에 필요한 정도이기는 하나,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 직업, 정치, 사회생활에 보다 적극적 참여를 하는 데에는 다소 저조한 수준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V-34] 디지털 정보 활용 하위영역별 이용률, 2022



주: 1) '일반 국민'은 만 3세 이상 인구임. '정보취약계층'에는 장애인(전국 만 7~69세 등록장애인), 고령층(전국 가구의 만 55세 이상 가구원), 저소득층(전국 만 7~74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어민(전국 농어가의 만 15세 이상 농업 종사자) 등을 포함.

2) 각 통계치는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내 이용자) 중 인터넷을 활용해 해당 활동을 한 적이 있는 이용자의 비율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2.

디지털 정보에 대한 이해력과 태도

앞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디지털 기기 및 기술의 직접 이용 및 활용과 관련된 능력 이외에도, 디지털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력 및 문식(文識)력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력과 디지털 기기 및 정보를 다루는 태도까지 포함하는 다층적 영역의 역량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디지털 기기·정보의 이용과 활용의 능력 이외에 디지털 정보에 대한 이해력과 태도의 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가 있다. 이 조사에서는 디지털 역량을 디지털 기술 이

용(기기 이용, 서비스 이용), 디지털 정보 이해(비판적 정보 이해, 미디어 이해), 디지털 안전(윤리, 보안), 디지털 태도(효능감, 조절) 등의 4개 영역과 8개의 하위차원¹⁾으로 구성되어 자기 보고식으로 조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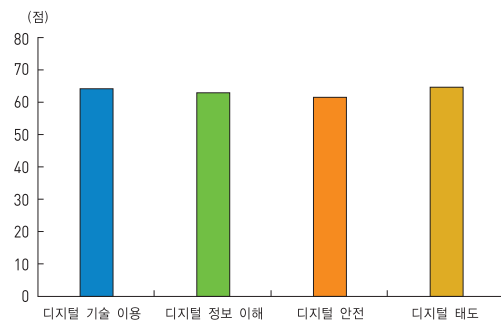
이 조사의 2021년 결과를 보면, 서울시민은 디지털 기술 이용 64.1점, 디지털 정보 이해 63.1점, 디지털 안전 61.5점, 디지털 태도 64.6점으로 전체적으로 60점대 수준을 보였다. 하위차원별로는 디지털 윤리 부문의 점수가 72.9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디지털 보안 능력 부문에서는 52.6점의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디지털 안전 영역에서의 하위차원 간 점수 차이가 20점으로 크게 나타났다(그림 IV-35).

디지털 윤리 영역이 ‘타인의 개인정보 사용 금지’, ‘인터넷에서 인신공격 및 비방 자제’, ‘제작물 출처 미 표기 주의’, ‘사실 미확인 정보 공유 자제’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 예절 및 규범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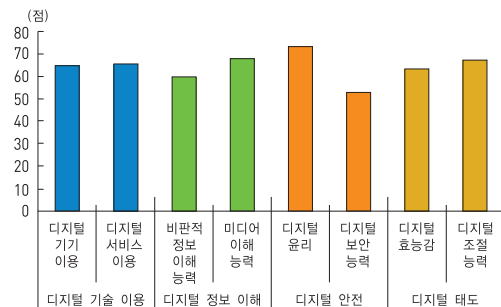
와 관련된 능력이라면, 디지털 보안 능력은 ‘출처 불명 메일 링크 삭제’, ‘OS 보안 프로그램 최신 버전 유지’, ‘악성코드 주기적 검사 치료’, ‘정기적 암호 변경’ 등 사이버 위험에 대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 적용의 능력으로 설명된다. 디지털 보안 능력이 정보 기술을 직접 사용

[그림 IV-35] 서울시민의 디지털 역량 수준, 2021

1) 영역별 수준



2) 하위차원별 수준



1) 각 하위차원이 의미하는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역	하위차원	상세 설명
디지털 기술 이용	디지털 기기 이용	디지털 기기 기본 조작 및 설정 능력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인터넷 정보검색, 상품구매, 금융거래 등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능력
디지털 정보 이해	비판적 정보 이해 능력	디지털 정보 사실여부, 정확도, 출처 등 비판적으로 분석, 판별, 이해하는 능력
	미디어 이해 능력	디지털 미디어 정보의 특성 및 전달 매체의 속성에 대한 이해능력
디지털 안전	디지털 윤리	온라인 공간에서 예절과 규범 준수, 책임감 있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
	디지털 보안 능력	사이버 위험에 대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
디지털 태도	디지털 효능감	디지털 기술 이용에 대한 자기효능감 인식과 디지털 기술을 대하는 자세
	디지털 조절 능력	디지털 이용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

주: 1) 서울 거주가구의 만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2) 하위차원별 디지털 역량 수준은 ‘디지털 기기 이용’부터 ‘디지털 조절 능력’까지 8개 하위차원 관련 문항 각각에 대해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동일 하위차원 문항 점수들을 산술평균한 값으로서, 0~100점 사이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함.

3) 영역별 디지털 역량 수준은 해당 하위차원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임.
출처: 서울디지털재단, 「2021년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 2022.

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사이버 예절 및 관련 규범 준수와 관련된 디지털 윤리보다는 높은 수준의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36]에서 디지털 역량 영역의 연령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디지털 기술 이용의 경우 19~29세는 81.5점, 40~49세는 73.0점, 65~74세 및 75세 이상은 각각 37.4점, 23.5점으로, 연령집단 간 최고-최저의 점수 차이가 58.0점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디지털 안전 영역은 가장 높은 점수인 19~29세의 69.6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75세 이상의 44.3점까지 점수 차이가 25.3점이었다. 또한 디지털 정보 이해 영역도 19~29세 71.6점, 75세 이상이 38.4점으로 33.2점의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디지털 기기를 직접 이용하는 기술 능력 면에서는 매우 큰 역량 차이가 있지만,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서의 정보 문해력이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윤리적 태도 등의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역량 차이가 크지 않음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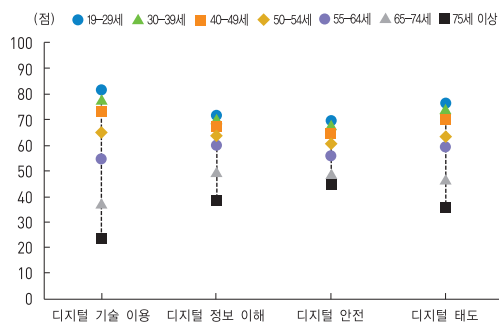
이러한 경향은 디지털 역량을 하위차원별로 보았을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림 IV-36-2]에서와 같이 디지털 윤리, 미디어 이해 능력, 비판적 정보 이해 능력 등에 비해 디지털 기기 이용, 디지털 서비스 이용, 디지털 보안 능력 등에서 연령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보안 능력은 전체 연령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나 다른 하위 역량보다도 높은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요구되는 하

위 역량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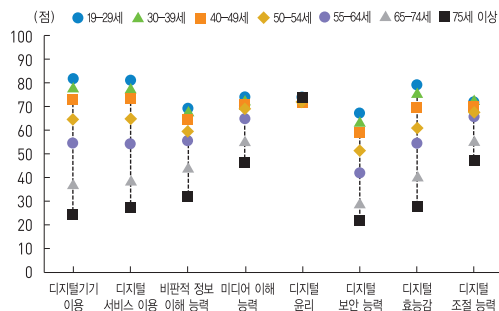
이상의 디지털 정보 접근, 활용, 이해, 태도와 관련된 역량의 수준에 대한 정보는 디지털 리터러시 현황 분석 시 해당 역량의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육 및 지원 방안 설계 시

[그림 IV-36] 서울시민의 연령별 디지털 역량 수준, 2021

1) 영역별 수준



2) 하위차원별 수준



주: 1) 서울 거주가구의 만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2) 하위차원별 디지털 역량 수준은 '디지털 기기 이용'부터 '디지털 조절 능력'까지 8개 하위차원 관련 문항 각각에 대해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동일 하위차원 문항 점수들을 산술평균한 값으로서, 0~100점 사이의 값을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함.

3) 영역별 디지털 역량 수준은 해당 하위차원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임.

출처: 서울디지털재단, 「2021년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 2022.



대상자 특성에 따라 관심을 가져야 할 역량의 영역과 수준을 차별화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경험 및 희망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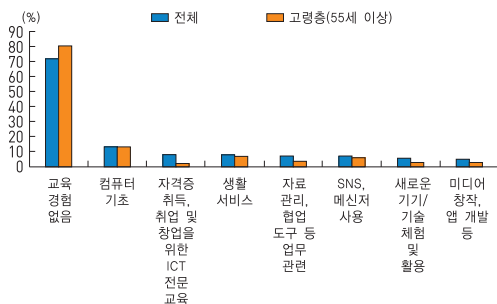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디지털 리터러시의 현황과 수준은 관련 교육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현재 디지털 정보 관련 교육 참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관련 교육에의 참여 의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가용 자료로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에서 서울시민의 디지털 정보 관련 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IV-37]에 제시된 202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정보기술 교육 수강 경험에 대해

72.0%는 수강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상당수가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참여 경험 없음이 80.3%로 더 높게 나타났다.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컴퓨터 기초(13.2%)’, ‘자격증 취득, 취업 및 창업을 위한 ICT 전문교육(8.2%)’, ‘생활 서비스(7.8%)’, ‘자료관리, 협업 도구 등 업무 관련(7.1%)’, ‘SNS, 메신저 사용(7.0%)’, ‘새로운 기기/기술 체험 및 활용(5.8%)’, ‘미디어 창작, 앱 개발 등(5.0%)’ 등의 순으로 수강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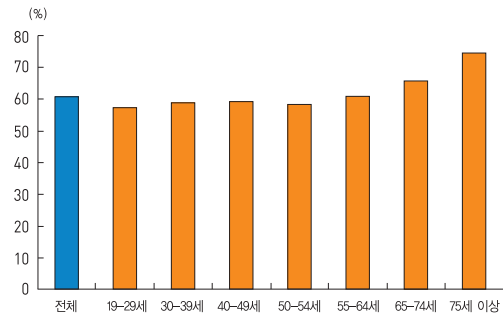
또한 [그림 IV-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관련 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60.8%로 나타나, 현재의 낮은 교육 참여율과 함께 앞으로의 교육 참여에 대한 의사도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그림 IV-37] 서울시민의 디지털 정보기술 교육 경험, 2021



주: 1) 서울 거주가구의 만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전체 응답자 중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해당 정보기술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서울디지털재단, 「2021년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 2022.

[그림 IV-38] 서울시민의 연령별 향후 디지털 정보기술 교육 미참여 의향, 2021



주: 1) 서울 거주가구의 만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전체 응답자 중 향후 정보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 교육을 원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서울디지털재단, 「2021년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 2022.

19~29세는 57.2%, 30~39세는 59.1%, 40~49세는 59.3%, 50~54세는 58.2%, 55세 이상의 중·고령층은 65.1%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향후 교육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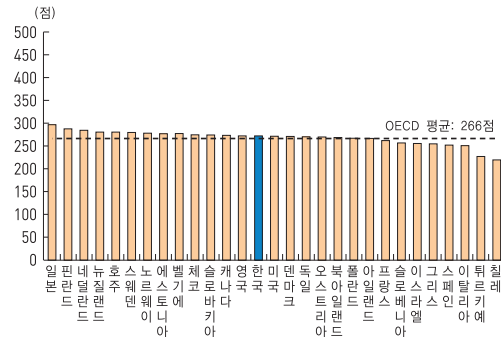
디지털 리터러시 국제 비교

그렇다면 타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는 OECD가 주관하고 있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는 여타의 조사와 달리 수행 능력 기반의 조사 방식을 취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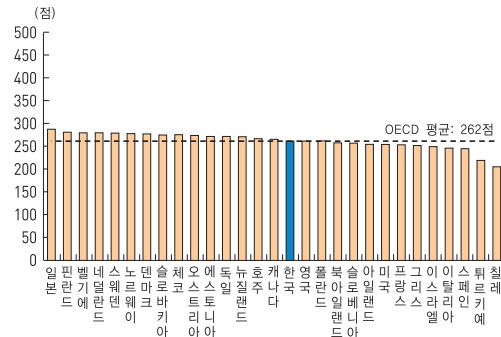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는 참가국 성인(16~65세)의 문해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컴퓨터 기반의 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 in technology-rich environment)에서 컴퓨터 관련 기기 및 프로그램 작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력을 조사하고 있다. 타 능력과 다르게 컴퓨터 기반의 문제해결능력에서는 수준별 인구 비율의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정보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에 익숙한 성인의 비율과 근로자, 시민, 소비자로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ICT 기술 수준의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설명한다. 수준 등급은 1수준 이하부터

[그림 IV-39] OECD 국가 성인의 문해력, 수리력 및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능력 평가 결과(PIAAC 조사 결과),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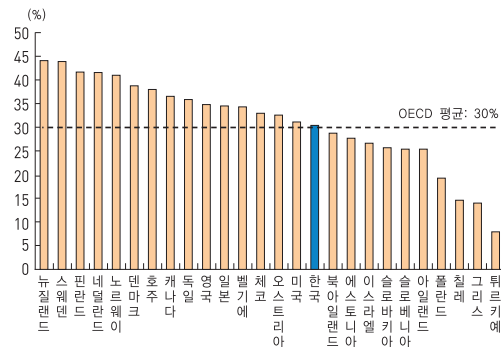
1) 문해력



2) 수리력



3)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능력



주: 1) 각국 16~65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문해력과 수리력은 평균 점수,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능력은 전체 4개 등급 가운데 상위 2개 등급(2,3수준)이 차지하는 비율임.

3)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능력을 조사하지 않았음.

출처: OECD, Skills Matter: Further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2019.



3수준까지 총 4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림 IV-39]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문해력의 경우에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가 많은 반면, 컴퓨터 기반의 문제해결능력의 경우에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국가 수가 많지 않아 해당 역량의 국가 간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의 문해력과 수리력은 각각 273점, 263점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컴퓨터 기반의 문제해결능력은 상위 2개 등급(2수준 및 3수준)의 인구가 30%로 OECD 평균과 유사했다.

조사 참여국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컴퓨터 기반의 문제해결능력의 수준이 낮았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 그 격차가 큰 편에 속했다. [그림 IV-40]를 보면 OECD 평균의 경우, 25~3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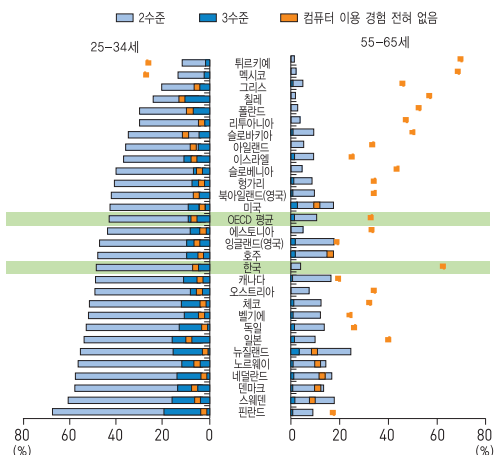
에서 상위 2개 수준 능력에 포함되는 경우는 43.1%이고, 55~65세에서는 2수준이 9.1%, 3수준이 1.2%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25~34세에서 상위 2개 수준의 능력에 포함되는 경우는 48.6%로 OECD 평균을 상회했지만, 55~65세에서는 2수준이 3.9%, 3수준은 없었으며, 컴퓨터 경험이 전혀 없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63.5%로 연령집단 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맺음말

이상의 내용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으나 관련 기기의 이용 능력 면에서는 격차가 크다는 점, 그리고 경제, 직업, 사회생활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활용이 부족하다는 점 등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사회적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 미흡한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 기기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연령집단 간 격차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영역 및 수준별로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훈련의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디지털 리터러시의 연령집단 간 격차 상황을 고려하여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된 서비스와 교육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고령층이 교육

[그림 IV-40] OECD 국가 성인의 연령별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능력 수준, 2018



주: 1) 각국 16~65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출처: OECD, Skills Matter: Further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2019.

기회 접근에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령 친화적인 디지털 기술력 및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이 글에서 제시된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조사들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특정 영역과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 역량들을 정의하고, 이를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을 두어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량 정보로서는 다소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다층적 영역과 수준을 밝힐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 기반한 국가 승인통계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역량으로서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수행 능력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조사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길헤지·노일경. 2019. “성인 정보문해능력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정보문해 영역 및 수준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25(4), 1-24.
- Ferrari, A. 2013. DIGCOMP: A Framework for Developing and Understanding Digital Competence in Europ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doi:10.2788/52966.
- UNESCO. 2018. A Global Framework of Reference on Digital Literacy Skills for Indicator 4.4.2, Information Paper No. 51. UIS/2018/ICT/IP/51. <http://uis.unesco.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p51-global-framework-reference-digital-literacy-skills-2018-en.pdf>.

2023 Labor

Korean Social Trends 2023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V 노동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144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 추세와 세대별 노조 인식 권현지 서울대학교	160
지난 20년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 및 구조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173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2022년에 이어, 2023년은 대내외적 정치·경제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성과가 계속 관찰되었다.
- 2023년 10월 전체 64.7%, 남성 73.6%, 여성 56.0%를 기록한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에 이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 이상의 호조를 보였다. 2022년 12월과 2023년 1~2월 잠시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 회복되었다.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30대 여성의 급격한 증가세이다. 특히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미혼, 고학력 집단으로 30대 대졸 미혼 여성의 고용률은 같은 성격의 남성 고용률을 상회한다. 한편, 30대~40대 남성의 경제활동 및 고용률 둔화 역시 눈에 띄는 변화다.
- 팬데믹기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포스트 팬데믹기 하락 추세이고, 2023년에도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 추세를 보였다. 단, 다른 모든 비정규직과 달리, 시간제 일자리는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 포스트 팬데믹 기간에 명목임금은 4%를 상회하는 인상률을 보였지만, 실질임금 인상률은 근래 들어 유례없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 팬데믹기 크게 증가했던 재택 및 원격근무 비율이 크게 하락했다.

포스트 팬데믹기에 완벽하게 접어들면서 노동시장은 많은 측면에서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노동시장의 양적 지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모두 회복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수, 고용률 등이 약간의 조정을 거쳐 증가세를 지속했고, 실업률은 2%의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증가한 비정규직 비중 역시 미세하게 감소되는 추세다. 팬데믹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크게 확대되어 팬데믹 이후의 뉴노멀을 예상케 했던 재택 및 원격 근무 활용은 급격히 줄어 새로운 규범으로 정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몇 가지 변화도 눈에 띈다. 노동시장의 양적 측면에서,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 등 불안정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포스트 팬데믹기에 접어들면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양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여성, 특히 30대 여성의 변화이다. 고용률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실업률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대명사로 불리던 이 연령 집단 여성의 노동시장 규범과 행위가 크게 바뀌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팬데믹과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로 2022년 명목임금이 전년 대비 4.9%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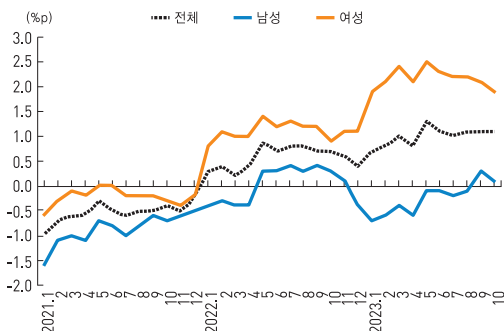
다. 근래 들어 유례가 없었던 일로, 임금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함의한다.

올해 주요 노동동향은 주로 팬데믹 이전 시기를 준거로 포스트 팬데믹기에 완전히 접어드는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10월까지의 노동시장 변화를 고찰한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증감

팬데믹 이후로 완전히 접어드는 2023년 경제활동참가율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 이상의 호조를 보였다. [그림 V-1]을 보면, 팬데믹 이전(2019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이미 4차 팬데믹이 지나간 2022년 초부터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호전되기 시작했다. 여성은 2022년 1분기부터, 남성은 이보다 뒤늦은 2022년 2분기부터 2019년 수준을 상회하는 참가율을 보여주었다.

[그림 V-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2021.1-2023.10



주: 1) 통계치는 2019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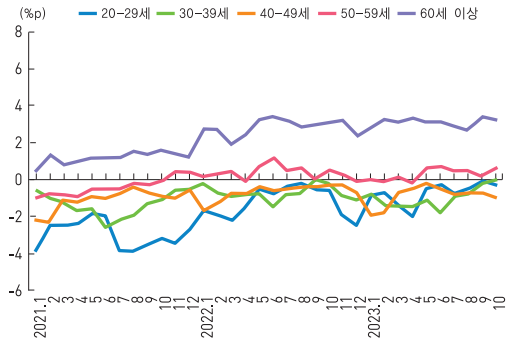
이렇듯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주도한 것은 여성이다. 또한 2023년 이후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여성은 2%p 이상 높은 참가율을 보여준 반면, 남성은 그보다 낮거나 비슷한 참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포스트 팬데믹기 경제활동참가율 통계에서 두드러진 또 하나의 양상은 성별과 교차되는 연령 집단의 차이다(그림 V-2). 우선 남성의 연령집단별 패턴을 살펴보면, 50대와 60대 이상의 중장년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팬데믹 이전(2019년 동월)의 경제활동 참가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청년층 회복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팬데믹 극성기에 가장 심하게 위축된 것은 20대였으며, 그 후로도 경기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참가율을 보여주었다. 30대의 경우 진폭이 크지는 않지만, 2022년 4분기 이후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참가율을 지속하다가 2023년 7~8월에 들어서야 다소간의 회복세를 보여준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거의 모든 연령대가 2022년에 들어서면서 2019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바로 증가세에 접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40대의 모습은 다소 다르다. 팬데믹 이후 2019년 수준의 참가율을 줄곧 회복하지 못하다 2023년 2분기가 되어서야 겨우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반면, 30대 여성은 2022년에도 2019년 동월 대비 2%p 이상의 참가율 증가를 보인 데 이어 2023년 더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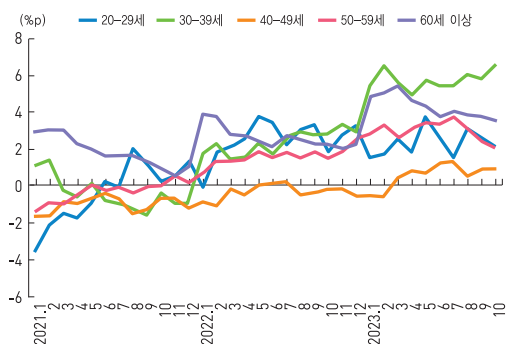


[그림 V-2] 성 및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021.1~2023.10

1) 남성



2)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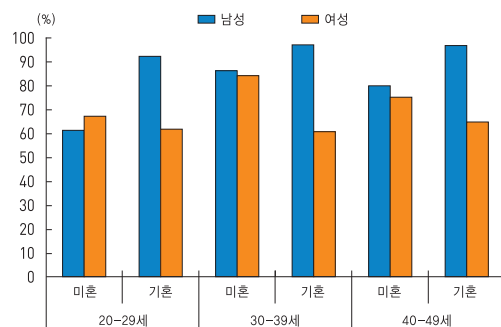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2019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한편, 30대 여성의 급격한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추세를 이끈 것은 2023년 84.0%의 참가율을 보여준 미혼 여성 집단이다. [그림 V-3]은 연령 및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본 것인데, 30대의 경우 남녀 간 참가율의 차이가 혼인 여부에 따라 크게 다르다. 미혼자 집단에서는 남녀 간 참가율 격차(2.1%p)가 20대와 40대에 비해 적고, 기혼자 집단에서는 남녀 간 참가율 격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것(36.0%p)을 확인할 수

있다. 30대 미혼 여성 중에서도 참가율이 88.4%로 높은 대졸 이상 학력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남성 대졸 이상 88.7%, 여성 고졸 73.8%).

[그림 V-3] 연령 및 혼인상태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2023



주: 1) 해당 경제활동참가율은 2023년 1~10월까지의 월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연평균 수치임.

2) 기혼자에는 유배우자만을 포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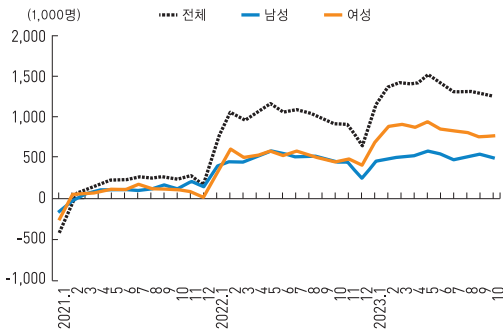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23.

한편, [그림 V-4]에 제시된 취업자 수의 변화는 앞서 본 이러한 경제활동 참가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 취업자 수는 백신 접종의 확산과 함께 방역 상황이 전기를 맞은 2021년 3월경 이미 팬데믹 이전(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2021년에도 팬데믹 극성기였던 3/4분기 다소 하강 추세를 보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완화된 2022년 이후로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2월 이후 매월, 2019년에 비해 100만여 명에 달하는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졌고, 2023년에 들어서면서 그 증가폭이 한층 더 커졌다. 팬데믹 회복기 노동시장 공급 증가를 견인한 것이 실업보다는 취업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특히 완전한 포스트



팬데믹기에 들어선 2023년에는 여성 취업자 증가폭이 남성에 비해 한층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취업자 수의 규모를 고려할 때 여성 취업자 증가의 체감은 더 크다.

[그림 V-4] 성별 취업자 수 변화, 2021.1-2023.10



주: 1) 통계치는 2019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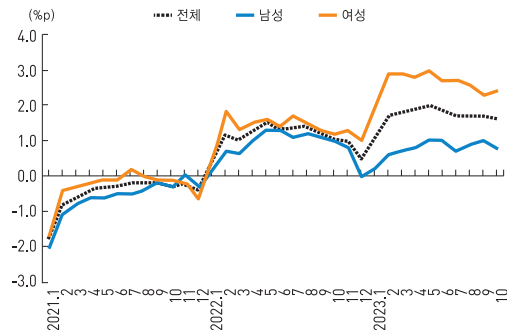
고용률과 실업률

2020년 급감했던 고용률(남성 69.8%, 여성 50.7%)은 2021년 들어 남성 70.0%, 여성 51.2%로 2020년에 비해 소폭이지만 상승 추세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9년(남성 70.7%, 여성 51.6%)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팬데믹 초기 2년간의 느린 회복세를 압도하는 급격한 고용률 상승이 전개된 것은 2022년 상반기에 들어서면서다. [그림 V-5]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팬데믹 영향권 내에 있었던 2022년 상반기에 이러한 급격한 고용률 증가 추세를 견인한 것은 여성이었다. 2022년 1월 남성과 여성 모두 팬데믹

이전 수준의 고용률을 회복했지만, 여성의 증가폭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여성 고용률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증가세가 살짝 주춤하다가 2023년 2월 이후 더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며 전체 고용률 증가를 이끌었다.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수 등에서 확인했던 성별 상이한 추세가 고용률에서도 공히 확인된다. 2022년에는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변동폭의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2022년 4분기 이후 여성의 상승폭이 남성에 비해 훨씬 커졌다.

[그림 V-5] 성별 고용률 변화, 2021.1-202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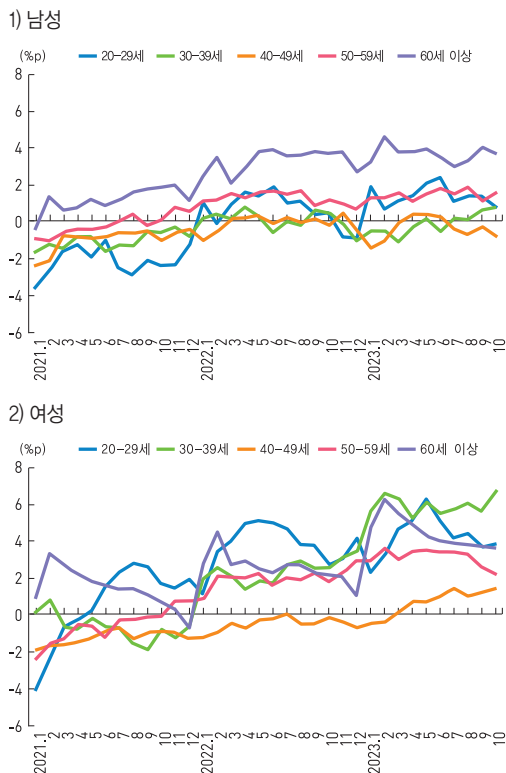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2019년 동월 대비 고용률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그림 V-6]은 연령별로 고용률 변화의 추세를 비교해 본 것이다. 팬데믹 이전(2019년 동월)과 비교하였을 때, 2022년 이후 전 연령대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의 고용률을 회복했다. 다만, 팬데믹 이후인 2023년 1, 2월까지도 줄곧 팬데믹 이전 고용률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유일한 집단은 40대 여성이다. 40대 여성은 코로나19의 영향력



으로부터 가장 회복이 어려웠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고용률 추세에서 확인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30대 남성과 여성 집단 간 대비다. 30대 남성의 경우 40대 남성과 함께 2019년 동월 고용률을 살짝 넘나들며 약한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30대 여성의 경우 2022년 1월 이후 지속적인 고용률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2023년 들어 그 상승 곡선이 매우 가팔라 2019년 대비 5%p 이상의 고용률 증가를 기록했다.

[그림 V-6] 성 및 연령별 고용률 변화, 2021.1~2023.10



주: 1) 통계치는 2019년 동월 대비 고용률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한편, 팬데믹 시기(2021년)와 비교했을 때, 2023년 이후의 연령집단별 고용률 변동폭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30대, 40대, 50대 집단에서 비교적 일정하게 고용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20대 집단의 상승폭이 크다면, 여성은 30대를 위시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집단에서 비교적 큰 폭의 고용률 상승이 전개되었다.

한편, 팬데믹 전후 한국 노동시장에서 특기할 것은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백신 등 방역상황이 호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극성기에 해당했던 2021년의 연간 실업률은 3.7%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8%에 비해 낮았다.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2020년에도 연간 실업률은 4.0%로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림 V-7]은 2019년 이후 2023년 10월까지 연령집단별 실업률 추세를 성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현저한 추세 중 하나는 남녀 공히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점이다. 20대는 경기와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심한 등락폭을 보여준 반면,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다른 연령대와 큰 차이 없는 실업률을 유지하다가 주기적으로 실업률이 치솟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 60대의 주기적인 실업률 상승 양상은 여성에게 한층 현저하다. 팬데믹 초기 극성기를 제외하면 실업률이 치솟는 시기가 모두 연말-연초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의 공공근로를 통한 노동력 공급 비중이 높다는 점과 연



관된다. 20대 청년층의 실업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눈에 띄게 높지만, 최근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청년층뿐 아니라 한국의 실업률 전반이 경기의 불안정 속에서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생산 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노동시간의 추세적 축소 및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 플랫폼 기 경제의 확대로 진입장벽이 한층 낮아진 자영업 일자리의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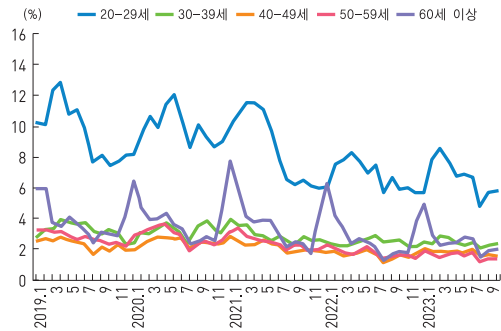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다. 남성의 경우 노동시장 주력 연령집단인 30, 40, 50대는 해당 시기 상대적으로 큰 부침 없이 1~3%의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안정적 실업률을 보여준다. 반면, 대면서비스업에 치중된 여성은 팬데믹기를 경유하면서 실업률이 2~5% 사이를 오가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침이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실업률이 남성 실업률을 상회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양상으로 여성 일자리 부족,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30대 미혼 여성(1인 가구)의 증가, 가구의 소득 안정성이 떨어지는 양상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 30대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역시 눈여겨볼 양상이다.

경제활동참가, 고용과 실업 모두에서 30대 여성의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 노동시장의 젠더역학에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30대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낮아서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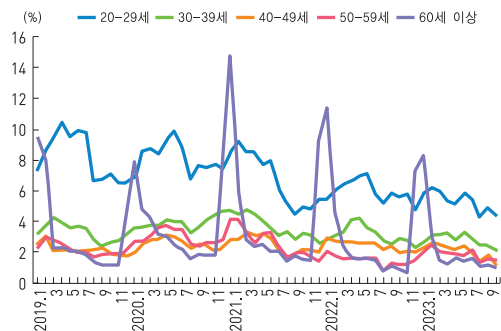
단절 양상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20대 이후 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던 기존 여성 노동시장의 특성이 한층 완화되면서 생애과정 내내 노동공급을 유지하려는 여성이 다수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취업과 실업을 오가는 일자리 불안정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 강하게 경험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림 V-7] 성 및 연령별 실업률, 2019.1~2023.10

1) 남성



2)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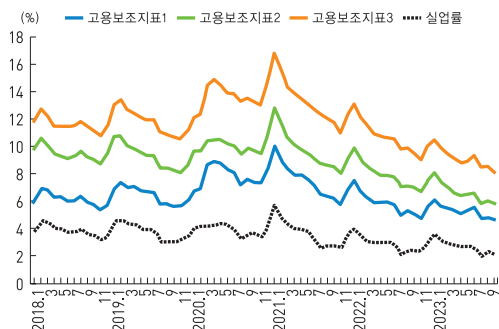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마지막으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 즉 고용불완전성을 고려한 고용보조지표를 살펴보자.



[그림 V-8] 고용보조지표(체감 실업률), 2018.1~2023.10



- 주: 1) 고용보조지표1=(실업자+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경제활동인구×100.
 2) 고용보조지표2=(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보조지표3=(실업자+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4)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조사 대상 주간에 실제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5)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가능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 희망/가능자인 '잠재구직자'를 합한 인구.
 6) 확장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팬데믹기에 해당했던 2021년 1월 10.0%(보조지표1), 12.8%(보조지표2), 16.8%(보조지표3)로 급등해 일자리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여기에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의 격차도 우려를 더했다. 2018년 1월 각각 2.2%p, 6.1%p, 8.1%p였던 격차는 2021년 1월 4.3%p(보조지표1), 7.1%p(보조지표2), 11.1%p(보조지표3)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급등했던 고용보조지표 수치는 점진적으로 낮아져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접어들어 2022년 4월에는 팬데믹 이전인 2018년 1월 수치와 유사하거나 그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기존 수준을 회복하였다.

2023년에는 기존 수준을 회복했던 2022년 수

치로부터 지속적인 하락세가 관찰된다. 2023년 10월에는 4.6%(보조지표1), 5.8%(보조지표2), 8.1%(보조지표3)를 기록해 최근 5개년 추이(2018년 1월~2023년 10월) 속 최저치가 관찰되고 있다. 생산물 시장의 불안정 속에서도 노동시장의 안정세는 이렇듯 여러 통계에서 확인된다.

취업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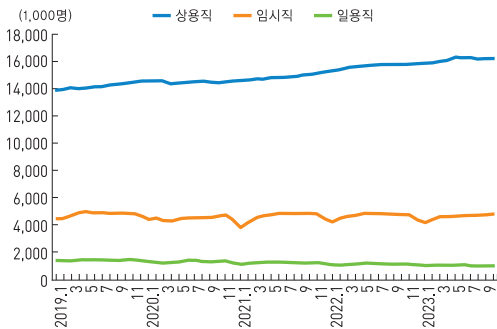
[그림 V-9]가 보여주듯 팬데믹 이전 시기와 코로나19 대유행기,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 시기를 거치는 동안 노동시장의 부침을 가장 심하게 경험한 집단은 임시직 노동자였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한 2020년 3월 전월 대비 44만 명 감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한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사이에 50만여 명이 감소했다. 2022년 2월, 고용 회복 국면에서 전월 대비 33만 2천 명이 증가하여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지만,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3년에도 2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따라 함께 증가하다가 최근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용직 노동자 역시 전체 취업자 수 변화의 추이를 따라 증감을 거듭하고 있으며, 변화의 진폭은 임시직 노동자 집단에 비해 한층 완만하지만,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반면 상용직 노동자의 경우 팬데믹 전후로 현저한 변화를 겪은 임시직 노동자와 비교해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기에 둔화되었던 상용직 고용은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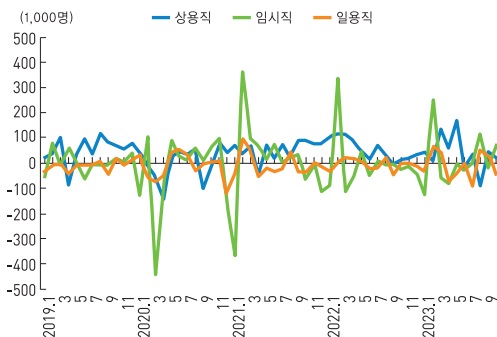
신의 보급과 함께 방역 국면이 전환된 2021년 5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증가세는 2023년에도 계속되었으나 2023년 8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임시·일용직과 달리 9만 명가량이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9]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2019.1-2023.10

1) 임금근로자 수



2) 전월 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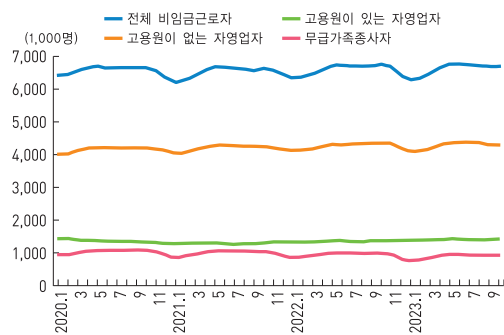


주: 1) 전월 대비 증감은 계절조정된 임금근로자 수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그림 V-10]은 팬데믹 이전인 2020년 1월 642만여 명에서 2021년 1월 620만여 명까지 축소되었던 비임금노동자가 포스트 팬데믹기로 접어든 2022년 4월에는 660만 명에 근접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비임금노동자 중 다수일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취약집단에 속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팬데믹 기간에도 축소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2021년 초 등 극성기에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포스트 팬데믹기에 접어든 2022년 4월 424만여 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20년 1월 401만여 명에 비해 23만여 명 늘었다. 해당 기간 플랫폼 경제의 확대로 늘어난 자영업 및 노동자의 기여분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V-10] 종사상 지위별 비임금근로자 수, 2021.1-2023.1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요컨대 팬데믹과 포스트 팬데믹을 경유하며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공히 축소되었던 일자리가 모두 안정화되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회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임금노동자를 나누어 보면, 주로 이런 추세는 주로 상용직 노동자에 국한되었다. 반면, 이러한 추세에서 소외되어 경기에 따라 고용의 완충 역할을 한 것은 주로 임시직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고용



완충지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비임금노동자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 V-1>을 보면, 2023년 8월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37.0%로 2021년 8월 38.4%, 2022년 8월 37.5%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되었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 8월 36.4%에 비해서는 아직 높은 상황이다.

팬데믹 영향이 아직 남아 있지만, 비정규직의 추세적 감소는 최근 임금노동자 증가를 상용직이 이끌었다는 분석과도 맥이 닿는 변화다.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45.5%로 전년 동월 대비 0.5%p, 남성 비정규직 비중은 29.8%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줄었다. 근로형태별로는 한시적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24.0%(여성 29.0%)로 다수를 차지한다. 시간제 노동자는 여전히 여성에서 두드러져, 전체 여성 취업자 중 27.2%가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시간제는 예외다. 전체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0.6%p, 여성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1.0%p 증가했다.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비전형 노동자 비중(8.9%)은 2022년에 이어 전년 대비 0.8%p 하락했다.

다음으로 산업별 취업자 구성을 살펴보자. [그림 V-11]을 보면, 제조업은 팬데믹 시기 내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2021년 11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고 2022년 말까지 그 추세를 유지하여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23년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2023년 10월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팬데믹 시기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2023년 9월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했지만 감소세가 둔화하면서 상황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

한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코로나 19의 3차 대유행을 겪은 2021년 1월을 제외하고는 최근 5개년 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꾸준히 증가한 업종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코로

<표 V-1>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 2019.8-2023.8

	전체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전체 (%)				
2019	36.4	23.3	15.3	9.9
2020	36.3	22.5	15.9	10.1
2021	38.4	24.6	16.7	10.8
2022	37.5	24.6	17.0	9.8
2023	37.0	24.0	17.6	8.9
남성 (%)				
2019	29.4	19.6	7.4	9.9
2020	29.4	18.3	8.1	10.7
2021	31.0	19.4	8.8	11.7
2022	30.6	19.8	9.4	10.1
2023	29.8	19.7	9.6	9.1
여성 (%)				
2019	45.0	27.8	25.2	10.0
2020	45.0	27.8	25.7	9.5
2021	47.4	31.0	26.4	9.9
2022	46.0	30.4	26.2	9.4
2023	45.5	29.0	27.2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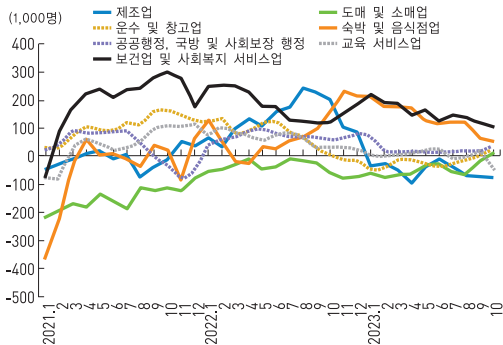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해당 근로형태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나19 3차 대유행 기간이었던 2021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10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5만여 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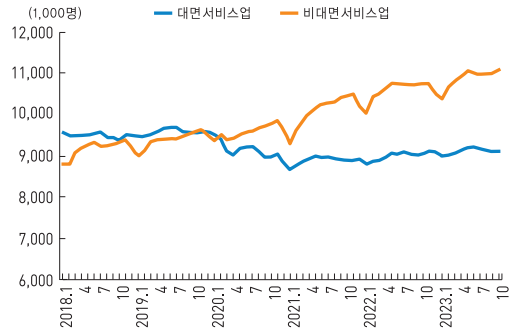
[그림 V-11]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2021.1-2023.10



주: 1) 통계치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서비스업 취업자 수의 변화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이후 대면서비스업과 비대면서비스업 사이에 명암이 엇갈렸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러한 추세가 팬데믹의 그늘에서 벗어난 2022년 하반기 이후로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V-12]를 보면, 2019년 10~11월을 기점으로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수를 역전한 비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그 뒤로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수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023년 10월 대면서비스업과 비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수의 격차는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V-12]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 2018.1-202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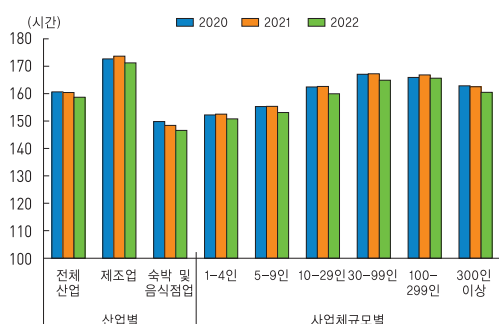
주: 1) 대면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며, 비대면서비스업은 그 외 업종을 포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노동시간과 유연노동

팬데믹을 벗어난 2022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7시간으로 2021년 160.7시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그림 V-13]에서 보듯이, 근로시간이 가장 긴 제조업과 가장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도 같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시간이 월 150.8시간으로 가장 짧고, 100~299인 중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이 월 165.6시간으로 가장 길다.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월 160.4시간이다. 업종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근로시간이 가장 긴 제조업과 가장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 간에는 월평균 약 24시간의 차이가 있다. 시간당

초과임금 지급의 제도화 정도(제조업)와 높은 시간제 노동자 비중(숙박·음식업)이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13]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2020-2022



주: 1)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한편, 주당 근로시간대별 취업자 현황을 팬데믹 관련 시기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팬데믹 시기에 주당 18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되던 시기부터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2021년 2분기에 성장세가 정점을 지났고 이후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그 폭은 점진적으로 약화되었다.

주당 18~35시간 단시간 취업자의 경우 팬데믹 상황에 따른 증감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기인 2020년 2분기, 3차 대유행기인 2020년 4분기, 4차 대유행기인 2021년 3분기와 4분기에 단시간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됨에 따라

단시간 취업자 수의 증가세도 약해지거나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당 표준 근로시간대(36~44시간) 및 45시간 이상 장시간 취업자 수는 대유행 시기마다 일관되게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유행이 둔화되고 노동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한 2022년 1분기에는 54시간 이상 취업자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주당 54시간 이상 초장시간 취업자 수는 코로나 기간 내내 감소 추세를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와 코로나19의 영향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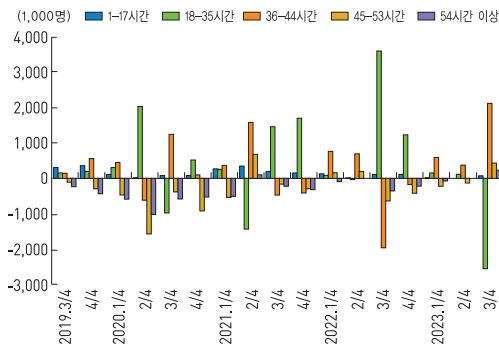
한편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에 접어든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의 주당 근로시간별 통계를 요약하면, 주당 18시간 미만 초단시간 및 18~35시간 단시간 취업자가 증가하고, 45~53시간 장시간 취업자와 54시간 이상 초장시간 취업자의 수가 감소하는 양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주당 18~35시간 단시간 취업자 수는 2022년 3분기,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0만여 명, 123만여 명이 증가하며 잇따른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주당 36~53시간 취업자가 각각 258만여 명, 58만여 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이를 상당히 흡수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단시간 취업자 수의 증가세는 2023년 들어 빠르게 약화되어, 2022년 하반기 증가폭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2023년 3/4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255만여 명이 감소하였다.



주당 18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의 경우, 2022년 2분기에 비해 3분기와 4분기에는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단시간 노동과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 둔화되어 2023년 1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폭이 2022년 2분기 수준으로 돌아갔으며, 2023년 2분기에는 소폭이지만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표준근로시간대 취업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2022년 연말까지는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세를 기록하다 202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V-14] 근로시간별 취업자 수 변화, 2019.3/4-2023.3/4



주: 1) 통계치는 전년 동분기 대비 취업자 수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분기.

팬데믹 상황에서 확대된 유연근무 양상은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국면에서 추세적으로 변화했다. <표 V-2>를 보면, 팬데믹의 영향이 약화된 2022년에 이미 전년에 비해 유연근무 이용률이 약간 감소했는데, 그 감소세가 2023년에도 이어졌다. 전체 15.6%의 임금노동자

가 유연근무를 활용했는데, 남성(17.1%)과 여성(13.9%) 모두 전년 대비 각각 0.2%p, 0.5%p 미세하게 하락한 결과다.

연령대별로는 집중 육아기 노동자가 모여있는 30~39세 집단의 활용률은 2023년 22.5%로 여전히 평균보다 높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1.3%p 하락했다. 혼인상태별로는 전년과 같이 기혼보다

<표 V-2> 유연근무 활용의 변화, 2017-2023

	2017 2020 2021 2022 2023				
전체	5.2	14.2	16.8	16.0	15.6
성					
남성	5.5	15.9	18.2	17.3	17.1
여성	4.9	12.0	15.2	14.4	13.9
연령					
15-29세	3.9	13.3	16.6	14.6	15.0
30-39세	7.7	19.9	23.6	23.8	22.5
40-49세	5.6	17.2	20.2	19.0	18.7
50-59세	5.0	12.2	15.0	14.2	14.6
60세 이상	1.6	4.9	5.6	5.9	5.3
혼인상태					
미혼	4.2	14.0	17.9	16.7	16.7
기혼	5.6	14.2	16.3	15.7	15.1
활용형태(복수응답)					
근로시간단축근무	9.9	13.1	10.1	11.0	9.6
시차출퇴근	38.4	31.2	29.9	31.7	33.0
선택적 근무시간	31.9	26.4	23.1	24.8	26.5
재택 및 원격근무	5.6	17.4	32.3	27.5	19.9
탄력적 근무	26.0	29.1	27.4	27.9	31.2
기타(재량근무 등)	9.1	10.2	8.7	9.1	9.2

주: 1)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미혼의 활용도가 높았는데, 미혼의 경우 16.7%로 전년과 동일한 데 반해, 기혼은 15.1%로 0.6%p 줄었다. 성별로는 남성(17.1%)이 여성(13.9%)보다 유연근무 활용률이 여전히 높았으며, 성별 차이는 2022년 2.9%p에서 2023년 3.2%p로 미세하게 늘었다.

유연근무 형태별 구성에서 가장 현격한 변화는 팬데믹 시기 그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던 재택 및 원격근무 활용 비율이 팬데믹 극성기였던 2021년 32.3%에서 포스트 팬데믹 초기였던 2022년 27.5%, 포스트 팬데믹에 완전히 접어드는 2023년 19.9%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반면, 팬데믹 이전 시기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시차출퇴근제와 선택적 근무시간, 탄력적 근무가 유연근무 활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이중 탄력적 근무의 증가(2017년 26.0%, 2021년 27.4%에서 2023년 31.2%)가 특히 눈에 띈다.

임금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월임금총액은 386만 9,000원으로 2021년 월임금총액 368만 9,000원과 비교할 때, 명목임금은 4.9% 상승했다. 2019~2020년간 상승률 1.1%, 2020~2021년간 상승률 4.6%의 임금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실질임금 상승률은 다르다. 2021년의 경우 2.0%로 0.5%에 그쳤던 전년에 비해 다소 상승했던데 비해, 2022년

실질임금 인상률은 하락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월임금총액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 기록한 마이너스 인상률이다. 전년 동분기 대비 실질임금 인상률은 2022년 1분기 3.2%에서 2~4분기 각각 -1.1%, -1.7%, -1.1%, 2023년 1~2분기 각각 -2.7%, -0.3%로 5분기 연속 하락했다. 2023년 8월 현재 월임금총액이 374만 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의 상승률을 보여준 데 반해,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해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포스트 팬데믹의 회복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잠시 주춤하던 성별 임금 격차는 팬데믹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듯 보였지만, 비정규직 내부에서의 성별 격차는 2020년 이후 벌어지고 있다(그림 V-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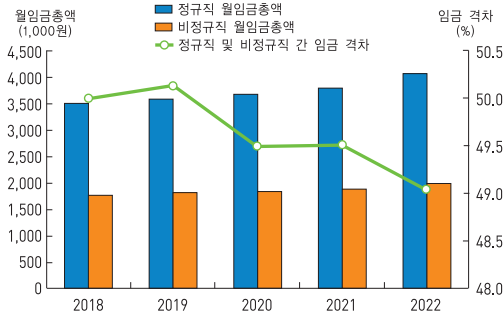
[그림 V-16]의 직종별 월임금총액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큰 임금 감소를 경험한 집단은 서비스 종사자이며, 반대로 가장 큰 임금 증가를 경험한 집단은 관리자이다.

관리자 직종의 경우 코로나19 시기에 임금총액의 증가율이 잠시 주춤하였으나, 그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시기의 임금 감소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 직종 모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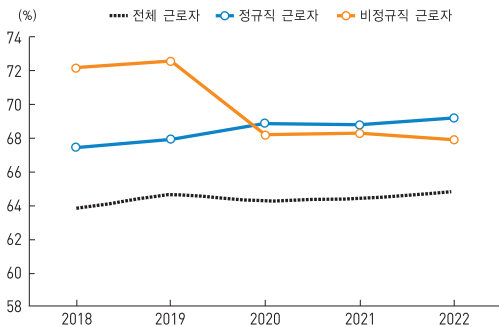


[그림 V-15]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2018-2022

1)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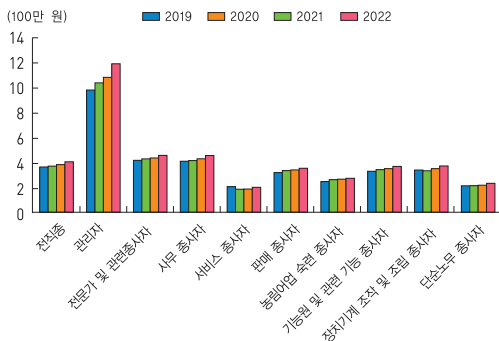


2) 성별 임금 격차



- 주: 1)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특수형태근로자도 포함되었음.
 2)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임금총액의 비율임.
 3) 성별 임금 격차는 남성 대비 여성 월임금총액의 비율임.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V-16] 직종별 월임금총액, 2019-2022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임금 격차는 벌어졌다. 서비스직의 경우 2019년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67.0%이던 것이 2022년 60.6%로, 관리직은 같은 기간 80.1%에서 76.9%로 하락했다. 그 밖의 직종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조립생산직을 제외하고는 성별 격차에 변화가 없거나 완화되었다.

육아휴직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0.8명 미만의 유례 없는 초저출산율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관련 정책도 보완되고 있다. 기존 1년에서 2024년부터 1년 6개월로 휴직기간을 연장한 것이나, 상사 승인 절차를 없애는 등의 정책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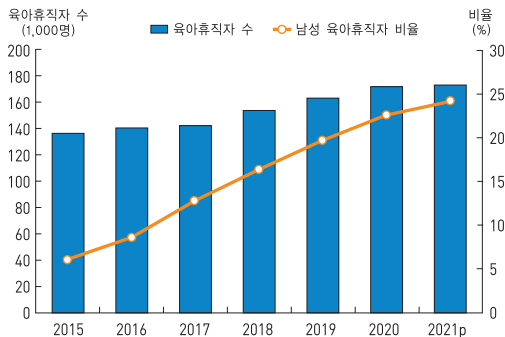
[그림 V-17]의 최근 육아휴직 활용 추이를 보면, 육아휴직자 수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한편,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5년 6.0%, 2018년 16.3%에 이어 2021년 24.1%로 지난 7년간 18.1%p 증가했다. 육아휴직자의 기업체 규모별 분포를 보면, 소규모 사업체로 갈수록 여성 비중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사용자의 대다수는 300명 이상 기업체에 몰려있다. 2021년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자의 64.5%가 300인 이상 기업체에 분포했으며, 남성의 경우는 이러한 쏠림 현상이 더 심해 71.0%가 이에 해당한다. 기업체 규모 간 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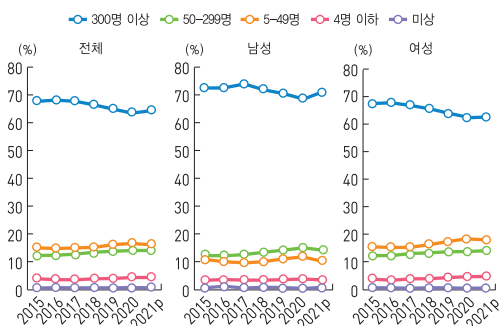
휴직 활용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V-17] 육아휴직자 및 기업체 규모별 분포, 2015-2021

1) 육아휴직자 수 및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2)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분포



주: 1) 육아휴직자 수는 시작일 기준임.

2) 2021년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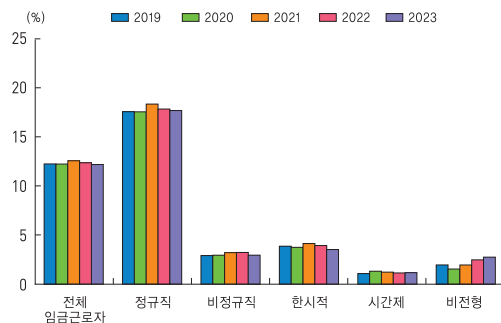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각 연도.

노동조합 조직률과 기타 노사관계

2023년 8월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본 노동조합 가입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1년 (12.6%) 전년 대비 약간의 증가 이후 2022년

12.4%, 2023년 12.2%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인다. 정규직의 경우도 2021년에 비해 2023년 0.7%p 하락했다. 다만, 비전형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2.8%)은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과 달리 2020년 1.6%에서 소폭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그림 V-18).

[그림 V-18]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가입률, 2019-2022



주: 1)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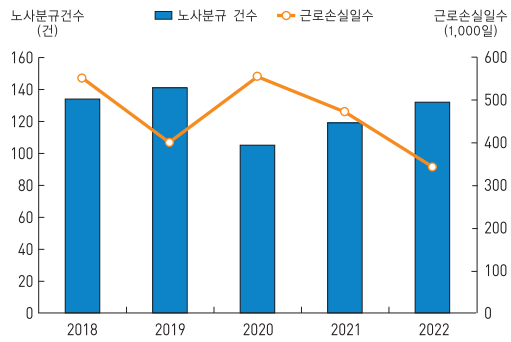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코로나19 극성기 다소 주춤했으나, 포스트 팬데믹 전환기인 2022년에는 팬데믹 이전인 2018년 수준으로 증가했다. 다만, 근로손실일수는 2020년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로 조기 타결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암시한다(그림 V-19).

지난 5년간 다소 소강상태였던 노사관계가 2021~2022년에 관찰된 반등 추세를 이어갈지, 또 2023년 노사분규의 폭발적 증가를 경험한 국제 추세를 반영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림 V-19]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2018-2022



출처: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각 연도.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 증가 추세와 세대별 노조 인식

권현지 (서울대학교)

-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7년 10.7%에서 2021년 14.2%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주요 산업 선진국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노조 조직률 감소 추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례적이다.
- 2017년 이후 노조 조직률 증가는 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후 공공부문 조직률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부문의 조직률과 조합원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건설업(2.8%p), 숙박·음식점업(1.2%p)을 비롯해 제조업 노조 가입률 감소를 상쇄할 만한 서비스업 부문의 가입률 증가가 있었다.
- 세대별 노조 가입률 추이는 베이비붐 이전 세대 및 베이비붐 세대의 추세적 감소, X세대의 유지, 그리고 M세대와 Z세대의 추세적 증가 등 세대별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 2017년을 기점으로 MZ세대의 노조 도구성에 대한 긍정 평가를 증가 역시 주목할 만하다. Z세대의 경우 부당대우 대응, 고용안정, 임금인상 세 측면 모두에서 2017년과 2018년의 전년 대비 긍정 평가율이 5%p 내외 상승했다.

최근 지구 곳곳에서 노동자 집단행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23년을 파업의 해라고 부를 정도였다.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핵심 요구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조응하는 임금 인상이었다. 대본 작가들에 이어 전례 없이 파업에 돌입한 미국 할리우드 연기자들은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로 AI를 활용한 디지털 복제(digital replica) 규제를 포함했다. ‘팬데믹 이후’ 빚어지고 있는 새로운 노동동향이다.

한국의 경우 위와 같은 분류 증가 추세는 아직 관찰되지 않지만, 최근 노사관계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통계가 포착되고 있다. 노동자의 집합적 힘(collective power)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노조 조직률 증가가 그것이다. 노조가 사회적 파트너십의 한 축을 형성하고 노사관계 제도와 정도가 높은 스웨덴이나 독일의 변화(각각 2000년 81%, 25% → 2019년 65%, 16%)가 보여 주듯, 산업 선진국의 노조 조직률 저하는 21세기의 보편 현상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노조 조직률 감소, 국제적으로도 낮은 조직률을 기록해 온 한국의 최근 조직률 증가세는 다소 예외적인 현상으로 주목된다. 이 글은 이러한 국내 조직률 증가 양상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이 현상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다.

특히 세대별 조직률 변화를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최근 조직률 증가가 노조 및 사회민주화를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가 점진적으로 퇴장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청년 세대가 부상하는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흥미로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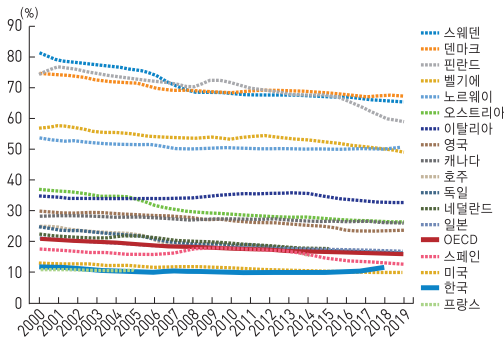


관련해, 조직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노사관계 및 노조 관련 인식의 변화 추세를 살폈다. 역시 세대별 특성을 함께 기술했다.

노조 조직률: 주요국과 한국의 추세 비교

지난 20여 년간 각국의 노조 조직률은 추세적으로 분명한 감소를 겪어 왔다(그림 V-20). 20세기 후반에 이미 시작된 변화가 21세기에도 지속, 심화되는 양상이다.

[그림 V-20] OECD 주요 국가의 노조 조직률, 200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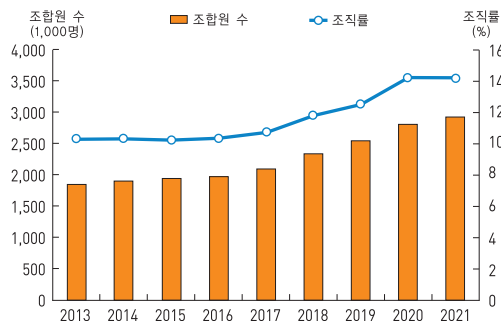
주: 1) 노조 조직률 =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 ÷ 전체 임금근로자 수) × 100.
2) 국가는 2000년 노조 조직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음.
출처: OECD, "Trade Unions: Trade union density (Edition 2021)",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2022.

탈산업화를 포함한 산업구조 변화, 소비사회 심화에 따른 노동자의 개인주의 성향 증가, 기업의 개인별 인적자원관리 고도화와 노조 회피 전략, 노동조합의 영향력 약화와 관료화 경향 등 노조의 재생산 실패 및 조직률 감소에는 조직 내

외부의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그림 V-20]이 예시하듯 감소세는 2000년에서 2019년 사이 유럽, 북미 그리고 동아시아에 분포한 주요 산업 선진국 전반에 걸쳐 있다. 2000년대 초 70% 이상의 조직률을 기록했던 북유럽, 30% 전후 중간 수준 조직률의 서유럽과 호주, 그리고 10%대 낮은 조직률의 남유럽과 미국 등 조직률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조직률 감소가 발견되었다. 미국 등 주요국 노조의 재활성화 시도(union revitalization)가 확산되고 있고 최근 주목할 만한 노조 결성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이들 변화가 조직률에 바로 반영되고 있지는 못하다.

한편, 이러한 흐름과는 다소 구별되게 한국의 최근 조직률은 [그림 V-21]이 보여주듯 고용노동부의 공식 집계상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10.3%에서 14.2%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림 V-21] 노조 조직률 및 조합원 수, 2013-2021



주: 1) 노조 조직률 = (전체 조합원 수 ÷ 조직대상 근로자 수) × 100.
2) 조직대상 근로자 수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조 가입이 제한된 공무원 및 교원을 제외한 근로자 수임.
출처: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 연도.



조직률이 조직대상자 즉 취업자 혹은 임금노동자의 규모에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매년 1% 내외의 규모 증가로 고용 규모가 안정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조직률 증가는 조직노동자의 순증으로 설명된다. 실제 [그림 V-21]에서 보듯 2013년 184만여 명이었던 조합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54만여 명으로, 코로나19 극성기로 고용이 감소했던 2021년 293만여 명으로 연평균 약 6%의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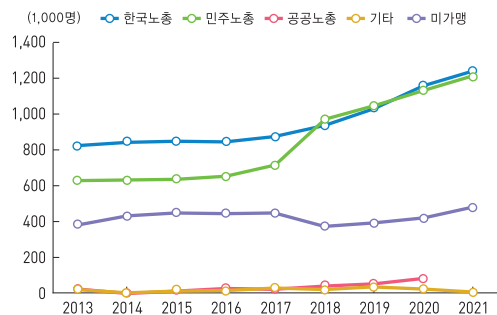
부문별 노조 조직률 추이

이러한 조직률 증가 원인 중 하나로 2017년을 전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효과가 제시될 수 있다. 노조 조직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이미 결성된 노조의 비중이 높은 공공부문의 특성상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의 대거 노조 유입이 조직률 증가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 [그림 V-22]에서 2017년 이후 조합원 수 증가 추세가 현저해 이러한 설명을 일부 뒷받침한다.

노조 총연맹별로 공공부문 조직에서 강세를 보이는 민주노총의 조합원 규모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그림 V-2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집중된 공공부문 조직률은 2017년 63.2%에서 2018년 68.4%, 2019년 70.5%

로 해당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 3년간 7.3%p 증가해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한다(그림 V-23). 또, 2017년 68.5%였던 공무원 조직률도 2018년 82.7%로 14.2%p 증가했다.¹⁾

[그림 V-22] 노조 총연맹별 조합원 수, 2013~2021



주: 1) 기타에는 전국노총(2015~2021년), 대한노총(2020~2021년), 선진노총(2019년), 국민노총(2013년) 등이 포함됨.
출처: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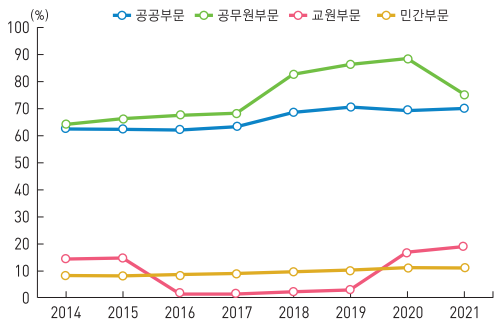
한편, 공공부문뿐 아니라 정규직화 정책이 확산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민간부문에서 역시 조합원 수가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 구성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자의 필요에 의한 혹은 노동조합의 의식적 조직 증대 노력에 의한 조합원 증가분이 추가적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그림 V-23]의 민간부문 조직률 변화는 그 개연성을 보여준다. 2014년 8.4%였던 조직률이 2018년 9.7%, 2021년 11.2%로 민간 부문에서도 굴곡 없이 7년

1) 민주노총 조합원 규모 상승에 기여한 공무원 조직률 증가는 당시 9만 6,000여 명 조합원의 공무원노조가 법외 노조 상태에서 법내 노조로 인정된 변화에도 크게 힘입었다.



간 2.8%p 증가했기 때문이다. 조합원 수로도, 2014년 164만여 명이었던 민간부문 조합원 수가 2019년 192만여 명으로, 그리고 2021년 214만여 명으로 추세적으로 그리고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집계로 본 조직현황은 노동자 혹은 노조의 집단적 노력에 의한 유의한 조직 증가를 추정하게 한다.

[그림 V-23] 부문별 노조 조직률, 2014-2021



주: 1) 노조 조직률 = (해당 부문 조합원 수 ÷ 해당 부문 조직대상 근로자 수) × 100.

출처: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 연도.

그런데, 노조가 설립된 모든 기관 및 사업체의 보고에 기반을 둔 사업체 단위 조사인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자료의 특성상 사업체의 부문별 특성을 넘어 어떤 특성을 지닌 노동자 개인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개인별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노조 가입 여부 문항에 대한 응답을 활용해 노동자 특성별 노조 가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노동자의 노동시장 위치별 노조 조직률 추이²⁾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 중 하나인 노동시장의 분절구조, 예컨대 근로형태별, 성별,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의 심대한 격차는 노사관계의 이중화에도 영향을 주고받는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고도로 분권화된 기업별 노조 및 교섭구조는 노동자 개인의 특성과 선호뿐 아니라 그가 처한 위치에 따라 조직률 격차를 만들어 낸다. 예컨대, 2019년의 경우 총 임금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가 12.3%인데, 이는 나머지 87.7%의 노동자가 비노조를 선호해 만들어진 결과와는 아니다. 그보다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조건 즉, 다니는 회사에 노조가 없거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조합원으로 남은 경우가 각각 74.5%, 7.2%에 이른다. 임금노동자 중 노조 가입 가능자는 18.3%에 불과하고, 이들에 국한하면 가입률은 67.2%에 이른다.

한국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개인의 선택보다는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에 더 좌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근로형태별 가입 현황은 이를 잘 예시한다. 정규직 노조 가입 가능자는 2019년 25.8%, 비정규직의 경우는 5.2%로 상당한 격차를 보여준다. 노조 가입 대상 중

2) 개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가입률은 앞서 살펴본 고용노동부의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와 달리 현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지는 않는다(2016년 12.0%, 2018년 12.5%, 2021년 12.6%). 즉 두 자료 간 노조 조직률 변화 추세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아래 개인별 조직률 추세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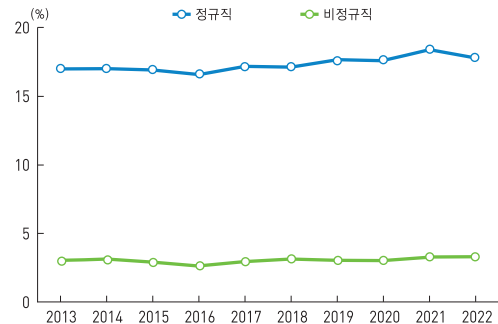


가입률에 있어서도 정규직의 경우 68.2%, 비정규직의 경우 57.9%로 10.3%p의 차이가 있어 근로형태에 따른 가입 기회 외 실제 가입 가능성이 만들어 내는 이중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 범주 안에서도 시간제 노동자 중 가입 가능자는 2.1%에 불과하고(기간제의 경우 7%) 이들 중 가입자도 53.7%로 상대적으로 낮다.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이 대변 기제를 더 결여하고 있고 이는 이들의 노동시장 취약성을 유지, 심화하는데 다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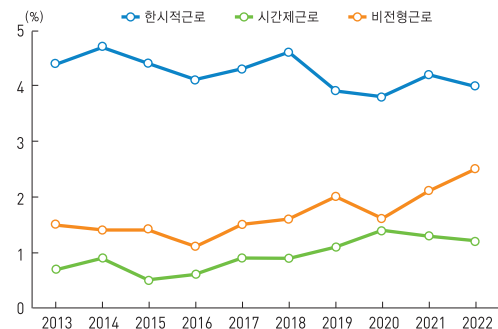
한편, [그림 V-24]에서 2016년 이후 노조 가입률의 상승폭은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에서 컸다는 점이 확인된다(정규직 1.2%p 상승, 비정규직 0.7%p 상승).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최근 상승 기조에도 반영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격차 축소에 노조 효과가 작용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비정규직 중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노동자들의 가입률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한시적 노동자의 가입률이 다소 줄어든 반면, 비전형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의 가입률이 두 배가량 증가했다. 요컨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위치를 점한 노동자가 조직률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 중에서는 조직률이 극히 미약하고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간제 및 경계 노동자의 노조 유입 증가가 특징적이다.

[그림 V-24] 근로형태별 노조 가입률, 2013~2022

1) 정규직 및 비정규직



2) 한시적근로, 시간제근로 및 비전형근로



주: 1) 노조 가입률은 해당 근로형태 근로자 중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의 비율임(각 연도 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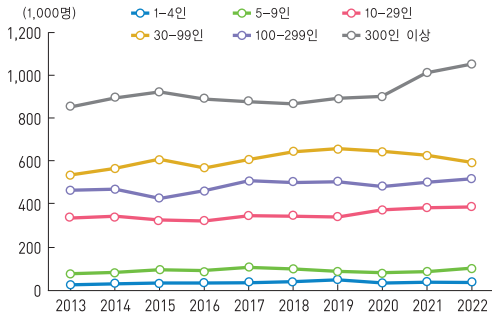
2) '시간제근로'는 상대표준임가액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해야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다음 [그림 V-25]는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합 가입 인원의 변화 추이다. 앞선 근로형태와 같이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서 가입인원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중견업체들이 다수 분포하는 100~29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도 가입인원의 증가를 볼 수 있다. 한편, 10~29인과 5~9인 등 소규모 사업체에서도 역시 소폭의 노조 가입인원 증가가 발견된다. 앞서 보았던 고용형태와 유사한 맥락에서 비교적 안정성을 지닌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성장이 두드러지는 한편, 영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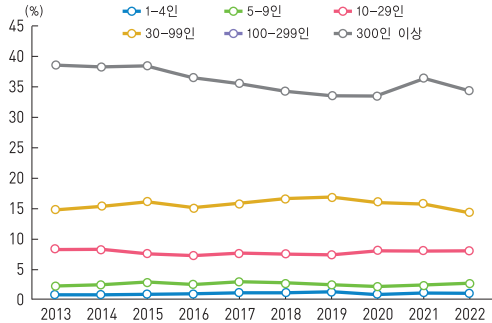


[그림 V-25] 사업체 규모별 노조 가입인원 및 가입률, 2013-2022

1) 노조 가입인원



2) 노조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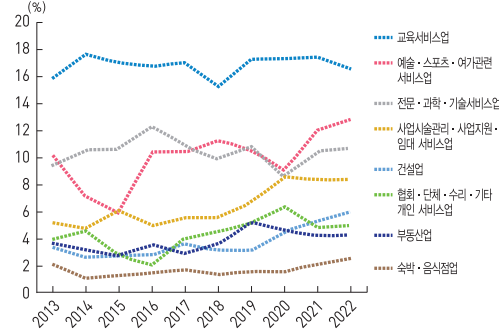
주: 1) 노조 가입률은 해당 근로형태 근로자 중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의 비율임(각 연도 8월 기준).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업체의 노조 조직화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취업자 유입 규모를 반영하는 노조 가입률 변화는 모든 규모에서 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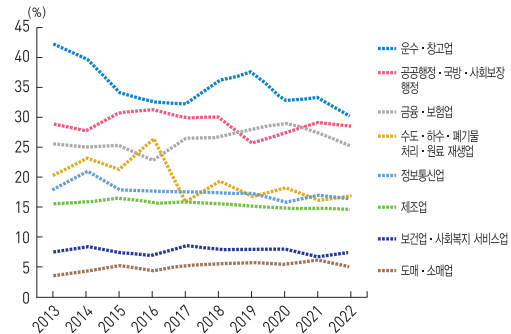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개별 노동자들이 위치한 산업별 노동조합 가입 추세를 살펴보자. [그림 V-26]에서 2018년 대비 2022년에 가입률이 증가한 주요 산업은 건설업(2.8%p),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2.9%p)이며, 숙박·음식점업,

[그림 V-26] 주요 산업별 노조 가입률, 2013-2022

1) 2018년 대비 2022년 증가한 산업



2) 2018년 대비 2022년 감소한 산업



주: 1) 노조 가입률은 해당 근로형태 근로자 중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의 비율임(각 연도 8월 기준).
2)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은 상대표준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 용시 유의해야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도 1%p 내외로 가입률이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에서는 2014년 이래 노조 가입률이 감소 추세다. 이 중 전통적으로 노조조직이 가장 강세를 보여 온 제조업의 가입률 감소는 강조할 만하다.

제조업의 가입률 감소에도 노조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노조 조직화에 추가적인 위축을 초래하

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불어 2018년 이래 산업별 노조 가입 인원과 가입률이 모두 증가한 건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부문의 변화는 앞서 근로형태별 비전형 노동자, 그리고 민간 영세규모 사업체에서 가입률이 늘고 있다는 발견과 연관된다.

세대별 노조 조직률 추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전환이 일어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에 출생한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분야에서도 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탈산업화, 소비사회의 본격화 등 전환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들 청년 세대와 산업화 시대 집단적 노사관계의 대표적 제도인 노조와의 거리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퇴장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진 청년 세대의 등장은, 서구가 경험했던 제조업의 고용 퇴조에 이은 노조 조직률 감소세의 공식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예상외의 증가세를 그리고 있는 조직률은 세대별 노조 가입 양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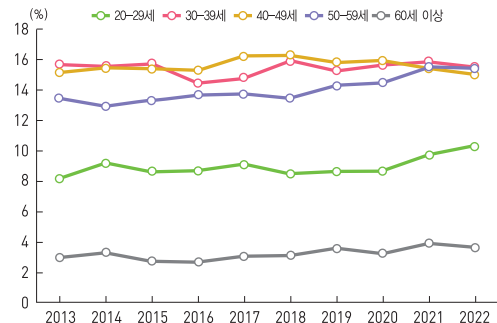
[그림 V-27-1]에서 2016년과 2022년 사이 가입률이 15%대에서 미세한 변화가 있었던 40~49세 집단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집단에서 노조 가입률이 증가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점진적 은퇴기로 임금노동자가 줄어드는 50세 이상 집단의 조직률이 자연적인 추세로 다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노조 가입률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젊은 층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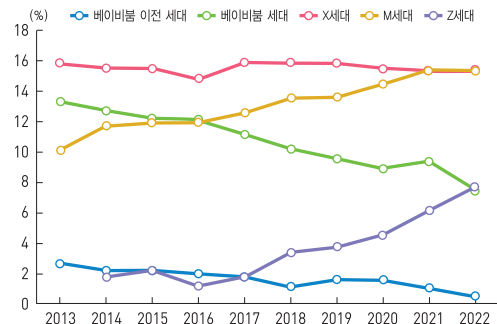
이를 세대로 베이비붐 이전 세대, 베이비붐 세대, 소위 X, M, Z세대로 각기 나누어 살펴본

[그림 V-27] 연령집단 및 세대별 노조 가입률, 2013~2022

1) 연령집단별



2) 세대별



주: 1) 노조가입률은 해당 근로형태 근로자 중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의 비율임(각 연도 8월 기준).

2)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1952년 이전 출생자, '베이비붐 세대'는 1953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 'X세대'는 1965년부터 1979년까지 출생자, 'M세대'는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출생자, 'Z세대'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출생자로 정의하였음.

3)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상대표준준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해야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것이 [그림 V-27-2]이다. 이 그림은 노조 가입률의 세대별 추세적 변화 즉 베이비붐 이전 세대 및 베이비붐 세대의 추세적 감소, X세대의 유지, 그리고 M세대와 Z세대의 추세적 증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30~40대를 구성하고 있는 M세대의 추세적 변화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조 조직률도 높은 고용 안정성이 높은 부문으로 유입이 증가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 조직률 자체는 낮지만, 그보다 더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는 Z세대의 최근 가입률 변화는 고용 안정 부문으로의 유입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라는 해석보다 개인 노조 가입 성향의 변화 혹은 노조 효과에 대한 기대 등 주관적 인식에 따른 행위를 내포할 수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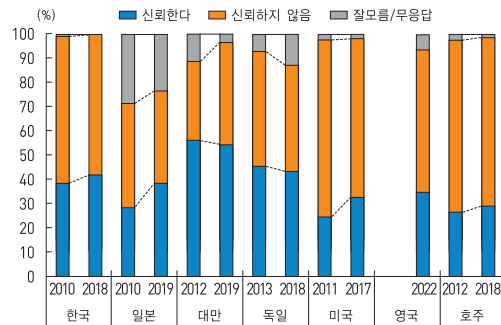
이에 따라 다음 절에서는 최근 조직률 증가를 한국인의 노조 가입 성향의 변화와 관련해, 세대별 노조 인식을 간략히 살펴본다. 가입 성향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이에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정도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도구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대체 변수로 활용했다.

한국인의 노동조합 신뢰도 변화

한국의 노조 신뢰 정도를 국제 비교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세계가치관조사」의 조사결과는 2010년대 후반의 노조 신뢰 정도가 2010년대 초반에 비해 미세하게 높아졌다는 점을 보여준다(그림 V-28).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한국이 노

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 정도로 비등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이질적 시각이 상대적으로 팽팽하게 공존하는 사회임을 보여준다.

[그림 V-28] 주요 국가의 노조 신뢰도 변화,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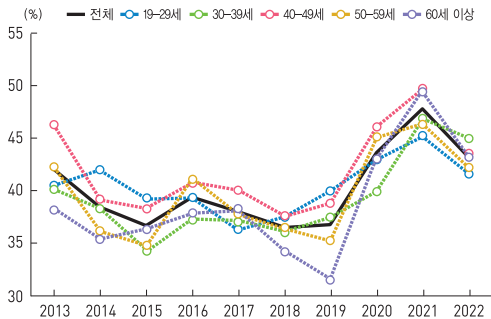


주: 1) 각국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선생님께서는 노동조합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신뢰’, ‘다소 신뢰’, ‘다소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등 4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신뢰한다’는 ‘매우 신뢰’와 ‘다소 신뢰’를 합한 비율이고, ‘신뢰하지 않음’은 ‘다소 신뢰하지 않음’과 ‘전혀 신뢰하지 않음’을 합한 비율임.
 4) 영국의 경우 6차 조사(2010-2014년)를 실시하지 않았음.
 출처: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World Values Survey: All Rounds - Country-Pooled Datafile, Version 3.0., 2022.

한편, 「사회통합실태조사」는 노조 조직률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2017년 이후의 노조 신뢰도 변화를 보여준다. 이 조사는 노조 조직률이 한층 증가했던 2018년 이후 노조 신뢰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조 청렴도에 대한 인식 역시 201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그림 V-29]에 제시된 연령집단별 노조 신뢰도를 보면, 시기별 응답의 진폭이 큰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집단에서 2018년 이후 신뢰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0대 청년층의

신뢰 정도가 2018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해당 기간 20대의 노조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그림 V-29] 연령별 노조 신뢰도, 2013~2022



주: 1)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단, 2020년 이전 조사는 19~69세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노조 신뢰도는 전체 응답자 중 노동조합에 대해 신뢰(매우 신뢰+다소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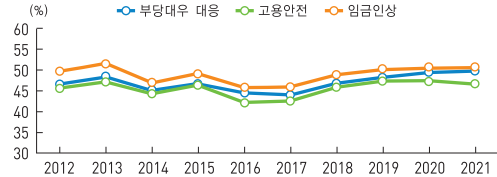
노동조합 도구성 인식

한편, 노동조합 도구성에 대한 기대나 효능감은 노조에 대한 신뢰보다 더 직접적으로 노조 가입에 작용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매년 노동조합이 부당대우 대응, 고용안정, 임금인상 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항목들을 노조 도구성 평가로 명명하고 다년간 추이와 함께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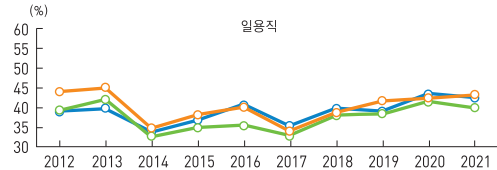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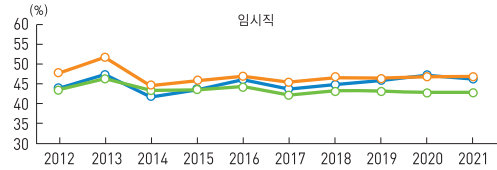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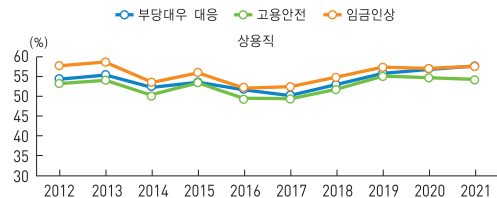
[그림 V-30]을 보면, 위의 세 측면 모두에서 노동조합이 도움이 된다는 긍정 평가율이 2017년을

[그림 V-30] 종사상 지위별 노조 도구성 평가, 2012~2021

1) 전체



2)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 1) 통계치는 노동조합이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 '고용안정', '임금인상' 등 각각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전체에는 비임금근로자 및 미취업자 등도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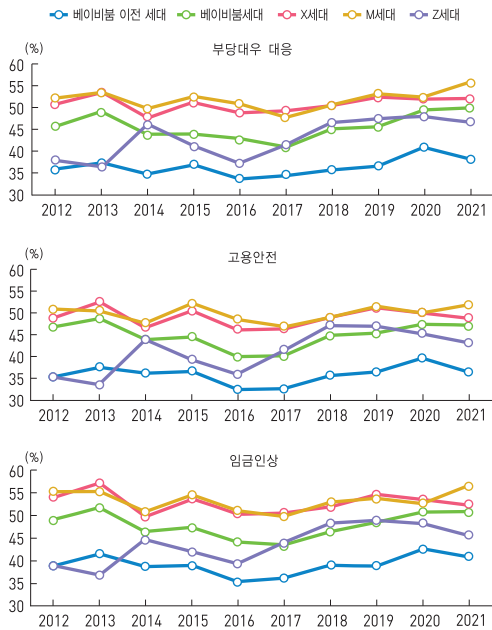
3) '09통합표본'을 분석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24차)」, 원자료, 2022.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임금노동자 집단으로 한정해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집단 순으로 노조 도구성에 대한 긍정 평가율이 높았다. 단, 2017년 대비 2021년 긍정 평가율의 증가폭은 일용직 집단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노



[그림 V-31] 세대별 노조 도구성 평가, 2012-2021



주: 1)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1952년 이전 출생자, '베이비붐 세대'는 1953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 'X세대'는 1965년부터 1979년까지 출생자, 'M세대'는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출생자, 'Z세대'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출생자로 정의하였음.
 2) 통계치는 노동조합이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 '고용안정', '임금인상' 등 각각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09통합표본'을 분석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24차)」, 원자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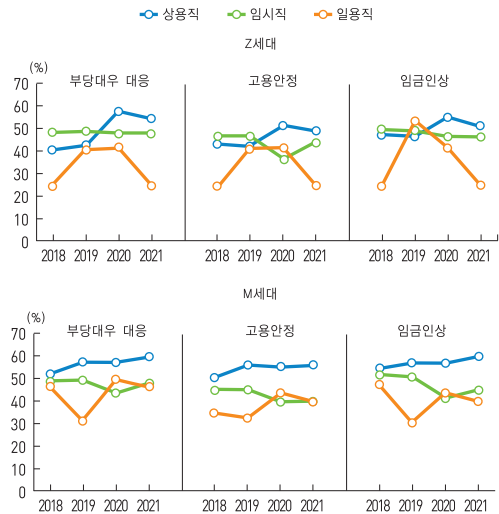
조 도구성의 세 측면별로 긍정 평가율의 증가폭을 비교해 보면,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관련 도구성 인식은 일용직 집단에서, 부당대우 대응은 상용직 집단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대별로 보면(그림 V-31), 전반적으로 M세대, X세대, 베이비붐 세대, Z세대, 베이비붐 이전 세대 순으로 노조 도구성에 대한 긍정 평가율이 높았으며, 2017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7년 대비 2021년 증가폭을 살펴보면, 세 측면

모두에서 베이비붐 세대와 M세대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V-31).

한편, [그림 V-32]는 2018년 이후 M세대와 Z세대의 노조 도구성에 대한 긍정 평가율을 임금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대별해 본 것이다.

그림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시피, 부당대우 대응,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 모든 측면에서 상용직 집단의 노조 도구성에 대한 긍정 평가율이 현저히 높다. M세대와 Z세대 사이에 큰 차이는 없지만, 상용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젊고 노동시장 정착도가 낮은 Z세대에서는 부당대우 대응에 대한 노조 도구성이, M세대에서는 임금인상과

[그림 V-32] MZ세대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노조 도구성 평가, 2018-2021



주: 1) M세대는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출생자, Z세대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출생자로 정의하였음.
 2) 통계치는 노동조합이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 '고용안정', '임금인상' 등 각각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18통합표본'을 분석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24차)」, 원자료, 2022.

부당대우 대응에 대한 노조 도구성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긍정 평가를 보여준다. 반면 노조 가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고, 포함되더라도 가입 가능성이 낮은 임시직과 일용직 집단의 경우 상용직에 비해 한층 낮은 도구성 인식을 보여준다.

또한 상용직 집단의 경우 M세대와 Z세대 모두 2018년 이후 노조 도구성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다. 이는 노동시장 경험이 노조의 필요성과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임시직 집단의 경우 Z세대에 비해 M세대의 노조 도구성 긍정 평가율이 비슷하거나 낮다는 점도 언급할 만하다. 이는 청년 세대 내에서 노조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30대에 접어들어 노동시장 불안정이 지속되는 경우 노조에 대한 불신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령별 노사관계 인식과 노조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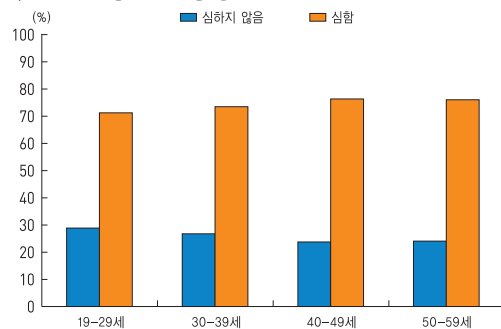
MZ세대의 노조 도구성에 대한 효능감과 노조 참여를 매개 혹은 조정하는 변수로서 노사관계 대립 및 갈등 정도에 대한 인식이 작용한다는 시각도 있다. 즉,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노조가 실용적 도구성을 높일 수 있고, 그 기대감이 노조 참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림 V-33]은 연령집단별로 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 정도에 대한 인식과 갈등 정

도 인식에 따른 노조 참여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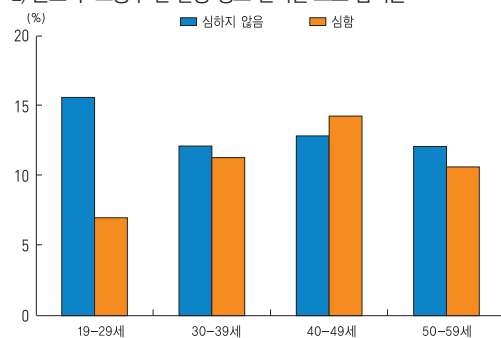
우선 모든 세대에서 노동자와 고용주 간 갈등 정도가 심하거나 매우 심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70%를 넘을 정도로 높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를 갈등적으로 인식하는 노동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갈등 인식 정도에 따른 노조

[그림 V-33]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근로자-고용주 간 갈등 정도 인식과 노조 참여율, 2022

1) 근로자-고용주 간 갈등 정도 인식



2) 근로자-고용주 간 갈등 정도 인식별 노조 참여율



주: 1) 전국 19~59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근로자-고용주 간 갈등 정도 인식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심하지 않다’부터 ‘매우 심하다’까지 4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전혀 심하지 않다’와 ‘별로 심하지 않다’를 합해 ‘심하지 않음’으로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를 합해 ‘심함’으로 분류하였음.

3) 노조 참여율은 현재 노동조합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등에 소속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2022



참여율을 보면, 대체로 갈등 인식이 낮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조 가입률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19~29세 집단은 갈등 인식에 따른 노조 참여율 격차가 크다. 30대와 40대의 경우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갈등에 대한 인식과 참여율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다. 20대와 마찬가지로 30대의 경우 갈등 정도가 높다고 생각할 때 노조 참여가 다소 낮다.

맺음말

이 글에서는 한국의 최근 노조 조직률 증가 현상에 대해 이해해 보고자 했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고, 국제적으로도 낮은 조직률을 기록해 왔다. 2017년을 기점으로 한 최근 노조 조직률의 증가세는 노조 조직화에 불리하게 진행된 한국의 산업 및 노동력 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특히 21세기 들어 선진 산업국들에서는 노조 조직률 저하가 보편적인 현상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 노조 조직률의 증가세를 이해하기 위해 노동자의 노동시장 위치별 혹은 개인 특성별 노조 가입률의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근로형태별로는 고용안정성이 있는 노동자들의 가입률이 여전히 높고, 최근 들어 민간 영세 사업체, 취약 노동자의 가입률은 낮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노조 조직화가 상대적으

로 용이하다고 평가되는 제조업의 노조 가입률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 직종 전반에서 노조 가입률이 증가해 전체 노조 조직률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최근 노조 가입률의 증가세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는 2017년 당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조치이다. 당시 공공부문 사업체들의 조직화 정도가 높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노조 가입 대상자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서 노조 가입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폭이기는 하지만 취약한 민간부문에서도 노조 가입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노조 가입 대상 노동자의 증가만이 아니라 노조 가입 필요성을 느끼는 노동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한편, 세대별로는 노조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M세대와 Z세대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세대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생산직 비중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노조에 대한 관심도 전반적으로 적다고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결과다. 이들 세대의 노조 가입률 증가세는 노조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노조 효능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는 노조를 둘러싼 긍정 및 부정 인식 간에 팽팽한 긴장이 있고, 노사관계가 갈등적이라는 인식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젊은 세대의 노조 효능감이 높아진 것은 노사관계에 대한 긍정 인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 참여와 노사관계에 대한 갈등적 인



식 사이에는 부(否)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평균적인 세대별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세대 내의 인식 차이와 행위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향후 노사관계 갈등 양상과 관련하여 건설업, 숙박·음식점업을 비롯한 영세 서비스업 부문의 노조 조직률 증가, 여전히 극히 낮은 수

준이지만 시간제 및 비전형 노동자의 최근 조직률 증가세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문은 사용자가 특정되기 어렵고 사용자의 자원 동원 능력 역시 낮으므로 이들의 조직화는 노사관계 갈등 양상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조정 능력,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난 20년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 및 구조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 2000년대 이래 산업재해율은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 수준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 2010년대 중반부터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요양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인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승인 건수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 산업재해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50대 이상 남성 근로자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2020년에 사고로 사망한 882명의 약 절반이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50대 이상 근로자였다.
- 산업별로는 기타의 사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고사망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 및 사업장 규모에서는 중고령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안전건강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다.
- 2022년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2022년과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제도와 정책의 언어로 표현한 지 40여 년이 되었다.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제정되

었고, 1987년에는 노동부에 산업안전국이 설립되었다. 1987년 민주화의 분위기에서 문송면의 죽음과 원진레이온 직업병 인정 운동을 겪으면서 산안법이 전부개정된 때가 1990년이다. 이때부터 약 30년간 유지된 법체계의 기본틀이 최근 크게 바뀌었다. 2018년에 산안법이 전부개정되었고, 2021년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¹⁾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에 본격화된 고용관계 변화의 맥락에서 노동안전건강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노광표, 2020; 남궁준 외, 2022)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글은 노동안전건강 의제에 대한 관점을 기술공학적·의학적 접근에서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커지는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와 구조를 개괄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직후인 2001년부터 2022년을 관찰 기간으로 설정해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확인하고, 산업재해 취약계층과 취약부문을 중심으

1)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 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었다.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24년 1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로 주요 현황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본다. 분석자료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현황」을 주로 활용하였다.

산업재해 발생 추이

먼저 산업재해 발생률의 추이를 확인해 보자 (그림 V-34).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는 요양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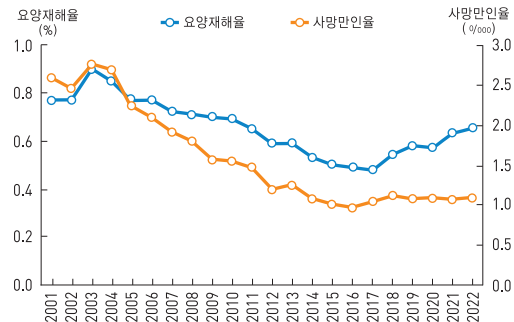
요양재해율은 2004년부터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0년대 중반 정체 이후 약간 상승했다. 사망만인율은 감소세가 더 가파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질병사망자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고사망자 수 감소세는 완만하다.

한국 사회의 산업재해 발생 수준은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그림 V-35). 2000년대 초반 이래 한국의 사망사고재해 발생 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국가와의 격차가 좁혀졌지만 여전히 차이는 상당히 크다. 한국의 수준은 미국과 함께 높다. 사망재해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영국과 독일이고, 중간 수준인 국가는 호주와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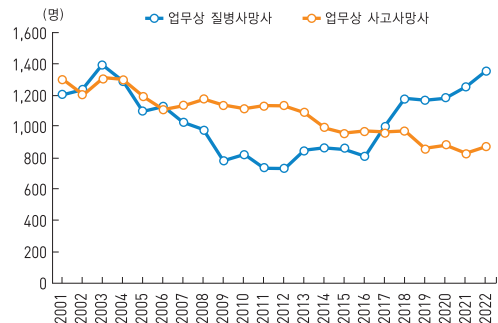
2) 산안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제2조)이다. 사업주는 "사망이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을 초래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산업재해 통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받은 경우"가 집계된다.

[그림 V-34] 산업재해 발생률, 2001-2022

1) 요양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2) 업무상 질병 및 사고 사망자 수



주: 1) 요양재해율 = (요양재해자 수 ÷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수) × 100.

2) 사망만인율 = (업무상 사망자 수 ÷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수) ×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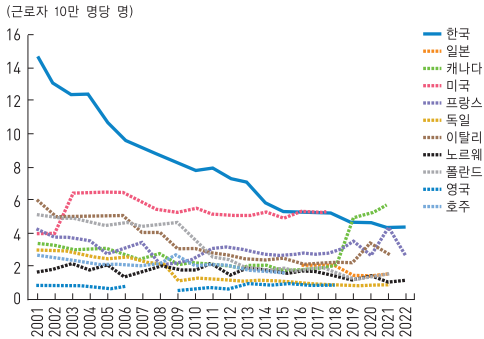
3) 2012년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의 업무상사고사망자와 사망만인율을 비교할 때에 주의가 필요하다.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사업장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 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에서 제외되었음(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한국 사회의 요양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의 변화 추이를 산업재해 발생 수준의 감소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노동환경의 실질적 개선으로 해석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1990년대에 나타난 가파른 감소세(이경용, 2010; 박두용, 2016)가 2000년대에 둔화되고 2010년대에 사라졌다는 점에 주목하면, 노동환경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V-35] OECD 주요 국가의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 2001-2022



주: 1) '치명적 산업재해'는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이 발생한 산업 사고의 결과로, 재해도수율, 재해강도율, 사망심만인율 등으로 측정함. 한국은 업무상사고 사망심만인율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OECD회원국)", 국가통계포털, 2023.10.

재해를 변화를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분모가 되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의 변화다. 1963년 산재보험법이 제정된 이래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꾸준히 늘었다. 1982년 346만 명이었던 가입자는 2000년에 949만 명으로, 2022년(6월)에 1,987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1990년대의 산업 재해를 감소세는 분모의 크기 증가로 일정 정도 설명할 수 있다. 2000년대에도 비슷한 비율로 가입자가 증가했는데, 그에 비례해 산업재해율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산재 발생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발생 요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다만 [그림 V-34]에서 확인한 2010년대 중반의 변화 양상은 추가 해석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2011년 집계 방식 변화에 따라 그 수가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일정 규모로 유지되고 있던

사고사망자 수가 줄었고, 질병사망자 수는 늘어났다. 이것은 일정 수준 한국 사회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 시기에 재해판단범위가 확대(고용노동부, 2022b: 417-421)되고 승인율이 높아졌다.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 요양재해를 및 질병사망자 증가 추이의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 업무상 질병 승인율 변화다. [그림 V-36-1]에서 업무상 질병 승인 신청 건수는 2000년대 중후반 8,000건대에서 2010년대 중후반 1만 건대로 늘어났다. 승인율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낮아졌다가 2010년대 후반에 높아진다. 약 10년간 승인율이 하락·정체한 것은 2008년에 도입된 질병판정위원회 제도의 효과로 평가된다. 의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판정 결과가 낮은 승인율로 나타나자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했고³⁾ 정부가 이를 일부 반영해 2011년 11월, 2013년 7월, 2017년 9월 등에 걸쳐 위원회 구성과 질병 판단 기준 및 절차를 바꾸면서 2017년부터 인정률이 50%대 이상으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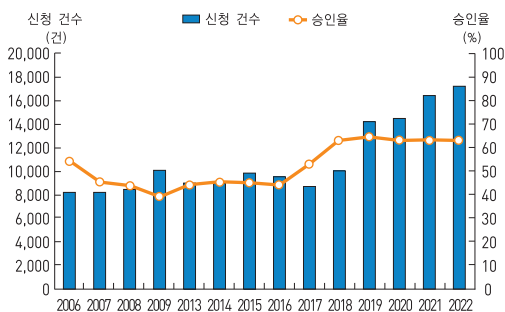
[그림 V-36-2]의 질병별 신청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뇌심혈관질환은 2010년대에 와서 감소세를 보인다. 이는 노동시간 제도의 변화 및 그와 연동된 뇌심혈관질환 판정 기준 변화와 관련

3) 2010년 11월부터 노사가 참여한 '산재보험제도개선 T/F'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참여 확대, 판정위원 확대, 현장조사 강화, 질병명 변경 승인 절차보완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고용노동부, 2022b: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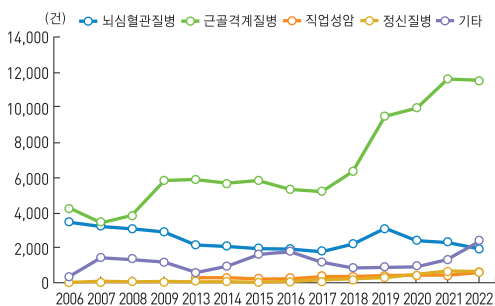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골격계질환은 꾸준히 증가했다. 질병인정기준 완화와 함께 고령 근로자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직업성 암 범주는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 14종을 추가한 2013년부터 등장한다. 정신질병은 2006년 83건에서 2017년 186건, 2022년 658건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했다. 기타 질환 신청 건수가 2020년부터 증가했는데 이는 보건의료계 종사자 등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신청 건수

[그림 V-36] 질병별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 및 승인율, 2006-2022

1) 전체 신청 건수 및 승인율



2) 질병별 신청 건수



주: 1) 승인율 = (승인 건수 ÷ 신청 건수) × 100.

2) '기타'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레이노증후군, 세균성질병, 간질환, 기타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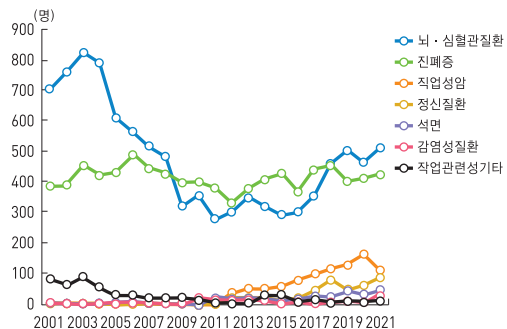
3) 2010~2012년은 자료 없음.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 각 연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감염성 질환'으로 승인된 건수는 2019년 84건에서 2020년 240건, 2021년 630건으로 급증했다.

사망재해로 한정해서 보더라도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 변화 추이가 확인된다. [그림 V-37]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진폐증 사망자 수를 제외하고 보면,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변화 추이는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승인을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망재해자 수에서도 직업성암이나 정신질환의 비중이 2010년대에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37] 질병별 사망재해자 수, 2001-2021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산업재해 취약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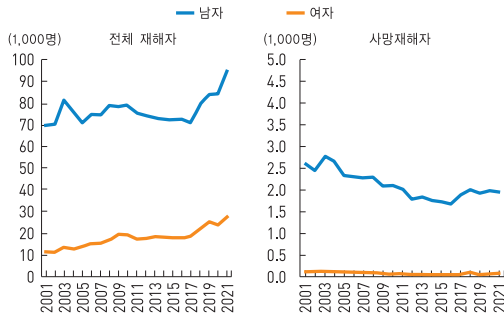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 287만 6,635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937만 8,565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는 12만 2,713명이다. 이중 사망자가 2,080명이고, 부상자가 10만 1,182명이며, 업무상 질병 요양자가



1만 9,183명이다(고용노동부, 2022a). 이하에서는 한 나라의 산업재해 발생 수준을 나타낸다고 여겨지는 사망재해자 수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V-38]에서 전체 재해자 중 여성은 2021년 22.7%이고, 사망자 중 여성은 4.6%이다. 여성의 재해자 비중은 2001년의 14.3%에서 점차 늘었으나 사망자 비중은 2001년의 4.8%와 거의 차이가 없다.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1.4%에서 2021년 43.0%로 근소하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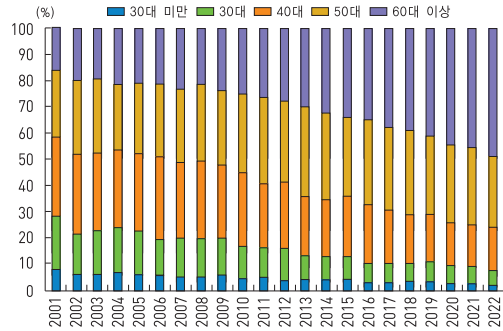
[그림 V-38] 성별 산업재해자 수, 2001~2021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사망재해자의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이 15~30% 내외로 연령대별 분포가 고른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40대 이하 비중은 작아지고 60대 이상 비중은 커지고 있다. 2022년에는 40대 미만이 7.7%, 40대 16.6%, 50대 26.8%, 60대 이상이 49.0%를 차지한다(그림 V-39).

[그림 V-39] 산업재해 사망자의 연령구성, 200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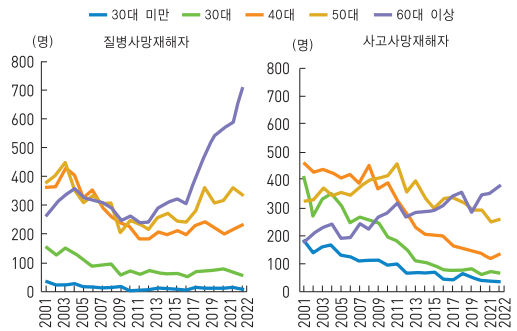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사망재해자를 질병사망재해자와 사고사망재해자로 구분해 보면, 60대 이상 근로자 비중 증가の特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40]에서 질병사망재해자 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3~2004년을 기점으로 전 연령대에서 사망자 수가 감소하나 2010년대 초반에 감소세가 멈춘다. 이 무렵부터 40대~50대 중장년층에서는 사망재해자 수가 늘어나며, 60대 이상에서는 급증한다. 반동의 한 요인은 앞서

[그림 V-40] 연령대별 질병사망 및 사고사망 재해자 수, 2001~2022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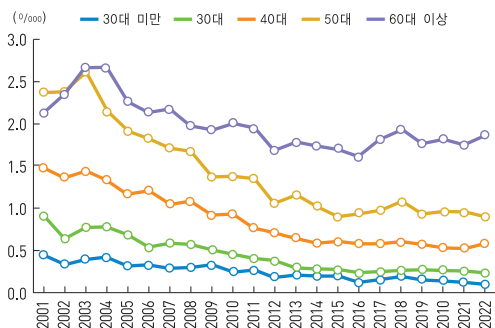
[그림 V-37]에서 확인했듯이 새로운 질병 범주 도입과 질병사망인정 기준의 완화이다.

질병사망재해보다 의미가 좀 더 분명한 사고 사망재해자의 수는 전반적으로 2000년대 이래 완만하게 감소했지만 60대 이상에서는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사망재해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의 11.3%에서 2022년의 43.5%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 그림을 제대로 읽으려면 노동인구의 연령구성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림 V-41]은 이를 고려하여 취업자를 분모로, 사망재해자를 분자로 계산한 연령대별 사망만인율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전 연령대에서 사망만인율이 낮아졌지만 2010년대 초반부터는 감소세가 둔화되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사망만인율은 2010년대 이후 정체 추이, 또는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60대 이상과 다른

[그림 V-41] 연령별 사망만인율(취업자 대비), 2001-2022



주: 1) 사망만인율 = (사망재해자 수 ÷ 취업자 수) × 10,0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연령대의 격차가 최근에 와서 더 커졌다.

고령노동자는 대체로 단기 일자리에서 일한다. 즉 근속기간이 짧다. 근속기간별 사망재해자 수준을 보면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고 10년 이상인 경우가 그다음으로 많다. 이것은 사망재해 발생 맥락의 특징을 드러낸다. 6개월 미만에서는 사고사망재해인 경우가 많고, 10년 이상에서는 질병사망재해인 경우가 많다. 질병재해의 경우 재해인정의 주요 요건이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이기 때문이다.

〈표 V-3〉은 연령대와 근속기간을 교차해 사고사망재해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6개월 미만 근속인 40대 이상의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대 이상이면서 6개월 미만 중 72.6%가 건설업에 종사했으며, 70.6%는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47.1%는 20억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다. 이들 중 46.0%는 떨어져서 사망했다.

한편 30대 이하이면서 근속기간이 짧은 이들의 상당수는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2020년에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94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882명의 10.7%를 차지한다(정연·이나경, 2022).⁴⁾ 이는 2001년의 4.2%에서 꾸준히 늘어난 것(남궁준 외, 2022: 147)으로, 외국

4) 산업재해 통계에서 늘 숨겨져 온 이들이 있다. 민간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이 아닌 별도 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직업군인과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이다. 2021년 기준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자는 90명이다. 농·어업인 및 근로자 사망자는 농업인이 232명, 어업인이 129명이다. 이들을 포함하면 2021년 사망자 수는 기존의 2,080명에서 2,531명으로 많아진다. 농어업인의 경우 보험 가입률이 60%대 수준으로 높지 않아 숨겨진 사망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 노동자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3%대인 것을 고려하면 높은 비중이다.

산업재해는 50대 이상 임시·일용직 남성 근로자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2020년에 사고로 사망한 882명의 47.2%(416명)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50대 이상 근로자였다. 이는 국가승인통계인 「근로환경조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집단이기도 하다.

〈표 V-3〉 연령 및 근속기간별 사고사망재해자 분포, 2020

	6개월 미만	6개월-1년	1-3년	3-5년	5년 이상	합계
사고사망재해자 수(명)						
30대 미만	27	6	8	1	-	42
30대	33	5	16	5	5	64
40대	77	19	16	9	16	137
50대	179	25	29	18	41	292
60대 이상	237	24	40	16	30	347
합계	553	79	109	49	92	882
비율(%)						
30대 미만	3.1	0.7	0.9	0.1	-	4.8
30대	3.7	0.6	1.8	0.6	0.6	7.3
40대	8.7	2.2	1.8	1.0	1.8	15.5
50대	20.3	2.8	3.3	2.0	4.6	33.1
60대 이상	26.9	2.7	4.5	1.8	3.4	39.3
합계	62.7	9.0	12.4	5.6	10.4	100.0

주: 1) 비율은 전체 사고사망재해자 중 해당 연령대 및 근속기간 사고사망재해자의 비율임.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원자료,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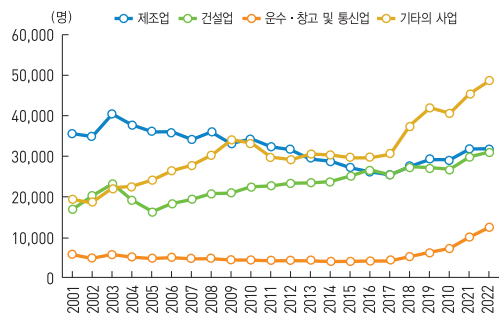
산업재해 취약부문

앞에서 확인한 취약 집단이 종사하는 노동환경은 사업장의 특징과도 연결되어 있다. 업종별로 요양재해자 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타

의 사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순으로 재해자 비중이 크다. 최근으로 올수록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기타의 사업과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그림 V-42).

기타의 사업에서는 청소나 경비와 같은 시설관리서비스업이나 교육·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이 크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는 육상 및 수상으로 이루어지는 여객·화물운수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그림 V-42] 주요 산업별 요양재해자 수, 2001~2022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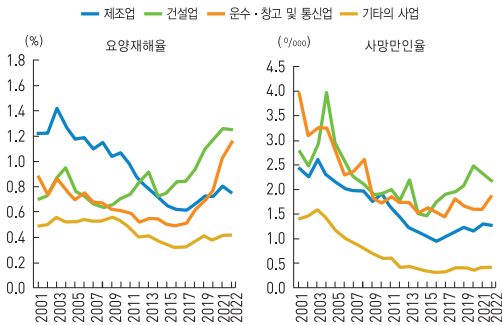
근로자 수 변화를 고려한 재해율을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자.⁵⁾ [그림 V-43]을 보면, 요양재해율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타의 사업이 낮다. 사망만인율은 건설업과 운수·

5) 광업은 재해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제외했다. 분자가 되는 재해자 수에 비해 분모가 되는 근로자 수가 적기 때문이다. 재해자의 상당수는 과거 석탄 채석업에 종사했던 이들로 진폐증을 앓고 있다.

창고 및 통신업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조업이 중간 수준이며, 기타의 사업이 낮은 수준이다.

요양재해율과 사망만인율 모두 2000년대 초반에 상승했다가 곧이어 일정 기간 감소한 후 2010년대 중반부터 다시 증가한다. 요양재해율은 건설업과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2010년대부터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은 완만하게 감소하다 최근 증가추이를 보인다. 사망만인율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래 모든 산업에서 감소세가 나타났지만 2010년대 중반에 오면 감소세가 멈추고 정체, 또는 증가 추이가 나타난다.

[그림 V-43] 주요 산업별 산업재해율, 200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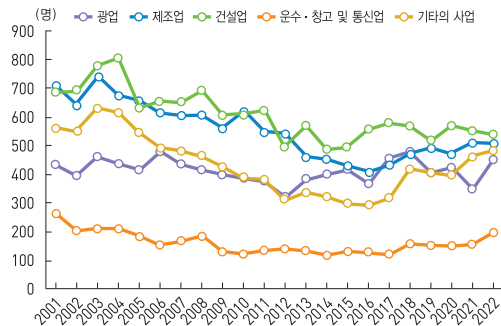
- 주: 1) 요양재해율 = (요양재해자 수 ÷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수) × 100.
 2) 사망만인율 = (업무상 사망자 수 ÷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수) × 10,000.
 3) 2012년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의 업무상사고사망자와 사망만인율을 비교할 때에 주의가 필요함.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사업장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 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에서 제외되었음(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사망재해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건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 광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순

으로 많다. [그림 V-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종 대다수에서 사망자 수가 줄어들다가 2010년대에 오면 감소세가 둔화되거나 정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201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감소했다가 2015~2016년을 기점으로 상승했다. 기타의 사업도 최근에 상승했다. 광업은 2012년을 기점으로 상승했다.

[그림 V-44] 산업별 사망재해자 수, 200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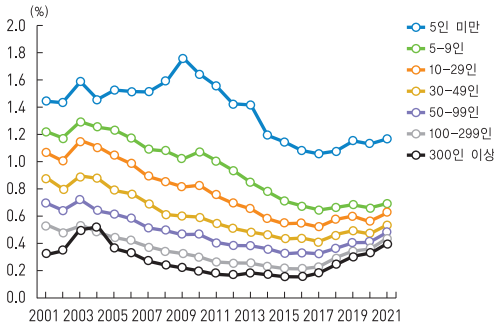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일차 요인은 사업체규모다. [그림 V-45]에서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요양재해율이 낮은 것은 지난 20년간 변함이 없다. 변화 추이도 유사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완만하게 감소하다, 2010년대 중반부터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규모별 변화 수준은 다소 다르다. 5인 이상 중규모 수준에서 재해율이 하락한 한편, 대규모 수준에서는 재해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규모별 차이가 최근으로 올수록 좁혀졌다. 그러나 5인 미만에서는 감소세가 강하지 않았다. 그 결과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격차는 2000년대보다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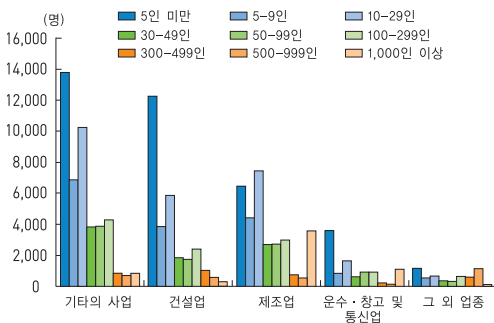
[그림 V-45] 사업체규모별 요양재해율, 2001~2021



주: 1) 요양재해율 = (요양재해자 수 ÷ 산재보험적용 근로자 수) × 1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연도.

산업과 사업체규모를 교차해서 보면, 산업재해 발생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V-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타의 사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 재해 발생 규모가 큰 산업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10~29인 사업장이다.

[그림 V-46] 산업 및 사업체규모별 요양재해자 수, 2021



주: 1) '그 외 업종'에는 광업, 임업, 어업, 농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포함됨.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2021.

한편 30인을 경계로 발생 수준이 한 차례 하락하고, 300인을 경계로 또 한 차례 하락하는 모습

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재해가 상당 수준 발생한다. 이것은 두 산업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속기간이 긴 노동자들의 질병 재해 발생(인정)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짐작된다.

사고사망재해자를 기준으로 보면, 건설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제조업이 1/4 정도를, 나머지가 1/4을 차지한다. 업종과 사업체규모를 교차했을 때 가장 비중이 큰 범주는 건설업의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여기서 발생한 사망재해가 전체의 23.1%이다(표 V-4).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용관계에 따른 차이다. 2019~2021년에 발생한 중대재해⁶⁾ 현황을 원청과 하청으로 구별해 분석한 자료(남궁준 외, 2022: 31~37)에 따르면, 3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2,261건 가운데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는 786건(34.8%)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는 49.8%,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각각 26.7%, 12.4%가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하청 재해의 비중이 컸다. 이것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독립기업일 가능성이 크고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하청관계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건설업에서도 공사금액이 클수록 하청재해의 비중이 컸다. 이러한 경향은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위험을 외주화하는

6)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참고한다면 <표 V-4>에서 확인한 사고사망자 분포에서 건설업으로, 또 규모가 큰 사업체로 분류된 사망자에서 하청 근로자의 비중이 클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산업재해는 기타의 사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히 사고사망재해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사고사망자 가운데 약 37%는 하청업체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는

데 이들은 주로 건설업과 제조업의 대규모 사업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V-4>에서 비중이 큰 범주는 중고령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남궁준 외, 2022). 외국인 노동자 비중도 큰 곳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 중 고령층과 이주노동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고용관계로 보면 원·하청 관계 및 특수고용형태와 플랫폼노동이 증가하고 있다(노광표, 2020). 노동력 구성 및 고용관계의 변화 추이는 노동안전건강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표 V-4> 산업 및 사업체규모별 사고사망재해자 분포, 2021

	건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그 외 업종	합계
사고사망재해자 수(명)						
5인 미만	191	42	38	28	19	318
5-9인	59	25	23	9	4	120
10-29인	78	46	32	16	5	177
30-49인	19	22	9	2	3	55
50-99인	19	17	10	8	-	54
100-299인	28	17	7	3	1	56
300인 이상	23	15	4	6	-	48
합계	417	184	123	72	32	828
비율(%)						
5인 미만	23.1	5.1	4.6	3.4	2.3	38.4
5-9인	7.1	3.0	2.8	1.1	0.5	14.5
10-29인	9.4	5.6	3.9	1.9	0.6	21.4
30-49인	2.3	2.7	1.1	0.2	0.4	6.6
50-99인	2.3	2.1	1.2	1.0	-	6.5
100-299인	3.4	2.1	0.8	0.4	0.1	6.8
300인 이상	2.8	1.8	0.5	0.7	-	5.8
합계	50.4	22.2	14.9	8.7	3.9	100.0

주: 1) 비율은 전체 사고사망재해자 중 해당 산업 및 사업체규모의 사고사망재해자의 비율임.

2) '그 외 업종'에는 광업, 임업, 어업, 농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포함됨.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20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변화

2018년에 산업법이 전부개정 되고 2021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00년대 이래 산업재해 수준 감소세가 정체 국면에 있었던 것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면서 법제정의 효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컸다. 1년이 갓 지난 현재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등 특수 요인의 영향력과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 다만 탐색 수준에서 2021년과 2022년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사고사망재해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해당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유족급여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산업재해 통계의



한계를 고려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가 2022년부터 집계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자료로 보면, 2022년의 사고사망자는 644명(611건)이었다. 이는 전년 683명 대비 39명(54건) 감소한 것이다. 건설업에서는 18명(25건)이, 제조업에서는 8명(6건)이, 기타 업종에서는 13명(23건)이 줄었다.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사액 50억 미만, 이하 50억 미만)에서는 47명(50건)이 줄었고, 50인 이상(건설업의 경우 공사액 50억 이상, 이하 50억 이상)에서는 8명(4건 감소)이 늘었다(고용노동부, 2023a).

2023년 1분기를 기준으로 봐도 사고사망자는 128명(124건)으로, 전년의 147명(133건)에서 19명(9건)이 줄었다. 건설업에서는 6명(1건)이 줄었고, 제조업에서는 20명(16건)이 줄었다. 기타업종에서는 7명(8건)이 늘었다. 50인 미만(50억 미만)에서는 79명으로 같았고, 50인 이상(50억 이상)에서는 19명(8건)이 줄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의 발생 감소와 제조업 등 전반적인 경기 상황 둔화”를 한 요인으로 꼽았다(고용노동부, 2023b).

2022년에 발생한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611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229건이며,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해 검찰에 송치한 건은 34건이다. 내사종결이 18건, 수(내)사 중이 177건이다(표 V-5).

검찰에 송치된 34건은 주로 제조업(16건)과 건설업(14건)에서 발생했다. 34건 중 절반은 300명

〈표 V-5〉 중대재해사건 수사 현황, 2022

(건,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적용 대상	송치	기소	내사 종결	수(내)사 중	사건 처리율
611	229	34	11	18	177	22.7

주: 1) 사건처리율 = (송치+내사종결) ÷ 발생

출처: 고용노동부, 「2022년 중대재해 현황」, 2023.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체이거나 공사규모 12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고용노동부, 2023a). 검찰이 기소한 11건의 대상은 상시근로자 60~340명, 건설공사 72억 원~381억 원 규모의 법인 혹은 건설공사였다. 11건 중 10건은 사망사고재해로 다수는 하청근로자(8건)였고, 일용직 근로자로 직접 고용되어 일한 외국인 노동자(1건)도 있었다(최정학, 2023).

2023년 6월 말 기준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3건으로 3건 모두 하청 근로자가 공사현장 또는 공장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원청 대표에게 징역(1년~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한편 중대시민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효과는 향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법 판단의 과정과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독립된 규율인 산안법이 1981년에 제정된 이래 한국사



회는 산업재해 발생 수준을 상당히 낮추어 왔지만 절대 수준에서는 여전히 주요 국가보다 높다. 특히 2000년대 이래 감소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일정 수준 하도급관계 및 특수고용관계의 확산과 같은 고용관계의 변화나 인구 고령화 및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같은 노동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노동안전건강의 제에 대한 기존의 공학적·보건학적 접근의 한계와 사회(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근 30년 만에 산안법이 전부개정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2000년대 이래 심화

하고 있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집합적 대응을 상징한다. 이것은 중층적 고용관계에서 실질적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한편, 관련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을 둔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제도의 변화가 최근에 이루어진 만큼 향후 법제가 어떤 식으로 자리 잡아가는지, 또한 어떤 효과를 낳을 것인지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법제가 규범력을 발휘해 노동안전건강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일터 환경을 만들어 나갈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2a. 「2021 산업재해현황분석」.
 ———. 2022b. 「고용노동백서(2022년판)」.
 ———. 2023a. “2022년 중대재해 현황: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1.19.)
 ———. 2023b.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5.15.)
 남궁준·박종식·김양호·박정선·정영훈. 2022. 「새로운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을 위한 예방체계 구축방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노광표. 2020.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의 사고 및 안전에 관한 동향.” 「한국의 사회동향 2020」. 통계개발원.
 박두용. 2016. “산업재해의 발생 추이.” 「한국의 사회동향 2016」. 통계개발원.
 이경용. 2010. “산업재해의 변화.” 「한국의 사회동향 2010」. 통계개발원.
 정연·이나경. 2022.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304:51-65.
 최정학.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법 집행에 대한 평가.”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1주년 심포지움 발표문(2023.2.14.)

2023

Income,
Consumption
& Wealth

Korean Social Trends 2023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VI

소득 · 소비 · 자산

소득 · 소비 · 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 서강대학교 186

세대 간 소득 · 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199

유경원 | 상명대학교 교수

소득불균등도와 소득이동성의 변화추이 성명재 | 홍익대학교 210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서강대학교)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둔화했던 가구의 시장소득 증가율이 최근 상황개선으로 반등하였다.
- 소득계층 간 소득격차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큰 편이다.
- 최저 및 고소득계층으로의 계층이동성은 코로나19 기간 다소 활발해졌다.
-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낮아졌던 근로소득 비중이 다시 증가하였다.
- 학력집단 간 소득격차는 벌어지고 있고 코로나19 기간 관리직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 부동산가격 변화의 영향으로 순자산배율이 다시 올랐다.
- 코로나19 기간 고소득계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 코로나19 상황의 개선으로 고소득층 위주로 소비지출이 반등했다.
- 코로나19 기간 의류·신발, 교육, 음식·숙박 등의 소비는 하락한 후 회복한 반면, 식료품·비주류 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 가정용품·가사 서비스 등은 반대 패턴을 보였다.

이 글에서는 한국 가구의 소득, 자산, 부채, 소비에 대한 최근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가구들이 처한 경제적 여건을 진단해 본다. 2023년 한국은 엔데믹을 선언하여 일상을 되찾은 한 해였다.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를 기초로 코로나19가 남긴 흔적을 감안하면서 소득계층, 연령 집단, 가구주의 특성 등에 따라 가구의 소득, 자산, 부채, 소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 자산, 부채 등의 분석에는 소득 공식 통계의 기초가 되는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1인가구를 포함한 전국 전체 가구이며, 분석 기간은 자료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2년까지이다(소득 기준 2011~2021년).¹⁾ 소비와 관련된 분석에는 소비와 지출에 대한 상세한 통계가 수록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의 최근 연간 및 분기 자료를 비교하여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계소비가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분석하였다.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소득과 소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과 실질소비 개념을 적용하였고,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명목소득과 명목소비를 각각 실질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1)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회고식 조사이므로 가장 최근인 2022년도 조사에서는 2021년도 소득과 2022년 3월 현재 자산과 부채에 대한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다.

가구소득의 분포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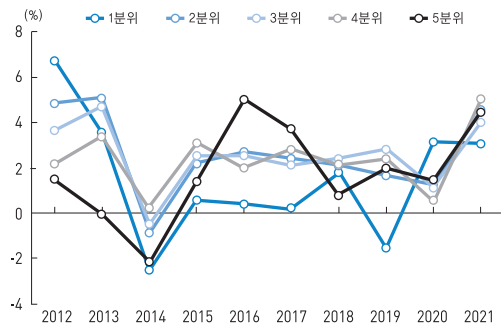
가구원들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은 가구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선 여기에서는 가구가 시장에서 취득하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²⁾ 가구원 수가 다르면 동일한 후생수준 유지에 필요한 소득도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표준화한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다.

최근 전체 가구의 실질 시장소득 증감률을 보면 2017년 2.9%에서 2019년 2.0%로 차츰 낮아지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2%로 급락한 후 2021년 4.5%로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³⁾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각 소득집단에 속한 가구의 소득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을 1분위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을 5분위로 하는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VI-1]은 각 소득분위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이 전년보다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여준다. 이는 매년 각 소득분위를 구성하는 가구들의 평균적인 소득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⁴⁾

[그림 VI-1]을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소득 1분위 실질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3.1%로 높아졌는데 이는 2019년 경기침체에 따른 근로소득의 감소 이후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으로 풀이된다. 소득 2분위 이상 가구의 2020년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9년에 비해 낮아졌으며 각각 1.2%, 1.1%, 0.5%, 1.4%로 하락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2021년에는 소득 2분위 이상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각각 4.6%, 4.0%, 5.0%, 4.4%로 급등한 반면, 소득 1분위는 그보다 낮은 3.1%를 기록하여 소득 증가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림 VI-1] 가구 소득분위별 실질 시장소득 증감률, 2012-2021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각 소득분위 가구들의 평균 균등화 실질 시장소득의 전년도 대비 소득증감률임.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2016년 이후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VI-1>에는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놓고, 각 소득분위의 소득비를 제시하였다. 소득비 산출에는 각 가구가 실제 처

2)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된다.

3) 「가계금융복지조사」 전체 표본의 균등화 소득을 기초로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을 구하였고, 가구가중치는 균등화를 감안하면서 각 연도 기준으로 하였다.

4) 소득분위별 가구 구성이 매년 바뀌므로 전년도 기준 각 소득분위에 속했던 가구의 소득 증가율과는 차이가 있다.

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평가하기 위해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기준의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다.⁵⁾ 2016~2021년 동안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 대비 1분위 가구의 소득비는 평균 31.8%이고 5분위 소득비는 203.3%이다. 2016~2021년 동안 소득 3분위 이하 가구의 소득비는 상승세를 보인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비는 눈에 띄게 하락하였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비가 2019년 32.3%에서 2020년 34.2%로 한해 급등했다가 2021년에 33.6%로 다소 하락한 이유는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이 집중된 코로나19 초기의 일시적인 효과로 풀이된다.

〈표 VI-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2016~2021

(%)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6	29.7	59.6	85.7	117.6	207.3
2017	29.8	59.8	85.2	117.9	207.2
2018	31.1	60.8	86.1	118.4	203.6
2019	32.3	61.7	86.7	117.4	201.9
2020	34.2	62.5	86.9	116.6	199.8
2021	33.6	62.4	86.5	117.4	200.0
2016-2021 평균	31.8	61.1	86.2	117.5	203.3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해당 소득집단 연평균 가구소득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5)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를 제외하여 정의되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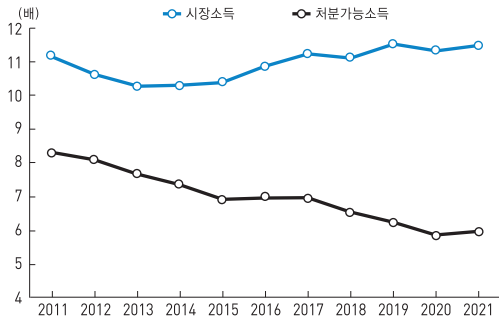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VI-2]에서는 소득불평등도를 반영하는 지표인 소득 1분위 대비 5분위의 소득 배율을 제시한다. 그림에는 세전소득인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과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을 함께 제시하였는데 두 지표 간 차이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반영한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6년 10.9배에서 완만하게 상승하여 2021년 11.5배를 기록해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변화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와 고령화 심화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세후소득 기준으로는 소득불평등이 꾸준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6년 7.0배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 6.0배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6년 이후 한국경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코로나19는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 증가율을 낮춰서 2020년 소득 5분위 배율이 다소 하락했다가 상황이 다소 개선된 2021년에는 반등한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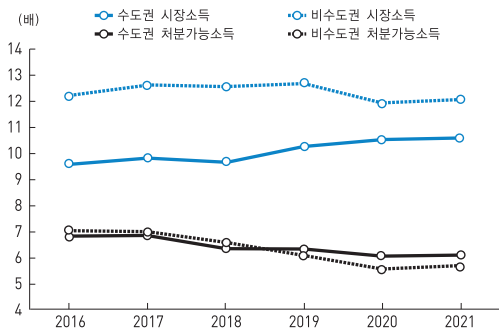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2016년 이후 소득 5분위 배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시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권역 간 1분위 소득격차가 5분위 소득격차보다 크기 때문이다. 한편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두 권역 모두 유사하다. 이는 비수도권의 저소득층 평균소득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공적이

[그림 VI-2] 권역별 소득 5분위 배율, 2011-2021

1) 전국



2) 권역별



주: 1)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5분위 배율은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의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
 3) 권역별 지표 계산은 각 권역 내 상대적 소득분위에 기초함.
 4)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전소득 크기가 더 컸기 때문이다. 최근 비수도권 시장소득 기준 지표는 낮아져 권역 간 차이가 좁혀졌고,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표는 모두 하향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가구가 얼마만큼 다른 소득계층으로 활발하게 이동하는지는 한국경제의 활력을 보여주는 한편 소득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I-2>는 균등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계층 이동성을 나타내는 행렬표를 보여준다. 여기서는 코로나19 시기에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각 가구의 소득분위를 2019년 기준으로 정하고 해당 가구가 그다음 해에 어느 소득분위로 이동했는지 그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⁶⁾ 그 아래 표는 동일한 분석을 2020년 기준으로 하였다.

<표 VI-2> 가구의 소득계층 이동성, 2019-2021

1) 2019-2020년

		(%)				
2019	202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77.9	17.0	3.9	0.9	0.3
	2분위	19.6	50.5	23.7	5.1	1.1
	3분위	4.9	21.7	47.6	22.9	2.9
	4분위	1.9	6.9	20.3	53.6	17.2
	5분위	1.1	0.9	3.1	13.0	81.9

2) 2020-2021년

		(%)				
2020	2021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76.7	17.1	4.2	1.3	0.6
	2분위	20.0	51.9	21.1	5.7	1.3
	3분위	4.2	20.8	49.7	22.0	3.2
	4분위	1.4	7.4	21.1	52.8	17.3
	5분위	0.7	1.6	3.0	18.0	76.7

주: 1) 2년 연속 자료가 존재하는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으로 2019년 소득분위에서 2020년 소득분위의 이동확률과 2020년 소득분위에서 2021년 소득분위의 이동확률을 측정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6) 소득분위는 전년도 전체가구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소득계층 이동성 측정을 위해서는 2년 연속 자료가 존재하는 가구로 한정하였고, 전년도 기준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두 해 모두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 가구들은 다음 해에 40% 이상이 다른 소득분위로 이동하고, 1분위와 5분위는 약 20%의 가구가 다른 분위로 이동해 양 극단의 소득계층에서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2021년을 2020년과 비교해 보면, 2분위와 3분위의 소득계층 이동성은 다소 낮아진 반면, 최저 및 최고 소득층의 이동성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상황이 양극단 소득계층의 소득에 더 큰 불확실성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의 구성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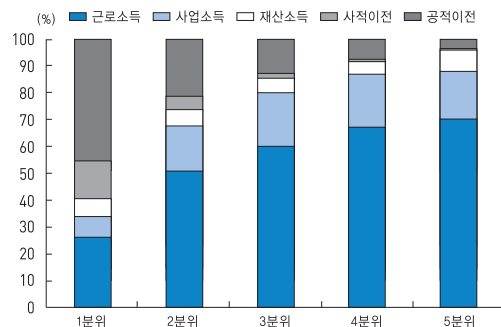
가구소득의 원천은 다양한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된 경상소득과 그 외의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이전소득은 다시 가족 간 이전, 비영리단체이전소득 등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는 비경상소득이 수록되지 않아 여기에서는 가구소득을 경상소득 기준으로 파악한다.

2019년과 2021년 사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4.0%에서 2020년 62.9%로 떨어졌다가 2021년에 64.3%로 회복된 반면, 사업소득은 이 기간 19.4%에서 18.1%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공적이전소득은 2019년 7.7%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입어 2020년

9.8%, 2021년 9.4%로 크게 증가했다.

[그림 VI-3]에 제시된 2021년 기준 소득분위별 소득원천 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비중은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26.1%에 불과하나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 경우에는 각각 67.4%와 70.2%에 달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I-3]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 2021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모든 소득계층에서 근로소득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커졌다. 코로나19가 완화된 2021년에는 반대로 다시 근로소득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줄어들었다. 2016년 이후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저소득층 위주로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는 저소득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층의 기초노령연금 증액과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원이 저소득층 소득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표 VI-3〉의 2021년 기준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원천구성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 소득 비중이 낮아진다. 2016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볼 때 20대 이하 가구주의 경우 근로소득 비중이 87.6%에서 78.8%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사업소득 비중은 6.4%에서 14.5%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다른 연령대 가구주의 소득원천별 구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 구별된다. 이는 이 기간 20대 이하 가구에서 상용근로자 비중이 낮아진 반면 임시·일용직과 창업을 통한 자영업 종사자들이 늘어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비중이 낮지만 2016년에 비해 높아졌다. 이는 60대 이상 가구주의 상당수가

은퇴 시점을 넘겨서도 생계를 위해 근로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가구주 특성에 따른 소득의 변화

가구소득의 변화가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및 가구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가구소득은 가구에 귀속되는 모든 형태의 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이다.⁷⁾ 단순히 가구주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원들의 소득이 있다면 이들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 특성집단 간 맞벌이가구 비율 및 1인가구 비율의 차이와 변화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그림 VI-4]는 2011~2021년 동안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소득격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데, 연령집단별 소득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소득비를 보면, 50대, 40대, 30대 순으로 높으며 60대 이상의 소득비가 평균 이하 수준이다. 최근 2016년에서 2021년 기간에 각 연령집단별 소득비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30대 이하는 90.7%에서 99.5%로 유의하게 상승했으며, 40대는 103.9%에서

〈표 VI-3〉 가구주 연령별 소득원천, 2016,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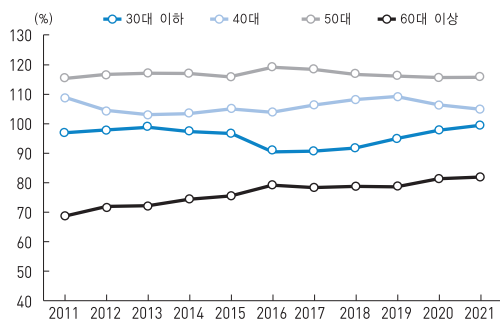
	(%)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 이전 소득
2016년					
20대 이하	87.6	6.4	1.2	2.8	2.0
30대	78.9	16.0	2.2	0.7	2.2
40대	70.1	24.0	3.6	0.6	1.8
50대	66.2	25.5	5.7	0.5	2.1
60대 이상	40.1	20.2	14.7	4.6	20.4
2021년					
20대 이하	78.8	14.5	0.9	1.7	4.0
30대	78.4	14.2	2.3	0.6	4.4
40대	72.8	18.5	3.8	0.7	4.3
50대	70.1	19.2	5.7	0.7	4.4
60대 이상	41.9	18.8	12.9	4.0	22.4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7) 경상소득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합이며 처분가능소득과 유사하다. 처분가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이진지출을 제한 것으로 정의된다.

105.0%로, 60대 이상은 79.2%에서 82.1%로 다소 완만하게 상승했다. 반면 50대는 119.3%에서 115.9%로 하락하였다.⁸⁾

[그림 VI-4] 가구주 연령별 소득비, 2011-2021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해당 연령집단 연평균 가구소득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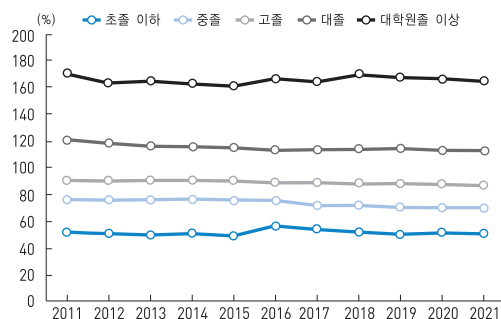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력집단 간에는 소득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VI-5]는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 대비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최근 추세를 보면, 저학력 집단뿐만 아니라 고학력 집단의 소득비도 하락하고 있다. 2016년과 2021년 사이에 초졸 이하 집단은 56.4%에서 50.5%로, 중졸 집단은 75.2%에서 69.9%로, 고졸 집단은 88.8%에서 86.8%로 꾸준히 낮아졌

다. 대졸 집단 소득비는 2016년 113.2%에서 2019년 114.2%로 상승하다가 2021년 112.6%로 하락하였고, 대학원졸 이상 집단은 2016년 166.3%에서 2018년 170.0%로 다소 상승하다가 2021년 164.9%로 다시 하락하였다. 모든 집단의 소득비가 하락할 수 있는 이유는 인구구조 상 고소득 고학력집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준거되는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을 높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학력집단 간 소득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대학원졸 집단을 100으로 놓았을 때 초졸 이하의 학력집단은 2016년 33.9%에서 2021년 30.6%로, 중졸은 45.2%에서 42.4%로, 고졸은 53.4%에서 52.6%로 하락한 반면 대졸집단은 68.1%에서 68.3%로 유지되어 학력집단 간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I-5]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비, 2011-2021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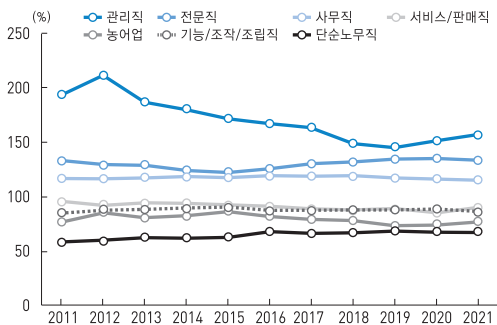
2) 소득비는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해당 학력집단 연평균 가구소득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연도 2016년부터 행정자료를 기초로 소득 항목을 보완하였으므로 2015년 이전 연도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임금은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적 특성과 직업에 적합한 인력의 희소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구의 소득은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림 VI-6]은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 대비 직업 집단별 소득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관리직, 전문직, 그리고 사무직의 소득비가 나머지 직업군에 비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다. 2019년 이후 관리직 소득비가 상승한 반면 사무직과 단순노무직 소득비는 하락하였다.

[그림 VI-6]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11~2021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 중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를 제외함.

2) 소득비는 균등화 경상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 대상 가구 전체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해당 직업집단 연평균 가구소득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직종 간 격차가 줄어들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1년까지 다시 격차가 커졌다. 코로나19 기간 관리직의 소득비가 나머지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관리직 소득비를 100으로 놓았을 때, 전문직은 92.2%에서 85.3%로, 사무직은 80.4%에서

73.4%로, 서비스·판매직은 60.5%에서 56.7%로, 기능·조작직은 60.6%에서 55.6%로, 단순노무직은 46.7%에서 42.9%로 모두 하락하였다.

최근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1인가구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최근 3년에는 오히려 이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다. 1인가구의 소득분위별 구성 비율을 보면, 2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2019년 85.0%에서 2021년 80.3%로 감소하였다. 이는 결혼을 미루는 청년층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1인가구의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어 1인가구가 전 소득층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동기간 모든 소득분위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하게 증가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1분위는 그 비중이 64.9%에서 67.5%로, 2분위는 28.0%에서 34.0%로, 3분위는 10.7%에서 16.4%로, 4분위는 4.4%에서 6.1%로, 그리고 5분위는 1.3%에서 2.4%로 증가했다.

2016~2019년 동안 1인가구의 20대 이하, 30대, 40대 가구주 비중이 각각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가구주는 증가해 왔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어 2019년에서 2021년에 20대 이하, 30대, 40대 가구주 비중이 5.8%, 10.0%, 10.8%에서 8.0%, 15.5%, 12.4%로 증가한 반면 60대 이상 가구주 비중은 58.2%에서 48.6%로 감소했다. 이는 최근 평균 혼인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점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평

균소득 대비 1인가구의 소득비는 2016년 56.3%에서 등락을 하다가 2021년 62.0%로 증가했다. 이는 공적이전소득 증가와 1인가구의 상위 연령층 확대가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자산의 변화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22년 3월 기준 전체 가구의 63.3%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2019년 63.8%와 큰 차이가 없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이 높아 1분위의 경우 이 비율이 33.6%에 불과하지만 5분위의 경우에는 79.4%에 이른다. 이는 경제력에 따른 금융 접근성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그 결과 4분위와 5분위의 부채가 각각 전체 부채의 24.7%와 45.0%를 차지하고 있어 부채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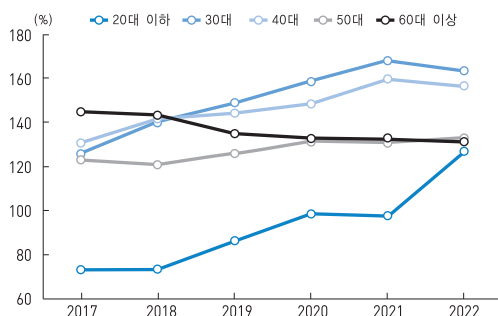
2022년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전체 평균 143.0%로 2019년 135.7%보다 증가했다. 2019년과 비교해 보면, 소득 1분위는 145.8%에서 129.7%로 하락한 반면, 2분위는 137.1%에서 146.4%로, 3분위는 145.4%에서 152.0%로, 4분위는 141.0%에서 148.0%로, 5분위는 128.8%에서 137.8%로 2분위 이상에서 크게 증가했다. 대체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저소득층이 고소

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평균적으로 18.1%로 2019년 20.2%에서 다소 하락했다. 이는 이 기간에 부채는 계속 증가했지만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금리가 꾸준히 낮아져 이자부담이 적어진 데 그 이유가 있다. 하지만 2021년 말 이후 금리가 급격히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므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최근 다시 올랐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가구주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2022년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은 20대 이하는 60.4%로 낮은 편이지만 30대와 40대는 76.5%로 매우 높다. 다시 50대는 71.9%로 낮아지고 60대 이상에서는 46.5%로 낮아진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대에 따른 주택구입과 주택담보대출 행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그림 VI-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7~2022년 동안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대

[그림 VI-7] 가구주 연령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2017~2022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과 부채는 연간 경상소득 및 부채의 전체 가구 평균값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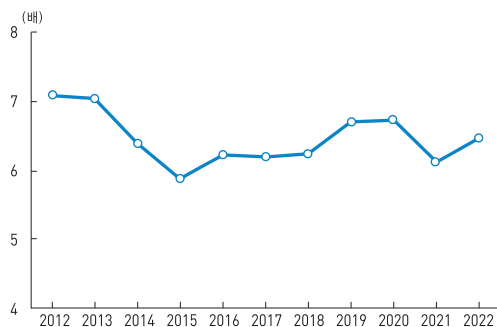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이하, 30대, 40대에서 크게 상승하였고, 50대에서는 완만하게 상승하였으며, 60대 이상에서는 하락하였다. 이 기간에 20대 이하, 30대, 40대의 부채 증가율은 각각 109.5%, 63.4%, 42.7%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17~2020년 동안 14.9% 증가하였는데 2020~2022년에만 25.7%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2017년 이후 순자산 증가율은 44.4%에 달하며 소득분위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림 V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 1분위 대비 소득 5분위 집단 간 순자산 배율은 2017년 6.2배에서 2020년 6.7배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1년 한 해 6.1배로 낮아진 후 다시 2022년 6.5배로 높아졌다. 2022년 전체 순자산에서 소득계층별로 차지하는 비율은 1분위가 6.8%이고 5분위는 44.0%이다.

[그림 VI-8] 순자산 5분위 배율, 2012~2022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순자산 5분위 배율은 소득 1분위 순자산 대비 소득 5분위 순자산의 비임.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순자산 배율의 등락 추세는 부동산가격의 변화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017~2020년 동안 소득 5분위 계층이 소유한 부동산자산의 가치가 22.8% 증가한 데 반해 소득 1분위는 11.0%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 후 2021년에는 소득 5분위와 소득 1분위의 부동산자산 가치가 각각 14.6%, 21.6%, 2022년에는 각각 11.9%와 4.5% 증가율을 보여 순자산 배율 등락패턴과 대부분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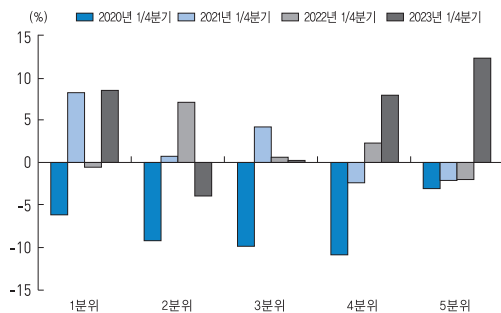
가구 소비지출의 변화

마지막으로 가구의 소비 및 비소비 지출을 살펴보았다. 가구의 소비지출은 가구의 경제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여기서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가 어떤 지출패턴의 변화를 초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 분기별 자료를 기초로 2020년 이후 각 연도 1분기의 실질 소비지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은 2020년 1분기에 -7.4% 급감한 후, 2021년, 2022년 동분기까지 점차 0.2%, 0.8%로 완만하게 회복되었으며 코로나19가 종료된 2023년 1분기에는 6.4%로 급등했다. 코로나19 기간 소비에 쓰이지 않은 저축분은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졌다.

[그림 VI-9]를 보면, 2020년에 소득 4분위 이하 가구의 소비가 각각 크게 감소한 반면 5분위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작게 감소하였다. 3분위 이하는 소비 증가세가 2021년 이후 회복된 반면 4분위와 5분위는 2023년이 되어서야 크게 반등하였다. 저소득층은 소비수준이 낮고 필수재 위주의 소비로 소비를 줄일 여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VI-9]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2020.1/4-202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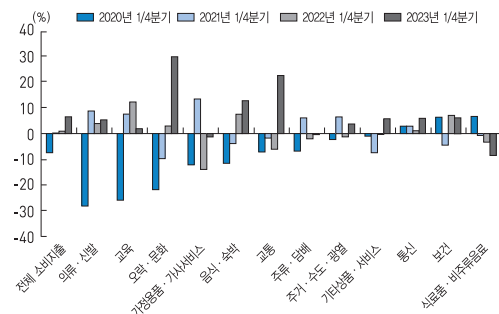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2020년 기준 실질 소비지출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1/4분기.

[그림 VI-10]에서는 가구의 소비항목별 지출 변화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 기간에 서비스와 관련된 의류·신발, 교육, 오락·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음식·숙박, 교통 등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다가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반등하며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인 반면, 주류·담배, 주거·수도·광열, 통신 등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반대로 비대면 생활의 여파로 식료품 소비는

코로나19 초기에 증가한 후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의료비 지출의 증가로 보건 지출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림 VI-10] 소비지출 항목별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 2020.1/4-2023.1/4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2020년 기준 실질 소비지출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1/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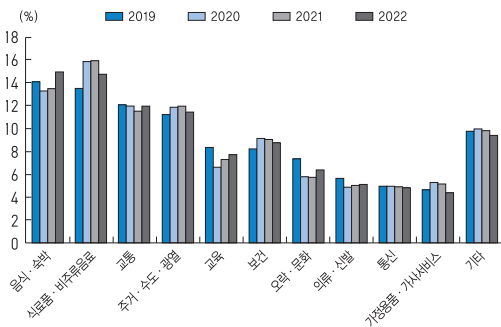
코로나19 전후로 가구 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가계동향조사」의 연간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하였다. [그림 VI-11]은 연간 명목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소비지출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19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준다. 2019년 전체 소비지출에서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주거·수도·광열 지출 순으로 높았고 각 항목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발생 후 음식·숙박, 교육, 오락·문화, 의류·신발 등은 지출 비중이 하락했다가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다시 회복한 반면, 반대로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 가

정용품·가사서비스 등은 코로나19 초기에 지출 비중이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

2022년에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오프라인 활동과 대면 서비스 관련 품목들이 회복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과 2022년 소비지출을 비교해 보면,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등은 그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교육, 오락·문화, 의류·신발 등은 비중이 줄었다.

[그림 VI-11] 가구의 소비지출, 2019-2022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기타는 '주류·담배', '기타상품·서비스' 등을 포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가구주 연령대별 소비지출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교육, 의류·신발 등은 비중이 감소했다가 회복한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은 그 비중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의식주 지출 비중은 2019년 30.4%에서 2021년 32.9%로 유의하게 증가했다가 2022년 31.4%로 감소했는데, 이러한 패턴은 모든 연령층 소비지출 비중 변화에서 확인된다.

가구 비소비지출의 변화

가구소득의 일부는 조세 또는 사회보장과 같이 소비와 상관없는 항목에 지출된다. <표 VI-4>를 보면,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7.5%에서 2021년 18.5%로 다소 증가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세금 및 과징금 그리고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비중의 합이 2016년 11.2%에서 2021년 12.4%로 증가한 데 있다.

<표 VI-4> 가구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중 비소비지출, 2016, 2021 (%)

	전체	세금 및 과징금	공적 연금 및 사회 보험료	가구간 이전	비영리 단체 이전	연간 지급 이자
2016년						
전체	17.5	5.6	5.6	1.9	1.3	3.1
1분위	13.3	1.9	4.0	2.1	1.6	3.7
2분위	14.6	2.1	5.2	2.2	1.4	3.7
3분위	15.6	2.6	6.0	2.0	1.3	3.7
4분위	15.6	3.2	6.2	1.8	1.2	3.2
5분위	20.0	8.8	5.4	1.8	1.2	2.7
2021년						
전체	18.5	6.2	6.2	2.1	0.6	3.3
1분위	11.6	1.7	3.7	2.9	0.6	2.7
2분위	14.6	2.2	5.4	2.7	0.6	3.7
3분위	15.7	2.7	6.3	2.4	0.6	3.8
4분위	16.7	3.9	6.8	2.0	0.6	3.4
5분위	21.7	9.9	6.3	1.9	0.6	3.0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소득분위별 조세부담률은 2021년 기준 2분위가 2.2%, 3분위가 2.7%, 4분위가 3.9%, 5분위가 9.9%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률이 누진적으로 높다. 2016년과 비교해 보면, 2021년의

조세부담률은 4분위 이상 소득계층에서 유의하게 증가해 누진율이 강화되었다. 같은 기간 공적연금과 사회보장료 비중 또한 4분위 소득계층 이상에서 유의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대 간 소득·자산 불평등 추이: 20~30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유경원 (상명대학교 교수)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사회적 충격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전후(2018~2022년) 시장소득 및 순자산 분배 악화와 관련하여 20~30대 청년세대의 부채를 활용한 자산 보유 행태가 주목받고 있다.
-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반적인 가계소득의 정체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30대 청년세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소득 증가가 두드러지며, 부채 활용도 현저하다.
- 청년세대의 경우 부채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산 증가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금융자산의 증가, 특히 전월세 보증금의 증가가 두드러져 이들 세대의 부채가 주로 보증금 증가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전후 청년세대의 부채 활용 및 자산 보유 행태는 낮은 소득 증가, 부동산 및 전세가격 급등에 기인한 바 크며, 이들의 순자산 증가는 다른 세대들에 비해 정체되거나 변동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 청년세대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전후 채무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고령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의 소득 및 주거여건 개선 그리고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정비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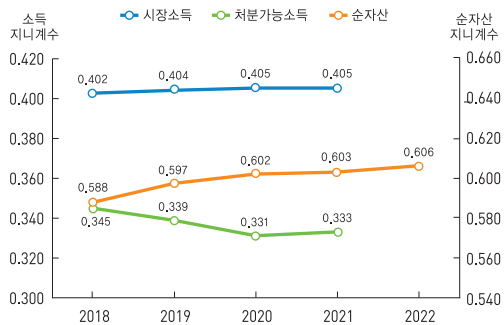
정책 수단들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가계부채 등 민간부채가 급증하였으며, 재정지출을 통해 가계의 공적 이전소득도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은 급등하여 자산을 보유한 계층과 보유하지 않은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감염병 경제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계층과 산업부문이 존재해 소득과 순자산 분배 측면에서 불평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VII-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소득분배는 시장소득 측면에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다소 악화되었으며, 부의 분배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높아진 공적 소득이전 등으로 인해 처분가능소득의 분배는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이었으나, 이 역시 최근에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미래 경제·사회의 핵심 주체인 20~30대 청년세대의 경제 행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저금리·유동성 확대 및 재정완화 정책으로 인해 자산가격 급등이 발생함에 따라 20~30대 청년세대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코로나19는 경제·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으며 대응 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통화·금융·재정

[그림 VI-12] 소득 및 순자산 지니계수, 2018-2022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각 소득은 가구 균등화 소득을 사용함.
 3)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다. 생애주기상 본격적인 경제생활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에게는 독립가구 형성을 위한 주거 마련과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이 중요한 재무 목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청년세대에게 주택가격 급등과 주식시장 과열 양상은 자산시장에서 소위 '뒤처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 '벼락저지', '오늘이 제일 싸다' 등의 프레임과 내러티브를 형성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청년세대의 부채를 활용한 자산보유 행태와 이들 세대의 소득 및 자산분배 여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전후 소득 변화 및 분배 추이

코로나19 위기는 다른 경제위기와 달리 특정 업종과 계층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주로 서비스업종, 자영업자, 비정규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 업종은 20~30대의 비중이 작지 않다. 따라서 코로나19 전후 경제적 여건 변화는 청년세대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가 경제행태 및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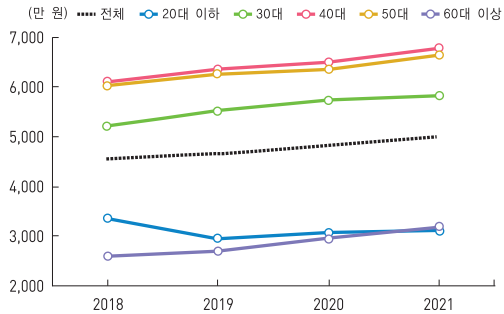
앞서 [그림 VI-12]에서 본 바와 같이 시장소득의 분배는 2018년 이후 다소 악화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적 이전지출의 확대로 처분가능소득의 분배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다가 최근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가 20~30대 청년세대의 소득분배 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전후 연령집단별 소득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VI-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가구의 소득은 2018년 대비 2021년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대 이하의 경우 -7.4%로 모든 연령대 중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들의 소득이 다소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대부분의 연령대는 소득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은 공적이전 지출의 확대 등으로 가구소득이 2018년 대비 2021년 22.5%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율보다 두 배 가까운 증가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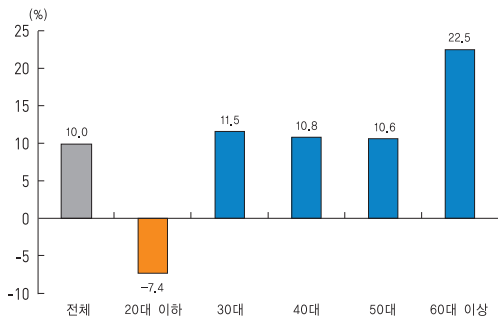
한편, 이와 같은 소득의 증가가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

[그림 VI-13]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 2018-2021

1) 가구소득



2) 2018년 대비 2021년 소득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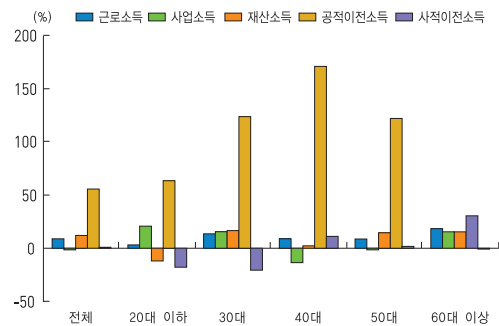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은 연가구소득 중위값 기준이며,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을 포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으로 구분하여 그 증가세를 살펴보았다. [그림 VI-14]를 보면, 전체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으로 사업소득이 2018년 대비 2021년 감소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2018년 대비 55.3% 증가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재산소득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근로소득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대 이하는 근로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의 1/3 수준인 2.9% 증가를 나타내

었으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지만 공적이전소득의 증가폭도 크고 사업소득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소득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2018년 대비 1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의 재산소득이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그림 VI-14] 가구주 연령집단 및 소득원천별 소득 증감률, 2018-2021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원천별 소득은 평균값 기준임.
 3) 소득증감률은 2018년 대비 2021년 원천별 소득의 증감률임.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코로나19 전후 이러한 20대를 중심으로 한 낮은 소득 증가 내지 감소는 세대 간 격차를 확대시킨 것으로 보인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생애주기 중 가장 높은 소득을 나타내는 연령대는 40대인데 이들의 소득과 청년세대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20대 이하는 40대의 소득에 50% 수준인 반면, 30대는 보다 높은 소득으로 40대의 80% 후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인적자본이 축적되어 근로소득의 상승 등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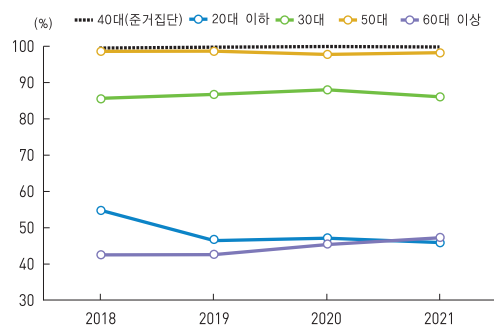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 글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청년세대와 중·장년층 간 소득격차가 코로나19 전후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다. [그림 VI-15]에서 연령집단 간 소득비의 변화 추이를 보면, 30대와 50대는 시간 경과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는 반면, 20대 이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그 격차가 확

대되었으며, 60대 이상은 오히려 그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전후 기간을 비교해 볼 때, 20대 이하를 중심으로 한 청년세대의 소득 여건은 악화되거나 정체된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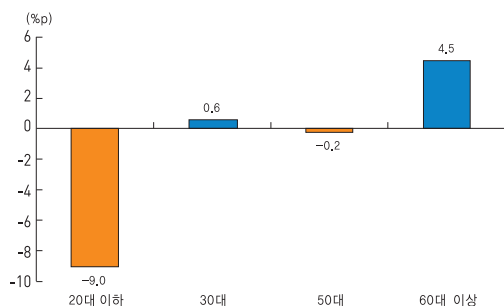
정리하면 시장소득 측면에서 소득분배 여건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개선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 이전지출 등을 통해 처분가능소득의 분배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은 기존의 다른 경제·사회적 충격과 달리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20대 연령층에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소득 충격이 크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들 계층의 분배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함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저금리 등은 청년세대의 부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15] 가구주 연령집단 간 소득 격차, 2018-2021

1) 연령집단 간 소득비



2) 2018년 대비 2021년 연령집단 간 소득비 증감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은 연가구소득 중위값 기준이며,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을 포함.

3) 연령집단 간 소득비는 최고소득 연령집단인 40대의 소득 대비 해당 연령집단 소득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연령대별 가계부채 변화 추이

코로나19로 인한 20대 연령층에 집중된 소득 충격과 더불어 자산가격의 급등은 청년세대의 부채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었다. 근로소득의 낮은 증가와 정체, 그리고 SNS 등의 발달로 인한 기대소비 수준의 상승,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에서 나타난 자산 가격 붐과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주거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이들 청년세대의 부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림 VI-16]에 제시된 연령집단별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과 부채보유액의 변화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발발 이전에 비해 20~30대 청년세대의 부채 증가세가 다른 연령대를 압도하고 있다. 2018~2022년 기간에 전체 가구 중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은 64% 내외로 큰 변화 없이 약간 감소한 반면, 20대 이하는 2018년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이 50.8%로 절반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2022년에는 60.4%로 9.6%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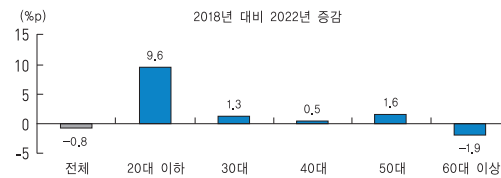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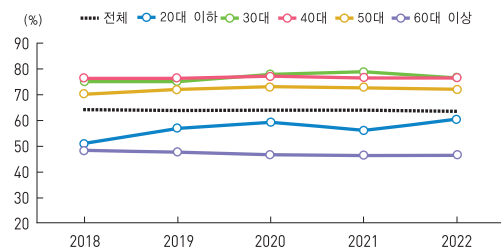
전체 가구의 부채 보유액 증가세도 전체 가계 신용의 증가를 반영하듯 2018년 대비 2022년 19.6% 증가한 반면, 20대 이하는 무려 93.5% 증가하였고, 30대는 39.8% 증가하여 다른 연령대의 증가세를 압도하고 있다.

연령대별 부채 접근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생애주기 상 순자산 및 자산이 정점인 50대의 부채보유액과 다른 연령대의 부채보유액을 비교해 부채 격차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VI-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집단 간 부채 격차의 축소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2018년 50대의 부채보유액 대비 20대의 부채보유액은 29.4%에 불과하였지만 2022년에는 46.6%로 높아져 그 격차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¹⁾ 30대 역시 2018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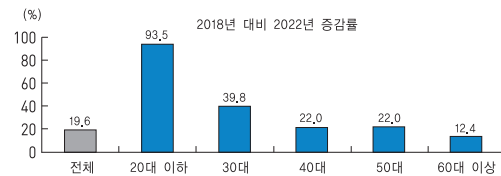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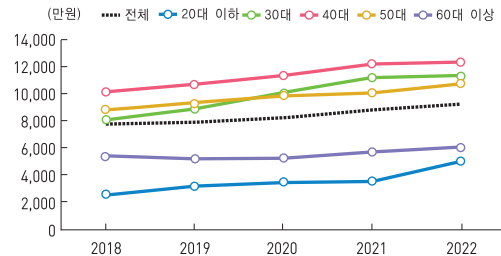
50대 부채보유액의 91.7%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105.1%로 높아져 50대보다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0대는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그림 VI-16] 가구주 연령집단별 부채 보유 가구 비율 및 부채 보유액, 2018~2022

1) 부채 보유 가구 비율



2) 전체 가구당 부채 보유액



1) 생애주기상 부채규모가 가장 높은 계층은 40대로 연령에 따라 N-자 형태로 나타나 40대를 기준으로 동일 분석을 수행하여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이 글에서는 연령대별 순자산 분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순자산과 자산이 가장 정점에 있는 50대를 기준으로 비교 대상을 선정하여 일관된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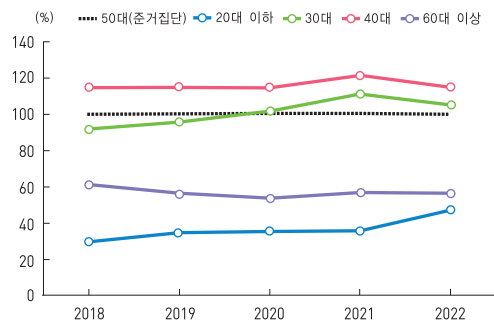
60대 이상은 61.0%에서 56.2%로 줄어들어 그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었다. 즉, 부채의 접근성 측면에서 보자면, 20~30대는 부채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은 오히려 부채 이용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 이하를 중심으로 근로소득의 낮은 상승과 정채 그리고 사업소득 비중의 확대 및 낮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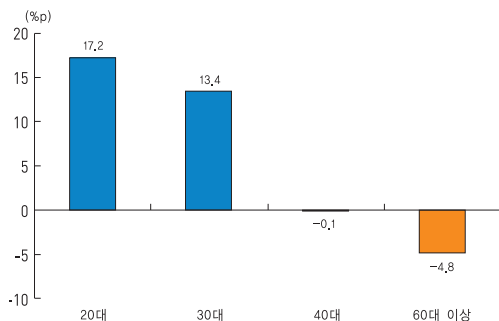
재산소득은 청년세대의 부채 활용을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시킨 배경 요인으로 보인다. 단순히 부채를 지는 것뿐 아니라 이들 세대의 부채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부채 확대가 자산 증대로 이어질 경우 보유자산의 종류와 가치의 변화에 따라 청년세대가 보유한 부의 규모와 분배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림 VI-17] 가구주 연령집단 간 부채 격차, 2018~2022

1) 연령집단 간 부채비



2) 2018년 대비 2022년 연령집단 간 부채비 증감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부채는 전체 가구당 부채액을 기준으로 함.

3) 연령집단 간 부채비는 생애주기상 순자산 및 자산이 정점인 50대의 부채 대비 해당 연령집단 부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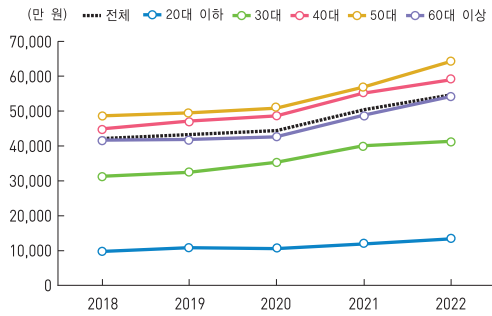
연령대별 가계자산 추이

코로나19 전후 가계부채의 증가가 높았던 만큼 이러한 부채의 증가와 자산의 증가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당 자산보유액의 변화 추이를 부채의 변화 추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앞서 [그림 VI-1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당 부채보유액은 2018~2022년 동안 19.6% 증가했다. 반면 [그림 VI-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당 자산보유액은 2018년 대비 2022년 3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증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던 청년세대의 경우 높은 자산 증가를 나타냈으나 부채 증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20대 이하 36.5%, 30대 30.9% 증가). 반면 40대 이상의 경우 부채 증가율보다 오히려 자산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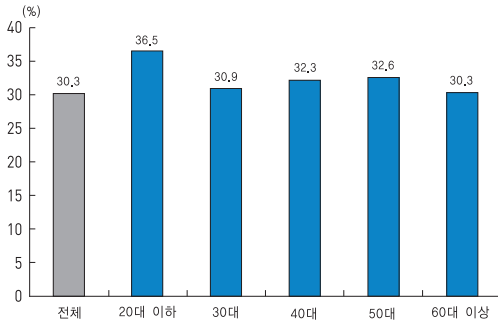
[그림 VI-19]에서 20~30대 청년세대와 자산 규모가 가장 큰 50대 간 자산 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그 축소 폭

[그림 VI-18] 가구주 연령집단별 자산, 2018-2022

1) 자산보유액



2) 2018년 대비 2022년 자산 증감률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자산은 전체 가구당 자산보유액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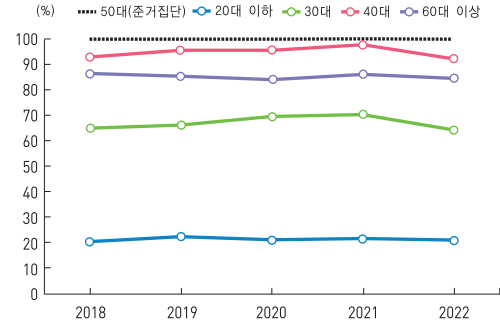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이 크지 않다. 20대 이하는 2018년 대비 2022년 자산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그 격차가 가장 크게 축소되었다. 30대는 2018년 50대 대비 65.0% 수준의 자산을 갖고 있었는데, 2022년에는 64.2%로 나타나 다소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자산 격차의 축소는 부채의 접근성 개선에 비해 그리 두드러지지 않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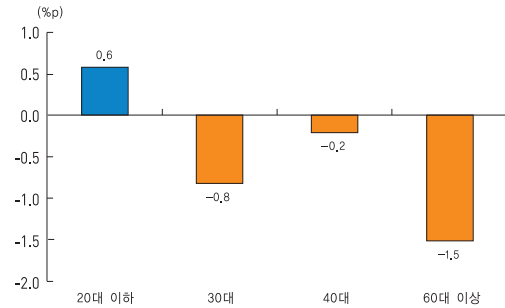
가계자산은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과 저축 등의 금융자산으로 구분된다. [그림 VI-20]에서

[그림 VI-19] 가구주 연령집단 간 자산 격차, 2018-2022

1) 연령집단 간 자산비



2) 2018년 대비 2022년 연령집단 간 자산비 증감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자산은 전체 가구당 자산보유액을 기준으로 함.

3) 연령집단 간 자산비는 생애주기상 순자산 및 자산이 정점인 50대의 자산보유액 대비 해당 연령집단 자산보유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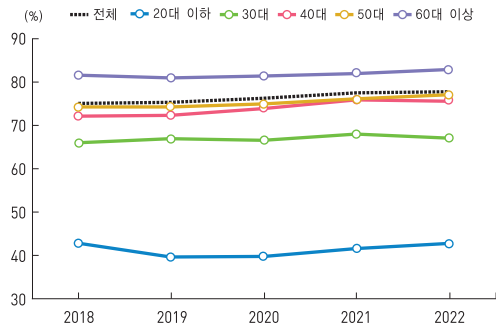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의 비중은 2018년 75.4%에서 2022년에는 77.9%까지 상승하였다. 자산 구성에 있어 부동산 편중 현상이 코로나19 전후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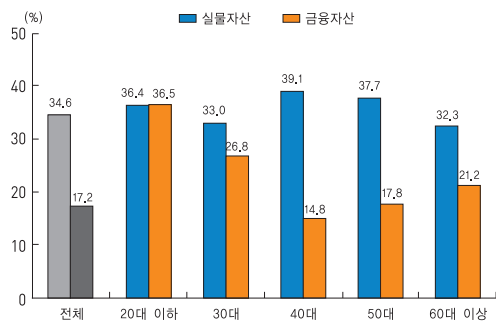
전체 가구의 경우 실물자산은 2018년 대비 2022년 3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자산은 그보다는 낮은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그림 VI-20] 가구주 연령집단별 자산구성의 변화, 2018-2022

1) 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



2) 자산유형별 2018년 대비 2022년 증감률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자산은 전체 가구당 자산보유액을 기준으로 함.

3) 실물자산은 부동산자산(거주주택, 거주주택이외 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납입액)과 기타실물자산(자동차, 기타)을 포함.

4) 금융자산은 저축액(적립·예치식 저축, 기타 저축)과 현거주지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20대 이하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간의 증가율 차이가 미미한 반면, 40~50대는 실물자산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의 자산 증가가 대체로 실물자산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물자산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다도 20대를 제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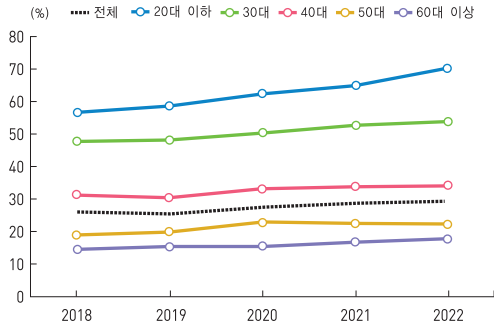
고 대부분 연령대에서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아진 반면, 20대 이하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거나 보유 비중이 시기에 따라 낮아졌다.

금융자산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실물자산 보유가 낮은 청년세대의 금융자산 증가가 두드러진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36.5%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30대는 26.8% 증가해 그다음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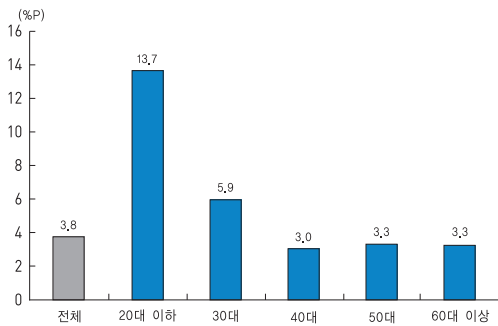
20대 이하의 경우 소득이 동 시기에 오히려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앞서 살펴본 부채의 빠른 증가와 관련 있어 보인다. 가구의 금융자산은 저축에 해당되는 금액과 전월세 보증금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임차인이 받아야 할 보증금을 금융자산으로 간주하여 집계한 것이다. [그림 VI-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가구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5.7%에서 2022년 29.5%로 3.8%p 상승하였다. 이는 분석 기간 중 높아진 전세가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월세 보증금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아직 내 집 마련이 어려운 20~30대가 전월세 보증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8년의 경우 20대 이하는 56.4%로 모든 연령대 중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47.8%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전월세 보증금 비중은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15%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하였다. 2022년의 경우 20대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 비중은 70.1%로 2018년 대비 13.7%p 상승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상승폭을 보였다.

[그림 VI-21] 가구주 연령집단별 금융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 비중, 2018-2022

1) 금융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 비중



2) 2018년 대비 2022년 금융자산 중 전월세 보증금 비중의 증감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자산은 전체 가구당 자산보유액을 기준으로 함.
 3) 금융자산은 저축액(적립·예치식 저축, 기타 저축)과 현거주지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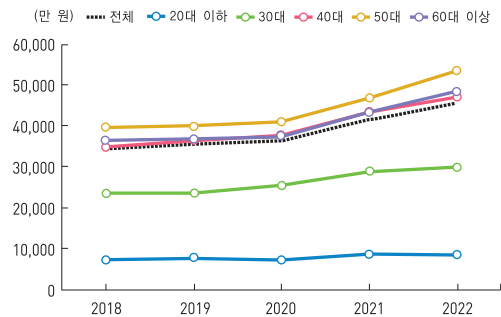
연령대별 순자산 추이 및 재무건전성

실제 가계의 부를 나타내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다. [그림 VI-22]에서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2018년 대비 2022년 가장 낮은 순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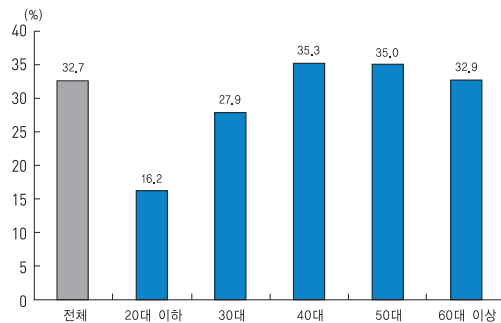
증가를 나타냈다. 20대 이하는 코로나19 전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부채 보유를 통해 자산도 함께 늘려 대차대조표가 확대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보다 낮은 순자산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대비 2022년 전체 가구의 순자산은 32.7% 증가한 반면, 20~30대 청년세대 중 30대는 27.9%, 20대 이하는 16.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자산 증가를 나타내었다. 반면 40~50대는 이 기간에 높은 순자산 증가를 보여

[그림 VI-22] 가구주 연령집단별 순자산, 2018-2022

1) 순자산



2) 2018년 대비 2022년 순자산 증감률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순자산은 전체 가구당 순자산보유액을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상대적으로 적은 부채와 높은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부의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순자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40대의 경우 대부분 기간에서 전체 가구의 평균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30대는 한번 그리고 20대 이하는 두 차례 전체 가구의 평균보다 높은 순자산 증가세를 보였다. 다른 세대와 달리 20대 이하의 순자산은 한해 증가한 후 한해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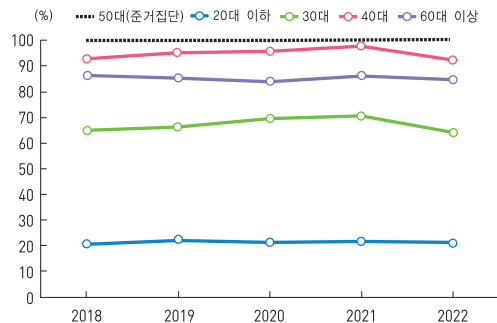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순자산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Ω -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고 부유한 연령대는 50대이고 다음이 60대, 그리고 40대가 근소하게 그 뒤를 잇고 있다. 30대와 20대 이하의 가장 낮은 순자산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VI-23]에서 순자산이 가장 높은 50대와 20~30대 청년세대 간 순자산 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대비 2022년 격차가 오히려 커졌는데, 이 기간 20대 이하의 순자산비가 2.6%p 하락했으며, 30대는 3.1%p 하락해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자산 가격 하락 이전인 2021년을 2018년과 비교하면 격차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산 가격 하락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던 2022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2021년간의 추세를 보면 순자산 격차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로 부동산 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40대와 30대의 순자산 증가에 기인한다. 즉 20대를 중심으로 청년세대와 최고 순자산 계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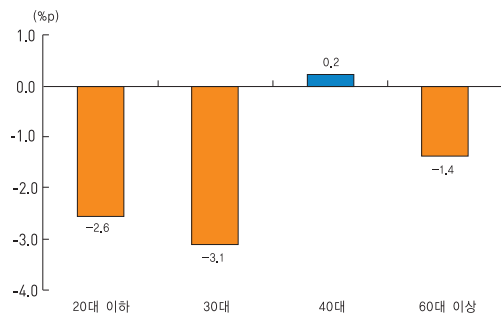
50대 간 순자산 격차는 부채의 높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23] 가구주 연령집단 간 순자산 격차, 2018-2022

1) 연령집단 간 순자산비



2) 2018년 대비 2022년 연령집단 간 순자산비 증감



주: 1) 전국 1인 가구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자산은 전체 가구당 순자산보유액을 기준으로 함.

3) 연령집단 간 순자산비는 생애주기상 순자산 및 자산이 정점인 50대의 순자산보유액 대비 해당 연령집단 순자산보유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전반적으로 20~30대 청년세대는 부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반면, 다른 세대들에 비해 보유자산이 주로 임대보증금 위주로 증가하여 자산가격 상승의 혜택을 보지 못해 순자산이 부

채의 증가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최근 순자산 불평등을 지속 증가시키는 배경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청년세대의 부채가 소득이나 자산의 증가 속도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역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맺음말

코로나19 전후 20대의 소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20~30대 청년세대의 독립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수요가 커짐에 따라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채의 증가와 함께 금융자산도 증가하였지만, 이는 주로 전월세 보증금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 가격이 상승하여도 40~50대와 달리 실질적인 자산가치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그나마 투자된 자산도 변동성이 높은 주식,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이다 보니 보유 자산가치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들의 보유 부채가 소득 증가나 순자산 증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여 20~30대 청년세대 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

으로 짐작된다. 즉 청년세대는 코로나19 전후 상대적으로 정체된 근로소득과 낮아진 금리 하에 부채를 활용한 주거 서비스 이용과 위험도 높은 투자를 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이들의 순자산은 다른 연령층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 사회 전반적인 부의 불평등이 코로나19 전후 악화되는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전후 20~30대 청년세대는 부채 활용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아진 상태이지만, 이러한 이들의 높은 부채는 결국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소득 증가와 주택가격의 불안정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청년세대의 경제적 여건 개선이 향후 고령화 대응에 있어 핵심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근로소득의 증가가 필요하다. 더욱이 이들 세대에게 필요한 안정적이고도 부담가능한 주거 서비스의 제공 역시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및 전세 가격 불안정이 대출을 통한 주거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졌으므로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을 통해 부담가능한 주거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미 높아진 부채와 낮은 소득 등으로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상태이므로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제도의 개선 역시 사회 안전판으로 필요하다.

소득불균등도와 소득이동성의 변화추이

성명재 (홍익대학교)

-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소득불균등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에도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현금 형태로 민간에 제공하는 공적이전 소득과 가까운 친척·친지들이 제공하는 사적이전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의 분배구조는 하향 안정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가구의 소득순위 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이동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고령화가 소득이동성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은퇴인구 비중이 늘어난다. 노인은퇴인가구는 취업을 통해 소득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은퇴인가구가 많아 질수록 소득이동성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지닌다.
- 소득이동성이 작아질수록 소득순위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소득 격차 현상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화내지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소득이동성이 감소하면서 분배구조의 경직성은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총소득의 불균등도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빈곤율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소득불균등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을 전후하여 안정화되는 듯하였으나, 2010년대 중반 분배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것

이 다수의 실증분석 연구에서 보고되었다(성명재, 2016; 정지운·임병인, 2020; 최제민 외, 2022). 후속 연구가 이어지지 않아 최근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추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소득격차는 가구 간 소득의 차이를 절대 크기로 측정할 수도 있고, 소득의 상대적 비율, 즉 소득 점유 비중의 크기 차이로 측정할 수도 있다. 앞의 것을 절대격차, 뒤의 것을 상대격차라고 한다. 소득분배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소득계층 간 소득격차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구의 소득 순위가 얼마나 많이 뒤바뀌는지를 측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가구의 소득 순위가 바뀌는 것을 소득이동성이라고 한다. 소득이동성이 크면, 단기적으로 가구 간 소득격차가 크더라도 여러 기간 동안 소득 순위가 뒤섞이면서 장기적으로 각 가구의 소득은 점차 평균값에 가까워지고 그 결과 장기 소득불균등도는 작아진다. 반대로 소득이동성이 작으면, 장기적으로도 소득분배 격차가 작아지지 않아 단기적인 소득격차의 크기가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득분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단위의 단기 소득불균등도 뿐만 아니라 소득이동성도 함께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10여 년 동안 가구 연간소득의 소득불균등도와 소득이동성, 그리고 빈곤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추정·분석한다. 이를 통해 소득분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소득불균등도의 추이

상대소득분배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들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는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소득분포가 균등할수록 0에 가까워지고,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불균등해질수록 1에 가까워진다. 만약 모든 가구의 소득이 똑같아지면 지니계수는 0이 되고, 반대로 한 가구가 모든 소득을 독차지하는 극단에 이르면 지니계수가 1이 된다.

[그림 VII-24]는 2007~2021년 동안 시장소득과 총소득의 소득불균등도 추이를 보여준다. 시장소득이란 일반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을 기업(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획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임대소득 포함) 등을 가리킨다.¹⁾ 총소득은 시장소득에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전소득은 정부나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무상으

로 제공받은 소득을 말한다.

[그림 VII-24-1]에서 보듯이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상당히 큰 진폭으로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변화패턴을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2000년대 말 지니계수가 0.43 정도였지만 2020년대 이후 0.45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비교하면,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조금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소득 지니계수는 2000년대 말부터 2010년대 초까지 0.42~0.43 수준을 보이다가 2010년대 중반 0.44를 조금 상회할 정도로 상승하였으며, 2010년대 후반부터 완만하게 하락한 다음 2020년 이후 0.418로 감소하여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²⁾

시장소득과 총소득의 지니계수 추이를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소득의 상대격차는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반면 총소득의 상대격차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시장소득에 이전소득을 합산한 것이 총소득이다. 총소득 지니계수가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보다 작다는 것은 이전소득이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VII-24-2]에서 보듯이 지난 10여 년간 두 가지 소득 기준의 지니계수 차이는 조금씩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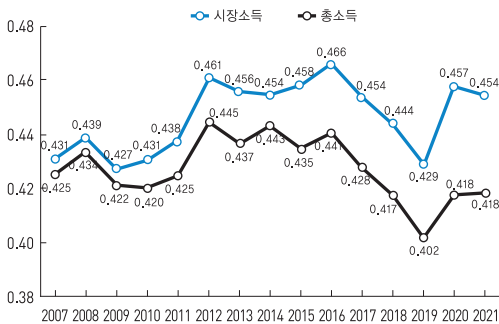
1) 시장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하여 정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것을 시장소득으로 정의한다.

2) 「재정패널조사」는 2019년부터 신규 표본으로 약 4,000가구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표본가구의 범위가 이전 기간과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지니계수 추정치에도 일부 오차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VII-24]에서 2019년에 시장소득과 총소득 지니계수 모두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만약 신규 표본 가구 추출에 의한 오차가 개입되었다면, 지니계수가 하락한 부분 중 일부는 표본가구 추가에 따른 오차 때문일 수 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2019년에 실제로 소득불균등도가 크게 하락한 것인지 아니면 표본추출 오차에 의해 변화폭이 일시확대(overshooting)된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표본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확인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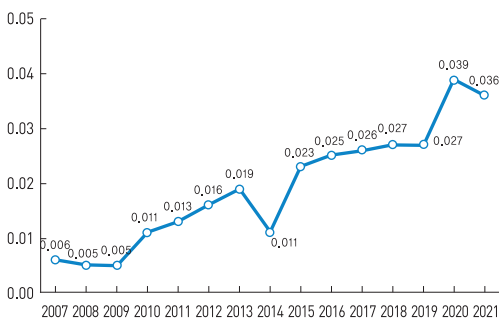
대되고 있다. 2007년에는 시장소득과 총소득 지니계수의 차이가 0.006(=0.431~0.425)였는데, 2021년에는 0.036(=0.454~0.418)으로 약 6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시간이 경과할 수록 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VI-24] 가구 소득 지니계수의 변화, 2007~2021

1) 시장소득 및 총소득 지니계수



2)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주: 1)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2)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 시장소득 지니계수 - 총소득 지니계수

3)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14차년도)」, 원자료, 2022.

위의 논거를 달리 표현하면, 2007~2021년 동안 시장소득의 상대격차가 조금씩 확대되는 추이를 나타내었지만, 민간과 정부로부터 지급된 현금이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시장소득 상대격차의 확대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히 컸기 때문에 총소득 단계의 소득분배구조가 하향 안정화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인은퇴인구와 노인은퇴가구의 비중이 증가한다. 노인은퇴가구는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이 젊은 연령대보다 훨씬 어렵다. 따라서 노인은퇴가구의 경우에는 젊은 연령대보다 빈곤가구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이 특징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인은퇴 인구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소득 단계의 소득분배격차, 즉 소득불균등도는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10여 년간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등락이 있지만 조금씩 확대 추세를 보였던 것도 인구고령화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인구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시장소득의 분배격차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인인구를 주된 수급대상으로 하는 공적 연금제도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과 같은 복지기능이 강화된다면 보완적으로 총소득 단계의 분배구조는 완만하게 하향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연령별 소득분배구조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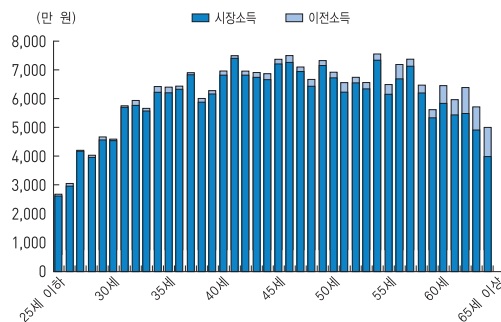
[그림 VI-25]는 2021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령별 총소득 분포를 보여준다. 분포를 보면, 20대 이하 젊은 연령대와 65세 이상 노인 연령대의 소득수준이 낮고 30~50대 연령대의 소득수준이 높은 \cap -자 형태의 생애주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젊은 연령대는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연령대이다. 경험이나 경력이 별로 없고 대부분 직급이 낮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경력과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평균소득도 상승한다. 40대 중반~50대 초반 연령대에 이르면 평균소득이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 이후 체력적·정신적으로 노쇠하기 시작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은퇴도 늘어나면서 평균소득도 감소³⁾하는 패턴을 나타낸다. [그림 VI-25]와 같이 \cap -자의 형태로 보여지는 연령대별 평균소득의 궤적은, 생애주기 가설에서 얘기하는 생애소득 패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VI-25]에서 보듯이 총소득은 시장소득과 이전소득의 합으로 구성된다. 젊은 연령대일수록 이전소득이 미미하고, 총소득은 대부분 시장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이전소득(비중)이 커진다. 특히 40대 후반~50대 초반 연령대부터 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 연령대는 실직이나 명예퇴직 등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은퇴도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연령대이다. 또한 실직에 따른 실업급여, 빈곤가구 등에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조금, 저소득층에 주어지는 근로장려세제 등의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연령대이기도 하다.

고령가구, 특히 노인가구로 갈수록 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한다. 은퇴 등으로 인해 시장소득이 빠르게 감소하며, 노인 연령기에 가까워질수록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공적연금의 수급이 본격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 VI-25] 연령별 가구소득 분포, 2021



주: 1)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2) 이전소득은 총소득에서 시장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함.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14차년도)」, 원자료, 2022.

[그림 VI-25]에 의하면, 20~30대 초반의 젊은 연령대와 50대 후반 이상 연령대의 평균소득 수준은 중·장년층(주로 30대 후반~50대 초반)보다 작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동일 연령집단 내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 비율을

3) 성명재(2015)에 의하면 인구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저소득층은 대부분 노인가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하였을 때, 모든 연령집단에서 그 비율이 같다고 잠정적으로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에는 상대소득격차가 모든 연령집단에서 동일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격차의 절대크기(즉, 절대소득격차)는 평균소득이 높은 연령일수록 크고, 반대로 평균소득이 낮은 연령일수록 절대소득격차가 작아지는 특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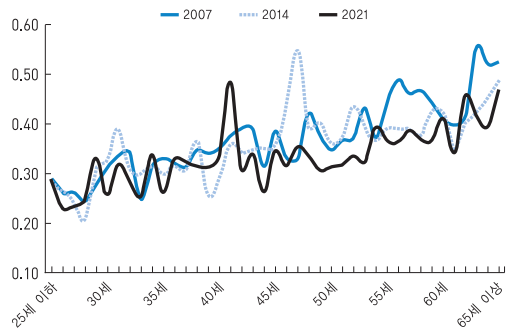
그러므로 젊은 연령대에서 출발하여 중·장년층을 지나 노년층에 이르는 동안 연령별 절대소득격차는 “증가 → 정점 → 감소”와 같은 \cap -자 형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I-26]은 2007년, 2014년, 2021년의 3개년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연령을 25세부터 65세까지 1세 단위로 분할하고, 각 연령집단의 총소득 지니계수를 측정하여 곡선으로 연결한 그림이다. 편의상 24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각각 25세와 65세 연령으로 편입시켰다.

[그림 VI-26]에서 보듯이 3개년도 모두에서 연령별 지니계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계속 상승한다. 특히 중·장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더라도 상대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패턴을 보여준다. 그림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다른 연도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니계수가 계속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VI-25]에서 논의하였듯이 중·장년기까지는 절대소득격차가 증가하다가 노년기에 이르면 절대소득격차는 감소한다. 그렇지만 상대소득격차는 노년기 이후에도 계속 증가한다는 점

[그림 VI-26] 연령별 총소득 지니계수, 2007-2021



주: 1)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2)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14차년도)」, 원자료, 2022.

에서 절대격차와 상대격차 사이에는 일정한 정도 괴리가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총소득은 대부분 시장소득으로 구성된다. 사람들은 노동(또는 자본)을 기업에 제공하고 급여(소득)를 받는다. 자영업자들도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경영을 하고,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포함)을 획득한다. 시장소득이란 노동이나 자본에 대한 대가로서 얻게 되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말한다. 그런데 가구가 기업에 제공하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 수준은 가구별로 균일하지 않다. 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매우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게으르거나, 게으르지 않더라도 생산성이 현저하게 낮은 사람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많은 기업들이 고용을 원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원하는 기업이 적다. 생산성이 뛰어난 사람은 고소

득 직종에서 더 오래 일하고,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저소득 직종에서 일을 하되 그나마 조기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다. 자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고소득자가 되고 또한 오랫동안 고소득 직종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저소득자가 되고, 중·장년이 되더라도 소득이 많이 증가하지 않고 비교적 이른 연령대에서 실직, 은퇴를 경험하면서 낮은 소득수준에 오래 머물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을 ‘시장선택(market selection)’이라고 한다. 시장선택 현상은 생애를 두고 계속 나타난다.

젊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였을 때 기업들은 누가 생산성이 높고, 누가 낮은지 잘 구분하기 어렵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 연령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대소득격차가 작다. 그러나 고용기간이 길어지면 누가 생산성이 높고 낮은지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장선택의 결과로써 상대소득분배 격차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절대소득격차가 줄어든다. 노쇠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노인인구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취업인구 비율도 다른 연령대보다 낮다. 임금 수준도 낮다. 노인들은 절대다수가 저소득층이다. 소수의 취업하고 있는 노인과, 비취업 또는 불완전 취업 상태에 있는 다수의 노인들 사이에는 상대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 바로 이런 연유로 중·장년기를 지나 노년기로 접어들더라도, 절대소득격차는 작아지지만 상대소득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소득이동성 추이

소득분배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지니계수(즉, 소득불균등도)가 얼마이고 시간에 따라 크기변화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소득분배격차의 변화추이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니계수 값이 똑같더라도 시간이 경과할 때 가구의 소득순위가 활발하게 뒤바뀌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득불균등도의 크기와 변화 방향뿐만 아니라 소득순위의 변동 크기를 나타내는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도 함께 고찰해야 소득분배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가구의 소득순위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배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소득분배격차와 장기적인 소득분배격차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와 달리 가구의 소득순위변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장기적인 소득분배격차가 단기 경우보다 줄어든다. 즉, 장기적으로 고소득과 저소득이 고르게 실현되면서 소득순위가 뒤섞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구 간 (상대)격차가 줄

어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동성이 클수록 장기적으로 소득분배격차가 작아지고, 소득이동성이 작을수록 소득순위가 고착화되면서 장기적으로도 소득불균등도가 작아지지 않는 것이 특징적인 현상이다.

소득이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기준연도와 비교연도 사이에 소득분위가 몇 분위에서 몇 분위로 바뀌었는지를 비율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소득순위의 변동성 크기를 통계 분산값으로 형상화하여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첫째 방법은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측정하기는 쉽지만 소득이동성의 크기 변화를 한 눈에 판단하고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고 불편한 방법이다. 둘째 방법은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이해가 쉽고 크기 변화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소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으로 소득이동성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VI-5〉는 첫째 방법을 이용하여 2007년과 2008년 사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소득분위별로 분위를 이동한 가구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표 VI-5-1〉의 첫째 행(2007년 1분위)을 예로 들어 소득분위를 이동한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자. 전체 가구 중 2007년에 최하위 소득층인 1분위였고 2008년에도 여전히 1분위에 잔류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6.14%였다. 2007년 1분위에서 2008년 2분위로 이동한 가구의 비율

〈표 VI-5〉 소득이동성: 소득분위 이동표, 2007-2008, 2020-2021

1) 2007-2008년

(%)

2008 2007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계
1분위	6.14	2.01	0.78	0.41	0.21	0.05	0.16	0.08	0.10	0.06	10.00
2분위	1.75	4.12	2.37	0.72	0.57	0.34	0.10	0.07	0.02	0.05	10.10
3분위	0.58	1.52	3.47	2.51	1.11	0.56	0.20	0.17	0.07	0.03	10.23
4분위	0.46	0.87	1.74	2.64	1.96	1.13	0.57	0.28	0.24	0.17	10.07
5분위	0.57	0.55	0.62	1.68	2.55	2.10	0.79	0.53	0.34	0.37	10.10
6분위	0.19	0.24	0.27	0.91	1.80	2.73	2.27	1.04	0.50	0.14	10.09
7분위	0.09	0.24	0.30	0.39	0.93	1.56	3.08	2.34	0.80	0.23	9.97
8분위	0.10	0.28	0.21	0.38	0.38	0.77	1.70	3.23	2.01	0.59	9.64
9분위	0.11	0.12	0.14	0.29	0.39	0.55	0.88	1.71	3.78	2.09	10.06
10분위	0.00	0.06	0.10	0.06	0.10	0.22	0.24	0.58	2.12	6.26	9.75
소계	9.99	10.00	10.00	10.01	10.00	9.99	9.99	10.03	10.00	9.99	100.00

2) 2020-2021년

(%)

2021 202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계
1분위	6.45	1.94	0.63	0.31	0.24	0.14	0.17	0.03	0.12	0.01	10.05
2분위	2.08	4.81	1.72	0.61	0.25	0.18	0.12	0.10	0.02	0.15	10.03
3분위	0.68	1.71	4.34	1.81	0.84	0.38	0.10	0.04	0.09	0.09	10.08
4분위	0.33	0.65	1.91	3.97	1.59	0.86	0.40	0.28	0.08	0.02	10.10
5분위	0.21	0.58	0.56	1.83	3.54	2.00	0.71	0.43	0.22	0.07	10.15
6분위	0.09	0.15	0.36	0.79	1.90	3.56	1.97	0.86	0.23	0.22	10.12
7분위	0.06	0.03	0.13	0.29	0.80	1.77	3.83	1.89	0.80	0.28	9.89
8분위	0.02	0.05	0.14	0.30	0.55	0.78	1.70	3.92	1.90	0.53	9.90
9분위	0.05	0.08	0.13	0.03	0.25	0.19	0.70	1.89	4.82	1.73	9.86
10분위	0.03	0.01	0.07	0.07	0.03	0.14	0.29	0.55	1.72	6.91	9.83
소계	10.00	10.01	10.00	10.01	9.99	10.01	10.00	10.00	10.00	10.00	100.00

주: 1) 각 통계치는 해당 기간 전체 가구 중 소득분위를 이동한 가구의 비율임. 표 대각선에 위치한 수치는 해당 기간 동일 분위에 잔류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4차년도)」, 원자료, 2022

은 2.01%, 3분위로 이동한 가구의 비율은 0.78%, ... , 최상위 소득층인 10분위로 이동한 가구의 비율은 0.06%로 나타난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10%로 2007년 1분위 가구의 비율과 일치한다. 둘째 행(2분위)~열 번째 행(10분위)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분위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소득분위에 대하여 이동 전 소속 분위와 이동 후 소속 분위기를 대응(매칭)시켜서 소득이동성을 측정하면 행렬(matrix) 형태로 표시되는데, 10개의 소득분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득이동성을 나타내는 비율은 분위 수(10개)의 제곱에 해당하는 100개의 수치로 표시된다.

분위이동가구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쉽기 때문에 행렬로 소득이동성을 표시하는 방법은 계산이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숫자가 나열되는 것이 단점이다. 소득이동성이 커졌는지 또는 작아졌는지를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V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분위가 소득이동성이 더 큰지 혹은 작은지 여부를 한 눈에 판단하기 어렵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다른 분위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동일한 소득분위에 잔류하는 가구의 비율, 즉 <표 VI-6>에 제시된 소득잔류율 추정결과를 살펴보자. 소득잔류율은 소득이동성의 반대개념이다. 예를 들어 <표 VI-6>의 첫째 열은 2007~2008년 동안 전체 가구 중 계속 동일 분위에 잔류한 가구의 비율을 분위별로 보여준다. 2007~2008년 동안 분위 이동을 하지 않은 10개 분위의 잔류가구 비율을 합산하면 38.00%이다.

같은 방식으로 각 기간의 전체 잔류가구 비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0~2011년에는 40.86%, 2014~2015년에는 46.70%, 2017~2018년에는 44.06%, 2020~2021년에는 46.15%로 추정된다. 기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2000년대 말 이후 동일 분위 잔류가구의 비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잔류가구 비율이 커졌다는 것은 반대로 분위 이동한 가구비율이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즉, 소득이동성이 작아졌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소득이동성의 크기를 모두 측정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분위이동을 하였더라도 얼마나 멀리 떨어진 분위로 얼마만큼의 가구가 이동하였는지 등을 한 눈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행렬의 형태로 소득이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표 VI-6> 소득이동상 동일분위 잔류가구 비율, 2007~2021

	2007-2008 2010-2011 2014-2015 2017-2018 2020-2021				
	2007-2008 2010-2011 2014-2015 2017-2018 2020-2021				
1분위	6.14	6.86	6.40	6.63	6.45
2분위	4.12	4.38	4.81	5.14	4.81
3분위	3.47	3.33	4.05	4.13	4.34
4분위	2.64	3.00	3.73	3.56	3.97
5분위	2.55	3.04	3.51	3.15	3.54
6분위	2.73	2.71	3.80	2.58	3.56
7분위	3.08	3.32	3.79	3.20	3.83
8분위	3.23	3.65	3.93	4.00	3.92
9분위	3.78	4.25	5.55	4.64	4.82
10분위	6.26	6.32	7.13	7.03	6.91
전체	38.00	40.86	46.70	44.06	46.15

주: 1)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4차년도)」, 원자료, 2022.

개념이나 통계분석방법이 매우 간단하다. 그러나 소득이동성의 크기 비교 등을 해석하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소득이동성의 크기를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표는 없는가? 다행히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있다(yes)’이다. 성명재(2018)와 김학수(2020)는 복잡한 표 대신 분산(variance)이라는 수치 하나로 소득이동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통계학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통계정보는 평균과 분산이 대표적이다. 평균은 통계 분포의 위치 정보에 대한 크기를 보여주는 통계치(statistic)이다. 분산은 변수의 변동성, 즉 변수의 변화폭이 평균점에서 얼마나 멀리 또는 가깝게 펼쳐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치이다. 소득의 분산이 크다는 것은 가구 간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분산이 작다는 것은 가구 간 소득격차가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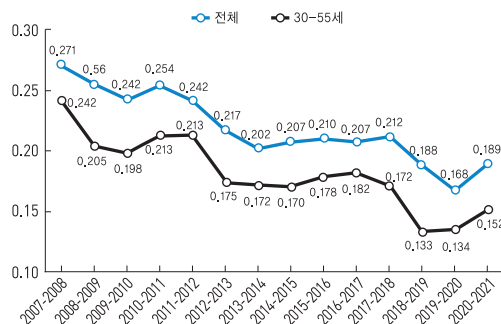
가구소득의 순위변동 크기에도 이런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순위의 변동 정도가 평균 수준에서 얼마나 먼 곳 또는 얼마나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분산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소득이동성이 크다는 것은 가구 소득의 순위변동이 크다는 것, 즉 분산값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이동성이 작다는 것은 순위변동 크기가 작고, 따라서 분산값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구소득 순위의 변동 크기를 분산으로 측정하면 소득이동성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VI-27]은 각각의 기간에 소득이동성을 분산으로 측정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파란 실선은 전체 가구 대상의 분산값, 검은 실선으로 표시한 것은 가구주 연령이 30~55세인 가구로 한정된 경우의 분산값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2007~2008년 사이의 소득이동성을 나타내는 분산은 0.271로 추정되었다.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분산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2019~2020년에는 0.168로 감소하였다. 2020~2021년에는 0.189로 분산이 소폭 상승하였지만, 전 기간을 놓고 볼 때 분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추세적으로 소득이동성이 감소하였음을 시사한다.

분석대상가구를 핵심경제활동 연령대인 30~55세로 한정된 경우에도 분산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핵심경제활동 연령대에서도 소득이동성이 하락하였음을 시사한다. 소득이동성이

[그림 VI-27] 분산으로 측정된 소득이동성, 2007~2021



주: 1) 해당 기간 가구 소득순위 변동의 크기를 분산의 형태로 측정된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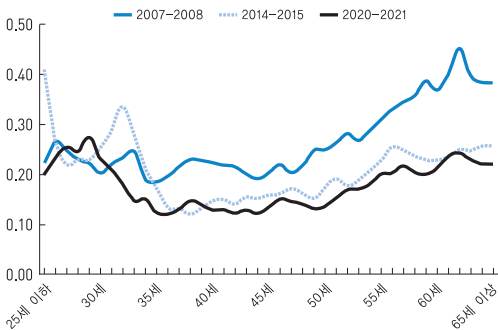
2)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14차년도)」, 원자료, 2022.

하락하였다는 것은 소득순위의 변동이 그만큼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VI-28]은 연령을 25세 이하, 26~64세의 1세별 집단, 65세 이상 등 총 41개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각 연령집단 내에서의 소득이동성을 분산값의 형태로 산출하여 비교한 그림이다. 분석대상기간에 따라 분산곡선의 절대높이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대칭적인 U-자 형태의 곡선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젊은 연령대와 노인연령대에서 분산값이 크고, 핵심경제활동 연령대에서는 분산값이 작다는 것이다.

[그림 VI-28] 연령별 소득이동성(분산) 분포, 2007-2021



주: 1) 해당 기간 가구 소득순위 변동의 크기를 분산의 형태로 측정한 지표임.
2)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14차년도)」, 원자료, 2022.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핵심경제활동 연령대에서 소득이동성이 크고, 반대로 은퇴기나 취업시작 연령대에서 소득이동성이 작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증분석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취업초기

의 젊은 연령대에서는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 연령집단에 다수를 구성한다. 이들은 대부분 미취업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순위 변동이 크지 않다. 그러나 미취업상태에 있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득순위가 수직상승한다. 이런 연유로 젊은 연령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동성이 크다. 반대로 노인 연령대에서는 은퇴를 하게 되는 경우 소득순위가 수직낙하한다. 따라서 노인 연령대에서도 소득이동성이 높다.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한다. 노인연령층의 경우 연령집단 내에서는 소득이동성이 크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결합하면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가중평균한 경제 전체의 소득이동성은 상승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림 VI-27]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은 정반대이다. 왜 그런가?

경제 전체의 소득이동성은 각 연령대별 소득이동성의 가중평균값에 영향을 받는다. 그 밖에도 각 연령대 사이의 소득순위 변동성을 나타내는 연령집단 간 소득이동성의 크기도 전체 소득이동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두 번째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노인 연령대는 재취업을 통해 고소득 직종에 복귀하는 것이 어렵다. 고소득 직종이 아니더라도 젊은 연령대, 즉 핵심경제활동 연령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체력이나 노쇠로 인한 건강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 등도 세대 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 연령대는 젊은 연령

대와 경쟁하여 소득순위 변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인 연령대와 핵심경제활동 연령대 사이에는 이동이 쉽지 않은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연령집단 간 소득이동성은 상당히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령집단 간 소득이동성의 가중치도 커진다. 그 결과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연령집단 간 이동성 측면에서 경제 전체의 소득이동성이 작아진다.

결론적으로 인구고령화는 소득이동성을 높이는 요인(연령집단 내 이동성)과 소득이동성을 낮추는 요인(연령집단 간 이동성)을 동시에 가진다. 인구고령화가 소득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은 두 가지 상반된 효과 중에서 어떤 효과가 더 큰지에 달려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연령집단 간 소득이동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연령집단 내 소득이동성이 높아지는 효과보다 훨씬 크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소득이동성이 하락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빈곤율 추이

소득분배구조를 얘기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빈곤율의 변화추이이다(성명재, 2007). [그림 VI-29]는 2007~2021년 동안 빈곤율의 변화추이를 보여준다.

빈곤율은 크게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절대빈곤율이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고, 전체 가구 중 절대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상대빈곤율이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40% 또는 50%에 못 미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고 전체 가구 중 이들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글에서는 가구총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가구를 상대빈곤가구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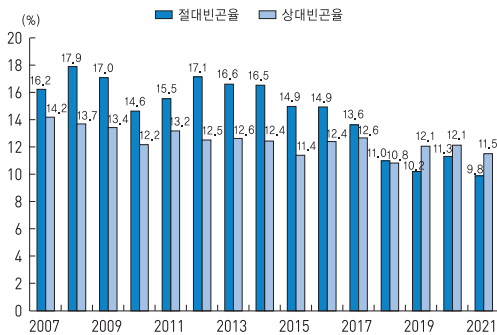
중위소득이란 소득순위가 정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체의 가구 수가 99개라고 할 때 소득순위가 정 가운데, 즉 50위인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최저생계비란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가구소득 값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가구소득 금액을 나타낸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보다는 조금 더 큰 금액으로 설정된다. 흔히 중위소득의 40% 내외에서 최저생계비가 설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기준중위소득의 39.5%에 해당되는 소득금액을 가상의 최저생계비로 간주하여 절대빈곤율을 추정하였다.⁴⁾

[그림 VI-29]에서 보듯이 절대빈곤율은 2007년

4)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가구원수별로 기준중위소득 값을 발표하고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각종 복지정책의 수혜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까지 최저생계비 정보와 기준중위소득 자료를 동시에 제공하였는데, 2015년 기준으로 제공된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 값을 비교해본 결과, 모든 가구원수별로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39.5%로 책정되어 있었다.

16.2%에서 2008년 17.9%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2021년에는 9.8%로 감소하였다. 상대빈곤율은 2007년 14.2%에서 2021년 11.5%로 감소하였다. 절대수준이 조금 다르지만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모두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 [그림 VI-24]에서 보듯이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미세하게 상승하였지만, 총소득 지니계수가 소폭 감소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증가한 것이 빈곤율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재분배 효과가 커지면서 빈곤율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VI-29] 빈곤율, 2007-2021



주: 1) 절대빈곤율은 가구소득이 (가구원수별) 절대빈곤선보다 작은 가구의 비율임. 절대빈곤선은 2014년까지는 최저생계비, 2015년부터는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의 39.5% 수준임.
 2) 상대빈곤율은 가구소득이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의 50%보다 작은 가구의 비율임.
 3) 원자료 분석을 통한 저자 추정치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1-14차년도)」, 원자료, 2022.

맺음말

200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소득분배구조를 살펴보면, 시장소득 단계에서는 소득불균등도가

미세하지만 조금씩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총소득 단계의 소득불균등도는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룬다. 이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소득분배구조의 변화패턴이 작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데에는, 민간과 정부의 현금소득의 이전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확대되었던 것이 주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계층 간 가구소득의 순위변동을 통한 소득이동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이동성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요인분석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을 알기는 어렵지만 인구고령화가 그런 추세에 일조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소득이동성이 높으면, 단기적으로 소득불균등도가 크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구소득의 순위가 뒤섞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구 간 소득격차가 완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소득불균등도가 크더라도 소득이동성이 높으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소득분배격차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소득 기준으로 소득불균등도는 안정화되고 있지만, 소득이동성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단기 소득분배격차가 장기에도 잘 완화되지 않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0여 년간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분배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고소

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배수가 확대 또는 축소되는지에 있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빈곤층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비록 소득불균등도(지니계수) 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반면, 소득이동성이 낮아지면서 장기적으로 소득분배격차가 완화되는 효과가 줄어들고 있음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분배구조는 어느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단순히 소득불균등도(지니계수)만으로 분배구조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기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하여 분배구조의 건강한 정도를 진단·분석·평가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계층 간 소득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느냐의 문제보다는 빈곤율, 빈곤대책 문제 등이 훨씬 더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학수. 2020.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정책시사점」. 정책연구시리즈 2020-09. 한국개발연구원.
- 성명재. 2007. “빈곤탈출추이와 빈곤정책소요자원 규모의 추정.” 「재정논집」. 한국재정학회. 제22집. 제1호. pp. 61-88.
- _____. 2015. “인구·가구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사회과학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제22권. 제2호. pp. 215-236.
- _____. 2016.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재정수혜 결합분포와 재분배 정책효과의 추정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제22권. 제1호. pp. 1-79.
- _____. 2018. “소득이동성의 추이변화와 인구고령화의 영향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제24권. 제3호. pp. 1-58.
- 정지운·임병인. 2020. “소득불평등의 연령효과와 추이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제68집. 제4호. pp. 93-118.
- 최제민·김성현·박상연. 202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제66집. 제1호. pp. 155-182.

2023 Leisure

Korean Social Trends 2023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VII 여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22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가활동 비교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234
팬데믹이 가져온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의 변화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44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줄면서 국민들의 여가 활동은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예술활동, 스포츠, 여행 등의 여가활동은 2022년 모두 증가하였으나,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친다.
- 코로나19 감염 기간 동안 크게 증가했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의 비중은 낮아졌으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웹툰 이용과 OTT시청의 증가 추세는 지속되었다.
- 혼자서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이 줄고 다양한 여가 동호회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활동의 사회적 성격이 다시 복원되는 추세를 보였다.
- 코로나19 확산이 끝나고 전반적인 여가생활 만족도가 코로나19 확산 전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여가 비용 지출이 크게 늘고 여가 불만족의 원인으로서 비용 부담이라는 응답이 늘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일상이 회복되는 시기에 국민 여가생활에 일어난 변화를 살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의해 초래된 여가 영역의 많은 변화가 코로나19 확산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지,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전환을 초래한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행조사」, 「국민생활체육조사」,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등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또한 조사 자료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최근의 변화 동향을 살피보기 위해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등 집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상기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의 동향을 파악한 후 여가활동의 기반으로서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을 살피고 여가 만족도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여가활동

〈표 VII-1〉은 2022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에 대해서 5순위까지 복수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율이 높은 상위 10개를 파악한 것이다. 2021년에는 상위 순위에 음주가 들지 못하고 낮잠이 상위 10개 여가활동에 속하게 되었는데, 2022년에는 낮잠 대신 음주가 다시 상위 순위에 들어왔다. 그 외 전년 대비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모바일 콘텐츠 시청과 산책 및 걷기의 순위가 서로 바뀐 정도이다. 모바일 콘텐츠 시청(41.4%)은 2021년 대비 1.4%p 감소한 반면, 산책 및 걷기(43.8%)는 2021년 대비 1.7%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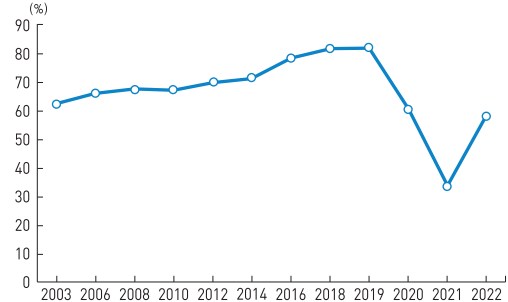
〈표 VII-1〉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상위 10개), 2020-2022

						(%)
		2020	2021	2022		
1	TV 시청	67.6	TV 시청	69.0	TV 시청	66.8
2	산책 및 걷기	41.3	모바일 콘텐츠 시청	42.8	산책 및 걷기	43.8
3	인터넷 검색	34.2	산책 및 걷기	42.1	모바일 콘텐츠 시청	41.4
4	잡담 /통화	33.0	잡담 /통화	40.3	잡담 /통화	35.2
5	모바일 콘텐츠 시청	32.6	인터넷 검색	36.5	인터넷 검색	27.4
6	쇼핑 /외식	26.5	쇼핑 /외식	24.8	쇼핑 /외식	25.4
7	친구 만남	25.7	친구 만남 /이성 교제	24.1	친구 만남 /이성 교제	23.0
8	게임	18.9	게임	18.9	게임	15.4
9	음악 감상	17.6	음악 감상	17.2	음악 감상	14.2
10	음주	14.5	낮잠	12.3	음주	13.0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참여율은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의 1순위부터 5순위 까지 복수응답한 결과를 합친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영향이 줄면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국민의 비율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2022년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국민의 비율은 58.1%로 전년 대비 24.5%p 증가하였으나, 2019년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81.8%)에는 아직 못 미쳤다(그림 VII-1). 연령대별로는 20대(90.6%)와 30대(81.9%)의 관람률은 높고, 60대(30.3%)와 70세 이상(14.8%)의 관람률은 낮아 세대 간 차이

[그림 VII-1]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0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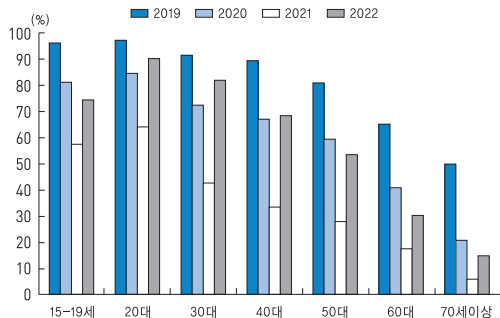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지난 1년 동안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 등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3) 2012년 조사부터 연극과 뮤지컬을 세부화하여 조사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가 크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컸는데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은 관람률이 73.6%인데 비해 월 소득 100~200만원과 100만원 미만은 각기 17.9%와 17.4%였다. 장르별로는 영화 관람률(52.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중음악·연예(7.4%), 미술전시회(6.7%), 연극(5.3%), 뮤지컬(4.9%), 문학행사(2.4%), 무용(0.4%)의 순이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도 평균 2.2회로 2021년의 1.4회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19년 6.3회에는 못 미쳤다. 이와 같은 회복 추세는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났다. 2022년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2019년 대비 회복된 정도를 보면, 가장 회복의 정도가 높은 20대의 경우 93.0%까지 회복된 반면, 가장 회복의 정도가 낮은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회복된 정도가 29.7%에 머물렀다(그림 V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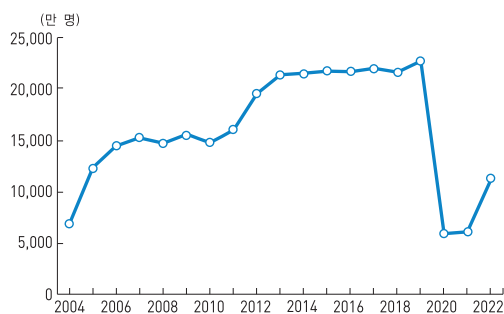
[그림 VII-2] 연령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19-2022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가장 높은 관람률을 보인 영화 분야의 경우, 2022년 영화 관객 수는 1억 1,281만 명으로 2021년 6,053만 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2억 2,668만 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그림 VII-3).

[그림 VII-3] 연도별 영화 관객 수, 2004-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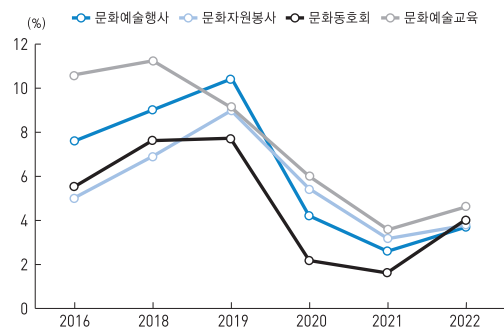
주: 1) 한국 영화, 외국 영화 관객 수를 합친 전체 관객 수임.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http://www.kobis.or.kr>), 2023. 7.

적극적인 문화예술 참여 활동도 감소세가 멈추고 회복되고 있다. 2022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창작발표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

행사 참여율은 3.7%로 2021년 대비 1.1%p 증가하였다. 문화자원봉사 참여율도 3.8%로 2021년 대비 0.6%p 증가하였다.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4.0%로 전년 대비 2.4%p 증가하였다. 최근 1년 동안 학교 이외의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비율도 4.6%로 전년 대비 1.0%p 증가하였다(그림 VII-4).

[그림 VII-4] 문화예술행사, 문화자원봉사, 문화동호회,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2016-2022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지난 1년 동안 창작, 발표활동 등을 통해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3) 문화자원봉사 참여율은 현재 문화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4) 문화동호회 참여율은 지난 1년 동안 문화동호회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5)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지난 1년 동안 학교교육 이외에 문화예술 관련 강좌나 강습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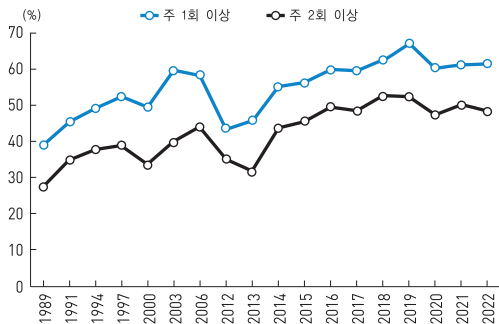
스포츠와 관련된 여가활동은 스포츠 관람과 생활체육 참여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주요 프로스포츠 경기당 평균 관중 수를 보면, 야구의 경우 2022년 경기당 8,648명으로 전년 1,937명에 비해 급증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직전의 1만 명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축구의 경우도 2022년 경기당 3,148명으로 전년 1,382명에 비해 크게 늘었으나 2019년 5,769명에는 못



미쳤다. 대표적인 프로스포츠의 경기당 평균 관중 수가 증가한 것을 볼 때 스포츠 관람률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생활체육조사」를 통해 집계된 국민들의 지난 1년간 규칙적(1회 운동 시 30분 이상) 생활체육 참여 비율을 보면, 주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은 2022년 61.2%로 전년 60.8%에서 0.4%p 증가하였으나 주 2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은 2022년 48.1%로 전년 49.8%에서 1.7%p 감소하였다(그림 VII-5). 종목별로 보면 걷기(36.8%), 등산(10.5%), 보디빌딩(12.8%)이 전년 대비 각각 4.6%p, 3.0%p, 0.6%p 감소한 반면, 수영(8.5%), 축구·풋살(8.3%), 골프(7.8%)는 전년 대비 각각 4.5%p, 2.5%p, 1.0%p 증가하였다.

[그림 VII-5] 생활체육 참여율, 1989-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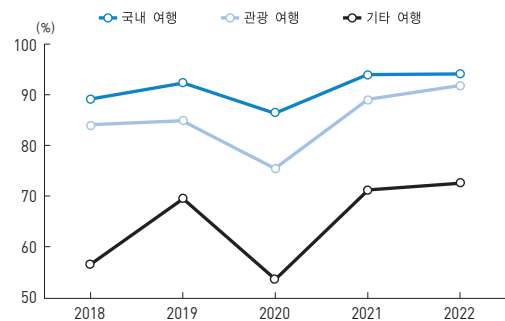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생활체육 참여율은 지난 1년 동안 주 1회, 주 2회 이상 등 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생활체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각 연도.

「국민여행조사」 자료를 보면, 행정구역상 현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모든 여행을 의미하는 국내여행 경험률은 2022년 94.2%

로 전년 대비 0.3%p 증가했다. 관광 및 휴양 활동 방문을 의미하는 관광여행 경험률도 2022년 91.8%로 전년 대비 2.8%p 증가했다(그림 VII-6). 1인 평균 국내여행 일수를 살펴보면, 2022년 9.7일로 전년 대비 1.7일 증가하였다. 숙박여행 일수는 6.1일, 당일여행 일수는 3.7일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다(그림 VII-7). 국내여행 경험률은 2019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국내여행 일수는 아직 2019년 12.9일에 못 미쳤다.

[그림 VII-6] 국내여행 경험률, 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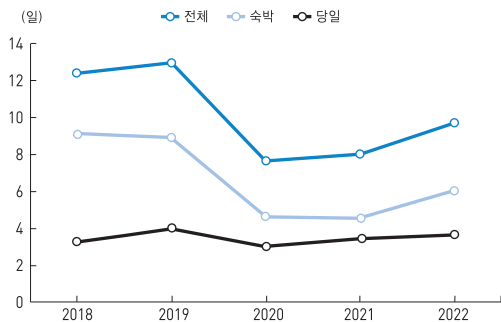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국내여행 경험률은 1년 동안 현 거주지역(일상생활권)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비율임.
3) 관광여행 경험률은 1년 동안 현 거주지역(일상생활권)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관광, 자연감상 등 여가/위락/휴가 목적의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각 연도.

「한국관광통계」를 통해 해외여행객 수 통계를 보면, 2022년 655.4만 명으로 2021년 122.3만 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9년 2,871.4만 명의 22.8%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22년 11월 이후부터 매일 해외여행객 수가 1백만 명을 넘기 시작하여 2023년에 5월 말까지 누적 해외



여행객 수는 815.9만 명으로 이미 2022년 해외여행객 수를 넘어섰다(그림 VII-8).

[그림 VII-7] 국내여행 일수, 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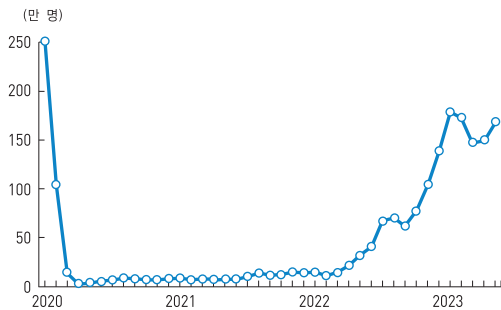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국내여행 일수는 1년 동안 다녀온 국내 숙박 및 당일 여행의 1인당 평균값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각 연도.

[그림 VII-8] 해외여행객 수, 2020.1-2023.5



주: 1) 해외여행객 수는 법무부 출입국통계의 국민 출국자에서 재외국민 출국자를 제외하고 선원·승무원을 포함한 수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 연월.

미디어 이용 여가활동

미디어 이용에서는 스마트폰 이용과 TV 시청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2년 「방

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가구 매체로서 TV 보유 현황은 2022년 95.4%로 2021년 96.5%에 비해 1.1%p 감소하였고, 개인 매체로서 스마트폰은 2022년 93.4%로 2021년과 동일하였다.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매체들 중에는 스마트폰 이용률이 90.1%로 가장 높고, TV 이용률이 75.5%로 그다음이었다. 2021년에 비해 스마트폰 이용률은 1.5%p 감소하였고, TV 이용률은 2.1%p 증가하였다. 매체 이용 시간에서는 TV 시청 시간이 3시간 3분으로 전년 대비 3분 감소하였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시간으로 전년 대비 3분 감소하였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경우, 연령대별로 변화가 상이했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가장 긴 20대는 2022년 3시간 5분으로 2021년 3시간 12분에 비해 7분 감소한 반면, 40대는 2022년 2시간 10분으로 2021년 1시간 59분에 비해 11분 증가하였고, 60대는 2022년 1시간 7분으로 2021년 58분에 비해 9분 증가하였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 비중도 낮아졌다. 2022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은 평일 1.4시간, 휴일 1.8시간으로 전년 대비 모두 0.5시간 감소했다. 하루 평균 전체 여가시간 중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의 비중 역시 평일 37.8%, 휴일 32.7%로 전년 대비 모두 12.2%p, 7.0%p 감소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 유형으로는 모바일 메신저(23.1%), 웹서핑(19.3%)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 방송 시청(11.0%), SNS(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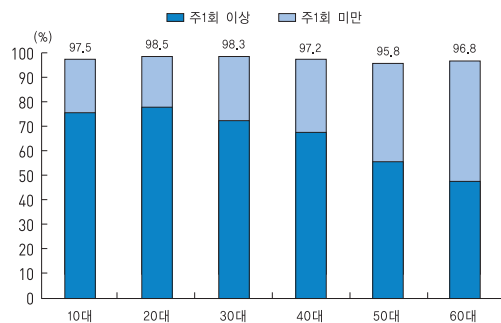


게임(9.1%)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의 주요 사례로 웹툰 이용을 볼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의 웹툰 이용자 조사 결과를 보면 웹툰 이용 시 주로 사용하는 기기는 스마트폰이 8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PC(12.1%), 태블릿 PC(3.7%)였다. 웹툰 이용자들의 웹툰 이용 빈도는 높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하는 「2022 만화·웹툰 이용자 실태조사」에서 만화·웹툰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이 2022년 68.9%로 2021년 66.9%에 비해 2.0%p 증가하였고, 거의 매일 이용이 2022년 24.7%로 2021년 23.9%에 비해 0.8%p 증가하였다. 웹툰 월평균 지출 비용은 47.7%가 5천 원 미만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였으나 웹툰 오프라인 단행본 구매 경험이 2022년 29.0%로 2021년 23.1%에 비해 5.9%p 증가하여 소비 활동이 다각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조사는 웹툰 이용자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웹툰 이용자의 비율 자체 변화를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2022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를 보면, 웹툰 이용자 증가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21년 한국 웹툰 플랫폼의 총매출 추정액이 약 8,241억 원으로 2020년 플랫폼 총 매출액 5,191억 원 대비 58.8% 성장하였고, 웹툰 플랫폼과 웹툰 CP사의 매출 추정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 웹툰 산업 규모 추정을 보더라도 2021년 약 1조 5,660억 원으로 2020년 1조

538억 원 대비 48.6%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이용률을 비교하면, 주 1회 이상 웹툰 이용 비율에서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난다. 30대 이하에서는 모두 70% 이상을 넘고 40대는 이에 조금 못 미치는 67.4%인데 비해, 50대는 55.8%, 60대는 47.4%에 머물렀다. 웹툰 산업의 빠른 증가는 젊은 연령대의 고이용자군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VII-9).

[그림 VII-9] 연령별 웹툰 이용률, 2022



주: 1) 만 10~69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웹툰 이용률은 최근 1년 동안 포털사이트, 웹툰 전문 플랫폼 등을 통하여 주 1회 이상 또는 주 1회 미만 웹툰을 이용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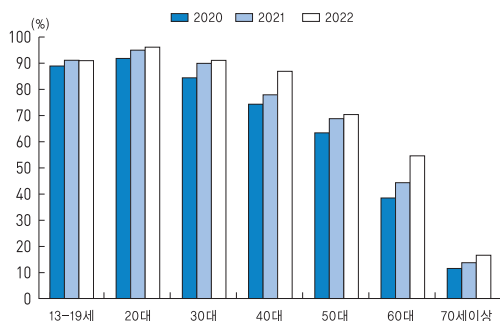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만화·웹툰 이용자 실태조사」, 2022.

2022년 「방송매체이용실태조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OTT 이용률은 2022년 72.0%로 2021년 69.5%에 비해 2.5%p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OTT 이용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0대가 95.9%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은 16.3%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2021년과 비교해 보면, 40대와 60대에서 각각 9.0%p와 10.0%p가 증가하는 등 나이 많은 연령층에서 OTT 관람률



이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연령차는 줄어드는 추세이다(그림 VII-10). 프로그램 유형별 OTT 이용률은 성별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 여성 모두 공통적으로 오락/연예의 시청률이 62.8%, 71.8%로 가장 높았던 반면, 드라마의 시청률은 여성(63.2%)이 남성(36.3%)에 비해 높았고 스포츠의 시청률은 남성(36.7%)이 여성(8.9%)에 비해 높았다.

[그림 VII-10] 연령별 OTT 이용률, 2020-2022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률은 평소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등의 플랫폼 중에서 1개 이상 이용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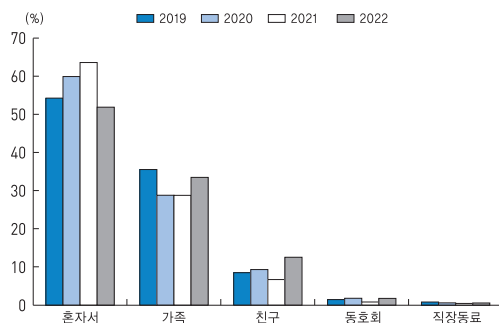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각 연도.

여가활동과 사회자본

2022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주로 함께한 여가활동 동반자(1순위 여가활동 기준)는 혼자서가 51.8%로 전년 대비 11.8%p 감소하였다. 가족은 33.5%로 전년 대비 4.7%p 증가하였고, 친구는 12.4%로 전년 대비 5.9%p 증가하

였다. 동호회 회원은 1.6%, 직장동료는 0.5%로 전년 대비 각각 0.9%p, 0.2%p 증가하였다(그림 VII-11). 2019년 이래 지속되어 온 혼자서 여가활동을 한다는 비율의 증가 추세가 꺾인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제약이 폐지되면서 여가활동의 사회적 성격이 다시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I-11] 여가활동 동반자, 2019-2022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1순위 여가활동을 주로 함께한 동반자에 대한 응답결과를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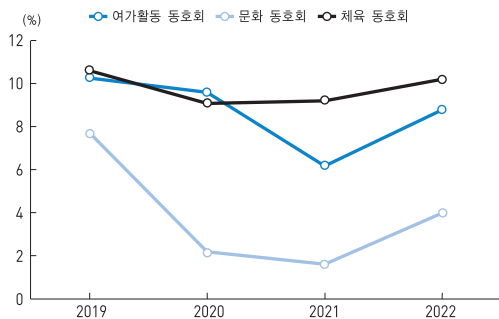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동호회를 통해 여가활동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지는 비율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여가활동 동호회 참여율이 2022년 8.8%로 2021년에 비해 2.6%p 증가하였으나, 2019년 10.3%까지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여가활동 동호회의 주된 활동 상위 10개는 농구/배구/야구/축구/족구(14.6%), 골프(10.5%), 배드민턴/줄넘기/맨손스트레칭 체조/홀라후프(5.7%), 볼링/탁구(4.9%), 테니스/



스쿼시(4.9%), 사이클링/산악자전거(3.0%) 순으로 체육활동이 절반을 넘었다.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가입률은 2022년 16.9%로 2021년 13.5%에 비해 3.4%p 증가하였다.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에 가입하여 현재 활동하는 사람은 2022년 10.2%로 2021년 9.2%에 비해 1.0%p 증가하였다(그림 VII-12). 종목별로 보면, 체육 동호회 가입자 기준으로 축구/풋살(18.4%), 골프(16.7%), 배드민턴(9.7%), 볼링(7.7%), 테니스(7.1%), 수영(6.4%), 탁구(6.2%) 등의 비중이 높았다. 문화동호회 참여율 역시 4.0%로 전년 대비 2.4%p 증가하였다.

[그림 VII-12] 여가 관련 동호회 참여율, 2019-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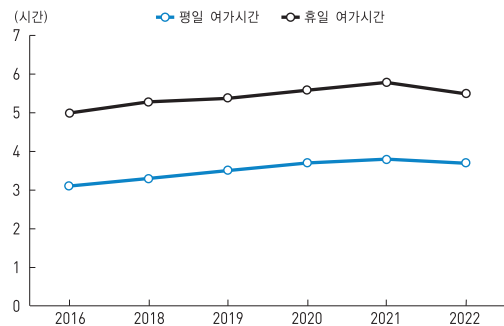
주: 1) 동호회 참여율은 각각의 동호회에서 현재 활동하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각 연도.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그동안 여가시간은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이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다

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평일 여가시간은 3.7시간, 휴일 여가시간은 5.5시간으로 2021년에 비해 평일 0.1시간, 휴일 0.3시간 감소하였다(그림 VII-13). 지난 2016년 이래 나타난 여가시간 증가 추세가 꺾였다. 국민들이 희망하는 여가시간도 평일 4.4시간, 휴일 6.2시간으로 2021년에 비해 평일 0.3시간, 휴일 0.4시간 감소하였다. 실제 여가시간과 희망 여가시간 사이의 차이도 평일 0.7시간, 휴일 0.7시간으로 2021년에 비해 평일 0.2시간, 휴일 0.1시간 줄었다. 여가시간이 줄었으나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I-13]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 2016-2022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지난 1년 동안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응답한 결과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국민들의 여가시간은 줄어든 반면, 휴가 활용은 202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2022년 휴가 경험 비율은



38.6%로 2020년 43.3%에는 못 미치나 2021년에 비해 8.9%p 증가하였다. 휴가 경험자의 휴가 일수도 5.2일로 2020년 5.9일에는 못 미치나 2021년에 비해 0.4일 증가하였다. 휴가 경험과 휴가일수의 증가는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 현황에서도 나타났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근로자휴가조사」에 나타난 2021년 연차휴가 사용 현황을 보면, 연차소진율이 76.1%로 2020년에 비해 4.5%p 증가하였고, 사용연차일수가 11.6일로 2020년에 비해 0.9일 늘었다.

「국민여가활동조사」로 파악한 국민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2022년 월평균 17만 6천 원으로 2021년에 비해 2만 7천 원이 늘었다. 희망 여가비용은 월별 23만 9천 원으로 2021년에 비해 4만 2천 원이나 늘어서 실제 지출 증가 규모를 넘었다. 월평균 여가비용과 희망 여가비용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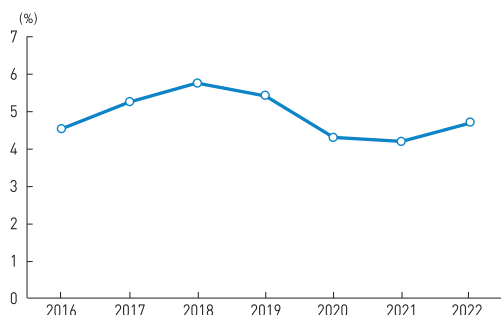
의 차이는 6만 3천 원으로 2021년의 차이 4만 8천 원 보다 1.3배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고 여가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여가비용이 실재나 희망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여가비용의 증가 추세는 가계지출에서도 확인된다. 「가계동향조사」로 집계한 2022년 가구 월평균 오락문화비 지출은 16만 8,837원으로 2021년에 비해 2만 6,230원 증가하였다.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에서 오락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문화여가 지출률도 4.7%로 2021년에 비해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14).

여가 만족

2022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중 자신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6.6%로 2021년 49.7%에 비해 6.9%p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의 56.4%와 거의 대등한 수준을 회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2021년에 비해 여가생활 만족 비율의 증가 폭이 더 컸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상 연령층에서 모두 여가생활 만족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대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반면 15~19세 연령층에서는 여가생활 만족 비율이 감소하여 다른 연령대와 차이를 보였다(그림 VII-15).

여가생활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 불만족한 이유로는 시간 부족(41.1%)과 경제적 부

[그림 VII-14] 문화여가 지출률, 2016-2022



주: 1) 문화여가 지출률=(가구 월평균 오락문화비÷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액)×100. 1인 이상 전국 가구 기준임(2016년까지는 농림여가 제외, 2017년부터는 농림여가 포함).

2) 가계동향조사 개편으로 2016년 이전, 2017-2018년, 2019년 이후의 시계열 비교 시 유의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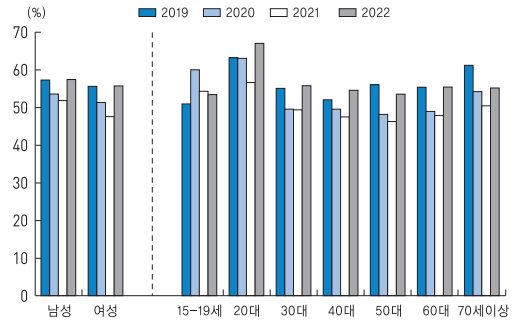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담(33.7%)이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7.4%), 이전 경험 부족(6.4%), 여가시설 부족(5.5%), 여가 동반자 부족(4.6%) 등의 이유가 응답되었다. 2021년에 비해 시간 부족은 6.7%p 줄어든 반면 경제적 부담은 5.6%p 늘었다. 앞서 여가비용이 크게 증가한 사실을 고려할 때, 여가비용 지출 증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여가시간이 다소 감소하였음에도 시간 부족을 불만족한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여가시간이 상당히 증가했던 여파로 해석된다. 코로나19 감염 이전에 비해 여가시간이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여가시간의 감소가 나타

났기 때문에 시간 부족을 여가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체감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VII-15] 성 및 연령별 여가생활 만족도, 2019-2022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설문문항은 "귀하는 자신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만족도는 '매우 만족', '만족', '다소 만족'을 합한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가활동 비교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 주말 여가활동 중 적극적 여가활동 비율이나 문화 예술 관람률이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높았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 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면, 공연문화시설과 도서관은 수도권이 우세했으나 공공체육시설은 비수도권이 우세했다.
-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의 수준이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수도권 거주자에서 낮았다.
-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여가만족도 수준이 높았으나 그 차이가 줄었다.

여가 분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별 여가활동의 격차는 상당한 기간 동안 형성된 시설, 자원, 성향의 차이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글은 우선 여가활동의 분포와 함께 문화예술관람 활동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살피고, 여가활동 여건과 서비스에 대한 인식 결과를 다룬다. 또한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을 분석한 후, 여가만족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를 주로 분석하고 영화통합전산망과 공연통합전산망의 자료,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수도권과 비수

도권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도시화 수준이 높은 광역시와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였다. 자료에서 행정적으로 광역시에 속하나 읍면부에 해당하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수도권을 광역시와 시군구로 구분하였고 광역시의 읍면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수도권을 광역시와 광역도로 구분하였다.¹⁾

여가활동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들 간 여가활동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 「사회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도 자료,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자료, 그리고 10년

1)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의미하지만, '비수도권 광역시'와 '비수도권 시군구'를 정의하는 방식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차이가 있다. 「사회조사」에서 '비수도권 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중 거주지가 '동부'에 해당하는 인구만 포함하였으며, '비수도권 시군구'는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부'에 해당하는 인구를 포함하였다.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비수도권 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중 지역규모가 '대도시'인 인구만 포함하였으며, '비수도권 시군구'는 경기도와 인천을 제외한 8개 도 및 5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규모가 '중소도시' 혹은 '읍면지역'인 인구만 포함하였다. 그 외 「공연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와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등에서는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모두 '비수도권 광역시'로,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는 '비수도권 시군구'로 산출되었다.

전인 200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조사」에서는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이나 앞으로 희망하는 여가활동에 대해 조사하는데, 이 글은 여가활동을 크게 적극적 여가활동과 소극적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적극적 여가활동은 문화자본에 바탕을 두고 주로 집 밖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 경기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여행), 취미 자기 개발을 포함하였다. 소극적 여가활동은 미디어 이용이나 외부 활동이 배제된 형태로 집 안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동영상 콘텐츠 시청, 휴식을 포함하였다. 적극적 여가활동이나 소극적 여가활동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여가활동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VII-2〉는 수도권의 해당 여가활동 비율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여가활동 수준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주말 여가활동 중 적극적 여가활동의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높았고,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에서 시군구보다 비율이 높았다. 3개 시점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향후 희망 여가활동의 경우에도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적극적 여가활동의 희망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적극적 여가활동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시설이나 환경, 여건에 따른 영향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2021년 「사회조사」를 활용해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여가활동

〈표 VII-2〉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여가활동, 2009, 2019, 2021

	주말 여가활동		희망 여가활동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군구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군구
2009				
적극적 여가활동	89.6	73.3	101.2	87.7
소극적 여가활동	106.1	100.3	108.7	115.9
2019				
적극적 여가활동	91.9	82.1	96.5	91.1
소극적 여가활동	100.0	103.4	90.4	103.9
2021				
적극적 여가활동	93.1	86.4	95.3	92.5
소극적 여가활동	99.3	101.4	100.0	104.7

주: 1) 통계치는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과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에 대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복수응답한 결과로 수도권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수도권의 비율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VII-3〉 연령별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여가활동, 2021

	주말 여가활동		희망 여가활동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군구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군구
30대 이하				
적극적 여가활동	93.6	92.3	95.8	96.0
소극적 여가활동	99.0	99.4	102.5	103.5
40~50대				
적극적 여가활동	98.6	91.9	97.2	96.1
소극적 여가활동	98.6	99.8	96.2	95.2
60대 이상				
적극적 여가활동	86.5	78.2	94.5	89.0
소극적 여가활동	99.5	103.3	98.2	106.9

주: 1) 통계치는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과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에 대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복수응답한 결과로 수도권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수도권의 비율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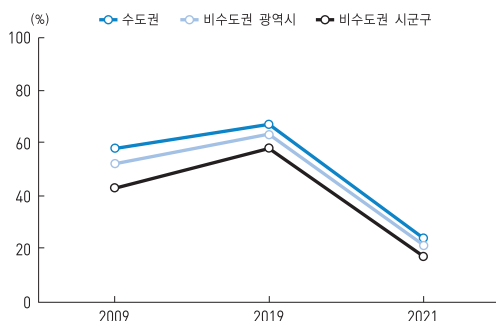
의 권역별 차이가 컸다. 적극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수도권 고령층 비율은 수도권 고령층에 비해 낮았다. 반면 소극적 여가활동의 경우, 수도권 고령층보다 비수도권 시군구 고령층의 참여 비율이 더 높았다. 희망 여가활동에서는 연령대 사이의 차이가 덜 두드러졌다(표 VII-3).

문화예술관람 활동

권역별 문화예술 관람률을 보면 수도권 관람률 수준이 비수도권에 비해 모든 시점에서 높았으나 차이에는 변화가 있었다. 2009년에 비해 2019년 문화예술 관람률 수준이 높아지면서 권역 간 격차가 줄었으며,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예술 관람률 수준이 낮아지면서 권역 간 격차는 더욱 줄었다. 전체 문화예술 관람률의 변화와 무관하게 권역 간 차이는 줄어들었다(그림 VII-16).

장르별 관람의 경우 모든 장르에서 비수도권이 수도권 대비 낮게 나타났으나, 장르별 격차의 크기는 차이가 있었다. 관람률이 가장 높은 영화관 관람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비수도권 시군구와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비수도권 내에서 영화관 접근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것이 관람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박물관이 미술관에 비해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국립 박물관이 꾸준히 공급되는 반면, 미술관은

[그림 VII-16] 권역별 문화예술 관람률, 2009, 2019, 2021



주: 1) 문화예술 관람률은 만 13세 이상 인구(2009년은 만 15세 이상) 중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연극의 경우 비교적 일관되게 권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단체 및 시설이 대도시에서 집중된 결과이다. 한편 무용은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비율이 다른 장르에 비해 높은데, 이는 무용 관람률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권역 간 차이가 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표 VII-4).

연령대별로 보면 비수도권 60대 이상 고령층의 관람률이 수도권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비수도권 내에서도 광역시에 비해 시군구의 고령층 관람률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표 VII-5).

비관람자까지 모두 포함하여 문화예술관람의 평균 횟수를 산출하면, 2009년 3.71회에서 2019년 5.05회까지 증가했다가 2021년 0.93회로 감소하였다. 장르별 관람 평균 횟수의 수도권 대비 비율을 산출해 본 결과, 모든 장르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낮게 나타났고, 특히 낮은 분



〈표 VII-4〉 권역 및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률, 2009, 2019, 2021

(%)

	2009			2019			2021		
	수도권 대비 비율		수도권	수도권 대비 비율		수도권	수도권 대비 비율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군구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군구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군구	
음악회	14.9	80.6	68.9	17.9	86.3	83.0	3.4	82.2	64.2
연극	17.1	59.7	45.7	16.7	64.2	63.8	3.8	60.1	44.4
무용	1.2	85.1	74.4	1.2	89.1	77.0	0.4	78.9	67.5
영화관	50.9	89.8	67.3	61.7	95.2	85.2	18.0	93.5	73.3
박물관	14.7	86.8	88.4	17.3	80.8	81.9	4.9	80.9	73.8
미술관	12.3	74.5	56.9	15.5	73.5	63.5	5.9	63.7	51.3

주: 1) 수도권 통계치는 장르별 관람률을 의미하며, 비수도권 통계치는 각 시기별 수도권의 관람률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수도권의 비율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VII-5〉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60대 이상 관람률, 2009, 2019, 2021

(%)

	2009		2019		2021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군구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군구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시군구
음악회	86.7	63.3	72.3	79.0	64.0	54.2
연극	62.9	42.0	61.5	64.9	36.8	38.9
무용	221.9	141.2	109.4	142.4	26.7	26.4
영화관	66.0	30.0	83.1	63.5	80.5	58.4
박물관	108.5	94.0	64.2	75.8	69.9	58.9
미술관	86.8	43.5	62.2	53.7	64.1	62.0
문화예술 관람	76.3	55.7	82.0	70.0	74.8	60.9

주: 1) 통계치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각 시기별 해당 장르의 수도권 외 관람률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수도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산출한 값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아는 연극이었다. 2021년에 관람 평균 횟수가 감소하였으나 비수도권 시군구의 수도권 대비 비율이 2019년에 비해 대체로 낮아진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역 간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는 감소하였지만, 관람 횟수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는 점은 접근성이 향상되어도 실제 관람 기회와 관람 활동의 격차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VII-6).

〈표 VII-6〉 권역 및 장르별 문화예술 관람 횟수, 2009, 2019, 2021

(회)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전체
2009							
수도권	0.33	0.38	0.04	2.94	0.31	0.29	4.31
비수도권 광역시	0.28	0.20	0.04	2.83	0.29	0.22	3.86
비수도권 시군구	0.23	0.16	0.02	1.78	0.27	0.16	2.62
전체	0.29	0.28	0.04	2.57	0.30	0.24	3.71
2019							
수도권	0.45	0.39	0.04	3.86	0.45	0.43	5.62
비수도권 광역시	0.33	0.22	0.03	3.51	0.35	0.26	4.69
비수도권 시군구	0.33	0.21	0.02	3.22	0.35	0.20	4.34
전체	0.39	0.30	0.03	3.60	0.40	0.33	5.05
2021							
수도권	0.08	0.10	0.02	0.65	0.11	0.14	1.10
비수도권 광역시	0.06	0.03	0.01	0.59	0.08	0.08	0.85
비수도권 시군구	0.05	0.03	0.01	0.48	0.07	0.07	0.71
전체	0.07	0.07	0.01	0.59	0.09	0.10	0.93

주: 1) 비관람자까지 모두 포함한 평균 관람 횟수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연령대별로 비수도권의 문화예술 관람 평균 횟수의 수도권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비수도권 비율이 낮았지만, 특히 60대 이상 비수도권 시군구에서 격차가 컸다(표 VII-7).

〈표 VII-7〉 연령별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문화예술 관람 횟수, 2009, 2019, 2021

		(%)		
		2009	2019	2021
30대 이하	비수도권 광역시	97.7	83.6	76.2
	비수도권 시군구	72.4	83.8	71.4
40~50대	비수도권 광역시	79.1	92.1	83.7
	비수도권 시군구	64.2	87.2	69.7
60대 이상	비수도권 광역시	96.4	72.3	83.9
	비수도권 시군구	44.7	60.8	62.3

주: 1) 통계치는 비관람자까지 모두 포함한 각 시기별 수도권의 평균 관람 횟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비수도권의 비율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상의 통계는 비관람자까지 포함한 평균 관람 횟수라는 점에서 관람률의 영향이 포함된다. 반면 〈표 VII-8〉은 비관람자를 제외한 순수 관람자들의 평균 관람 횟수이다. 영화를 제외한 다른 장르에서는 관람자 평균 관람 횟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2021년에 문화예술 관람 전체의 평균

〈표 VII-8〉 문화예술 관람자의 평균 관람 횟수, 2009, 2019, 2021

		(회)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전체
2009		2.3	2.2	3.3	5.7	2.2	2.4	7.1
2019		2.4	2.2	2.9	6.2	2.6	2.5	7.9
2021		2.3	2.3	3.8	3.6	2.2	2.3	4.4

주: 1) 비관람자를 제외한 순수 관람자들의 평균 관람 횟수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관람 횟수가 7.9회에서 4.4회로 낮아진 것은 여러 차례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가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령대별로 비수도권 문화예술 관람자 평균 관람 횟수의 수도권 대비 비율을 산출한 결과, 30대 이하나 40~50대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80~90%의 비율을 보이는 반면, 60대 이상은 수도권에 비해 평균 횟수가 더 높은 경우도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보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관람자 중 문화예술 관람을 여러 차례 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표 VII-9).

〈표 VII-9〉 문화예술 관람자의 연령별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평균 관람 횟수, 2009, 2019, 2021

		(%)		
		2009	2019	2021
30대 이하	비수도권 광역시	99.8	83.7	83.4
	비수도권 시군구	80.8	86.2	87.4
40~50대	비수도권 광역시	94.1	95.9	87.0
	비수도권 시군구	87.9	95.3	91.5
60대 이상	비수도권 광역시	126.3	88.1	112.1
	비수도권 시군구	80.2	86.8	102.2

주: 1) 통계치는 비관람자를 제외한 순수 관람자들의 각 시기별 수도권의 평균 관람 횟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비수도권의 비율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상의 「사회조사」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른 2022년 영화 점유율을 권역별로 산출하였다. 권역별 점유율은 광역시도별 점유율에 인구수를 고려하여 가중평균을 산출한 결과값이다. 수도권 점유율은 56.0%로 인구 구성에 비해서는 1.11배 높았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1.06배, 비수



도권 시군구는 0.77배로 인구 구성에 비해 낮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군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표 VII-10).

〈표 VII-10〉 권역별 영화 점유율과 인구 구성, 2022

	영화 점유율 (%)	인구 구성 (%)	인구 구성 대비 점유율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점유율
수도권	56.0	50.5	1.11	
비수도권 광역시	20.7	19.6	1.06	0.95
비수도권 시군구	23.2	30.0	0.77	0.70

주: 1) 인구 구성 대비 점유율은 권역별 인구 비율 대비 영화 점유율을 말함.
2)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점유율은 권역별 인구 구성 대비 점유율에 대하여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비율을 말함.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년 기준)», 2022.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른 2022년 장르별 권역별 공연 비중은 공연 횟수와 티켓판매 건수 점유율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수도권에서는 거의 모든 장르에서 공연 횟수와 티켓판매 건수의 점유율이 인구 구성에 비해 더 높았다.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공연 횟수에서는 인구 구성과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연극과 뮤지컬의 티켓판매 건수는 인구 구성에 비해 낮았다. 비수도권 광역도의 경우에는 인구 구성에 비해 공연 횟수와 티켓판매건수 점유율이 모두 낮았다. 인구 구성 대비 점유율의 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비교하면 수도권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공연

횟수에 비해 티켓판매 건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는 사실은 공연에 대한 접근성보다 실제 향유 수준의 차이가 더 큼을 보여준다(표 VII-11).

〈표 VII-11〉 권역별 공연 횟수 및 티켓판매 건수 점유율, 2022

		인구 구성 대비 점유율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점유율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광역시
연극	공연	1.26	0.92	0.61	0.73	0.48
	티켓	1.69	0.46	0.19	0.27	0.11
뮤지컬	공연	0.99	1.01	1.00	1.02	1.01
	티켓	1.58	0.57	0.31	0.36	0.20
클래식	공연	1.29	1.17	0.40	0.91	0.31
	티켓	1.33	1.02	0.43	0.76	0.32
무용	공연	1.14	1.22	0.61	1.07	0.54
	티켓	1.32	1.03	0.45	0.78	0.34
국악	공연	1.20	1.12	0.58	0.93	0.49
	티켓	1.18	1.22	0.56	1.04	0.47
복합	공연	1.19	1.14	0.58	0.96	0.49
	티켓	1.09	1.31	0.64	1.20	0.58

주: 1) 인구 구성 대비 점유율은 권역별 인구 비율 대비 공연 횟수와 티켓판매 건수 점유율을 말함.
2)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점유율은 권역별 인구 구성 대비 점유율에 대하여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비율을 말함.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 재구성, 202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년 기준)», 2022.

여가 여건

여가 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다. 생활권 내 여가시설 접근성을 조사한 「국토조사(2021)」 결과를 보면 공연 문화시설 접근성은 평균 6.93km,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은 평균 3.98km, 도서관 접근성은 평균 4.42km로 나타났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은 시설에 따라 기준이 달라 공연문화시설은 10km(차로 20분 거리) 이내 거주 인구 비율, 공공체육시설과 도서관은 750m(도보 이동으로 10분 거리) 이내 거주 인구 비율로 산출하였다. 공연문화시설의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은 평균 96.2%, 공공체육시설은 평균 18.2%, 도서관은 평균 60.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가시설의 평균 거리나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컸다. <표 VII-12>는 여가시설 평균 접근 거리와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을 바탕으로 거주 인구를 고려한 가중평균을 수도권,

<표 VII-12>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생활권 내 여가시설 접근성, 2021

	공연 문화시설	공공 체육시설	도서관
평균 접근 거리			
비수도권 광역시	108.1	92.4	108.4
비수도권 광역도	197.4	162.1	232.1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비수도권 광역시	100.0	121.6	99.2
비수도권 광역도	90.6	118.0	67.5

주: 1) 평균 접근 거리란 격자(500m*500m)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설까지 도로 이동거리를 말하며, 통계치는 권역별 인구 대비 평균 접근 거리의 평균에 대하여 수도권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수도권의 평균 접근 거리를 비율로 나타낸 것임.

2) 공연 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이란 공연문화시설 차량이동 20분 거리(10km)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말하며, 공공체육시설과 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은 각 시설 도보이동 10분 거리(750m)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말함. 통계치는 권역별 인구 대비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의 평균에 대하여 수도권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수도권의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을 비율로 나타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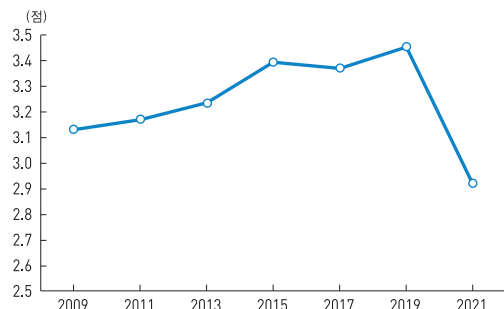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2021 국토조사」, 202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년 기준)」, 2021.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광역도로 구분하여 계산한 후,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비율을 산출한 결과이다. 대체로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평균 접근 거리가 더 길었지만, 공공 체육시설은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평균 접근 거리가 더 짧게 나타났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의 경우 공연문화시설과 도서관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낮았으나 공공체육시설은 비수도권이 더 높았다.

문화여가생활의 향유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을 보면 2009년 이래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1년에는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그림 VII-17). 2019년까지 긍정적 인식이 많아진 것은 공공문화여가시설 증가와 문화여가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2021년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문화여가생활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림 VII-17]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2009-2021



주: 1) 통계치는 "2년 전과 비교하여 문화·여가 생활 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좋아짐'부터 '매우 나빠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2009년, 2019년, 2021년 세 시점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문화여가생활 여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이후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는 젊은 연령층에서 긍정적 인식이 높았으나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표 VII-13).

〈표 VII-13〉 권역 및 연령별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2009, 2019,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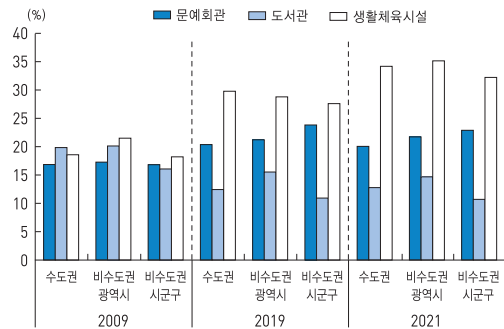
		(점)		
		2009	2019	2021
수도권	30대 이하	3.16	3.43	2.80
	40~50대	3.10	3.41	2.92
	60대 이상	3.08	3.44	2.98
	합계	3.13	3.43	2.90
비수도권 광역시	30대 이하	3.13	3.45	2.89
	40~50대	3.06	3.46	2.97
	60대 이상	3.04	3.47	3.03
	합계	3.09	3.46	2.96
비수도권 시군구	30대 이하	3.19	3.45	2.82
	40~50대	3.13	3.47	2.88
	60대 이상	3.14	3.53	3.06
	합계	3.16	3.48	2.92

주: 1) 통계치는 “2년 전과 비교하여 문화·여가 생활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좋아짐’부터 ‘매우 나빠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에 대한 응답 결과를 통해 국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와 취향의 변화 등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림 VII-18]은 문예회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응답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2009년에는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2019년부터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권역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비수도권 시군구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VII-18] 권역별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서 문화여가시설, 2009, 2019,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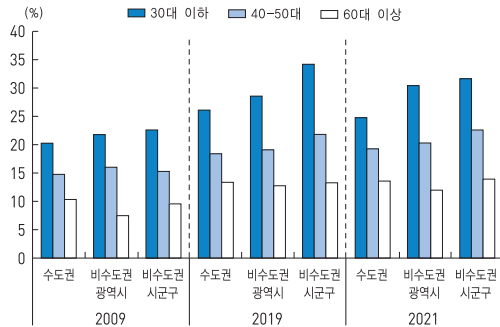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에 대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복수응답한 결과 중 각 문화여가시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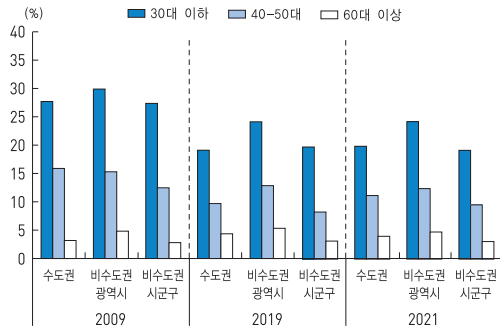
권역과 연령대를 종합적으로 보면, 모든 경우에서 젊은 층일수록 문화여가 시설에 대한 수요가 컸다. 문예회관이나 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의 경우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 수요가 특히 비수도권 시군구에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권역별 연령대별 차이가 많이 줄었다(그림 VII-19).

[그림 VII-19] 권역 및 연령별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
로서 문화여가시설, 2009, 2019,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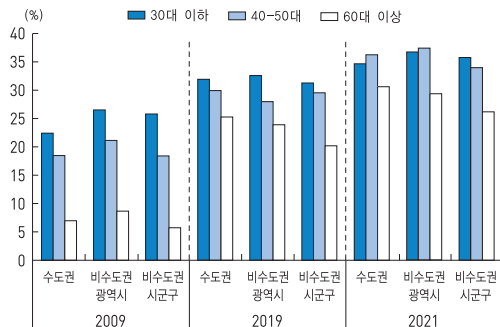
1) 문예회관



2) 도서관



3) 생활체육시설



주: 1) 통계치는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에 대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복수응답한 결과 중 각 문화여가시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통해 권역별 여가시간을 보면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거주자보다 평일과 휴일 모두 여가시간이 짧았다. 희망하는 여가시간도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거주자보다 짧게 나타났다(표 VII-14).

〈표 VII-14〉 권역별 여가시간 및 여가 희망시간, 2022

	여가시간		여가 희망시간	
	평일	휴일	평일	휴일
수도권	3.3	5.2	4.0	5.8
비수도권 광역시	4.1	6.0	4.9	6.7
비수도권 시군구	4.0	5.9	4.6	6.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22.

여가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매우 부족했다’에서 ‘매우 충분했다’까지 7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충분도가 낮았다. 여가시간을 회식, 업무 관련, 가족 간섭 등의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에서 ‘매우 자유롭다’까지 7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군구는 같은 수준이었으며, 비수도권 광역시 응답자의 자유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VII-15).

여가비용을 보면 권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여가비용이나 희망 여가비용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낮았다. 이는 수도권의 물가가 비싸 여가활동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VII-16).

〈표 VII-15〉 권역별 여가시간 충분도 및 자유도, 2022

	여가시간 충분도		여가시간 자유도	
	평일	휴일	평일	휴일
수도권	4.6	4.9	4.7	4.8
비수도권 광역시	4.9	5.1	4.9	5.0
비수도권 시군구	4.8	5.0	4.7	4.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22

〈표 VII-16〉 권역별 여가비용과 희망 여가비용, 2022

	여가비용	희망 여가비용
수도권	164,643	225,800
비수도권 광역시	198,839	272,568
비수도권 시군구	181,371	242,240
합계	176,102	239,458

주: 1) 여가비용은 여가생활을 위해 한 달 평균 지출한 금액이고, 희망 여가비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한 달 평균 여가비용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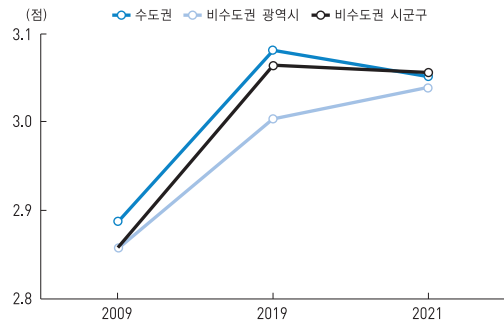
여가만족

〔그림 VII-20〕은 「사회조사」를 활용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가만족도 추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과거에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여가만족도 수준이 높았으나 2021년에는 차이가 줄어들 수렴되었다. 2019년에는 비수도권 시군구에 비해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여가만족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대체로 젊은 층이 나이 많은 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와 권역을 종합적으

로 살펴보면, 2019년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여가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2021년에는 이와 같은 여가만족도 수준의 차이가 감소하였다(표 VII-17).

〔그림 VII-20〕 권역별 여가만족도, 2009, 2019, 2021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VII-17〉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여가만족도, 2009, 2019, 2021

		2009	2019	2021
30대 이하	비수도권 광역시	99.1	96.5	100.3
	비수도권 시군구	99.0	99.7	102.2
40~50대	비수도권 광역시	98.2	100.3	100.7
	비수도권 시군구	99.3	101.0	99.4
60대 이상	비수도권 광역시	100.6	95.7	97.8
	비수도권 시군구	99.5	99.1	100.2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에 대해서 수도권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수도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산출한 값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팬데믹이 가져온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의 변화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코로나19 팬데믹은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감이나 무기력증을 느끼는 현상을 가중했다.
- 여가영역은 코로나19로 인해 방해를 가장 많이 받은 생활영역이나, 오히려 여가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통해 사회경제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그 이전의 삶으로 회복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여가생활을 비교해 보면, 모임이나 집합시설, 관광과 관련된 여가활동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 반면 온라인에 기반한 활동이나 자연친화적 활동, 제한적인 이동수단을 이용한 여행, 그리고 심신 단련을 위한 운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스트레스 해소, 피로 회복 등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여가목적과 연관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례없는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일상생활의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첫 확진자가 발견되어 감염병 ‘주의’ 단계가 발령된 이후 2023년 6월 1일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해제된 시점까지 약 3년 5개월여 기간 동안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변화를 겪었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불

편은 기본이고, 거리두기 단계별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면서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였다.

그동안 일상적으로 누렸던 사람들과의 교제나 야외에서의 활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집’과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과 고독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그동안 지속해 온 여가생활도 변화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삶의 내용도 달라졌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여가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여가생활 속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전후의 여가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를 분석한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하는 자료나 국제 비교가 가능한 자료도 함께 활용하고자 한다. 모든 자료는 가능한 코로나19 전후 비교를 위해 2019~2022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2019년 자료는 코로나 이전 시기, 2020~2022년 자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일상생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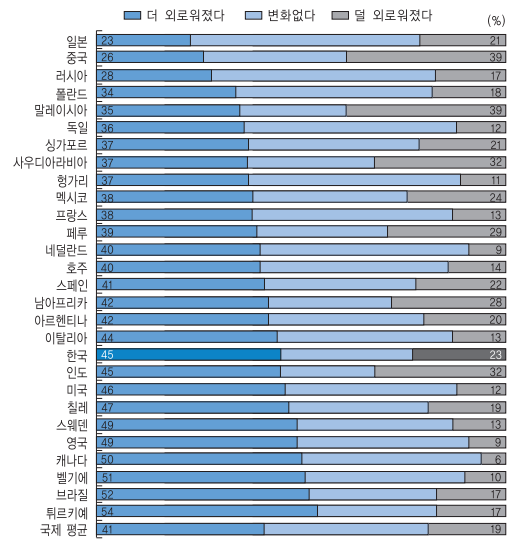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시된 거리두기 조치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감이나 무기력증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나 거리두기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겪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라고 일컫는다.

글로벌 마케팅 그룹 입소스(Ipsos)는 전 세계 29개국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코로나19의 영향력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외로움(loneliness)이 더 증가했다’고 나타났다. 한국사회도 마찬가지로 지난 6개월 동안 더 많이 외로움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0%, 외로움을 덜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0%로 코로나19의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의 외로움 증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21).

이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2022)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 정도(0~10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에는 5.58점으로 매우 높았으나,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020. 3.22 도입)가 실시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2022년 12월에는 4.05점까지 낮아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 중에서 ‘사회 및 여가활동 방해’ 정도는 2020년 3월 6.88점, 2022년 3월 6.2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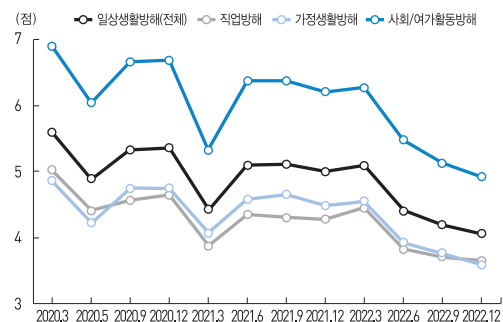
2022년 12월 4.91점으로 가정생활 방해, 직업 방해 등 다른 영역에 비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그림 VII-22).

[그림 VII-21] 지난 6개월 동안 외로움의 정도: 국제 비교, 2020.11~2021.1



출처: Ipsos, Global perceptions of the impact of COVID-19, 2021.

[그림 VII-22]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 정도, 2020.3~2022.12



주: 1) 통계치는 각 항목에 대해 '전혀'(0점), '약간'(1~3점), '어느 정도'(4~6점), '상당히'(7~9점), '매우 많이'(10점)라고 응답한 값의 평균 점수임.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발표, 각 분기.

여가활동을 통한 회복에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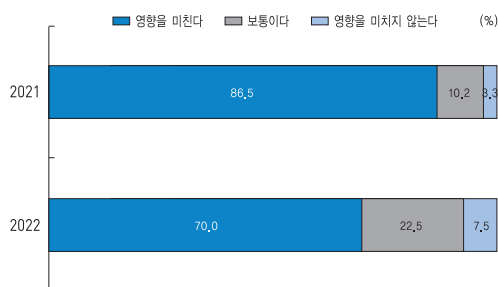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생활영역이 문화활동과 여가생활이었지만, 코로나19가 끝난 뒤 문화와 여가를 통해 사회경제적 회복을 기대하는 바도 커지고 있다. 2020년 11월 4일 경제 분야 국제기구인 G20은 코로나19 이후 파괴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의 정신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의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이는 G20 역사상 최초로 문화를 경제적 발전이자 회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정했는데 큰 의미가 있다. 문화의 회복탄력성, 공공정책에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 문화 분야의 친환경 및 기후변화 적응, 디지털 혁신의 적응, 문화 분야의 고용, 문화·관광의 새로운 경제모델의 필요성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되었다.

실제 문화·여가활동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수명을 연장하는 등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인지적 측면이나 긴장 및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등 정서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최근에는 여가활동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데 매우 유용하며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조직 내 소속감을 갖게 해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줄여준다는 사회적 효과가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사회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코로나19가 여가활동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기간 동안 여가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혼자 하는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온라인 기반 활동이 중심적인 여가활동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 비율이 2021년 조사에서는 86.5%였던 것에서 2022년 조사에서는 70.0%로 감소하였다(그림 VII-23).

[그림 VII-23] 코로나19가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2021, 2022



주: 1) 본 문항은 2021년 이전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음.

2) 각 연도별 조사의 기준시점은 직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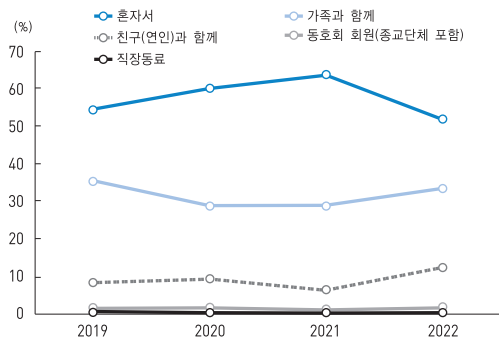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동반자의 경우, 혼자서 하는 활동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시점인 2020년(60.0%)과 2021년(63.6%)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22년 조사에서는 전년도와



비교해 혼자서 하는 여가활동은 감소하고 (11.8%p 감소), 상대적으로 가족과 함께 하거나 (4.7%p 증가) 친구(연인)와 함께하는(5.9%p 증가) 비중은 증가하였다(그림 VII-24).

[그림 VII-24] 여가활동 동반자(순위 활동 기준), 2019-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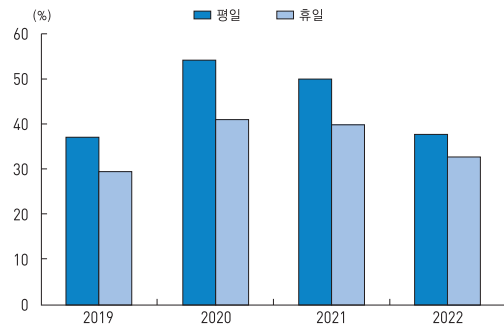
주: 1) 각 연도별 조사의 기준시점은 직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여가시간 중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중 역시 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 중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중이 코로나19 시기 이전에는 평일 37.1%, 휴일 29.6%였으나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인 2020년에는 평일 54.1%, 휴일 41.1%로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그 비율이 평일 50.0%, 휴일 39.7%로 감소하였고 2022년에는 평일 37.8%, 휴일 32.7%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그림 VII-25).

한편 코로나19 기간 동안 온라인(모바일) 공간에서 활동했던 경험은 계속해서 온라인 기반 활동을 확대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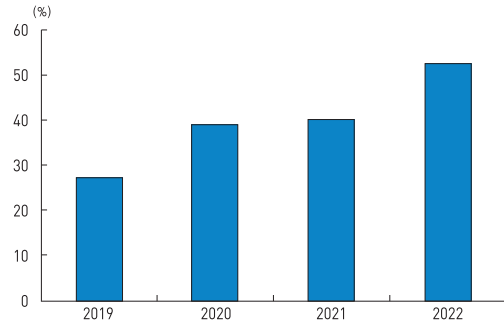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를 통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비율이 2019년에는 27.4%였으나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38.8%로 크게 높아졌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를 통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비율이

[그림 VII-25]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의 비중 변화, 2019-2022



주: 1) 각 연도별 조사의 기준시점은 직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그림 VII-26]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19-2022



주: 1) 각 연도별 조사의 기준시점은 직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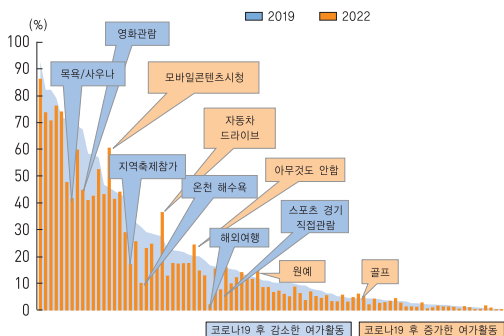


전체 52.6%를 넘어섰는데, 이는 문화예술활동을 비롯한 여가활동에서 온라인 기반 활동이 계속 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한 여가활동의 증가

코로나19 전후인 2019년과 2022년에 ‘지난 1년 동안 여가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목욕/사우나, 지역축제 참가, 온천 해수욕, 스포츠경기 직접 관람, 해외여행 등 모임이나 집합시설, 관광과 관련된 여가활동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모바일 콘텐츠 시청, 자동차 드라이브, 윈예, 골프 등의 활동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에 기반한 활동이나 자연친화적 활동, 제한적인 이동수단을 이용한 여행 등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VII-27).

[그림 VII-27] 코로나19 전후 여가활동 참여율 변화, 2019, 2022



주: 1) 각 연도별 조사의 기준시점은 직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여가활동의 참여율 변화는 이용하는 여가공간의 변화 추이로도 파악된다. 2019년에 집주변(10.9%)이나 생활권 공원(5.3%)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021년에는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집콕생활의 답답함을 가장 손쉽게 집주변이나 생활권에서 산책이나 걷기로 해소하려고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같은 기간 캠핑장과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수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을 이용하는 경우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2022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II-18).

〈표 VII-18〉 이용하는 여가공간 및 희망하는 여가공간, 2019-2022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공간(1순위)					가장 이용하고 싶은 여가공간(1순위)				
	집 주변	생활권 공원	산	캠핑장	산림욕장	집 주변	생활권 공원	산	캠핑장	산림욕장
2019	10.9	5.3	2.9	0.4	0.3	3.0	3.7	4.6	1.9	1.6
2020	12.9	8.9	3.1	0.7	0.4	3.0	4.3	5.7	3.1	3.1
2021	18.9	10.6	3.6	0.8	0.5	3.0	4.6	6.8	4.2	2.5
2022	12.6	5.9	2.6	1.1	0.5	2.2	3.1	3.0	2.8	2.2

주: 1) 각 연도별 조사의 기준시점은 직전년도 8월부터 해당년도 7월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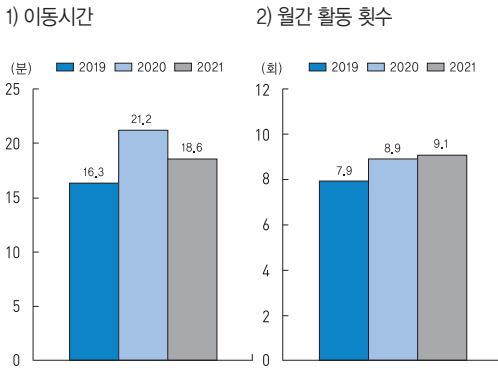
생활권의 야외공원이나 산, 캠핑장, 산림욕장 등 자연 속에서의 여가활동은 스트레스 해소, 피로 회복 등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여가 목적과 연관된다. 이러한 욕구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컸던 2021년 시기 산(6.8%)이나 캠핑장(4.2%)을 이용하고 싶은 희망



으로도 나타났다.

산림청의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와 비교해 2020년에 산림휴양·복지활동을 위한 이동시간이 4.9분 증가했으며, 월간 활동 횟수도 1.0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도 월간 활동 횟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동시간은 18.6분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그림 VII-28).

[그림 VII-28] 산림휴양·복지활동의 이동시간 및 횟수, 2019-2021



주: 1) 이동시간은 일상적인 산림휴양·복지활동 시 도보와 교통수단(자가용, 자전거, 대중교통, 기타)의 이동시간 평균을 말함.
2) 월간 활동 횟수는 일상적인 산림휴양·복지활동의 월평균 횟수를 말함.
출처: 산림청,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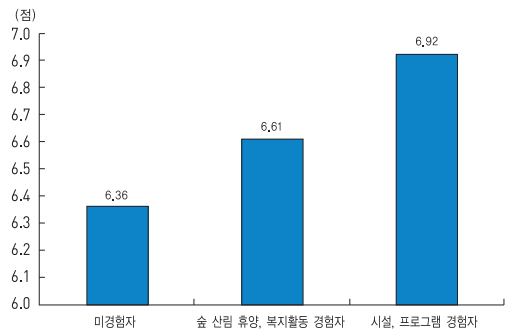
또한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자 중 94.7%가 산림휴양·복지활동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VII-19). 더욱이 산림여가활동 경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9%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4.7%, 0.31점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29).

〈표 VII-19〉 산림휴양·복지활동이 삶에 미치는 영향, 2022

구분	삶에 미치는 영향 (%)			평균(점)
	부정	영향 없음	긍정	
산림휴양·복지활동의 영향	1.0	4.3	94.7	7.41

주: 1) 11점(0~10점) 척도 중 부정적 영향은 0~4점, 영향 없음은 5점, 긍정적 영향은 6~10점으로 응답한 비율과 평균 점수
출처: 산림청, 「2022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2022.

[그림 VII-29] 산림여가활동과 삶의 질, 2021



주: 1) 통계치는 11점 척도(0~10점)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이정희 "산림여가활동과 삶의 질의 관계와 시사점", 「산림정책이슈」, 2023.

한편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이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심신 단련 활동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청(2020)은 요가매트나 필라테스, 폼롤러 등 홈트레이닝과 관련한 상표출원 건수가 2020년 상반기(1~5월, 233건)에 전년 같은 기간(209건)에 비해 11.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2021)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헬스장 영업제한이 지속되면서 홈트레이닝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요가매트, 요가복, 폼롤러 등의 연관 키워드가 언급된 횟수가 많아졌다(표 VII-20).



〈표 VII-20〉 “홈트레이닝” 관련 분기별 키워드 변화, 2020.1~2021.1

(회)

순위	2020/01/25~ 2020/03/31		2020/04/01~ 2020/06/30		2020/07/01~ 2020/09/30		2020/10/01~ 2020/12/31		2021/01/01~ 2021/01/25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언급량	키워드	언급량
1	운동	53,484	운동	85,462	운동	108,728	운동	63,556	운동	15,074
2	다이어트	28,780	다이어트	49,368	다이어트	61,662	다이어트	47,218	다이어트	8,102
3	집	17,649	식단	23,557	식단	31,963	건강	25,919	집	5,061
4	코로나	16,744	집	23,326	집	29,596	집	21,759	건강	3,226
5	식단	12,915	헬스	17,641	헬스	22,199	식단	17,869	몸	3,153
6	헬스	12,026	영상	15,669	저녁	21,827	헬스장	17,794	코로나	3,067
7	필라테스	10,915	필라테스	15,346	아침	21,771	하루	16,542	식단	3,048
8	요가	9,521	아침	15,337	일상	20,247	자세	14,959	영상	2,831
9	영상	9,500	운동 스타그램	14,880	코로나	20,204	필라테스	14,872	헬스장	2,677
10	운동 스타그램	8,857	일상	14,779	운동 스타그램	19,959	헬스	14,386	하루	2,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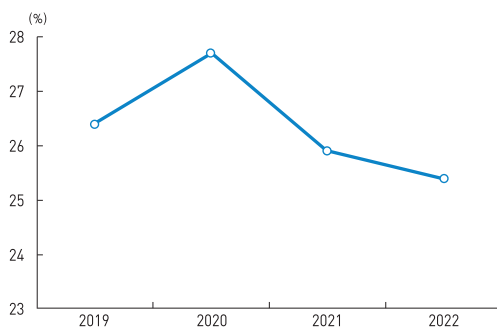
주: 1) 홈트레이닝 관련 소셜데이터(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뉴스 등) 및 소비자 상담 데이터('스포츠웨어', '트레이닝기구', '기타 스포츠·레저·기구·용품'으로 조회) 연관 키워드 분석 (2020.1.25. ~ 2021.1.25.)

출처: 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로 인한 홈트레이닝 가속화와 소비자 이슈", 「소비자이슈 정보」, 2021.02.01.

코로나19 이후 반려동·식물과 교감하며 심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향도 증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기르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2019년 26.4%에서 2020년에는 27.7%로 증가하였다가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기 25.9%, 25.4%로 감소하였다(그림 VII-30).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반려식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농촌진흥청(2021)의 「반려식물과 건강관리식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반려식물에 관심이 늘었다는 응답이 51.5%였으며, 연령대별로는 20~30대

[그림 VII-30] 반려동물 양육 여부, 2019~2022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각 연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61.1%)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은 관련 시장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특허청 보도자료(2021)에 따르면 가정용 식



물재배기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2019년 161건에서 2020년에는 216건으로 34.2% 급증하였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평가센터는 국내 식물재배기 시장 규모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2019년 100억 원에서 2023년 5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¹⁾

엔데믹 이후, 여가생활 전망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동안 우리의 여가생활 형태는 크게 변화하였다. 혼자 혹은 비대면으로 활동하거나 생활권 내에서 가능한 여가활동을 찾음으로써 이동과 만남을 최소화하였다. 집에서 가능한 요가나 필라테스 등을 통해 신체적인

건강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으려 했으며, 집 주변의 야외공원이나 산, 산림욕장 등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스트레스와 피로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위로와 안전을 찾으려는 경향도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들 스스로가 자가격리나 거리두기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외로움과 고립감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여가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동은 그 자체로 즐거울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치유와 회복의 기능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종결된 후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나타나겠지만, 이미 경험했던 변화는 계속해서 남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 온라인(모바일) 공간에서 활동한 경험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처럼 앞으로도 친환경적 활동이나 치유 및 돌봄에 근거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1) “씩트는 가정용 식물재배기 시장, 어디까지 자랄까?”, 지디넷코리아, 2022.03.28.

참고문헌

- 윤소영·장훈, 2014, 「여가활동의 효과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정보람,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재정 대응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정희, 2023, “산림여가활동과 삶의 질의 관계와 시사점.” 「산림정책이슈」, 국립산림과학원.
 특허청, 2020, “헬스도 비대면 시대, 재택훈련(홈트레이닝)이 뜬다.” 보도자료, 2020.7.20.
 특허청, 2021, “특허기술로 주말농장도 집콕시대-가정용 인공지능 식물재배기 특허출원 증가.” 보도자료, 2021.9.23.
 Ipsos, 2021, 「Global perceptions of the impact of COVID-19」



Korean Social Trends 2023

한국의 사회동향 2023



2023 Housing

Korean Social Trends 2023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VIII 주거

주거 영역의 주요 동향 [고진수 | 광운대학교](#) 254

청년의 주거실태와 특징: 청년 가구의 유형별,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267](#)

[고진수 | 광운대학교](#)

주거 영역의 주요 동향

고진수 (광운대학교)

-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21년 102.2%로 2019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가구 수에 기인한다.
- 주택보급은 아파트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주택보급과 더불어 노후주택 및 빈집의 수도 2010년 대비 증가하였다.
- 2021년 기준 다주택자 비율은 15.1%, 30세 미만 무주택비율은 88.3%, 외지인 소유 주택 비율은 13.5% 수준으로 나타났다.
- 주택 및 전세 가격이 2022년부터 하락하면서 주택구입물량지수가 약간 상승하였으나, 가계신용 중 주택 및 전세대출 비율,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의 상승 등 주거비 부담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 자가 점유율은 2021년 기준 57.3%로 2019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임차가구 비율은 증가하여 2021년 39.0%를 차지한다.
- 주택보유의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1인당 주거 면적 및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 (반)지하·옥탑방 가구 비율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기준 178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며, 153만 가구와 216만 명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었다. 또한 고령층 가구의 주택연금 보증공급액은 2022년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 2020년의 통근 및 통학 시간은 2015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의 통근 및 통학시간이 가장 길었다. 다만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서울 이외 지역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국 평균은 4.86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주거 영역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주거 영역과 관련된 양적·질적 지표, 가격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주택보급과 소유에서는 주택보급률, 주택재고, 빈집, 노후주택, 주택소유현황 등을 검토하고, 주택구입과 주거비 부담에서는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지수, 매매대비 전세가 비율, 주택대출 관련 가계신용, 주택구입물량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과 주택임대료 비율을 검토한다. 주거의 질과 만족도에서는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 분포, 주택보유의식, 1인당 평균 주거면적, (반)지하·옥탑방 가구 비율, 최저 주거기준 등 주거의 질적 변화를 검토한다.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에서는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연금 보증공급액 및 주거급여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평균 통근·통학 시간, 타지역 통근·통학 비율, 대중교통 만족도 등의 지표를 통해 주거와 관련된 교통 측면을 진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거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주택보급과 소유

지속적인 주택보급 결과,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 2021년 가구 수는 2010년 대비 약 379.3만 가구 증가했지만, 주택 수



는 그보다 많은 약 417.8만 호가 증가하여 주택 보급률은 2010년 100.5%에서 2021년 102.2%로 1.7%p 높아졌다. 한편 2020년부터 주택보급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1~2인 가구의 급증으로 주택공급에 비해 가구 수가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표 VI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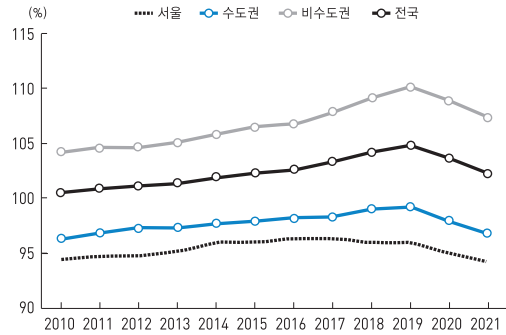
〈표 VIII-1〉 전국 주택보급률, 2010-2021

	가구 수 (1,000가구)	주택 수 (1,000호)	주택보급률 (%)
2010	17,656	17,739	100.5
2011	17,928	18,082	100.9
2012	18,209	18,414	101.1
2013	18,500	18,742	101.3
2014	18,800	19,161	101.9
2015	19,111	19,559	102.3
2016	19,368	19,877	102.6
2017	19,674	20,313	103.3
2018	19,979	20,818	104.2
2019	20,343	21,310	104.8
2020	20,927	21,674	103.6
2021	21,449	21,917	102.2

주: 1) 가구 수는 혈연 가구, 1인 가구, 5인 이하 비혈연 가구를 포함한 일반 가구 기준임.
2) 주택 수는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한 값임.
3) 주택보급률=(주택 수÷가구 수)×100.
출처: 국토교통부, 「(新)주택보급률」, 각 연도.

주택보급률을 권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주택 보급률이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난다. 2020~2021년 모든 권역의 주택보급률이 감소 추세이나,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서울의 경우 다른 권역과 달리 2017년부터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VI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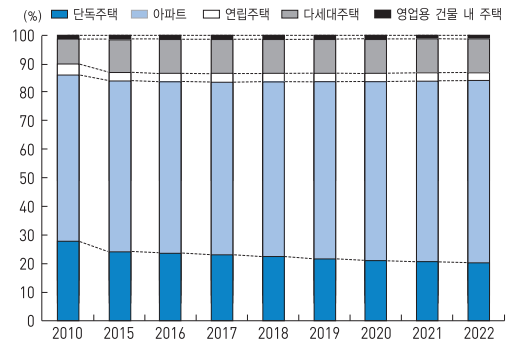
[그림 VIII-1] 권역별 주택보급률, 2010-2021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
2) 비수도권은 지방 5개 광역시 및 9개 시도(세종 포함)를 포함.
3) 주택보급률=(주택 수÷가구 수)×100.
출처: 국토교통부, 「(新)주택보급률」, 각 연도.

주택유형별 재고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 위주로 공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주택 재고 중 아파트 비율은 2010년 58.4%에서 2022년 64.0%로 5.6%p 증가하였으며, 다세대 주택 비중 역시 2010년 9.0%에서 2022년 11.9%로 2.9%p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그림 VIII-2).

[그림 VIII-2]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비율, 2010-2022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주택재고 증가와 함께 노후주택(준공 이후 30년 기준)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노후주택 수는 2010년 대비 2022년에 약 3.3배 증가했다. 2022년 기준 노후주택 규모와 비율은 비수도권(286만 호, 28.0%)이 수도권(163만 호, 18.3%)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0년 대비 2022년 노후주택 증가는 수도권(5.1배)이 비수도권(2.8배)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표 VIII-2).

〈표 VIII-2〉 노후주택 규모 및 비율, 2010-2022

	전국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노후주택(1,000호)				
2010	1,349	177	317	1,033
2015	2,669	373	747	1,922
2016	2,805	416	841	1,964
2017	2,889	428	878	2,012
2018	3,084	509	997	2,088
2019	3,291	551	1,102	2,189
2020	3,597	588	1,248	2,349
2021	3,975	650	1,418	2,557
2022	4,492	733	1,631	2,861
총 주택 중 노후주택 비율(%)				
2010	9.2	7.0	4.8	12.7
2015	16.3	13.4	10.1	21.5
2016	16.8	14.7	11.1	21.6
2017	16.9	14.9	11.3	21.5
2018	17.5	17.6	12.4	21.8
2019	18.2	18.7	13.2	22.3
2020	19.4	19.5	14.6	23.5
2021	21.1	21.2	16.2	25.4
2022	23.5	23.6	18.3	28.0

주: 1) 노후주택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주택으로 정의함.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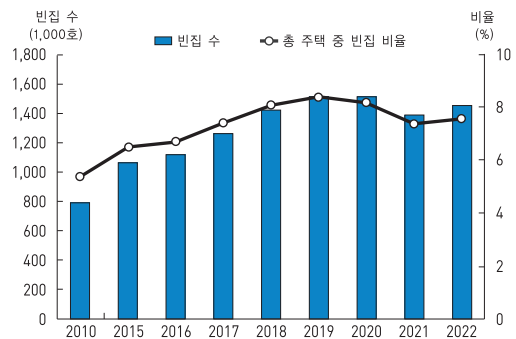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전국의 빈집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2년 기준 빈집의 수는 약 145만 호(7.6%)로 2010년 대비 66만 호(2.2%p) 증가하였다. 읍면동으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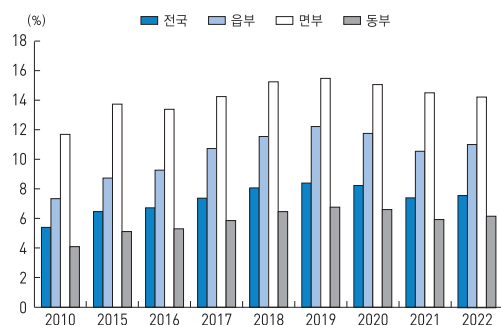
분해 볼 때 빈집의 절대량은 2022년 기준 동부(63.7%), 면부(20.8%), 읍부(15.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총 주택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면부(14.3%), 읍부(11.0%), 동부(6.2%)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VIII-3).

〔그림 VIII-3〕 총 주택 대비 빈집 비율, 2010-2022

1) 전국



2) 읍면동별



주: 1) 주택 수는 다가구 구분 거처가 반영되지 않은 값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주택의 개인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1주택자가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다주택자(2호 이상 소유)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전국의 다주택자 비율은 2012년 13.6%에서 2019년 15.9%까지 높아졌으나 그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21년 15.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21년 기준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약 1.6%p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2~2021년 동안 수도권 및 비수도권 각각 1.2%p 및 1.8%p 증가하였다(표 VIII-3).

〈표 VIII-3〉 권역별 다주택자 비율, 2012~2021

	전국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2012	13.6	13.1	13.0	14.0
2013	13.7	13.5	13.4	13.9
2014	13.6	14.0	13.6	13.6
2015	14.4	14.9	14.3	14.5
2016	14.9	15.5	14.8	15.0
2017	15.5	16.0	15.2	15.8
2018	15.6	15.8	15.4	15.9
2019	15.9	15.8	15.6	16.2
2020	15.8	15.2	15.3	16.3
2021	15.1	14.3	14.2	15.8

주: 1) 다주택자 비율은 해당 권역 전체 개인 주택 소유자 중 2호 이상 주택 소유자의 비율임.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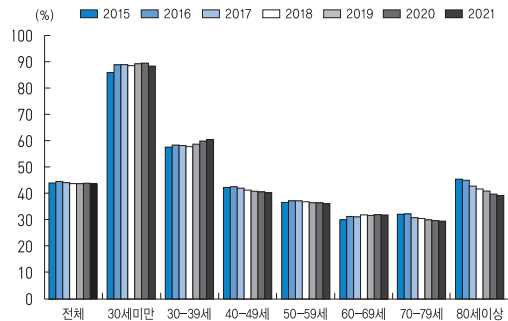
3) 비수도권은 지방 5개 광역시 및 9개 시도(세종 포함)를 포함.

출처: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각 연도.

연령대별로 무주택가구 비율을 보면 2021년 기준 30세 미만이 88.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30세 미만, 30~39세, 60~69세 연령집단은 2015년에 비해 2021년 무주택가구 비율이 각각 2.4%p, 2.7%p, 2.0%p 높아졌다(그림 VIII-4).

해당 지역의 주택 중 다른 지역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비율, 즉 외지인 소유주택 비율은

〔그림 VIII-4〕 연령별 무주택가구 비율, 2015~2021



출처: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각 연도.

2016~2021년 동안 큰 변화 없이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비수도권의 증가 및 수도권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외지인 주택소유 비율은 2016년 14.7%에서 2021년 14.4%로 0.3%p 감소하였으나,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12.1%에서 12.7%로 0.6%p 증가하였다. 한편 서울은 2016년 14.7%에서 2021년 15.9%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표 VIII-4).

〈표 VIII-4〉 권역별 외지인 소유주택 비율, 2016~2021

	전국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2016	13.3	14.7	14.7	12.1
2017	13.5	14.7	14.6	12.5
2018	13.5	14.9	14.5	12.7
2019	13.5	15.4	14.5	12.7
2020	13.5	15.7	14.4	12.6
2021	13.5	15.9	14.4	12.7

주: 1) 외지인 소유주택 비율은 시도 단위 전체 개인 소유주택 중 타시도 거주자 소유주택의 비율을 권역별로 집계한 것임.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

3) 비수도권은 지방 5개 광역시 및 9개 시도(세종 포함)를 포함.

출처: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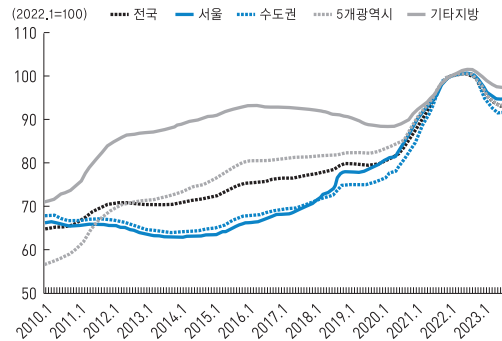
주택구입과 주거비 부담

주택구입 및 주거비 부담과 관련하여 월간 「KB주택가격동향조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및 전세가격지수를 살펴보면, 두 지수 모두 202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주택 관련한 비용 부담이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1월 이후에는 두 지수 모두 동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 수도권¹⁾의 하락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은 2023년 9월 기준 63.6%로 높은 수준이다.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다는 것은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아질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보면 기타 지방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은 주택가격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전세가격의 절대적 수준도 높다고 할 수 있다(그림 VII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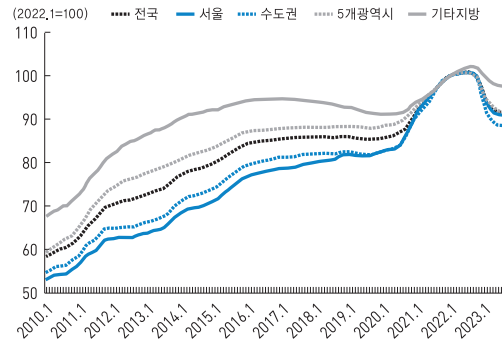
가계신용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009년 4분기에 약 403조 원 수준에서 2018년 4분기에는 약 808조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약 1,031 조원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8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4분기 이후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가계신용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이와는 별개로 2013년을 저점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그림 VIII-6). 또한 거주주택 마련뿐만 아니라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용도로 담보대출을 받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주택구입

[그림 VIII-5] 주택종합지수 및 매매대비 전세가 비율, 2010.1~20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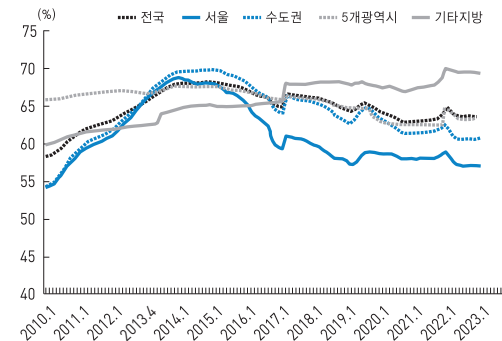
1)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2)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



3) 종합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포함.

2) 5개 광역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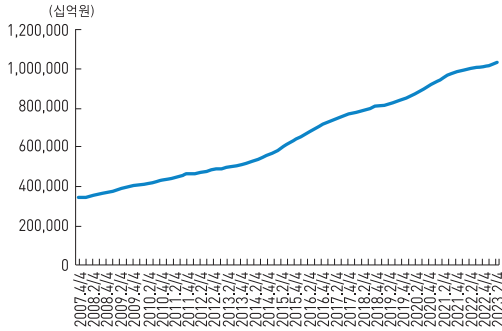
3) 기타 지방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임.

출처: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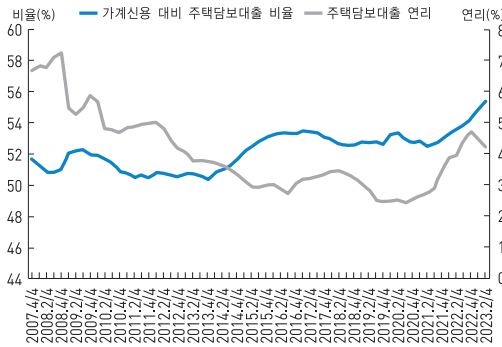


[그림 VIII-6] 주택담보대출 총액 및 가계신용 대비 비율, 2007.4/4-2023.2/4

1) 주택담보대출 총액(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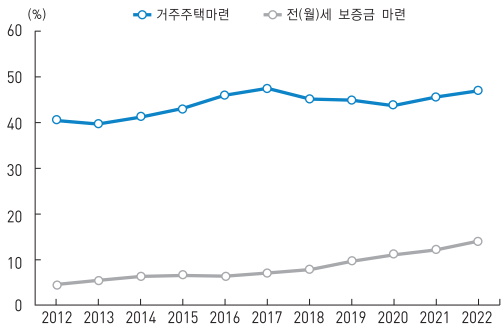


2) 가계신용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 및 주택담보대출(연리)



주: 1) 가계신용은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판매신용을 포함.
출처: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각 분기.

[그림 VIII-7] 담보대출의 용도별 비율,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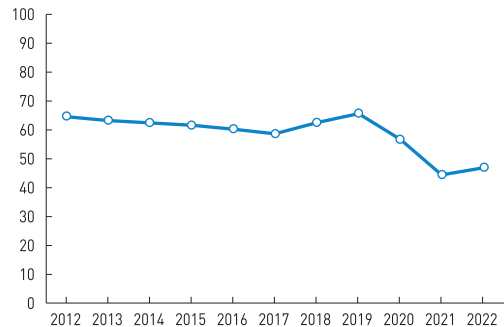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및 임차에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VI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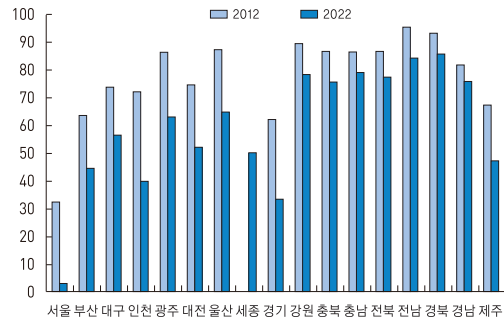
주택구입 부담은 주택구입물량지수로 설명 가능하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의 비율을 의미한다.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22년 기준 47.0으로 중위소득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총 주택의 47.0%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하락세가 두드러

[그림 VIII-8] 주택구입물량지수, 2012-2022

1) 전국



2) 시도별



주: 1) 주택구입물량지수(K-HOI)=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물량/전체 주택물량×100.
2) K-HOI 100은 중위소득 가구가 주택을 100% 구입 가능성을 의미함.
출처: HF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주택구입물량지수」, 각 연도.

진다. 특히 서울의 2022년 주택구입물량지수는 3.0으로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그림 VIII-8).

자가 가구 측면에서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rice to Income Ratio, PIR)로 주거비 부담을 검토할 수 있다. 전국 기준 PIR은 2006~2021년 사이 4.2에서 6.7로 증가하였다. 이는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의 증가율이 컸기 때문이며, 특히 2021년의 수도권 지역 PIR은 2020년 8.0에서 크게 상승한 10.1로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큰 수치를 보였다(표 VIII-5).

〈표 VIII-5〉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2006~2021

	전국	수도권	광역시 등	도지역
2006	4.2	5.7	4.1	3.3
2008	4.3	6.9	3.3	3.0
2010	4.3	6.9	3.5	2.9
2012	5.1	6.7	5.0	3.6
2014	4.7	6.9	4.7	4.2
2016	5.6	6.7	5.3	4.0
2017	5.6	6.7	5.5	4.0
2018	5.5	6.9	5.6	3.6
2019	5.4	6.8	5.5	3.6
2020	5.5	8.0	6.0	3.9
2021	6.7	10.1	7.1	4.2

주: 1)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중위 주택가격÷중위 연소득.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

3) 2018년부터 세종은 '광역시 등'에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이전은 충남(도지역)에 포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임차 가구 측면에서는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로 주거비 부담을 검토할 수 있다. 전국 기준 RIR은 2010년 19.2%에서 2021년 15.7%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금리의 하락으로 인해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2021년 기준 수도권의 RIR은 다른 권역보다 높은 17.8%로 나타나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 모두 수도권에서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VIII-6).

〈표 VIII-6〉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2010~2021

	전국	수도권	광역시 등	도지역
2010	19.2	20.9	16.4	14.4
2012	19.8	23.3	16.8	14.5
2014	20.3	21.6	16.6	15.8
2016	18.1	17.9	15.4	14.2
2017	17.0	18.4	15.3	15.0
2018	15.5	18.6	16.3	15.0
2019	16.1	20.0	16.3	12.7
2020	16.6	18.6	15.1	12.7
2021	15.7	17.8	14.4	12.6

주: 1)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중위 월임대료÷중위 월소득×100.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

3) 2018년부터 세종은 '광역시 등'에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이전은 충남(도지역)에 포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임대주택과 주거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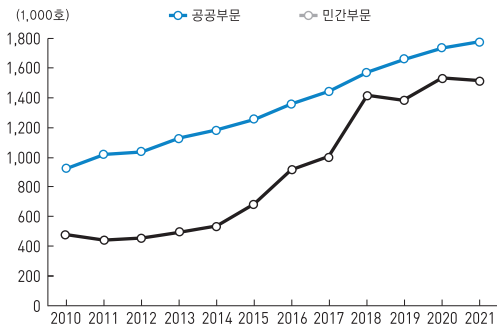
정부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을 통해 영구, 국민, 행복, 장기전세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왔다. 민간부문에서도 단기, 장기, 공공지원 등의 형식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해왔다. 2021년 기준 임대주택 재고는 329만 호로 2010년의 140만 호에 비해 약 135.2% 증가하였다. 이는 2021년 기준 전체 주택 수의 17.5%에 해당한다. 이 중 공공부문은 2021년 현재 178만



호로 약 54.0%(총 주택 대비 9.4%)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2010년 약 34.0%로 공공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21년 전체 임대주택 재고의 46.0%, 총 주택 대비 8.1%이다(그림 VII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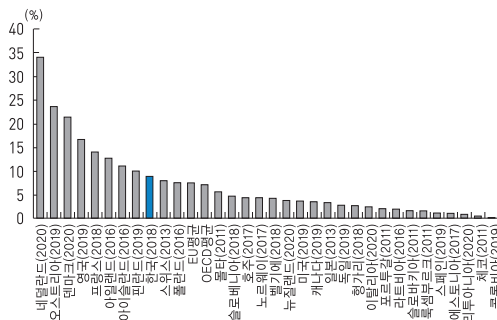
우리나라 공공주택의 재고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9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VIII-10).

[그림 VIII-9] 공공 및 민간 부문 임대주택 재고, 2010-2021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VIII-10] OECD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준



주: 1)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준은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2023.11.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도 지급되고 있다.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2년의 전체 수급가구 수와 수급권자 수는 각각 163만 가구와 226만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6.2% 및 4.5% 증가하였다(표 VIII-7). 이는 2021년부터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는 정책으로 인한 증가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II-7〉 기초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수급권자 수, 2016-2022

	수급가구		수급권자	
	가구 수 (만 가구)	총가구 대비 비율 (%)	인원 수 (만 명)	총인구 대비 비율 (%)
2016	94.5	4.8	138.8	2.7
2017	93.6	4.6	135.1	2.6
2018	107.0	5.2	153.0	3.0
2019	118.8	5.7	168.1	3.2
2020	136.7	6.4	194.7	3.8
2021	153.4	7.0	216.3	4.2
2022	162.9	7.3	226.1	4.4

주: 1) 수급가구 및 인원은 시설수급자 포함, 각 급여별 중복을 제외한 수치임.
2) 일반가구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각 연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주택연금제도는 고령층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제도이다. 주택연금제도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 가구가 집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서 주택 공시가
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
연금 가입 건수는 2022년 1만 4,580건이고, 주
택연금 보증공급액은 2022년 25조 원으로 전년
대비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2010년
이후 보증공급액의 수도권 비율이 감소하고 그
외 지역은 증가 추세였으나, 2018년부터는 수도
권에서 증가와 그 외 지역에서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표 VIII-8).

[표 VIII-8] 주택연금 보증공급액 추이, 2010-2022

	보증 공급 건수 (건)	보증 공급액 (억 원)	보증공급액의 권역별 비율(%)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그 외 비수도권 지역
2010	2,016	30,361	89.9	6.6	3.5
2011	2,936	41,000	86.5	8.8	4.7
2012	5,013	69,006	87.4	8.5	4.1
2013	5,296	62,950	84.4	10.4	5.2
2014	5,039	55,293	81.2	12.4	6.4
2015	6,486	71,392	80.1	13.7	6.2
2016	10,309	107,728	77.3	14.9	7.8
2017	10,386	106,969	77.1	15.0	7.9
2018	10,237	98,991	74.1	16.1	9.8
2019	10,982	113,325	75.4	15.5	9.1
2020	10,172	111,028	76.6	14.7	8.6
2021	10,805	150,255	79.6	13.9	6.5
2022	14,580	249,692	80.8	13.1	6.1

주: 1) 주택연금 보증공급액은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될 예상 연금보증
총액(월지급금+개별인출금+대출이자+보증료)을 의미함.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

3) 비수도권 광역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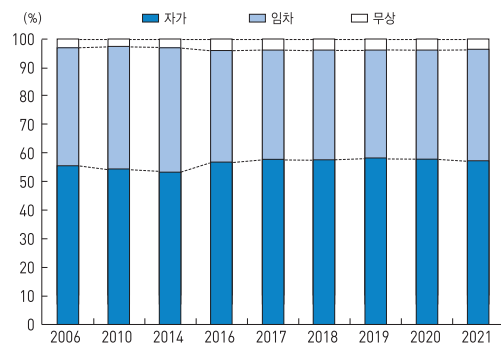
4)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
종을 포함. 단, 세종시의 경우 2013년부터 포함.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주택금융통계」, 각 연도.

주거의 질과 만족도

주거의 질 측면에서 자가 가구의 비율을 살펴
보았다. 2006~2021년 자가 가구의 비율은
55.6%에서 57.3%로 1.7%p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임차 가구(전세+월세)의 비율은 41.4%에서
39.0%로 2.4%p 감소하였다. 다만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자가 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임차
가구의 비율은 다소 증가하고 있다(그림 VIII-11).

[그림 VIII-11]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 분포, 2006-2021



주: 1) 일반가구 기준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자가 가구의 비율 증가는 주택보유의식의 증
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유의식은 자
기 집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의
미하며, 전체 가구 중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88.9%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로는 도지역, 광역시 등, 수도권 순이었으며, 소
득별로는 상위 가구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점



유형대별로는 자가와 전세가 월세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가장 높고 40세 미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VIII-9).

〈표 VIII-9〉 주택보유율, 2010-2021

	(%)						
	2010	2014	2016	2018	2019	2020	2021
전체	83.7	79.1	82.0	82.5	84.1	87.7	88.9
지역							
수도권	81.8	73.5	76.4	81.5	82.9	87.4	87.5
광역시 등	83.3	79.8	86.6	82.4	85.1	87.6	89.7
도지역	86.6	87.3	87.5	84.2	85.4	88.2	90.5
소득별							
하위	83.9	77.9	78.1	77.2	78.2	82.3	83.1
중위	83.4	79.1	83.6	84.3	85.9	90.1	91.8
상위	83.8	81.7	86.9	89.5	91.4	93.7	94.5
점유 형태							
자가	89.6	90.4	93.6	93.8	94.7	96.2	97.1
전세	77.2	64.0	70.1	73.4	75.8	82.0	84.1
보증금 있는 월세	74.9	65.2	63.7	62.6	65.3	72.4	73.4
보증금 없는 월세	78.6	74.5	61.0	61.3	60.5	67.4	68.2
무상	81.5	80.4	74.2	69.6	74.7	78.4	83.3
가구주 연령							
40세 미만	79.9	73.3	74.6	75.0	76.9	82.0	84.1
40-49세	80.3	75.2	80.1	80.8	84.7	88.9	90.0
50-59세	85.1	80.8	82.7	83.8	85.2	88.5	89.6
60세 이상	88.3	85.9	89.3	88.6	89.2	90.9	91.5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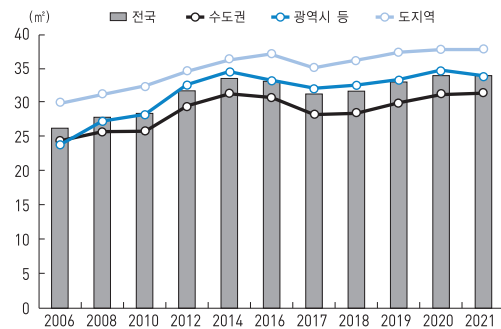
2) 2018년부터 세종은 '광역시 등'에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이전은 충남(도지역)에 포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한편 전국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전국 기준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6.2㎡이었으나 2021년에는 33.9㎡로 약 29.4%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도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1년 수도권, 광역시 등, 도지역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2006년에 비하여 각각 28.7%, 41.3%, 26.0% 증가하여 광역시의 1인당 주거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그림 VIII-12).

〔그림 VIII-12〕 1인당 평균 주거면적, 2006-2021



주: 1) 일반가구 기준임.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

3) 2018년부터 세종은 '광역시 등'에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이전은 충남(도지역)에 포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전국 기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1인당 평균 주거면적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택 만족도 역시 개선되었다. 주택 만족도는 2012년 2.83점에서 2021년 3.00점으로 향상되었으며, 광역시 거주자(3.04점), 상위소득(3.16점), 자가 소유자(3.05점), 아파트 거주자(3.12점)의 주택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거주자(2.98점), 하위소득(2.89점),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자(2.72점),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거주자(2.73점)의 주택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VIII-10).

〈표 VIII-10〉 주택 만족도, 2012-2021

	(점)						
	2012	2014	2016	2018	2019	2020	2021
전체	2.83	2.92	2.99	2.98	3.00	3.00	3.00
거주 지역							
수도권	2.80	2.88	3.01	2.96	2.98	2.99	2.98
광역시 등	2.87	2.96	2.98	3.02	3.06	3.02	3.04
도지역	2.84	2.96	2.98	2.97	2.99	3.00	2.99
소득별							
하위	2.75	2.80	2.86	2.85	2.88	2.89	2.89
중위	2.85	2.95	3.04	3.02	3.03	3.02	3.03
상위	2.95	3.08	3.18	3.14	3.16	3.16	3.16
점유형태							
자가	2.93	2.99	3.07	3.03	3.05	3.05	3.05
전세	2.74	2.87	2.93	2.95	2.98	2.98	2.99
보증금 있는 월세	2.72	2.82	2.92	2.91	2.95	2.94	2.92
보증금 없는 월세	2.41	2.63	2.64	2.59	2.67	2.71	2.72
무상	2.69	2.85	2.90	2.87	2.87	2.91	2.86
주택유형							
단독주택	2.75	2.79	2.83	2.84	2.87	2.87	2.87
아파트	2.92	3.04	3.15	3.11	3.12	3.12	3.12
연립주택	2.80	2.78	2.81	2.86	2.82	2.82	2.90
다세대주택	2.72	2.78	2.82	2.88	2.94	2.91	2.87
비거주용건물내주택	2.73	2.87	2.76	2.73	2.79	2.97	2.73
주택이외의거처	2.77	2.97	3.07	2.79	2.85	2.87	2.86

주: 1) 주택 만족도는 4점 척도로 1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4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의미함.

2) 일세, 사글세,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

3) 주택이외의 거처는 오피스텔,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을 의미함.

4) 2018년부터 세종은 '광역시 등'에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이전은 충남(도지역)에 포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면적, 침실, 시설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의 기준에 따라 면

적 및 침실 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제시하였고, 시설기준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시설, 전용 목욕시설 여부로 접근하였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06년 5.4%에서 2021년에는 4.5%로 하락하였다. 2021년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수도권(5.5%), 하위소득(7.3%)에서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3.1%), 상위소득(1.4%)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VIII-11).

〈표 VIII-11〉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2016-2021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5.4	5.9	5.7	5.3	4.6	4.5	
수도권	5.8	6.7	6.8	6.7	5.6	5.5	
지역	광역시 등	4.9	4.5	4.4	4.3	3.0	3.1
	도지역	5.0	5.6	4.7	3.9	3.9	3.9
	하위	8.8	10.1	9.1	9.2	7.6	7.3
소득	중위	3.8	3.8	4.2	3.8	3.1	3.1
	상위	1.7	1.5	1.6	1.3	1.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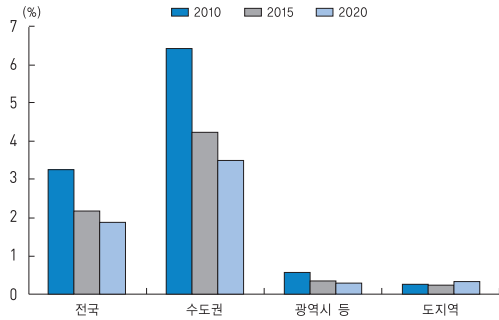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

2) 2018년부터 세종은 '광역시 등'에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이전은 충남(도지역)에 포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주택의 위치로 주거 상황을 살펴보면, 지하, 반지하 및 옥탑방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10년 3.3%에서 2020년 1.9%로 줄어 들었다. 다만 지역별로는 수도권(3.5%)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하, 반지하 및 옥탑방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주거 취약계층은 자연재해나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그림 VIII-13).

〈그림 VIII-13〉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 2010, 2015, 2020



주: 1) 일반가구 기준임.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
 3) 2015년부터 세종은 '광역시 등'에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이전은 충남(도지역)에 포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표 VIII-12〉 평균 통근 및 통학 시간, 2000-2020

	전국	수도권	광역시 등	도지역
평균 통근시간 (분)				
2000	32.1	39.7	34.3	27.3
2005	31.1	38.4	31.7	27.2
2010	33.7	41.5	34.2	30.0
2015	35.4	43.7	36.0	31.5
2020	34.8	42.2	34.0	32.2
평균 통학시간 (분)				
2000	33.9	37.9	34.6	30.9
2005	30.1	34.3	30.1	28.0
2010	31.5	36.4	31.1	29.7
2015	33.3	38.8	33.7	31.2
2020	29.3	32.6	29.4	28.3

주: 1) 평균 통근시간 및 통학시간은 원자료에서 통근시간 변수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로 제공됨에 따라 도수분포표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여기서 마지막 범주인 '120분 이상'의 경우 120분과 150분의 중간값인 135분으로 가정하였음.
 2) 2010년까지는 10% 표본 자료이고, 2015년은 20% 표본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주거와 통근·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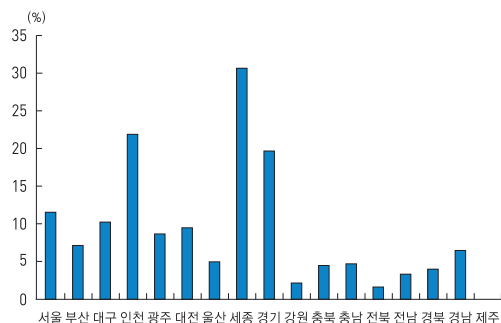
주거와 교통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교통시설의 꾸준한 확충에도 불구하고 교통체계의 서비스 수준은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 평균 통근시간은 34.8분으로 2015년 35.4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다만 전 국민의 약 50%가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의 평균 통근시간은 2020년 기준 42.2분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21.3% 높다. 통학시간의 경우 2020년 기준 29.3분으로 통근과 마찬가지로 2015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수도권 거주자의 통학시간이 32.6분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11.3% 높다. 통근 시간과 통학시간 모두 수도권과 광역시보다 도지역이 가장 짧았다(표 VIII-12).

도지역에서 통근 및 통학시간이 가장 짧게 나타난 이유는 통근·통학 OD자료를 통해 검토가 가능하다. 광역시도별로 타 광역시도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을 보면 세종(30.7%), 인천(21.9%), 경기(19.7%)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도지역에 속하는 지역(0.0~6.4%)들은 상대적으로 타지역으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낮았다(그림 VIII-14).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만족도는 접근성, 환승, 서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의 종합만족도(7점 만점)이다. 대중교통 만족도는 2012년 4.76점에서 2022년 4.86점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 기준 광역시별 대중교통 만족도를 보면, 대전, 서울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인천, 울산 등이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서울은 2012년에 비해 대중교통 만족도가 낮아졌지만, 다른 지역들은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특징이 있다(표 VIII-13).

[그림 VIII-14] 시도별 타지역 통근·통학 비율, 202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0.

〈표 VIII-13〉 대중교통 만족도, 2012-2022

	전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2012	4.76	5.04	4.80	4.65	4.75	4.84	4.75	4.66
2013	4.78	5.07	4.83	4.76	4.76	4.88	4.75	4.75
2014	4.84	5.05	4.80	4.76	4.79	4.79	4.71	4.60
2015	4.78	4.93	4.81	4.64	4.77	4.81	4.76	4.56
2016	4.84	5.00	4.83	4.82	4.72	4.79	4.86	4.63
2017	4.87	5.04	4.91	4.79	4.86	4.86	4.81	4.69
2018	4.84	4.95	4.83	4.74	4.83	4.87	4.80	4.67
2019	4.87	5.10	4.98	4.73	5.02	5.13	4.96	4.74
2020	4.77	4.91	4.90	4.69	4.83	5.05	4.88	4.70
2021	4.83	4.93	4.92	4.78	4.89	5.04	4.95	4.86
2022	4.86	4.98	4.94	4.84	4.95	5.04	4.96	4.90

주: 1) 대중교통 만족도는 대중교통의 접근성, 환승, 서비스 등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 평균 점수로서 7점 척도(최저 1점에서 최고 7점)로 측정되었음.

출처: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현황조사」, 각 연도.

맺음말

우리나라의 주거 수준은 양과 질의 모든 측면에서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택보급률, 1인당 주거면적, 주택 만족도,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 임대주택 공급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다만 2020~2022년에 가구 수 증가에 비해 주택 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였던 점, 다주택자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과 외지인 소유주택 규모가 13%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 주택 공급과 수요의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주거비 부담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주거 수준의 양과 질이 개선됨에 따라 주택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높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득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들어 주택 및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는 있으나 이미 주택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택담보 대출의 증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의 증가 등 주거비 부담의 문제는 여전하다. 또한 주거환경, 주거비, 대중교통 비용 등은 지역 및 연령대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선과 더불어 지역 및 계층 격차의 완화에 대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청년의 주거실태와 특징: 청년 가구의 유형별, 지역별 차이를 중심으로

고진수 (광운대학교)

-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낮으며, 1인가구 및 임차가구 위주, 낮은 점유면적 및 높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등의 특성이 있다.
- 청년의 가구유형을 세분화하여 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청년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들 가구는 향후 청년독거가구, 임차가구로 거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청년독거가구의 경우, 학업, 일자리에 따라 현재 지역으로 이사한 비율이 높으며, 주거수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주거만족도가 낮고 주거불안의 경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은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등 금융 측면의 지원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청년가구의 경우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높고, 청년독거가구, 부모동거가구(미혼) 유형에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만 해당 가구의 향후 주거이동 이유를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 입지 선정에 있어 도심과 역세권 등 대중교통환경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수도권 거주 청년독거가구는 학업, 일자리에 따라 현재 주거지역으로 이사한 비율이 높으나 향후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이사할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광역시와 광역도에 거주하는 청년독거가구와 부모동거가구(미혼)의 경우 더 나은 일자리 기회와 구직을 위해 이사할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의해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법령과 조례에 따라 청년의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40대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청년지원 정책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인 청년의 특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청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첫 단계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청년의 주거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청년의 가구유형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을 청년가구주와 청년비가구주로 크게 구분하고, 청년가구주를 ①청년독거가구(1인가구), ②청년부부가구, ③청년·자녀가구, ④부모동거가구, ⑤기타 청년 가구주 가구로 구분하고, 청년비가구주를 ⑥부모(가구주)·미혼청년가구, ⑦부모(가구주)·기혼청년가구(이혼, 별거, 사별 포함), ⑧기타 비청년 가구주 가구로 세분화하여 접근하였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 34세 이하 가구주 가구는 3,713개 자료인데 반해 「청년 삶 실태조

사」는 동일한 기준의 청년가구주 가구가 7,071개 자료이며, 거기에 비가구주인 청년 7,895개 자료가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주거실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청년의 주거실태를 가구유형별, 지역별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청년 가구의 위상, 청년가구 유형 및 일반 특성, 주택 거주 현황 및 주거비 부담, 주거의 질 및 주거정책 수요, 주거이동 및 이유로 구성된다.

청년가구의 위상

청년가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2021년을 기준으로 청년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는지를 개략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우리나라 청년층(40세 미만 가구주)은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소득과 순자산(자산-부채)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표 VIII-14).

낮은 경제적 수준과 더불어 청년들의 1인가구의 비율과 무주택가구의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다(표 VIII-15).

청년(40세 미만) 가구의 비율은 고령화로 인해 낮아졌지만(2015년 24.2%→2021년 23.3%), 1인가구 비율(41.0%→52.8%)과 무주택가구 비율(65.9%→70.7%)은 모두 증가하고 있어 청년의 주거수준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그림 VIII-15).

〈표 VIII-14〉 연령별 소득, 자산, 부채, 순자산, 2021

(만 원)

	소득	자산	부채	순자산
40세 미만	6,398	35,625	9,986	25,639
40-49세	7,871	55,370	12,208	43,162
50-59세	8,086	56,741	10,074	46,666
60세 이상	4,602	48,914	5,703	43,211
전체	6,414	50,253	8,801	41,452

주: 1)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은 19-34세로 정의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10세별로 통계를 제공함에 따라 40세 미만을 청년으로 가정하여 분석함.

2) 경성소득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2022년 자료의 2021년 경성소득 자료를 활용하였고, 자산과 부채, 순자산은 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 2022.

〈표 VIII-15〉 연령별 1인가구, 무주택가구 비율,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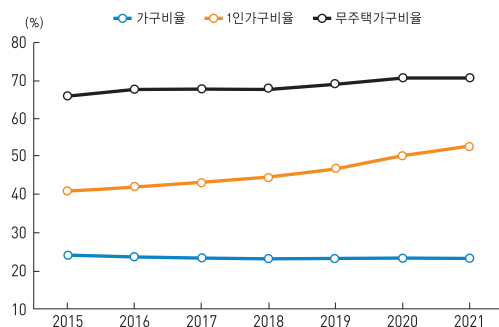
(%)

	가구 비율	1인가구 비율	무주택가구 비율
40세 미만	23.3	52.8	70.7
40-49세	19.8	22.4	40.4
50-59세	22.5	22.8	36.1
60세 이상	34.4	33.5	32.4
전체	100.0	33.4	43.8

주: 1)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은 19-34세로 정의되지만, 「주택소유 통계」는 10세별로 통계를 제공함에 따라 40세 미만을 청년으로 가정하여 분석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2; 「주택소유통계」, 2022.

〔그림 VIII-15〕 청년(40세 미만) 1인가구, 무주택가구 비율, 2015-2021



주: 1)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은 19-34세로 정의되지만, 「주택소유 통계」는 10세별로 통계를 제공함에 따라 40세 미만을 청년으로 가정하여 분석함.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주택소유통계」,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는 다른 유형들(신혼부부, 노인가구)에 비해 자가점유율, 전용면적이 낮으며, 이러한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청년가구의 자가 보유의식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표 VIII-16).

〈표 VIII-16〉 가구 유형별 자가점유율, 전용면적 등, 2021

구분	자가 점유율 (%)	전용 면적 (m ²)	공공임대 의향 (%)	자가보유 의식 (%)
청년가구	13.8	43.5	52.1	81.4
신혼부부	43.9	72.8	36.7	90.7
노인가구	75.7	72.3	24.3	91.5
전체가구	57.3	68.3	34.7	88.9

주: 1) 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 20~34세, 신혼부부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가구, 노인가구는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을 의미함.

출처: 국토교통부, 「2021 주거실태조사」, 2022.

청년층의 소득 및 주거환경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낮으며, 1인가구 및 임차가구 위주로 전용면적이 낮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 자료는 청년층의 가구유형에 따른 주거실태를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가구의 주거실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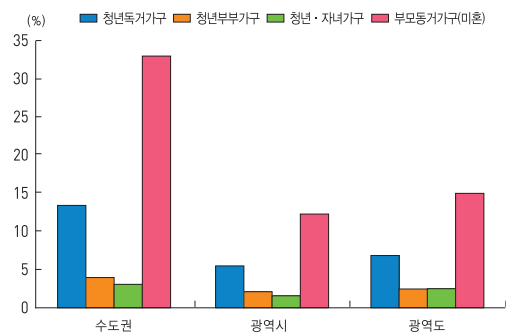
청년가구 유형 및 일반 특성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가 정의하는 청년 가구는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19~34세 가구원

과 그 가구원이 속한 가구’이다. 앞에서 언급한 청년가구 8개 유형 중 전체 자료의 5% 이상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 4가지 유형(①청년독거가구, ②청년부부가구, ③청년·자녀가구, 그리고 ⑥부모(가구주)·미혼청년가구(이하 부모동거가구(미혼))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은 비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인천 제외, 세종 포함), 광역도(경기 제외)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우리나라 청년층은 대부분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9.7%), 다음으로 청년독거가구(25.4%), 청년부부가구(8.1%), 청년·자녀가구(6.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동일하게 수도권, 광역도, 광역시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VIII-16).

〈그림 VIII-16〉 가구 유형별 비율,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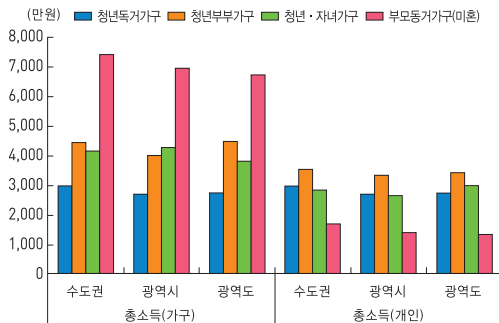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청년소득을 살펴보면 가구 총소득의 경우 부모동거가구(미혼)가 부모의 소득이 포함되어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청년독거가구는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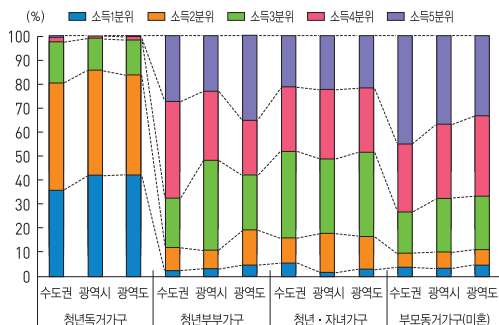
낮았다. 청년 개인 소득의 경우 청년부부가구가 가장 크며, 청년독거가구와 청년·자녀가구는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체로 수도권, 광역도, 광역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다음으로 가구소득 분포를 보면, 청년독거가구는 다른 유형에 비해 소득1~2분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 측면에서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I-17).

[그림 VIII-17] 연 소득 및 소득 분포, 2022

1) 평균 연 소득



2) 가구 소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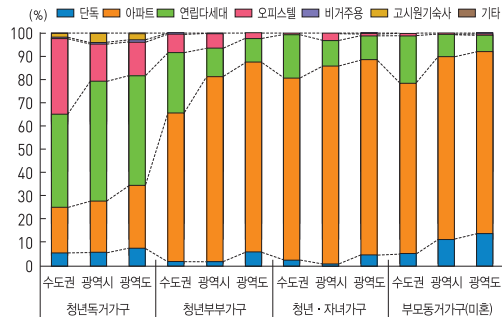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주택 거주 현황 및 주거비 부담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대부분이지만 청년독거가구의 경우 연립다세대 등에 거주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수도권 거주 청년독거가구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그림 VIII-18).

[그림 VIII-18] 주택 유형 비율,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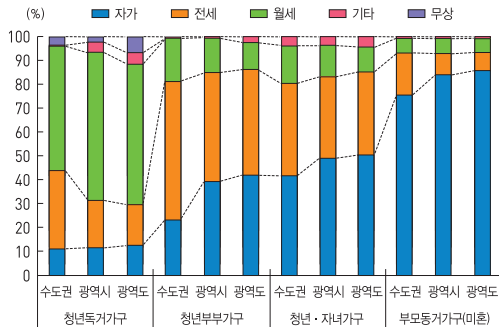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점유형태의 경우 부모동거가구(미혼)는 자가 가장 많으며, 청년독거가구는 임차, 그 중에서도 월세(보증부 및 순수월세)의 비율이 높았다. 다만 지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의 전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VIII-19).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구입 혹은 임차 자금 부담자를 보면, 청년독거가구는 본인 혹은 부모님 자금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청년 부부 및 자녀가구는 정부·지자체와 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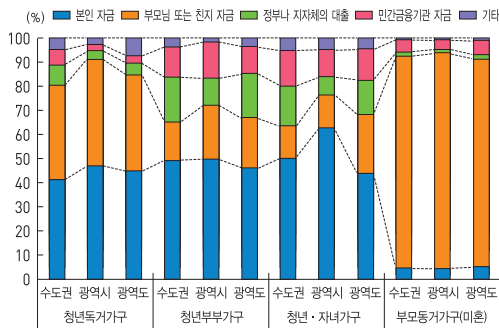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I-20).

[그림 VIII-19] 점유형태 비율,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그림 VIII-20] 주거자금 부담자 비율,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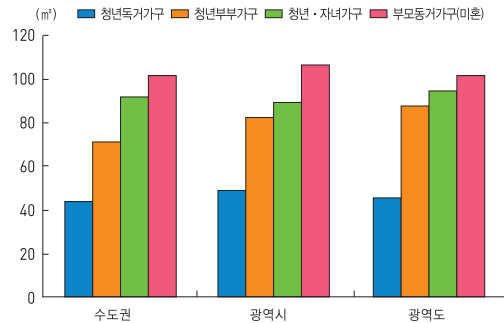
가구의 주택규모는 부모동거가구(미혼), 청년·자녀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독거가구 순으로 평균 면적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 면

적이 작게 나타났다. 광역시는 청년독거가구와 부모동거가구(미혼)의 평균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광역도에서는 청년부부 및 청년·자녀가구의 평균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컸다. 한편 점유유형별로는 임차가구의 평균 면적이 자가가구보다 작았으며, 광역도 임차가구 중 청년·자녀가구의 평균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VIII-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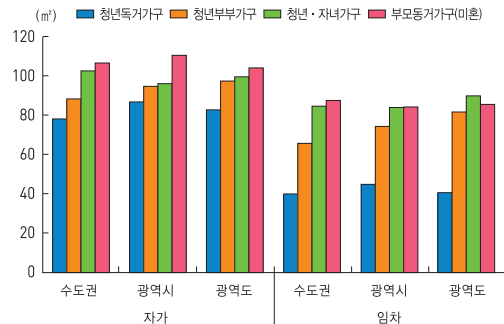
자가가구의 주택가격은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시에

[그림 VIII-21] 평균 전용면적, 2022

1) 전체 평균



2) 자가/임차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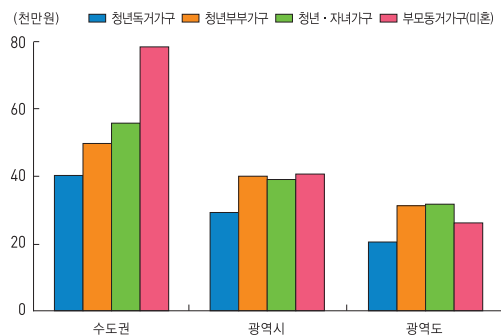
서는 청년독거가구가 가장 낮고 그 외 가구 유형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광역도에서도 청년독거가구의 주택가격이 가장 낮았다. 또한 주택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PIR을 살펴보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청년독거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I-22).

전월세 임차가구의 주거비 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지역별 전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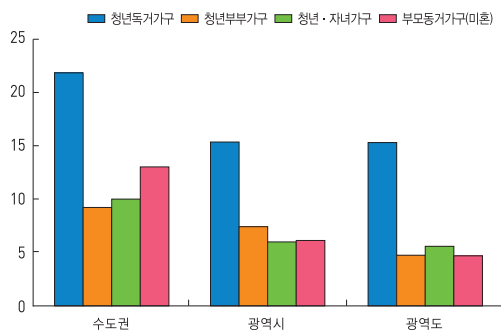
세전환율을 사용하여 환산 연 임대료를 도출하였다. 청년독거가구의 환산 연 임대료 평균이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부모동거가구(미혼), 광역시에서는 청년·자녀가구, 광역도에서는 청년부부 및 청년·자녀가구의 환산 연 임대료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환산 연 임대료를 연소득으로 나눈 RIR을 살펴본 결과 청년독거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그림 VIII-22] 주택가격 및 PIR, 2022

1) 주택가격 평균



2) PIR 평균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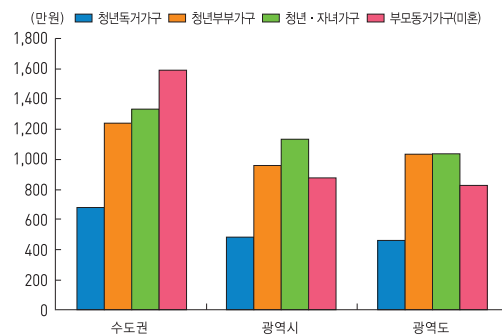
2) PIR = (자가 소유 주택 가격 ÷ 연 가구 소득)

3) PIR 평균은 개별가구의 주택가격, 소득을 이용하여 가구별 PIR을 도출한 후 집단별 평균을 통해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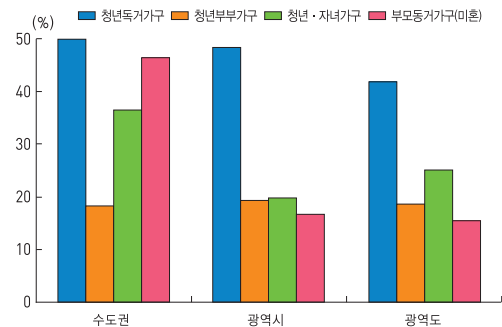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그림 VIII-23] 환산 연 임대료 및 RIR, 2022

1) 환산 연 임대료 평균



2) RIR 평균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환산 연 임대료 = (보증금 ×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 (월세 × 12)

3) RIR = (환산 연 임대료 ÷ 연 가구 소득) × 100

4) RIR 평균은 개별가구의 보증금, 월세, 전월세전환율, 소득을 이용하여 가구별 RIR을 도출한 후 집단별 평균을 통해 도출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청년독거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자녀가구 및 부모동거가구(미혼)의 RIR도 높게 나타났다(그림 VIII-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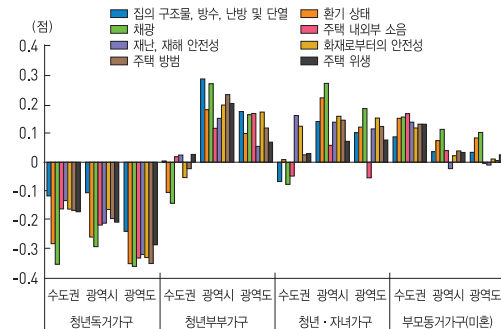
주거의 질 및 주거정책 수요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 평가를 보면 하위항목별로 3.3~4.4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글에서는 평가 결과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9개의 상태평가 항목과 항목별 평균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수도권 청년독거가구의 '채광'의 수치는 -0.35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 청년독거가구의 '채광'의 평균값(3.78)과 전국 '채광' 평균값(4.13)의 차이이며, 부(-)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도권 청년독거가구의 '채광'에 대한 평가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을 종합해 보면, 청년독거가구와 수도권 거주 청년 부부 및 자녀 가구는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그림 VIII-24).

주택 위치 측면에서 주거의 질을 판단해 보면, 반지하, 지하, 옥탑에 거주하는 청년가구들이 전체 청년가구의 약 0.9% 정도이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VIII-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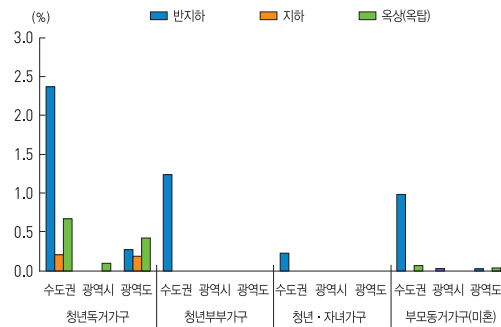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전체 청년가구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부모동거가구(미혼) 비율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다(그림 VIII-26).

[그림 VIII-24] 현재 거주 주택의 상태 평가 차이,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평가 차이는 항목별 유형별 지역별 평균 점수(5점 척도)를 각 항목별 평균 점수의 차이로 계산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그림 VIII-25] 주택 위치별 비율,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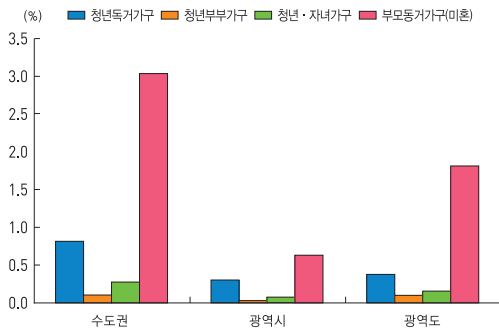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8개) 역시 3.3~4.2점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상대적인 척도(각 항목별 평균과의 차이)로 변환하여 보면, 유형별로는 청년독거가구,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 청년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청년

독거가구는 대중교통 만족도가 높는데 반해, 청년·자녀가구는 동일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I-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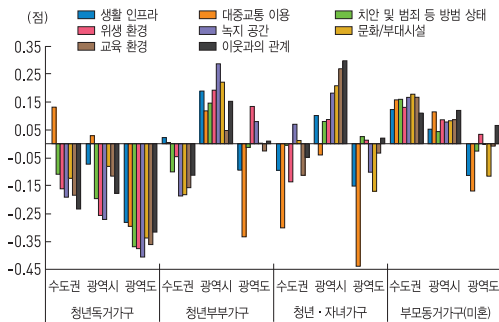
[그림 VIII-26]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그림 VIII-27] 주거환경 만족도 차이,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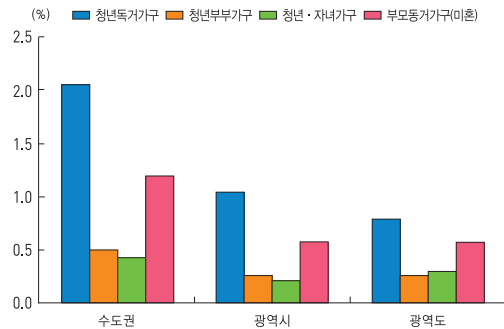
2) 통계치는 항목별 유형별 지역별 평균점수(5점 척도)를 각 항목별 평균점수의 차이로 계산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전체 청년가구의 8.2%가 최근 1년간 주거불안 상황(임대료 연체, 임대보증금 부족 등)을 경험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독거가구와 부모동거가구(미혼)의 주거불안 경험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II-28).

[그림 VIII-28] 주거불안 경험,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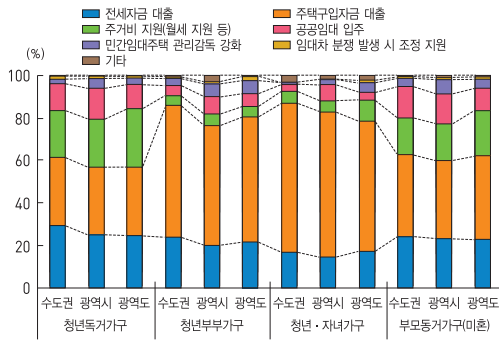
2) 통계치는 '월임대료 연체', '임대보증금 부족', '임대인이 기피하여 주택확보 곤란',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연체', '주택압류, 재개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퇴거', '공과금이나 관리비 연체', '임대인과의 갈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의 주거불안 상황 중 1개 이상 경험한 응답 비율임.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현재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에 대해서는 전세 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그리고 주거비 지원 등 금융 측면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부부가구 및 청년·자녀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청년독거가구 및 부모동거가구(미혼)는 공공임대 입주가 상대적으로 높다(그림 VIII-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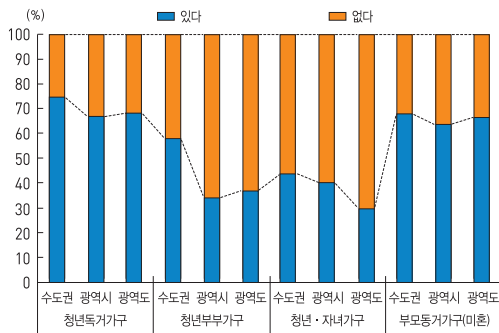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살펴보면 전체 청년가구 중 64.2%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수도권 거주 가구와 청년 독거가구 및 부모동거가구(미혼)에서 높게 나타났다(그림 VIII-30).

[그림 VIII-29]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통계치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에 대한 1순위 응답 비율임.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그림 VIII-30]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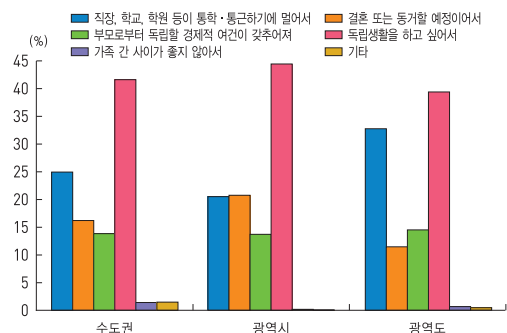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통계치는 기회가 된다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자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주거이동 및 이유

현재 부모와 거주하는 미혼 청년 중 독립 계획이 있는 가구는 32.1%이며, 지역별로 보면, 광역도(38.3%), 수도권(30.7%), 광역시(28.5%)순으

로 나타났다. 주된 독립계획 이유를 보면, ‘독립 생활을 하고 싶어서(41.6%)’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직장, 학교, 학원 등이 통학·통근하기에 멀어서(26.5%)’, ‘결혼 또는 동거할 예정이어서(15.7%)’, ‘부모로부터 독립할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서(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역시에서는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광역도에서는 ‘직장, 학교, 학원 등이 통학·통근하기에 멀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그림 VIII-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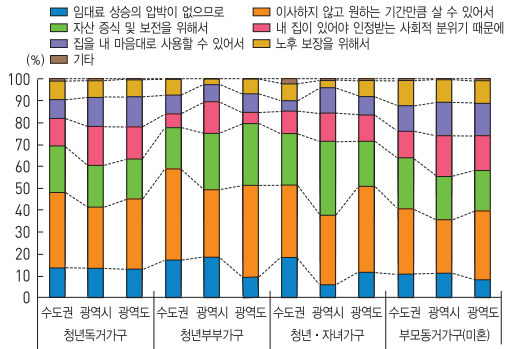
[그림 VIII-31] 부모동거가구(미혼)의 독립계획 이유,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부모동거가구(미혼) 중 독립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3) 통계치는 독립하려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자가 주택 소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청년 가구 중 91.1%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주요 이유로는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VIII-32).

[그림 VIII-32] 자가주택 필요 이유,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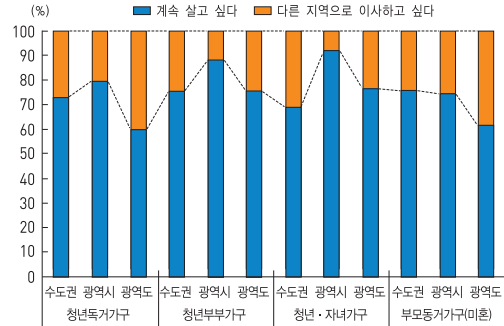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내 집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3) 통계치는 내 집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현재 거주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은 72.5%로 높은 수준이나 광역도의 청년독거가구 및 부모동거가구(미혼)의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그림 VIII-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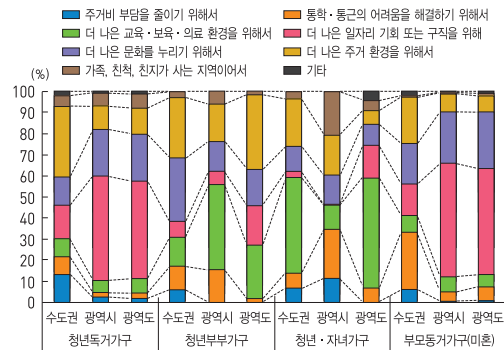
다만 현재 거주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구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통근·통학과 관련해서는 광역시의 청년·자녀가구, 수도권의 부모동거가구(미혼), 교육·보육·의료와 관련해서는 광역시의 청년부부가구, 수도권 및 광역도의 청년·자녀가구의 응답이 높았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광역시 및 광역도의 청년독거가구 및 부모동거가구(미혼), 문화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청년부부가구,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청년독거가구, 광역도의 청년부부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VIII-34).

[그림 VIII-33] 현재 거주지역에서 계속 살 의향,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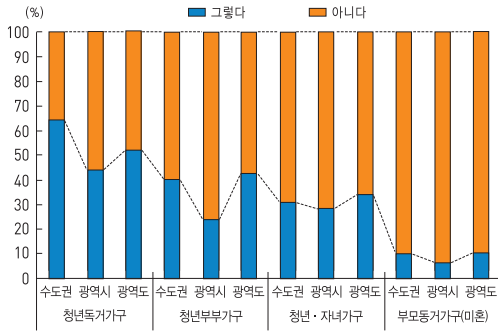
[그림 VIII-34]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이유,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3) 통계치는 현재 거주지역에서 다른 시도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특히 학업 또는 일자리에 따른 현재 주거 지역의 이사 여부는 청년독거가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거주자에서 두드러진다. 청년독거가구의 주거선택에 있어 학업 및 일자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림 VIII-35).

[그림 VIII-35] 학업 또는 일자리에 따른 현재 주거지역으로의 이사 여부, 2022



주: 1) 모집단 가중치로 개인가중치를 사용함.
 2) 통계치는 '학업 또는 일자리를 이유로 현재 살고 있는 시/도로 이사 해 오셨습니까?'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국무조정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 2023.

맺음말

청년가구는 중장년가구에 비해 소득과 자산이 적기 때문에 주거선택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가구유형별, 지역별로 청년가구가 처해있는 주거상황은 차이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해서는 청년가구를 보다 세분하여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의 가구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청년독거가가 가장 주요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청년독거가구는 학업, 일자리에 따라 현재 주거지역으로 이사한 경우가 많았으나, 주거비 부담이 높고,

주거상태가 열악하여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고 주거불안의 경험도 크게 나타났다. 당연한 결과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이사할 의향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청년독거가구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대중교통이용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모동거가구(미혼)의 경우, 32.1%가 향후 청년가구로 독립할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청년독거가구의 비중은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년독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수도권 청년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높고, 청년독거가구, 부모동거가구(미혼) 유형에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만 수도권 청년독거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환경이 양호한 주거입지를 선택하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동거가구(미혼)의 경우에도 통학, 통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이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 입지 선정 시 대중교통 환경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광역시와 광역도에 거주하는 청년독거가구와 부모동거(미혼)가구의 경우 더 나은 일자리 기회와 구직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은 주거환경의 개선, 광역시와 광역도 지역은 일자리 등의 확보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의 청년가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년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에 대한 응답으로 모든 유형과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월세 지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정책의 마련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불가능한 주택의 공급뿐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등이 함께 고민되어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2023 Living Environment

Korean Social Trends 2023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X

생활환경

생활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 한국환경연구원

280

기후변화와 재해취약성 강정은 | 부산대학교

291

생활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한국환경연구원)

-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은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폭염이나 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정책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하천과 호소의 수질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폐합성수지류(폐플라스틱류) 발생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소음공해가 여전히 심한 상태이며, 환경 분쟁의 대다수를 소음 문제가 차지하고 있다.
- 정부예산 대비 환경 분야 예산 비중과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이 최근에 상승 발전하였다.
- 최근 주관적인 환경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보다는 농어촌의 환경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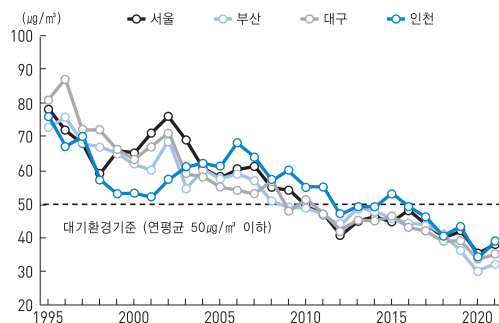
환경과 인간사회의 상호 작용은 자원채취, 오염물질 배출, 자연재해 등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글에서는 대기, 기후변화, 물, 폐기물 등 생활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 환경문제의 변화 양상 및 환경상태 만족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대기환경

대기오염의 정도는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의 대기 중 농도를 이용해서 측정하며, 대기환경기준은 대기오염 농도가 건강에 유해한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준거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산화황(SO_2)이나 이산화질소(NO_2)는 이미 1990년대부터 환경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1995년부터 측정을 시작한 미세먼지(PM_{10})도 연평균 농도가 꾸준히 개선되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요 도시들이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IX-1).

2015년부터 공식 측정을 시작한 초미세먼지($\text{PM}_{2.5}$)의 경우에도 주요 도시의 연평균 농도가

[그림 IX-1] 주요 도시 미세먼지(PM_{10}) 연평균 농도, 199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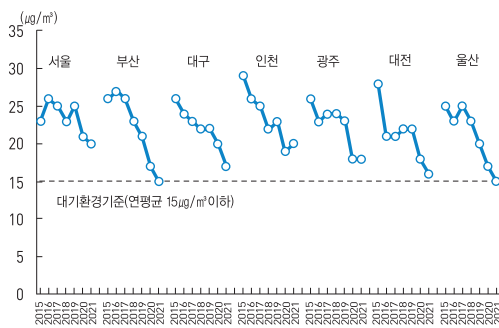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IX-2). 다만 여전히 다수의 도시가 환경기준($15\mu\text{g}/\text{m}^3$)을 초과하고 있으며, 더욱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기준($10\mu\text{g}/\text{m}^3$)과 비교하면 아직은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X-2]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PM_{2.5}) 연평균 농도, 2015~2021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 역시 노약자나 질환 보유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를 ‘나쁨’과 ‘매우 나쁨’으로 구분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일평균 농도가 $81\sim150\mu\text{g}/\text{m}^3$ 이면 나쁨, $151\mu\text{g}/\text{m}^3$ 이상이면 매우 나쁨이고, 초미세먼지는 일평균 농도가 $36\sim75\mu\text{g}/\text{m}^3$ 이면 나쁨, $76\mu\text{g}/\text{m}^3$ 이상이면 매우 나쁨이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최근 몇 년간 나쁨/매우 나쁨 일수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일수에 비해 매우 나쁨 일수는 많지 않다. 둘째, 미세먼지 나쁨 일수보다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두 배 정도 많다. 셋째, 미세먼지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의 나쁨/매우 나쁨 일수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2021년 들어 다시 예전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IX-1).

<표 IX-1>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나쁨/매우나쁨 일수, 2015~2021

연도	미세먼지(PM ₁₀)				초미세먼지(PM _{2.5})			
	나쁨		매우나쁨		나쁨		매우나쁨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서울	경기
2015	21	35	4	4	44	74	0	1
2016	23	34	1	2	73	86	0	0
2017	20	35	2	2	61	82	3	6
2018	21	26	0	0	57	69	4	5
2019	25	32	3	3	55	61	9	11
2020	5	6	0	0	46	49	0	0
2021	18	23	3	3	31	36	4	5

주: 1) 미세먼지: 나쁨($81\sim150\mu\text{g}/\text{m}^3$), 매우 나쁨($151\mu\text{g}/\text{m}^3$ 이상).

2) 초미세먼지: 나쁨($36\sim75\mu\text{g}/\text{m}^3$), 매우 나쁨($76\mu\text{g}/\text{m}^3$ 이상).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한편 대도시의 기온 상승과 차량 대수 증가로 인해 오존(O₃) 농도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2000년 0.020ppm이던 오존 농도(전국 평균)는 지속적으로 악화하여 2021년에는 0.032ppm을 기록하였다.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 및 횟수 역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 30일 내외이던 발령 일수는 최근에 60일 내외로 두 배 정도 늘어났고, 2012년까지 대체로 100회 이내이던 발령 횟수는 오존경보제 발령 권역 확대까지 겹쳐서 최근에는 400회 내외로 대폭 증가하였다.



기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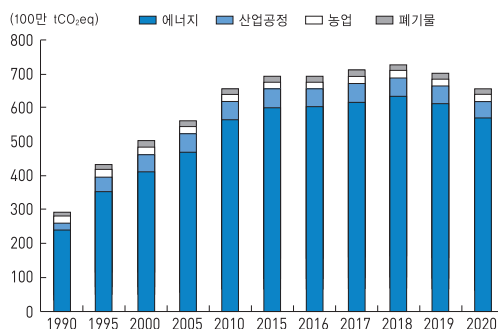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크고 보편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환경문제가 기후변화이며, 최근에는 ‘기후위기’라는 용어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온실가스라고 하며, 이산화탄소나 메탄이 대표적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며,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6위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호주, 미국, 캐나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에 이어 OECD 6위를 기록하고 있다(OECD Environment Database).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1990~2000년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5.6%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01년부터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하면서 정점을 기록한 201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하락하였다. 2019년의 총배출량은 전년 대비 3.5%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4% 감소하였다.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등으로 인해 이러한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제사회에 약속한 자발적 국가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5.0% 이상이 수송, 건물 등을 포함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된다. 국내 온

실가스 총배출량 증가를 주도한 것 역시 에너지 부문이다(그림 IX-3).

[그림 IX-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20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2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2.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기후변화의 구체적 양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한반도에서는 폭염, 홍수, 가뭄 등의 이상 기후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해수면도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림어업의 생산량 감소를 비롯하여 온열질환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국민 건강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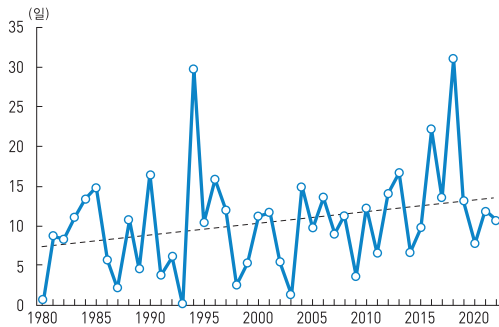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기온 상승과 관련된 것이다. 기상청 데이터를 이용한 한국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80~2019년에 전국 연평균 기온은 1.4℃ 이상 상승하였고 연 최저기온은 2.0℃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폭염(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 및 열대야(야간 최저 기온이 25℃ 이상)의 증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80년부터 폭염 일수는 뚜렷한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으며(그림 IX-4), 열대야 일수도 1980~1989년 평균 3.2일에서 2013~2022년 평균 9.4일로 크게 증가하였다.

폭염 뿐만 아니라 호우로 인한 피해도 심해지고 있다. 2020년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46명이 사망·실종되었고 약 1조 3,17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행정안전부, 「2021 재해연보」). 기상청에서 발간한 「장마백서 2022」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중부와 남부 지방 모두 강수강도(시간당 강수량)가 증가하였고 또한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 빈도(1mm 이상의 총 강수에 대한 강수 비율)는 최근 20년이 1970~1990년대보다 20%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IX-4] 폭염 일수, 198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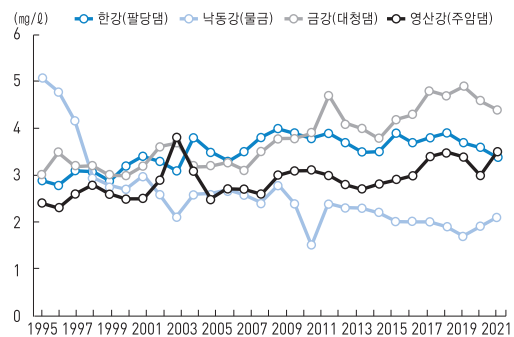
주: 1) 폭염일수는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임.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물환경

1990년대 초에 낙동강 폐놀 오염 사고와 유기 용제 유출 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물 환경 개선

을 위한 투자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표적인 수질지표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4대강 모두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낙동강(물금)의 BOD는 1995년 5.1mg/ℓ ('약간 나쁨' 수준)에서 2022년 2.1mg/ℓ ('약간 좋음' 수준)로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잘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한강(팔당댐), 금강(대청댐), 영산강(주암댐)의 COD는 1995년 '좋음' 수준(각각 2.9mg/ℓ, 3.0mg/ℓ, 2.4mg/ℓ)에서 2022년에 '약간 좋음' 또는 '보통' 수준(각각 3.4mg/ℓ, 4.4mg/ℓ, 3.5mg/ℓ)으로 오히려 악화했다(그림 IX-5). 총인(TP)이나 총질소(TN)의 경우 낙동강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정체 또는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IX-5]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오염도, 1995~2021



주: 1) 수질오염도는 호소(팔당댐, 대청댐, 주암댐)의 경우 통상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대표 지표이고, 하천(낙동강 물금)의 경우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대표 지표임.

2) '좋은 물' 기준은 하천의 경우 BOD 농도 3mg/ℓ 이하, 호소의 경우는 COD 농도 4mg/ℓ 이하임.

출처: 환경부, 「전국수질측정자료」, 각 연도.



하천의 수질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천수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이다. ‘먹는물’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질기준을 설정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먹는물 종류에 따라 48~61개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다(WHO 90개, 미국 89개, 일본 51개, EU 45개).

먹는물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물 공급시설의 유형에 따라 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를 구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수도사업자 등)가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도사업자가 실시하는 법정 검사 외에 지역주민의 신청에 따라 각 가정에서 먹는 수도물에 대한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정수장이나 수도꼭지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2021년 둘 다 0.04%). 소규모 수도시설의 경우 1990년대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일반 상수도과 비교할 때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

〈표 Ⅸ-2〉 시설별 먹는물 수질 기준 초과율, 1995~2021

연도	정수장		수도꼭지		소규모 수도시설		약수터	
	검사수 (개소)	초과율 (%)	검사수 (개소)	초과율 (%)	검사수 (개소)	초과율 (%)	검사수 (개소)	초과율 (%)
1995	1,105	3.30	2,513	1.80	590	28.8	3,183	9.0
2000	1,141	0.60	3,611	0.40	590	4.6	7,064	13.0
2005	937	0.50	3,806	0.30	483	5.4	10,120	21.9
2010	969	0.10	4,695	0.02	1,256	1.8	8,688	22.0
2017	5,455	0.24	72,014	0.06	74,097	3.1	4,985	36.1
2018	5,440	0.07	73,001	0.08	71,900	3.6	5,795	34.7
2019	5,429	0.06	75,360	0.03	71,022	3.8	5,420	25.7
2020	5,381	0.00	76,938	0.21	67,900	3.2	5,124	27.7
2021	5,337	0.04	77,615	0.04	64,245	2.3	5,229	30.4

주: 1) 민관합동으로 실시하는 확인 검사 결과임.

2) 초과율은 해당 검사 대상 시설 중 환경부령에서 정한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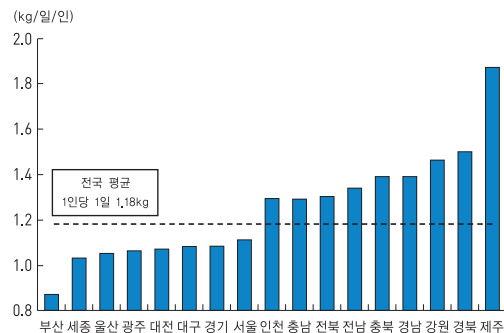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한편 약수터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30% 내외 수준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표 Ⅸ-2).

폐기물

폐기물은 크게 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된다.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생활계폐기물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생활계폐기물의 변화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대 들어 1kg 내외 수준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2013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2013년 0.94kg에서 2021년 1.18kg으로 증가). 지역별로 보면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로, 2021년에 전국 평균 대비 58.5% 더 많은 1.87kg을 배출하

〔그림 Ⅸ-6〕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2021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2.



였다. 이는 관광객이 배출한 폐기물이 많아서 발생한 현상이다. 한편, 1인당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적은 곳은 부산으로 전국 평균 대비 26.3% 더 적은 0.87kg을 배출하였다(그림 IX-6).

한편 생활계폐기물과 달리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부터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종의 유해 폐기물인 지정폐기물 발생량도 증가하는 양상이지만, 전체 폐기물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3.0%로 낮은 편이다(표 IX-3).

〈표 IX-3〉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201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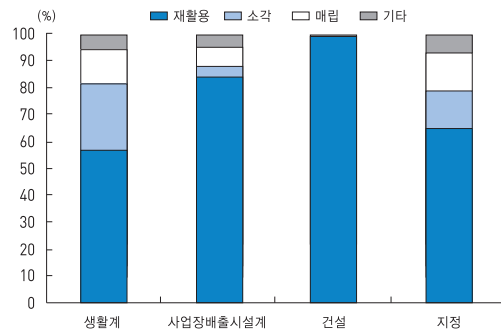
(만 톤/년)					
연도	생활계	사업장 배출시설계	건설	지정	총계
2015	1,871	5,669	7,236	489	15,265
2016	1,963	5,918	7,280	503	15,663
2017	1,952	6,018	7,164	544	15,678
2018	2,045	6,122	7,554	562	16,283
2019	2,116	7,396	8,070	568	18,149
2020	2,254	8,087	8,644	561	19,546
2021	2,270	8,490	8,381	598	19,738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21년 기준으로 생활계폐기물의 56.7%가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24.9%)되거나 매립(12.9%)되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재활용 비중이 80%를 넘으며, 건설폐기물은 대부분이 재활용(99.3%)된다. 지정

폐기물도 재활용(65.3%) 비중이 가장 높지만, 사업장폐기물에 비하면 소각(13.5%) 또는 매립(14.7%)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그림 IX-7).

〔그림 IX-7〕 폐기물의 처리방법별 구성 비율, 2021



주: 1) 생활계=가정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2) 2018년도까지는 '재활용'에 포함되어있던 소각을 제외한 중간처분량(기계적압축, 파쇄 등), 화학적고형화, 중화, 응집 등), 생물학적호기성 혐기성 등) 처분 등이 2019년도부터 '기타' 항목으로 분리됨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2.

생활계폐기물은 다양한 종류의 물질성상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재활용 측면에서 보면 종이류, 유리류, 폐합성수지류(플라스틱류), 금속류 등이 친숙한 물질이다. 종이류의 경우, 발생량은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고, 재활용률은 2018년 50.4%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유리류와 금속류는 2019년부터 발생량이 뚜렷하게 감소하였는데, 재활용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폐합성수지류(폐플라스틱류)의 발생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다른 품목의 발생량에 비해 폐합성수지류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표 IX-4).



〈표 IX-4〉 생활계폐기물 주요 품목별 발생량 및 재활용률, 2011~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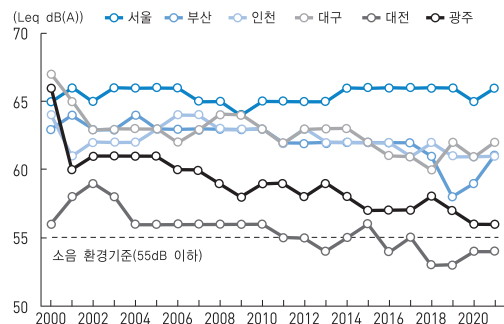
연도	종이류		유리류		폐합성수지류		금속류	
	발생량 (톤/일)	재활 용률 (%)	발생량 (톤/일)	재활 용률 (%)	발생량 (톤/일)	재활 용률 (%)	발생량 (톤/일)	재활 용률 (%)
2011	9,241	47.1	2,338	82.6	4,983	48.7	3,036	89.9
2012	9,733	46.8	2,310	81.9	5,654	50.0	3,308	90.8
2013	9,511	44.7	2,297	81.4	5,701	50.5	3,236	89.8
2014	9,896	48.4	2,328	78.1	6,037	51.0	3,073	87.9
2015	9,958	48.5	2,316	74.1	6,393	49.8	2,888	85.3
2016	10,234	48.0	2,224	77.6	7,272	53.6	2,921	86.3
2017	9,345	49.4	2,180	75.0	8,164	57.5	2,560	85.7
2018	9,466	50.4	2,046	66.4	8,848	56.7	2,562	83.1
2019	8,533	47.1	1,475	59.8	11,014	56.8	1,951	78.6
2020	8,906	47.7	1,500	58.6	12,052	55.8	1,683	74.5
2021	8,964	44.6	1,507	54.7	12,827	57.0	1,269	61.0

주: 1) 2019년부터 '플라스틱류'가 '폐합성수지류'로 범위 및 명칭이 변경됨.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2021년까지 처리된 환경분쟁 사건 중 86.9%가 소음·진동과 관련된 것이다(표 IX-5). 층간소음은 2002년부터 분쟁조정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는데, 층간소음보다는 공사장 소음·진

〈그림 IX-8〉 주요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밤 소음도, 2000~2021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환경소음

대기오염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대표적인 환경문제 중의 하나가 소음이다. 정부는 지역특성(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시간대(낮, 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환경기준을 설정해 놓았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 주요 도시 중 상당수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수준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현상은 밤 시간대에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그림 IX-8).

일상생활에서 소음 문제가 갖는 심각성은 환경 관련 민원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00년부터

〈표 IX-5〉 환경분쟁 원인별 분쟁조정 건수, 2000~2021

(건)

연도	소음 및 진동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일조	기타
2000-2009	2,895	201	74	70	61
2010	274	9	9	12	17
2011	280	19	4	6	12
2012	344	27	7	17	14
2013	287	26	8	19	17
2014	487	28	5	18	22
2015	406	15	5	13	24
2016	310	16	2	25	13
2017	334	3	1	18	13
2018	462	6	6	16	30
2019	432	13	0	40	27
2020	477	8	6	30	18
2021	499	9	1	28	39

주: 1) 중앙환경분쟁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 건수를 합산한 값임

2) 기타에는 토양오염, 추락위험, 기름유출, 생태계, 해양오염, 입지선정, 통풍방해·조망 등이 포함됨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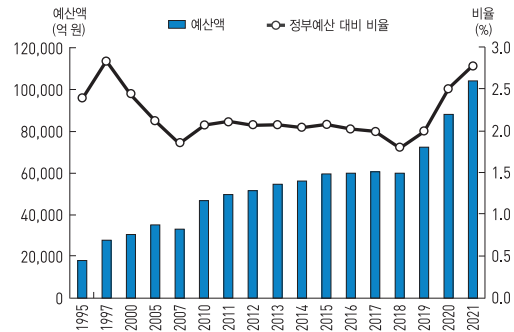
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공사장 소음·진동이 소음·진동 분쟁의 80.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관리

정부 정책에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는 지표 중의 하나가 환경 분야 예산의 규모와 비율이다.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확대 개편된 1995년에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을 합한 환경 분야 예산은 1조 7,801억 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2.39%를 차지했다. 정부 전체 예산 대비 환경 분야 예산의 비율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2.8%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하여 2007년에는 1.9%까지 떨어졌다. 동 비율은 2.0% 내외에서 변동하다가 2020년과 2021년의 대폭적인 예산 증가에 힘입어 2021년에 2.8%까지 올라갔다(그림 IX-9).

환경 분야 예산을 환경영역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물환경 영역이 전체 환경 분야 예산의 3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영역이 3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자원순환 영역과 자연환경 영역이 각각 11.5%와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영역의 예산 비중은 2019년 19.0%에서 2021년 32.6%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그림 IX-9] 환경분야 예산, 1995-2021



주: 1) 환경분야 예산에는 환경부 예산과 타 부처의 환경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을 환경보호지출이라고 한다. 환경보호지출은 국제표준에 따라 9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폐수, 폐기물, 대기 영역이며 이 세 영역이 전체의 약 80.0% 정도를 차지한다. 하수관거 설치,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이 포함된 폐수 영역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폐기물 수집과 운반 등이 포함된 폐기물 영역의 지출은 주로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포함된 대기 영역의 지출은 기업 부문이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

환경보호지출의 절대 규모는 계속 증가해 왔지만,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은 2009년 2.71%를 정점으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7년 2.11%를 저점으로 다시 상승 전환하여 2020년에는 2.38%를 기록하였다(표 IX-6).

〈표 IX-6〉 환경보호지출, 2004-2020

연도	환경보호 지출액 (10억 원)	GDP 대비 비율 (%)	영역별 구성비율(%)			
			대기	폐수	폐기물	기타
2004	22,372	2.46	15.5	38.6	26.4	19.5
2005	24,017	2.51	16.1	38.5	25.2	20.2
2006	26,463	2.63	17.4	38.4	24.7	19.6
2007	28,675	2.63	18.9	37.7	23.9	19.5
2008	30,188	2.62	19.0	37.4	24.3	19.3
2009	32,629	2.71	17.2	37.9	24.6	20.3
2010	32,880	2.49	17.4	36.8	25.8	20.0
2011	33,784	2.43	17.3	36.5	26.4	19.8
2012	34,547	2.40	18.0	38.8	23.0	20.2
2013	35,169	2.34	16.6	39.3	23.3	20.7
2014	35,586	2.28	17.2	39.9	22.6	20.3
2015	37,025	2.23	17.3	40.8	22.4	19.6
2016	39,012	2.24	17.6	41.1	22.4	19.0
2017	38,674	2.11	18.3	40.2	22.9	18.6
2018	40,966	2.16	19.3	39.8	22.9	18.0
2019	44,190	2.30	20.0	39.8	22.7	17.4
2020	46,230	2.38	22.6	38.8	20.8	17.7

주: 1) 기타에는 토양·수질, 소음·진동, 생태계·종다양성, 방사선, 연구개발, 기타 등 6개 영역이 포함됨.

2) 환경보호지출계정의 환경보호 국민지출(A표) 금액임(명목).

3) GDP(명목)는 2015년 기준년 개편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함.

출처: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결과보고서」,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환경 분야 예산이나 환경보호지출은 해당 국가의 자연환경이나 산업구조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직접 비교(예: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하기는 어렵다. 다만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기대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환경 분야 예산 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나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앞 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기업의 경영 및 투자에서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적·사회적 성과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환경규제 기준의 준수 여부는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규제 기준을 위반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만, 2021년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분야의 위반율이 크게 높아지고 나머지 분야의 위반율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표 IX-7).

〈표 IX-7〉 환경오염시설 단속 및 위반 현황, 2010-2021

연도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단속 시설 수 (개소)	위반율 (%)	단속 시설 수 (개소)	위반율 (%)	단속 시설 수 (개소)	위반율 (%)	단속 시설 수 (개소)	위반율 (%)
2010	37,188	4.8	40,785	5.0	16,926	3.3	6,924	2.6
2011	34,493	6.1	37,456	5.3	15,767	3.1	6,833	2.4
2012	34,507	7.0	39,662	5.7	16,268	2.7	7,546	2.6
2013	29,860	8.7	35,546	7.9	13,319	1.7	9,312	4.0
2014	29,742	9.0	34,343	7.9	11,802	2.2	9,605	3.3
2015	31,165	9.0	35,261	7.4	10,575	3.3	1,957	12.2
2016	36,325	8.8	36,806	7.3	12,711	2.5	2,146	15.5
2017	36,923	10.5	38,312	6.9	11,014	3.6	2,253	17.5
2018	31,063	14.8	33,436	10.4	8,511	4.8	2,673	15.2
2019	32,388	15.1	33,265	10.2	9,908	3.7	4,305	14.2
2020	24,982	16.1	26,139	11.8	6,644	4.8	2,076	16.9
2021	37,856	12.2	37,049	9.7	8,190	4.1	2,678	22.2

주: 1) 위반율은 단속시설 중 위반시설의 비율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환경만족도

환경상태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만큼 환경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대기, 하천(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환경 영역별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영역별로 만족도(거주지역의 환경 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의 수준이나 변화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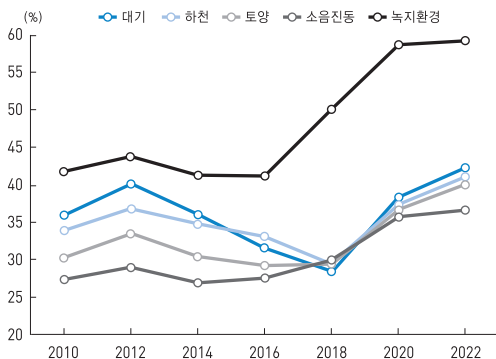
만족도 수준 측면에서는 녹지환경 영역에 대한 만족도(2022년 59.2%)가 다른 영역에 비해 월등히 높고 소음·진동 영역에 대한 만족도(2022년 36.6%)가 제일 낮다. 만족도의 변화 측면에서는 녹지환경과 소음진동 영역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대기, 하천(수질), 토양 영역이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5개 영역 모두 2018년 이후 뚜렷하

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IX-10).

2018년도부터 조사를 시작한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만족('매우 좋음'+ '약간 좋음') 비율이 2018년 35.8%, 2020년 45.7%, 2022년 49.7%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불만족('매우 나쁨'+ '약간 나쁨') 비율은 2018년 16.1%에서 2022년에 7.2%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대체로 농어촌(읍면부) 지역이 도시(동부) 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매우 좋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농어촌(읍면부) 지역이 도시(동부) 지역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만, 농어촌과 도시 간의 만족도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2018년에 농어촌과 도시 간의 만족('매우 좋음'+ '약간 좋음') 비율의 격차는 20.2%p였지만 2022년에 이 격차는 11.9%p로 줄어들었다(표 IX-8).

[그림 IX-10] 영역별 환경상태 만족도, 2010-2022



주: 1) 전국 만 13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2010년은 만 15세 이상).
2) 통계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해당 환경상태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표 IX-8> 전반적인 환경상태 만족도, 2018-2022

		(%)				
		매우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매우 나쁨
전국	2018	7.5	28.3	48.0	14.0	2.1
	2020	11.8	33.9	45.2	8.1	1.0
	2022	12.4	37.3	43.1	6.3	0.9
도시 (동부)	2018	5.2	27.1	50.5	15.1	2.2
	2020	9.4	33.3	47.7	8.6	1.0
	2022	10.6	37.0	44.8	6.7	0.9
농어촌 (읍면부)	2018	18.2	34.3	36.5	9.2	1.9
	2020	22.7	36.8	33.9	5.7	0.9
	2022	20.5	39.0	35.1	4.6	0.8

주: 1) 전국 만 13세 이상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현재 살고 있는 해당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참고문헌

OECD Environment Database, Greenhouse gas emissions.

심창섭, 문준기, 한지현, 서지현, 송영일, 홍제우, 유명수. 2022. “우리나라 지역별 기후변화 전망과 적응정책 자원의 시사점.” 「환경포럼」 제26권, 제3호.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변화와 재해취약성

강정은 (부산대학교)

- IPCC 6차 평가보고서(2023)에 따르면 전 지구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1.09℃ 상승했으며,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1.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대설, 폭염 발생이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인다.
-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실종)는 감소 경향이 뚜렷하였으나,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포함된 2018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폭염은 현재 자연재해 인명피해 1위 재난이다.
- 자연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매년 증감을 반복하나 대체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연평균 피해액이 1960년대 대비 2000년대에는 17.8배 증가하였다.
- 호우 재해취약성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등의 연안에 위치한 지자체에서 높게 나타나며, 폭염 재해취약성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도의 농어촌 지역과 대구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폭염, 홍수, 가뭄, 산사태, 태풍, 산불 등 다양한 자연재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아시아는 홍수와 폭염에 휩쓸리고, 유럽과 미국은 폭염과 가뭄이, 캐나다와 미국 하와이에서는 산불이 지속되는 등 기록적인 이상기후가 관찰되고 있다. UN은 2023년 7월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달

이라는 세계기상기구(WMO)의 분석을 토대로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는 끝나고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일 계속되는 기상이변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류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지만, 그 영향이 모든 국가, 지역, 사람에게 동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회복 능력과 자원이 제한적인 빈곤국가와 빈곤층을 비롯한 특정한 계층에게 더 크게 나타나며, 한 국가 내에서도 지리적 위치나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 대응 역량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이 글에서는 IPCC 6차 평가보고서(2023)의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자료를 소개하고, 자연재해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 현황을 분석하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살펴본다. 아울러 호우와 폭염에 초점을 맞추어 기후변화 재해취약성을 분석하고, 지역 간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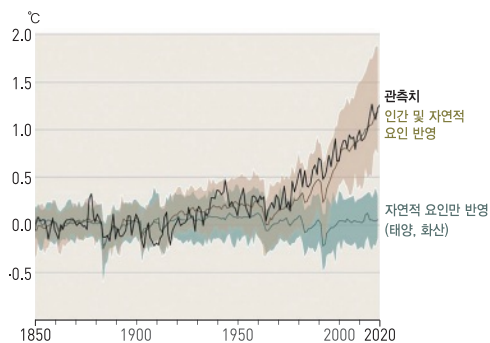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는 2023년 6월 제6차 평가보고서를 최종 승인하였다. 이번 6차 평가보고서(2023)에 따르면, 전 지구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X-11). 이는 2013년에 발표된 제5차 평가보고서의 0.78℃ 상승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기온상승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59 \pm 6.6 \text{ GtCO}_2\text{-eq}$ 로 2010년보다 약 12%($6.5 \text{ GtCO}_2\text{-eq}$), 1990년보다 54%($21 \text{ GtCO}_2\text{-eq}$)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X-11] 지구표면온도 변화 관측치, 1850-2020



출처: IPCC, 「기후변화 2021 과학적 근거,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2021.

IPCC는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노력을 기반으로 고탄소사회부터 저탄소사회까지 5개 시나리오를 만들고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하였다.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상승이 1.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IX-9).

〈표 IX-9〉 배출 시나리오별 1850-1900년 대비 평균 지구 표면온도

(℃)

시나리오	단기, 2021-2040		중기, 2041-2060		장기, 2081-2100	
	최적 추정치	범위	최적 추정치	범위	최적 추정치	범위
SSP1-1.9 (매우 낮은 온실가스 배출)	1.5	1.2~1.7	1.6	1.2~2.0	1.4	1.0~1.8
SSP1-2.6 (낮은 온실가스 배출)	1.5	1.2~1.8	1.7	1.3~2.2	1.8	1.3~2.4
SSP2-4.5 (중간 온실가스 배출)	1.5	1.2~1.8	2.0	1.6~2.5	2.7	2.1~3.5
SSP3-7.0 (높은 온실가스 배출)	1.5	1.2~1.8	2.1	1.7~2.6	3.6	2.8~4.6
SSP5-8.5 (매우 높은 온실가스 배출)	1.6	1.3~1.9	2.4	1.9~3.0	4.4	3.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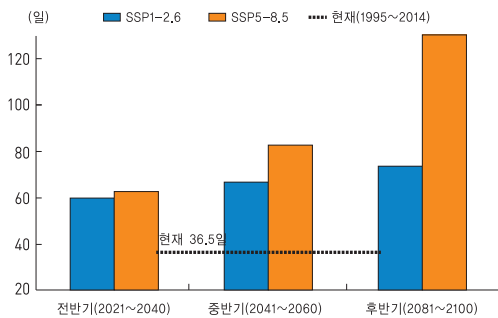
출처: IPCC, 「기후변화 2021 과학적 근거,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2021.

전 세계 193개국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상승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환경부, 2022). 목표 온도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 이상으로 온도가 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1.5℃ 상승은 극한고온, 호우 및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 현재처럼 기후변화가 진행된다면 1.5℃ 억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 개정판」에 따르면, 21세기 말(2081~2100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온실가스 배출정도에 따라 현재

(1995~2014년) 대비 2.6℃~7.0℃ 증가하고, 평균 강수량도 2~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극한기후 현상도 가속화되어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서는 먼 미래(2081~2100년) 온난일이 130.5일로 현재(36.5일) 대비 3.6배 급증하고, 극한 강수일수도 8.5일로 현재(6.6일) 대비 1.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IX-12). 이는 전 지구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그림 IX-12] 미래 기간별 한반도 온난일 전망



주: 1) SSP1-2.6은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이 최소화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가정하는 시나리오를 의미하며, SSP5-8.5는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점을 두어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가정하는 시나리오를 말함.

출처: 국립기상과학원,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 개정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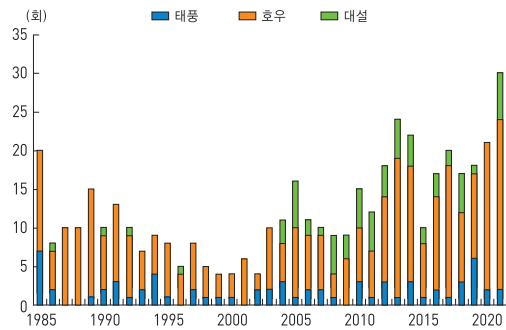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

자연재난은 태풍, 호우, 대설, 가뭄, 지진(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을 의미하며, 재해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뜻한다. 매년 발간되는 재해연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폭염의 경우 2018년부터 자연재난에 포함되어

자료가 집계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의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연재난 중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큰 호우, 태풍, 대설의 발생이 2000년대 이후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인다. 1990년대에는 연평균 7.9회이었던 재난 발생이 2000년대는 연평균 9건으로 1.1배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18.7회 발생하여 1990년대 대비 2.4배 증가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호우재난 22회, 대설재난 6회, 태풍재난 2회로 어느 해보다도 많은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난이 발생하였다(그림 IX-13).

[그림 IX-13]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난 발생횟수, 198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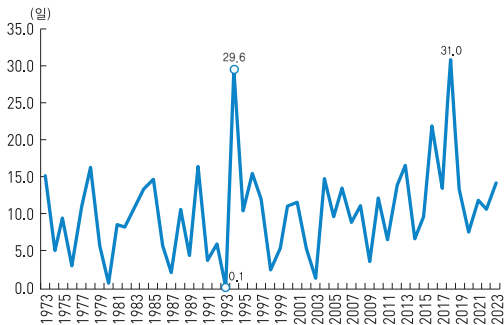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자연재해현황」, 각 연도.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를 의미한다. [그림 IX-14]는 1973년부터 2023년까지의 폭염일수를 보여준다. 전국의 폭염일수는 1993년에 0.1일로 최저를 기록했다가, 1994년 29.6일, 2018년 31.0일로 최고를 기록하



었다. 해마다 차이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IX-14] 폭염일수, 1973-2023



주: 1)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를 의미함.
출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폭염일수」, 각 연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사망, 실종자)는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그림 IX-15). 1998년 384명에 달하던 인명피해가 2000년대가 되면서 많이 감소하였다.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의 영향으로 각각 270명, 14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대체로 50명 내외의 피해를 나타냈다. 2010년대에도 인명피해 감소 경향이 이어졌다. 2013년 이후 꾸준히 한 자릿수를 기록하던 인명피해는 2018년 이후 42명~75명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2018년부터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2018년 전체 인명피해(사망, 실종자) 53명 중 48명이, 2019년은 48명 중 30명이, 2020년은 75명 중 29명이, 2021년은 42명 중 39명이 폭염으로 사망하여, 인명피해 1위 재난이 폭염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X-15]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1995-2021



주: 1) 인명피해는 사망 실종자를 의미함. 2018년부터 인명피해 중 폭염 내역 추가함.
2) 2018년 폭염 사망자 수는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감시체계」의 집계 결과임.
3) 2019년부터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자연열·일광에 의한 사망자를 폭염 사망자로 집계함.
출처: 행정안전부, 「자연재해현황」,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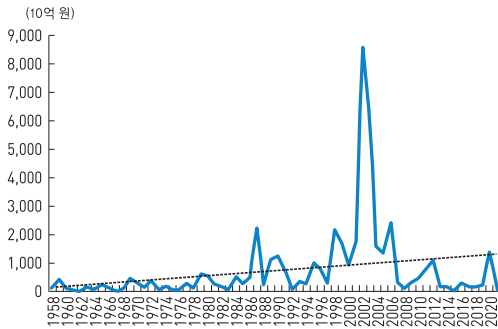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발생하는 재난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00년대의 재산피해 증가가 뚜렷해 연평균 약 2조 3,488억 원의 피해를 경험했다. 이는 1960년대의 연평균 재산피해 약 1,321억 원의 17.8배에 달한다. 2002년 자연재난 피해액은 약 8조 6,193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강원도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태풍 루사의 영향이 컸다(그림 IX-16).

자연재난 피해의 시도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12년간(2010~2021년)의 피해액은 총피해액, 인구피해밀도(인구 10만 명당 피해액), 면적피해밀도(1km²당 피해액)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표 IX-10).

최근 12년간 전라남도의 총피해액이 가장 컸으며,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가 그



[그림 IX-16]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1958-2021



주: 1) 자연재해 피해액은 2021년 환산가액임.
출처: 행정안전부, 「자연재해현황」, 각 연도.

뒤를 이었다. 인구피해밀도 또한 전라남도가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는데, 이는 큰 피해액에 비해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경기도는 큰 인구 규모로 인해 총피해액은 2위였지만, 인구피해밀도는 11위로 하락하였다. 반면, 인구수가 적은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의 경우, 총피해액 순위 대비 인구피해밀도 순위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면적피해밀도는 총피해액과 인구피해밀도 순위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부산광역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1km²당 연간 약 2,216.6만 원의 피해를 경험했다. 부산광역시는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난에 취약한 연안 지역의 개발밀도가 높아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부산광역시 외에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에서 높은 면적피해밀도를 보인다(표 IX-10).

〈표 IX-10〉 시도별 자연재난 피해액

(1,000원)

	2010년대 이후('10~'21) 연평균 피해액					
	총피해액	순위	인구 피해밀도 (인구 10만 명당 피해액)	순위	면적 피해밀도 (1km ² 당 피해액)	순위
서울특별시	5,262,921	12	51,399	16	8,696	3
부산광역시	17,063,108	9	488,456	10	22,166	1
대구광역시	154,421	17	6,306	17	175	17
인천광역시	3,317,668	14	116,383	14	3,177	12
광주광역시	5,200,084	13	357,172	12	10,376	2
대전광역시	1,272,920	15	85,755	15	2,358	15
울산광역시	8,408,022	11	722,282	9	7,925	4
세종특별자치시	329,380	16	162,339	13	708	16
경기도	56,754,745	2	462,762	11	5,578	6
강원도	39,681,269	5	2,573,776	2	2,360	14
충청북도	33,767,414	7	2,118,848	3	4,558	10
충청남도	33,322,584	8	1,599,837	6	3,969	11
전라북도	38,922,875	6	2,104,468	4	4,824	8
전라남도	76,368,120	1	4,037,760	1	6,212	5
경상북도	54,022,586	3	2,018,415	5	2,839	13
경상남도	49,334,412	4	1,480,373	8	4,682	9
제주도	9,627,660	10	1,592,828	7	5,206	7

주: 1) 해당 피해액은 2021년 환산가액 기준임.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상황통계」,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 각 연도.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많이 노출되어있는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IPCC(2001)는 취약성(vulnerability)을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



에 대해 한 지역이나 사회가 영향을 받는 정도 또는 대처하는 정도”라고 정의한다. 기후변화 취약성은 기후변화에 노출되는 정도(기후 노출도, Climate Exposure), 그 지역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정도(민감도, Sensitivity),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위험을 저감하는 능력(적응역량, Adaptive capacity)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IPCC, 2001).

이 글에서는 국토교통부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의 기후적 특성을 반영하는 기후노출 지표와 도시의 사회·경제·물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민감도 지표를 사용하여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법론과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호우(폭우)와 폭염에 대한 현시점(2021년 기준)의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호우 재해취약성의 기후노출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1일 최대 강수량, 일강수량 80mm 이상인 날 수를 사용하였으며,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과거 침수면적, 저지대 면적, 65세 이상 인구 비율, 5세 미만 인구 비율, 도로면적 비율, 노후주택 비율, 지하가구 비율을 활용하였다. 폭염 재해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후노출 지표로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 수, 일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 수를 사용하였으며, 민감도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 5세 미만 인구 비율, 도로면적, 노후주택 비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독거노인비율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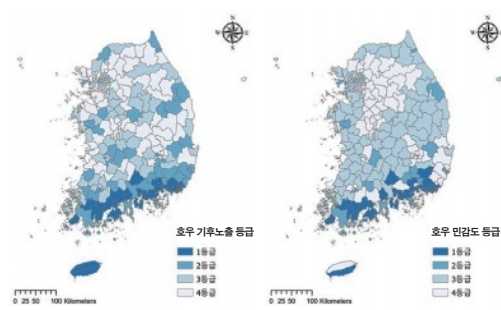
[그림 Ⅸ-17-1]는 시군구별 호우 기후노출과 민감도 등급이다. 기후노출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전역,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사천시, 남해군, 전라남도 보성군, 고흥군, 장성군 등 남해안에 인접한 지자체와 제주도로 나타났다. 민감도 측면에서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남해안에 접한 지자체가 높게 나타났다. 호우 재해취약성은 호우 기후노출과 민감도 등급을 종합한 결과로 [그림 Ⅸ-17-2]와 같이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수영구와 전라남도 연안의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등이 가장 취약한 1등급 지역으로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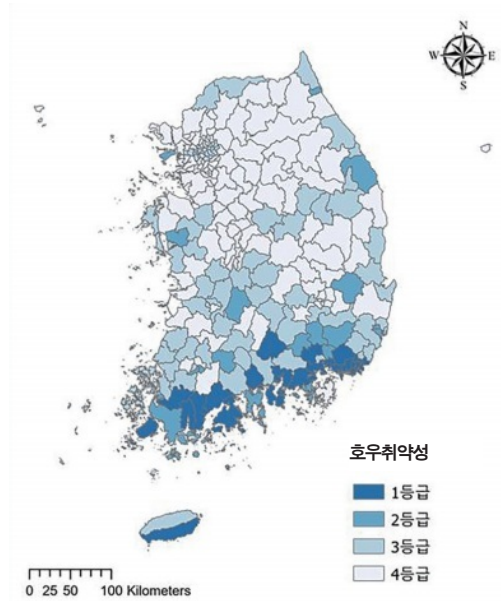
[그림 Ⅸ-18-1]는 시군구별 폭염 기후노출과 민감도 등급이다. 폭염 현상이 심각한 기후노출 1등급 지역은 전라북도, 경상남도 내륙지역, 전라남도 해안, 경상북도 등 남한의 중부 이남에 밀집하여 분포되어 있다. 폭염에 대한 민감도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일부 등 대도시 지역과 전라남북도 다수의 지자체가 1등급으로 나타났다. 폭염 기후노출과 민감도 등급을 종합한 폭염 재해취약성 결과는 [그림 Ⅸ-18-2]와 같다.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라북도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군, 합천군, 경상북도 의성군이 폭염에 가장 취약한 1등급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남구도 폭염 취약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북도의 많은 지역이 2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폭염에 대한 민감도는 높으

[그림 IX-17] 호우 재해취약성, 2021

1) 시군구별 호우 기후노출 및 민감도 등급



2) 시군구별 호우 재해취약성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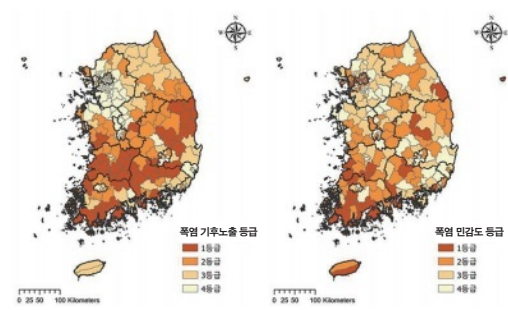
주 1) 재해 취약성 등급은 기후노출 및 민감도 등급을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상의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최종 등급을 부여함.

기 후 노 출	I	III	II	II	I
	II	III	III	II	II
	III	IV	III	III	II
	IV	IV	IV	III	III
↑	IV III II I				
→	도시 민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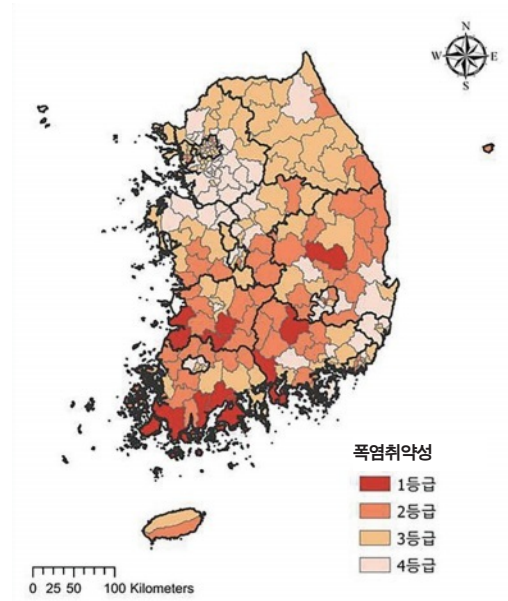
출처: 기상청, 「방재기상관측」, 원자료, 2021.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
국토교통부, 「지적통계」, 2021.

[그림 IX-18] 폭염 재해취약성, 2021

1) 시군구별 폭염 기후노출 및 민감도 등급



2) 시군구별 폭염 재해취약성 등급



주: 1) 재해 취약성 등급은 호우 재해취약성과 같은 방식을 활용
출처: 기상청, 「방재기상관측」, 원자료, 2021.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
국토교통부, 「지적통계」, 2021.
복지로, 「복지통계」, 2021.



나 기후노출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 취약성은 보통 수준인 3등급을 나타내고 있었다.

맺음말

IPCC 6차 평가보고서(2023)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지구의 기후는 ‘변화’하는 수준을 넘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로 호우, 태풍, 폭염, 대설 등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난 피해와 취약성 분석을 통해 살펴봤듯이 기후변화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사람, 모든 지역이 같은 수준의 피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공간적으로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등 전 지구적 논의를 기반으로 국가 및 지자체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2050년을 목표연도로 인간활동으

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최대한 줄이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의 수준으로 낮추는 탄소중립(넷 제로, net zero)을 실현하고자 에너지 전환,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 모빌리티 전환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적응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및 회복력을 높이는 활동을 포함하여 기후위기의 파급 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는 지역 간, 산업 간, 계층 간, 세대 간 불평등하게 발생할 수 있고, 기존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더 많이 노출되고, 피해를 더 크게 받는 취약한 계층, 취약한 지역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을 통해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국립기상과학원. 2021.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 개정판.”
- 국토교통부. 2018.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 환경부. 2022. “파리협정 함께 보기.”
- IPCC. 2001. “TAR Climate Change 2001: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 IPCC. 2021. “기후변화 2021 과학적 근거,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 IPCC. 2023. “Climate Change 2023: Synthesis Report.”

2023 Crime & Safety

Korean Social Trends 2023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X

범죄 · 안전

범죄 ·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300
고령자 안전사고 추이와 실태	정지범 울산과학기술원	311
학교폭력 실태 및 추이 분석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319

범죄·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최근 10년간 범죄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범죄 등 특별법범죄의 감소폭이 크다. 형법범죄는 범죄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강력범죄(흉악)의 증가 현상과 교통범죄 및 폭력범죄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진다.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범죄 등 5대 강력범죄 중에서는 성폭력범죄만이 증가 추세이다.
-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경험률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약 7.5배), 아동·청소년들이 강력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다.
- 최근 20년간 사고, 자살, 타살 등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모든 연령대의 외인 사망률이 감소하였고, 여성에 비하여 남성 외인 사망률의 감소폭이 크다. 다만, 2022년에는 남녀 모두 외인사망률이 소폭 증가하였다.
-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손실은 2006년 이후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2018~19년을 기점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에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 지난 20년간 화재 발생 건수와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건축물 등의 재산가치 증가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꾸준히 늘어났다. 다만 2022년에는 화재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모두 증가하였다.
-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였고,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2년에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감소했다.

-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안전은 크게 사회적 안전과 자연재난, 인적 사고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범죄와 테러, 자살 등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범죄발생 현황과 범죄피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물적 또는 인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으로 지진, 산사태, 황사, 태풍, 호우 및 폭설, 감염병 등이 속한다. 이 글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다루었다. 인적 사고는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결과로 시설물, 설비, 기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인간이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하는 사고, 화학물질이나 에너지에 의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고 등이 속한다. 이 글에서는 사고로 인한 사망, 화재, 교통사고를 주로 살펴보았다.



한편 범죄와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찰력과 소방력도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관과 소방관 인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확인하였다.

범죄(사회적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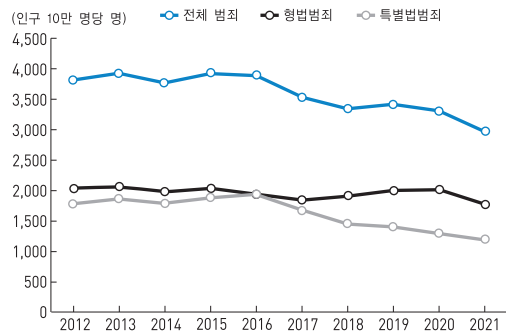
범죄발생

일반적으로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 건수로 나타낸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2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3,817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17년 3,524건으로 떨어졌다. 2021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2,966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전체 범죄의 감소 현상은 특별법범죄의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범죄는 형법범죄(살인, 강도, 폭행, 강간, 방화, 절도, 사기, 배임, 위조 등)와 특별법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구성된다. 형법범죄율은 2012년(인구 10만 명당 2,039건)부터 2020년(인구 10만 명당 2,015건)까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 2021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1,777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특별법범죄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2012년 인구 10만 명당 1,779건에서 2021년 1,189건으로 줄었

는데, 특히 2017년 이후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그 결과 2010년 이전에는 특별법범죄율이 형법범죄율보다 높았으나, 2011년부터는 형법범죄율이 특별법범죄율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형법과 특별법 범죄 간의 발생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다(그림 X-1).

[그림 X-1]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12-2021



주: 1) 범죄율=(해당 범죄 발생 건수÷주민등록인구)×100,000.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각 연도.

한편, 범죄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 전체 범죄발생 건수는 153만 1,705건으로 전년 대비 10.7% 감소하였다. 형법범죄는 91만 7,787건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하였고, 특별법범죄는 61만 3,918건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하였다.

범죄유형에 따라 범죄발생 건수는 상이한 추이를 나타낸다. 지난 10년간 강력범죄(흉악)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교통범죄와 폭력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재산범죄는 소폭의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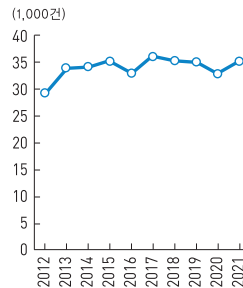


강력범죄(흉악)는 2012년 2만 8,906건에서 2021년 3만 5,126건으로 최근 10년간 21.5% 증가하였다. 반면, 교통범죄는 2012년 54만 4,201건에서 2016년 60만 970건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34만 477건으로 10년 전에 비하여 37.4% 줄었다. 폭력범죄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으로 2012년 25만 3,115건에서 2021년 18만 460건으로 28.7%가 줄었다. 재산범죄는 2013년 66만 7,214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다만 2021년에는 57만 5,332건으로 10년 전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발생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유일하게 강력범죄(흉악)만 7.1% 증가하였고, 폭력범죄는 14.2%, 재산범죄는 12.7%, 교통범죄는 9.8% 감소하였다(그림 X-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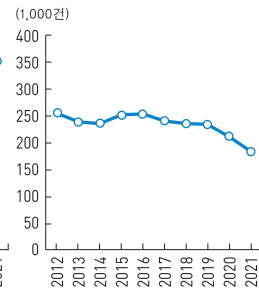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범죄 등 주요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 중에서 유일하게 성폭력범죄만이 10년 전에 비하여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살인범죄와 강도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폭행·상해범죄와 방화범죄 역시 완만한 등락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성폭력범죄는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2021년 3만 2,898건이 발생하여 2012년 2만 3,376건 대비 40.7% 증가하였다. 다만, 이러한 성폭력범죄 증가 현상은 실제 발생이 증가했다

[그림 X-2]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 건수, 201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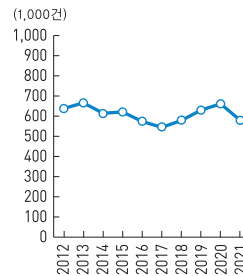
1) 강력범죄(흉악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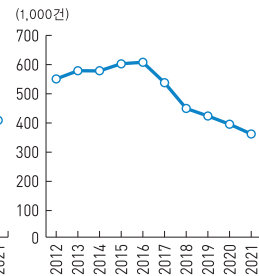
2) 폭력범죄



3) 재산범죄



4) 교통범죄



주: 1) 강력범죄(흉악)는 형법범죄 중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범죄 등을 포함.
2) 폭력범죄는 형법범죄 중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범죄 등을 포함.
3) 재산범죄는 형법범죄 중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죄 등을 포함.
4)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 위반범죄와 교통방해죄를 포함.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각 연도.

기보다는 신고율 증가에 따라 숨은 범죄가 감소한 결과로 판단된다.

2021년에도 전년 대비 성폭력범죄를 제외한 5개 강력범죄 모두 감소했는데, 그중에서도 강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26.2%), 폭행·상해(16.1%)와 방화(15.3%), 살인(14.0%)도 10% 이상 발생 건수가 줄었다. 반면 성폭력은 전년 대비 9.3% 증가하였다(표 X-1).



〈표 X-1〉 주요 강력범죄별 발생 건수, 2012~2021

연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
2012	1,022	2,626	23,376	1,882	230,635
2013	959	2,001	29,097	1,730	219,805
2014	938	1,618	29,863	1,707	214,605
2015	958	1,472	31,063	1,646	226,543
2016	948	1,181	29,357	1,477	228,710
2017	858	990	32,824	1,358	215,717
2018	849	841	32,104	1,478	208,935
2019	847	845	32,029	1,345	203,074
2020	805	692	30,105	1,210	180,604
2021	692	511	32,898	1,025	151,586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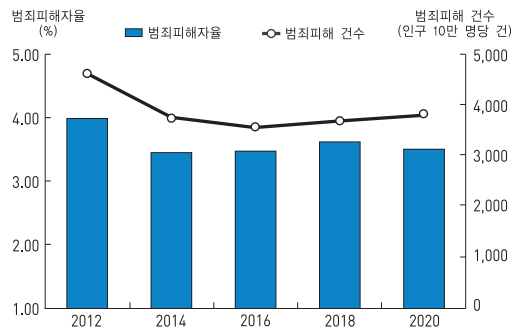
범죄피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09년부터 2년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직전 연도의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이 집계하는 공식 범죄통계로는 신고되지 않은 범죄, 즉 ‘숨은 범죄(hidden crimes)’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건수는 2012년 4,600건에서 2014년 3,743건, 2016년 3,556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 3,678건, 2020년 3,806건으로 증가하였다. 범죄피해자 비율 역시 유사한 추이를 보여서, 2012년 3.98%에서 2014년과 2016년에는 3.46%로 감소하였고, 그 후 소폭 증가하여 2018년 3.63%, 2020년 3.50%이다(그림 X-3).

폭행·상해, 성폭력, 강도 등과 같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범죄 피해는 201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8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899건의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16년 303건까지 줄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서 2020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765건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X-3〉 범죄피해 경험률, 2012~2020



주: 1) 범죄피해 건수 기준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력,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 대상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 건수임.

2) 범죄피해자 비율은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력,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 대상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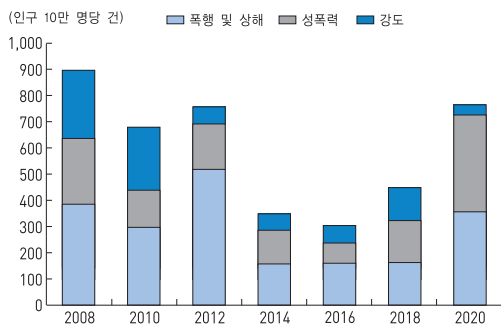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한편, 폭력범죄 유형별로 피해 경험률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2020년을 기준으로 폭행 및 상해 범죄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355건이며, 성폭력범죄는 369건, 강도범죄는 41건이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범죄 유형인 폭행 및 상해(협박, 괴롭힘 포함) 피해 경험률은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증가



하여 2008년과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 성폭력범죄 피해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0년에는 조사가 진행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강도범죄 피해 경험률은 2018년의 소폭 증가를 제외하면 감소 추세를 보였다(그림 X-4).

[그림 X-4]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률, 2008-2020



주: 1) 폭력범죄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폭행(협박 포함) 및 상해, 성폭력, 강도 등 개인 대상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 건수임.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주요 범죄·폭력 피해 유형은 아동학대와 흉악범죄 및 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라 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강력범죄 피해(경험)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12년 10만 명당 66.7건에서 2021년 502.2건으로 7.5배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강력범죄 피해율은 10만 명당 349.2명에서 263.7명으로 감소하였다(표 X-2).

〈표 X-2〉 아동·청소년 폭력피해, 2012-2021

연도	(인구 10만 명당 건/명)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강력범죄 피해율
2012	66.7	349.2
2013	72.5	279.7
2014	109.9	300.3
2015	131.7	315.6
2016	215.4	315.4
2017	265.0	334.3
2018	301.2	325.2
2019	380.3	318.6
2020	401.6	280.7
2021	502.2	263.7

주: 1)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10만 명당 아동학대 최종학대 판단건수 (2020 장래인구추계 기준), 기준연령은 만 0-17세임.

2) 아동청소년 강력범죄 피해율: 10만 명당 흉악범죄와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 수(주민등록인구 기준), 기준연령은 만 0-20세임.

출처: 통계청,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인적사고 및 자연재난

사고로 인한 사망(외인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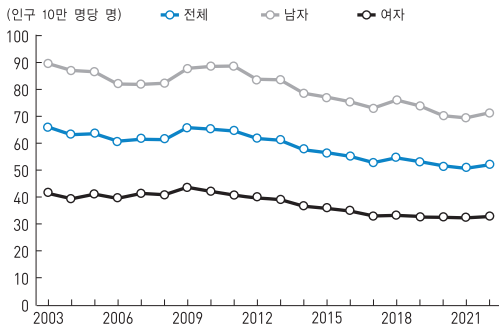
최근 20년간 사고, 자살, 타살 등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3년 인구 10만 명당 65.7명에서 2009년 65.8명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단, 2022년에는 전년도 50.9명보다 다소 증가하였는데,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이를 기점으로 증가 추이로 전환될 것인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성별로 살펴보더라도 지난 20년간 남성과 여성의 외인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2022년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남성 외인 사망률은 2003년 89.6명에서 2021년 69.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71.4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여성은 2003년 41.7명에서 2021년 32.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32.9명으로 증가하였다. 남성의 외인 사망률은 여성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보다 높고 사고위험이 높은 활동도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X-5).

[그림 X-5] 성별 외인 사망률, 200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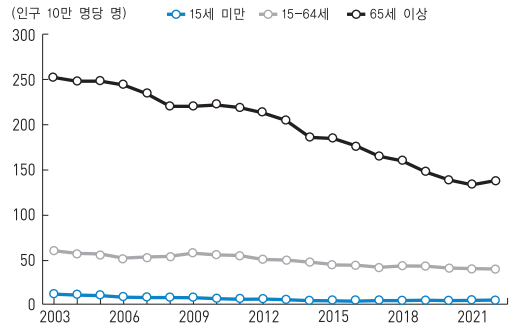


주: 1) 외인 사망률=(인체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연령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의 외인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의 외인 사망률은 다른 연령대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2003년에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252.5명이 인체 외부 요인으로 사망한 반면, 2022년에는 137.1명으로 45.7%나 감소하였다.

15세 미만 외인 사망률도 2022년 4.2명까지 떨어졌다. 15~64세의 외인 사망률도 완만한 감소 추세로 2022년 기준 38.8명이다(그림 X-6).

[그림 X-6] 연령별 외인 사망률, 200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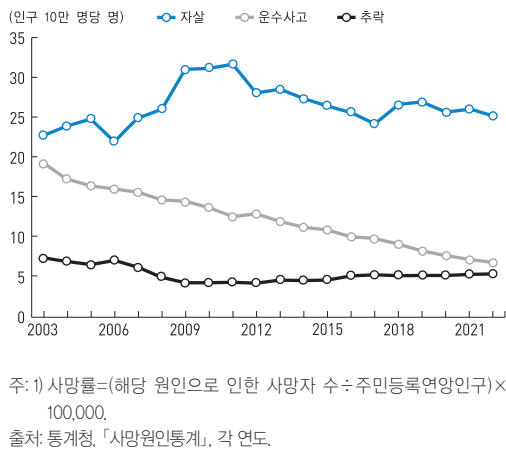


주: 1) 외인 사망률=(해당 연령집단 인체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해당 연령집단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지난 20년간 외인 사망의 주요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추락으로 이 중 1위는 자살이다. 자살률은 2003년 인구 10만 명당 22.7명에서 2011년 31.7명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대체로 감소하여 2022년 25.2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20년 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운수사고 사망률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03년 인구 10만 명당 19.2명에서 2022년 6.8명으로 줄었다. 추락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6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가 2013년 이후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2년을 기준으로 전년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전년 26.0명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고, 운수사고는 전년도 7.1명에서 6.8명으로 감소하였다. 추락사고는 인구 10만 명당 5.3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그림 X-7).

[그림 X-7] 주요 외인별 사망률, 2003-2022



자연재난

지난 20년간 자연재해는 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했다.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모두 한반도 내륙에 초대형 태풍이 지나갔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06년 에위니아 등 초대형 태풍은 수조 원의 재산피해와 대규모 인명손실을 초래하였다.

2006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손실은 크게 줄었는데, 이는 저류지 확대, 배수로 확보 및 산사태 방지 등 자연재해 대비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사망 및 실종자 수는 2017년 이후, 재산피해액은 2019년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21년에는 전년까지 소폭 증가하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다시 감소하였다. 사망 및 실종자 수는 2020년 75명에서 42명으로 감소하였고, 재산피해액 역시 2020년 1조 4,022억 원에서 661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X-8).

[그림 X-8]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2001-2021



주: 1) 재산피해액은 2021년 환산가격 기준임.
출처: 행정안전부, 「자연재해현황」, 각 연도.

화재

화재 발생 건수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1년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7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새로운 국가화재분류체계의 도입으로 임야 및 가스폭발 화재가 화재 통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매년 약 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다 2020년과 2021년 3만여 건대로 감소하



였으나, 2022년 다시 4만 건대로 증가하여 향후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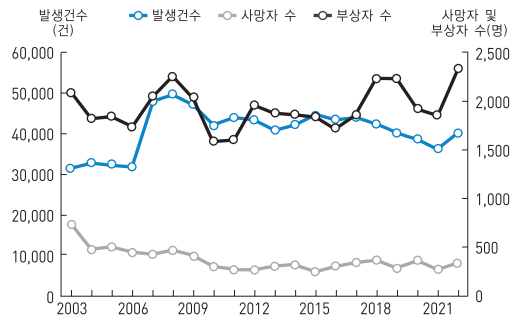
화재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적 재난이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높다. 지난 20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소폭의 등락이 있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화재 초기 진압률이 높고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와 이송 및 치료 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화재 사망자 수는 2010년 이후 약 200~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는 다소 큰 폭의 등락 현상을 나타냈다. 2008년을 정점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80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2,000명대로 증가하였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다시 크게 증가하여 최근 20년간 최고치를 나타냈다.

2022년에는 화재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모두 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의 증가 현상이 두드러진다. 화재 발생 건수(4만 113건)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고, 부상자 수(2,327명)는 25.5%, 사망자 수(341명)는 23.6% 증가하였다(그림 X-9).

한편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3년 1,520억 원이었던 재산 피해액은 2022년도 1조 2,100억 원으로 약 8배 증가하였다. 이는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되고 건축물의 재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2년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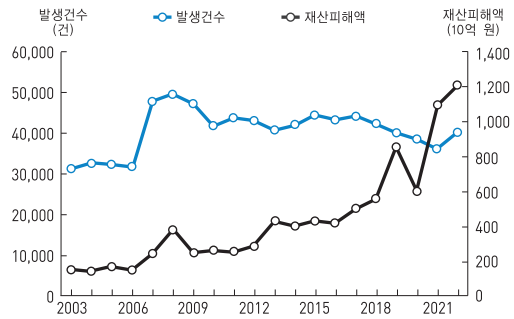
2,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1% 증가하였다(그림 X-10).

[그림 X-9]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2003~2022



출처: 소방청, 「화재통계연감」, 각 연도.

[그림 X-10] 화재 발생 건수와 재산 피해액, 2003~2022



출처: 소방청, 「화재통계연감」, 각 연도.

교통사고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였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경우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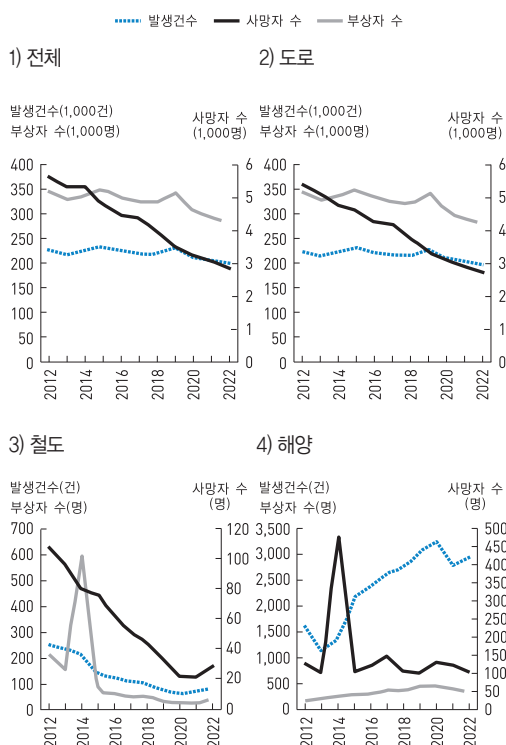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민식이법’ 추진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전체 교통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사고 발생 건수 역시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이다. 도로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가 2017년 소폭 증가했던 경향

과 대조적이다. 철도사고는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 모두 큰 폭으로 감소 하였으나 최근 소폭 증가했다. 해양사고의 경우 발생 건수는 최근 10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9만 9,804건으로 전년 20만 5,928건 대비 감소 하였는데 이는 도로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철도사고는 전년도 65건에서 79건으로 증가하였고 해양사고는 전년도 2,720건에서 2,863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도로사고, 해양사고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철도사고는 증가하였다(그림 X-11).

[그림 X-11]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2012-2022



주: 1) 전체 교통사고 통계의 경우 항공사고 통계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2023

경찰력 및 소방력

최근 15년 동안 경찰관과 소방관 정원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담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소방관 수는 2007년 3만 630명에서 2022년 6만 6,659명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1,589명에서 775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경찰관 수는 2007년 9만 6,324명에서 2022년 13만 1,004명으로 증가하였고,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505명에서 394명으로 감소하였다(표 X-3).



〈표 X-3〉 경찰관 및 소방관 수, 2007~2022

연도	경찰관		소방관	
	정원 수	1인당 담당 인구	정원 수	1인당 담당 인구
2007	96,324	505	30,630	1,589
2008	97,732	502	31,918	1,537
2009	99,554	495	33,992	1,451
2010	101,108	490	36,711	1,350
2011	101,239	493	37,826	1,320
2012	102,386	490	38,557	1,302
2013	105,357	479	39,519	1,276
2014	109,364	464	40,406	1,256
2015	113,077	451	42,634	1,197
2016	114,658	447	44,121	1,161
2017	116,584	441	48,042	1,069
2018	118,651	435	52,245	987
2019	122,913	421	56,647	914
2020	126,227	411	60,994	850
2021	128,985	401	64,768	799
2022	131,004	394	66,659	775

주: 1)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추계인구÷경찰관 정원 수.
 2)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추계인구÷소방관 정원 수.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
 소방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

까지는 다른 영역에 비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 조사에서는 2020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은 조사 시점의 안전사고 발생 여부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2014년의 경우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위험 등 전 영역에 걸쳐 안전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이후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표 X-4〉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10~2022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전반적인 사회안전	11.3	13.8	9.5	13.2	20.5	31.8	33.3
자연재해	18.7	23.2	15.1	20.7	22.7	37.0	39.4
교통사고	8.0	9.3	7.3	10.3	13.1	21.7	24.2
화재	16.6	17.7	14.2	19.1	21.0	24.2	25.2
범죄위험(치안)	8.2	9.1	8.9	9.2	17.2	26.8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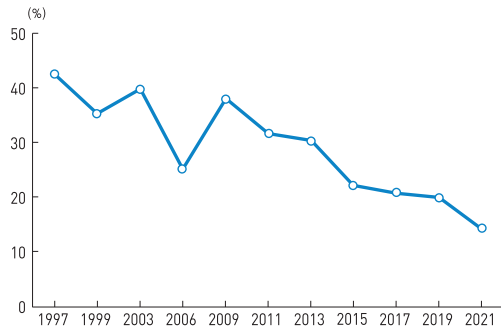
주: 1) 2010년은 만 15세 이상, 2012년은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해당 분야의 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안전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표 X-4〉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0년 11.3%에 불과했으나, 2014년 9.5%로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2022년 33.3%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영역 모두에서 나타난다. 다만 범죄위험(치안)으로 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10년~2020년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역시 감소하고 있다. [그림 X-12]에서 보면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997년에는 42.4%, 2009년에는 37.9%에 이르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에는 14.3%로 떨어졌다. 지난 20여 년간 소폭의 등락 현상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수준은 낮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2011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X-12]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1997-2021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4세 이상) 중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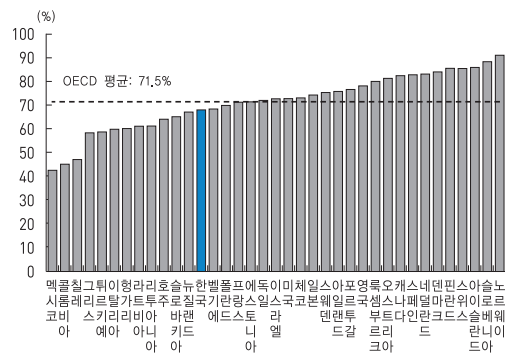
2) 2013년부터 표준화가중치가 적용된 수치임.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연도.

한국의 야간보행 안전도('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는 2018년에 68.4%로 OECD 평균인 71.5%와 큰 차이가 없다. 한국

은 노르웨이(91.2%), 슬로베니아(88.3%), 아이슬란드(86.2%), 스위스(85.9%) 등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고, 멕시코(42.5%), 칠레(47.0%), 이탈리아(59.9%), 헝가리(60.3%) 등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그림 X-13).

[그림 X-13] OECD 국가의 야간보행 안전도, 2018



주: 1) 야간보행안전도는 각 국 조사대상자(15세 이상) 중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OECD,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2020.



고령자 안전사고 추이와 실태

정지범 (울산과학기술원)

- 고령층 사망의 외인(사고사 등) 사망률은 전체 연령 대비 2배 이상이다.
- 고령층 사망의 외인 항목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살, 운수사고, 낙상이다.
- 고령층 안전사고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다.
- 고령자 교통사고 중에는 보행자 사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 고령자의 낙상사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미끄럼 사고로 인한 경우가 많다.
- 고령자들은 국가안보, 신종질병, 자연재해에 대하여 전체 집단에 비하여 높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준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과 함께 신체적 안전 상황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안전 상황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고령자 안전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 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고령자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사망의 외인, 교통사고, 낙상, 주관적 안심 수준 등 고령자 안전사고 주요 부문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또한 일부 가능한 항목은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 고령자 안전의 상대적 수준을 진단한다. 한편, 고령자의 기준은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 기준 연령인 65세로 하나 일부 국제 비교를 위해 55세 및 75세 등을 적용하기도 할 것이다.

고령자의 사고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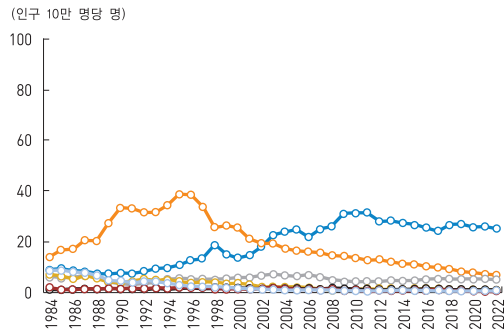
한국의 고령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기준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고령자 통계」, 2023), 더 이상 가족들의 부양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다. 전통적 가부장 문화가 약화되면서 고령자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도 낮아지고 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자살률(10만 명당 41.7명)이 OECD 평균(10만 명당 16.3명)의 3배에 가깝다는 것은 한국의 고령자들이 겪는 고충을 잘 보여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이다.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원인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이에 따르면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은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01-Y89, U12)” 항목에 포함된다. 결국 사망의 외인이란 운수사고, 낙상, 중독 등 각종 사고, 자살, 그리고 타살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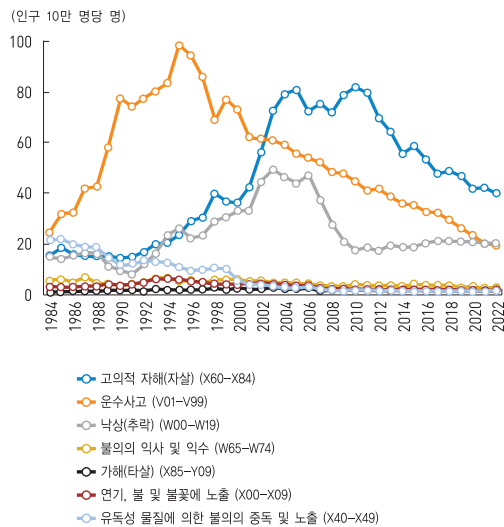


[그림 X-14] 주요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 1984-2022

1) 전체 인구



2) 65세 이상



주: 1) 1999년부터 사망원인이 부실하게 신고된 자료에 대해 외부 행정기관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였으므로 시계열 비교 시 유의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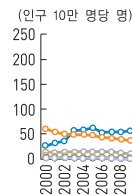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2022년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52.1명으로, 2021년 50.9명보다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2009년 65.8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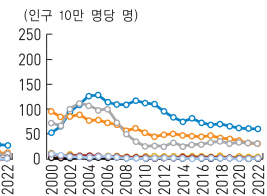
고 있다. 사망의 외인 항목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살, 운수사고, 낙상(추락)이며, 그 뒤를 이어 익사, 타살, 화재사, 중독 순으로 나타난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의 외인 사망률은 전체 인구 집단과 유사하게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체 연령 대비 2배 이상의 사망률을 보인다. 특히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20.0명)이 전체 인구(5.3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X-14).

[그림 X-15] 고령자 연령별 주요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 200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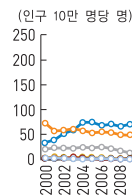
1) 65~6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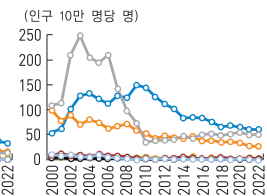
4) 80~8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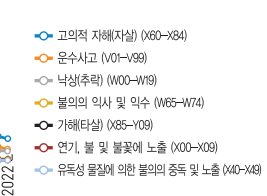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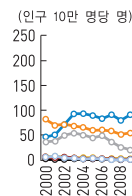
2) 70~74세



5) 85~89세



3) 75~79세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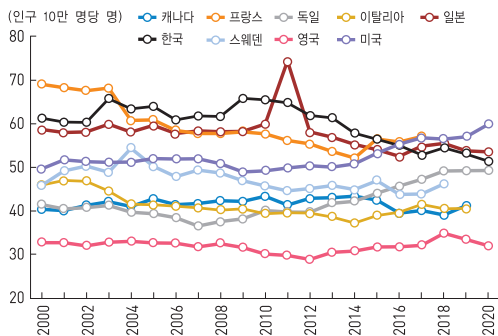
[그림 X-15]는 고령자 집단을 5세 단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전반적 추이는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령으로 인하여 외부 활동이 감소하는 대신 집안에서의 낙상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망의 외인 항목에 대하여 해외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는 [그림 X-16]과 같다. 인구 전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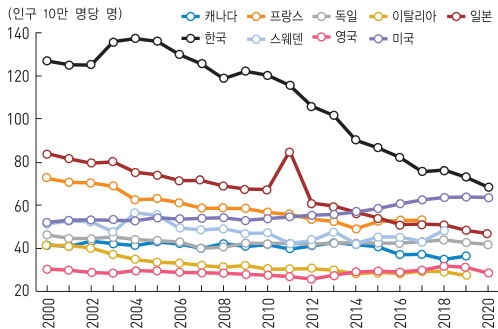
사망의 외인 사망률의 경우 2000년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고령층(55~74세)의 경우 2000년 이후 줄곧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X-16] 주요 국가의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 2000~2020

1) 전체 인구



2) 55~74세



주: 1) ICD-10 codes: V01-Y89 (minus X41-X42, X44-X45), U12.9

2) 국제 비교를 위하여 OECD 기준인구로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한 표준화 사망률로서 국내 통계청 공표 자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출처: WHO Mortality Database Portal, 202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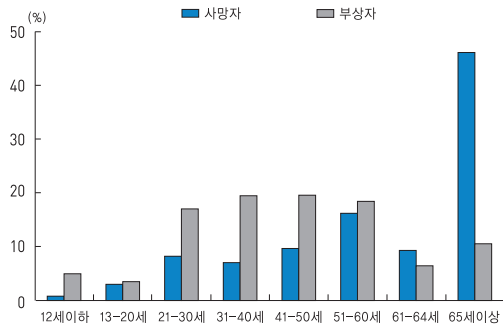
교통사고

사망의 외인(사고사 등)과 관련하여 자살을 제외하고 고령층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교통사고(운수사고)와 낙상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분석」은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경찰에서 접수·처리한 교통사고와 손해보험사 및 공제조합에서 처리한 교통사고를 통합한 자료를 제공한다(도로교통공단, 2023).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35명으로 최악이었던 1991년의 1만 3,429명에 비하여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연령별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1,25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상자 비율을 비교하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사고 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X-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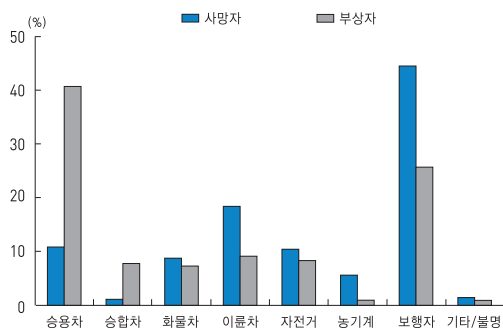
[그림 X-17] 연령별 교통사고 사상자 구성비, 2022



주: 1)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1999년까지는 72시간 내 사망)한 경우를 집계함.
2) 부상자는 연령 '불명'을 제외하고 구성비 산정함.
출처: 도로교통공단, 「2023년판(2022년 통계) 교통사고 통계분석」, 2023.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승차차종별 사망자를 살펴보면 보행자 사망이 가장 많고(44.4%), 뒤를 이어 이륜차(18.3%)와 승용차(10.7%) 사망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X-18).

[그림 X-18] 승차차종별 고령자 교통사고 사상자 구성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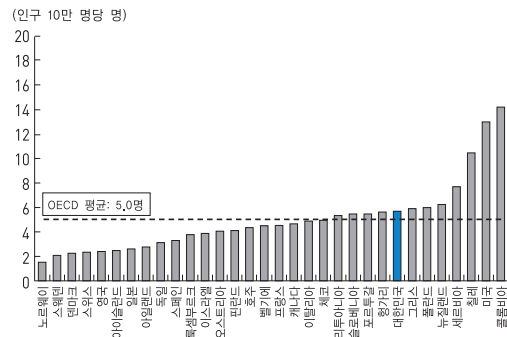
출처: 도로교통공단, 「2023년판(2022년 통계) 교통사고 통계분석」, 2023.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해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고령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2021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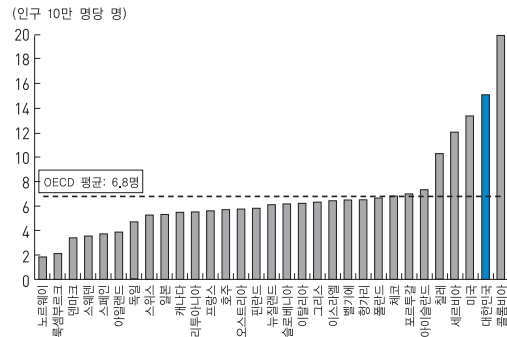
은 전체 연령 집단에서도 OECD 평균(5.0명)에 비해 우리나라(5.6명)가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집단에서 OECD 평균에(6.8명)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15.1명)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X-19).

[그림 X-19] OECD 주요국가의 교통사고 사망률, 2021

1) 전체 인구



2) 65세 이상 인구



출처: ITF Transport Statistics, *Casualties by age and road user*, 2023, 8.

낙상

고령자는 신체의 노화 및 각종 질병으로 인해 가벼운 사고에도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관련 위해품목 및 장소의 다각적 분석을 위하여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CISS)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고령자 낙상사고의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낙상으로 인한 사고는 가정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집계와 관리가 쉽지 않다. 한편, <표 X-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고령자 낙상사고는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2022년 기준 73.0%). 낙상사고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과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포함하는데, 고령자의 경우에는 특히 미끄럼 사고가 많은 편이다.

<표 X-5>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 장소별 접수 현황, 2019-2022

	(건)							
	2019		2020		2021		2022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주택	2,737	72.9	2,879	77.4	2,519	72.5	3,607	73.0
도로 및 인도	179	4.8	278	7.5	237	6.8	379	7.7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	175	4.7	112	3.0	136	3.9	160	3.2
여가, 문화 및 놀이시설	159	4.2	108	2.9	76	2.2	113	2.3
의료서비스 시설	78	2.1	88	2.4	77	2.2	112	2.3
교통시설	100	2.7	71	1.9	55	1.6	106	2.1
기타 ¹⁾	327	8.7	185	5.0	374	10.8	461	9.3
계	3,755	100.0	2,266	100.0	3,474	100.0	4,938	100.0

주: 1) 쇼핑시설, 숙박 및 음식점, 레저시설, 확인되지 않는 장소 등을 말함.
2) 이 데이터는 CISS에 접수된 위해정보 중 위해가 실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분석한 것으로 전수조사 통계가 아님.
출처: 한국소비자원, 「2022년 고령자 위해정보 동향 분석」, 2023.

<표 X-6>은 고령자 낙상사고 품목별 접수 현황이다. 천장재 및 바닥재 사고가 압도적으로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바닥재 사고이다. 바닥재 사고 중에서도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사고가 약 50%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결국 고령자 낙상사고의 많은 수가 가정 내 타일 바닥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X-6> 고령자 낙상사고 품목별 접수 현황, 2019-2022

	(건)			
	2019	2020	2021	2022
천장재 및 바닥재	1,851	2,155	1,952	2,644
침실가구	489	366	345	574
자전거	171	272	325	343
리프트 시설	122	107	120	267
샤리리 및 비계	61	62	127	167

출처: 한국소비자원, 「2022년 고령자 위해정보 동향 분석」, 2023.

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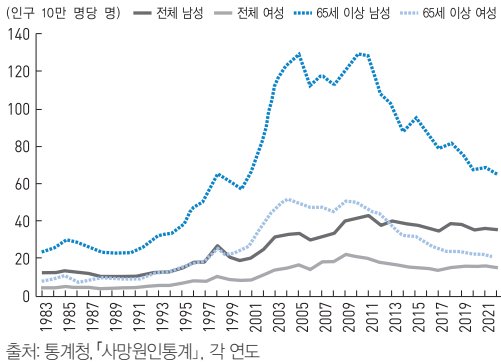
자살은 안전사고가 아니다. 그러나 WHO나 우리나라 「사망원인통계」에서는 자살이 사망의 외인에 포함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그림 X-2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살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은 편이며, 65세 이상 고령층 남성의 자살은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고령자 남성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5.0명으로 여성 고령자(20.4명)의 3배, 남성 전체(35.3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결국 우리나라 자살의 많은 부분이 고령 남성층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고령층의 자살률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X-20] 자살 사망률, 1983-2022



주관적 사회안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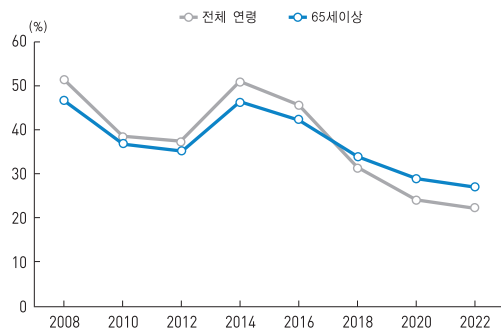
신체적, 물리적 안전과 함께 주관적, 심리적 안심 여부 역시 고령층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주관적, 심리적 안심에 대한 통계는 통계청 「사회조사」를 참조할 수 있다. 「사회조사」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와 부문별 안전인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전체 인구 집단의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와 65세 이상 고령자 집단의 인식도 변화 추이는 [그림 X-21]에 제시했다.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주요 사건, 사고에 따라 크게 출렁거려 왔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를 둘러싸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고, 이

후 점차 개선되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불안감이 다시 한번 크게 증폭되었다.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증폭되었으나 이는 국민들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들의 사회안전 인식은 전체 인구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2018년부터는 전체 인구 집단에 비하여 불안감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에 대한 응답도 전체 인구 집단과 고령자 집단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고령자 집단의 경우 국가안보, 신종질병, 자연재해에 대하여 전체 인구 집단에 비하여 높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이후 신종질병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한데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코로나19의 취약 집단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그림 X-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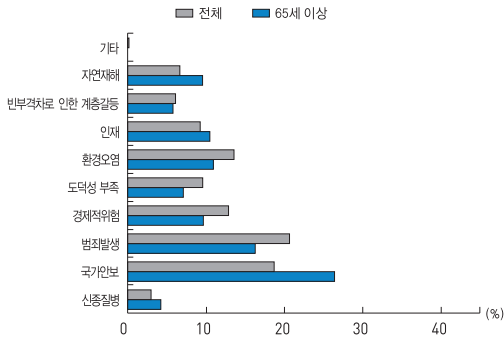
[그림 X-21] 전반적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0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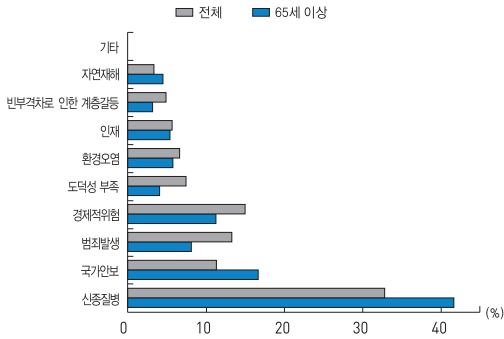


[그림 X-22]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에 대한 인식, 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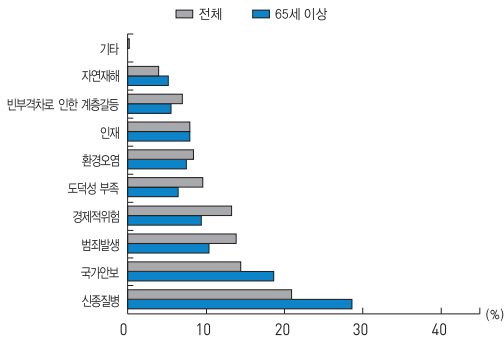
1) 2018년



2) 2020년



3) 2022년



주: 1) 만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에 대한 주된 응답 결과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맺음말

「사망원인통계」의 종단적 비교와 해외 국가들과의 횡단적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990년도 초반 약 1만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교통사고도 최근 3,000명 이내로 감소하였고 자살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사 항목 역시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고령자 안전 문제 역시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해외 국가들과 횡단적 비교 결과 여전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층 대상의 각종 맞춤 정책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 기조 역시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안전관리 계획인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총 4개의 전략 중 첫 번째로 ‘포용적 안전관리’를 제시하고, 이 전략에 따른 첫 번째 과제로서 ‘안전취약계층 보호·지원’을 강조하고 있다(중앙안전관리위원회, 2019). 이 정책에서는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확대, 노인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층 교통사고의 핵심이 보행자 문제임을 생각할 때 노인보호구역 설정은 적절한 방안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류준범·이세원·심태일·이송이, 2022).

한편 고령층 주요 안전사고 중 하나인 낙상은 일상생활 환경, 특히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여

문제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통계의 확립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정책 역시 대부분 낙상 예방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적절한 계획 및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낙상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일상생활에서 낙상사고의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환경(보행보조 장치,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바닥 및 조명 정비 등)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고령층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방안일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층의 안전은 바로 모든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 정책 개발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도로교통공단. 2022. 「2022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2021년 통계)」.
 류준범·이세원·심태일·이승이. 2022.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 운영방안 연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019.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2022 자살예방백서」.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2022. 「2021년 고령자 위해정보 동향 분석」.



학교폭력 실태 및 추이 분석

실태설 (이화여자대학교)

-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완화된 2021년부터 학교폭력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학교폭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피해율이 높다.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가장 빈번한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 금품갈취와 스톱킹 피해는 2013년에 비해 2022년에 크게 감소했지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피해는 그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경험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폭력은 수업 집중 저하, 학업성취도 저하, 학업 중단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UNESCO(2019)의 학교폭력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소외당했다고 느낀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고, 학교를 결석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 또한 학교폭력은 정신건강, 삶의 질뿐 아니라 약물중독과 같은 위험 행동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학교폭력실태조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폭력 실태를 조사한다.¹⁾ 2012년부터 매년 2회 실시된 「학교폭력실태조사」는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교폭력 가해경험 등과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서 축적된 정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매년 1학기에 전수조사로 실시되는 「학교폭력실태조사」 1차 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유형을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톱킹,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로 세분화하여 초등학교생(4, 5, 6학년), 중학생(1, 2, 3학년), 고등학생(1, 2, 3학년)에게 온라인 설문

1) 「학교폭력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12년부터 매해 2회씩 실시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2회 모두 전수조사였지만, 2018년부터 1차 조사는 전수조사, 2차 조사는 표본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서 설문을 실시한다(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고3을 제외하고 전수조사 1회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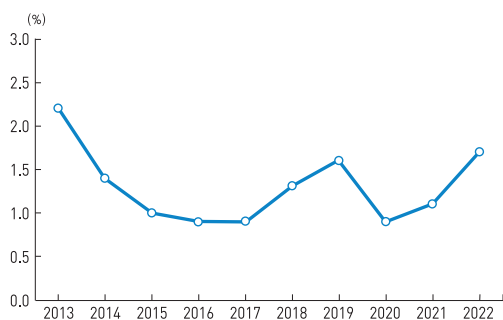


을 진행한다. 이 글은 지난 10년간 진행된 「학교 폭력실태조사」 1차 조사(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 실태 및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실태 및 추이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3년 2.2%부터 2017년 0.9%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피해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부터 다시 증가했다(그림 X-23).

[그림 X-23] 피해율, 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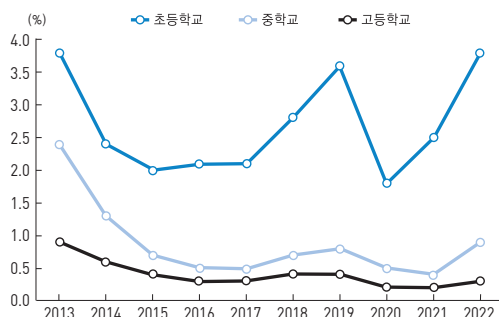


주: 1) 피해율=(피해응답 인원 수÷참여자 수)×100.
 2)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전수조사로 1회만 조사됨(고3 제외).
 2020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는 1차 조사 결과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학교폭력 피해율을 살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서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교급별 차이는 지난

10년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학교 폭력 피해율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과 2019년에 다시 증가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부터 증가하여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했다(그림 X-24).

[그림 X-24] 학교급별 피해율, 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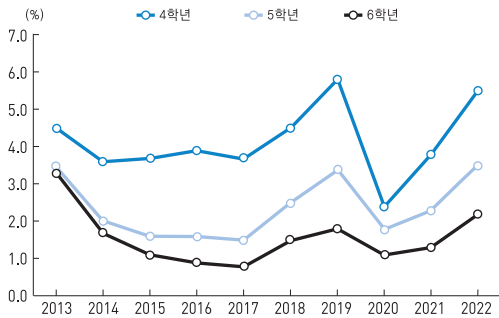
주: 1) 피해율=(피해응답 인원 수÷참여자 수)×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그림 X-24]에서 2018년과 2019년 초등학교의 피해율이 중·고등학교보다 상당히 가파르게 높아졌음이 확인된다. 이를 초등학교 학년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의 순서로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에서 학교폭력 피해율이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2022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에서 피해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



로 되돌아갔다(그림 X-25).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의 폭력 감지 민감도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높고, 특히 저학년일수록 친구 간의 단순 갈등 등과 같은 문제도 학교폭력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특성도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X-25] 초등학교 학년별 피해율, 2013-2022



주: 1) 피해율=(피해응답 인원 수÷참여자 수)×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지난 10년간 피해 유형별 응답 수를 분석한 결과,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집단따돌림의 경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두 번째로 많은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신체폭력, 사이버폭력이 따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완화된 2021년 이후 모든 학교폭력 피해 유형에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신체폭력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2013년과 2022년 두 시점을 통해 10년간 변화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토킹 피해는 2013년 19,090명에서 2022년 5,360명으로, 금품갈취가 2013년

20,822명에서 2022년 5,113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등은 지난 10년간 감소하기는 했으나 그 정도가 급격하지 않았다(표 X-7).

〈표 X-7〉 피해 유형별 응답 수, 2013-2022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금품 갈취	성폭력	강요
2013	70,489	34,414	19,090	24,248	18,861	20,822	6,818	12,582
2014	46,564	22,826	14,887	15,535	12,490	10,813	5,107	6,353
2015	32,502	16,917	12,370	11,632	8,992	6,986	4,106	4,145
2016	28,190	15,146	9,073	10,037	7,569	5,633	3,774	3,539
2017	27,826	13,547	10,079	9,600	7,983	5,222	4,160	3,290
2018	37,215	18,471	12,613	10,694	11,577	6,847	5,520	4,210
2019	33,333	21,759	8,167	8,037	8,321	5,875	3,622	4,640
2020	14,509	11,259	2,895	3,401	5,338	2,353	1,588	1,911
2021	25,508	8,878	3,795	7,597	6,016	3,523	2,502	3,307
2022	39,396	12,530	5,360	13,800	9,064	5,113	4,039	4,992

주: 1)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만 응답함(복수응답 가능).

2)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전수조사로 1회만 조사됨(고3 제외). 2020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는 1차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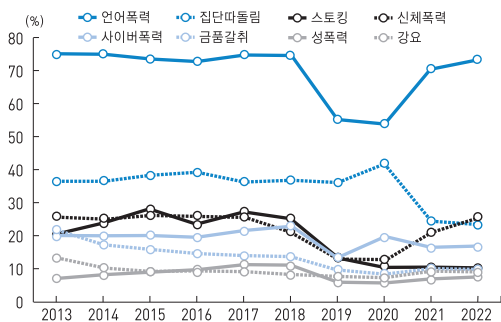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지난 10년간 피해 유형별 응답 수를 피해학생 수로 나눈 피해 유형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피해 학생 중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집단따돌림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두 번째로 빈번한 피해 유형이었으나 2022년에는 세 번째가 되었다. 신체폭력이 2022년에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이버폭력은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X-26).

한편,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데이터를 살펴 보면, 피해 유형 중 대부분의 유형에서 피해율이 감소했지만,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의 경우 오히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시기의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 상 상호작용의 증가로 인하여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X-26] 피해 유형별 응답률, 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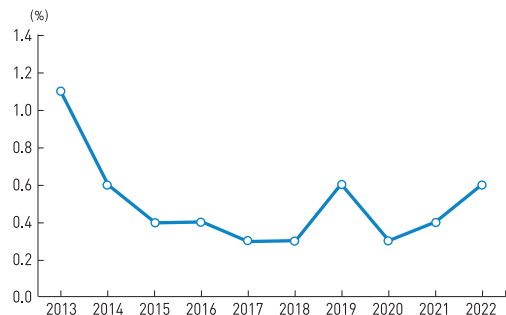
주: 1)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만 응답(복수응답 가능)함.
 2) 피해 유형별 응답률(응답자 수 기준) = (피해 유형별 응답 수 ÷ 피해학생 수) × 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학교폭력 가해 실태 및 추이

지난 10년간 학교폭력 가해 양상 또한 피해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율은

2013년 1.1%에서 2018년 0.3%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9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가해율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그림 X-27).

[그림 X-27] 가해율, 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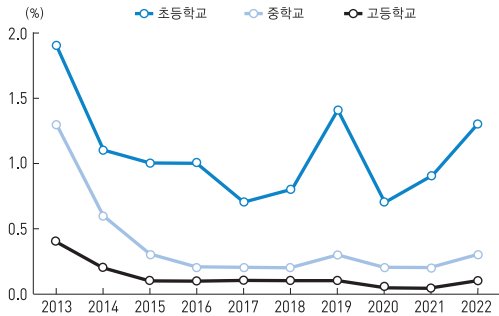
주: 1) 가해율 = (가해응답 인원 수 ÷ 참여자 수) × 100.
 2)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수조사로 1회만 조사됨(고3 제외).
 2020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는 1차 조사 결과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학교폭력 가해율을 살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서로 가해율이 높다. 이러한 학교급별 차이는 지난 10년간 동일하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학교폭력 가해율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모두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감소했다가 2021년부터 증가했다. 가해율의 감소와 증가 폭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가팔랐다(그림 X-28).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초등학교 학년별 가해율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의 순서로 가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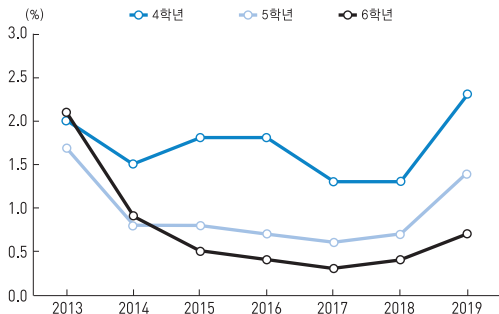
[그림 X-28] 학교급별 가해율, 2013-2022



주: 1) 가해율=(가해응답 인원 수÷참여자 수)×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에서 학교폭력 가해율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4학년 가해율이 2019년에 급격하게 증가했다(그림 X-29). 한편, 2022년 초등학교 학년별 가해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은 1.9%, 5학년은 1.3%, 6학년은 0.8%로 나타났다.

[그림 X-29] 초등학교 학년별 가해율, 2013-2019



주: 1) 가해율=(가해응답 인원 수÷참여자 수)×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표 X-8〉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의 가해 유형별 응답 수를 보여준다. 가해는 피해와 비교해 과소 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의 피해 응답 수보다 그 수치가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가해를 했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언어폭력에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이 보고된 가해 유형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집단따돌림, 코로나19 이후에는 신체폭력이다(표 X-8).

〈표 X-8〉 가해 유형별 응답 수, 2013-2022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금품 갈취	성폭력	강요	기타	(명)
2013	22,364	22,784	6,517	8,431	9,007	6,475	2,509	6,717	-	
2014	12,643	12,875	4,694	4,318	5,416	3,157	1,509	2,954	-	
2015	6,944	6,953	3,342	2,736	2,828	1,851	1,581	1,536	6,672	
2016	5,571	5,353	2,534	2,295	2,196	1,365	1,363	1,159	5,926	
2017	6,794	4,320	2,470	2,200	2,030	1,128	1,254	919	-	
2018	7,688	4,221	2,415	2,642	2,346	1,353	1,516	1,020	-	
2019	10,705	5,654	3,611	3,505	2,065	1,163	999	1,239	-	
2020	5,001	2,663	782	1,109	1,334	501	422	392	-	
2021	7,957	1,765	957	2,798	1,432	760	605	1,144	-	
2022	12,399	2,519	1,178	5,066	2,076	1,090	923	1,602	-	

주: 1) 학교폭력 가해를 경험한 학생들만 함(복수응답 가능).
2)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전수조사로 1회만 조사됨(고3 제외).
2020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는 1차 조사 결과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지난 10년간 가장 극적으로 감소한 가해유형은 집단따돌림으로 2013년에는 22,784명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2,519명으로 줄어들었다. 스토

킹, 금품 갈취, 강요도 2013년에 비해 2022년에 급격히 감소한 가해 유형들이다. 반면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은 다른 유형의 가해에 비해 그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간 가해 유형별 응답 수를 총 가해학생 수로 나눈 가해 유형별 응답률을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언어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집단따돌림은 감소하고 있다. 신체폭력은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X-30). 한편, 일부 학교폭력 유형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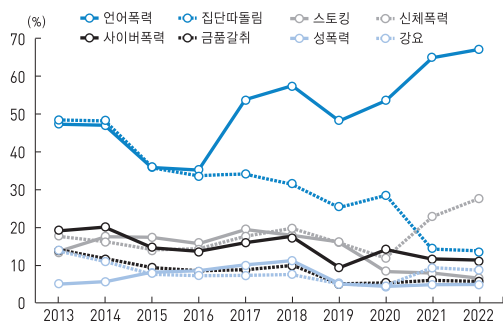
피해율과 가해율 변화추이에서 다른 양상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이를 살펴보면 피해 유형 중 언어폭력 피해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가해 유형에서는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이처럼 피해율과 가해율 변화 추이 차이가 확인된 학교폭력 유형 및 해당 시기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지난 10년간의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피해율과 가해율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완화된 이후에 학교폭력 피해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복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전면등교가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코로나19 시기에는 경험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어려움에 노출되고 있다. 학교폭력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을 위한 사회정서역량 강화,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및 가해 학생 선도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림 X-30] 가해 유형별 응답률, 2013-2022



주: 1) 학교폭력 가해를 경험한 학생들만 응답함(복수응답 가능).
 2) 가해 유형별 응답률(응답자 수 기준)=(가해 유형별 응답 수÷총 가해 학생 수)×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각 연도.

참고문헌

UNESCO, *Behind the numbers: Ending school violence and bullying*, 2019.

2023

Social Integration

Korean Social Trends 2023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XI 사회통합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하상응 서강대학교	326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	하상응 서강대학교	338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하상응 (서강대학교)

-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사회통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정치참여, 기부 및 봉사 활동, 민주주의 인식, 정치효능감, 기관 신뢰, 부패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
- 한국 시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비선거적 정치참여를 하고 있는데 2021년 대비 2022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 한국 시민들은 현재 민주주의 상황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정치효능감은 정권의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진보 성향의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과 같은 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시계열적 차이를 살펴보면, 통념과 달리 적어도 2019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패인식도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다. 다만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 경험에 있는 한국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사회통합은 서로 다른 이해를 갖는 사람들과 집단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전제 조건이다. 어느 한 집단이 효율성, 공정성, 합법성, 정당성 등을 이유로 다른 집단에게 더 많은 양보와 희생을 강요한다면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이는 곧 안정적인 사회의 유지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통합은 민주주의 이념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자유와 평등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국가

에 의해 동등한 개체로 취급되는 사람들과 집단들이 조화롭게 통합된 체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는 민주주의 쇠퇴와 권위주의로의 회귀 현상은 자유무역 확산에 따른 경제 불평등의 심화, 자유로운 이민에서 비롯된 국가 정체성의 약화, 그리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야기된 이념 및 정서 양극화와 맞물려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사회통합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민주주의 위기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혹은 이미 닦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통합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평등 혹은 불공정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회의가 커지게 될 것이고, 이는 권위주의적 성향을 갖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과 관리의 대상이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등에서 확인되는 여러 지표들을 활용하여 한국인들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잘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비선거적 정치참여,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민주주의 인식,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근간

을 이루는 기관들에 대한 신뢰, 부패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정치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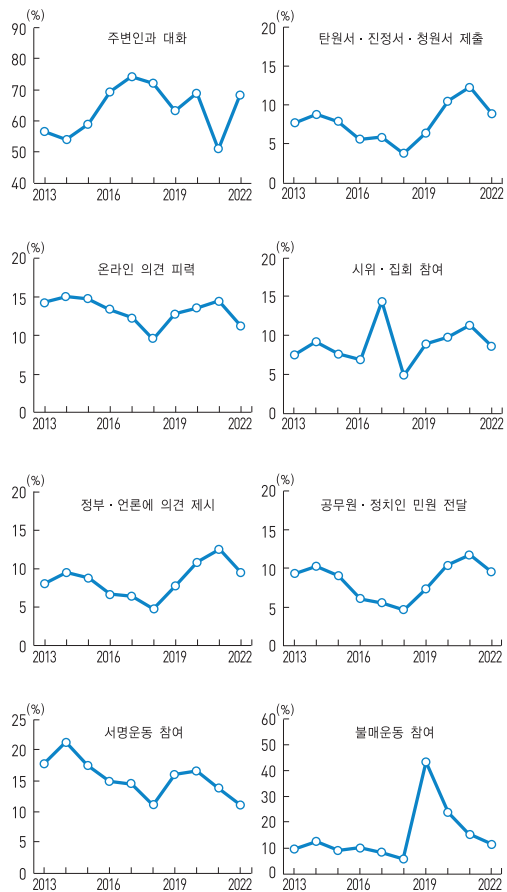
민주주의는 잠재적인 정치적 갈등을 제도 내에서 해결하는 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민주주의 과정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사회통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정치참여는 선거와 같은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선거참여)와 선거와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비선거적 정치참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거참여율은 2022년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¹⁾

비선거참여 동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선거를 통한 갈등해소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비선거참여는 헌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면 선거의 정당성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선거참여의 대표적인 예로는 시위 참여, 서명운동 참여, 공무원에 민원 전달, 언론에 의견 제시 등이 있다.

[그림 XI-1]은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비선

거적 정치참여의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관된 시계열적 추이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우선 주변 지인들과의 정치적 대화는 2021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2022년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감소한 대

[그림 XI-1] 비선거적 정치참여 유형별 참여율,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참여율은 조사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해당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추세를 드러내 보기 위해 y축의 배율을 조정하였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1) 2023년에는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선거참여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담긴 내용으로代之한다.

면접촉이 회복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온라인 의견 피력, 정부·언론에 의견 제시, 탄원·진정·청원 제출 및 공무원·정치인에 민원 전달 등 온라인으로 가능한 활동들은 최근 모두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시위·집회 참여는 2016~2017년 촛불집회 국면에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다가 다시 2021년까지 증가하였다. 2022년에 이 패턴이 꺾인다. 2019년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준 변화도 발견되는데 불매운동 참여율은 그 해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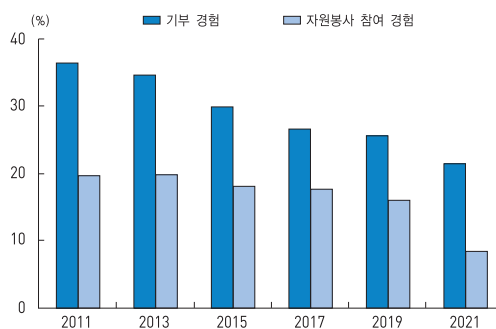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보아 202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시위·집회 참여, 탄원·진정·청원 제출, 공무원·정치인에 민원 전달, 온라인 의견 피력, 정부·언론에 의견 제시 등이 2022년에 모두 감소하였다. 대신 2022년에 주변인과의 정치적 대화는 늘었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기부와 자원봉사

한편 시민들의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XI-2]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기부를 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2011년 약 35%에서 2021년 약 20%로 줄어드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원봉사 참여 경험도 2011년 약 20%에서 2021년 1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2021년이 코

로나19가 확산되었던 시기였음을 고려해도 자원봉사 참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림 XI-2]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 경험, 2011~2021



주: 1) 만 13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과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민주주의 인식

정치참여와는 별개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 사회통합의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우선 시민들이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정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최근 관심의 대상인 이념 양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설문 응답자의 정치 이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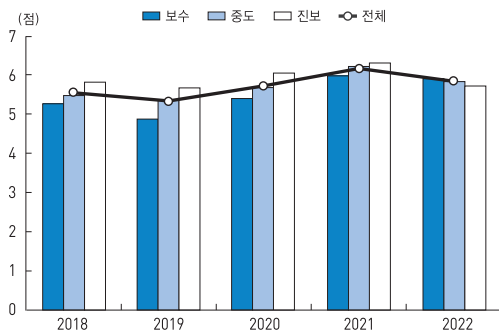
따라 나누어 보도록 한다.²⁾

[그림 XI-3]은 전체 응답자들과 정치이념(보수, 중도, 진보) 집단별 한국 민주주의 만족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비교적 짧은 시계열이긴 하지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조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 꺾인다. 둘째, 적어도 2021년까지는 조사 연도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보수 성향의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낮고, 진보 성향의 응답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아마도 조사가 수행된 시기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띠었

던 문재인 정부 시기라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뀐다. 민주주의 수준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시민들의 정치이념의 함수일 수 있음을 추정케 한다.

[그림 XI-4]는 5년 후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XI-3]에서 확인한 내용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evaluation)라고 한다면, [그림 XI-4]에서 관찰되는 정보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적 평가(prospective evaluation)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응답 패턴은 [그림 XI-3]에서 본 패턴과 유사하다. 2018년 대비 2021년에 응답자들은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림 XI-3] 민주주의의 만족도, 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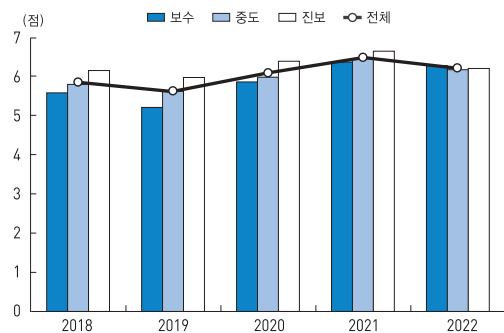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정치이념은 5점 척도(매우 보수, 다소 보수, 중도, 다소 진보, 매우 진보)로 물어본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림 XI-4] 민주주의의 전망, 2018-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5년 후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나빠질 것이다(0점)'부터 '매우 좋아질 것이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리고 정치 이념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보수 성향의 응답자보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민주주의의 수준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2022년에 바뀌어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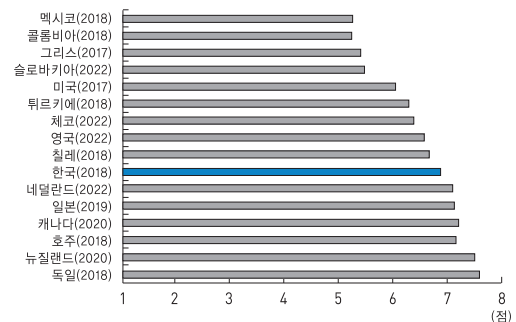
정권의 이념에 따라 응답 패턴이 달라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와 전망적 평가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국가 간 비교를 해보았다. [그림 XI-5]는 「세계가치관조사」의 7번째 웨이브(2017-2022)에 담긴 민주주의 운영에 대한 인식 문항을 사용한 결과이다. 조사에 참여한 국가들 중에서 OECD 회원국들만 활용하였다.

결과를 보면, 우선 독일,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와 같은 전형적인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응답자들이 자국의 민주주의 운영에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응답자의 민주주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이들 국가보다 낮지만 영국,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전통이 오래된 국가보다는 높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와 미국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라는 사건이 자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에 대한 회의감을 증폭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언론에서 끊임없이 보도되는 정치권에서의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응답자들의 민주주의 인식은 건전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시계열

적으로 볼 때 조금씩 민주주의 현황에 대한 만족도와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수행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아도 한국 응답자들의 자국의 민주주의 평가는 긍정적인 편에 속한다. 다만 응답자의 정치 이념과 정권의 이념 지향 간의 일치 여부에 따라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진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한다. 이 정도가 심해지면 사회통합의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XI-5] OECD 주요국가의 민주주의 평가, 2017-2022



주: 1) 세계가치관 조사에 참여한 국가들 중에서 OECD 회원국으로만 한정하였음.

2) 조사시점은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2017-2022년 사이에 완료되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2018년에 조사가 시행됨.

3) 통계치는 “귀하는 현재 귀하의 나라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에 대해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1점)”부터 “매우 민주적이다(10점)”까지 10점 척도로 응답한 각 나라의 평균값임.

출처: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World Values Survey Wave 7, 2017-2022, 2022.

정치효능감

다음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로 건전하게 운영되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의 척도로

정치효능감을 살펴본다. 정치효능감은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정치현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심리학적 개념이다. 학술적으로 시민들의 정치과정에서의 영향력 차원은 외적효능감(external efficacy), 시민들의 정치 이해력은 내적효능감(internal efficacy)으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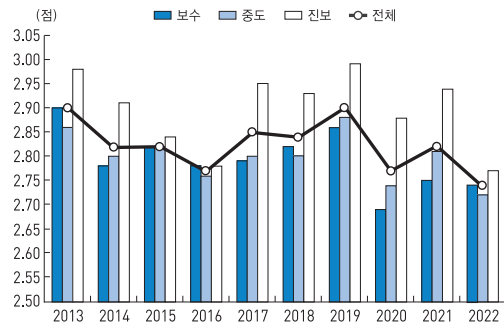
정치효능감은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제한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 맥락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법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정치효능감이 높은 경우는 시민들과 대표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믿는 상황을 의미한다. 반대로 정치효능감이 낮은 경우는 시민들과 대표 간의 연결 고리에 문제가 생겨서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경우 최근 적지 않은 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기성 정치권에 불만을 품는 시민들이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환멸을 느껴, 권위주의적 성향을 품은 포퓰리스트 정치인에게 지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

[그림 XI-6]은 정치효능감의 시계열 추이를 정치이념 집단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세 가지 정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치효능감의 시계열 추이에는 뚜렷한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치효능감이 살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다시 하강 국면을 겪는다.

둘째, 정치이념 성향 기준으로 정치효능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편차는 있지만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보수 성향의 응답자보다 일관되게 높은 정치효능감을 보이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 현상은 진보정권으로 인식되는 문재인 정부(2017-2021) 기간뿐 아니라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2013-2016)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보 성향 응답자의 정치효능감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나, 보수 성향 응답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XI-6] 정치효능감,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a)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b)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는 관심이 없다", c)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d)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현안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는 네 가지 진술들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a), b), d) 진술들에 대한 응답은 역코딩하여 평균값을 구해 측정하였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셋째, 보수 성향 응답자와 진보 성향 응답자 간 정치효능감의 격차가 최근에 크게 벌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진보 성향 응답자의 정치효능감은 크게 올랐던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의 정치효능감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2020년 들어와서 보수 성향 응답자의 정치효능감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 시기 대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보-보수 성향 응답자 간 정치효능감의 격차가 현격하게 커진다. 2021년 보수 성향 응답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공유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효능감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념 갈등이 민주주의 제도 불신으로 이어질 여지가 생긴다. 다만 진보-보수 간 정치효능감의 격차는 2022년 정권이 교체된 후 줄어든다.

기관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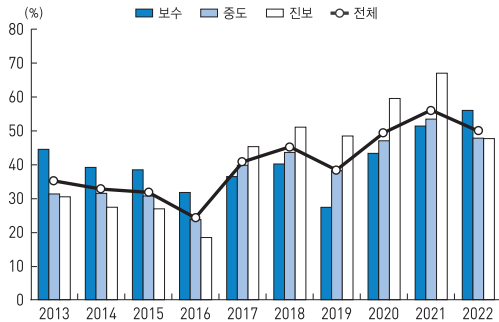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정치효능감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기관에 대한 신뢰의 함수이기도 하다. 정치효능감이 높은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사회통합이 원활하게 되듯이, 민주주의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높아도 유사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여기서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기관들로 중앙정부(행정부), 국회(입법부), 법원(사법부), 언론

(TV/방송사 및 신문사)을 선정하여 신뢰도의 시계열적 추이와 정치이념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다.

[그림 XI-7]은 중앙정부(행정부)에 대한 설문 조사 응답자들의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낮아지다가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진 2016년 가장 낮은 상태에 이른다. 그리고 2017년 새 대통령이 들어오자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만 2019년 검찰 개혁을 둘러싼 잡음이 생겼을 때 다시 낮아지다가 2020년부터 상승세를 타는 추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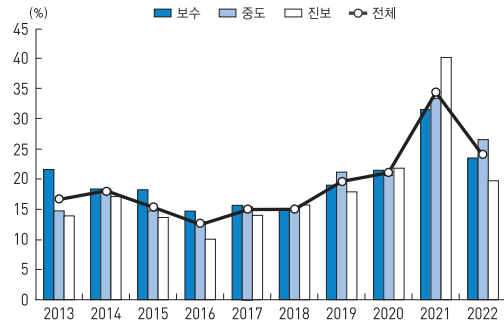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은 정권의 이념 성향과 유권자의 이념 성향 간의 상관관계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진보 성향의 응답자보다 중앙정부를 신뢰하는 비율이 높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정확히 반대의 패턴이 나타난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따라 다시 진보 성향 응답자의 신뢰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보수 성향 응답자의 중앙정부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여기서 직관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왜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였냐는 점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설문 응답에 반영되었다는 하나의 가설이 가능하다. 이 결과가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면 최근 이념 집단 간의 갈등 양상은 언론과 정치인에 의해 인위적으로 과장된 것이 아닌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

[그림 XI-7]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믿는다' 혹은 '약간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8] 국회에 대한 신뢰도,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믿는다' 혹은 '약간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국회(입법부)에 대한 신뢰의 시계열적 변화도 중앙정부 신뢰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림 XI-8]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행정부와 사법부에 비해 입법부인 국회에 대한 신뢰의 수준은 절대적으로 낮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경우 40% 이상의 응답자들이 신뢰한다고 답하는 반면, 입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 이하인 경우도 드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대 국회 기간(2013-2016)에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20대 국회(2016-2020)에서는 알려진 바와 다르게 국회 신뢰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1대 국회(2020-2022)에서 달라진다. 2021년 전체적으로 국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2년 다시 낮아져 2020년 수준으로 내려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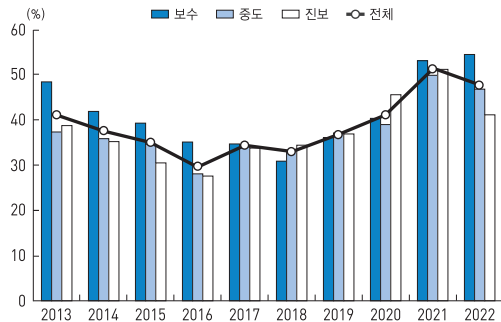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진보 성향 응답자의 신뢰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2021년에 큰 폭으로 국회 신뢰가 높아진 현상은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림 XI-9]는 법원(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전체적인 추세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신뢰의 경우와 유사하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법원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낮아졌는데, 문재인 정부 때엔 오히려 법원에 대한 신뢰가 꾸준히 높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에는 보수 성향 응답자가 진보 성향 응답자에 비해 법원을 신뢰하는 정도가 더 강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법원 신뢰에 이념 차이가 보이지 않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때엔 보수 성향 응답자와 진보 성향 응답자 간의 법원에 대한 신뢰 차이가



[그림 XI-9] 법원에 대한 신뢰도, 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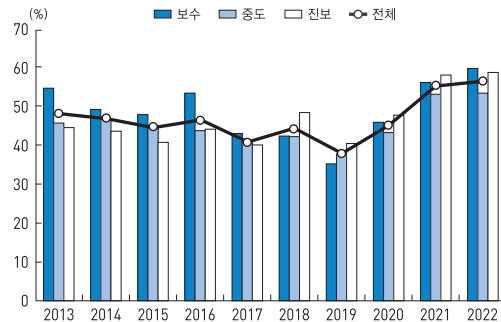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믿는다' 혹은 '약간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10] TV 방송사에 대한 신뢰도,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믿는다' 혹은 '약간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두드러진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높은 지지를 보이는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는 2021년 대비 낮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사법부에 대한 태도도 시민들의 정치 이념에 영향을 받는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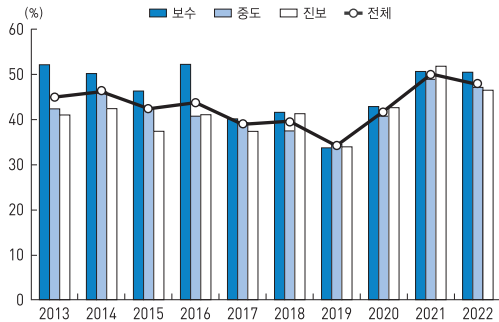
[그림 XI-10]에 제시된 언론(TV 방송사)에 대한 신뢰의 경우도 앞에서 확인한 패턴과 유사하다. 박근혜 정부 때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언론에 보이는 신뢰도가 진보 성향 응답자의 신뢰도보다 다소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신뢰도는 낮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듬해인 2018년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다른 이념 성향의 응답자에 비해 언론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를 보인다. 그러다가 2019년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된 시점에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고, 그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탄다.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2022년 현재 TV 방송사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집단이 중도 성향의 응답자라는 점이다. 언론 환경이 변화하여 진보 혹은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각자 자신의 이념 성향과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TV 방송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TV 방송사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집단이 중도 성향의 응답자라는 사실은 정파성을 띤 매체(partisan media)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XI-11]은 언론(신문사)에 대한 신뢰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보수 성향 응답자는 신문사에 대한 신뢰가 높고, 진보 성향 응답자는 신뢰가 낮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그림 XI-11] 신문사에 대한 신뢰도,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믿는다' 혹은 '약간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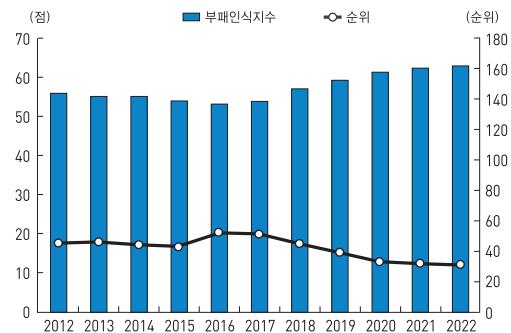
서 신문사에 대한 신뢰에 이념별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문사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는 추이는 진보, 보수, 중도 성향의 응답자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2022년에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 사이에서 신문사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정치 정보 습득의 수단으로서 신문이 갖는 위상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기관 신뢰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적어도 2019년 이후부터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세를 타다가 2022년에 꺾이는 추세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논의와는 사뭇 다른 결과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 문재인 정부 때 기관 신뢰도에 정치 이념별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념별 차이가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특히 중앙정부(행정부)와 법원(사법부)에 대한 신뢰에서 이념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기관 신뢰는 부패 인식의 함수이기도 하다. [그림 XI-12]를 보면 한국 시민들의 부패인식은 점점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대비 2022년에 부패인식 점수는 높고(즉, 부패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고) 순위는 낮다. 2012년 전세계 기준 45위였던 부패인식 순위가 2022년에는 31위로 향상된 것이다. 앞서 확인한 기관 신뢰와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최근 신뢰도가 높아지고 부패인식이 개선되는 추세는 확인할 수 있다.

[그림 XI-12] 부패인식, 2012-2022



주: 1) 170여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의 부패인식 점수와 순위를 표시함.
 2) 점수는 0에서 100사이의 값을 갖으며 값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부패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각 연도.

맺음말

최근 정치학계에서 가장 빈번히 논의되는 주제는 민주주의 쇠퇴와 권위주의로의 회귀 현상이다. 민주주의의 쇠퇴는 자유무역 확산에 따른 경제 불평등의 심화, 자유로운 이민에서 비롯된 국가 정체성의 약화, 그리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야기된 이념 및 정서 양극화와 맞물려 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사회통합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민주주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통합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 이민자 유입에 따른 정체성의 위기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경제 불평등과 편향된 미디어 문제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주의는 잠재적인 정치적 갈등을 제도 내에서 해결하는 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민주주의 과정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202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시위·집회 참여, 탄원·진정·청원 제출, 공무원·정치인에 민원 전달, 온라인 의견 피력, 정부·언론에 의견 제시 등이 2022년에 모두 감소하였다. 대신 2022년에 주변인과의 정치적 대화는 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 경험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한국 시민들은 현재 민주주의 상황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진보 성향의 시민들이 보수 성향의 시민들보다 민주주의 현황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그 추세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바뀌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념 성향 기준으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은 정치효능감이다. 편차는 있지만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보수 성향의 응답자보다 일관되게 높은 정치효능감을 보이고 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보 성향 응답자의 정치효능감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보수 성향의 응답자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에 대한 신뢰도의 시계열적 차이를 살펴보면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적어도 2019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22년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서는 정권의 이념 성향과 응답자의 이념 성향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동시에 시민들의 부패인식도 과거에 비해 현재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사회통합과 관련한 심각한 균열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민주주의 제도의 영역을 벗어나는 비선거적 정치참여의 양상은 안정적인 수준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전망도 높은 편이다. 정치



효능감과 기관 신뢰도 통념과는 달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신뢰하고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다만 한국 시민들의 이념 성향과 정부의 이념 지향의 일치 여부에 따라 민주주의 인식, 정치

효능감, 기관 신뢰에 차이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보보다는 이념 양극화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심각한 수준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념 양극화는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를 영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현안이다.



한국인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인식

하상응 (서강대학교)

- 현재 민주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위기는 경제 불평등과 이민 유입에 따른 정체성 문제에 원인이 있다는 진단이 일반적이다. 다양성 수준이 이례적으로 낮은 한국도 사회통합을 위한 소수자 집단 포용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빈부격차가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꾸준히 높은 편이다. 그런데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납세를 받아들일지의 여부에 대한 입장은 시계열적으로 명확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 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의사는 2013년 이후 늘어나다가 최근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 성적 소수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에 대한 감정은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에게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고, 젊은 세대일수록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양성의 수준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단일민족국가’라는 신화를 오랫동안 유지했을 정도로 인종(race) 및 종족(ethnicity) 기준 다양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종교의 다양성은 존재하지만,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날 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종교 기준으로 차별과 배제가 생긴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결정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한국의 사회 다양성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인구가 현저히 감소한 비도시 지역에 위치한 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들 중 하나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있을 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에서도 학업 능력과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을 받아들일 의사를 보인다.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공유하지 않는 집단은 외국인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오랜 기간 동안 분단된 상황은 북한이탈주민과의 이질성을 심화시켰다. 한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단일민족’이라는 유대감은 많이 희석된 상태이다.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다양성 인식은 민주주의의 국가인 한국 사회의 통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에 덧붙여 경제 불평등 심화로 유발되는 계급 간 격차를 포용하는 작업, 가치관의 변화로 목소리를 높여가는 소수자(예를 들어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작업, 유교문화와 시장논리가 얽힌 경제발전 과정에서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과 한부모가정 자녀, 그리고 일탈행위를 저지른 전과자를 배제하지 않는 작업이 요구된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근거한 국가는 그 구성원을 1등 국민과 2등 국민으로 나누지 않고 평등하게 대해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 조사」에 담긴 사회통합과 관련된 여러 항목들 중에서 (1) 경제 불평등, (2) 국가 정체성, (3) 사회 전통 및 규범 차원에서의 포용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정치 이념 및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추가로 검토하여 낚임스 있는 해석을 시도해 본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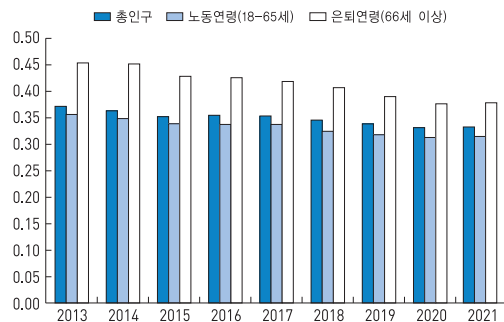
경제 불평등과 포용

최근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치 체제의 불안에 겪고 있다. 불안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많은 학자들은 심화된 경제 불평등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자유무역이 확산됨에 따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가 간 경제 불평등은 완화된 면도 없지 않지만,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국가 안에서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을 외국으로 보내고, 상대적으로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되면서 한 때 중산층의 지위를 누렸던 자국 노동자들이 일 자리를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회보장 제도가 충실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이들의 타격은 보상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에는 대의민주주의 정책 결정과정과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림 XI-13]은 한국의 경제 불평등 정도의 시

계열적 추이를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통해 살펴본 결과를 보여준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총인구, 노동연령 인구, 은퇴연령 인구 기준 모두에서 한국의 세금 공제 후 경제 불평등 정도는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경제 불평등 인식은 반드시 이러한 객관적인 정보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현실과 인식 간에는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한국의 세후 경제 불평등 정도는 점점 완화되는 경향성을 보임은 명확하다.

[그림 XI-13] 지니계수, 2013-2021



주: 1)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세금공제 및 이전 후): 총 인구, 노동 연령 인구(18-65세), 은퇴 연령 인구(66세 이상)로 구분하였음.

2)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낮은 수치는 더 평등한 소득 분배를, 높은 수치는 더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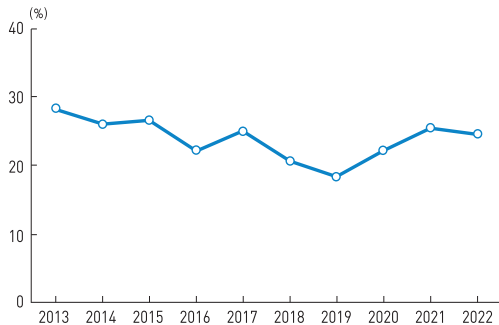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하지만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촘촘하지 않은 한국에서 경제 불평등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관심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림 XI-14]는 한국 사회 갈등의 원인 1순위로 '빈부격차'를 고른 응답자의 비율을 시계열적으로 보여주고 있

1) 정치이념은 5점 척도(매우 보수, 다소 보수, 중도, 다소 진보, 매우 진보)로 물어본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다. '빈부격차'를 고른 응답자의 비율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6~28%대를 유지하다가 감소한 후 2019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 2013~2015년, 2017년, 2021년에 '빈부격차'를 고른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되는 경제 불평등 상황과는 별개로, 경제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시민들의 비율이 상당함을 시사해 준다.

[그림 XI-14] 빈부격차를 대표적인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비율,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개인-집단 간 상호 이해 부족',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 '개인-집단 간 가치관 차이', '빈부격차', '권력 집중', '기회의 불평등(교육, 취업 등)', '갈등 조정 기구 및 제도의 미비', '기타' 중 '빈부격차'를 1순위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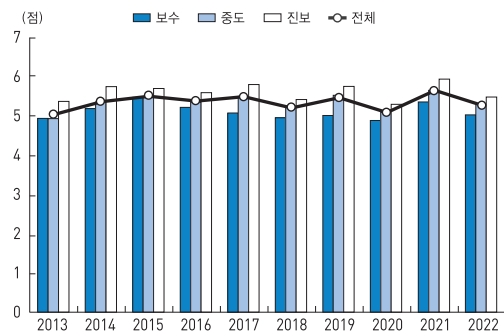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빈부격차와 같은 경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세제도 개편을 통한 재분배이다. [그림 XI-13]에서 확인하였듯이 한국 조세제도의 부의 재분배 기능은 최근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관적인

인식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림 XI-15]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납세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준다. 두 가지 정도의 정보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2013년 대비 2022년 응답자들의 추가납세 의향에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응답 패턴에 일관성은 없다는 점이 특이 사항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추가납세 의향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거나, 2016년부터 결과를 보면 작수연도에는 하향, 홀수연도에는 상향하는 패턴을 보인다.

둘째,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보수 성향의 응답자보다 추가납세 의향이 높다. 흥미로운 점은 중도 성향의 응답자가 초기에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 정도의 추가납세 의향을 보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보 성향의 응답자와

[그림 XI-15] 이념 성향별 추가납세 의향,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낼 의향이 '전혀 없다(0점)'부터 '매우 많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유사한 수준의 추가납세 의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시점을 기준으로 중도 성향 응답자의 응답 패턴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의 재분배 문제에 있어서 중도 성향의 시민들은 진보 성향의 시민들과 유사한 태도를 보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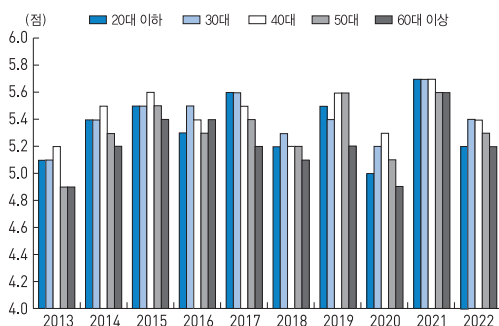
[그림 XI-16]은 추가납세 의향을 세대별로 정리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인 양상은 [그림 XI-15]에서 본 바와 유사하다. 그런데 추가납세 의향의 세대 간 차이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다른 세대에 비해 60대 응답자의 추가납세 의향이 일반적으로 가장 낮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30대 혹은 40대 응답자의 추가납세 의향이 높다는 점만 확인될 뿐이다. 특히 2017년 이후의 변화를 보면 한국 유권자들의 추가납세 의향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경우 2017년 이후 홀수 해에는 추가납세 의향이 높고, 짝수 해에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해석하기 까다로운 정보이다.

위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시민들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되는 경제 불평등 양상과는 별개로, 경제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19년 이후 그 경향성이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이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추가납세 의향이 높긴 하나, 경제 불평등 인식과는 별개로 추가납세 의향에 일관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세대 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이 흥미롭다.

국가 정체성과 포용

[그림 XI-16] 세대별 추가납세 의향,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가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쓰인다면,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낼 의향이 '전혀 없다(0점)'부터 '매우 많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값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인종 및 종족 다양성은 예외적일 정도로 낮았지만,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 때문에 국가 정체성에 영향을 줄만한 외국인 유입이 진행 중이다. 동시에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야기되는 북한이탈주민의 포용 문제도 정체성 확립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을 어느 정도로 포용하느냐의 여부가 사회통합의 한 요인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림 XI-17]은 우선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의 수용 의사를 시계열적으로 보여준다. 일관된 패턴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이 흥미롭다. 우선 외

국민 이민자와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9년부터는 늘어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의 비율도 2013년 이래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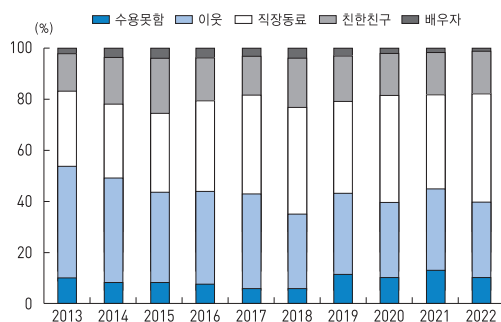
반면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배우자로 고려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 종합해 보면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를 사적 영역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나 공적 영역에서는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현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의사의 경향성은 [그림 XI-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다가 그 이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결과를 보면 응답자 4명 중의 1명이 북한이탈주민을 그 어떤 형태(이웃, 직장동료, 친구, 배우자)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 수용의 경우와 유사한 응답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을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을 잠재적 배우자로 고려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이는 단일민족이라고 알아 왔던 북한이탈주민을 공적 영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용납하겠으나 사적 영역을 공유하고

[그림 XI-17]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수용 인식, 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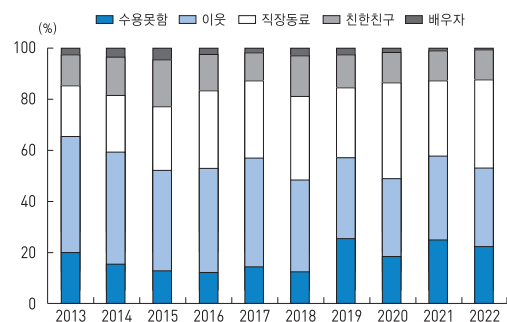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18] 북한이탈주민 수용 인식,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싶지는 않다는 의사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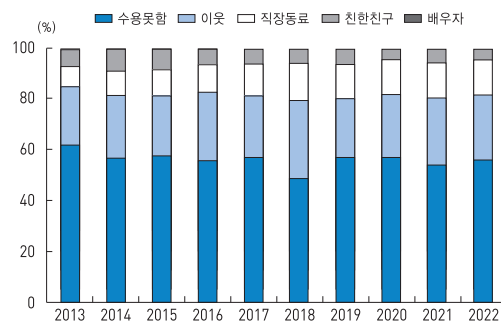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 및 북한이탈주민과 직장에서의 교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갖는다.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상이한 국가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을 공적 영역에 한정하여 받아들이면서 한국인과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을 취하던가, 아니면 사적 영역에서도 공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 전통 및 규범과 포용

사회통합 대상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통과 규범 기준에서 배제된 소수자와 일탈자를 수용하는 작업도 사회통합의 중요한 측면이다. 한국의 경우 유교에 기반을 둔 전통문화의 영향으로 성적 소수자(LGBTQ+)와 한부모가정 자녀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장애인 역시 배제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별도로 전과자에 대한 관심도 미미한 실정인데, 형기를 마친 전과자를 재사회화시키는 작업은 재범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사범영역에서의 공정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가 전과자를 바라보고 대하는 시선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우선 [그림 XI-19]를 이용하여 응답자들이 성적 소수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적 소수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이다. 그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다. 동시에 성적 소수자를 이웃이나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성적 소수자를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사 표현이 서서히 강화됨을 의미한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2022년 현재 여전히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성적 소수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말하지만 시계열적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그림 XI-19] 성적 소수자 수용 인식,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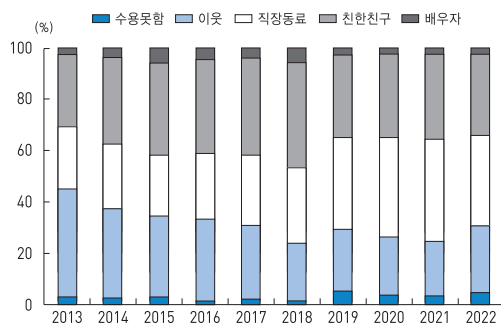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20]은 장애인 수용 인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전체적으로 장애인 수용 인식

은 성적 소수자 수용 인식보다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시계열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장애인을 친한 친구로 둘 수 있다는 의견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내려가는 변화를 보인다.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장애인을 직장 동료로 둘 수 있다는 의견이 비율은 적어도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 이웃으로 둘 수 있다는 의견의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이다. 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에서의 소수자 수용에는 찬성하나 사적 영역에서까지 소수자를 포용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XI-20] 장애인 수용 인식,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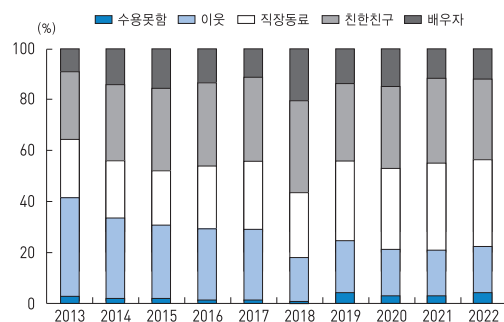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21]에 나타난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한 인식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인다. 한부모가정

자녀를 친한 친구로 둘 수 있다는 의견은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바뀐다. 그리고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과 달리 한부모가정 자녀를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높는데 그 추세가 2018년 이후 꺾이는 경향성도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한부모가정 자녀를 직장 동료로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적어도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이웃으로 둘 수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에서 확인된 경향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지점이다. 한국 사람들의 소수자 포용에 대한 입장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을 수는 있지만, 그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지 사적 영역까지 확장된 것은 아니라는 시사점을 준다. 2019년 이후 한부모가정 자녀를 수용할

[그림 XI-21] 한부모가정 자녀 수용 인식,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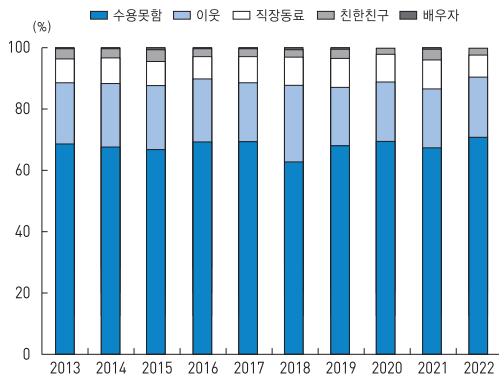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늘어난 사실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과자 수용 인식의 추이가 [그림 XI-22]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다른 경우와 많이 다르다. 전과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2013년 이래 60~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은 20%선에서 정체되어 있고, 직장 동료로 포용할 수 있다는 비율 역시 10% 미만에 고정되어 있다.

[그림 XI-22] 전과자 수용 인식, 2013-2022



주: 1)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인구, 2020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받아들일 수 없다',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중 한 범주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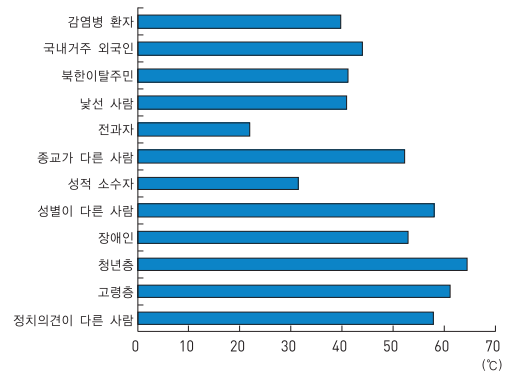
집단별 감정 거리

소수자에 대한 포용 인식은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2020년부터 조사해 온 집단별 감정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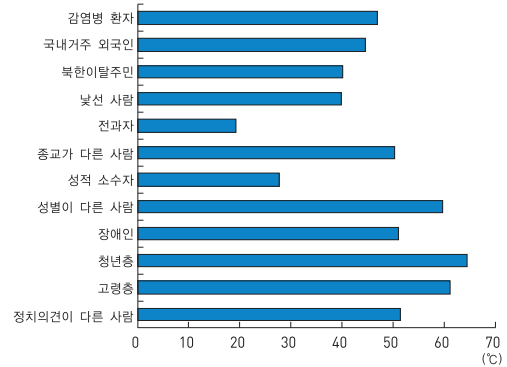
리 문항을 통해 살펴본다. 다만 측정 방법의 차이가 있는 2020년을 제외, 2021년과 2022년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XI-23] 각 집단에 대한 감정 거리, 2021, 2022

1) 2021년



2) 2022년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C에서 100°C까지 자신의 감정을 온도로 응답한 평균값임(0°C는 아주 차가운 느낌, 100°C는 아주 따뜻한 느낌에 가깝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23]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이 가장 차갑게 느끼는(수용을 꺼리는) 집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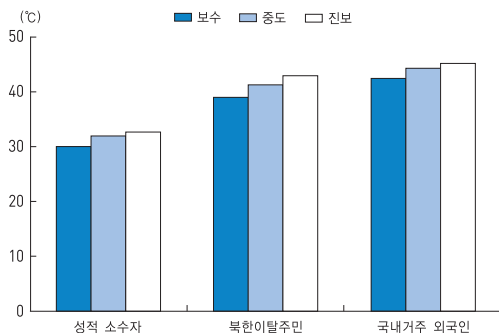
전과자와 성적 소수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연령에 근거한 집단들(청년층, 고령층)에 대한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흥미롭게도 정치 의견이 다른 사람과 성별이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긍정적인 편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념 갈등과 젠더 갈등의 실체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 중에서 성적 소수자, 북한이탈주민,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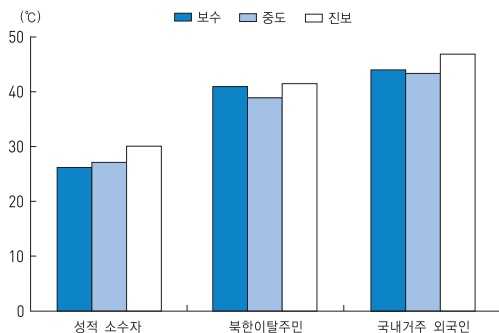
거주 외국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응답자의 이념성향 별로 나눈 결과를 [그림 XI-24]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제시된 소수자 집단에 대한 긍정 감정은 국내거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성적 소수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명확한 정치 이념별 감정 차이가 나타난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진보성향의 응답자에 비해 소수자에 대한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성을 보인다.

[그림 XI-24] 각 집단에 대한 이념 성향별 감정 거리, 2021, 2022

1) 2021년



2)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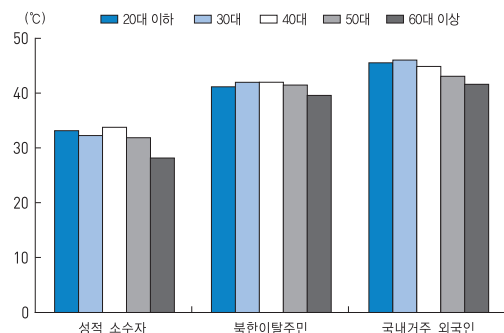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C에서 100°C까지 자신의 감정을 온도로 응답한 평균값임(0°C는 아주 차가운 느낌, 100°C는 아주 따뜻한 느낌에 가까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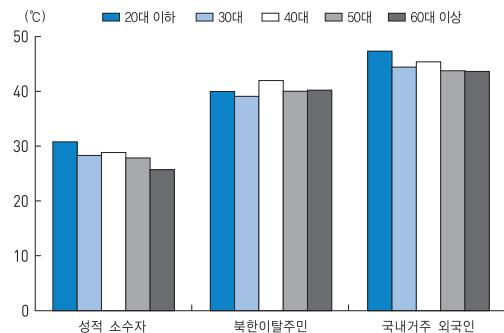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25] 각 집단에 대한 세대별 감정 거리, 2021, 2022

1) 2021년



2) 2022년



주: 1)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통계치는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C에서 100°C까지 자신의 감정을 온도로 응답한 평균값임(0°C는 아주 차가운 느낌, 100°C는 아주 따뜻한 느낌에 가까움).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25]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감정을 응답자의 세대별로 나눈 결과를 제시해 준다. 여기서도 소수자에 대한 감정은 국내거주 외국인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북한이탈주민, 성적 소수자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상대적으로 소수자 집단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경향성도 파악 가능하다. 다만 그러한 경향성은 성적 소수자의 경우에는 명확히 나타나는 편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세대 간 차이가 잘 보이지 않는다.

결론

한국의 경제성장이 한창이었던 시절에는 사회 내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 인종 및 종족 다양성이 없는 사회의 특성과 맞물려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다양한 영역에 존재하는 소수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들을 포용하는 작업이 사회통합의 과제가 된 상황이다. 크게 보아 (1) 경제 불평등, (2) 국가 정체성, (3) 사회 전통 및 규범 차원에서의 포용 인식 정도가 어떠한지를 검토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균열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다.

우선 경제 불평등으로 인해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부터 살펴보았다. 한국 시민들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되는 경제 불평등 양상과는 별개로, 경제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이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추가납세 의향이 높긴 하나, 경제 불평등 인식과는 별개로 추가납세 의향에 일관된 세대 간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 차원에서의 다양성 수용 인식은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한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이 느는 추세이다.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 및 북한이탈주민과 직장에서 교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사적 영역에 외부인을 가깝게 두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장애인과 한부모가정 자녀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와 별도로 전과자에 대한 태도는 시종일관 부정적이다.

성적 소수자,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감정을 응답자의 정치 이념별로 구분해 보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보다 수용 의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별로 나누어 보면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에 비해 성적 소수자와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정에 세대 간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은 한국 사회가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수용 인식은 아직 높지 않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전과자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수용 인식이 여전히 매우 낮고, 국가 정체성 기준 소수자와 사회 전통 및 규범 기준 소수자를 사적 영역에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서서히 높아져 가는 실정이다. 대신 공적 영역에서 이들을 수용

하겠다는 태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져 간다. 아직 사회 소수자 수용 문제로 한국 사회에 심한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및 혼외 자녀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도 점점 더 강하게 요구될 것이다.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이유다.

2023

Subjective Well-being

Korean Social Trends 2023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XII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 연세대학교](#)

350

코로나19와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 정서 경험,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의 변화

362

[한 준 | 연세대학교](#)

주관적 웰빙 영역의 주요 동향

한준 (연세대학교)

-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삶의 만족도, 긍정-부정 정서경험, 유대모니아 세 측면에서 최근 한국인들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여전히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주관적 웰빙이 하위 수준에 머물며, 동아시아에서는 대만에 비해 낮고 일본과 함께 중간 수준에 속한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중장년층의 웰빙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최근 들어 청년층과 노년층의 웰빙 수준이 낮은 형태로 바뀌어 왔다.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외에 가족, 일, 소득과 소비 생활 영역의 만족도 역시 최근 높아지고 있는 반면, 여가생활의 만족도는 정체하고 있다.
-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로서 개인주의 비율과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의 자유를 느끼는 비율이 최근 늘고 있다.

주관적 웰빙은 삶의 질을 총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삶의 전반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바를 요약한다. 사회동향에서 다루는 삶의 영역들에서의 변화는 주로 객관적인 사실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주관적 웰빙 영역은 “주관적”이라는 수식어가 나타내듯 사회 구성원들의 내면적 평가와 느낌을 중심으로 한다. OECD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측정과 관련해서 반드시 주관적 웰빙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스티글리츠 보고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주관적 웰빙을 중요하게 다룬다. 또한 UN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에서 매

년 발간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도 주관적 웰빙을 행복에 대한 측정치로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지난 10여 년에 걸쳐 우리 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에 대한 측정 결과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고, 아울러 주요한 사회인구학적 집단들에 따른 주관적 웰빙 수준의 차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살펴본다. 이어서 OECD와 아시아권 사회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주관적 웰빙이 다른 사회들과 비교해서 어떤 수준인지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주관적 웰빙이 아닌 경제나 정치 등 특정 영역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 수준에 따른 주관적 웰빙 차이와 지역 소속감 및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수준,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가치의 분포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사회통합실태조사」, 「Gallup World Poll」, 「사회조사」 등이다.

주관적 웰빙 수준의 변화

주관적 웰빙 측정에 대한 OECD의 권고안에 따르면 주관적 웰빙의 측정은 크게 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삶의 만족도이다. 이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회고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만족



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긍정, 부정 정서경험이다. 삶의 만족도가 비교적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정서경험은 개인의 최근 하루 동안의 감정을 측정한다. 셋째는 유데모니아다. 이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끼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OECD가 권고하고 있는 주관적 웰빙에 대한 이 세 차원의 측정치는 201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해 온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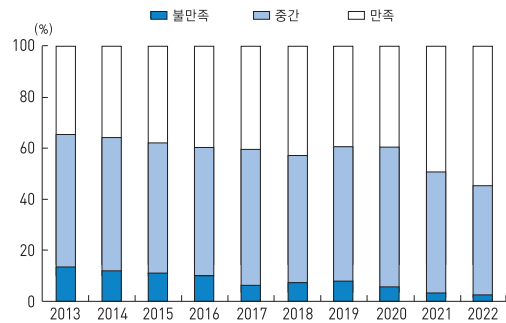
먼저 주관적 웰빙의 첫 번째 차원인 삶의 만족도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자.

삶의 만족도에 대한 측정은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에서 ‘매우 만족한다(10점)’에 걸친 11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이다. [그림 XII-1]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측정 결과를 만족(7~10점), 중간(4~6점), 불만족(0~3점)으로 나누어 그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여준다.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2013년 34.8%에서 2018년 43.0%로 늘고, 2022년에는 54.7%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특히 2020년 이후 삶에 대한 만족 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한편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족이라는 비율은 2013년 13.5%에서 2018년 7.0%로 줄고, 2022년에는 2.4%까지 줄었다. 전반적으로 만족이 늘어나고, 불만족이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된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에서 2020년까지

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중간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던 반면, 2021년부터 만족이라는 응답 비율이 중간이라는 응답 비율을 앞서기 시작했다.

[그림 XII-2]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삶의 만족도 평균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 평균은 처음 조사가 시작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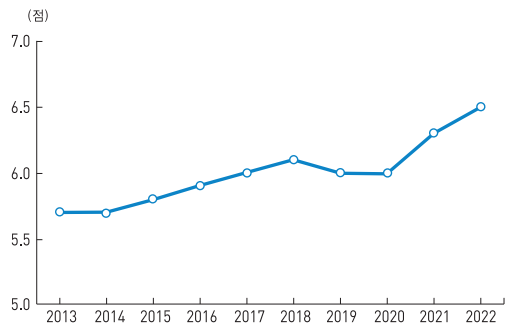
[그림 XII-1] 삶의 만족도 비율, 2013-2022



주: 1) 통계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에서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만족'은 7~10점, '중간'은 4~6점, '불만족'은 0~3점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XII-2]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2013-2022



주: 1) 통계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에서 '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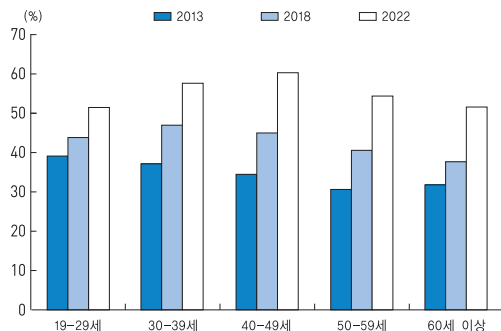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2013년(5.7점)부터 2018년(6.1점)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이후 2020년까지 6.0점으로 정체하다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2022년 삶의 만족도 평균은 6.5점으로 2013년 대비 0.8점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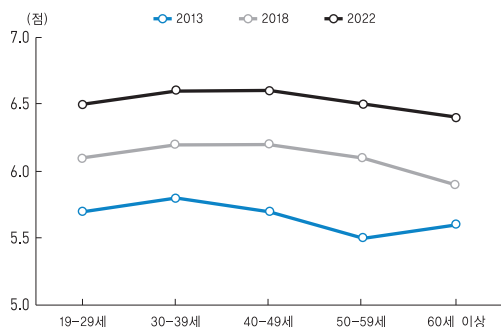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림 XII-3]은 연령대

[그림 XII-3] 연령별 삶의 만족도 비율 및 평균 점수, 2013-2022

1) 삶의 만족도 비율



2)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주: 1) 삶의 만족도 비율은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에서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만족은 7-10점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삶의 만족도 평균점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에서 '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3) 2019년까지 60세 이상은 60-69세를 의미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별로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차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모든 연령대에서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2013년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20대이고, 가장 낮은 집단은 50대이다. 대체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감소하는 패턴이다. 2018년에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30대에서 가장 높게, 6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22년의 경우 40대가 가장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3년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20대가 2022년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비율이 2013년 U-자형에서 2022년 N-자형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모든 연령대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높아졌다. 2013년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50대, 2018년과 2022년의 경우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¹⁾ 2022년 삶의 만족도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이 20대였다는 점에서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 차이는 근소하다.

주관적 웰빙의 두 번째 차원은 정서 경험이다. 정서 경험은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 긍정적

1)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19년까지 70대 이상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다가 2020년부터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연령대에 대한 표현은 2019년까지는 60~69세, 이후에는 60세 이상이 정확한 표현이다. 조사 대상 연령이 높아지면서 분석 결과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만족도가 낮아지고 우울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 글에서 제시한 시계열 추세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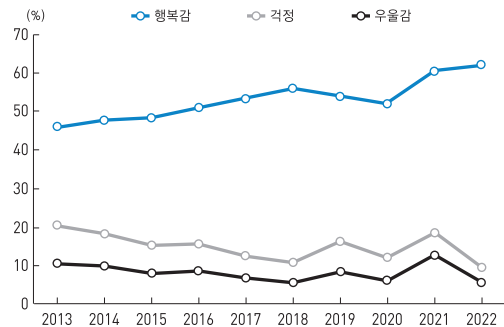


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정서 경험은 단기적인 정서적 경험을 측정하는 것으로 비교적 기억하기에 용이한 하루 전날의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긍정 정서로서 행복감을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그리고 부정 정서로서 걱정을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걱정을 했습니까?”로 또한 우울을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다?”로 묻는다. 응답 척도는 11점 척도(전혀 행복(걱정, 우울)하지 않았다(0점) ~ 매우 행복(걱정, 우울)했다(10점))이다.

[그림 XII-4]는 이들 긍정, 부정 정서 경험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 준다. 경험 비율은 삶의 만족도 비율과 마찬가지로 0점에서 10점에 이르는 11점 척도에서 7~10점에 응답한 비율이다. 긍정 정서로서 행복감을 느꼈다는 비율은 2013년 46.0%에서 2022년 62.0%로 늘었다.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부정적 정서 경험은 반대로 줄었다. 2013년에서 2022년 사이에 걱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에서 9.6%로 줄었으며,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6%에서 5.7%로 줄었다. 걱정과 우울감의 경험 비율은 2013년에서 2018년까지는 일관된 감소의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이후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전체적으로 감소의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긍정적 정서의 경험이 늘어나고, 부정적 정서의 경험이 줄어드는 것을 정서 경험 차원에서 주

[그림 XII-4] 긍정 및 부정 정서 경험 비율, 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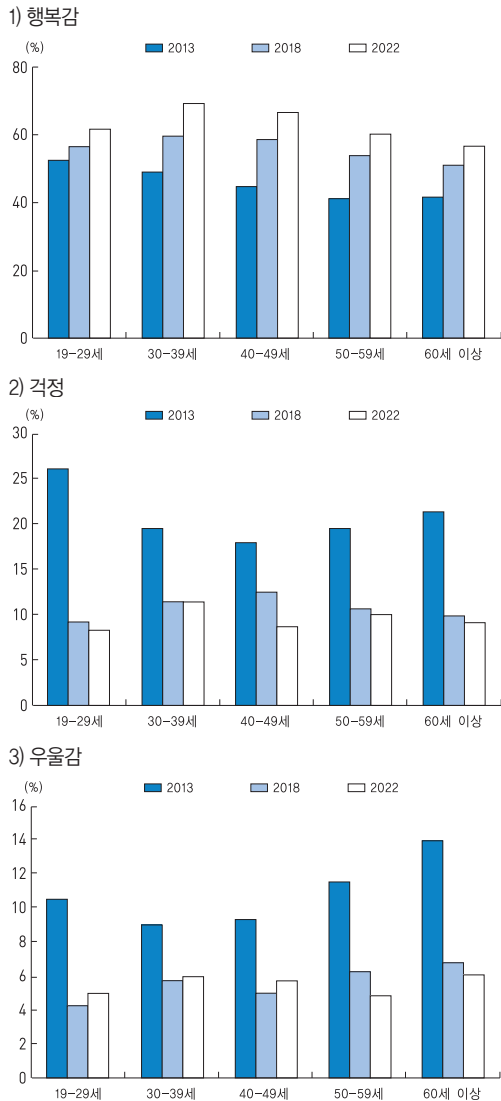


- 주: 1) 긍정정서는 행복감, 부정정서는 걱정 및 우울감을 의미함.
 2) 행복감은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점)'에서 '매우 행복했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7~10점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걱정은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걱정을 했는지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0점)'에서 '매우 걱정했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7~10점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4) 우울감은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우울했는지에 대해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0점)'에서 '매우 우울했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7~10점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관적 웰빙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2013년부터 2022년 사이 한국에서 정서 경험 차원인 주관적 웰빙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림 XII-5]는 연령대별 긍정, 부정 정서경험의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긍정 정서인 행복감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행복감이 높아지지만 행복감의 증가가 가장 큰 연령대는 40대로 2013년에 44.6%에 비해 2022년 66.5%로 21.9%p 높아졌다. 반면 행복감의 증가가 가장 적은 연령대는 20대로 52.4%에서 61.7%로 9.3%p 높아졌다. 2013년 행복감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20대, 가장 낮은 연령대가 50대인 반면, 2022년에는 가장 행복감 경험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30대, 가장 낮은 연령대는 60세 이상이다.

[그림 XII-5] 연령별 긍정 및 부정 정서 경험 비율, 2013, 2018, 2022



주: 1) 긍정정서는 행복감, 부정정서는 걱정 및 우울감을 의미함.
 2) 행복감은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점)'에서 '매우 행복했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7-10점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걱정은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걱정을 했는지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0점)'에서 '매우 걱정했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7-10점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4) 우울감은 조사시점 기준 어제 어느 정도 우울했는지에 대해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0점)'에서 '매우 우울했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7-10점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5) 2013년, 2018년 60세 이상은 60-69세를 의미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한편 부정 정서인 걱정도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감소폭이 큰 연령대는 20대로 2013년 25.9%에서 2022년 8.2%로 17.7%p 감소하였다. 2013년에 비해 2022년에는 연령대별 걱정 경험 비율의 차이가 크게 줄었다. 2013년에 가장 걱정 경험이 많은 연령대가 20대이고, 적은 연령대가 40대인 반면, 2022년에는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 가장 적은 연령대는 20대이다. 또 다른 부정 정서인 우울감의 경험 비율은 2013년과 2018년 사이에 전 연령대에서 크게 줄어든 반면, 2018년과 2022년 사이에는 20대, 30대 및 40대에서 근소하게 늘었다. 걱정과 마찬가지로 우울감 경험 비율의 연령대별 차이도 2013년에 비해 2022년 크게 줄었다. 2013년에 우울감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60세 이상이고, 가장 낮은 연령대가 30대인 반면, 2022년에는 가장 높은 연령대가 30대와 60세 이상인 반면, 가장 낮은 연령대는 50대이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웰빙 측정의 세 번째 차원인 유데모니아는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해 측정한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 역시 ‘전혀 가치 없다(0점)’에서 ‘매우 가치 있다(10점)’의 11점 척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응답들 중에서 7~10점에 응답한 비율을 우리는 유데모니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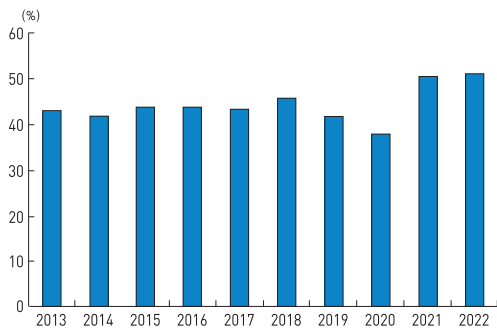
[그림 XII-6]은 유데모니아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



준다. 앞서 삶의 만족도나 정서 경험에 비해 유테모니아에 대한 긍정 응답은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이어서 2021년과 2022년에는 크게 높아져서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논의를 종합하면 삶의 만족도와 정서 경험, 유테모니아 모두 전반적으로 주관적 웰빙이 높아졌다. 다만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일시적으로 낮아지다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반등하는 경향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림 XIII-6] 유테모니아 긍정 응답 비율, 2013-2022



주: 1) 유테모니아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가치 없다(0점)'에서 '매우 가치 있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긍정 응답은 7-10점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주관적 웰빙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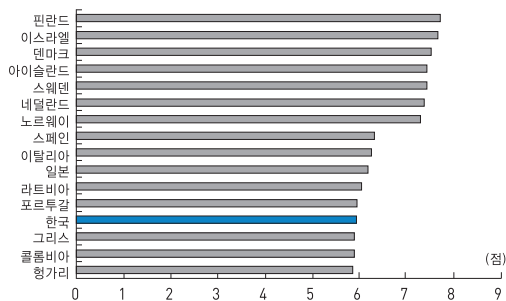
앞에서 우리는 시계열적으로 삶의 만족도, 정서 경험, 유테모니아 차원의 주관적 웰빙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한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주관적 웰빙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앞에서 사용한 자료와 다른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에서 발간하는 「세계행복보고서」의 기본 자료인 「갤럽 월드폴(Gallup World Poll)」 자료를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 대신 여기에서 이용한다. 이 조사에서는 「사회통합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삶의 만족도를 11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다.

[그림 XII-7]은 2022년 「갤럽 월드폴」 자료에서 OECD에 속한 나라들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것이다.²⁾ 「갤럽 월드폴」에서 조사된 한국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5.950점이다. 이것은 동일한 척도로 조사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삶의 만족도 평균 6.5점에 비해 낮은 것이다. 한편 「갤럽 월드폴」 조사에서 한국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 콜롬비아, 헝가리 등이다. OECD 나라들 중에서 삶의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7.729점)다.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북구의 나라들이 여전히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GDP 순위가 OECD 38개국 중에서 20위권에 속한다면 삶의 만족도 순위는 30위권에 속하는 셈이다.

2) 2022년 한국의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은 사회통합실태조사가 6.5점인 반면, 갤럽 월드폴의 경우 5.950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조사방식 등에서의 차이에 기인하겠지만 상세한 정보를 갖지 못해 설명하기 쉽지 않다. 다만 두 조사 모두 시계열적으로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그림 XII-7] OECD 주요 국가들의 삶의 만족도 비교,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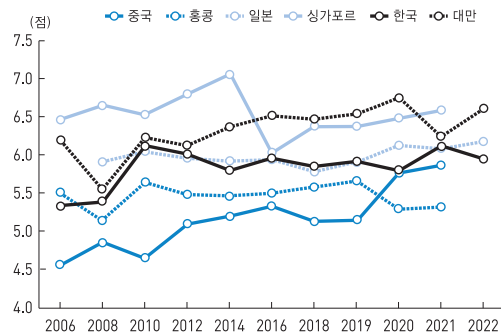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고 있지 않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원자료, 2023.

[그림 XII-8]은 「갤럽 월드폴」 조사를 바탕으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교대상국은 대부분 한국과 함께 동북아시아에 속한 나라들이며, 신흥 경제국으로 주목을 받은 싱가포르를 추가하였다.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2010년 6,116점으로 다소 높아진 이래 일본과 유사하게 6점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대만은 2010년 무렵에는 한국,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분석대상 기간인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은 홍콩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나, 2020년부터는 역전되어 중국이 홍콩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 싱가포르의 2010년대 중반까지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 수준을 보이지만 2016년 크게 낮아졌다가

이후 서서히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한국과 대만, 일본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2021년 일본과 대만의 삶의 만족도 일시 하락, 한국의 삶의 만족도 상승으로 3개국 간 삶의 만족도 수준이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다음 해인 2022년 삶의 만족도 수준은 대만과 일본의 상승, 한국의 하락으로 그 격차가 다시 벌어지게 되었다.

[그림 XII-8] 아시아 국가들의 삶의 만족도 비교, 2006-2022



주: 1) 통계치는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만족하고 있지 않다(0점)'-'매우 만족한다(10점)'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2) 데이터가 없는 경우(2018년 홍콩, 2012년, 2020년 싱가포르) 전년도와 그 다음 년도의 평균값으로 대체함.

출처: UN, World Happiness Report, 원자료, 2023

분야별 만족도와 주관적 웰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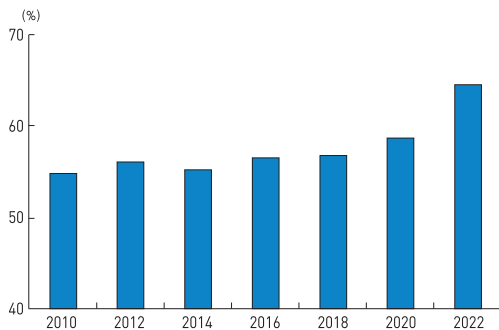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는 특정한 영역이나 분야와 상관없이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묻는다. 그러면 삶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의 만족도는 어떤 추세를 보일까?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들 중 가



족, 일, 여가, 소득과 소비 등은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들이다. 따라서 이들 영역에서의 만족도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더불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영역별 만족도를 묻는 문항은 ‘매우 만족(1점) ~ 매우 불만족(5점)’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XII-9]는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약간 만족 + 매우 만족)의 변화를 보여준다. 보다 상세한 가족관계에 대한 문항들이 있지만 여기에 제시된 것은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 비율이다.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2010년 54.8%에서 2018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22년 64.5%로 9.7%p 높아졌다.

[그림 XII-9] 가족관계 만족도, 201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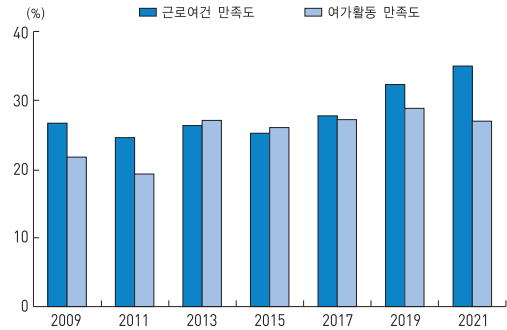


주: 1)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과의 관계에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XII-10]은 일과 여가 측면에서 만족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근로여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들을 물어보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전반적인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 비율은 2009년 26.6%로 낮은 수준이고 이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2019년 32.3%, 2021년 35.0%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그 결과 2009년에 비해 2021년에는 8.4%p가 높아졌다. 한편 여가 활용에 대한 만족 비율은 2009년 21.8%로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 비율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2011년에는 19.3%로 낮아지지만, 2013년 27.0%로 다소 높아진 이후 2021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XII-10] 근로여건 및 여가활동 만족도, 200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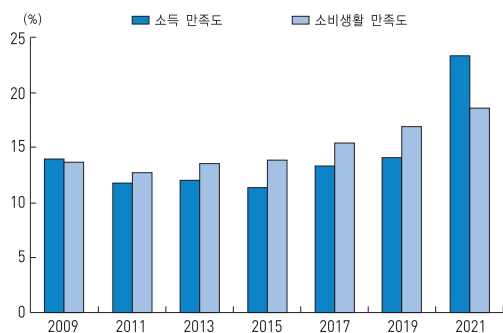
주: 1) 근로여건 만족도는 지난 1주일 동안 임금 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들 중 근로여건에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여가활동 만족도는 현재 여가활동에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 XII-11]은 소득과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2009년 소득에 대한 만족 비율은 14.0%,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 비율

은 13.7%로 다른 영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후 소득에 대한 만족 비율은 2015년 11.4%까지 낮아지지만 이후 높아지기 시작해서 2021년에는 23.4%가 되었다.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 비율은 2011년 12.7%로 낮아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서 2021년에는 18.7%가 되었다. 2019년까지는 소득에 대한 만족 비율에 비해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 비율이 다소 앞서는 경향을 보이지만, 2021년 소득에 대한 만족 비율이 크게 늘면서 역전되었다.

삶의 영역별 만족 비율은 여가생활을 제외한 가족, 근로여건, 소득과 소비생활 등에서 최근 2020년 이후 크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만족도 상승이 앞서 살펴본 2020년 이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상승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XII-11]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 2009-2021



주: 1) 소득 만족도는 소득이 있는 19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의 소득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소비생활 만족도는 19세 이상 인구 중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웰빙과 주관적 가치

주관적 웰빙은 객관적 현실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주관적 의식이나 가치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주관적 가치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구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주관적 웰빙의 수준이 객관적 현실의 수준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배경으로 주관적 가치를 거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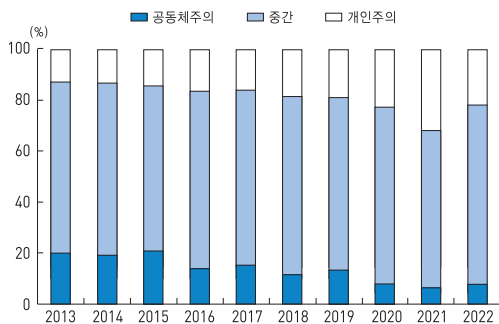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관적 가치의 차원으로 여기에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혹은 공동체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관적 웰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집단주의에 비해 개인주의가 주관적 웰빙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물질적 생활수준에 비해 주관적 웰빙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서도 집단적 압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공동체주의가 강한 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에 비해 주관적 웰빙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또한 공동체주의가 줄어들거나 개인주의가 늘어나는 경우 주관적 웰빙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XII-12]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를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의 분포이다. 구체적으로 “귀하는 공동체의 이익



과 개인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0점)”에서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10점)”에 이르는 11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0~3점을 공동체주의, 4~6점을 중간, 7~10점을 개인주의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2013~2022년 사이 공동체주의의 비율은 20.0%에서 7.7%로 줄어든 반면, 개인주의는 13.1%에서 21.9%로 늘었다. 또한 2016년 개인주의의 비율(16.6%)이 공동체주의의 비율(13.9%)을 처음 앞선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XII-12]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에 대한 인식, 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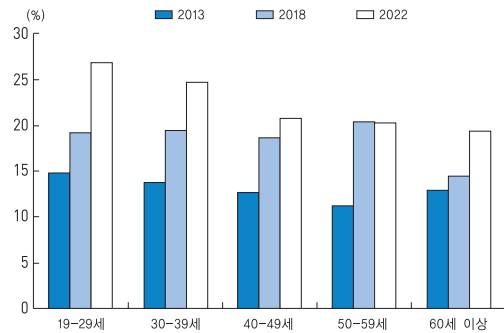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0점)’에서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공동체주의’는 0~3점, ‘중간’은 4~6점, ‘개인주의’는 7~10점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공동체주의에 비해 개인주의가 늘어나는 경향은 연령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일까? [그림 XII-13]은 연령대별로 개인주의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그래프에서 주목할 점은 2013년에

연령대간 개인주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2013년 개인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14.8%), 가장 낮은 연령대는 50대(11.2%)로 이들 간의 차이는 3.6%p이다. 반면 2022년에는 개인주의 비율이 가장 높은 20대의 비율이 26.9%, 가장 낮은 60세 이상의 비율이 19.4%로 이들 간의 차이가 7.5%p이다. 개인주의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20대의 증가폭은 12.1%p이다. 한편 2022년 개인주의 비율이 가장 낮은 60세 이상(19.4%)이 2013년 20대(14.8%)보다도 훨씬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XII-13] 연령별 개인의 이익에 대한 인식, 2013, 2018, 2022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0점)’에서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7~10점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13년, 2018년 60세 이상은 60-69세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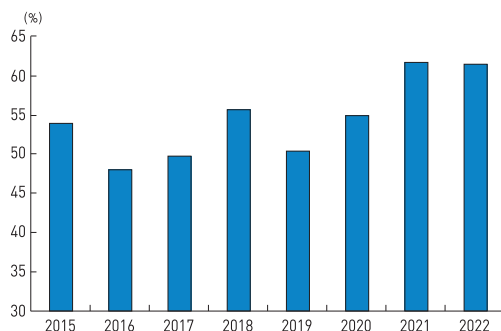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공동체주의가 지배적인 사회에 비해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뜻대로 삶을 영위하고 살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맥



락에서 자신의 삶에서 선택의 자유는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꼽는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이에 대해 “귀하는 자신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자유롭지 않다(0점)”에서 “매우 자유롭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다. [그림 XII-14]는 7~10점의 응답을 선택이 자유롭다고 간주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자유롭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48.0%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61.5%와 61.4%가 자유롭다고 응답해 2016년 대비 13.4%p 가까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응답자들이 느끼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의 자유 정도가 높아진 것이다.

[그림 XII-14]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고 인식하는 비율, 2015-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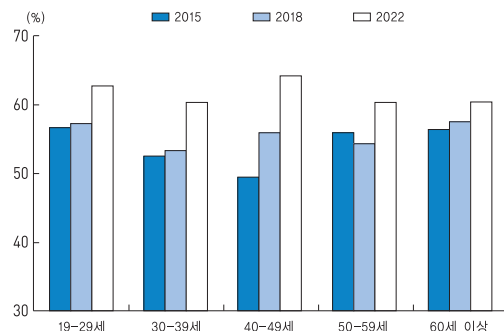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자신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자유롭지 않다(0점)’에서 ‘매우 자유롭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7-10점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에서 자유롭다는 응답이 증가해 왔다면, 연령대별로 증가폭의 차이는 어떠한가? 그리고 연령대별로 자유롭다는 응답 비율은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 [그림 XII-15]는 연령대별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에서 자유롭다고 응답한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2015년에 비해 2022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유롭다는 응답의 비율이 증가했지만, 그중에서도 증가폭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이다. 2015년 40대에서 자유롭다는 응답 비율이 49.5%였던 반면, 2022년에는 64.2%로 14.7%p가 증가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40대가 자유롭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였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가장 높은 연령대가 되었다. 반면 2015년 20대와 함께 자유롭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던 60세 이상은 자유롭다는 응답의 증가가 가장 적어서

[그림 XII-15] 연령별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고 인식하는 비율, 2015, 2018, 2022



주: 1) 통계치는 “귀하는 자신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자유롭지 않다(0점)’에서 ‘매우 자유롭다(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7-10점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냄.

2) 2015년, 2018년 60세 이상은 60-69세를 의미함.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2022년에는 60.4%로 낮은 연령대가 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주의가 증가하고 자신의 삶에서 결정의 자유를 느끼는 비율이 증가한 것은 주관적 웰빙 특히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인다. 개인주의 증가가 두드러진 연령대가 20대라면 삶의 결정에서의 자유 증가가 두드러진 연령대는 40대이다. 20대가 의식에서는 개인주의를 중시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개인주의를 실현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겠다.

맺음말

한국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전반적으로 지난 2013년 이후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긍정적 정서 경험은 늘어나는 반면 부정적 정서 경험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느끼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주관적 웰빙 수준은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그렇고 아시아의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나라들은 OECD 국가 중에서는 헝가리와 콜롬비아, 그리스 정도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홍콩 정도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특정한 삶의 영역에

서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삶의 영역인 가족, 일, 여가와 소득, 소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여가생활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최근 들어 만족의 비율이 높아졌다. 만족 비율의 수준은 가족관계가 가장 높고, 다음이 일과 여가, 그리고 소득과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에 비해 여가의 만족 정도가 낮고, 소득에 비해 소비의 만족 정도가 낮다.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주의는 지속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2016년부터 공동체주의보다 우세해졌다. 그 결과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의 자유 정도는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반적 변화들이 한국 사회에서 주관적 웰빙 수준을 물질적 생활수준에 상응하도록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하면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패턴은 상대적으로 U-자형에서 Ω -자형으로 바뀌었다. 청년과 노인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40대에 비해 낮은 것이다. 긍정적 정서경험인 행복감에서도 마찬가지로 Ω -자형 패턴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에서는 연령대별 삶의 조건에서의 변화 즉 고령화에 따른 청년층과 노년층의 어려움에 영향을 받겠지만, 동시에 세대교체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화 및 MZ세대의 성년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와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 정서 경험,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의 변화

한준 (연세대학교)

-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2021년까지 행복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22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행복도 변화의 폭은 여성이 남성보다,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컸다.
- 부정적 정서경험인 분노, 걱정, 슬픔이나 사회적 정서경험인 그리움, 외로움, 고립감 모두 코로나19 직후에 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감소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별로는 노년층에 가까울수록 분노를 제외한 부정적 정서경험 비율이 높다.
- 코로나19 초기 자녀 돌봄이 벅차거나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낸 경우 주관적 웰빙 수준은 낮게 나타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졌다. 반면 자녀가 디지털 기기에 빠지거나 학업 유지가 힘든 경우 주관적 웰빙은 일관되게 낮게 나타났다.
- 주관적 웰빙에 대한 임금감소의 부정적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정도가 줄어든 반면 영업시간 단축의 부정적 효과는 2020년에 비해 2021년과 2022년에 더 커졌다.

코로나19와 국민 삶의 변화

코로나19는 21세기 들어 가장 큰 글로벌 사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2019년 12월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의 보고가 있는 뒤 한국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우한을 다녀온 첫 확진자가 등장했다. 과거 메르스의 아픔을 경험했던 한국 정부는 기민하게 2020년 2월 26일 코로나 3법을 통과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0년 1월 30일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2020년 2월 11일 COVID-19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한 달 뒤인 3월 11일에는 최고 단계의 경보인 글로벌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였다. 이후 각국 정부는 해외여행 및 화물운송의 제한은 물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지역 간 봉쇄라는 극단적 조치에 이르기까지 COVID-19 대유행에 대응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전력을 기울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였으며, 2023년 들어 대부분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종료되었다.

한국은 코로나19 초반부터 강력하고 체계적인 정부의 대응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백신의 빠른 보급과 의료체계의 원활한 작동으로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2020년 2~3월 대구, 경북 지역 중심의 유행, 2020년 8월 수도권 중심의 유행, 2020년 11월~2021년 1월의 전국적 유행, 2021년 7월



~2022년 6월의 장기 유행, 그리고 2022년 8월 ~10월의 유행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친 대유행을 겪었다. 새로운 변이의 발생으로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온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쳐 학교가 문을 닫고 비대면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대면 모임이 제한되고 식당이나 주점의 영업시간이 제한되었다. 직장에서는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대면 접촉을 줄였고, 영화관, 공연장, 운동시설 등 대중시설 또한 인원 제한 및 심한 경우 문을 닫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 모두의 일상에 엄청난 변화와 제약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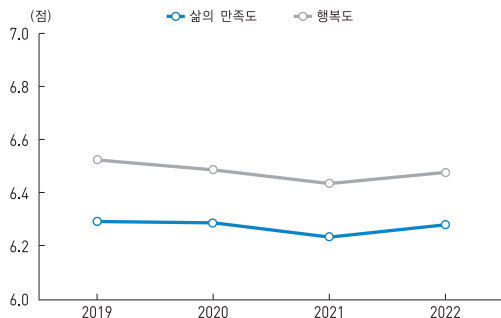
각 개인과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두에게 많은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아이들, 집에만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자녀 학습을 챙겨야 하는 부모들,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이 단축되어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들, 일자리 불안정이 심화되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근로자들, 친교와 만남의 기회를 빼앗겨 고립감을 느끼는 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가족의 건강이 위협에 놓여 돌봐야 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는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을 악화시켰다. 그런데 인간은 놀라운 적응력을 지녔을 뿐 아니라 빠른 회복력을 가진 존재이다. 갑작스러운 재난은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해서 주관적 웰빙을 악화시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변화한 현실에 적응해 나간다.

이제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현시점에서 지난 3년간의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변화들이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주관적 웰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 글에서는 패널 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는 2020~2022년에 걸쳐 특별 모듈 문항을 통해 코로나19가 가져온 삶의 여러 측면에서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또한 이 조사는 1998년 1차 조사부터 삶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물어 왔으며, 2015년 18차 조사부터는 OECD에서 권고하는 방식대로 0점에서 10점에 이르는 11점 척도로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현재의 행복도를 추가하여 매년 조사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삶의 변화와 그것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에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적합한 자료이다. 특히 동일한 표본을 매년 반복해서 조사하고 관찰하는 패널자료의 특성은 표본의 변화에 따른 오차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주관적 웰빙 변화

먼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2년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현재 행복도의 평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자. [그림 XII-16]은 현재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의 연도별 평균의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XII-16] 코로나19 발생 전·후 주관적 웰빙, 2019-2022



주: 1) 삶의 만족도는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했을 때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의 지금 현재 사다리에서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최악의 상태'-'10=최선의 상태'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2) 행복도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전혀 행복하지 않다'-'10=매우 행복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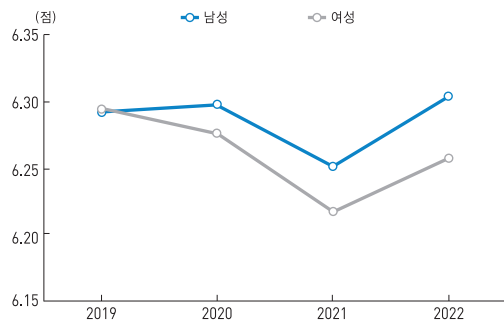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3-25차)」, 원자료, 각 연도.

2019년에 비해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는 현재 행복도가 하락하였으며,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2021년에는 더욱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시작한 2022년에는 삶의 만족도와 현재 행복도가 모두 회복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에서는 객관적 상태가 개선되어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이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3년차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에 적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삶의 만족도에 비해 현재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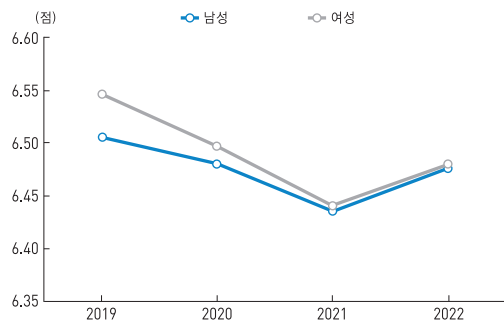
[그림 XII-17]은 성별에 따른 코로나19 전후의 주관적 웰빙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첫 번째 그림은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를, 두 번째 그림은 성별에 따른 행복도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코로나19 직후부터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평균이 하락하다가 2022년부터

[그림 XII-17] 성별 코로나19 발생 전·후 주관적 웰빙, 2019-2022

1) 삶의 만족도



2) 행복도



주: 1) 삶의 만족도는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했을 때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의 지금 현재 사다리에서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최악의 상태'-'10=최선의 상태'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2) 행복도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전혀 행복하지 않다'-'10=매우 행복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3-25차)」,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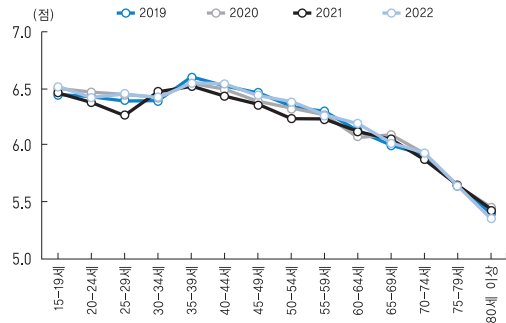
터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지 않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2019년에 남성과 여성 각각 평균 6.29점, 6.30점으로 거의 동일지만, 가장 낮은 만족도 수준을 보인 2021년에 남성은 6.25점인 반면, 여성은 6.22점으로 여성이 더 낮으며, 이러한 남녀 간 차이는 2022년에도 유지된다. 행복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여성의 행복도 평균이 6.55점으로 남성의 행복도 평균 6.51점보다 높지만 2021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평균 6.44점, 2022년에는 6.48점으로 동일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주관적 웰빙의 하락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는 행복도보다 삶의 만족도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두 그래프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전후 주관적 웰빙은 연령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일까? [그림 XII-18]은 코로나19 전후의 주관적 웰빙 변화를 5세 간격의 연령대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먼저 연령대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패턴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5세 간격 연령대에 따라 주관적 웰빙 평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주관적 웰빙 수준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에 걸쳐 주관적 웰빙의 수준이 낮아졌다가 30대에 들어 웰빙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 가장 높은 주관적 웰빙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패턴은 서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U-자형의 패턴과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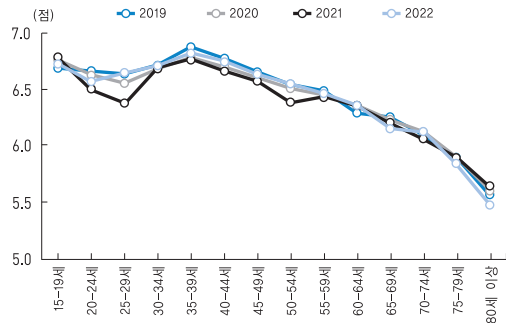
인 뒤집어진 U-자형 즉 \cap -자형의 패턴이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청년기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노년기의 주관적 웰빙이 낮은 것도 역시 노후 대책이 취약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XII-18] 연령별 코로나19 발생 전·후 주관적 웰빙, 2019-2022

1) 삶의 만족도



2) 행복도



주: 1) 삶의 만족도는 "말(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했을 때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의 지금 현재 사다리에서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최악의 상태'-'10=최선의 상태'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2) 행복도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전혀 행복하지 않다'-'10=매우 행복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3-25차)」, 원자료, 각 연도.

그렇다면 코로나19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변화는 연령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남성과 여성의 비교와 마찬가지로 연령대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하락은 다르게 나타난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그래프 모두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이후 만족도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연령대가 20대라는 사실이다. 특히 2019년과 2021년의 주관적 웰빙 격차는 2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대에서 주관적 웰빙 하락이 큰 만큼 2022년에 주관적 웰빙 상승 역시 2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아마도 이러한 20대의 코로나19에 대한 반응성은 20대가 활동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격리에 따른 활동의 제약을 더욱 힘들게 느꼈을 것이라는 점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둔화가 취업을 앞둔 20대에 더욱 큰 부담을 가져왔을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20대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하락폭이 가장 큰 연령대라면 60대 이후 노년집단은 가장 영향을 덜 받는 집단이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모두 60대 이상에서는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코로나19와 부정적 정서경험

주관적 웰빙의 측정에서 정서경험은 삶의 만족도와 함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코로나19의

진전과 함께 등장한 ‘코로나 블루’란 단어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함께 사회적 관계의 단절 속에서 고립감이 증폭되어 우울증에 가까운 정서적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코로나19는 객관적으로 어려움과 부담을 가중했을 뿐 아니라 주관적 정서 측면에서도 부정적 정서경험의 가능성을 높였다. 한국노동패널 조사는 2020~202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정서경험 여부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분노, 걱정, 슬픔, 주위 사람에 대한 그리움, 혼자라는 외로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는 감정 등에 대해 이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라고 묻고,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하였다.¹⁾

[그림 XII-19]는 2020~2022년간 국민들의 적극적 부정적 정서인 ‘분노’, 소극적 부정적 정서인 ‘걱정’과 ‘슬픔’을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각각의 감정에 대해 ‘자주’와 ‘항상’ 느꼈다는 응답의 비율과 여기에 ‘가끔’ 느꼈다는 응답 비율을 더한 것을 함께 비교하였다. 이들 감정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걱정’으로 ‘자주’ 혹은 ‘항상’ 느꼈다는 응답은 30% 이상, ‘가끔’ 느꼈다는 응답까지 합치면 약 60% 이상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자주 느낀 감정은 ‘분

1)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행복’이라는 감정의 경험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다른 감정들과 달리 긍정적 정서경험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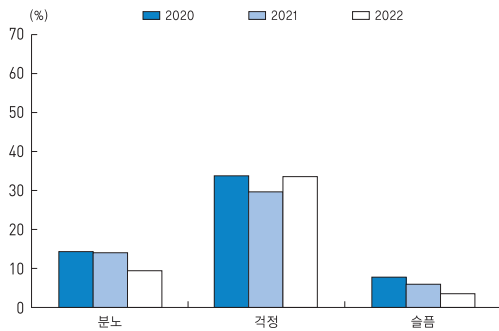
노'로 '자주' 혹은 '항상' 느꼈다는 응답은 10% 내외, '가끔' 응답을 합치면 30~40% 가량이 느꼈다고 응답했다. '슬픔'의 경우에는 10% 미만이 '자주' 혹은 '항상'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가끔' 느꼈다는 응답까지 합치면 20~30% 가량이 된다. 한편 코로나19의 진전에 따라 이들 부정적

정서경험은 대체로 2020년에 가장 많이 경험하고 이후 서서히 줄어드는 패턴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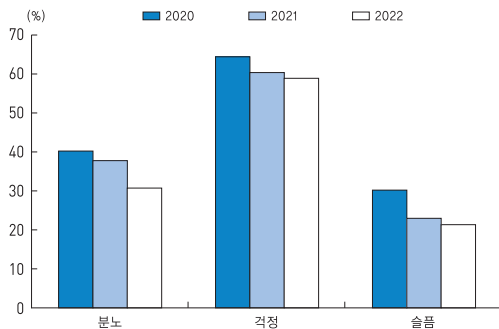
[그림 XII-20]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해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인 그리움, 외로움, 고립감을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느꼈는가의 추이를 보여준다.²⁾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각각의 감정에 대해 '자주'와 '항상' 느꼈다는 응답의 비율과 여기에 '가끔' 느꼈다는 응답 비율을 더한 것을 함께 비교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의 반경을 가축안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을 느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인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경우에 이러한 감정의 경험 빈도는 다를 것이다. 코로나19의 진전과 함께 그리움이나 외로움, 고립감을 '자주' 혹은 '항상' 느꼈다는 응답의 비율은 모두 10%에 못 미쳤다. 하지만 '가끔' 느꼈다는 응답 비율을 합치면 그리움의 경우 30% 내외로, 외로움과 고립감의 경우 20~25% 사이로 경험한 비율이 높아진다. 한편 코로나19의 진전에 따라 그리움은 2020년에 가장 많이 경험하고 이후 서서히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외로움과 고립감을 '자주' 혹은 '항상' 느꼈다는 비율은 코로나19가 가장 기승을 부리고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1년에 높게 나타났다.

[그림 XII-19]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정서(분노, 걱정, 슬픔) 경험, 2020~2022

1)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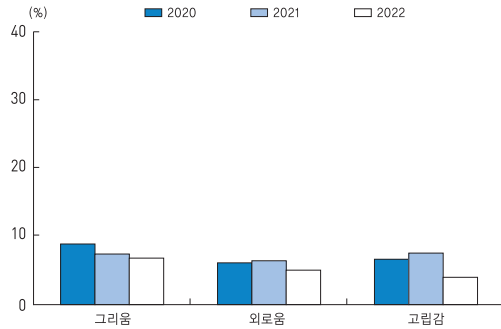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느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위의 그림은 '4=자주 그렇다' 혹은 '5=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아래 그림은 '3=가끔 그렇다', '4=자주 그렇다' 혹은 '5=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3-25차)」,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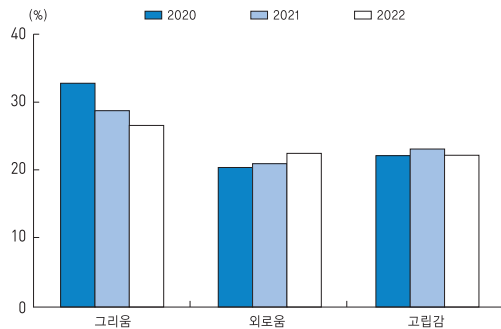
2) 그리움은 반드시 부정적 감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그리움은 보고 싶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렵기 때문에 느끼는 결핍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부정적 감정에 함께 포함시켰다.

[그림 XII-20]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정서(그리움, 외로움, 고립감) 경험, 2020-2022

1)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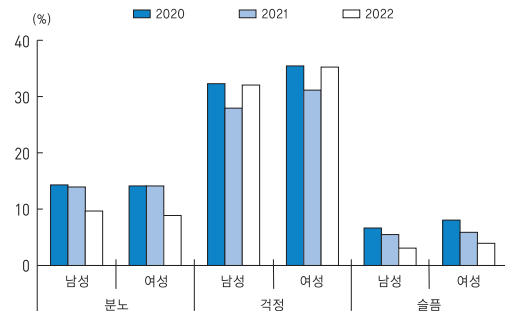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위의 그림은 '4=자주 그렇다' 혹은 '5=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아래 그림은 '3=가끔 그렇다', '4=자주 그렇다' 혹은 '5=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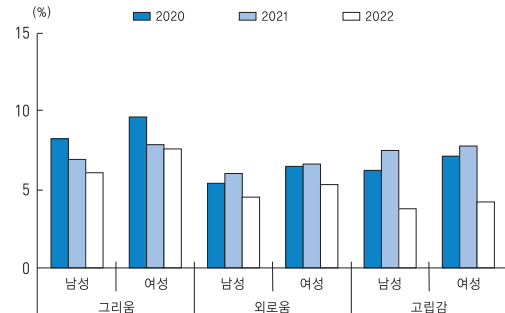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3-25차)」,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I-21] 성별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정서 경험, 2020-2022

1) 분노, 걱정, 슬픔



2) 그리움, 외로움, 고립감



주: 1) 통계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4=자주 그렇다' 혹은 '5=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3-25차)」, 원자료, 각 연도.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정서경험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그림 XII-21]은 성별에 따른 분노, 걱정, 슬픔, 그리움, 외로움, 고립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경험의 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성별 비교에서는 부정적 정서경험을 '자주' 혹은 '항상' 했다는 응답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남성과 여성 간의 부정적 정서경험의 비율 차이는 매우 크지는 않지만 정서경험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적극적인 부정적 정서인 분노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험하는 비율이 미세하게 높은 반면, 소극적인 부정적 정서인 걱정과 슬



픔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조금 더 경험 비율이 높다. 한편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부정적 정서경험 비율을 보여주는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그리움과 외로움, 고립감 모두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험 비율이 조금씩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 코로나19의 진전에 따른 부정적 정서경험의 변화 패턴은 동일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부정적 정서들은 연령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며, 이 차이들은 코로나19의 진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그림 XII-22]는 코로나19 이후 부정적 정서경험 비율의 변화를 연령대별로 비교한 것이다. 먼저 분노의 경우를 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전반적으로 중년의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U-자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2022년에는 전반적인 비율은 낮아지면서 동시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험 비율이 높은 형태로 바뀌었다.

걱정의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과 2022년은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걱정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코로나19가 가장 기승을 부린 2021년은 20대 미만의 연령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걱정하는 비율이 약 25~37%로 전반적으로 2020년보다 낮으며 연령 간 편차도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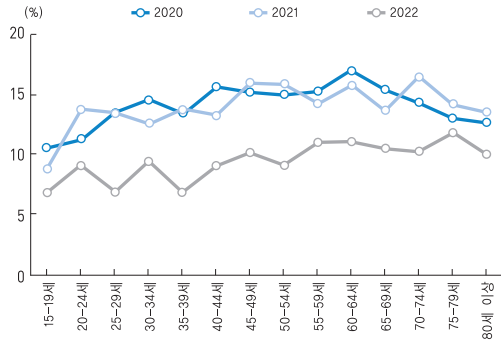
슬픔의 경험을 살펴보면 걱정과 마찬가지로 연령대별 차이가 2021년에 가장 작고 2020년과 2022년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슬픔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2022년에는 이전에 비해 연

령대별 차이가 크게 증가하였다. 아마도 노년층의 경우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중증 증상을 보이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지속적으로 접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분노에 비해 걱정의 연령대별 차이가 더 크고, 슬픔의 경우 그보다 더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2020년과 2022년 걱정에 대한 경험 비율은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1.5배를, 2022년 슬픔에 대한 경험 비율은 70대 이상 노인들이 청년층에 비해 3~4배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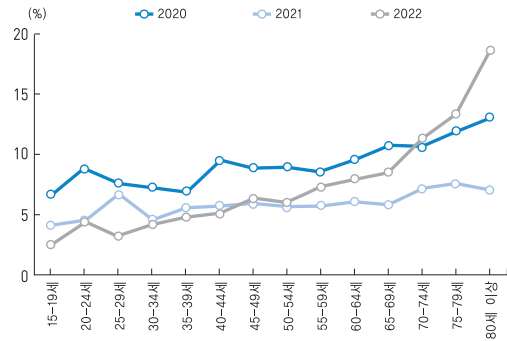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경험인 그리움, 외로움, 고립감 경험의 연령대별 비교를 살펴보자. 그리움, 외로움, 고립감은 앞서 살펴본 분노, 걱정, 슬픔보다도 연령대별 차이가 더 두드러진 경향을 보인다. 먼저 그리움에 대한 경험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청년층과 노년층의 차이는 1.5~2배 정도를 보여준 반면 2022년의 경우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청년층의 그리움에 대한 경험이 낮아진 반면 노년층은 더 높아진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외로움과 고립감에 대한 경험 수준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의 진행과 함께 연령대별 부정적 정서경험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경험의 경우 노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림 XII-22] 연령별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정서 경험, 202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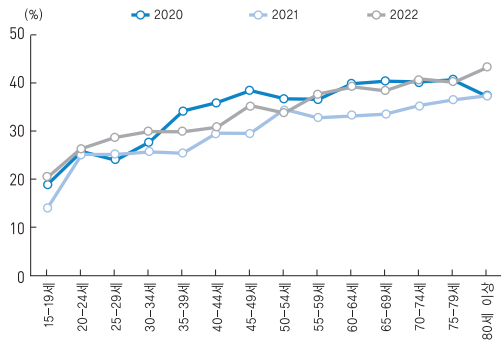
1) 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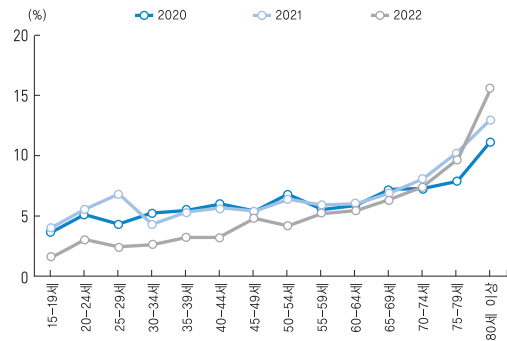
4) 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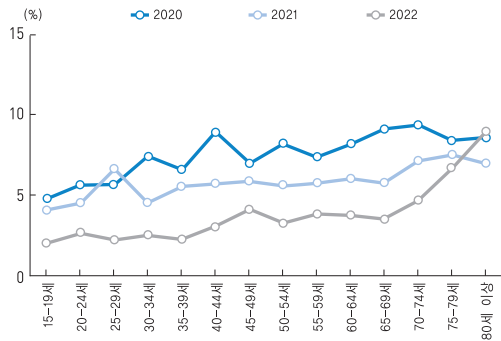
2)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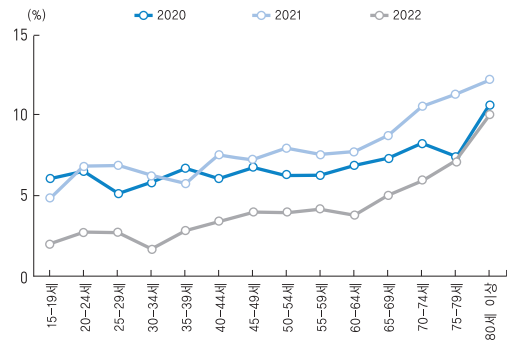
5) 외로움



3) 슬픔



6) 고립감



주: 1) 통계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느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항상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4=자주 그렇다’ 혹은 ‘5=항상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추세를 드러내 보기 위해 y축의 배율을 조정하였음.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3-25차)」, 원자료, 각 연도.



코로나19와 자녀양육 및 주관적 웰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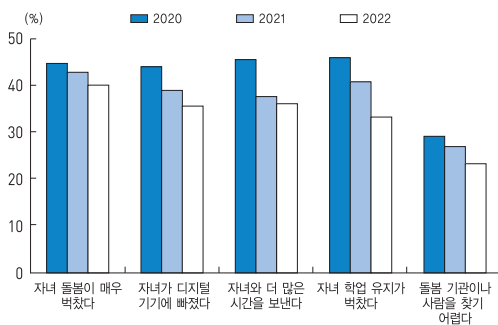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활동의 반경을 크게 좁혀서 가정 안으로 대부분의 활동을 한정된 시기도 있었다. 학생들은 한동안 집에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받았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였다.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식사와 여가 모두 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기도 했다. 예컨대 가정주부는 전보다 늘어난 가사노동과 돌봄을 담당해야 했고, 충분한 개인 공간이 부족한 경우 비대면 온라인 상호작용은 불편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가족들이 집에 모여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움을 나누기

도 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온 자녀 양육 측면에 대한 가족생활의 변화를 물었다. [그림 XII-23]은 이 질문들에 대한 연도별 응답 변화를 보여준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는 자녀를 가진 응답자 절반 가까이가 ‘자녀 돌봄이 벅차다(44.7%)’, ‘자녀가 디지털 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43.9%)’, ‘자녀의 학업 유지가 벅차다(45.9%)’라고 응답해 갑자기 닥친 변화에 적응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절반 가까운 응답자들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45.3%)’라고 응답해서 부정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님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편 자녀를 돌봐줄 기관이나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응답은 전체의 29.0%로 어린 자녀를 가진 경우에 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도래와 함께 일어난 가족생활에서의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모든 변화에 대한 응답의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양육에서의 변화는 주관적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림 XII-24~26]은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매우 그렇다’,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로 나누어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그림 XII-24]는 자녀 돌봄이 벅찬

[그림 XII-23] 코로나19 이후 자녀 양육 관련 가족생활, 202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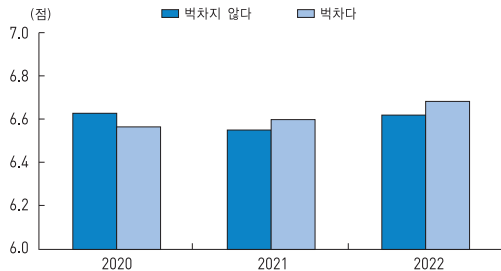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코로나19로 이후 다음의 상황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응답해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4=그렇다’ 혹은 ‘5=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3-25차)」,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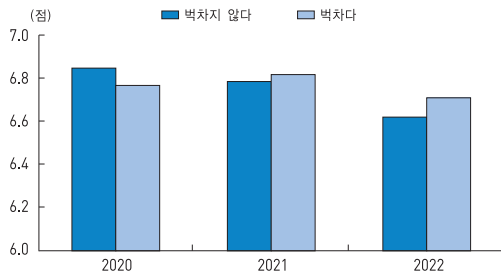


[그림 XII-24] 자녀 돌봄 애로와 주관적 웰빙, 202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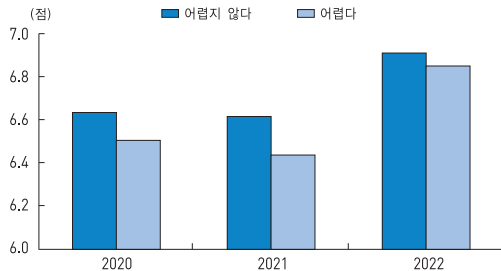
1) 삶의 만족도(자녀 돌봄이 벅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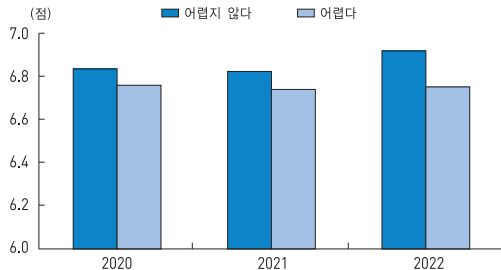
2) 행복도(자녀 돌봄이 벅차다)



3) 삶의 만족도(자녀의 학업 유지가 벅차다)



4) 행복도(자녀의 학업 유지가 벅차다)



주: 1) 통계치는 해당 사항에 대해 '벅차지 않다/어렵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보통)'와 '벅차다/어렵다(매우 그렇다+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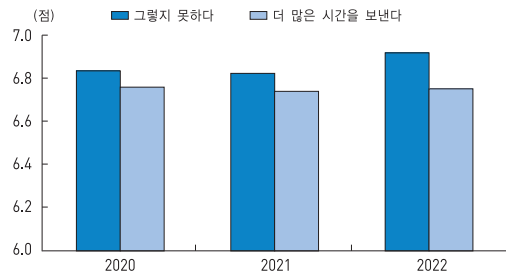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3-25차)」, 원자료, 각 연도.

지, 자녀를 돌볼 기관이나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주관적 웰빙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분석결과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의 차이는 일관된 방향을 보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자녀를 돌볼 기관이나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운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2021년에는 삶의 만족도가, 2022년에는 행복도가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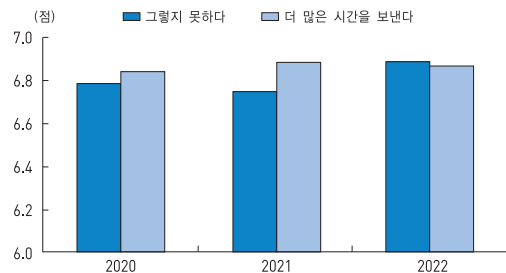
[그림 XII-25]를 통해 자녀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주관적 웰빙 차이를 비교해 보자. 여기에서

[그림 XII-25] 자녀와의 시간과 주관적 웰빙, 2020-2022

1) 삶의 만족도



2)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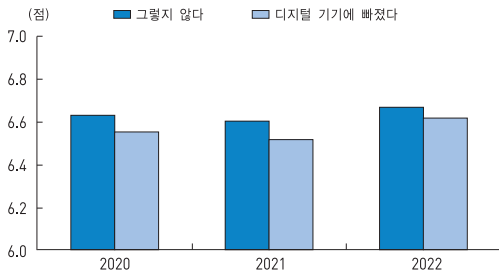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사항에 대해 '그렇지 못하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보통)'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매우 그렇다+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 평균값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3-25차)」,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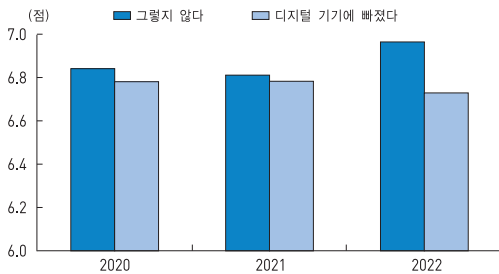


[그림 XII-26] 자녀의 학업과 주관적 웰빙, 202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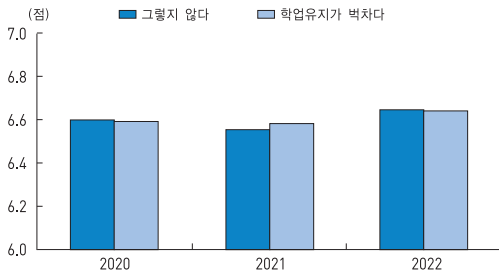
1) 삶의 만족도(자녀가 디지털 기기에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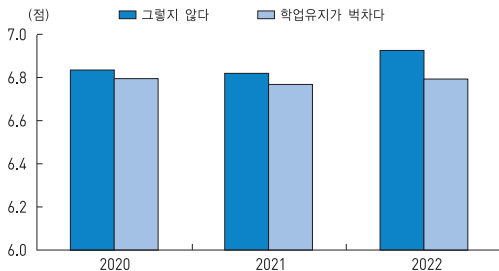
2) 행복도(자녀가 디지털 기기에 빠졌다)



3) 삶의 만족도(자녀의 학업 유지가 벅차다)



4) 행복도(자녀의 학업 유지가 벅차다)



주: 1) 통계치는 해당 사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보통)'와 '디지털 기기에 빠졌다/학업유지가 벅차다(매우 그렇다+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 평균값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3-25차)」, 원자료, 각 연도.

도 대부분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보낸다고 응답한 경우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게 나타났지만 일관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자녀 양육에서의 변화가 모두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그림 XII-26]은 자녀의 학업과 생활에 대한 지도의 어려움과 주관적 웰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자녀가 디지털 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경우와 자녀의 학업을 유지하기 벅차다고 응답한 이들은 대체로 주관적 웰빙이 더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일관되지는 않았다. 다만 2022년의 경우 자녀가 디지털 기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자녀의 학업유지가 벅차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행복도가 낮게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경제활동 변화 및 주관적 웰빙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족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경제활동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코로나19 전후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림 XII-27]을 통해서 살펴보자. 경제활동 상태를 미취업과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주관적 웰빙 수준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모두 임금근로자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의 순이다. 또한 세 집단 모두 코로나19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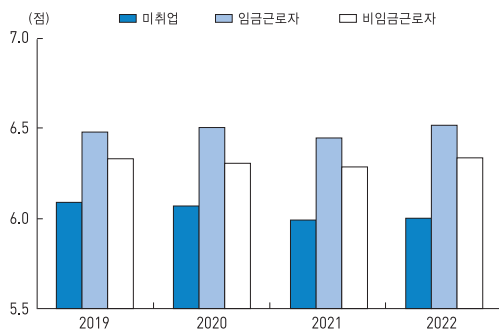
전후해서 2019~2021년에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모두 하락하다가 2022년에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코로나19를 전후해서 변화하는 정도는 취업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임금근로자가 2021~2022년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모두 상승하면서 2019년 수준에 가까워지는 반

면, 미취업자의 경우는 2019~2021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2022년에 정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2019년에 비해 2022년에는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의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유사한 변화의 패턴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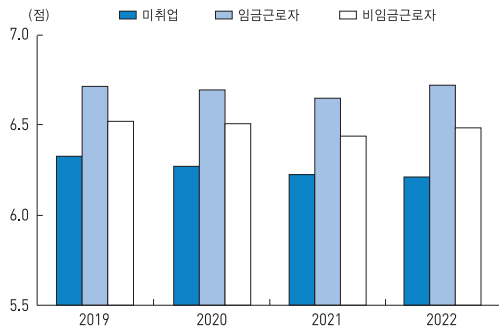
임금근로자나 비임금근로자가 모두 미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웰빙 수준이 하락하였다. 이러한 하락의 배경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의 제약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줄거

[그림 XII-27] 취업상태별 코로나 전·후 주관적 웰빙, 2019-2022

1)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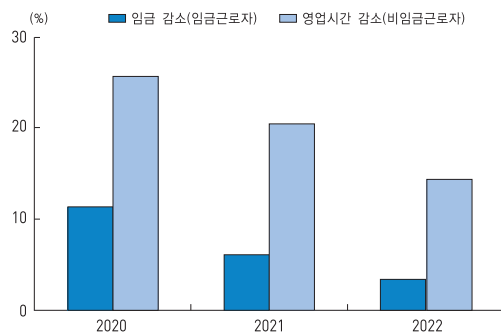
2) 행복도



주: 1) 임금근로자(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을 받고 일(직장, 아르바이트 등),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고용주, 가족종사자), 미취업 대상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2-25차)」,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I-28] 코로나19 이후 일의 변화, 2020-2022



주: 1) 임금근로자(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을 받고 일(직장, 아르바이트 등),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고용주, 가족종사자) 대상임.

2) 임금 감소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상여 포함)의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들의 비율임.

3) 영업시간 감소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3-25차)」,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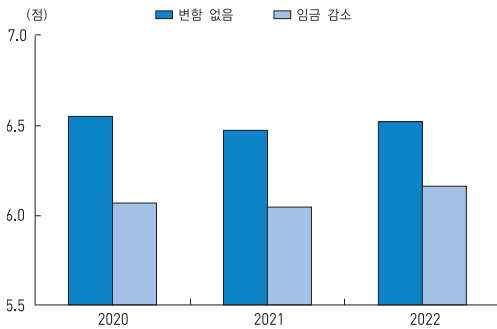


나 경제사정 악화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지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비임금 근로자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이 줄어들어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림 XII-28]은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이후 임금 감소와 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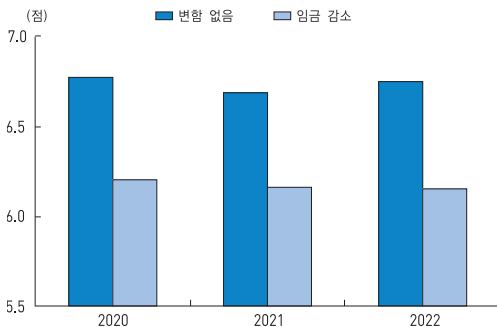
시간 감소 경험의 비율을 보여준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1.4%가 임금 감소를 경험했고, 이후 이 비율은 2021년 6.1%, 2022년 3.5%로 낮아진다. 한편 비임금근로자는 2020년 25.7%가 영업시간 감소를 경험하였고, 2021년에는 20.5%, 2022년에는 14.3%로 줄었다. 임금근로자의 임금 감소나 비임금근로자의 영

[그림 XII-29] 코로나19 이후 임금 감소 경험과 주관적 웰빙, 2020-2022

1)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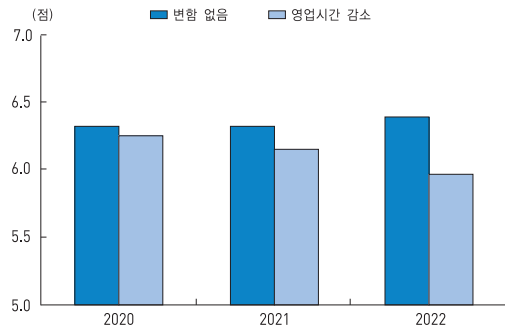
2)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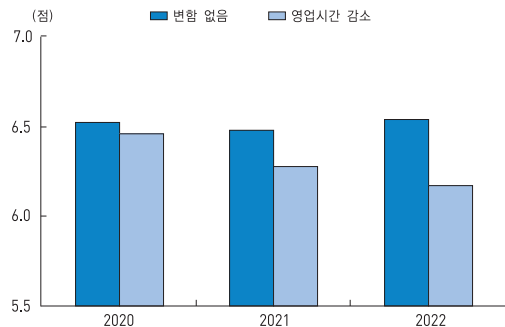
주: 1) 임금근로자(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돈)를 받고 일(직장, 아르바이트 등) 대상임.
2) 임금 감소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상여 포함)의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각각 '감소하였다', '변화없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들의 삶의 만족도 평균값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3-25차)」, 원자료, 각 연도.

[그림 XII-30] 코로나19 이후 영업시간 감소 경험과 주관적 웰빙, 2020-2022

1) 삶의 만족도



2) 행복도



주: 1)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고용주, 가족종사자) 대상임.
2) 영업시간 감소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각각 '감소하였다', '변화없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들의 삶의 만족도 평균값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23-25차)」, 원자료, 각 연도.

업시간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해는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감소를 경험한 경우와 아닌 경우,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영업시간 감소를 경험한 경우와 아닌 경우의 주관적 웰빙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림 XII-29]는 임금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경험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그림을 보면 임금 감소를 경험한 임금근로자들의 2020년 삶의 만족도 평균은 6.07점, 행복도 평균은 6.19점으로 임금 감소를 경험하지 않은 임금근로자들의 삶의 만족도 평균 6.56점과 행복도 평균 6.76점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 감소로 인한 삶의 만족도 하락은 2021년과 2022년에도 지속되는데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임금 감소 경험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차이는 조금씩 줄어든다. 반면 행복도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비임금근로자들은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해 주관적 웰빙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그림 XII-30]은 코로나19 이후 영업시간 단축을 경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차이를 보여준다. 임금 감소를 경험한 임금근로자와 달리 영업시간 단축을 겪은 비임금근로자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삶의 만족도나 행복도가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영업시간 단축을 겪은 비임금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빠르게 하락해서 영업단축을 겪지 않은 경우와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다.

맺음말

코로나19는 모든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한 변화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정서경험 등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삶의 변화가 주관적 웰빙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한국노동패널」의 특별 모듈 조사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하였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로 측정한 주관적 웰빙은 코로나19의 시작 이후 2020년과 2021년 하락하다가 2022년 들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의 하락이 두드러진 인구집단은 여성과 청년들이었다. 코로나19는 정서경험에도 영향을 미쳐 분노, 걱정, 슬픔, 그리움, 외로움, 고립감이 높아졌다가 이후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부정적 정서경험은 청년층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지만 노년층에서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 결과 부정적 정서경험은 노년층에 집중되고 연령대별 부정적 정서경험의 차이는 점점 더 늘어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변화가 집중된 삶의 영역은 가족과 일이다. 이들 두 영역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후 자녀를 돌보는 것과 자녀의 학업 및 생활지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었다



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었다. 부정적 경험 외에도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긍정적 경험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만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에서의 변화는 임금 근로자의 경우 임금 감소를,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살펴보았다. 두 변화 모두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인 2020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이후 줄어든다. 임금 감소는 코로나 19 기간에 걸쳐 임금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낮추지만 그 정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줄어든다. 반면 영업시간 단축은 2020년에는 비임금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지 않지만 점점 더 영향이 커져서 2021년과 2022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주관적 웰빙이 악화되었다 회복되는 양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객관적 상황이 악화되었다가 2022년 들어 완화되는 환경적 요인의 작용이다. 또 하나는 2020년 갑작스레 코로나19를 맞고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주관적 웰빙 하락을 겪은 국민들이 이에 점점 적응하면서 주관적 웰빙이 점차로 높아지는 주관적 회복력 요인의 작용이다. 어느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는가는 후속 연구들에서 다루어볼 문제이다.

Korean Social Trends 2023

한국의 사회동향 2023



2023 Glossary

Korean Social Trends 2023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부록

용어해설

I 인구

기대수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기대자녀 수: 현존 자녀수에 장차 추가로 더 낳으려는 자녀 수를 합한 것.

노년구성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임.

노년부양비: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임.

$$\text{노년부양비} = \frac{\text{고령인구(65세 이상)}}{\text{생산연령인구(15-64세)}}$$

사망력: 건강, 경제사정, 보건의료혜택 등을 고려한 사람들의 사망수준을 의미함.

연령표준화 사망률: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 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

$$\text{연령표준화 사망률} = \frac{\sum (\text{연령별 사망률} \times \text{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text{표준인구}}$$

이상자녀 수: 응답자의 실제 자녀 수와는 관계없이 응답자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의 수.

조사망률: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

$$\text{조사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사망자 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출생률: 연간 출생아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text{조출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 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출산력: 결혼, 피임, 건강,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들이 아이를 실제로 출산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들이 가진 생물학적인 임신 능력, 즉 가임력(fecundity 또는 natality)과는 다름.

합계출산율: 여자 1인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산출.

$$\text{합계출산율(TFR)} = \frac{\sum_{i=15}^{49} (ASFR)_i}{1,000}$$

II 가구·가족

1세대 가구: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② 형제자매, ③ 부부 + 기타 친척).

1인 가구: 1인으로 구성된 가구.

2세대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② 한부모 + 자녀, ③ 부부 + 양친, ④ 부부 + 한부모, ⑤ 부부 + 자녀 + 부부의 형제자매 등).

3세대 이상 가구: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 이상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 양친(또는 한부모), ② 양친(또는 한부모) + 부부 + 자녀 등).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됨.

고령자가구: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일반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비친족가구: 친족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한 집에서 기거하며 자취하는 가구.

신체적 기능 저하자: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항목 중 1개 이상 제한을 갖는 노인.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장기요양서비스: 고령 및 치매 중풍, 노인성 질병 등으로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조리하기 및 세탁하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신체동작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정신적 활동 제약: 치매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의 인지 지능점수가 17점 이하인 분명한 인지 기능 장애.

조이혼율: 연간 이혼건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text{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 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혼인율: 연간 혼인건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text{조혼인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 혼인 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평균 가구원수: 일반가구 총가구원수를 총일반가구수로 나누어 계산.

$$\text{평균 가구원수} = \frac{\text{일반가구 총가구원수}}{\text{총일반가구수}}$$

활동제약: 장애 정도(중증, 경증) 및 확정 질환과는 별개로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의 기본 활동을 수행하는 데 겪는 육체적·정신적 제약을 의미.

III 건강

건강생활실천율: 금연(현재 흡연자가 아닌 상태), 절주(현재 고위험음주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 걷기(1일 30분 이상 주5회 이상 걷는 경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

기대여명(life expectancy): 특정 연령의 인구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니코틴 사용장애: 니코틴 금단과 니코틴 의존을 포함하는 장애.

불안장애: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장애로,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특정 공포증, 분리불안 장애 등의 진단이 포함.

비만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 25kg/m²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을 포함하는 장애.

예방가능 입원환자 수: 양질의 외래 의료서비스를 통해 입원의 위험이 감소되는 질환(당뇨, 고혈압,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울혈성 심부전 등)으로 인한 입원환자 수를 성 및 연령 보정을 통해 산출한 값.

온열질환: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남. 온열질환의 종류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음.

온열질환자: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환자.

월간음주율: 만 19세 이상 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입원환자 자체충족률: 지역 주민 전체 입원환자 수 중에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입원환자 수의 비율.

자살계획: 자살에 대한 생각을 넘어서 자살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단계.

자살생각: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

자살시도: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시도를 했던 경우.

전문질환군 환자: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의 진단을 받은 환자.

초과사망: 통상 수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사망을 의미.

코로나19: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팬데믹(Pandemic):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전 지구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의미. 다만 감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광범위적 발병 질환은 일단은 범유행병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풍토병 또는 엔데믹(endemic)으로 일컬음. 역사적인 팬데믹에는 천연두와 결핵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와 2009년 인플루엔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이 있음.

회피가능 사망: 질병의 예방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을 의미.

흡연율: 만 19세 이상의 성인 인구 중 현재 흡연자의 비율임. 현재 흡연자란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말함.

IV 교육·훈련

고교학점제: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이 포함됨.

교원 1인당 학생수: 조교와 비전임교원을 제외한 전임교원 1인당 재적학생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평가 시험으로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교과목표와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 평가하며, 소통하고, 생성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인지적, 윤리적 능력의 총합으로, 일상생활과 사회 및

직업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의미.

원격교육: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융합전공: 2개 이상의 학과(부)가 융합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 설치한 전공.

자유학기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평가를 강화하며,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

취학률: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 대비 취학자의 비율. 취학적령은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임.

키오스크: 판매를 위해 마련된 작은 장소, 부스를 뜻하는 단어. 정보통신에서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시스템인 무인 단말기를 의미.

학업중단율: 해당 학교급별 전체 학생 중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제적, 중퇴 및 휴학한 학생의 비율.

V 노동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임.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각 경제: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형태의 경제.

근로시간 단축근로: 육아,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15~35시간)하여 근무.

노동조합 조직률: 근로자가 고용주와의 협상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text{노동조합 조직률(\%)} = \frac{\text{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text{전체 임금근로자수}} \times 100$$

노사분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조건, 근로조건, 근로환경 등에 대한 불만으로 야기되는 갈등·대립·투쟁의 상태.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 조사대상기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

베이비붐 세대: 출산율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로 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출생한 세대,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됨.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됨.

비전형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포함.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고용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다른 근로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은 없으나 한국에서는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근로제공 방식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함.

사망만인율: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1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의 비율.

$$\text{사망만인율(\%)} = \frac{\text{사망재해자수}}{\text{취업자 수}} \times 10,000$$

상용 근로자: 임금근로자.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을 의미.

산업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 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선택적 근무시간: 일정 기간 단위로 사전에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시차출퇴근: 소정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근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조정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율.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 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요양재해율: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100명 당 발생하는 요양재해자수의 비율.

$$\text{요양재해율(\%)} = \frac{\text{요양재해자 수}}{\text{산재보험적용 근로자 수}} \times 100$$

원격근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의 일정 부분을 전통적인 사무실 이외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무유형.

일용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

임금근로자: 취업자 중 임금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됨.

임시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약 없이 단기적으로 고용된 취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가능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 희망/가능자인 '잠재구직자'를 합한 인구.

재택근무: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

종사상 지위: 취업자의 취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 기준의 하나로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함.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하는데, 임금근로자는 상용직·임시직·일용직으로,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됨.

중대재해처벌법: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됨.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24년 1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탄력적 근무: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특수고용: 사용자와의 관계가 직접고용에 비해 느슨하며 시공간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형태.

플랫폼경제: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활동.

한시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가 있음.

확장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합한 수치.

MZ세대: 1980~2004년 생을 지칭함. 1980~1994년 생을 일컫는 'M세대(밀레니얼 세대)'와 1995~2004년 생을 뜻하는 'Z세대'를 합한 것.

X세대: 베이비 붐 세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 1965~1979년 출생자를 지칭함.

VI 소득·소비·자산

경상소득: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 소득으로 나뉘는데, 일정한 소득은 경상소득이고 일시적인 소득은 비경상소득임.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

공적연금: 공적연금이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 국민을 보호, 빈곤해소,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사회보장제도임.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나뉨.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률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공적인 사회보장 수혜금.

균등화 소득: 가구소득을 각 가구원의 소득으로 전환한 개인소득.

근로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특정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로써 봉급, 상여금과 제수당을 포함하며,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말함.

기저효과(Base Effect): 시점 간 지표를 비교하는 경우 비교 시점과 기준시점의 상대적 수치에 의해 지표가 실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현상.

명목소득: 측정 당시 화폐액으로 표시된 소득으로 화폐소득 이라고도 함. 명목소득은 물가변동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사계열 비교나 국제비교에는 적합하지 않음.

비경상소득: 소득의 종류는 그 원천에 따라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뉘는데, 일정한 소득은 경상소득이고 일시적인 소득은 비경상소득임. 비경상소득에는 경조소득, 폐품매각대금, 퇴직금, 유산, 장학금 등이 포함됨.

비소비지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가구 간 이전 등 소비지출이나 자산구입이 아닌 지출을 말함.

사업소득: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자영자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익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을 말함.

사적이전소득: 다른 가구나 비영리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소득.

상대빈곤율: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40% 또는 50%에 못 미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고 전체 가구 중 이들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시장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제외한 것을 말함.

소득분위: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다음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 특정 구간으로 등분한 것을 말함.

소득 5분위 배율: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임. 즉, 도시근로자가가구를 소득수준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로 나눈 값임. 소득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

소득이동성: 두 기간 사이에 소득순위 또는 실질소득의 변동(이동)을 의미.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

소비지출: 생계와 생활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

순자산: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에서 평균 부채를 차감한 금액.

실질소득: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한 소득으로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것.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은 떨어지게 됨.

이전소득: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경상적 수입으로 공적보조금(연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합한 금액.

절대빈곤율: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고, 전체 가구 중 절대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재산소득: 가구소유의 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예·적금이자, 주식배당금, 부동산임대료 등을 포함.

중위소득: 소득순위가 정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며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냄.

처분가능소득: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타가구로의 이전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을 말함.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을 할 수 있는 소득임.

VII 여가

동호회: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의 모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회를 1년에 1번 이상 관람한 인구의 비율.

반려동물: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

반려식물: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

생활체육: 직업이 아닌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체육 및 스포츠 활동.

생활체육참여율: 전체 조사대상 인구 중 한 회에 30분 이상 할애하고 이를 일주일에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비율.

스포츠 관람률: 각종 스포츠를 1년에 한 군데 이상 관람한 인구의 비율.

여가시간: 하루 24시간 가운데 의무시간(유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그리고 노동 관련 이동시간) 그리고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시간(수면, 섭식, 위생 및 치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말함.

여가활동: 교제활동, 종교활동, 각종 문화생활과 운동 스포츠 및 야외활동, 컴퓨터와 인터넷활용시간, 취미(취미를 위한 학습시간, 교양강좌시간), 독서와 음악감상, 그밖에 다양한 유흥적 활동(음주, 가무, 흡연 등) 등을 의미.

오락·문화비: 신문구독료, 영화관람료, 도서구입비, 휴가비 등 문화여가생활 지출을 말함.

웹툰: 인터넷을 통해 연재하고 배포하는 만화. 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

코로나블루: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나 거리두기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겪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평균접근거리: 격자(500m×500m) 중심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설까지 도로 이동거리.

OTT(Over The Top Service):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VIII 주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재정 및 국민 주택자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

노후주택: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주택.

단독주택: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단독주택을 모두 포함.

빈집: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 시장·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

연립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지칭.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rice to Income Ratio, PIR): 자가가구의 중위 주택가격을 중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의 주택 구입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 임차가구의 중위 월임대료를 중위 월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의 주택임대료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주거급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주택가격지수: 기준시점과 매번 조사되는 조사 지점의 가격비를 이용하여 기준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

주택구입물량지수: 중위소득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의 비율.

주택보급률: 보통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

$$\text{주택보급률} = \frac{\text{주택수}}{\text{보통가구수}} \times 100$$

* 보통가구수: 일반가구수에서 비친족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

* 주택수: 다가구주택을 1호로 간주.

주택연금 보증공급액: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될 월지급금과 개별대출금, 대출이자, 보증료를 모두 합한 예상 총대출금에 대한 보증공급액을 의미.

주택재고: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영업용(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을 의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매매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표.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전체 가구 중 면적, 시설, 침실 등의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시설기준: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 침실 및 면적기준: 1인 가구(방 1개, 14㎡), 2인 가구(방 1개, 26㎡), 3인 가구(방 2개, 36㎡), 4인 가구(방 3개, 43㎡), 5인가구(방 3개, 46㎡), 6인 가구(방 4개, 55㎡).

평균통근(통학)시간 : 통근(통학)인구가 매일 집에서 직장(학교)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통행시간을 의미.

* 통근(통학)인구: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집에서 직장(학교)에 근무(공부)하러 다니는 자를 의미.

IX 생활환경

기후변화: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변화하는 기후 현상을 말함. 기후변화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변화 등 지구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조성의 변화나 지구 표면상태의 변화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함.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지름 10μm 이하의 먼지. 사람의 폐로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됨.

생활계폐기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폐기물.

수질오염: 인간의 활동이 호수, 강, 해양, 지하수 등의 수질에 끼치는 악영향을 의미함. 수질오염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용존 산소량(DO) 등이 있음. BOD 기준에 따라 수질오염도는 1-5급수와 급수 외로 나누어짐.

오존: 산화력과 살균력이 강하고 특히 표백 살균력이 강한 특이한 냄새를 지닌 푸른 기체. 성층권에서 태양 자외선의 광화학 작용에 의해 생성되며, 지상 20km 자점에 가장 많음. 최근 냉매제로

사용되어 온 CFC가 오존층의 오존을 급격히 파괴시켜 남극과 북극 상공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의 자외선 양이 증가하여 피부암 발생 증가, 피부 노화 촉진, 농작물 생산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됨.

온실가스: 지구의 대기 속에 존재하며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하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말함.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대 온실가스임.

재해취약성: 이상적인 자연현상 또는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한 지역이나 사회가 영향을 받는 정도 또는 대처하는 정도를 의미.

지구열대화: 지구온난화를 넘어서 온 기온 급상승 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용어.

지구온난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지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로 폐유, 폐산, 폐알칼리, 중금속 및 유기용제를 용출시키는 폐기물 등이 이에 해당됨.

초미세먼지: 지름이 2.5μm 이하인 먼지.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

환경보호지출: 정부, 기업, 가계가 환경악화를 예방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 지출한 금액.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물의 오염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질 속 박테리아가 일정 시간 내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는 데 소비하는 산소량. BOD가 높을수록 수질오염이 심각함을 의미.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 요구량. 물의 오염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 COD가 높을수록 수질오염이 심각함을 의미.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앞 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기업의 경영 및 투자에서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적·사회적 성과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개념.

X 범죄·안전

강력범죄: 형법범죄 중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범죄 등을 포함.

교통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도주차량, 위험운전치상상)’,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 위반범죄와 교통방해죄를 포함.

아간보행안전도: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외인사망: 사고, 자살, 타살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사망. 외인사망의 3대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추락임.

인적 사고: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고로 시설물이나 기계기구의 비정상적 작동, 인간에 의한 오작동, 화학물질 또는 에너지 과다 노출 등으로 인해 발생함.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이 대표적임.

재산범죄: 형법범죄 중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죄 등을 포함.

특별법: 형법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형사사건 또는 특별히 엄하게 다스려야 할 사건에 적용되는 법.

폭력범죄: 협박·폭행·상해, 성폭력, 강도(노상강도, 주거침입강도) 등을 포함.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

형법범죄: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서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폭행, 강간 등이 포함.

XI 사회통합

국가정체성: 국가구성원의 일원으로써 개인이 국가생활 속에서 소속감과 그 속에서 자신이 구성원이라는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

성 소수자: 보편적인 성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동성 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이 이에 속함.

외국인 노동자: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

외국인 이민자: 자기 나라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여 사는 사람.

이념 양극화: 보수적인 성향을 띤 집단이 진보적인 성향을 띤 집단으로부터 점점 이념 거리가 멀어지는 현상.

정치효능감: 정치체제에 미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

XII 주관적 웰빙

개인주의: 개인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덕적 입장. 이데올로기, 정치철학, 사회적 시각 등을 의미.

공동체주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의 입장을 절충한 입장.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객관적, 물질적 삶의 풍요나 안정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이 풍요로운 정도를 가리킴. OECD는 주관적 웰빙을 전반적 삶의 만족,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경험,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 등 세 차원에 걸쳐 측정.



유데모니아(eudaimonia):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지칭한 말로서, 자신을 존재의 수준에서 차별화시키는 삶의 목적을 각성하고, 이 목적을 현재 자신의 삶과 일로 가져와서 실현시키는 과정을 의미.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의 영역별 논문 주제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인구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경숙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김두섭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21	김두섭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22	김두섭
	출산력의 급격한 하락	2008	전광희
	국제이주인구의 증가 :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2008	윤인진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2009	이상림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 간 차이	2009	김두섭
	혼인 양상의 변화	2010	김정석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2010	김두섭
	지역별 인구분포와 수도권 인구집중	2012	최슬기
	가족의 분산과 가구구성의 변화	2012	이민아
	체류 외국인의 증가	2012	정기선
	인구고령화의 지역별 차이	2013	김현식
	이상적인 결혼연령과 이상자녀수	2013	송유진
	이혼의 확산과 이혼자들의 삶	2013	김정석
	경제위기와 출산율의 변화: 국내동향과 국제비교	2014	계봉오/김두섭
	국내 인구가동의 특성과 유형	2014	이희연
	남한과 북한의 인구성장 및 인구구조의 비교	2014	전광희
	무자녀 가정의 추이와 특성	2015	계봉오/김두섭
	고령화와 노인 삶의 변화	2015	김주현
	베이비붐 세대와 인구절벽	2016	변미리
	학령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및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2016	최울/김두섭
	저출산과 인구가동으로 인한 지역인구의 변화	2017	김근태
	외국인 거주자의 다양성과 변화 추이	2017	유정균/김두섭
	초저출산의 고착화와 출산간격의 변화	2018	유정균/김두섭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인구	노년기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	2018	정경희
	다가오는 인구 수축사회: 인구 구성과 가구구조의 변화	2019	유삼현
	사망률과 사망원인구조의 최근 변화	2019	유정균/김두섭
	코로나19 이후 내·외국인 출입국 및 외국인의 국내 체류 현황 변화	2020	정기선
	혼외출산행태의 주요 변화와 특성	2020	김두섭/허나영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인구 변화: 출생, 사망, 결혼, 이혼	2021	김두섭/신윤정
	100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변화와 생활	2021	김주현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	2022	계봉오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이동의 영향	2022	신인철
가구·가족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경숙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한경혜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한경혜
	가족과 가구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진미정
	가구·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2021	진미정
	가구·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2022	진미정
	초혼연령과 미혼율의 상승	2008	이선이
	가구 구성의 변화와 노인가구의 급증	2008	이성용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2009	정기선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2009	한경혜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2009	홍승아
	아동 돌봄 실태와 지원망	2010	진미정
	국제결혼 부부와 가족의 특성	2010	이혜경
	1인가구의 추세와 특성	2012	이윤석
	한국의 연령과 부부관계만족도	2012	이윤석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	2012	송유진
	맞벌이 부부는 무엇이 다른가	2012	송유진
	세대관계의 변화	2013	한경혜
	자녀돌봄 시간의 변화	2013	차승은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장애요인	2014	한경혜
	여성의 일-가족 양립 경험과 사회적 지원	2014	한경혜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가구·가족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2014	홍승아
	미혼율 증가의 사회적 의미	2015	한경혜
	기능 저하 노인의 돌봄과 지원	2015	정경희
	가족가치관의 변화	2016	한경혜
	분거가족의 실태와 특성	2016	성미애
	가족 내 세대관계의 변화: 멀어지는 시가, 가까워지는 처가?	2017	한경혜
	어머니의 취업상태별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양상	2017	진미정
	유배우 취업자의 시간부족 인식과 삶의 질	2018	차승은/한경혜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2018	손승영
	노인의 가족지원 및 돌봄의 양상	2019	한경혜
	1인가구의 삶의 질	2019	변미리
	청년기 가족형성	2020	이상림
	황혼이혼 행태와 인식의 변화	2020	유재언
	코로나19와 아동 돌봄	2021	최윤경
	가족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2021	계봉오
	노인 가구 유형의 변화를 통해 본 노년기 가족	2022	차승은
	맞벌이 가구의 구성과 특성	2022	이재림
건강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조병희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조병희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21	조병희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2022	조병희
	나아지지 않는 주관적 건강상태	2008	정진주
	과다한 의료비 부담	2008	권순만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2009	조병희
	자살의 급증과 원인	2009	김명희
	만성질환 추세와 관리	2010	김홍수
	건강불평등	2010	조병희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분포	2012	김중백



영역	주 제	연도	집필자
건강	의료기관별 만족도 격차	2012	김중백
	우리시대의 병 아토피 질환	2012	권호장
	서구형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2012	박재현
	건강검진의 추이와 실천요인	2013	조성일
	음주수준과 건강과의 관계	2013	김광기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2013	장세진
	흡연을 추세와 담배규제정책의 효과	2014	조흥준
	의약품 사용양상	2014	변진옥
	사회자본과 건강	2014	조병희
	한국인의 정신건강	2015	조병희
	대사증후군의 유병 실태와 사회적 비용	2015	조영태
	증가하는 신종감염병	2016	조병희
	간호인력과 간호서비스의 변화	2016	조성현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2017	신동천
	청소년의 체격과 건강상태	2017	조병희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분포	2018	조병희
	노인 돌봄의 사회화 동향	2018	이윤경
	건강불평등	2019	강영호
	흡연과 음주 실태	2019	조병희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성과 대유행 대비 대응 방역방안	2020	김동현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행태	2020	유명순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분포	2020	조병희
	코로나19와 의료이용 변화	2021	변진옥/조병희
	코로나19 장기화와 정신건강 영향	2021	유명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불균형	2022	박수경
	코로나19 의료대응을 위한 병상자원 현황	2022	김명희/임도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일반인 위험 인식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2022	유명순
교육 · 훈련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강상진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와 특성	2011	김태현
	교육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김경근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김경근

영역	주 제	연도	집필자
교육 · 훈련	교육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김경근
	교육 · 훈련 영역의 주요 동향	2021	김경근
	교육 · 훈련 영역의 주요 동향	2022	김경근
	교육수준의 비약적 상승	2008	김경근
	최근 학교교육 성취도의 변화	2008	강상진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2009	김경근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2009	김경근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2009	채창균
	교육의 경제적 성과	2009	강상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2010	김경근
	학교급별 학습시간 실태와 문제점	2010	강상진
	교육격차의 실태와 추이	2010	김경근
	취학전 아동 보육 및 교육	2011	서문희
	학교급별 학업중단의 실태와 추이	2011	김경근
	대학 등록금 추이와 장학금 수혜학생의 비율	2011	김경근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동향	2011	김한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실태	2013	김경근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식	2013	황여정
	학생들의 스트레스	2013	황여정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정서적 특성	2014	김경근
	청소년의 가정배경과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	2014	황여정
	가구 교육비 지출 실태	2015	김성식
	대졸 취업자의 과잉교육 실태	2015	채창균
	학생들의 일상생활 차별 경험	2015	황여정
	교육수준과 삶에 대한 만족도	2016	김경근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실태	2016	황여정
	대학교육의 성과	2017	김경근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실태	2017	황여정
	학력차별에 대한 인식	2018	김경근
	중 · 고생의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 참여 실태	2018	황여정
	교육 경쟁과 행복	2019	김희삼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 및 발달 추이	2019	김경근
	코로나19와 초 · 중등교육	2020	김경근
	교육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	2020	김성식
	코로나19 시대 학교교육의 변화 및 교육격차 실태	2021	김경근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 실태	2021	채창균
	코로나19 시기 대학 생활과 졸업 후 취업 실태	2022	채창균



영역	주 제	연도	집필자
노동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장지연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장지연
	노동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장지연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장지연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21	권현지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2022	권현지
	고용의 안정성과 비정규직	2008	장지연
	중고령자 노동시장과 근로생애	2008	장지연
	청년층 노동시장	2009	방하남
	노사관계의 변화	2009	방하남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2009	방하남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조건	2010	박시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2010	이규용
	직업선택 기준의 변화와 계층 간 차이	2010	방하남
	여성의 취업변화와 근로환경	2011	홍승아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노동시장 은퇴	2011	박시내
	근로자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임금수준 비교	2011	박영실/한승훈
	근로빈곤과 저소득층 소득지원	2013	장지연
	최저임금의 준수와 상대적 수준	2013	전병유
	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위험	2014	김영옥
	청년층 취업준비생의 실태와 시사점	2014	권혜자
	노동시장의 질과 고용보호제도	2015	권현지
	경제위기와 이직자의 취업이행	2015	권혜자
	기업규모 및 원하청에 따른 노동 일터의 격차와 불평등	2016	전병유
	일자리 변화의 최근 동향	2016	권현지
	취약노동자는 누구인가: 최저임금과 실업보험을 기준으로	2017	장지연
	외환위기 후 20년,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했나?	2017	권현지
	성평등, 일-가족 균형 요구의 변화와 육아휴직 활용 동향	2018	권현지
	비정규직 고용동향	2018	정흥준
	노동시간 최근 추이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최근 동향	2019	권현지
	자영업자 추이와 특성 그리고 전망	2019	이승렬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2020	오상봉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노동	디지털화와 노동	2020	권현지
	코로나19와 청년 노동시장	2021	권현지/함선유
	코로나19와 자영업 노동시장 변화	2021	성재민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경제의 확대와 고용 및 일의 세계 변화	2022	정인관
	돌봄 부문의 확대와 일자리의 질	2022	함선유
소득 · 소비 · 자산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박찬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현송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이현송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박정수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박정수
	소득 · 소비 · 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	2021	박정수
	소득 · 소비 · 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	2022	박정수
	교육비 지출수준과 구성의 실태와 변화 추이	2008	박찬임
	소득분배와 빈곤율의 추이	2008	박찬임
	자산의 분포와 구성	2009	강석훈
	소득원천별 구성	2009	강석훈
	생애 소득의 구조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2009	이현송
	한국 국민의 구매력 국제비교	2010	정규승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2010	이현송
	가계부채와 부채원인	2010	유경원
	지난 20년간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의 추이 및 구조변화	2011	김신호
	가계 저축률 감소와 그 원인	2011	김순미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 변화	2011	강석훈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2013	김진영
	소득분배의 지역적 양상	2013	이정민
	인구 고령화와 소득 및 소비 불평등	2013	홍석철
	가계부채의 변화와 분포	2014	홍기석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지출의 변화	2014	홍석철
	소득분위별 자산의 분포와 구성	2015	유경원
	출생 코호트를 통해 본 소비지출의 변화	2015	이정민
	계층별 가계부채와 상환부담의 변화	2016	유경원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소득 · 소비 · 자산	1인 청년가구의 소득과 소비	2016	문성만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	2017	김기호/박정수
	주택연금의 도입과 사회적 영향	2017	유승동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2018	박정수
	중고령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2018	송헌재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복지재정지출의 수혜 분포 및 소득재분배	2019	성명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역할	2019	전영준
	온라인 소비 동향과 디지털 정보 격차	2020	전현배
	과거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확산기의 소비지출 패턴 비교	2020	유경원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불평등의 변화	2021	유경원
	코로나19 이후 가계소비 동향	2021	이윤수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지원 현황 및 소득재분배 효과	2022	박명호
	소득·자산의 분포 추이와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2022	성명재
여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최셋별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서우석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서우석
	문화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서우석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21	서우석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2022	서우석
	문화예술 향유실태	2008	최셋별
	관광산업의 성장과 입출국 여행객수의 증가	2008	최석호
	여가생활과 만족도	2009	서우석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2009	이호영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변화	2010	심수진
	인터넷 중독 실태	2010	전종수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활동의 변화	2011	윤소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이용의 부상과 확산	2011	최항섭
	문화산업의 정체와 성장	2011	서우석
	청소년 여가	2013	서우석
	생활체육 참여실태	2013	황선환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여가	노년층의 문화예술 관람 경험과 특성	2013	조현성
	여행과 삶의 질: 소득분위별 관광경험 차이	2014	이훈/박정숙
	스마트미디어 이용과 삶의 만족도	2014	심미선
	청년층 1인가구원의 여가활동	2015	서우석
	여가활동의 동반자	2015	윤소영
	여가시간의 변화와 격차	2016	차승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실태와 문제	2016	배영
	청소년의 게임 이용과 과몰입	2017	전인식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2017	서우석
	해외 여행 경험의 추이	2018	서우석/이주현
	문화서비스 지출의 주요 동향	2018	김진
	행복에 영향을 주는 여가 관련 요소들	2019	윤소영
	스마트미디어 이용 여가활동	2019	정용찬
	코로나19 이후 영화 및 공연 관람의 변화	2020	윤소영
	코로나19로 바라본 관광의 위기와 변화	2020	김은희
	코로나19와 디지털 여가활동의 변화	2021	서우석
	빅데이터에 남겨진 세대별 여행 변화	2021	김은희
	한국사회의 심의 분포	2022	김주연
	디지털 여가의 명암	2022	이호영
주거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최진호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최진호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최진호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손경환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손경환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장수은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장수은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장수은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장수은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장수은
	주거와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장수은
	주거 영역의 주요 동향	2021	이영성
	주거 영역의 주요 동향	2022	고진수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2008	김재익
	대도시권 통근통학의 광역화	2008	최진호
	주거 빈곤 가구 실태	2009	최진호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2009	김호정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변화 추이	2010	이창무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주거	주거이동과 거주지 선택요인	2010	최진호
	수도권 거주자의 출근전쟁	2012	이재훈
	주거안정성	2012	신인철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빈곤가구의 실태	2012	장세훈
	도로의 지역간 불균형	2012	양광식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 실태	2013	손경환
	가구특성과 주거소비	2013	정의철
	교통복지실태	2013	이상민
	전월세 시장의 변화	2014	정의철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2014	박천규
	승용차의 대형화와 녹색교통정책의 실태	2014	김회경
	아파트 주거 확산의 실태와 전망	2015	전상인
	지역 간 교통수단의 고속화와 국민생활의 변화	2015	장수은/정동재
	1인가구의 증가와 주택시장 및 주거형태의 변화	2016	이영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사회적 영향	2016	장수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태와 거주자 특성	2017	이영성/유현지
	빅데이터로 읽는 교통과 사회	2017	장수은/한상진
	청년의 주거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2018	김준형
	수도권 지역 통근통행의 광역화와 사회 계층별 통근시간의 변화	2018	장수은/한상진
	신도시 주거의 현황과 전망	2019	박인권
	도로교통의 미세먼지 배출 특성과 저감 노력	2019	한상진/장수은
	청년 1인 가구의 특징과 주거실태	2020	정현주
	코로나19의 교통영향	2020	한상진/장수은
	코로나19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	2021	이영성/인승연/이현무
	가구주 연령대별 · 세대별 가계부채의 변화: 주거비 부담과 가계부채	2021	하준경
	주택가격의 급등과 자산격차: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그리고 다주택가구	2022	김준형
생활환경	환경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김선희
	환경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김종호
	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김종호
	생활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21	김종호
	생활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2022	김종호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생활환경	대기오염 수준의 변화	2008	공성용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	2008	공성용
	친환경 소비성향	2009	윤순진
	친환경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2010	강성진
	기후변화 문제와 대응 추이	2011	김해동
	개선된 채환경, 정체된 친환경 행동	2011	박희제
	에너지 소비를 통해 본 한국사회	2011	박진희
	기후변화 대응행태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	2013	조영탁
	화학물질 노출실태	2013	신용승
	미세먼지와 건강	2014	권호장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2014	박창석
	환경 불평등과 환경 복지	2015	김종호/추장민
	생활쓰레기 처리와 쓰레기 종량제의 실태	2015	신상철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	2016	이미숙
	미세먼지의 대기농도 현황과 특성	2016	공성용
	생활화학제품 피해 및 관리 실태	2017	신용승
	전력소비와 전원구성의 추이 및 특징	2017	조영탁
	폐플라스틱의 발생과 재활용 현황	2018	이희선
	해양환경의 특성과 현황	2018	김성길/박준건/박미옥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화와 기상학적 접근	2019	김정훈
	원자력에 대한 온라인 여론 분석	2019	이원재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소비의 변화와 포장재 쓰레기 발생 현황	2020	이소라
	도시의 공원·녹지 현황	2020	최희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관리 규정과 분쟁 양상	2021	박영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의 패턴 변화	2022	이소라
범죄·안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이재열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재열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변화	2012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이재열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박두용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박두용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박두용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강은영/박두용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강은영
	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강은영
	범죄·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21	강은영



영역	주 제	연도	집필자
범죄·안전	범죄·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2022	강은영
	자연재난, 어떻게 변했나	2008	이재열
	증가하는 '흉악범죄'	2008	윤옥경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2009	박순진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2009	민수홍
	산업재해의 변화	2010	이경용
	아동학대의 실태와 변화	2010	민수홍
	청소년 범죄의 발생과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2012	민수홍
	사이버 세계의 그림자	2012	민수홍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2012	박순진
	높아지는 재난재해 위험과 응급안전시스템	2012	박순진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유해요인노출	2012	이경용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추세	2013	민수홍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과 특성	2013	김지선
	범죄피해의 실태와 변화	2014	김지선
	한국의 대형 인적재난	2014	정지범
	살인, 강도, 강간의 지역 간 발생률 비교와 변화	2015	민수홍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015	설재훈
	산업재해의 발생 추이	2016	박두용
	노인 범죄의 실태와 변화	2016	민수홍
	한반도의 지진 발생 현황과 특성	2017	이희일
	아동학대의 발생 추이와 특성	2017	강은영
	한국인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특성	2018	탁양주
	젠더폭력의 실태와 변화	2018	강은영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동향	2019	류현숙
	청소년 범죄 추이와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2019	민수홍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의 사고 및 안전에 관한 동향	2020	노광표
	디지털성범죄의 현황과 특성	2020	강은영
	코로나19 이후 범죄발생의 변화	2021	박형민
	코로나19와 교통사고	2021	한상진
	보이스피싱 현황, 유형, 추이와 대응관련 시사점	2022	서준배
사회통합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이재열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09	이재열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2010	장덕진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변화	2013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4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5	한 준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사회통합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6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7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8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19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20	한 준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21	박원호
	사회통합 영역의 주요 동향	2022	박원호
	가치관과 일상생활에서의 세대격차	2008	배 영
	투표참여의 감소와 세대 간 차이	2008	김 욱
	가치와 이념 갈등	2009	강원택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2009	장지원
	정치와 사회 참여	2009	장덕진
	사회적 신뢰의 수준	2010	장덕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사회통합 정도	2010	김병로
	이타적 행위: 기부와 자원봉사	2010	이희길
	한국의 노인자살	2012	이민아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2012	김석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2012	김석호
	1인가구의 사회적 지원	2012	정재기
	한국의 공정성	2012	정재기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도 격차	2013	한 준
	투표와 정치참여	2013	김석호
	노년층의 사회통합	2014	김지범
	자살의 지역별 분포와 변화	2014	박형민
	세대 간 격차의 수준	2015	한 준
	사회적 관용의 수준과 변화	2015	가상준
	한국인의 계층의식과 사회이동성	2016	김희삼
	정치 태도와 행위의 세대 간 차이	2016	김석호
	한국인의 정치참여와 사회갈등 인식	2017	박원호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	2017	박 준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의 관계	2018	한 준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2018	장미혜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결과	2019	한 준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019	김석호
	코로나19 정부 대응과 사회통합적 고려	2020	정지범
	한국의 생애과정과 주관적 웰빙	2020	한 준
	한국인의 갈등 인식과 배타성	2021	하상응
	코로나19 위기 속 국가의 대응과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2021	박선경



영역	주제	연도	집필자
사회통합	한국 유권자 차원에서의 정치적 양극화	2022	하상응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영역의 주요 동향	2021	한 준
	주관적 웰빙 영역의 주요 동향	2022	한 준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웰빙	2021	김주연
	코로나19 이후의 주관적 웰빙 국제 비교	2022	한 준
(복지)	복지 부문의 주요 변화	2008	조병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문제	2008	정무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빈곤문제	2008	정무권
	빈곤층의 분포와 특성	2011	강신욱
	노후준비 방법의 변화	2011	정순돌
	사회복지 인력 및 시설의 동향	2011	고경환

한국의 사회동향 2023 연구진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책임자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영역담당 공동연구자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송유진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송수연 (차의과학대학교 차오름교양대학 교수) 권현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고진수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김종호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편집담당 공동연구자	김미영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심수진 (통계개발원 사무관) 이혜선 (통계개발원 주무관) 박현주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책임연구원) 이상운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아카이빙사업부 실장)
편집담당 연구보조원	정우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보조원) 조하영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보조원)
연구간사	하헌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Korean Social Trends 2023

Population

Household & Family

Health

Education & Training

Labor

Income, Consumption & Wealth

Leisure

Housing

Living Environment

Crime & Safety

Social Integration

Subjective Well-being

값 12,000원



9 772234 799203

ISSN 2234-7992